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I

(해설편)

일러두기

- 광복당시의 통계자료는 자료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설혹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단편적인 현상에 국한된 것이 많으며, 조사방법과 작성기준이 현재와는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통계이용에 착오 없기 바람
- 본 책자의 내용은 통계청 '2014 국가주요지표' 를 근간으로 경제, 사회, 환경분야의 전문가에 의하여 해설편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요약편과 통계편으로 구분하여 편집·발간하였음
- 통계표에 수록된 자료는 최대한 신뢰성이 있는 통계를 발굴하여 연도별 비교 하였으며, 비교기준이 상이하거나 년도 중간에 기준이 변경된 것은 최대한 시계열 비교가 가능한 년도에서 수록 및 기술함
- 동 간행물에 대한 내용은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의 '온라인 간행물' (주제별/종합간행물) 코너에 등재할 예정(8월말경)이오니 많은 이용바람
-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이들 지표에 대한 해설편·요약편(Ⅰ)과 통계편(Ⅱ)을 각각 별권으로 수록·발간하였음
- 이 책자가 학생과 일반인을 위한 경제교육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많은 이용자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



머 리 말

통계청은 올해로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경제·사회·환경 부문의 구조변화와 발전상을 다방면에서 조명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경제규모, 재정, 대외거래, 산업, 금융, 고용·노동, 소득, 소비 등 경제 각 분야와, 인구, 가구·가족, 건강, 교육, 문화·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 환경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총 110개 주요 지표의 시계열을 1945년 광복 당시까지 최대한 소급하여 수록하였으며, 이들 지표의 변동추이에 대한 해설편(Ⅰ)과 통계편(Ⅱ)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구분하여 별권으로 수록·발간하였습니다.

특히, 광복 70년을 개관하면서 우리 경제의 괄목할 만한 양적 성장과 경제구조의 고도화 등 질적 향상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사회의 소득과 소비, 삶의 질에 대한 변화와 발자취도 추적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본 책자 제작에 수고해 주신 서울대 김석호 교수님을 비롯한 연구진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학생과 연구원, 일반인을 위한 참고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용자 여러분께서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년 8월

통계청장 유 경 준

목 차

❖ 요약편	1
❖ 해설편	49
I. 배경과 지표선정	51
1. 배경과 목적	53
2. 지표선정과 범위	55
1) 지표의 검토와 선정	55
2) 내용과 범위	56
3. 책자의 구성	60
II. 경제	63
1. 경제규모, 재정, 대외거래	65
1) 경제규모	65
(1) 국내총생산 및 성장률	65
(2) 1인당 소득	68
2) 재정	70
(1) 재정규모	70
(2) 조세부담	72
(3) 재정지출	75

3) 대외거래	76
(1) 무역규모	76
(2) 무역구성	78
(3) 대외거래 안정성	80
(4) 환율	83
2. 산업과 금융	85
1) 산업	85
(1) 산업구성	85
(2) 산업생산	87
(3) 기업경영	88
(4) 투자	91
2) 금융	95
(1) 금융규모	95
(2) 금리	97
(3) 주식시장	98
3. 고용과 노동	100
1) 고용	100
(1) 고용	100
(2) 취업자 구성	103
2) 노동	106
(1) 근로시간	106
(2) 산업재해	108
(3) 노동조합	110

4. 소득과 소비	111
1) 소득	111
(1) 임금	111
(2) 소득	113
2) 소비	116
(1) 소비지출	116
(2) 물가	117

III. 사회 121

1. 인구	123
1) 인구규모	123
(1) 총인구	123
2) 인구변화	126
(1) 인구성장률	126
(2) 합계출산율	128
(3) 조사망률	131
(4) 체류 외국인 수	134
(5) 시군구이동률	137
3) 인구구조	140
(1) 중위연령	140
(2) 성비	142
(3) 부양인구비	145
2. 가구와 가족	148
1) 가구구성	148
(1) 가구수	148
(2) 평균 가구원수	149
2) 가족형성	152
(1) 조혼인율	152
(2) 조이혼율	156

3) 다문화가족	159
(1)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추이	159
(2)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160
3. 건강	162
1) 건강상태	162
(1) 기대수명	162
(2) 주관적 건강상태	164
(3) 신장 · 체중 변화	169
2) 건강행태	170
(1) 성인흡연율	170
(2) 음주율(1인당 알코올소비량)	174
(3) 비만율	177
3) 보건의료서비스	180
(1) 보건의료인수	180
(2) 국민의료비 비중	185
(3) 암 5년 생존율	193
(4) 의료기관수 변화추이	198
4. 교육	200
1) 교육기회	200
(1) 각급 학교별 수	200
(2) 각급 학교별 학생수	202
(3) 각급 학교별 졸업자수	203
(4) 각급 학교별 남녀 학생 비율	205
2) 교육의 조건과 과정	207
(1) 학급별 학생수	207
(2) 각급 학교별 교원수	209
(3) 교육비 예산	210
3) 교육효과	212
(1) 교육수준별 인구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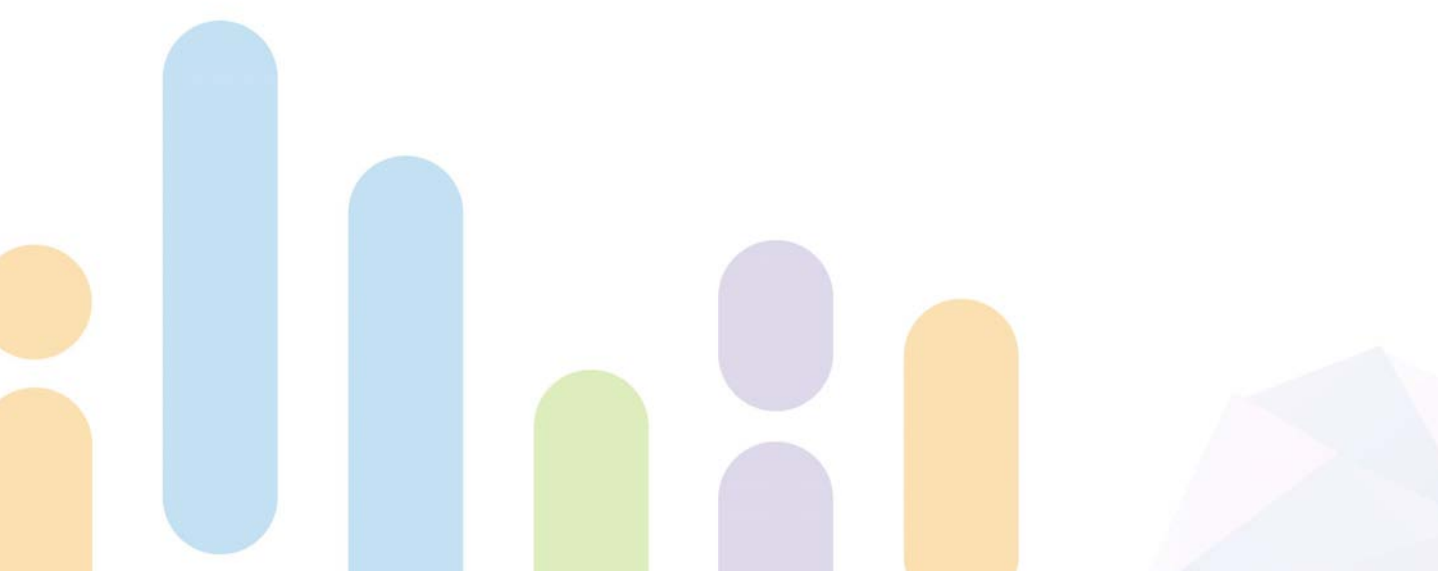
5. 문화와 여가	214
1) 문화자원	214
(1) 박물관/미술관 수	214
(2) 영화관 및 극장 수	216
(3) 도서관 수	217
(4) 체육시설 수	218
2) 문화여가활동	219
(1) 영화 관람자수	219
(2) 도서출판 상황	220
(3) 내외국인 여행경비	222
3) 미디어	224
(1) 유선통신 서비스 및 이동전화 가입자 수	224
6. 주거	225
1) 주택공급	225
(1) 주택수	225
(2) 주택건설	228
2) 주택시장	231
(1) 주택매매가격변동	231
(2) 주택전세가격변동	235
3) 주거상황	237
(1) 자가점유율	237
(2) 주택임대료비율	239
7. 교통	241
1) 교통공급	241
(1) 승용차 등록 대수	241
(2) 도로 연장	244
(3) 철도 연장	246
2) 교통 이용	248
(1) 통근시간	248
(2) 항공수송실적	253
(3) 해운수송실적	255

3) 교통 에너지	257
(1) 자동차에너지소비량	257
(2) 신재생에너지소비율	259
8. 안전	263
1) 범죄	263
(1) 범죄율	263
(2) 재범률	268
2) 치안	269
(1) 경찰관수	269
3) 재해	272
(1) 자연재해피해자수	272
(2) 화재피해자수	277
4) 교통사고	279
(1) 교통사고	279
5) 대형인적재난	284
(1) 대형인적재난 추이	284
9. 사회통합	287
1) 정치 및 사회참여	287
(1) 선거 투표율	287
(2) 여성 국회의원 비율	292
2) 삶의 기회와 만족	294
(1) 자살률	294
3) 사회보장	296
(1) 복지시설 수	296
(2) 복지시설 수용인원	297
IV. 환경	299
1. 생활환경과 오염	301

1) 기후와 대기	301
(1) 온실가스 배출량	301
(2) 대기오염도	303
2) 물 환경	305
(1) 수질오염도	305
(2) 상하수도 보급률	306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310
1) 토지산림	310
(1) 경지면적	310
(2) 산림면적	312
2) 해양수산	314
(1) 총허용 어획량 소진율	314
(2) 연안습지면적	316
3) 에너지	319
(1) 1차 에너지 공급량	319
(2) 전력생산량	322

부록 **325**

- 용어해설



요약편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요약)

〈경제부문〉

- 국내총생산(GDP)은 2014년 현재 1,485조원으로 1953년 477억원에 비하여 31,000배 증가하였으며, 이를 달러로 환산하면 1조 4,104억 달러로 세계 13위
- 1인당 GNI는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 2만 8,180달러로 증가, 2000년대 이후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은 둔화
- 농림어업의 비중은 1953년의 48.2%에서 2014년의 2.3%로 급락, 19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정책 등을 계기로 제조업의 비중은 1953년 7.8%에서 2014년 30.3%로 증가
- 수출 1위 품목은 1960년에는 철광석, 1970년에는 석유류, 1980년에는 의류가 1위였지만, 1992년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이 1위에 이름을 올림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37%에서 2014년 51.1%로 증가,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은 1970년 232시간에서 2014년 187시간으로 감소

〈사회부문〉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약 4,799만명으로 1949년 대비 2.4배 증가, 체류 외국인인 2013년 158만명으로 1948년 2만명에 비해 79배 증가
- 평균가구원 수는 1952년 5.4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절반으로 감소
- 기대수명은 1970년에 61.9세에 비해 2014년 81.8세로 지난 44년간 약 20세 증가
- 초·중·고등학교 학생수는 증가하다가 감소, 대학생 수는 1952년 3만명에서 2014년 213만으로 대폭 증가
- 1946년 약 1천대에 불과하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4년에 총 1,575만대로 폭발적인 증가

〈환경부문〉

-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는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대기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대부분 환경기준을 달성



I 경제부문

1. 경제규모 및 성장률

■ 2014년 국내총생산(GDP) 1,485조 원으로 1953년 경제 규모에 비해 31,000배 이상 확대

○ 명목 GDP, 1953년에서 2014년 사이 31,000배 이상 확대
- 명목 GDP는 1953년 477억 원에서 2014년 1,485조 원으로 증가

○ 2014년 한국 경제규모는 세계 13위
- 달러로 환산한 2014년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4,104억 달러로 세계 13위임
- 2014년 GDP가 1조 달러 이상인 나라는 15개뿐임

명목 GDP

연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명목GDP(10억 원)	47.74	249.84	2,794.8	39,471.3	197,712.3	635,184.6	1,265,308	1,485,078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014년 각국 명목GDP 순위

순위	국가	명목GDP(백만 달러)	순위	국가	명목GDP(백만 달러)
1	미국	17,419,000	9	인도	2,066,902
2	중국	10,360,105	10	러시아연방	1,860,598
3	일본	4,601,461	11	캐나다	1,786,655
4	독일	3,852,556	12	호주	1,453,770
5	영국	2,941,886	13	한국	1,410,383
6	프랑스	2,829,192	14	스페인	1,404,307
7	브라질	2,346,118	15	멕시코	1,282,720
8	이탈리아	2,144,3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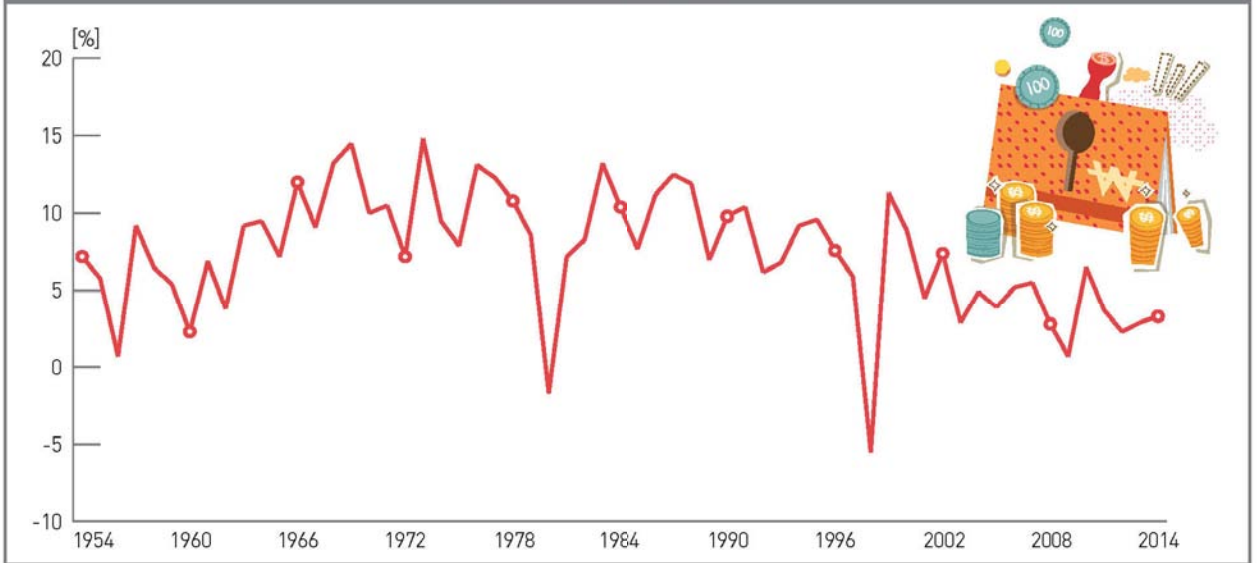
출처 / 세계은행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GDP-ranking-table>

■ 실질 GDP, 1953년~2014년 사이 연평균 7.3% 성장

○ 실질 GDP, 1953년~2014년의 61년간 연평균 7.3%씩 성장
- 경제개발 5개년계획 등으로 1961~1991년의 30년간 연평균 9.7%의 고도성장 달성
- 2000년대 이후 경제가 전반적으로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평균 4% 정도의 성장률을 보임
- 2014년 성장률은 3.3%로, OECD 회원국 평균 1.7%보다 높음

○ 1953~2014년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해는 1980년과 1998년 두 번
- 1980년에는 2차 석유파동의 영향으로 -1.7%, 1998년에는 외환위기로 -5.5% 성장률을 보임

경제성장률(1954-2014)



출처 / 한국은행 6년 간격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1인당 국민총소득(GNI) 1953년 67달러에서 2014년 2만 8180달러로 증가

- 1인당 GNI, 1953년 67달러에서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 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각각 돌파
-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한국의 2014년 1인당 GDP는 3만 4,356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만 8817달러)의 88.5%임

1인당 G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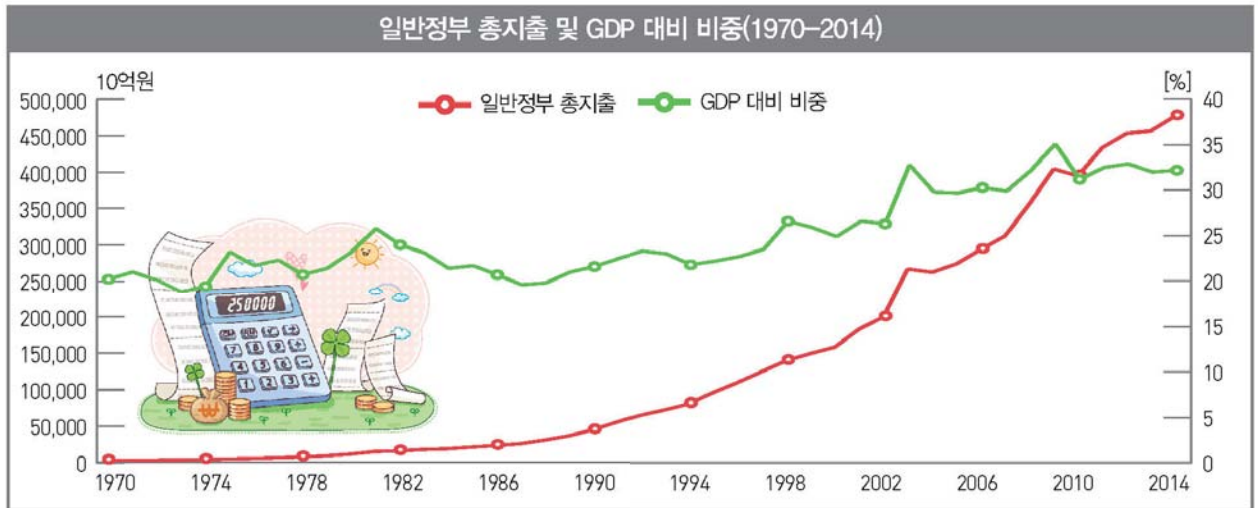
연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1인당 GNI(달러)	67	80	257	1,686	6,505	11,865	22,170	28,180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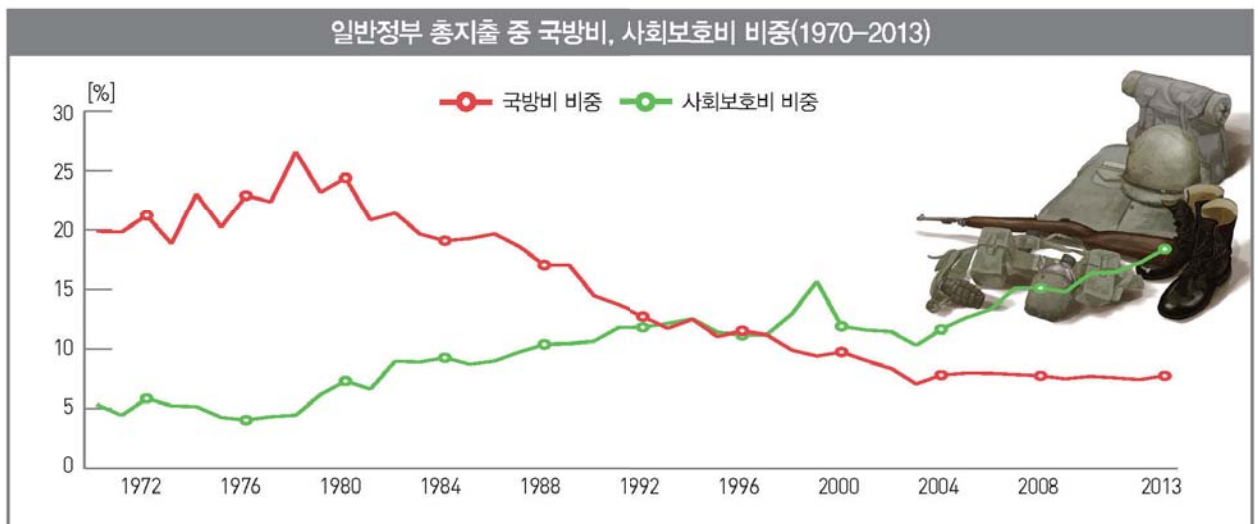
2. 재정

■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 1970~2014년 사이 20%선에서 32%로 증가

- 일반정부 총지출 1970년 GDP대비 20%에서 2014년 32%로 증가
 -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을 합한 일반정부 총지출, 1970~2014년 사이 5,578억 원에서 474조 원으로 증가. GDP 대비로는 20%에서 32%로 증가
 - 국방비 지출은 1970년 총지출의 20%에서 2013년 8%로 감소, 사회보호는 5%에서 18%로 증가
- 일반정부 재정 적자에서 1983년 이후 흑자로 전환
 - 1970년대와 1980년대 초 일반정부 재정은 대체로 적자. 1981년에는 적자 규모가 1조 6,000억 원에 달하기도 함
 - 1983년부터 대체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2014년 흑자폭은 18.6조원.
 - 2014년 일반정부 재정은 흑자 18.6조원(GDP 대비 1.2%)으로 건전한 편이나, 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은 22.5조원 적자 상태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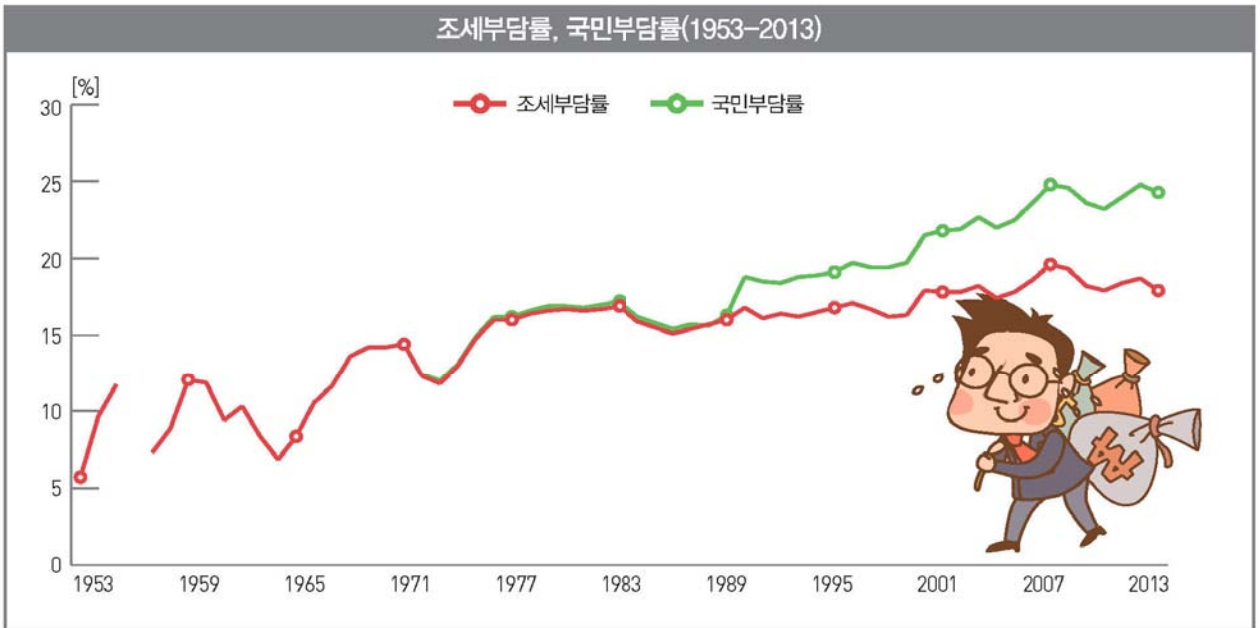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1953년 조세부담률 5.6% → 2013년 조세부담률 17.9%

- 조세부담률 1953년 5.6%에서 2013년 17.9%로 증가
 - 1953년 조세 총액과 조세부담율은 각각 27억원과 5.6%였음
 - 2013년에는 조세 총액과 조세부담율이 각각 256조원과 17.9%로 증가

- 국민부담률 1972년 12.4%에서 2013년 24.3%로 증가
 - 국민부담률(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조세 수입의 GDP 대비 규모)은 1972년 12.4%에서 2013년 24.3%로 증가
 - 국민부담률 24.3%는 OECD 회원국 평균인 34.1%보다 낮은 편
 - 사회보험제도가 없던 1960년대에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의 구분이 무의미했으나 1972년 건강보험제도 도입 후 양자 간 차이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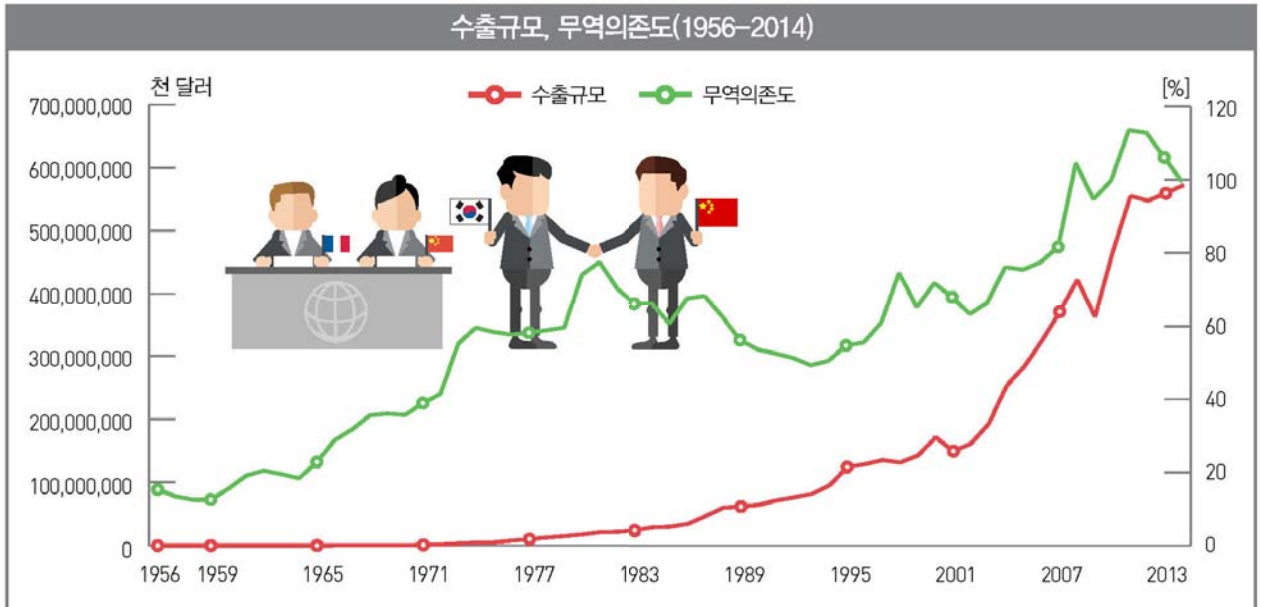
출처 / 조세부담률 :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f.re.kr/TaxFiscalPublInfo/TaxFiscal-View/조세수입/18)
 국민부담률 : 한국조세재정연구원(http://www.kipf.re.kr/TaxFiscalPublInfo/TaxFiscal-View/-조세부담률-및-국민부담률/20)

3. 대외거래

■ 2014년 수출 규모 5,727억 달러로 세계 6위 수출국에 올라

- 수출 규모 1956년 2,500만 달러에서 2014년 5,727억 달러로 증가
 -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이 이뤄지면서 수출규모 크게 증가해 1964년, 1971년, 1977년, 1995년에 각각 1억 달러, 10억 달러, 100억 달러, 1000억 달러 돌파
 - 2014년 수출액은 5,727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 총액 중 3.1%이며 세계 6위 규모임

- 무역의존도 1956년 15.2%에서 2014년 99.5%로 증가
 - 2014년 수출과 수입을 합한 한국의 무역액은 1조 980억 달러로 세계 무역 총액 중 2.9%이며 세계 8위 규모임
 - 무역의존도(GNI 대비 수출, 수입,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 합계의 비중)는 1956년 15.2%에서 2014년 99.5%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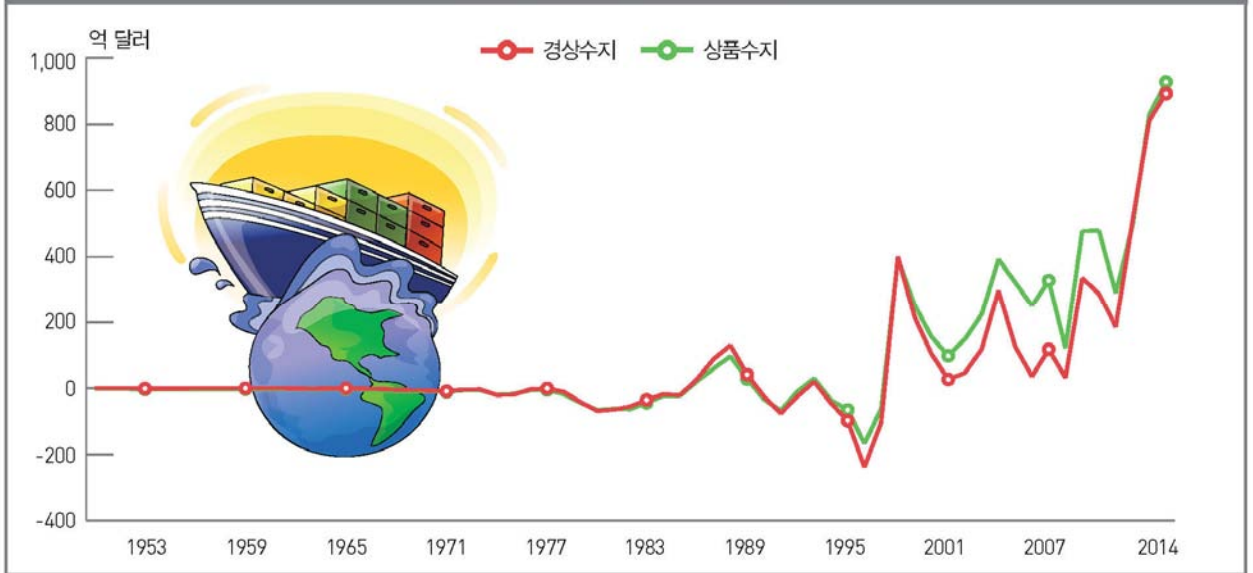
출처 / 수출규모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의존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경상수지 적자에서 1990년대 말 이후 흑자로 전환

- 경상수지,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 기조
 - 상품수지가 적자를 지속하면서 경상수지도 1990년대 중반까지 적자
 - 예외적으로 1986-1989년에는 3저 현상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경상수지도 흑자

- 1998년 이후로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
 - 1998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 2014년 경상수지는 892억 달러 흑자로, 흑자폭은 GDP 대비 6.33%.

경상수지, 상품수지(195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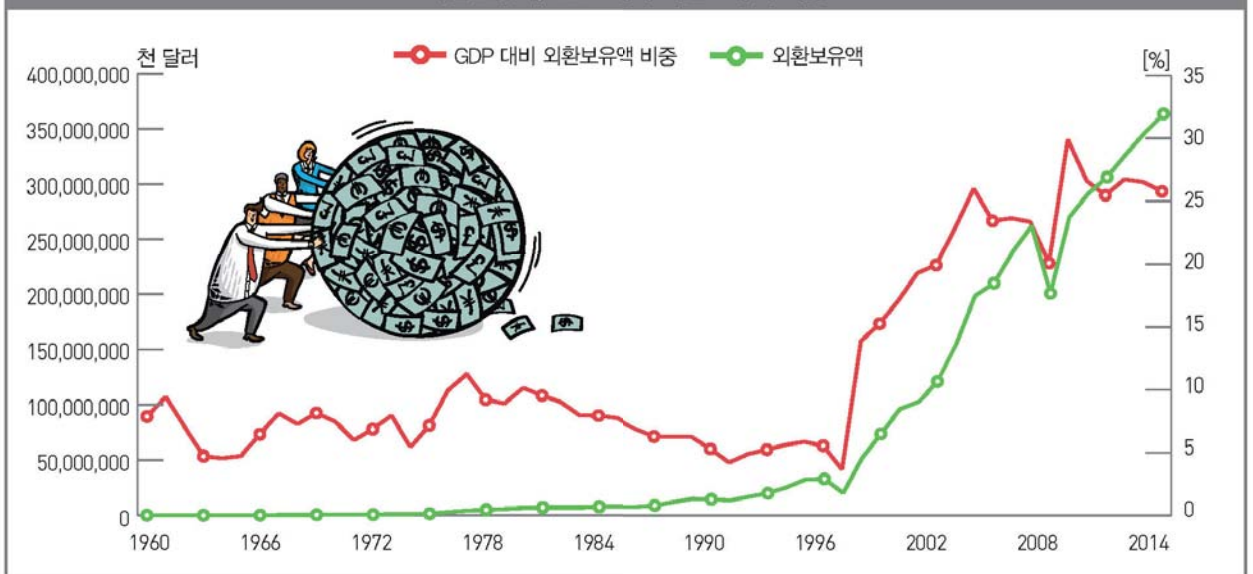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2014) <우리나라 국제수지 통계의 이해> pp. 81, 82, 84, 86, 89, 90,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2014년말 외환보유액 3,636억 달러로 외환위기이던 1997년 204억 달러에 비해 18배 증가

- 2014년말 외환보유액은 3,636억 달러로 GDP 대비 25.8%, 외환위기 당시이던 1997년의 외환보유액은 204억 달러로 GDP의 3.7%였음
 - 환율은 2014년 1달러당 평균 1053.22원으로 1965년 266.58원에 비해 약 4배 상승(원화가치 74.7%절하)
 - 외환위기로 1997년 12월 16일 환율변동제한폭이 폐지되면서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로 바뀜

외환보유액,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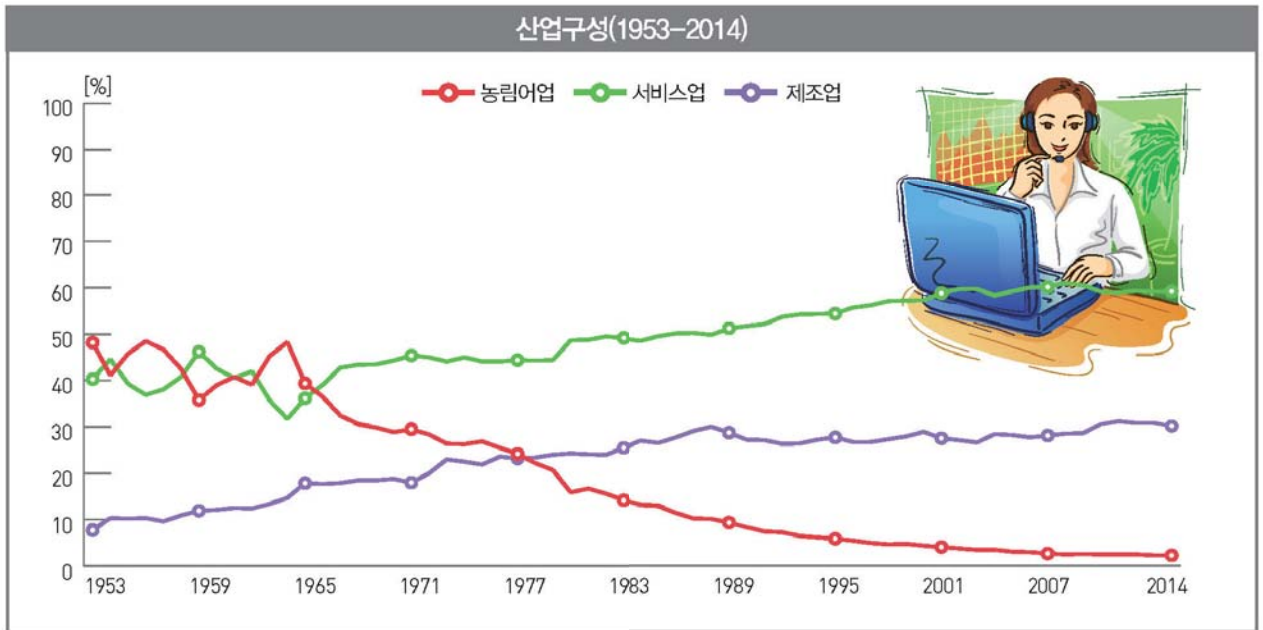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4. 산업, 금융

■ 1차 산업 비중 크게 감소, 자동차, 선박, 철강 등은 세계 수위권 국가로

- 농림어업 비중 1953년 48.2%에서 2014년 2.3%로 감소
 - 1953년에는 농림어업이 48.2%로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7.8%와 40.3%.
 -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정책 등에 힘입어 제조업 비중 1979년 24.0%로, 2014년 30.3%로 증가
 - 서비스업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40%대 초반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80년대 이후로 비중이 크게 증가. 2014년에는 59.4% 차지
- 자동차, 선박, 철강 등에서 세계 수위권 국가로 부상
 - 자동차는 1955년에 최초로 7대가 생산된 뒤, 2002년 300만대 생산 돌파. 2014년 생산량은 452만대로 세계 5위
 - 선박 건조량은 1955년 2000GT에 불과하다가 1974년 현대 울산조선소, 1981년 대우 옥포조선소가 준공되면서 건조량 크게 증가. 2013년 선박 건조량은 1003.7만CGT(2122.5만GT)로 세계 2위
 - 철강 생산량(조강 기준)은 1960년 5만MT였던 데서 1970년대 포항제철소 1~4기가, 1987년 광양제철소가 준공되면서 생산량 크게 증가. 2013년 생산량은 6606만MT로 세계 6위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산업 생산량

	단위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자동차 생산대수	대		550	28,819	123,135	1,321,630	3,114,998	4,271,741	4,524,932
철강생산량	천MT	0.4	50	504	8,558	23,124	43,107	58,914	71,542
선박 건조량	천GT		4	39	655	3,573	11,499	26,3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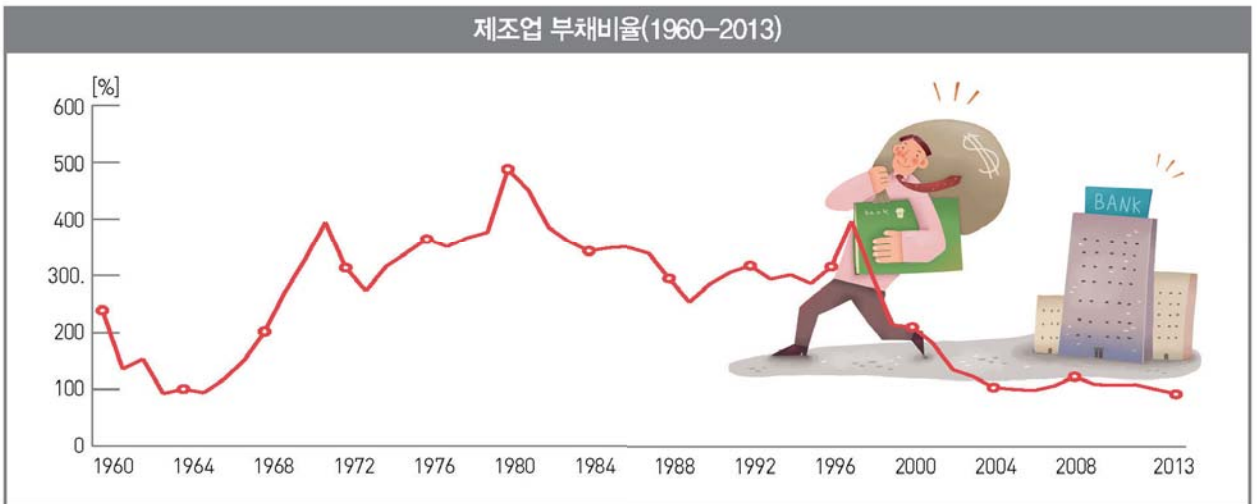
출처 / 자동차생산량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나라지표(www.index.go.kr),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p.16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철강생산량 : 한국철강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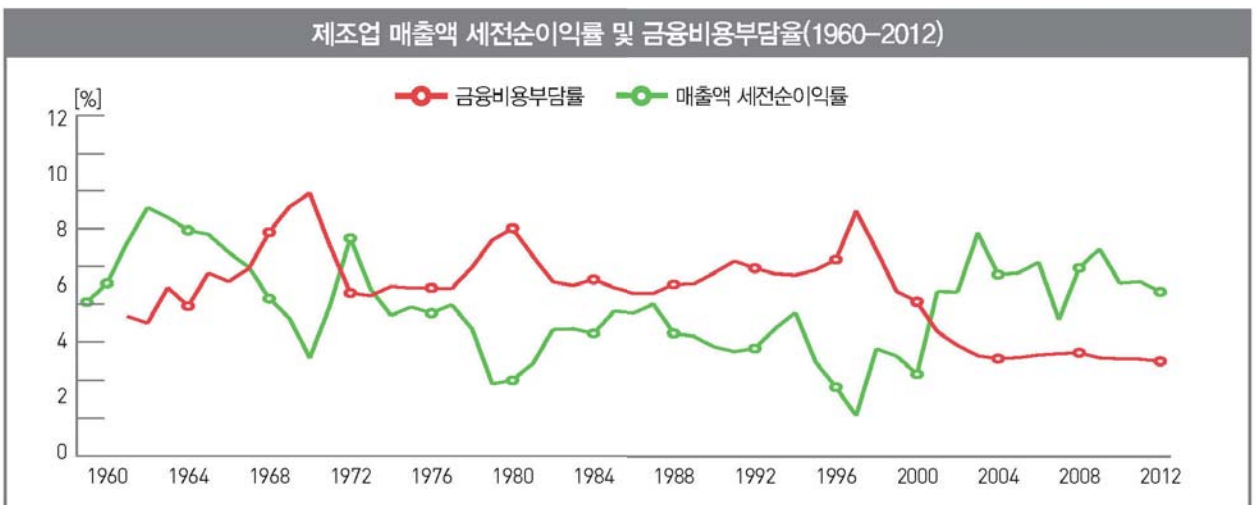
선박건조량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 외환위기 이후 기업 재무구조 크게 개선

-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 제조업은 높은 부채비율과 금융비용부담률을 보임
 - 한국 제조업 부채비율,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200% 수준을 상회, 1970년대에는 300%를 넘어선데 이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말에는 396.3%에 달함
 - 금융비용부담률은 1990년대까지 5%대 이상, 1998년에는 8.95%에 달함
 -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60년대에 10% 이상,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7% 전후의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높은 금융비용부담 때문에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추세적으로 낮아짐. 1997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8.25%였으나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0.34%
- 외환위기 이후 재무구조 크게 개선
 - 1997년말 396.3%에 달했던 제조업 부채비율, 2013년에는 92.93%로 낮아짐
 - 1998년 8.95%에 달했던 금융비용부담률도 2003년 이후 1%대로 낮아짐
 - 2010년 이후로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도 비슷한 추세를 보임. 2013년 영업이익률과 세전순이익률은 각각 5.25%와 4.68%였음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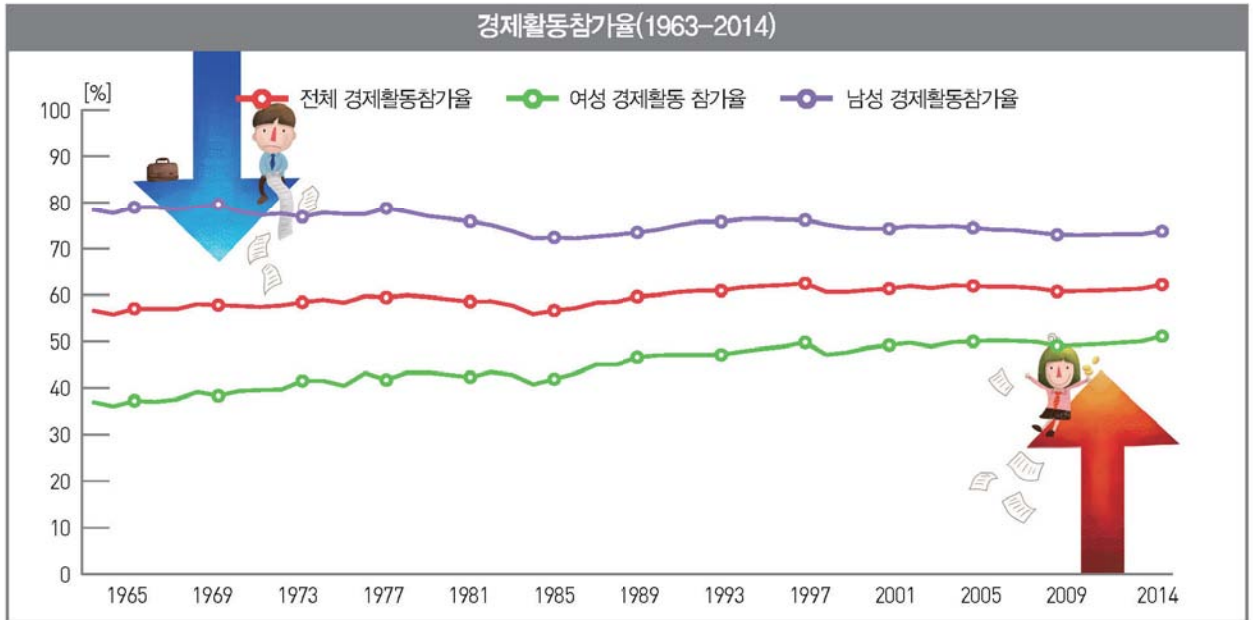


출처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5. 고용,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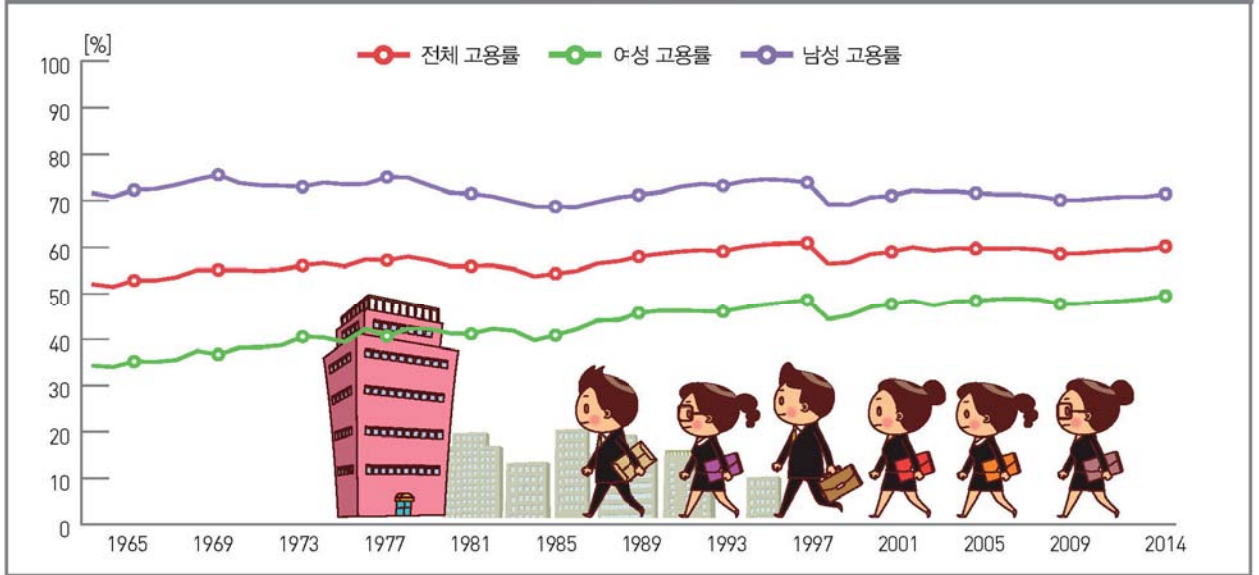
■ 여성 경제 활동 크게 증가(1963년 37.0% → 2014년 51.1%)

-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963년 37.0%에서 2014년 51.1%로 증가
 - 1963년~2014년 사이 남성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인구/생산가능인구)은 78.4%에서 73.7%로 감소했으나 여성의 경우 37.0%에서 51.1%로 증가. 같은 기간 남녀를 합한 전체 경제활동참가율은 56.6%에서 62.2%로 증가함
 - 1963~2014년 사이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남성 71.6%에서 71.4%로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여성은 34.3%에서 49.5%로 증가
 - 취업자 중 남녀 비율도 1963년 남성 65.2%, 여성 34.8%에서 2014년 남성 58.0%, 여성 42.0%로 여성 비중 증가
- 비임금근로자 비율 1963년 68.5%에서 2014년 26.8%로 감소
 - 취업자 중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1963년 68.5%에서 2014년 26.8%로 크게 감소.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현상임
 - 2012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8.2%로, 스페인 17.4%, 영국 14.6%, 일본 11.8%, 미국 6.8%, 독일 11.6%보다 높은 편임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고용률(196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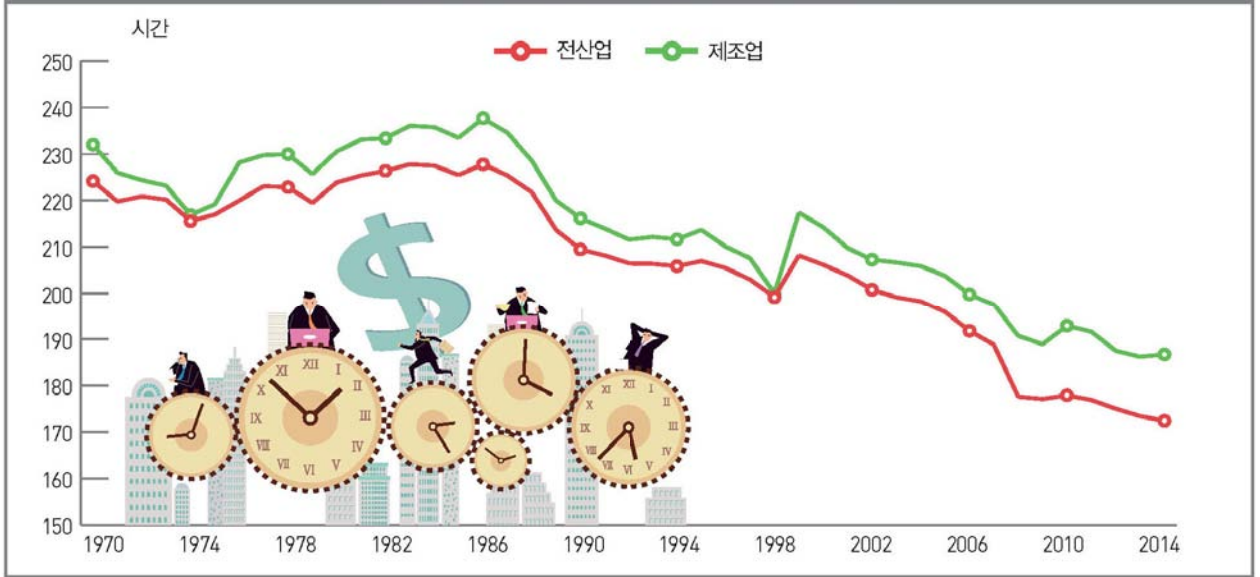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	56.6	57.6	59.0	60.0	61.0	60.8	62.2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	78.4	77.9	76.4	74.0	74.2	72.8	73.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	37.0	39.3	42.8	47.0	48.6	49.2	51.1
전체 고용률 (%)	52.0	55.1	55.9	58.6	58.5	58.7	60.2
남성 고용률 (%)	71.6	73.8	71.7	71.8	70.7	70.1	71.4
여성 고용률 (%)	34.3	38.2	41.3	46.2	47.0	47.8	49.5
취업자 중 남성 비율 (%)	65.2	63.5	61.8	59.2	58.6	58.4	58.0
취업자 중 여성 비율 (%)	34.8	36.5	38.2	40.8	41.4	41.6	42.0

■ 제조업 월 평균 근로 시간 1970년 232시간 → 20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 1970년 232시간 → 20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 제조업 월평균 근로시간 1970년 232시간에서 1986년 237.7시간으로 늘었다가 1987년 이후 노동자 대투쟁, 2000년대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을 거치면서 2014년 186.7시간으로 감소
 - 201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독일 임금근로자의 1312.9시간, 프랑스 1400.8시간, 영국 1659시간, 그리스 1729시간, 일본 1746시간, 미국 1795.5시간 등보다 긴 편임
- 노조조직률 1977년 25.4%에서 2013년 10.3%로 감소
 - 한국의 2010년 단체협약적용률은 10%로, 미국 13%, 일본 16%, 영국 31.2%, 호주 45%, 독일 61%, 스웨덴 91%, 프랑스 92%에 비해 낮은 편

전산업 및 제조업 월 평균 근로시간(197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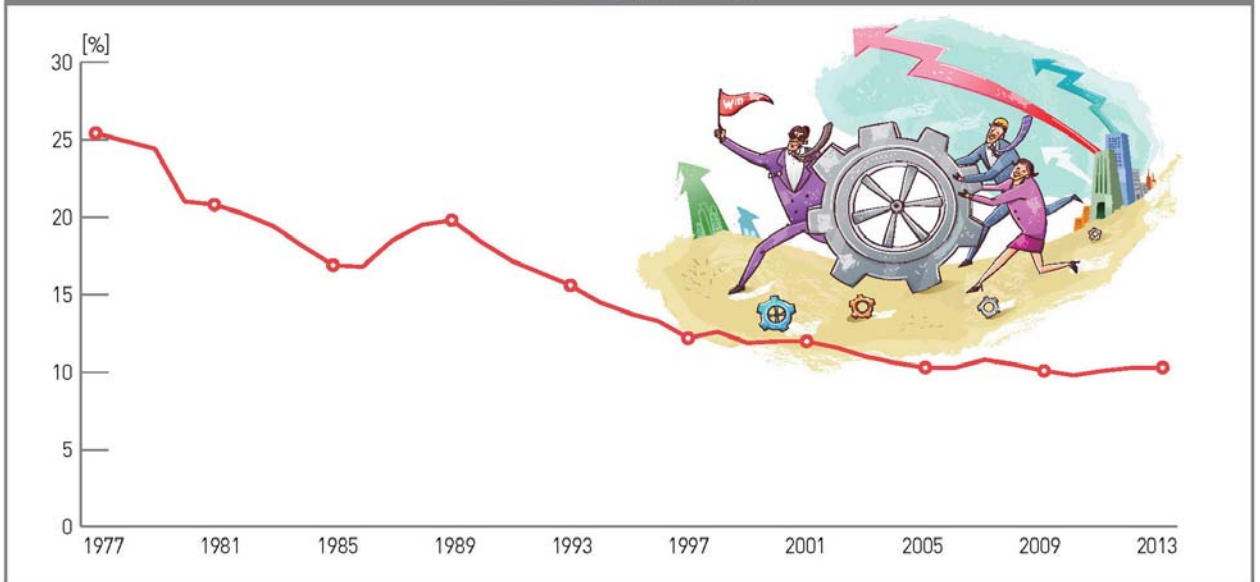


주 :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출처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1984년 12월 p. 34, 35,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992년 12월 p. 322,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노조 조직률(1977-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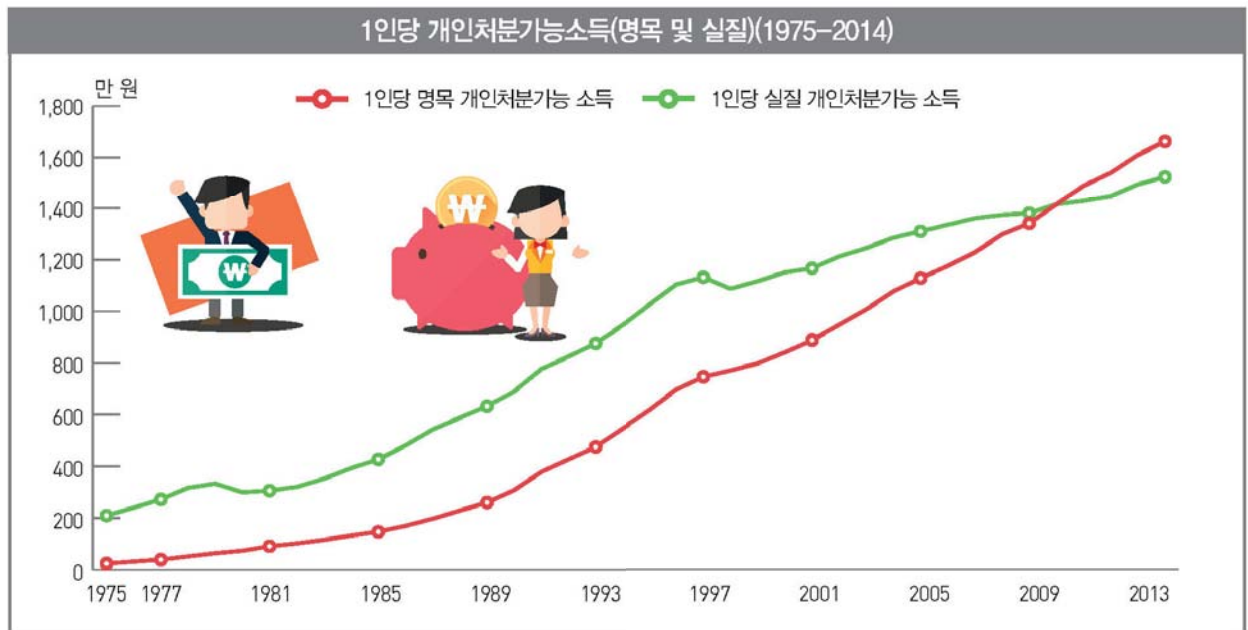


출처 /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e나라지표(www.index.go.kr).

6. 소득, 소비, 물가

■ 소득이 크게 증가했으며, 그에 따라 1990년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되었으나 최근에는 개선 추세

-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 1975년 22만 9000원에서 2014년 1663만원으로 증가
 - 물가 상승을 고려한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010년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1975년 209만원에서 2014년 1525만원으로 증가
 -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2013년 한국의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만 1402달러로 미국(4만 3740달러)의 약 49%
- 1990년 이후 소득불평등 심화, 최근 개선 추세
 - (도시 2인 이상 가구 세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0년 0.315로 악화되었으나 2014년에는 0.308로 개선 추세
 - ※ 지니계수는 0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값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도 1990년 3.93배에서 2010년 6.02배로 증가하였으나 2014년 5.67배로 개선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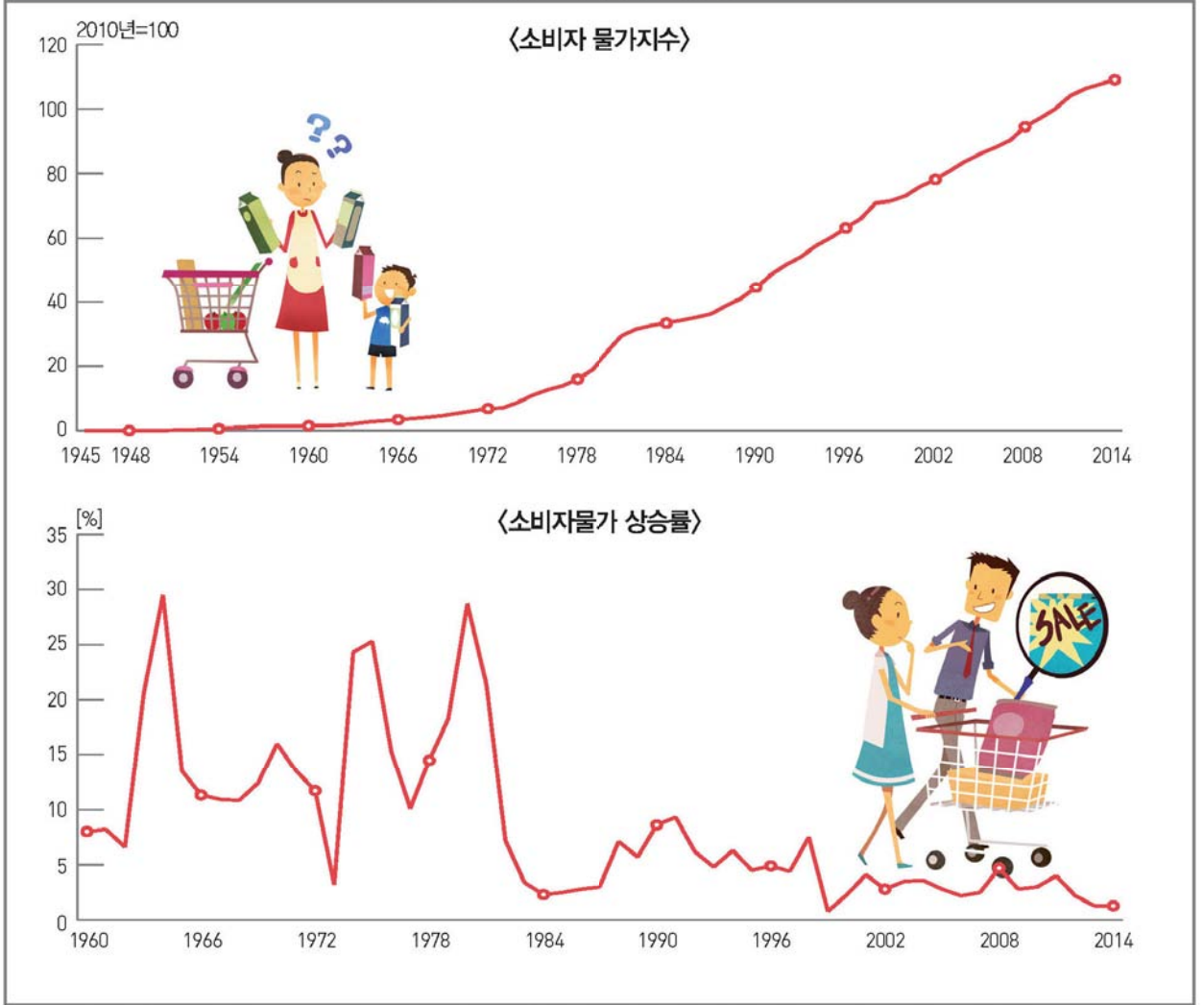


주 : 1인당 실질개인처분가능소득은 소비자 물가지수(2010년=100) 적용.
출처 /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 1965년~2014년 소비자 물가 36배 상승

- 1945년~1952년 사이 물가 약 330배 급등. 1981년까지 두 자리 수 이상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보이다가 1982년 이후 한자리수로 물가 안정
- 2010년 물가 기준, 1965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3.02에서 2014년 109.04로 36배 증가. 1965년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품목을 2014년에 구입하려면 36만원이 필요
-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물가 수준은 낮은 편. 2013년 한국의 물가에 비해 미국 16%, 일본 27%, 독일 31%, 영국 47%, 호주 62% 물가가 높음

소비자 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1945-2014)



출처 / 통계청, 소비자물가조사, 1945-1964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83의 2000년=100 수치를 2010=100 기준으로 재산정한 값임.

번호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소비자물가지수	0.03	1.48	5.38	24.27	44.54	73.10	100	109.04
소비자물가 상승률 (%)	167.5	8.0	16.0	28.7	8.6	2.3	3.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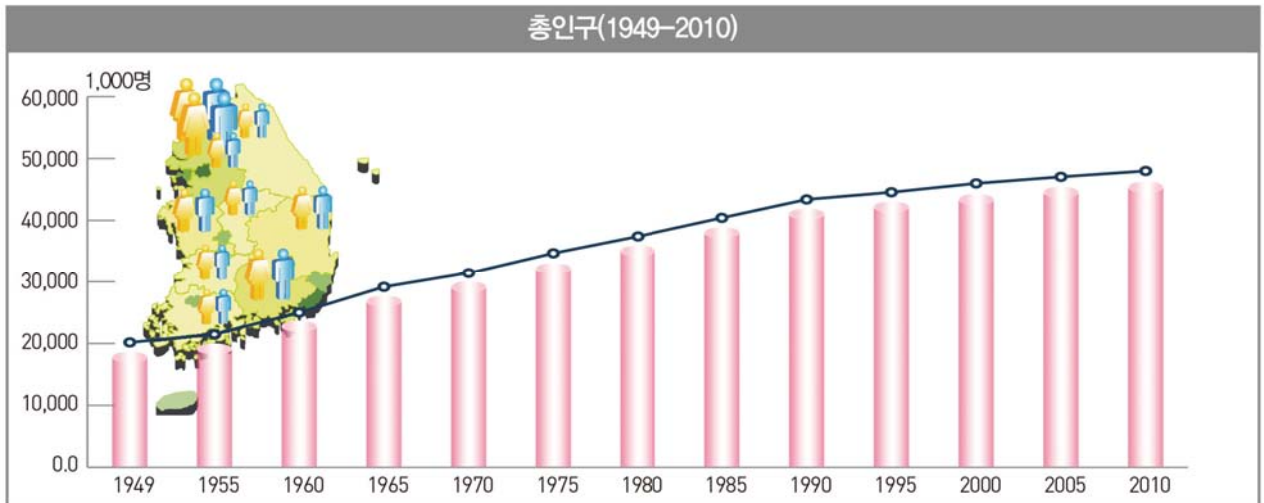


II 사회부문

1. 인구

■ 1949년 대비 인구는 2.4배로 증가(내국인 기준)

- 1949년 인구는 당시의 38선 이남을 기준으로 약 2,017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약 4,799만 명으로 집계
- 한국의 인구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26번째,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3번째임
- 전체 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 인구의 비중이 1990년 25.7%에서 2010년 16.2%로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90년 5.0%에서 2010년 11.3%로 높아짐
- 한국 인구(추계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60년 4,39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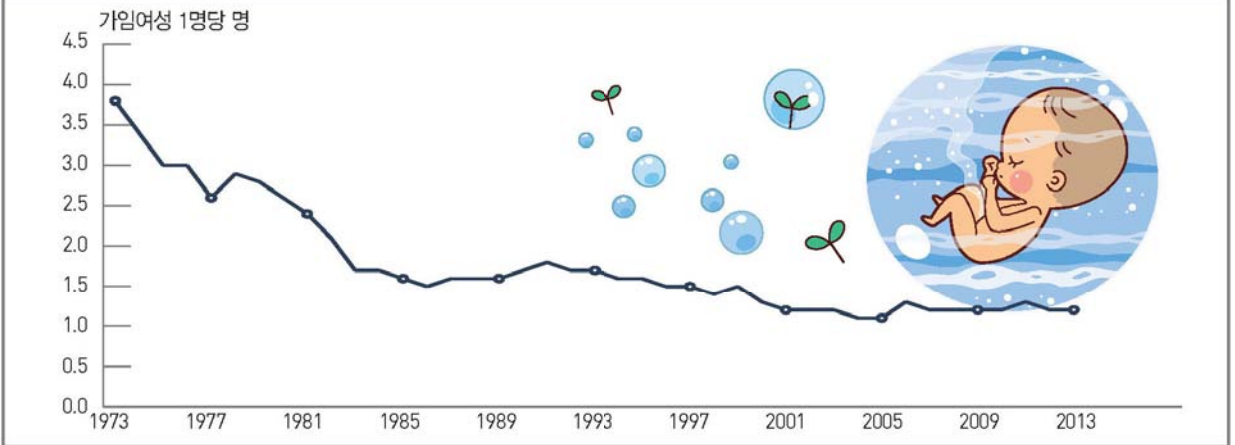
- 주 :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2) 전체 인구에는 '연령 미상' 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집단별 인구의 합계와 차이가 있음.
 3) 1949년 자료의 경우 64세 인구까지만 자료가 제공되어, 만 60-69세 인구는 60-64세 인구임.
 4) 1960년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연령집단별 인구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음.
 5) 1970년에는 해외주재공무원 및 그 가족(약 1,200인)을 제외함.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합계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2000년대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

- 한국 사회의 출산수준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만 이후 하락세를 계속 유지하여 1983년 합계출산율 2.1의 대체수준보다 낮은 단계로 진입
-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출산력의 저하를 가속화시켜 2000년대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
-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만 5천 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한국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주로 기인
 - 출산연령도 변해서 2007년부터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에서 30-34세로 바뀜

합계출산율(1948, 197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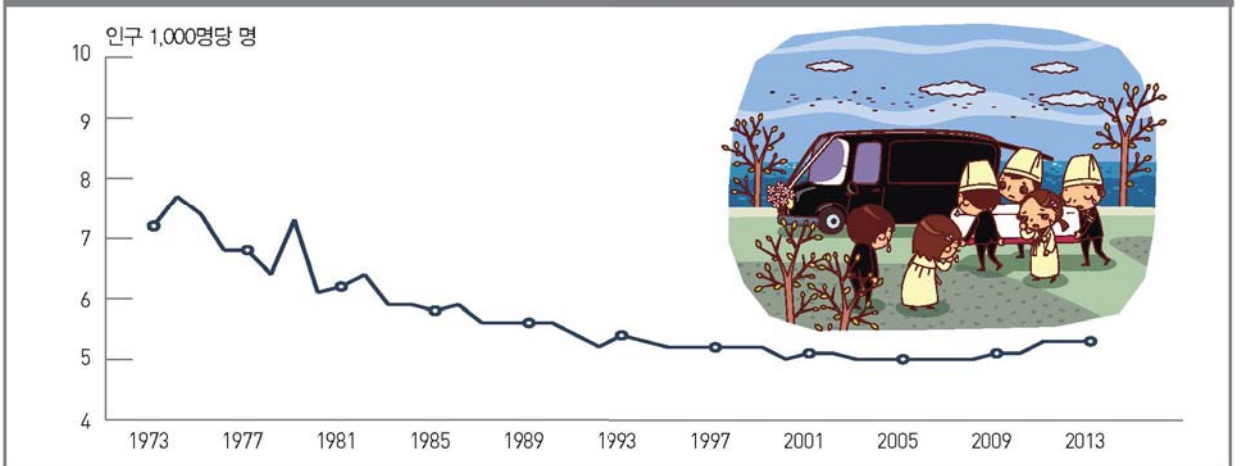
주: 1) 합계출산율 = (5세 간격 연령별 출산율의 합 ÷ 1,000) × 5. 연령별 출산율은 1년간 발생한 산모의 연령별(15-49세, 5세 간격) 출생아수를 당해 연도의 해당 연령별 여성의 연앙인구(7월1일 기준)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나타낸 것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한국인의 사망률은 지속적으로 감소

- 지난 7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한국의 사망률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도달
 -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영아사망률 역시 OECD 국가들 중에서 일본, 스웨덴, 체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
-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가 1970년 8.0의 수준에서 2004-2009년 5.0명으로 최저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2014년(잠정) 5.3명

조사사망률(197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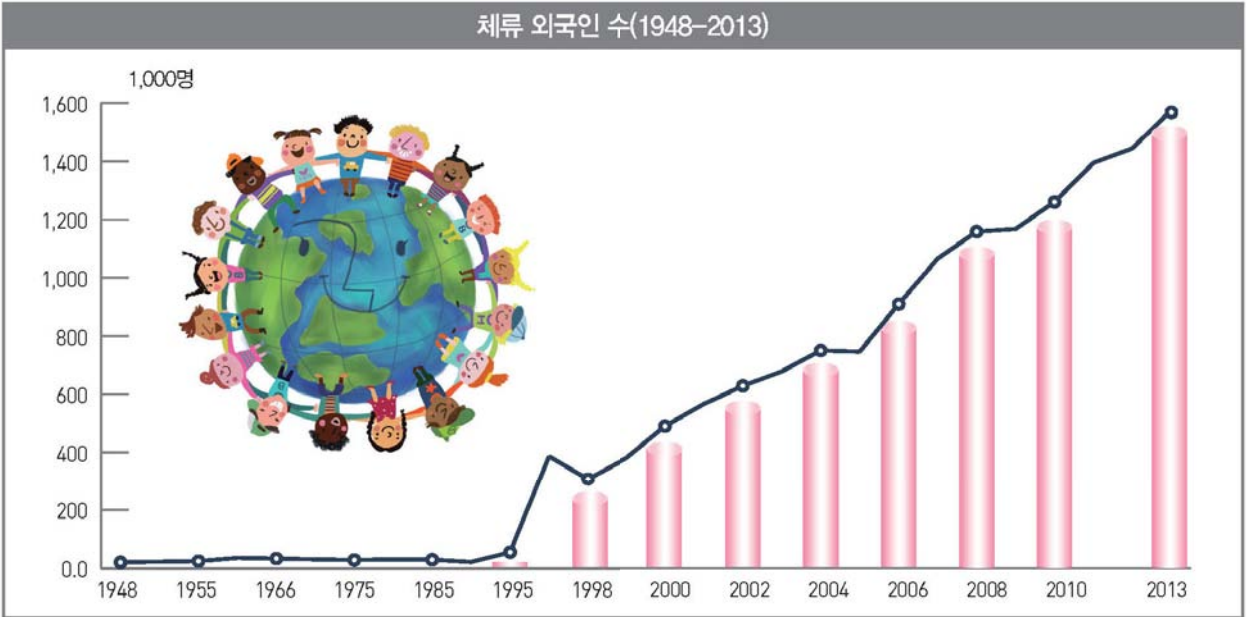
주: 1) 조사사망률은 해당연도의 인구 1,000명당 사망자수임.

2) 조사사망률 = (연간 사망자수 ÷ 해당 연도 연앙인구) × 1,000.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체류외국인은 2013년 157.6만 명을 기록해 1948년(2만명) 대비 약 79배 증가

- 한국은 1970년대까지 인력수출국에서 1990년대 이후 인구수입국으로 변화
- 1997년 이후로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2013년 현재 157.6만 명으로 2011년 대비 12.97% 증가
-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3년 현재 18.3만 명으로 추산되며, 2002년 30.8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의 수는 2006년까지 3.9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에는 그 누적 규모가 14.6만 명으로 8년 사이에 약 3.7배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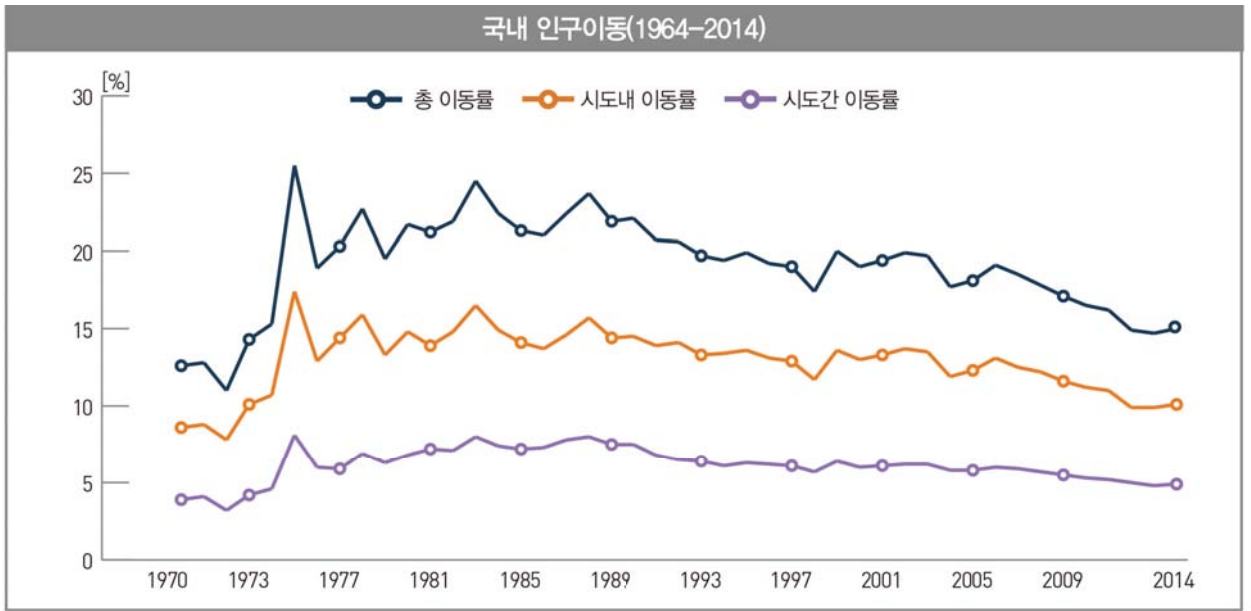


주 : 체류외국인수는 연말 기준임.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연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인구이동률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고, 2011년 처음 수도권의 전출 인구가 전입 인구 수를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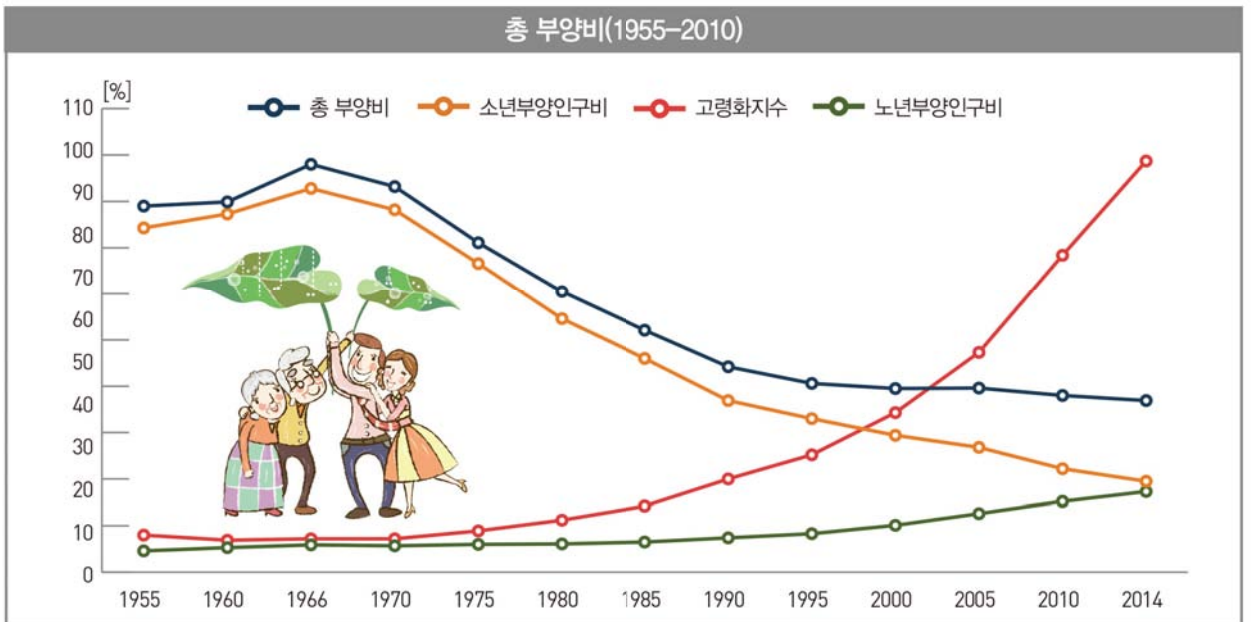
-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음
 - 1960년대 이후 이촌향도의 이동으로 1970년 405만 명(이동률 12.6%), 1980년 826만 명(이동률 21.7%), 1990년 946만 명(이동률 22.1%) 이동
 - 2000년대 이동자수는 점차 줄어들어 2000년 19.0%, 2010년에는 16.5%, 그리고 2014년에는 15%
- 한국 인구이동의 주류는 수도권을 향한 인구이동으로, 수도권 인구유입이 가장 심했던 1970년대 매년 약 37만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
 - 1990년대 들어와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매년 약 12만 명 수준을 유지
- 수도권의 순이동이 2011년, 2013년~2014년 모두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순유출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비수도권에서 이동할 잠재적 인구 자체가 감소하고, 지방도시의 흡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임



출처 / 통계청, 「2014년 12월 및 연간 국내인구가동통계」;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 출산수준 및 사망률 저하, 그리고 수명 연장으로 총 부양비는 감소

- 유소년부양비는 1960년 77.3%로 매우 높았지만 2014년에는 출산수준의 감소 등으로 19.5%로 감소함.
- 1960년 5.3%에 불과했던 노년부양인구비는 지속적인 사망률 저하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2014년에는 17.3%로 3배 이상 증가
- 한국의 노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10%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88.7%에 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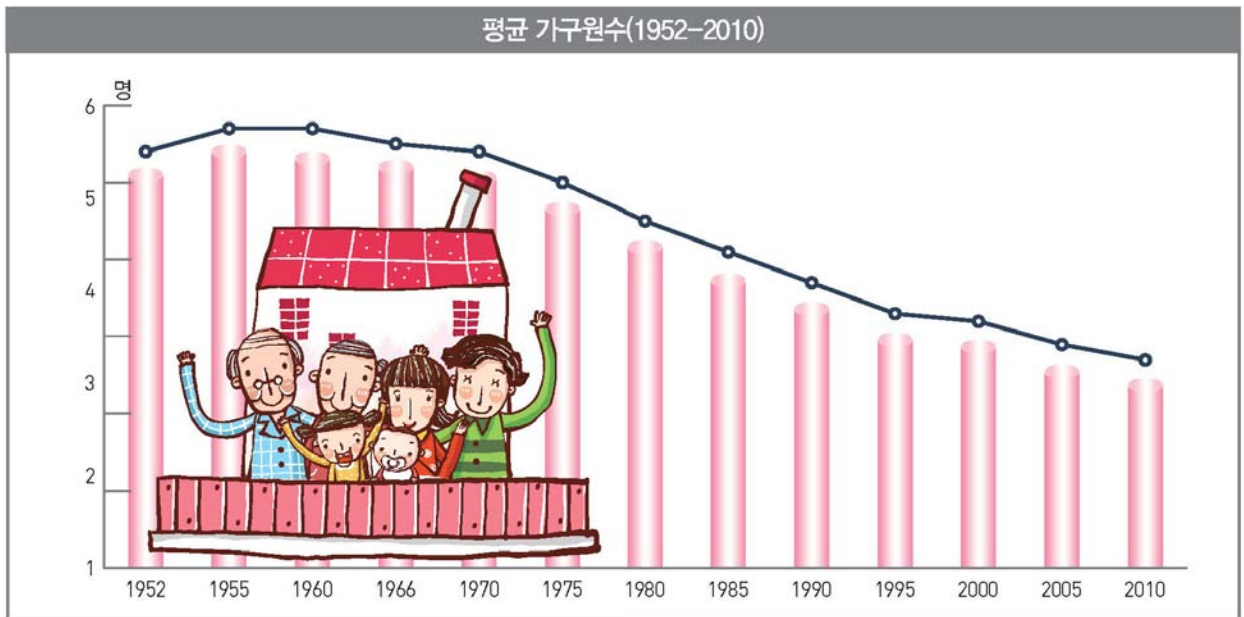
주 : 총부양비 =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2. 가구와 가족

■ 평균 가구원수는 1952년 5.4명에서 2010년 2.7명으로 감소

- 1952년 5.4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1955년과 1960년에 5.7명으로 증가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 5.4명, 1980년에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2명, 2010년 2.7명이 됨
- 1인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향후 가구분포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1인가구의 증가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기인
-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구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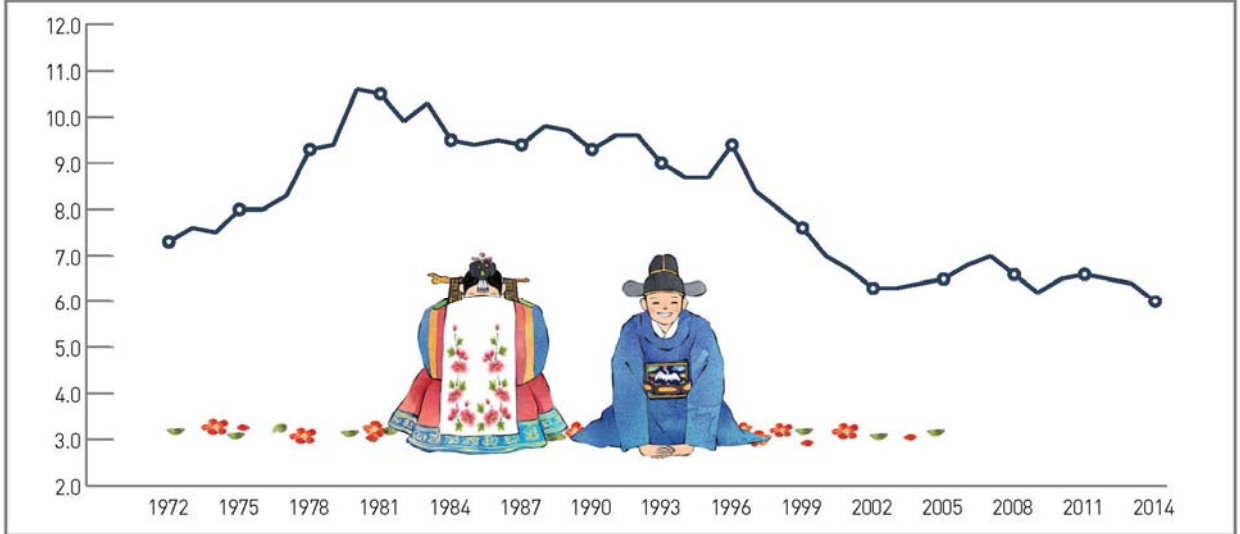


주 : 평균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수.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통계연감」.

■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에서 2014년 6.0건으로 크게 감소

- 조혼인율은 1960년대 급상승 이후 1970년대에 다소 낮아졌다가, 1980년 10.6건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4년 6.0건으로 크게 감소
 -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조혼인율이 높은 국가에 속하나,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30여 년 사이 급격히 감소
- 지난 30여 년간 초혼연령은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 남자 32.4세, 여자 29.8세임

조혼인율(196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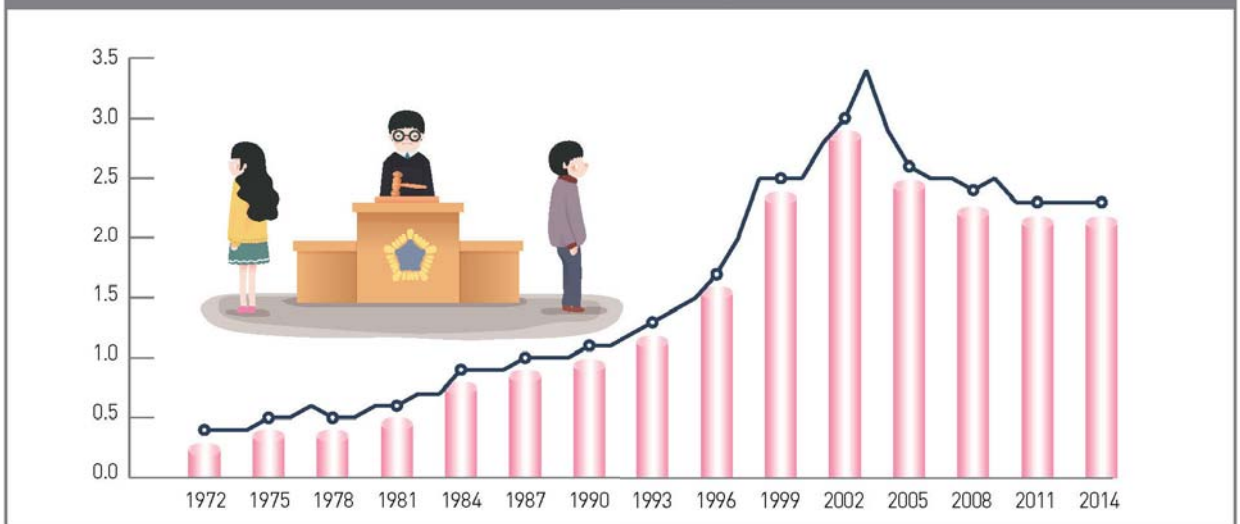


주 : 조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조이혼율은 1970년 0.4건에서 2014년 2.3건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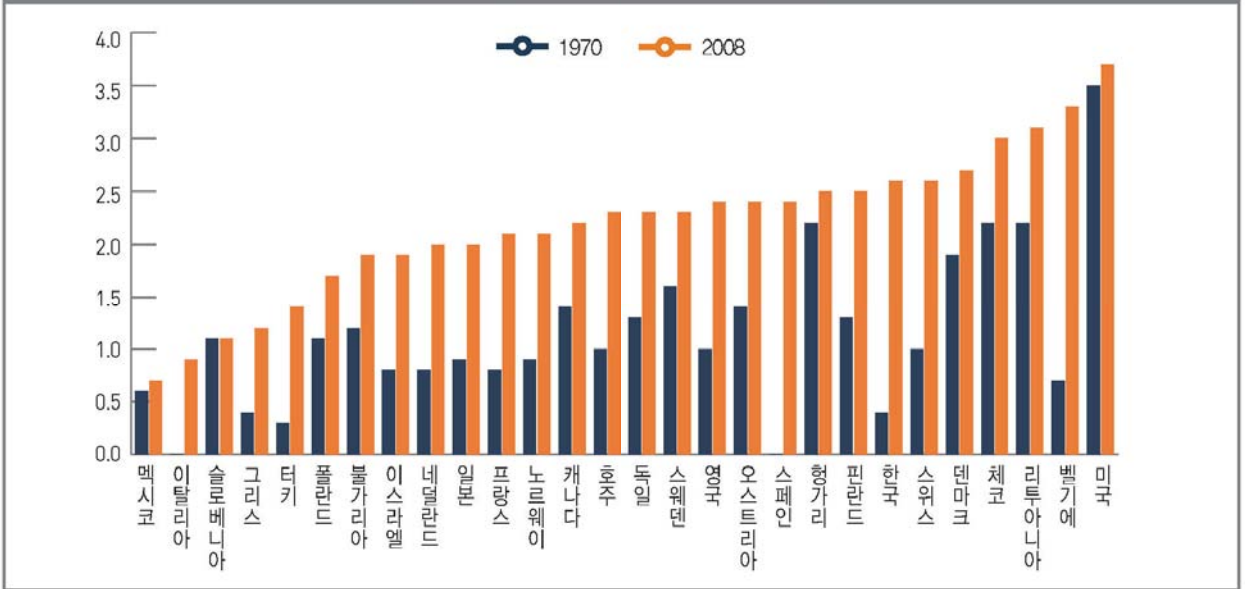
- 한국의 조이혼율은 1970년 0.4건, 1980년 0.6건, 1990년 1.1건으로 완만하게 증가
- 2000년 들어 이혼율이 2.5건으로 급증 이후 2003년 3.4건으로 최고점에 이룸
- 이후 조이혼율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현재 2.3건으로 2000년대 들어 최저 수준을 보임
-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여 1970년 하위 4번째로부터 2008년 상위 10번째가 됨
-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경제적 불안정 증가, 호주제 폐지,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에 기인

조이혼율(1960-2014)



주 :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임.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OECD 주요국의 조이혼율(1970, 2008)



주 : 1) 조이혼율은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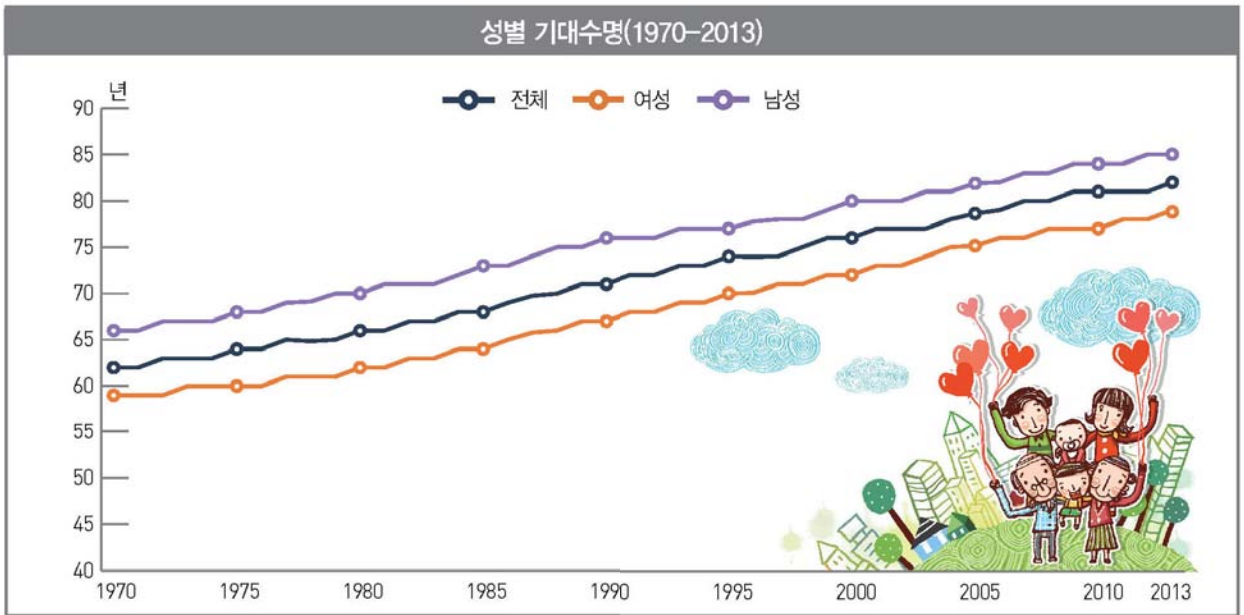
2) 2008년 수치 중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스, 멕시코 등은 2007년 자료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2006년 자료임.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출처 / OECD 「<http://www.oecd.org/>」2014.06; 「OECD Family Database 2014」.

3. 건강

■ 1970년에 비해 기대수명은 61.9세에서 2013년 81.9세로 지난 43년간 약 20세 증가

- 1970년에 남성의 평균수명이 58.7세, 여성의 평균수명이 65.6세로서 6.9세 차이가 났는데, 2013년에는 남성 수명이 78.5세, 여성 수명이 85.1세로 늘어났고, 그 차이는 여전히 6.6세임
- 한국의 기대수명을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보면, 1970년에는 61.9세로서 4개국 중 가장 기대수명이 짧았지만, 1986년에 69.1세로 중국을 추월했으며, 2002년에는 77.0세로 미국을 추월함
- 건강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한국인의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은 2012년에 66.0세로서 2012년의 기대수명 81.4세와는 15.4년의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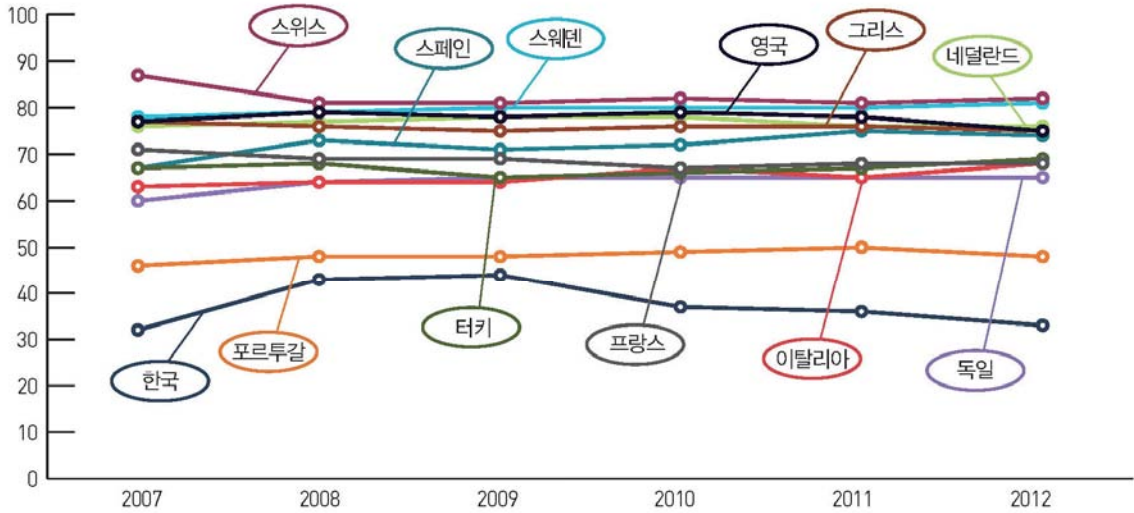
주 : 기대수명은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특정 출생 집단이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산출한 「생명표」에서 '연령별 기대여명' 중 '0세의 기대여명' 임.

출처 / 통계청, <생명표>, 각 연도, OECD, STAT, life expectancy

■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는 OECD 국가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포르투갈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모두 60%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30%대에 머물고 있음
-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및 40대 등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50대,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함
- 한국인의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실제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해 한다는 것을 드러냄

OECD 주요국의 주관적 건강상태(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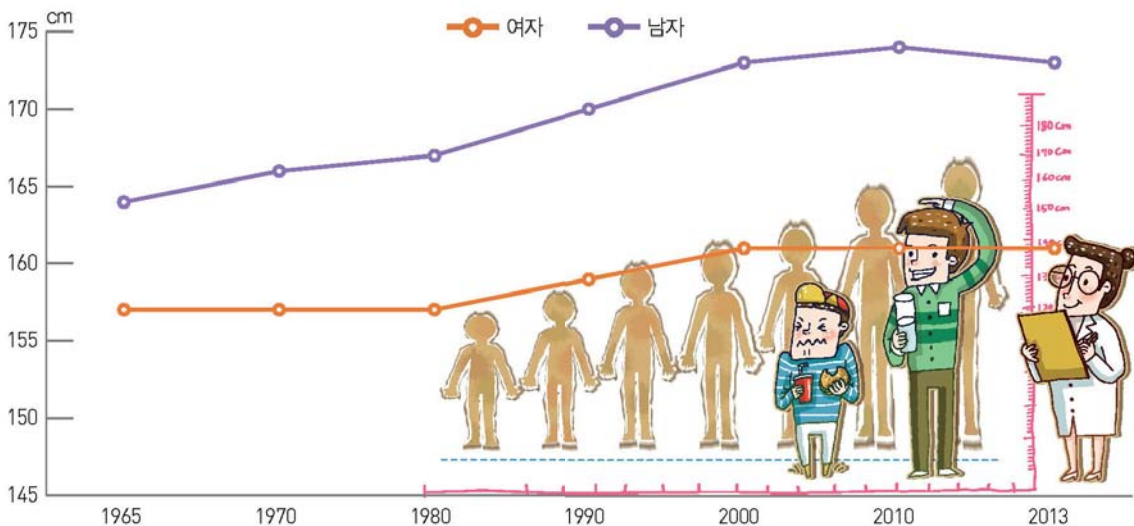
주 : 건강인지율은 전체 인구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 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임. 한국은 만 19세 이상, 그 외 유럽국가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출처 / OECD,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OECD, <OECD health data>. 2014.

■ 1965년 대비 2013년에 17세 남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9.5cm, 13.9kg, 17세 여자의 평균 키와 몸무게는 3.9cm, 5kg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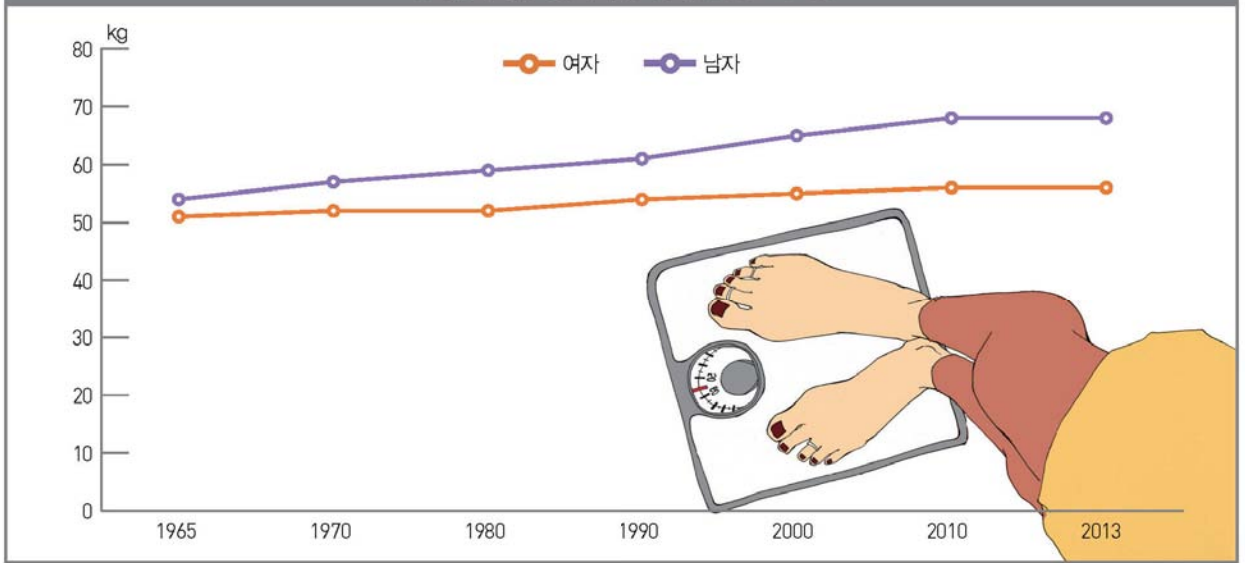
- 1965년 대비 2013년에 17세 남자의 키는 163.7cm에서 173.2cm로 9.5cm 커짐
- 같은 기간 17세 여자의 키는 156.9cm에서 160.8cm로 3.9cm 증가함
- 1965년 대비 2013년 17세 남자의 몸무게는 54.3 68.2 kg으로 13.9 kg 증가함
- 같은 기간 17세 여자의 몸무게는 51kg에서 2013년 56kg으로 5kg 증가함

17세 남녀별 평균 신장 변화(1965-2013)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7세 남녀별 평균 체중 변화(196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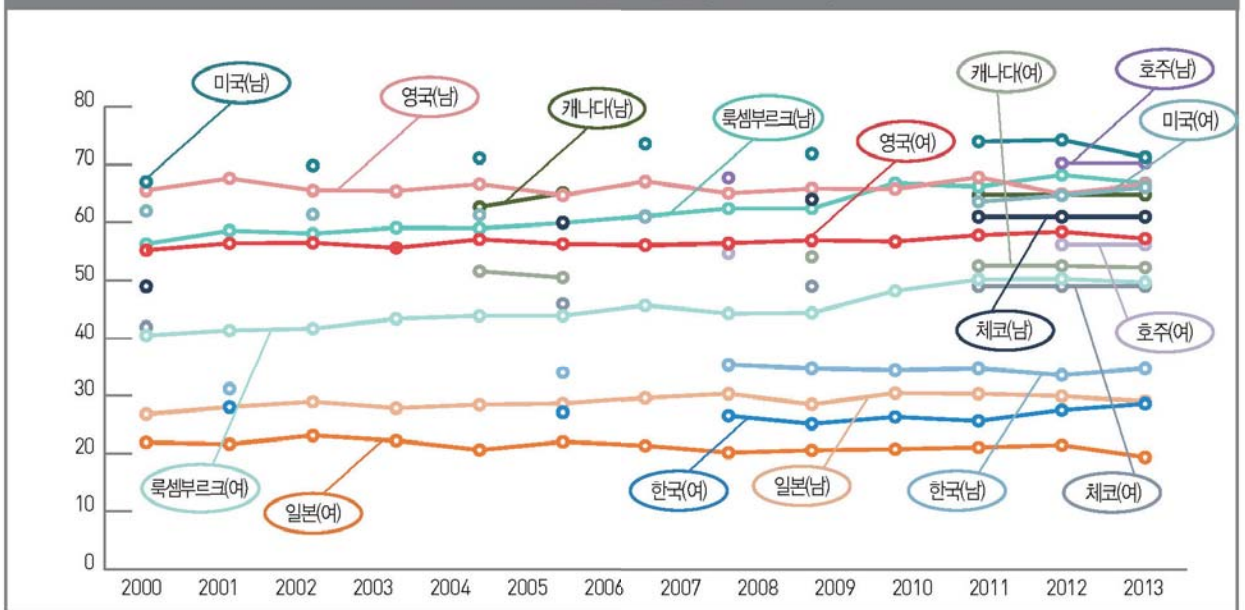


출처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성인비만율은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임

- 1998년 26%의 성인이 비만이었으나 2013년 31.8%의 성인이 비만 상태에 있음
- 여성의 비만율이 25~28%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남성 비만율이 1998년 25.1%에서 2013년 37.6%로 크게 증가
- 룩셈부르크, 미국, 영국, 일본, 체코, 캐나다, 호주의 성별 비만율과 한국의 성별 비만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만율은 일본과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

OECD 주요국의 성별 비만율(200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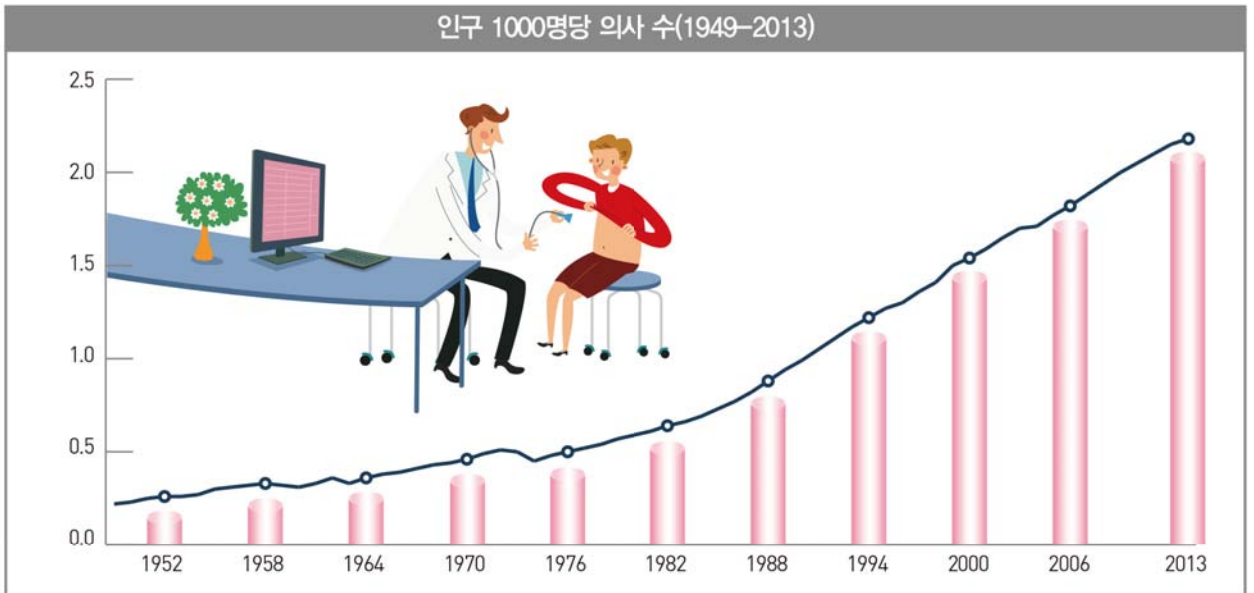


주 : 비만율은 만15세 이상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이상인 비율임. 체질량지수는 직접 계측방식으로 측정되었음.2) 체코, 캐나다는 2010년, 호주는 2011년 자료임.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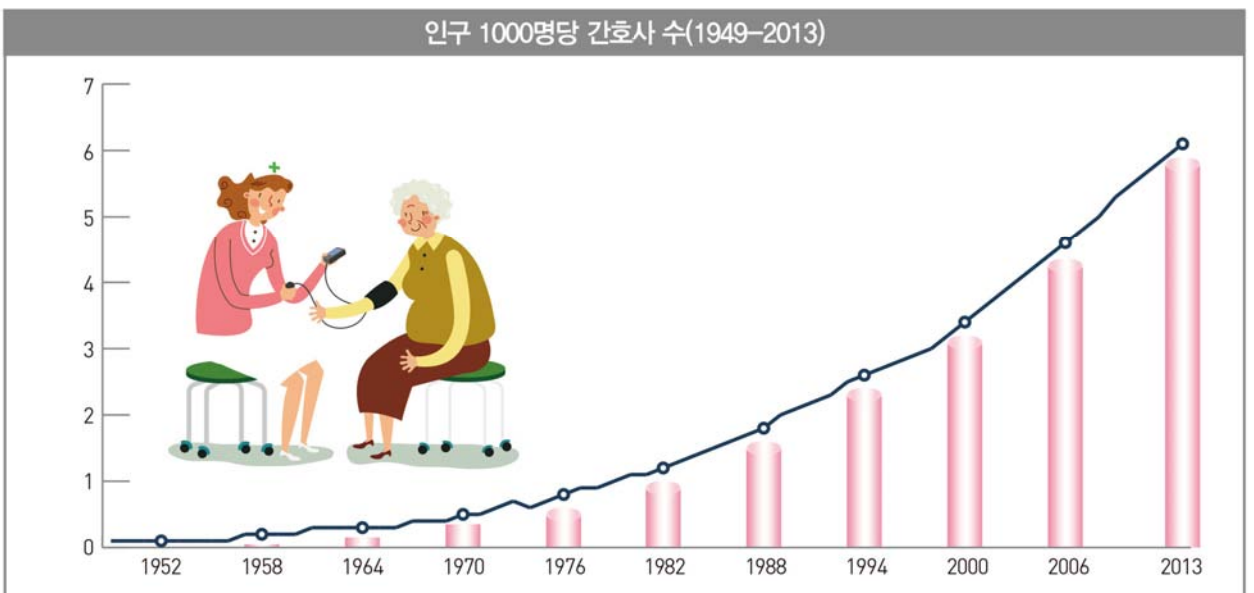
출처 /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 1949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0.22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18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

- OECD 주요국(독일, 멕시코,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호주)의 2012년 평균 3.2명과 비교할 때 한국의 의사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1949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0.1명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6.1명으로 60배 가까이 증가
- 그러나, 인구대비 간호사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면, 2012년 현재 OECD 평균에 비해 55% 수준에 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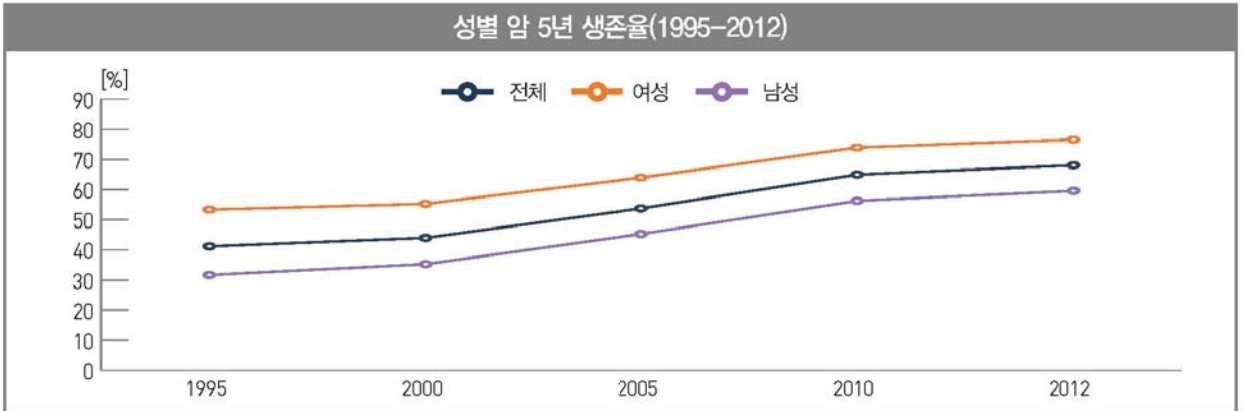
주 : 전체 통계는 면허의사수 기준이고, 시도별 통계는 의료기관종사 의사수(활동의사 수) 기준임) 시도별 통계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4.



주 : 간호사수는 면허간호사 기준임) 2004년 이후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임.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 암 5년 생존율은 1995년 41.2%에서 2012년 68.1%로 26.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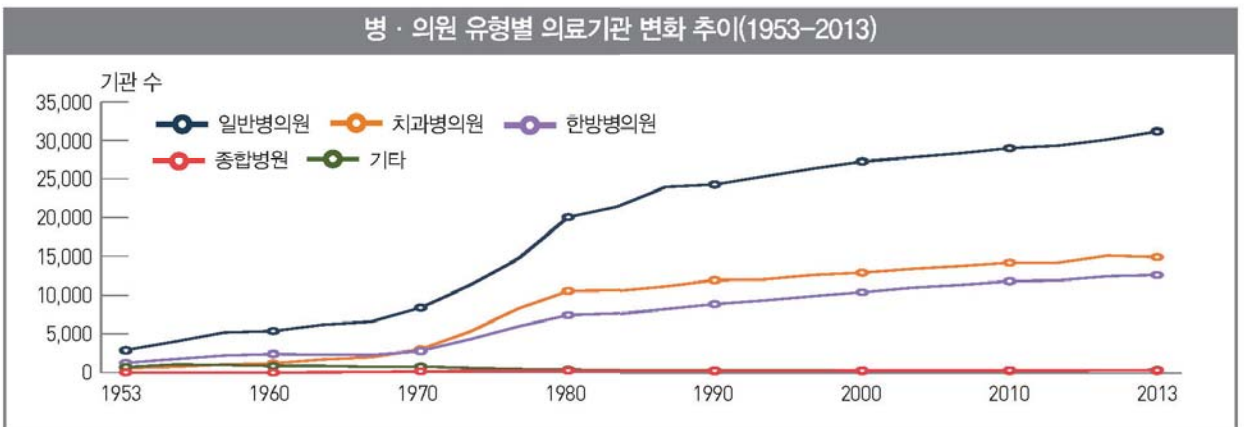
- 개선이 가장 뚜렷한 분야는 대장암 분야로서, 5년 생존율의 경우, 1995년에 54.8%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4.8%로 크게 증가함
- 유방암 5년 생존율도 1995년 78%에서 2012년 91.3%로 크게 증가함
- 한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은 2007년에는 OECD 평균 수준과 유사했으나, 2011년이 되면 OECD 평균 수준을 10%p 이상 추월하여 세계수준의 의료기술을 자랑하게 됨



주 : 암 5년 생존율은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출처 /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12년 암등록통계)>, 2015.

■ 의료기관수는 1955년 5,542개소에서 2012년 59,519개소로, 10배 이상 증가

-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은 1955년에 42개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323개로 7.7배 늘어났고, 병원(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은 같은 기간에 90개에서 1,327개로 14.7배 늘어남
-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 새로운 형태의 병원이 급격히 늘어난 반면, 조산원은 한때 1,000개에 육박했으나, 이제는 거의 소멸되어 찾아보기 힘들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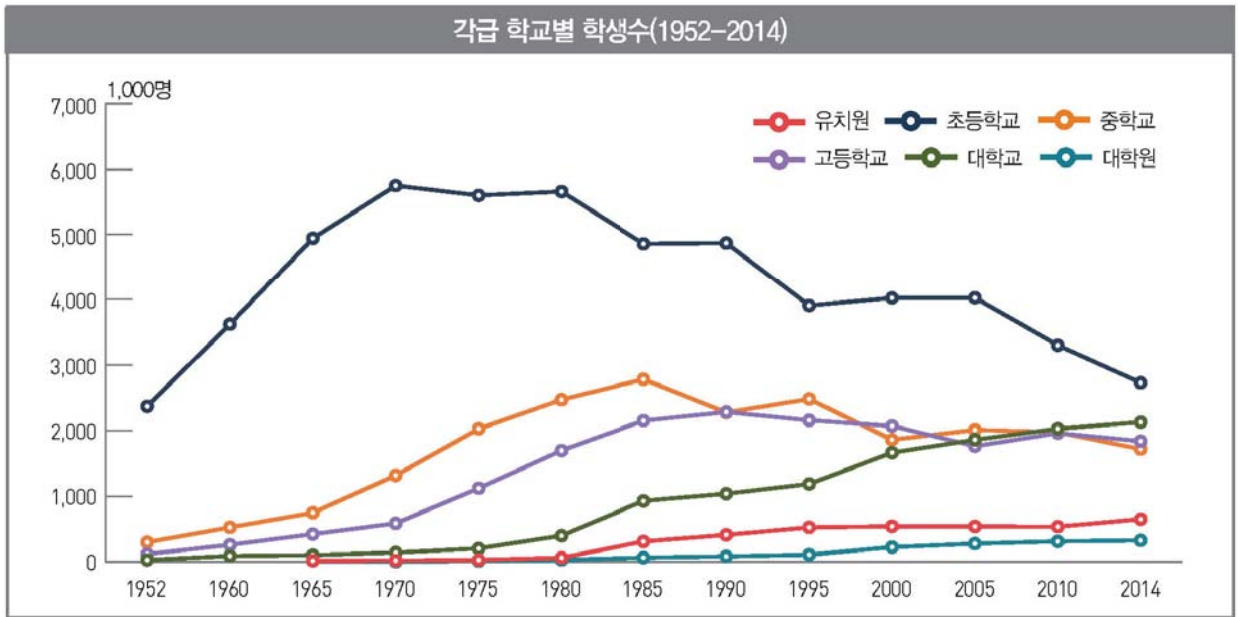


주 : 1)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 (의료법 제35조).
2) 1965~1980년 기간동안 병, 의원에 대한 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1970년을 대신하여 1969년 자료를, 1975년을 대신하여 1977년 자료를 기입하였음.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4. 교육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학생수는 증가하다 감소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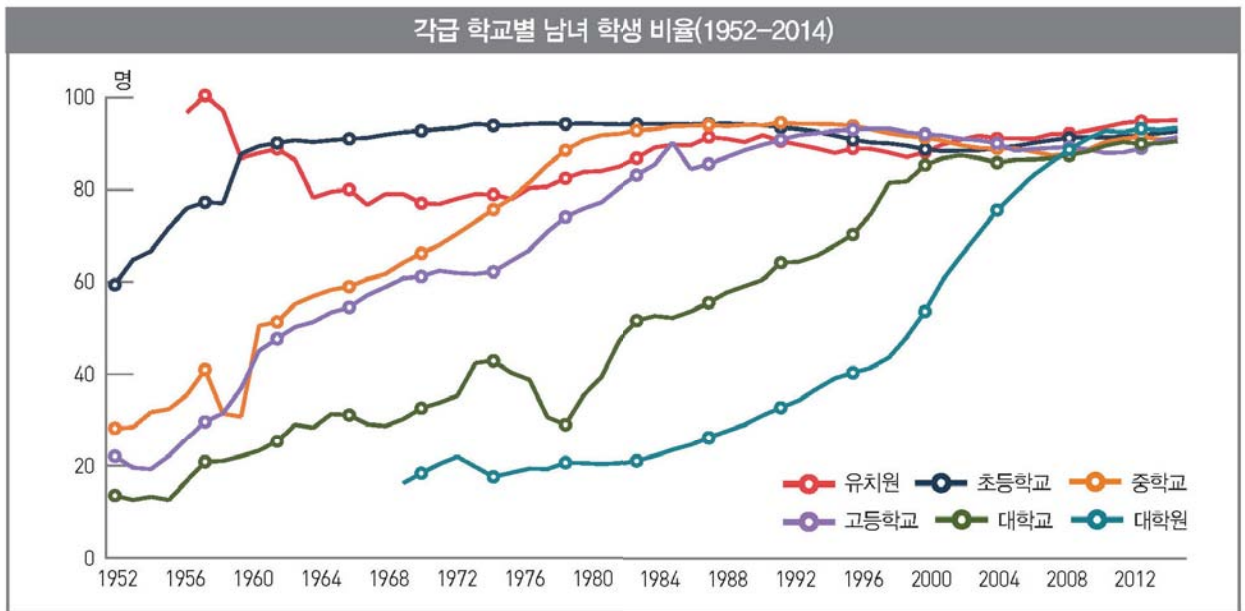
- 초등학생 수는 의무교육이 일찍 시행되어 인구의 변화가 학생 수의 변화로 바로 연결. 1952년 237만이던 초등학교 학생 수는 1970년 575만으로 2.5배에 가깝게 급증하였으나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고 1980년 후에는 꾸준히 그 수가 감소하여 2014년 현재에는 273만 명
- 1952년 30만이었던 중학교 학생 수는 1980년 247만으로 빠르게 증가한 뒤 1985년 278만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2014년 현재 172만 명
- 고등학생 수는 1952년 12만 명에서 1983년 200만 명을 넘어, 1989년 23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를 시작하여 2014년 현재 184만 명
- 대학생은 인구변화 외에도 대학 설립 완화로 1952년 불과 3만 명에서 1985년 100만에 가까이 되었으며, 2014년 213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주 :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으로 분류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경제수준 향상과 남존여비 의식 약화로 남녀 학생 비율의 격차 감소

-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는 남녀비율이 196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유지
- 1952년 당시 중학교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28%, 고등학생의 경우 22%, 대학교의 경우 14%에 불과
- 1971년에는 중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의 64%로, 고등학교의 경우 61%로 높아졌으며, 1980년에는 각각 89%와 74%, 1990년에는 각각 94%와 89%로 증가
- 대학교에서의 남녀 학생 비율 1971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30%, 1980년에 29%, 1990년에 59%, 2000년에 85.4%, 그리고 2014년에 90.6%에 이르기까지 완만하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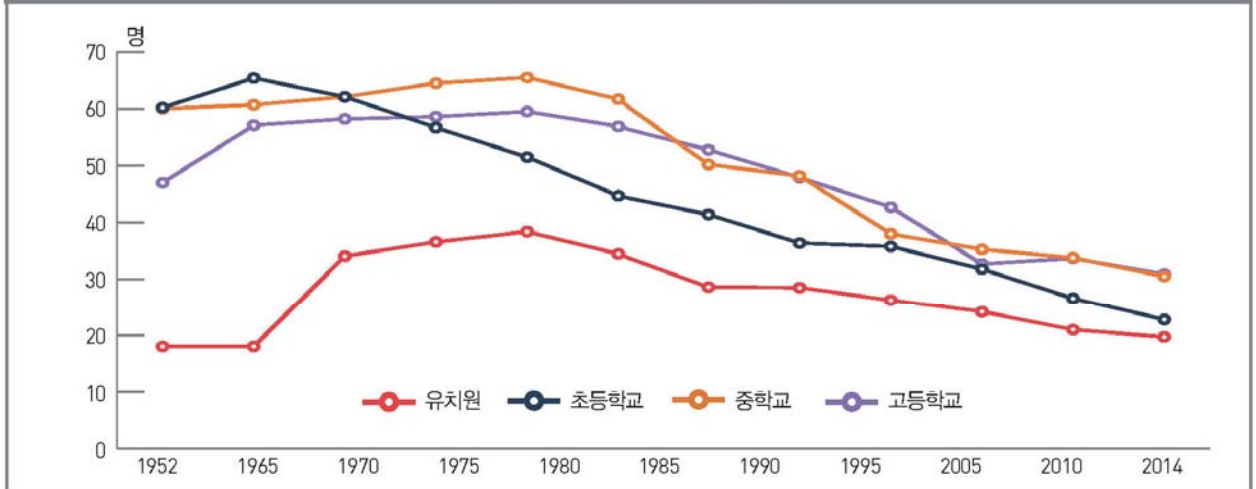


- 주 :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성비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를 의미함.
 3) 대학생의 경우 총 재적인원이 아닌 재학생에 대한 남녀 학생 비율임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경제수준의 향상과 학령인구 감소로 학급별 학생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충분치 못했던 과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높아서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도 했지만 경제수준의 향상 및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상황은 빠르게 개선
 -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952년 60명에서 1965년 65명까지 높아지지만 이후 1985년 45명, 2014년 23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
 -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80년 66명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해서 2014년 절반이 채 안 되는 31명으로 감소
 -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52년 47명에서 1980년 60명까지 증가한 이후 2014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절반 수준인 31명으로 감소

학급별 학생수(195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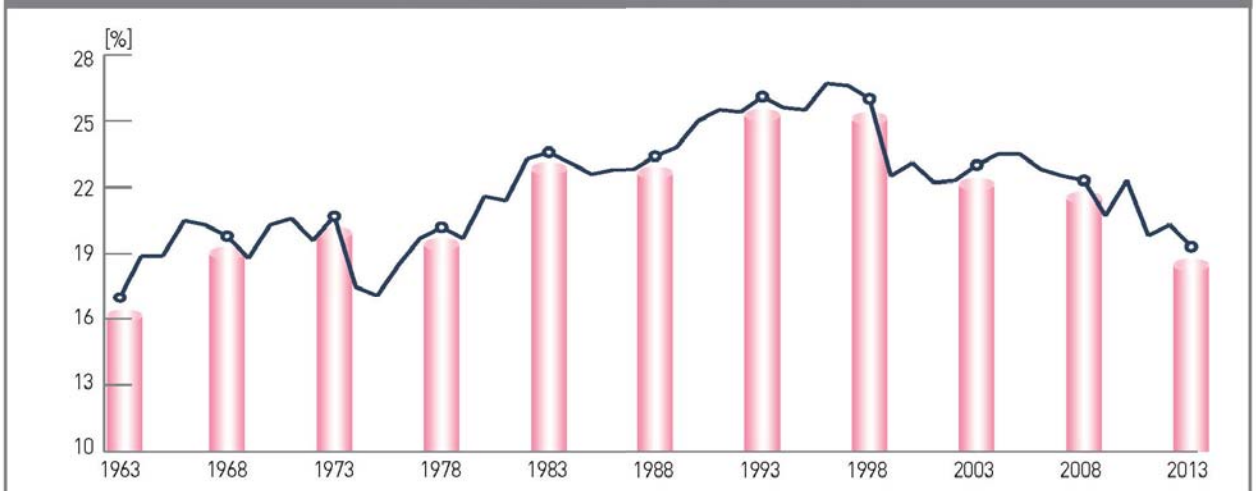


주 :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대학과 대학원생은 도표에서 제외됨.
 3) 도표에서 유치원의 경우 1952년 수치가 없어 1965년 수치를 입력한 것임.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0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

-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계속 유지
- 교육예산 비율은 1963년 14.3%에서 1990년대 22% 이상으로 높아졌으며, 이후 감소를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 20%대, 2013년 약 17%임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196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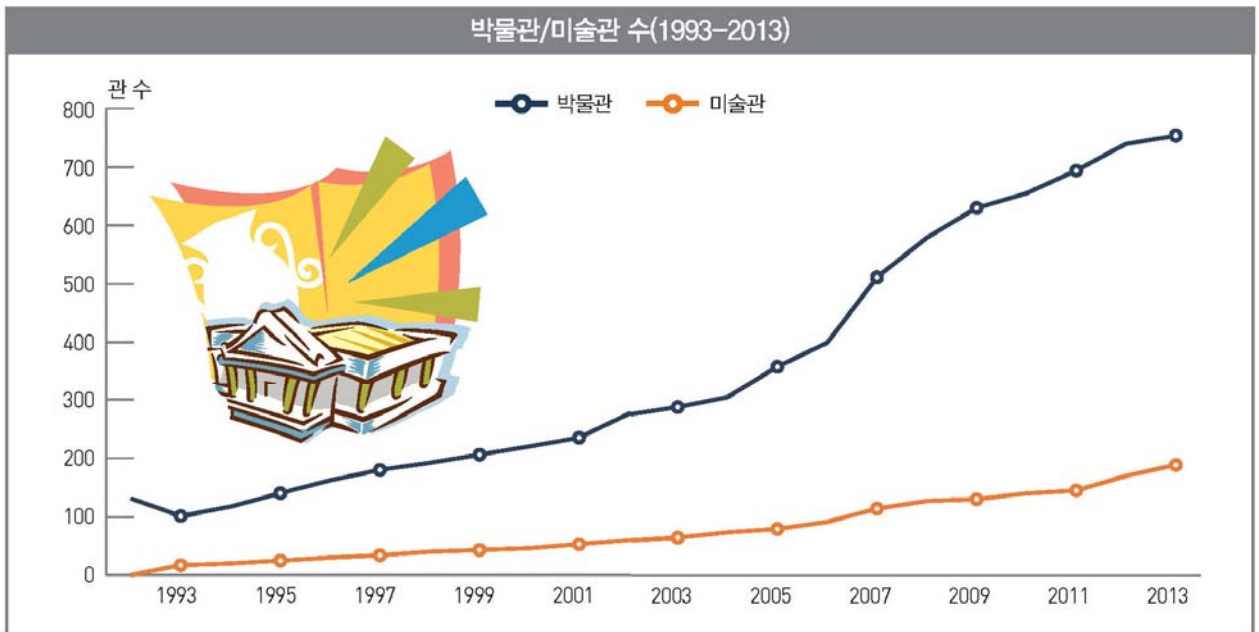


주 : 1) (~2004) 정부예산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2) (2005~) 정부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5) 2013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준이며,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됨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5. 문화와 여가

■ 박물관과 미술관의 수는 1990년대 이후 크게 증가

-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체계적 자료가 가능한 1990년대 이후를 보면 1991년 131개였던 박물관의 수는 2004년 300개를 넘어선 뒤에 급증해서 2013년 754개
 - 2000년대 중반 이후 박물관이 급증한 것은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의 수가 증가한 결과
- 1993년 17개에 불과했던 미술관은 2013년에 190개로 증가했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사립미술관의 증가가 두드러져서 2000년 36개에 불과했던 것이 131개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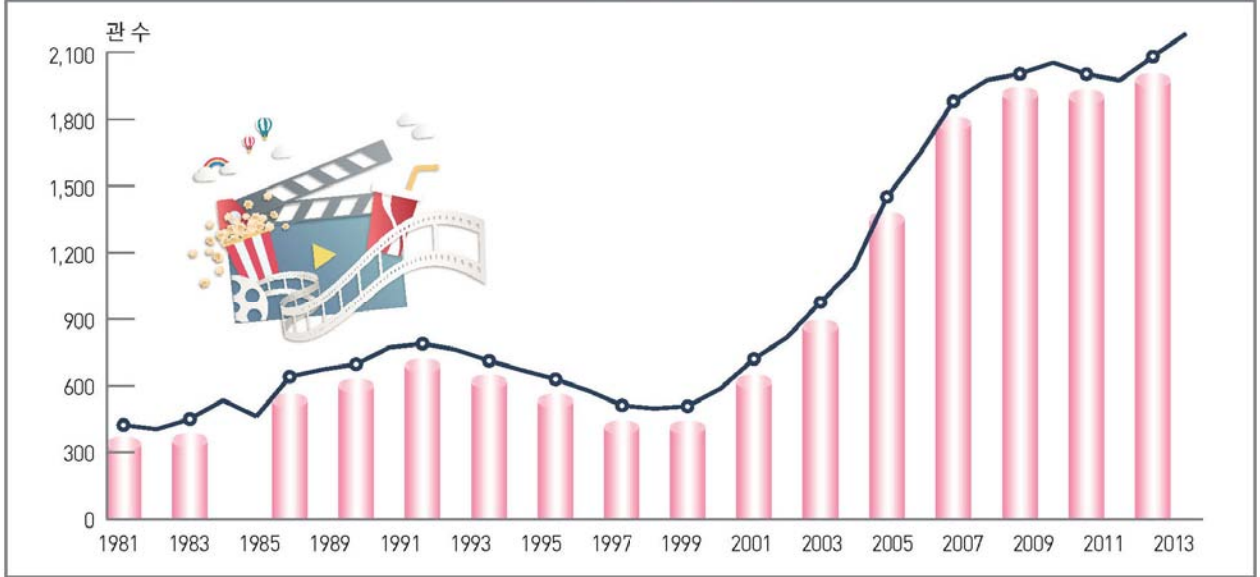


주 : 박물관 통계는 국립·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만 해당되며, 단 과학관 육성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과학관은 제외됨.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통계」.

■ 멀티플렉스 형태의 대형 극장의 영향으로 2000년대 이후 극장 수는 크게 늘지 않은 반면 스크린 수가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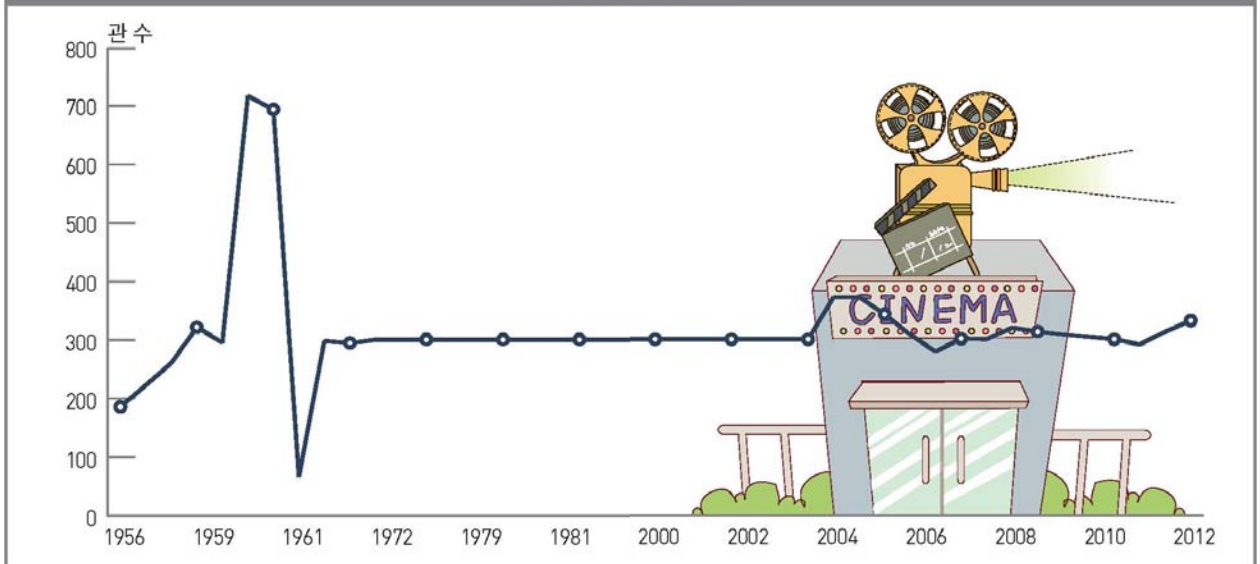
- 한국의 스크린 수는 1981년 423개에서 1990년 789개까지 증가했다가 1998년 507개로 감소하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3년 1,000개, 2008년 2,000개를 넘고, 2013년 현재는 2,184개에 이룸
- 극장 수는 1956년 186개였으며, 1971년 717개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였지만 이후 1970년대 후반에 갑작스런 감소에 의해 1980년 295개까지 줄었다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음

스크린 수(1981-2013)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극장 수(195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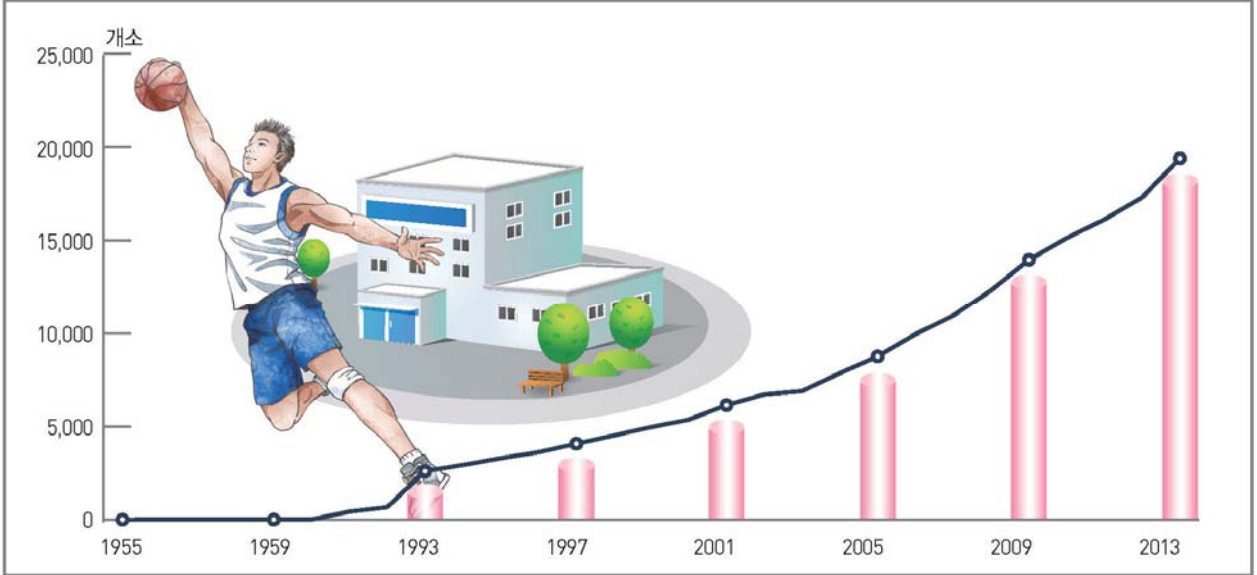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공공 체육시설 수는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3년 19,398개가 운영

- 1960년까지 32개에 불과하던 공공체육시설은 1980년대 후반 500개를 넘고, 1993년 2,621개에서 2000년 5,373개로 두 배 이상 빠른 증가를 보임
- 2007년 10,000개를 넘는 체육시설 수는 2013년 19,398개가 운영됨

공공체육시설 수(195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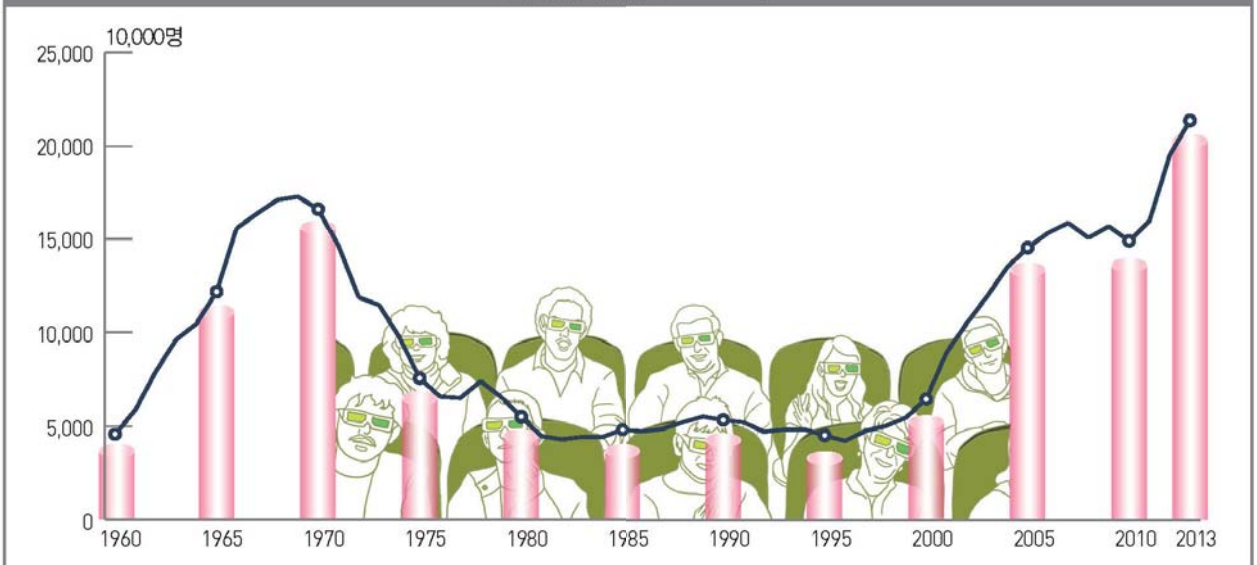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영화 관람자수는 1985년 4,810만 명에서 2013년 2억 1,355만으로 크게 증가

- 영화 관람자수는 1960년 연간 4,600만 명에서 1969년 연간 1억 7,304만 명까지 급증한 이후 감소를 시작해서 1980년대와 1990년대 5,000만명 내외에 머무름
- 2000년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한 영화 관람자 수는 2005년 1억 4,552만 명, 2013년에 2억 1,355만 명에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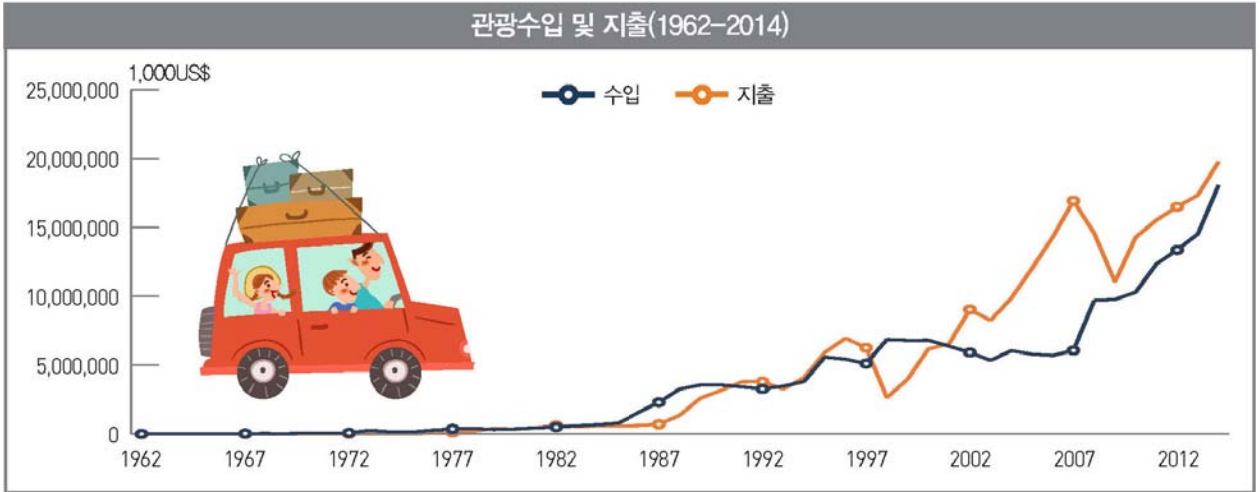
영화 관람자수(1960-2013)



출처 /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화연감」.

■ 해외관광이 크게 늘어나면서 2014년 관광수입은 약 180억 달러, 관광지출은 약 200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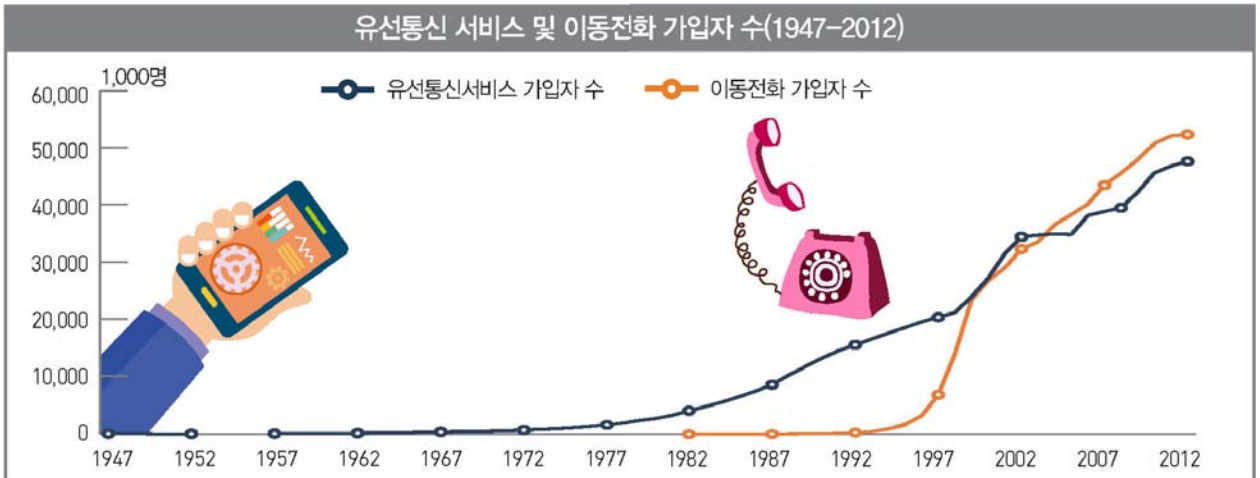
-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은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큰 계기가 되어 85년 8억 달러, 관광수입이 86년에 15억 달러로 두 배가 되었고, 88년에 다시 33억 달러로 두 배 넘게 늘어남
- 관광수입은 2008년부터 다시 빠르게 늘기 시작해서 2014년 관광수입은 180억 달러에 이름
- 1983년 시작된 여행자유화 정책이 1989년 완전 전면화되자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하여, 내국인 여행경비는 1988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은 다음 1995년 50억 달러, 2005년 100억 달러를 넘고, 2014년 현재는 200억 달러에 근접



출처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990년대부터 크게 늘어 2012년 약 5,200만 명에 이름

- 유선전화만이 상용화되었던 1997년 이전 전화 가입자는 1947년에 3만 7천명이었고, 전쟁 후 1955년에는 2만 9천명에 불과했지만 1975년 100만 명을 넘어서서 1988년 1,000만 명을 넘었고, 1997년 2,000만 명, 2001년 3,000만 명, 2009년 4,000만 명을 넘어서 2012년 현재 4,764만 명이 유선전화 서비스에 가입
- 이동전화 서비스는 1982년 300명의 가입자가 있었으며, 1999년 2,000만명, 2002년 3,000만명, 2006년 4,000만명을 넘어 2012년현재 전체 한국 인구보다 많은 5,235만명의 가입자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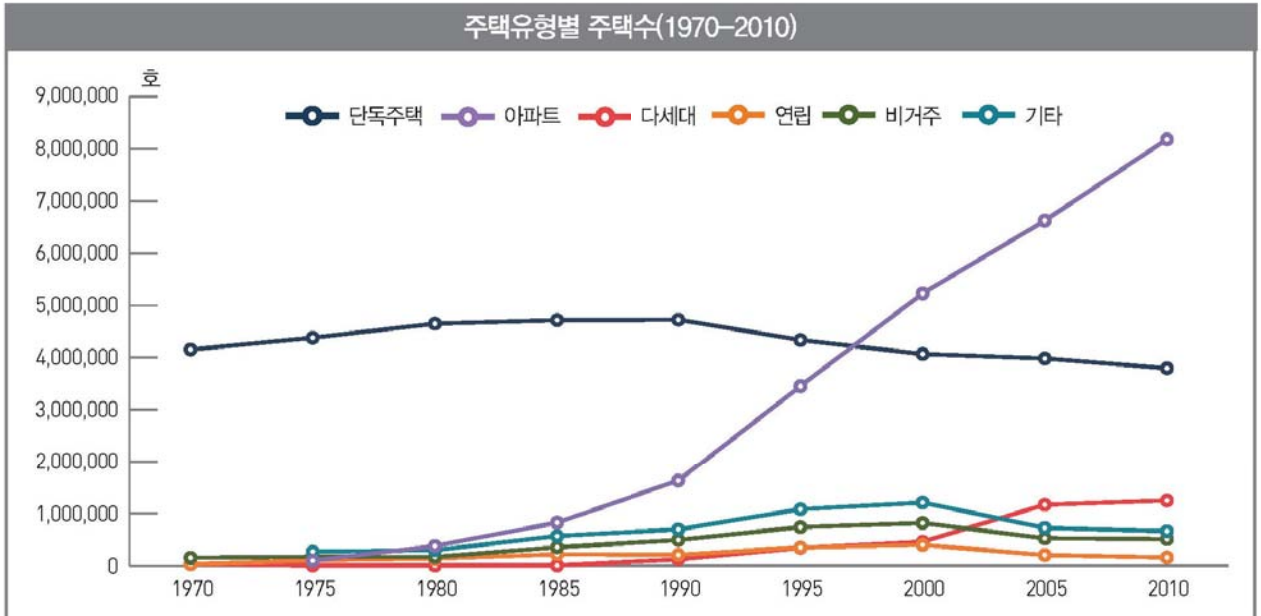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통신 통계지표집」; 정보통신부/한국전산원, 「정보화통계집」; 전자신문사, 「정보통신연감」.

6. 주거

■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여줌

- 1970년부터 1995년까지는 단독주택 수가 430만~480만호로 가장 인기 있는 주택유형이었지만, 2000년부터는 아파트가 520만호를 넘어서며 이후 가장 인기 있는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음
- 1990년 이후 단독주택의 수는 470만호(1990년)에서 430만호(1995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약 380만호로 줄어듦
-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 1975년 약 9만호에 불과했으나, 2010년 약 820만호로 90배 이상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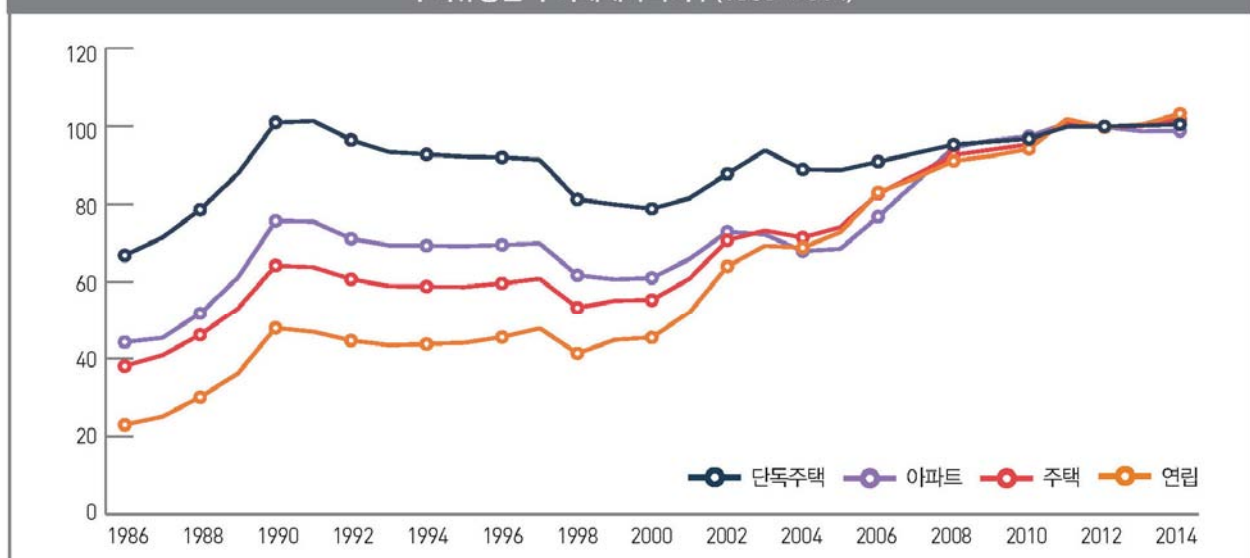


- 주 : 1) 2005년 부터 주택수 산정시 다가구주택을 구분거처수로 산정함. 2000년~2004년은 주택 산정시 다가구 주택을 1호로 산정한 주택수를 사용함(빈집포함)
 2) 시도별 인구는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3)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4) 1970년 자료는 1970 주택총조사 하의 시도,주택의 종류별 주요지표에서 독립주택, 연립주택, 공동주택을 각각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변환하여 집계한 것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한국의 주택매매가격은 2012년 11월을 100으로 할 때, 1986년 38.1에서 2014년 101.8로 2.7배 증가

-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을 반영하듯, 1990년에 주택가격은 정점을 찍은 후, 활발한 주택건설의 영향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띠
- 주택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훨씬 가파름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1986-2014)



주 : 주택매매가격변동지수는 기준시점(2012.11)의 주택매매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임.
출처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신)」, 2003~2014년 각 년 12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구)」, 1986~2002년 각 년 12월.

■ 주택 전세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1986년부터 관찰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완만해진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음
- 1986년~2001년 기간 동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다가, 2002년~2005년 동안 주택전세가격은 감소되었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음
-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전세가격에서 단독주택의 전세가격이 가장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증가함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1986-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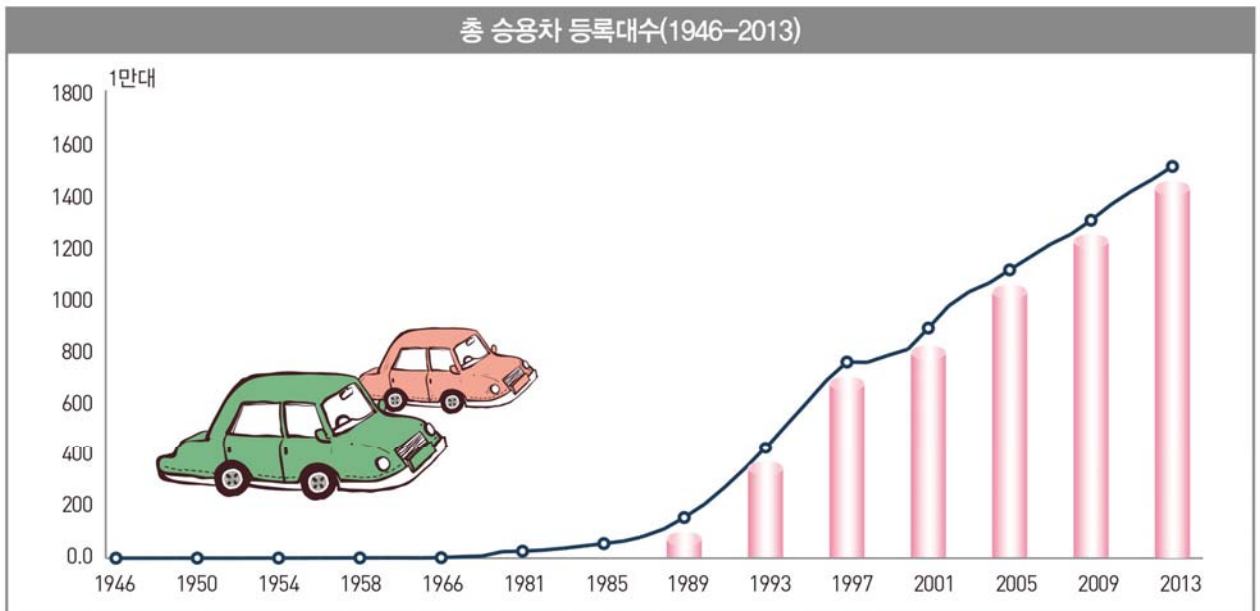


주 : 주택전세가격변동지수는 기준시점(2012.11)의 주택전세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전세가격의 비율임.
출처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신)」, 2003~2014년 각 년 12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구)」, 1986~2002년 각 년 12월.

7. 교통

■ 해방 직후부터 최근까지 승용차등록대수는 15,750배 가량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임

- 해방 직후인 1946년 1천대 가량에 불과했던 승용차 등록대수는 2014년에는 총 1,575만대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인구 1000명당 312.4대가 되었음
- EU 주요국과 비교하여 볼 때,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보급된 나라에 해당함
- 비록 인구 1000명당 등록된 자동차의 숫자에서는 비교 대상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증가율로 따지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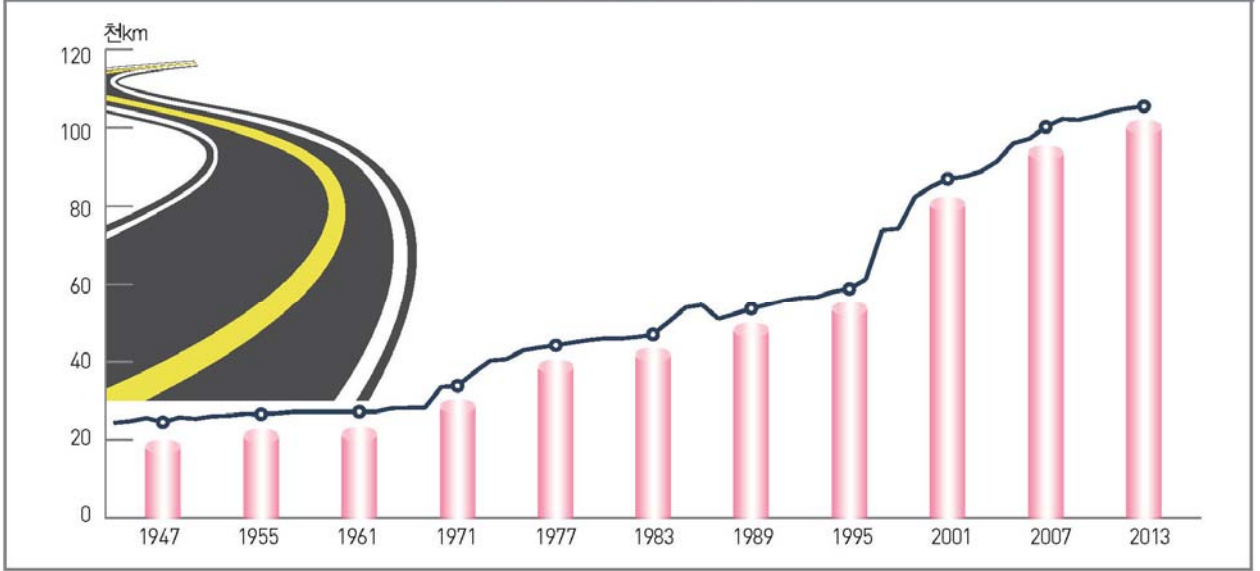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1966년~2014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46년~1961년

■ 광복 직전인 1944년의 총 도로연장은 2만 5천km였지만, 2005년에는 10만 6백km를 상회하여 지난 70여년간 4배 이상 증가함

-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으로 계산하면 1980년 1.23km였던 데 비해, 2013년에는 2.12km로 늘어, 이 기간 동안 1.7배 증가
- 국토면적당으로 따져 보면 1km²당 1980년 0.48km에서 2013년 1.06km로 2.2배 증가
- 해방 이후 거의 포장되지 않았던 도로들이 2013년에는 82.5%가 포장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도로들이 원활하고 빠른 교통이동이 가능한 쾌적한 인프라로 바뀌었음을 보여줌

총 도로연장(1936-2013)



출처 /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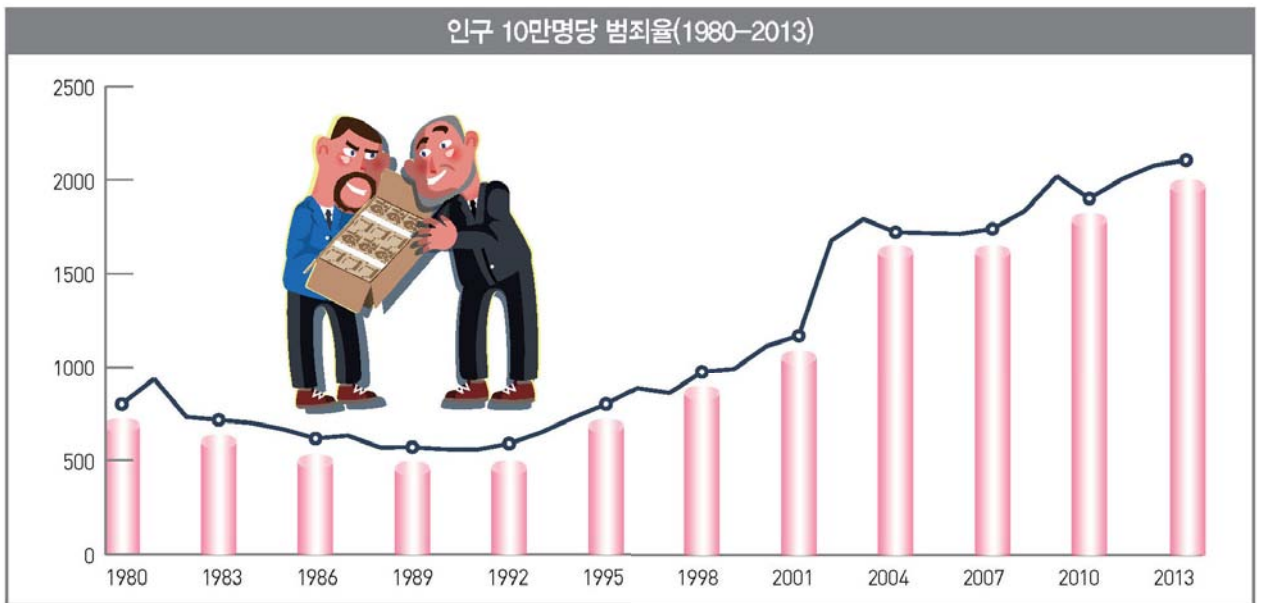
■ 한국인의 평균 통근·통학시간은 1995년 이후 30분 내외로 나타나며, 다소 증가하는 추세

- 1995년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9.6분에서 2010년 33.1분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통학시간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28.3분에서 31.5분으로 비슷하게 증가
- 1시간 이상 장시간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995년 통근자의 9.5%에서 2010년 15.6%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통학자중에서도 8.3%에서 13.8%로 증가
- 국제비교를 통해 보면, 한국은 OECD 주요국들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통근에 쓰는 나라임

8. 안전

■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범죄율은 1981년의 인구 10만 명당 935건에서 2012년의 2,039건으로 2.2배 증가함

- 범죄율은 1981년부터 1991년(558건)까지는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증가함. 1997년이후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범죄율의 증가폭이 커졌고 2002년과 2003년을 전후해 큰 폭으로 증가
- 주요 형사범을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로 살펴보면, 1980년에 80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106건으로 증가
- 유형별 통계가 가능한 2000년 이후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10만명당 251건(2000년)에서 579건(2013년)으로 2.3배 늘었고, 폭행은 같은 기간 내에 35.8건에서 251건으로 7배 증가하였으며, 강간과 성폭력은 21.7건에서 53.6건으로 2.47배 증가함. 반면에 강도는 11.4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살인은 2건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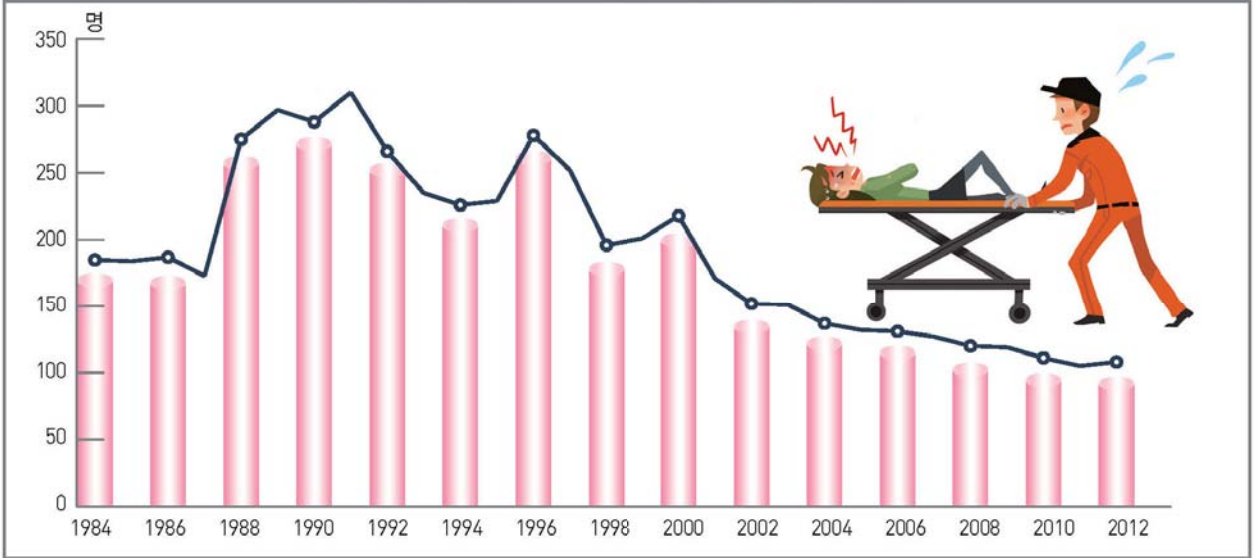


주 : 형법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해당 형법범죄건수임.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 교통사고의 위험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측정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1990년에 28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바 있으나, 다행히도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0만명당 101명 수준으로 떨어짐
- 그러나 한국의 도로교통 사망자수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음.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고수준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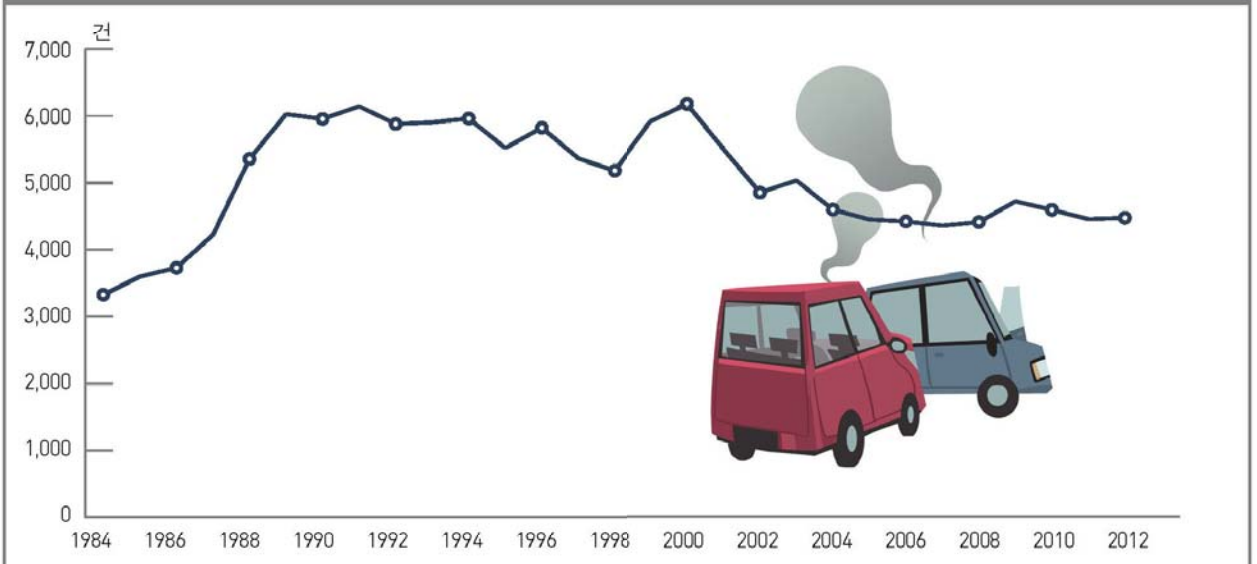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1984-2012)



주 : 1) 인구 10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0

2)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 「201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1984-2012)



주 : 1)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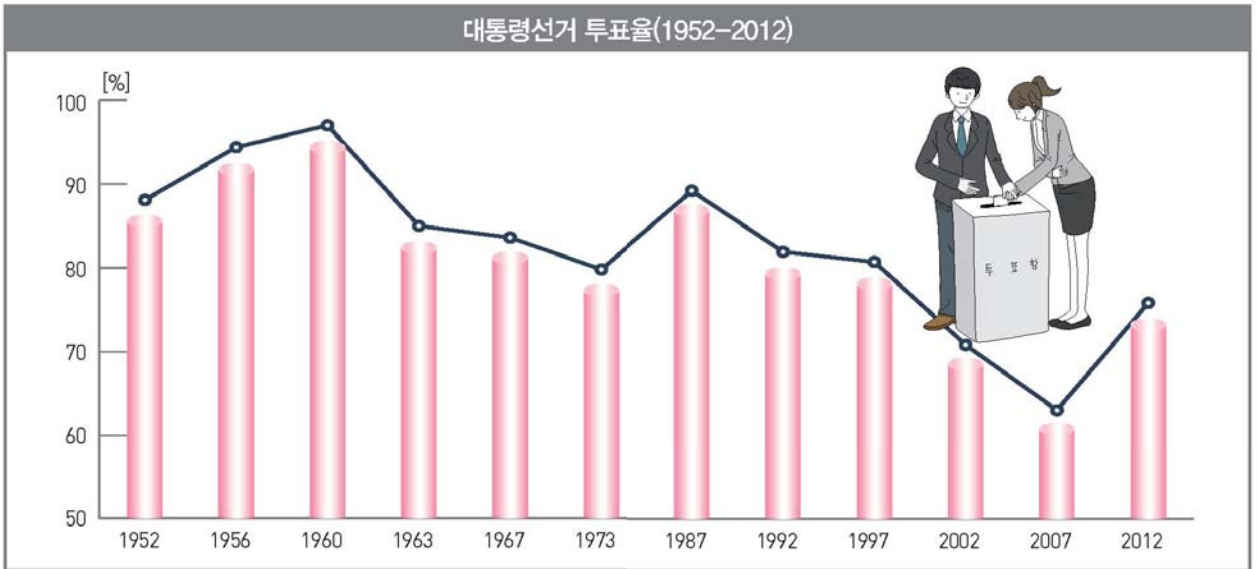
2)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 피해 사고만을 포함함.

출처 / 도로교통공단 TAAS「201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장래인구추계」, 2011.

9. 사회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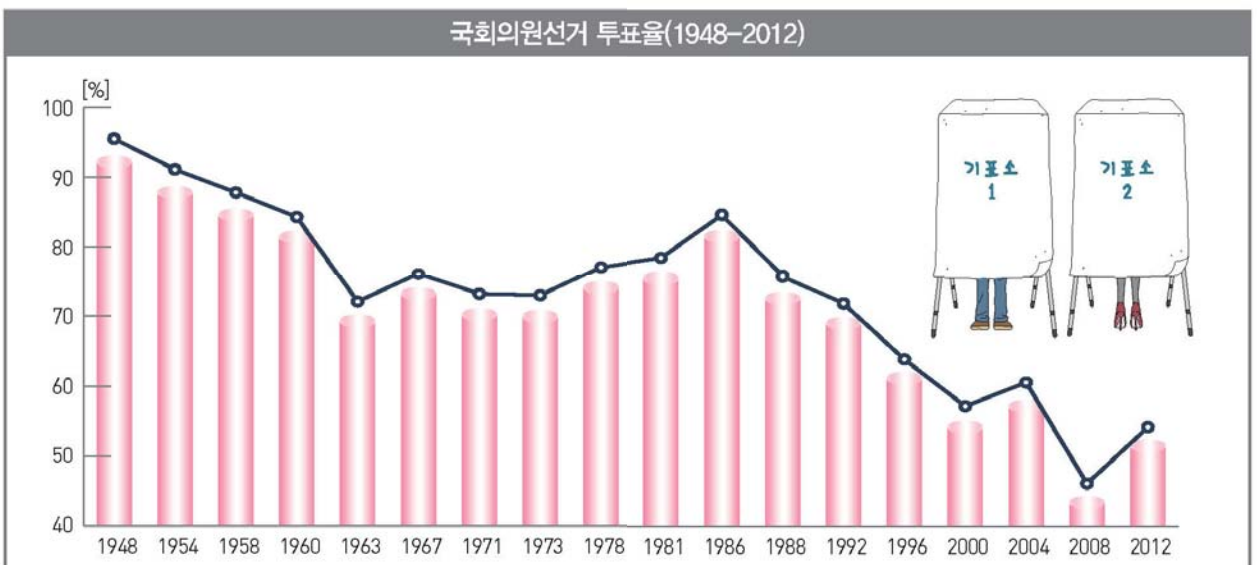
■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최근 들어 다소 높아지는 추세

- 한국은 건국 이후 1990년대까지는 높은 투표율을 보였지만,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0년대부터 낮아졌다가, 최근 들어 국회의원선거(46.1%에서 54.2%)와 대통령선거(63.0%에서 75.8%) 모두 투표율이 높아졌음
- 한국의 투표율은 일본과 프랑스와 비슷하고 호주, 스웨덴, 독일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연령별로는 20대 후반까지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30대 이후 연령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짐



주 :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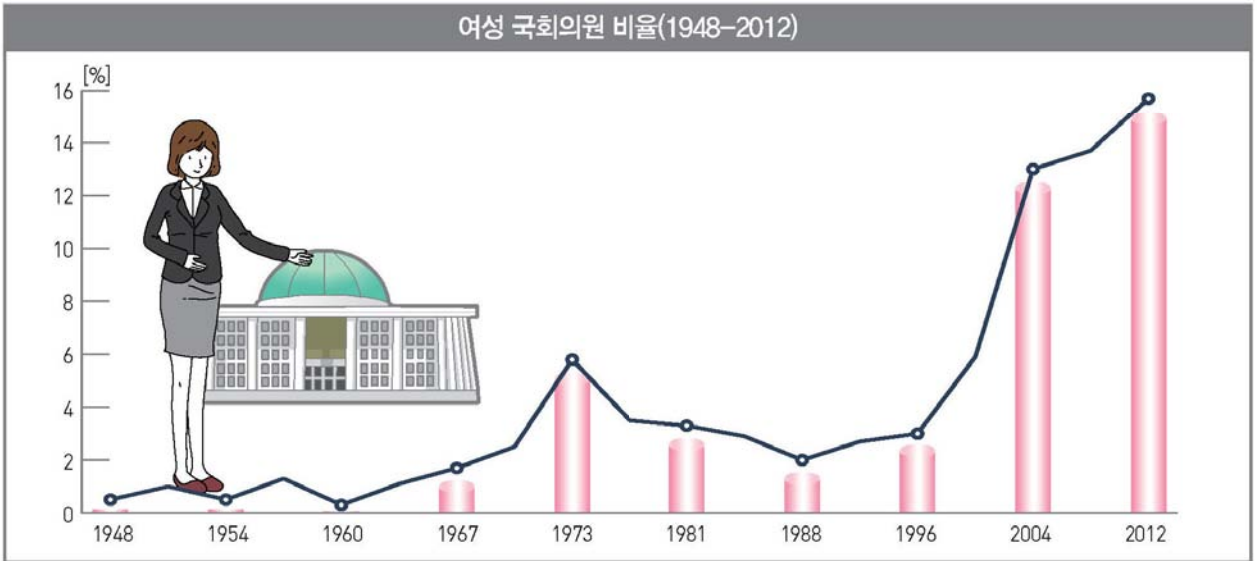


주 :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48년 초대국회 당시 1명이었으나 현재는 47명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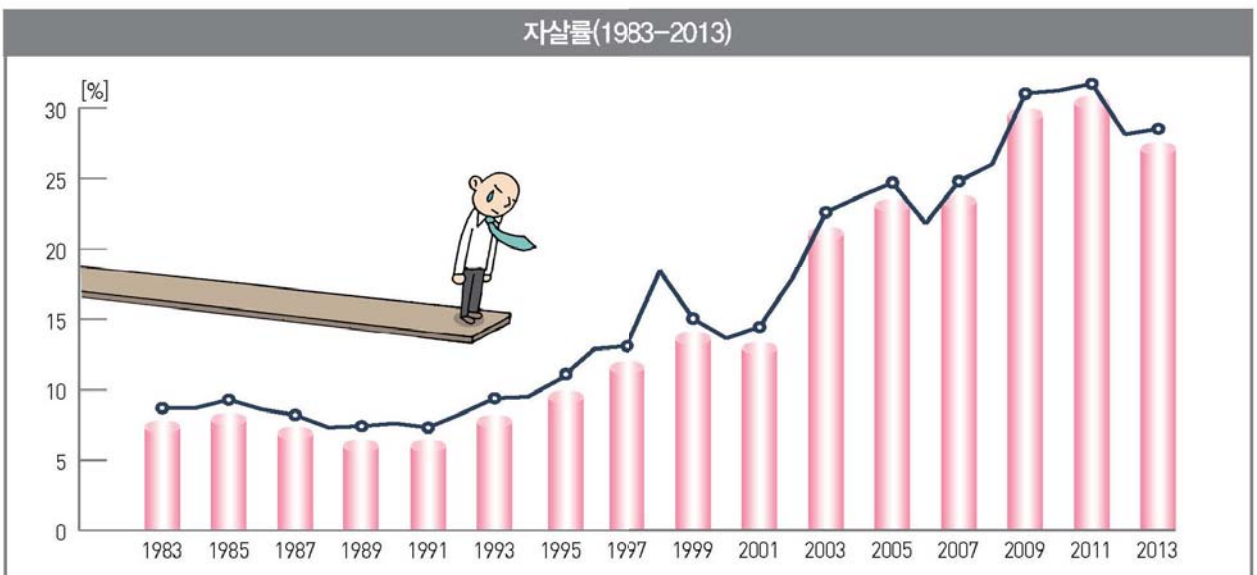
-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1990년대까지 5%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높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5%를 넘어섰음
- 이는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수치임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총람」, 각 연도; 「지방의원선거총람」, 각 연도.

■ 자살률은 1983년 인구 10만명 당 8.7명에서 2013년도 28.5명으로 크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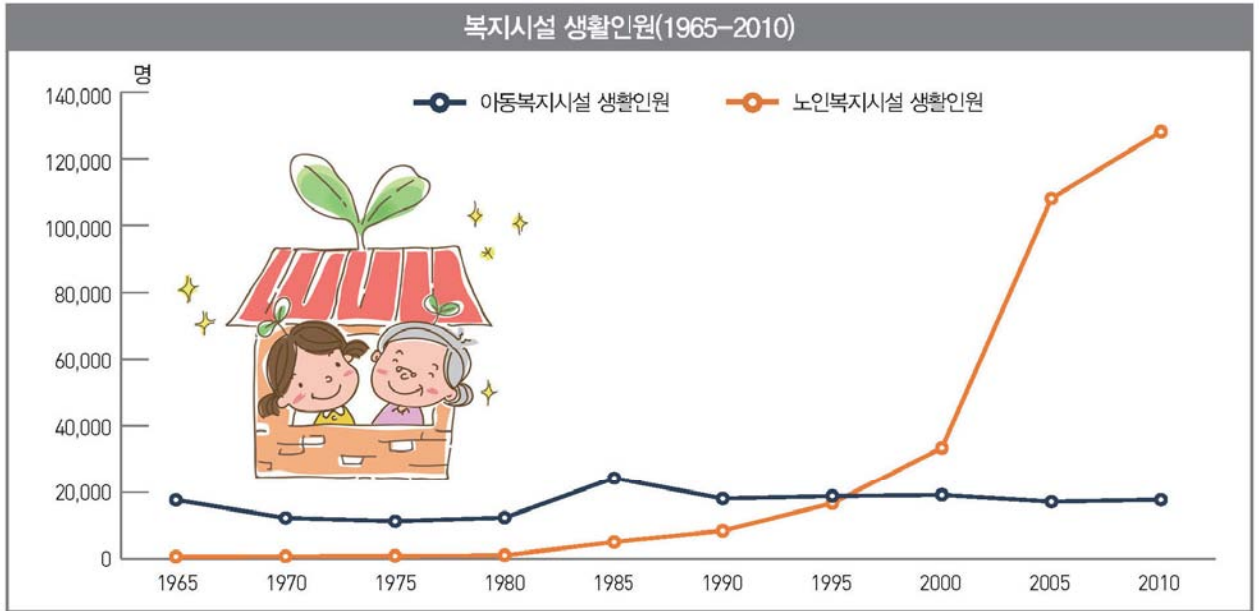
- 1980년대까지 10만명당 10인 이하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자살률은 1990년대 상승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서, 2013년 인구 10만 명당 약 29명에 이르며,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음



주 : 1)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로 인한 사망자수
출처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 노인 인구의 증가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로 노인복지시설 생활인원은 크게 증가

-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인원은 1965년 17,659명에서 1975년 11,228명까지 줄었다가 1985년 24,284명까지 늘었지만 다시 감소해서 2013년 17,720명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이 있음
- 1985년 5,000명이었던 복지시설 노인의 수는 1997년 10,000명을 넘었고, 2004년 20,000명을 넘었으며, 노인장기요양 보험 제도 실시 이후 급증해서 2013년 현재 12만 8천 여명의 노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생활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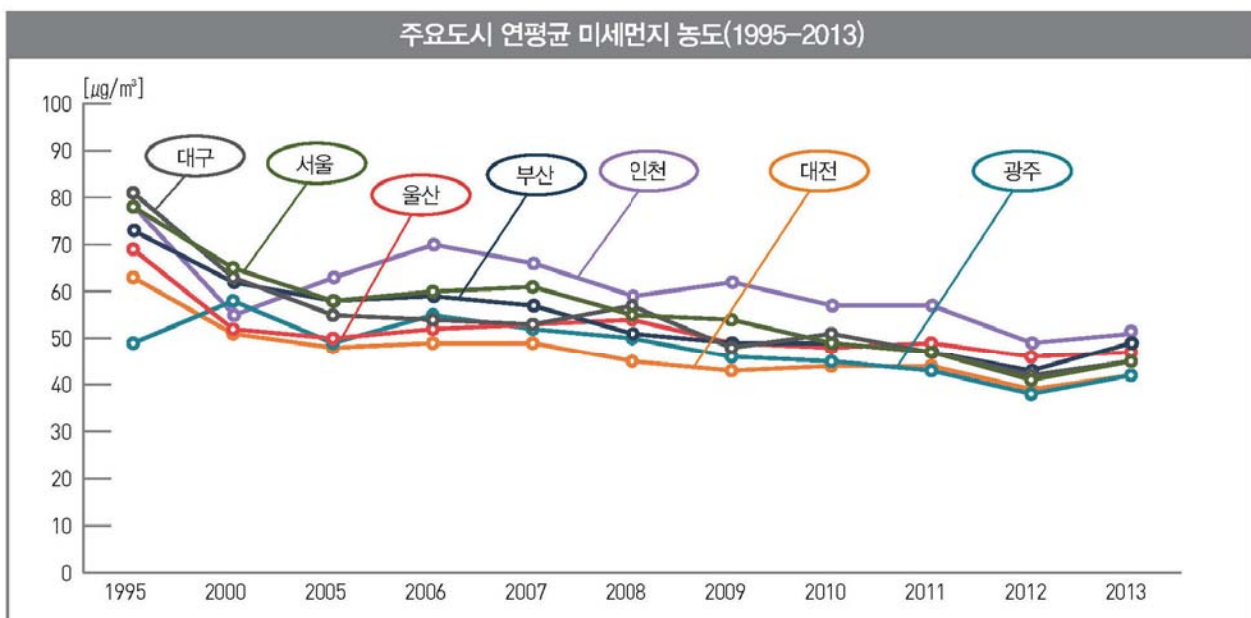


III 환경부문

1. 생활환경과 오염

■ 한국 주요 도시의 미세먼지(PM10)는 2000년대 중반 이후까지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환경기준 ($50\mu\text{g}/\text{m}^3$)을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 대부분의 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

- 서울의 미세먼지 수준은 베이징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
-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농도($47\mu\text{g}/\text{m}^3$)는 프랑스 파리($27\mu\text{g}/\text{m}^3$)나 영국 런던($31\mu\text{g}/\text{m}^3$)에 비하면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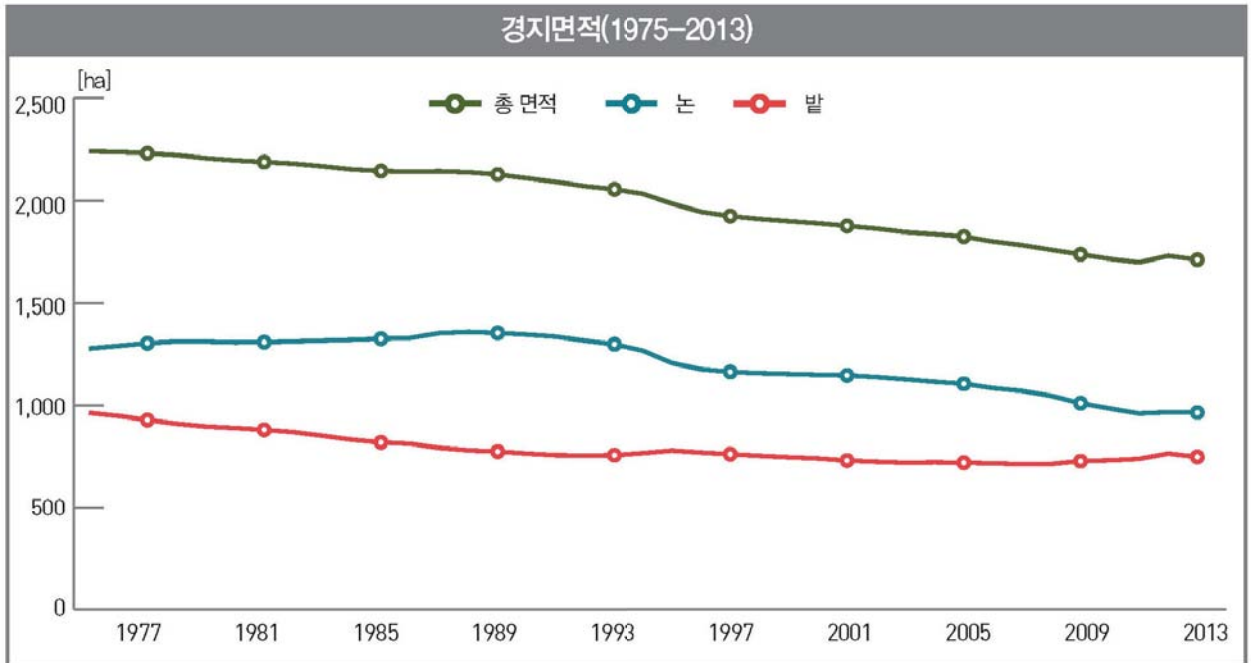


주 : 대기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의 연평균 수치임
출처 / 환경부「2013 대기환경연보」, 2014.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 경지면적은 2002년 188.9만 ha에서 2014년 169.1만 ha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 2014년 한 해 동안 한국의 경지면적의 순감소 면적은 20.0만 ha임
- 논·밭의 경지면적은 2002년 113.8만 ha에서 2014년 93.4만 ha로 줄어들었고, 밭의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72.4만 ha에서 75.7만 ha로 다소 증가



주 : 경지면적은 경작적합지 및 영구경작지의 면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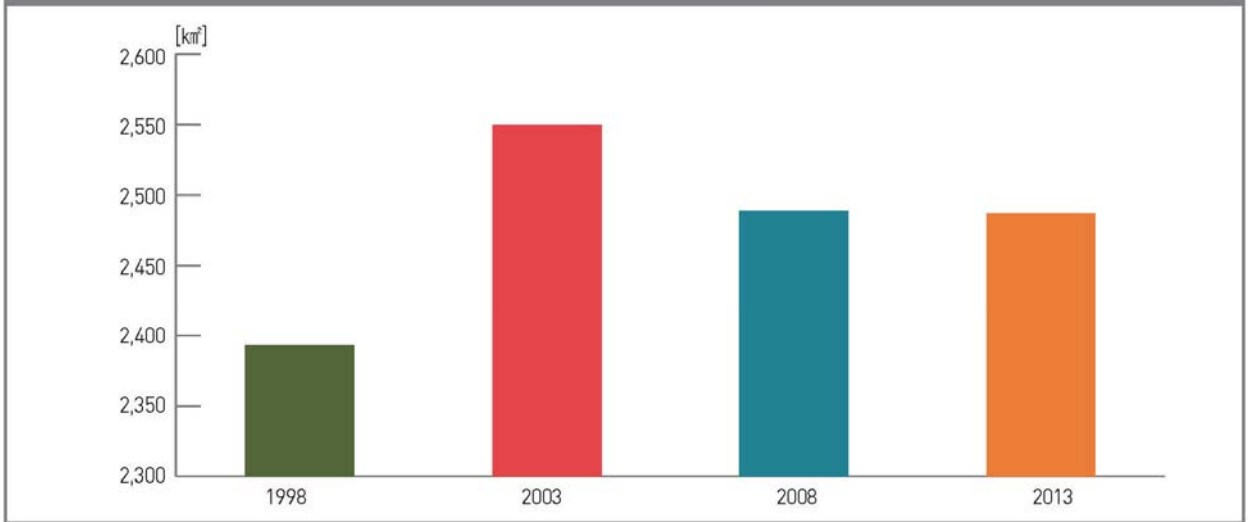
출처 / 1) FAO「<http://faostat3.fao.org>」

2) OECD「<http://stat.oecd.org>」, 2014.9.

■ 갯벌면적은 2013년 현재 2,487.2km²로 국토면적(99,828km²)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

- 한국의 람사르 지정 습지면적은 2013년 현재 177km²임
- 호주는 람사르협약 최초 가입국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 지정 습지를 가진 국가로 81,192km²에 달하는 총 65개의 습지를 가지고 있음

연안습지면적(199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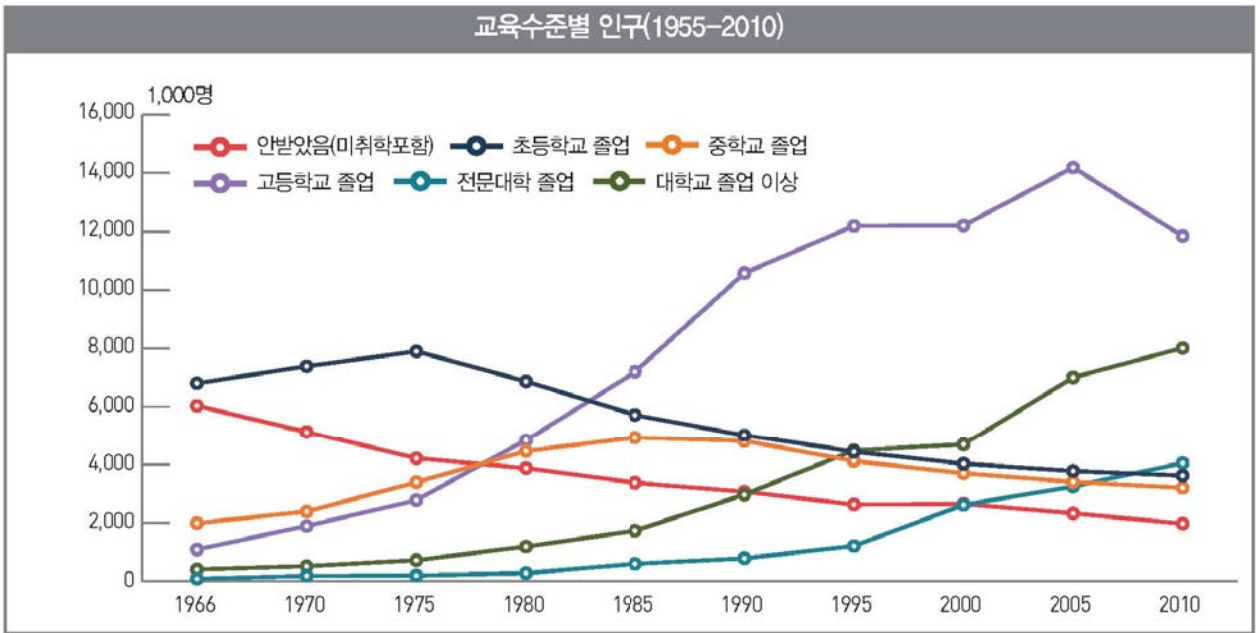


- 주 : 1) 연안습지지역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2) 1998년 자료는 1987년 이후 상실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1/75,000 축적 해도를 디지털 면적 계산기로 작성.
 3) 2003년 자료는 보다 정밀한 전자해도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면적이 다소 늘어남.
 4) 2008년 자료는 1/5000의 해안선 조사 측량결과를 반영한 결과 추가적인 감소사유가 발생.
 5) 2013년부터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함.

출처 / 1)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각 년도
 2) 해양환경관리공단, 「전국갯벌면적조사」, 각 년도

■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 1980년까지 한국의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였지만, 198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초등학교 졸업자 비중을 앞서기 시작
- 대학교육에 대한 집중 투자의 결과 1995년 고등학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머지않아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
- 한국 국민의 평균 교육 연수는 2012년 현재 17.5년으로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깝다. 이는 미국(17.2년), 일본(16.3년)보다는 높지만, 핀란드(19.7년), 호주(19.4년)보다는 낮은 수준



주 : 1) 6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함.

2) 1955년은 각학교급의 졸업자가 아닌 취학자 인구를, 미취업 인구는 국문불해독자를 의미함.

3) 1955, 1960년 전문대 졸업/대학교 졸업자 수는 전문대 진학 이상의 학력자를 의미함.

4) 1960년의 경우 수학년수 0= '안받았음', 1-5= '초등학교 졸업', 6-8= '중학교 졸업', 9-11= '고등학교 졸업', 12년 이상= '전문대 졸업 이상' 으로 분류함.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

해 설 편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I . 배경과 지표선정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I

배경과 지표선정

1. 배경과 목적

본 책자는 광복 70년 동안 한국사회의 삶의 질, 사회의 질, 국가발전 상황에 있어서의 변화를 통계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의 상태와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하던 해인 1945년 말 남한 총인구는 약 16,873,000명였으며, 산업은 농업, 수산업, 광업 등 1차 산업 중심으로 공장 수와 공장에 취업한 사람의 수는 각각 9,323개와 300,520명에 불과했다.¹⁾ 현재 남한의 총 인구가 2015년 7월 기준으로 약 51,415,000명이고²⁾ 2차 산업과 3차 산업 비중이 각각 38.6%와 59.1%에 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해방 후 70년 동안 한국사회는 환골탈태(換骨奪胎)와 상전벽해(桑田碧海)를 경험했다고 할 수 있다.³⁾

광복 70년의 삶의 질, 사회의 질, 국가발전 수준의 변화를 통계를 통해 살펴보는 일은 단순히 GDP나 국민계정 등 경제지표 몇 개로 성과를 강조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을 거치면서 대단한 성과를 이루어 낸 이면에는 빈곤, 불평등, 사회갈등, 불신과 불안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문제 또한 존재한다. 따라서 광복 70년의 변화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경제, 인구, 가족, 교육, 안전, 사회통합 등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경제 성장과 민주화로 달성한 성과에 힘입어 선진국 문턱에 와 있으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삶의 질과 사회의 질 향상을 추구해 일류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지속가능한 성장과 예측 가능한 미래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국가주요지표』, 『한국의 사회지표』, 『삶의 질 지표』, 『청소년 지표』, 『성인지 지표』, 『문화지표』, 『사회통합 지표』 등 다양한 지표들을 구축해 관리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은 2010년 『한국인의 삶의 질 지표』와 2013년 『국가주요지표』를 새롭게 구축하였고, 2012년에는 『한국의 사회

1) 통계청, 1993, 『통계로 본 광복전후의 경제·사회상』

2) 행정자치부, 2015, 'http://pcps.egor.go.kr'(2015년 7월 31일 검색)

3) 한국사회과학협회, 2014, 『국가주요지표 보정연구』, 통계청.

지표』를 대폭 수정해 공표한 바 있다.

통계청의 다양한 지표구축 사업들은 분명 한국사회의 경제·사회 발전 수준을 파악하고 미래지향적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기존 지표 사업들은 광복 70년간의 변화상을 냉철히 평가하고 향후 새로운 70년을 철저히 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해당 지표 체계의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는 지표 사업이 가진 본원적 한계로 보인다. 가령 가장 최근에 구축과 보정 작업을 완료한 『국가주요지표』는 시계열적 변화의 범위를 1990년부터 현재까지로 설정하고 있다. 한국사회가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급속한 경제발전의 토대를 만들었고 1987년 이후 급격한 정치적 변동과 사회적 전환을 겪었음을 떠올려 보면, 이러한 시간적 범위의 설정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우리의 성취를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으며, 압축적 경제발전과 급속한 사회변동에 잠재된 부작용들을 간과하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책자는 광복 70년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가장 적절한 핵심적 지표들을 선정한 후, 해당 지표들의 70년간의 변화를 제시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공표하고 있는 지표들의 또 다른 한계는 이들 대부분이 통계의 제시 자체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표의 최우선적인 목적은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의 주요 국면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의 제공일 것이다. 그러나 통계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즉 한국사회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 기술만 하고 전문가적 시각에서 설명과 해석을 충분히 하지 않는 한 통계들은 숫자로만 받아들여질 뿐 일반 국민들이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본 책자는 선정된 지표들의 광복 이후 70년 동안의 통계를 제시하고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들에 의미를 부여해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통계청에서 산출한 지표들 중에서 한국사회의 광복 70년을 적절히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지표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OECD 국가들이나 주변 주요 국가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본 책자는 광복 이후 한국사회의 경제·사회 변화상을 통계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사회의 질, 국가발전의 주요 상황을 객관적으로 조망하는데 있다. 이 자료들은 정책결정자들과 국민들이 우리의 장점과 단점을 판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이 과정을 통해 형성된 공감대를 기반으

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수궁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표선정과 범위

1) 지표의 검토와 선정

지표를 통해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의 추이를 광복 이후 70년 동안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하는 작업은 지표체계의 구성부터 가용한 통계의 가공 및 제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요구한다. 광복 이후 70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야 하며, 정립된 개념에 따라 지표 분류체계를 구성하고, 지표선정 기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마련된 분류체계와 선정기준에 따라 지표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지표들의 DB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구성된 지표체계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평가하고 검토하여 지표체계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책자가 담으려고 하는 내용이 한국사회의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를 포함한 국가발전 수준의 변화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그와 같은 지난한 과정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위에서 밝힌 것처럼 이미 통계청이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위한 방대한 지표체계들을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어진 기간 동안 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은 이미 집단지성을 통해 작성된 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목적과 방향에 가장 부합하는 지표체계는 통계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외 동향을 감안해 새롭게 구축하거나 수정한 『한국인의 삶의 질 지표』, 『국가주요지표』, 『한국의 사회지표』라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들 중에서도 『국가주요지표』는 이전에 통계청이 구축한 지표들과 정부가 운영해온 e-나라지표를 통합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총체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성에서 작성된 지표이다. 따라서 본 책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주요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2) 내용과 범위

『국가주요지표』는 국민의 웰빙과 국가발전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되고 국가정책 수립과 추진이 되는 지표를 의미한다. 여기서 국민의 웰빙이란 삶의 질 차원에서의 웰빙을 말하고 국가발전이란 지속가능한 발전, 즉 환경의 보존이 전제되는 경제와 사회의 발전(progress)을 의미한다.⁴⁾ 『국가주요지표』는 2014년 기준으로 3개 부문, 15개 영역, 60개 하위영역, 450개 지표(139개 주요지표, 186개 보조지표, 125개 국제비교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부분 하에 각각 4개 영역(국민계정, 산업과 금융,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9개 영역(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 2개 영역(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으로 구성되며, 다시 각 영역에 따라 하위영역 그리고 주요지표 및 보조지표들로 이루어진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주요지표』에서 공표된 내용을 그대로 시간적 범위만을 확장해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450개에 이르는 지표 모두에 대한 통계를 1945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일일이 확인하고 가공하는 것은 광복 70년의 핵심적인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제시와 설명이라는 목적과 4개월이라는 기간을 고려했을 때 가능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다.

4)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13, 『국가주요지표』, 통계청.

〈표 1〉 국가주요지표의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경제	국민계정	국내총생산	1인당 국내총생산
		투자	투자율
		재정	정부수입비율, 정부지출비율, 재정수지비율, 국가채무비율
	산업과 금융	대외거래	경상수지비율, 무역의존도
		산업구조	산업구성, IT산업생산비율, 외국인직접투자비율
		생산성	노동생산성
		기술혁신	연구개발투자비율, 특허출원율
		금융	금융자산비율, 국고채금리, 코스피주가지수, BIS자기자본비율
	고용과 노동	고용	고용률, 취업자산업구성, 비임금근로자비율, 비정규직근로자비율
		임금	임금격차, 저임금근로자비율
		근로조건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일자리만족도
		노사관계	노동조합조직률
	소득과 소비	소득	개인소득, 가구소득
		자산	가구순자산
		소득불평등	지니계수
		소비	소비지출
		물가	물가상승률
		저축	저축률
사회	인구	인구규모	총인구
		인구변화	인구성장률, 출산율, 사망률, 체류외국인
		인구구조	중위연령, 성비, 부양인구비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가구원수, 한부모가구비율
		가족형성	혼인율, 이혼율
		가족관계	가족관계만족도, 가사노동시간
		가족돌봄	어린이집이용률, 노인 자녀동거율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증상경험률
		건강행태	흡연율, 음주율, 신체활동실천율, 비만율
		보건의료서비스	의사수, 국민의료비비율, 암생존율, DPT예방접종률
	교육	교육기회	공교육비비율, 사교육비, 취학률, 평생교육참여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교생활만족도, 학습시간
		교육효과	교육년수, 기초학력미달률, 대학졸업자취업률

〈표 1〉 국가주요지표의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문화재정비율, 문화여가비지출
		문화여가 활동	문화예술관람률, 독서율, 생활체육참여율, 여가시간, 여가만족도
		미디어	인터넷이용률
	주거	주택공급	주택수, 주택건설수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변동률, 주택전세가격변동률
		주거상황	주택임대료비율, 자가점유율, 주거면적, 주거환경만족도
	교통	교통공급	승용차등록대수
		교통이용	대중교통수송분담률, 통근시간
		교통에너지	자동차 에너지소비량, 교통부분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교통비용	교통비지출, 교통의 사회적 비용
	안전	범죄	범죄율, 범죄피해율, 재범률
		재해	자연재해피해자수, 화재피해자수
		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안전에 대한 인식	사회안전인식도, 범죄두려움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선거투표율, 여성국회의원비율, 사회단체참여율
		신뢰와 투명성	기관신뢰도, 대인신뢰도, 부패인식지수
		사회적 관계	자원봉사참여율, 사회적 고립도
		삶의 기회와 만족	사회이동가능성인지도, 삶의 만족도, 자살률
		사회보장	공공복지예산비율, 공적연금수급률, 기초생활보장수급률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대기 오염
물환경			수질오염도, 먹는물 수질기준초과율
폐기유해 물질			폐기물발생량, 화학물질배출량
환경개선 노력만족도			환경보호비용, 환경향상체감도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멸종위기종수, 자생생물종수
		토지산림	경지면적, 생태경관보존지역면적, 유기농경작면적률, 산림면적
		해양수산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연안습지면적
		수자원	취수량
		에너지	1차에너지공급량, 전력생산량, 재생가능에너지비율

따라서 본 책자는 『국가주요지표』의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부분의 내용을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광복 70년 경제·사회 통계’ 모두에 대해 OECD 및 주요국들과의 국제비교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표 1〉은 2014년에 완성된 『국가주요지표』의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들을 보여 준다. 본 책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경제, 사회, 환경 등 세 부문에 대해서는 『국가주요지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해당 영역과 하위영역, 그리고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새롭게 구성하기로 하였다.

물론 『국가주요지표』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는 것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초점이 광복 70년의 시계열적 변화의 제시와 설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경제와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70년 동안의 변화라는 맥락에서는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을 과감히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가령 경제 부문의 영역은 ‘경제규모/재정/대외거래’, ‘산업과 금융’,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등 네 개로 재편되었으며, 각 하위영역들도 과거와의 비교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만한 것들로 다시 만들어 졌다. 기존 ‘국민계정’과 ‘산업과 금융’의 일부를 통합해 ‘경제규모/재정/대외거래’라는 신규 하위영역을 만든 이유는 아무래도 한국의 광복 70년의 변화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 경제성장과 국부의 축적이기 때문이었다.

지표 수준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국가주요지표』에서 국민계정 영역의 하위영역으로 존재했던 ‘국내총생산’은 ‘경제규모/재정/대외거래’ 내 ‘경제규모’라는 새로운 하위영역 주요지표로 재배치되었으며, ‘산업과 금융’ 영역 내 ‘대외거래’ 하위영역의 주요지표 중 하나였던 ‘무역의존도’는 본 연구에서 ‘경제규모/재정/대외거래’ 영역 내 ‘대외거래’ 하위영역으로 이동하였다.

〈표 2〉는 본 책자의 부문, 영역, 하위영역,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본 책자는 3개 부문, 15개 영역, 43개 하위영역, 110개 주요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주요지표마다 자료가 이용 가능할 경우 국제비교지표가 수록되어 있다. 경제, 사회, 환경의 3가지 부분에 각각 4개 영역(경제규모/재정/대외거래, 산업과 금융, 고용과 노동, 소득과 소비), 9개 영역(인구, 가구와 가족, 건강, 교육, 문화와 여가, 주거, 교통, 안전, 사회통합), 2개 영역(생활환경과 오염, 생태환경과 자연자원)으로 구성되며, 다시 각 영역에 따라 하위영역 그리고 주요지표 및 국제비교지표들로 이루어진다. 각 주요지표는 여러 개의 통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책자의 구성

본 책자는 크게 세 권의 보고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보고서는 <표 2>에 제시된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들의 광복 후 70년 동안의 변화와 최신 국제비교 결과에 대한 기술과 설명을 담고 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첫 번째 보고서에서 제시된 시계열적 변화와 국제비교 관련 통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들을 수록하고 있다. 세 번째 보고서는 요약본이다. 여기에는 자문위원들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광복 후 70년 간 경제, 사회, 환경 부문에서의 핵심적 변화들이 담겨 있다.

〈표 2〉 본 연구의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경제	경제규모, 재정, 대외거래	경제규모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 1인당소득
		재정	재정규모, 조세부담률, 재정지출구성
		대외거래	무역의존도, 경상수지비율, 환율
	산업과 금융	산업	산업구성, 산업생산, 자기자본비율, 총투자율
		금융	금융자산비율, 시중은행금리, 코스피주가지수
	고용과 노동	고용	고용률, 실업률
		노동	취업자산업구성, 근로시간, 산재사망률, 노동조합조직률
	소득과 소비	소득	임금, 개인소득, 가계수지
		소비	소비지출, 물가상승률
	사회	인구	인구규모
인구변화			인구성장률, 합계출산율, 조사망률, 체류외국인수, 인구이동
인구구조			중위연령, 성비, 부양인구비
가구와 가족		가구구성	가구수, 평균가구원수
		가족형성	조혼인율, 조이혼율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유형별추이, 다문화가족자녀연령별현황
건강		건강상태	기대수명, 주관적건강상태, 신장·체중변화
		건강행태	흡연율, 음주율, 비만율
		보건의료서비스	보건의료인 수, 국민의료비 비중, 암 5년 생존율, 의료기관 수 변화 추이
교육		교육기회	각급학교수, 각급학교별학생수, 각급학교별졸업자수, 각급학교별남녀학생비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	학급별학생수, 각급학교별교원수, 교육비에산
		교육효과	교육수준별인구

〈표 2〉 본 연구의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계속)

부문	영역	하위영역	주요지표
사회	문화와 여가	문화자원	박물관수, 극장수, 도서관수, 공공체육시설수
		문화여가활동	영화관람자수, 도서출판상황, 관광수입및지출
		미디어	유선통신서비스및이동전화가입자수
	주거	주택공급	주택수, 건설주택수
		주택시장	주택매매가격변동지수, 주택전세가격변동지수
		주거상황	자가점유율, 주택임대료비율
	교통	교통공급	승용차등록대수, 도로연장, 철도연장
		교통이용	통근시간, 항공수송실적, 해운수송실적
		교통에너지	자동차 에너지소비량, 교통부분 신재생에너지소비율
	안전	범죄	범죄율, 재범률
		치안	경찰관수
		재해	자연재해피해자수, 화재피해자수
		교통사고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대형인적재난	대형인적재난추이
	사회통합	정치 및 사회 참여	선거투표율, 여성국회의원비율
삶의 기회와 만족		자살률	
사회보장		복지시설수, 복지시설생활인원	
환경	생활환경과 오염	기후와 대기	온실가스배출량, 대기오염도
		물환경	수질오염도, 상하수도보급률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토지산림	경지면적, 산림면적
		해양수산	총허용어획량소진율, 연안습지면적
		에너지	1차에너지공급량, 전력생산량

II. 경제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II

경 제

1. 경제규모, 재정, 대외거래

1) 경제규모

(1) 국내총생산 및 성장률

국내총생산의 변화는 한국 경제의 고도성장을 한눈에 보여준다.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77억 원에 불과했으나 2014년의 명목GDP는 1,485조 원에 달했다. 국가 경제의 규모가 31,00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한국은 원조로 지탱되던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5위 안에 드는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가 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4년 명목 GDP가 1조 달러를 넘는 나라는 15개였으며, 한국의 명목 GDP는 1조 4,104억 달러로 세계 13위였다.

한국이 본격적인 경제발전을 시작한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초이다. 그 이전까지의 한국 경제는 외국의 무상원조에 의지한 원조 경제였다. 1956년의 원조액은 3.3억 달러로 GDP의 23.6%에 달했다. 원조의 규모가 큰 만큼 경제 정책도 독자적으로 수립되기보다는 1952년에 설치된 한미 합동경제위원회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¹⁾.

1960년대 초 이후로 원조 방식도 무상원조 중심에서 개발차관 위주로 바뀌었고 한국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됐다. 제1차 5개년계획(1962-1966년)에서 정부는 1966년까지 5년간 연평균 7.1%씩 성장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초과한 연평균 8.3%의 실질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제6차 5개년계획이 끝난 1991년까지 3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9.7%였으며, 외환위기 직전 해인 1996년까지 35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9.4%였다. 35년간 해마다 전년보다 9.4%씩 성장한 것이다.

1953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해는 1980년과 1998년, 두 번이었다. 1980년에는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1.7%를 나타냈다. 이 해가 포함된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때는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3%로 목표치 9%에 못 미쳤다. 두 번째로 마이너스

1) 동아일보 1975년 8월 9일, “8.15 그 후 30년 (6) 경제협력.”

성장을 보인 해는 1998년이였다. 1997년 1월 한보철강을 시작으로 대기업들이 연쇄 부도를 일으키고,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이 해외로 이탈하고 환율이 치솟는 등 유동성 위기가 닥쳤다. 그해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 관리체제가 시작됐고 이듬해인 1998년의 경제성장률은 -5.5%였다. 경제가 회복되면서 1999년부터는 다시 플러스 성장률을 보였고 2001년 8월에 IMF 차관을 모두 상환해 IMF 관리체제에서 벗어났다²⁾.

전반적으로 경제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1990년대 이전과 같은 고도성장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또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로 세계 경기가 침체되어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저조했다(2009년 0.7%). 2000년대 들어 2014년까지 14년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였으며 2014년의 성장률은 3.3%였다. 2014년 다른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일본 -0.1%, 미국 2.4%, 영국 2.55%, 호주 2.47%, 독일 1.6%, 중국 7.4% 등이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7%였다.

50년대 원조 금액

(단위: 억달러)

연도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원조액	1.9	1.5	2.4	3.3	3.8	3.2	2.2	2.5
명목GDP	13	15	14	14	17	19	20	20

원조액: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 1975년, p. 218.

명목GDP: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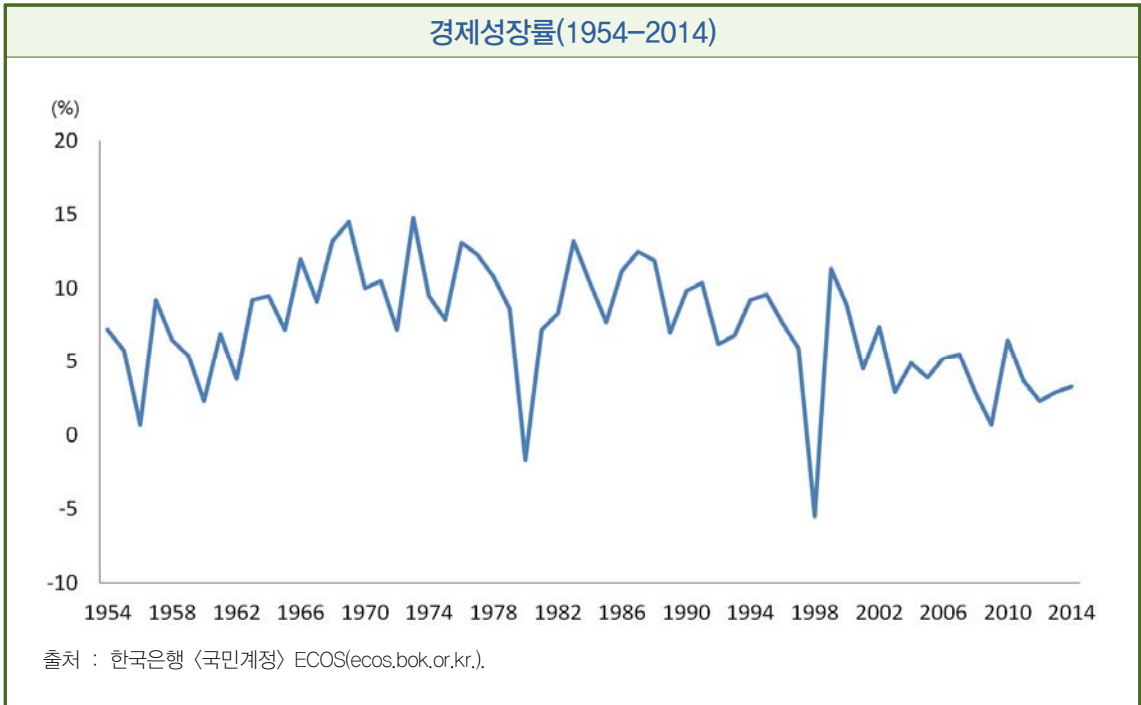
명목 GDP

(단위: 십억원)

연도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명목GDP	47.74	249.84	2,794.8	39,471.3	197,712.3	635,184.6	1,265,308	1,485,078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 연합뉴스 2015년 7월 7일, “<그리스 위기> 한국-그리스, ‘서글픈 역사’ 비슷 … 위기 극복은 달랐다.”



2014년 명목국내총생산 순위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	가	명목GDP
1	미	국	17,419,000
2	중	국	10,360,105
3	일	본	4,601,461
4	독	일	3,852,556
5	영	국	2,941,886
6	프	랑 스	2,829,192
7	브	라 질	2,346,118
8	이	탈 리 아	2,144,338
9	인	도	2,066,902
10	러	시 아 연 방	1,860,598
11	캐	나 다	1,786,655
12	호	주	1,453,770
13	한	국	1,410,383
14	스	페 인	1,404,307
15	멕	시 코	1,282,720

출처: 세계은행 data.worldbank.org/data-catalog/GDP-ranking-table.

1-6차 5개년 계획 성장을 목표와 실적

(단위: %)

	종료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목표	5년간 연평균 성장률 실적
1차	1966	7.1	8.3
2차	1971	7.0	11.4
3차	1976	8.6	10.4
4차	1981	9.0	7.3
5차	1986	7.6	10.2
6차	1991	7.2	10.3

출처: 1차: 동아일보 1962년 1월 14일 "경제개발오개년계획발표"
 2차: 경향신문 1966년 7월 29일 "2차 오개년 계획 확정"
 3차: 경향신문 1971년 2월 9일 "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확정, 연평균 성장률 8.6%"
 4차: 경향신문 1975년 6월 12일 "GNP 성장을 연 9%"
 5차: 동아일보 1981년 8월 22일 "5차 계획의 확정"
 6차: 동아일보 1986년 9월 16일 "경제성장을 연평균 7.2%"

주: 목표치는 국민총생산(GNP)으로 설정되었음. 실적은 국내총생산(GDP) 기준임

2014년 각국 경제성장률

(단위: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중국	OECD
성장률	3.3	-0.1	2.4	2.55	2.47	1.6	7.4	1.7

출처: 세계은행 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ZG/countries/1W?display=default

(2) 1인당 소득

전체적인 경제 규모뿐 아니라 국민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 또한 크게 성장했는데, 1953년 67달러이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014년 2만 8,180달러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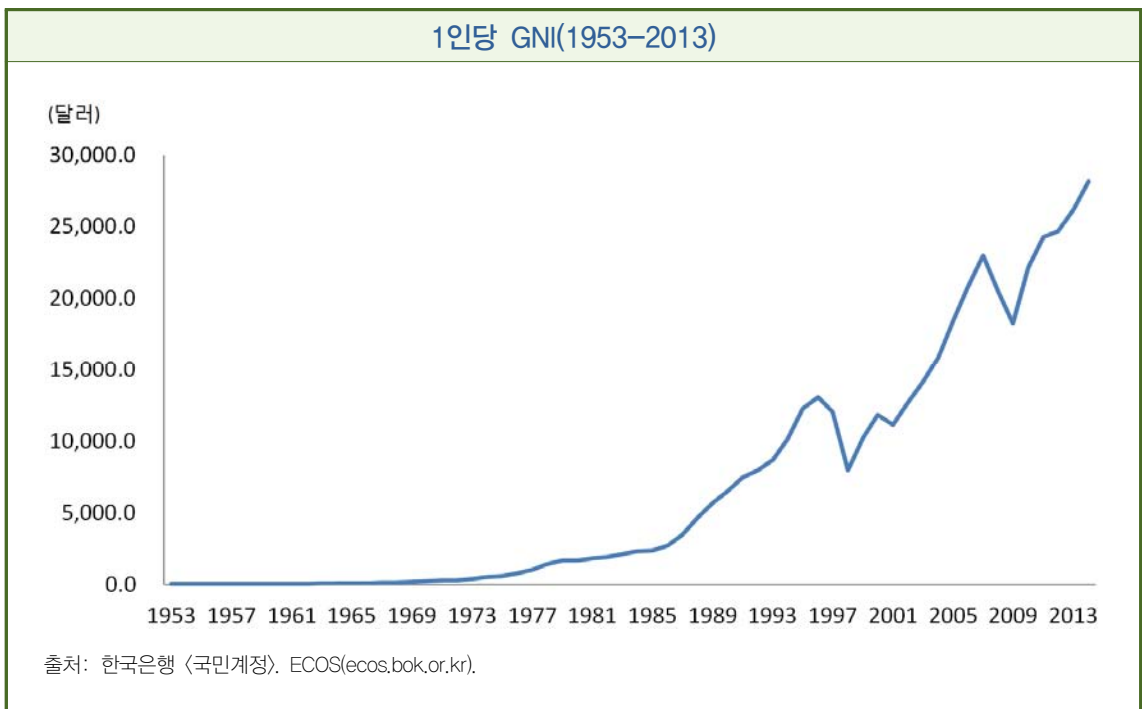
1962년까지도 한국의 1인당 GNI는 100달러가 채 안 되었으며(91달러), 1972년에 정부는 "81년 국민소득 1,000달러, 80년 수출 1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³⁾ 1972년 1인당 GNI가 324달러였음을 감안하면 당시에는 야심찬 목표였는데도, 목표보다 4년이나 빠른 1977년에 1,000달러를 돌파했다.

한국은 1994년에 1인당 소득 1만 달러대에 진입했다. 그해 1인당 GNI는 1만 168달러였다. 외환위기로 1998년(7,989달러)에 1인당 소득이 1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으나, 이듬해(1만 282달러) 1만 달러대를 회복했으며 2006년(2만 823달러)에는 2만 달러를 돌파했다.

3) 경향신문 1972년 11월 7일. "80년엔 백억불 수출".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1만 8,303달러)을 제외하고 2006년 이후 한국의 1인당 GNI는 2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의 1인당 GNI는 2만 8,180달러, 원화로는 2,968만원이다.

구매력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2014년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4,356달러로, OECD 회원국 평균(3만 8,817달러)의 88.5%였다.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다른 나라의 2014년 1인당 GDP는 미국 5만 4,629달러, 독일 4만 5,615달러, 영국 3만 9,137달러, 일본 3만 6,426달러, 중국 1만 3,217달러 등이다.



구매력평가(PPP) 기준 각국 2014년 1인당 GDP

(단위: 달러)

국	가	1인당 GDP
미	국	54,629.5
독	일	45,615.8
스	웨	45,143.5
호	주	43,901.6
영	국	39,136.8
O	E C D	38,816.9
일	본	36,426.3
한	국	34,355.7
중	국	13,216.5

출처: 세계은행 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order=wbapi_data_value_2012+wbapi_data_value+wbapi_data_value-last&sort=desc

2) 재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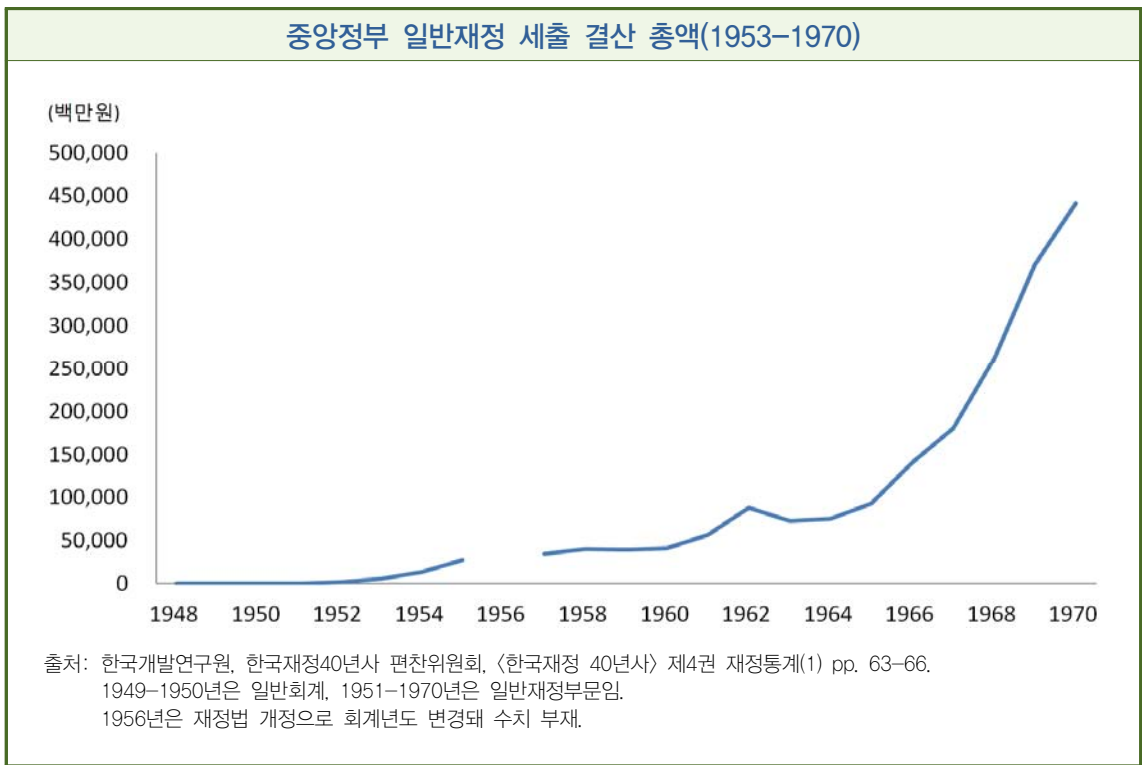
(1) 재정규모

1948년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3,000만원에 불과했다. 중앙정부 일반재정⁴⁾ 규모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4년에 100억 원대로, 1966년에 1,000억 원대로 증가했으며, 1960년대 후반 증가세가 더욱 빨라져 1970년의 중앙정부 일반재정은 4,410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이는 1954년에 비해 3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1970년 GDP의 15.8%에 해당했다. 같은 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합한 “일반정부” 총지출은 5,578억 원으로 GDP의 20%였다.

1970년 이후 “일반정부” 재정 규모는 절대치로도, GDP 대비 규모로도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의 총수입은 1970년에서 5,621억 원에서 2014년 493조 원으로, 총지출은 같은 기간 5,578억 원에서 474조 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규모도 1970년 20% 선이었던 데서 2014년에는 32%로 늘었다. 그러나 32%인 우리의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중은 덴마크 57.2%, 프랑스, 57.3%, 독일 43.9%, 일본 42.3%(2013년), 영국 44.5%, 미국 38.7%(2013년)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4) 중앙정부 일반재정 부문은 일반회계에 대충자금특별회계 등 일부 특별회계가 포함된 수치임.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총수입-총지출)으로 보았을 때, 정부 재정은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대체로 적자이다가 1983년 이후 흑자를 보이고 있다. 2014년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은 18조 5,543억 원, GDP대비 1.2%였다. 이는 OECD가 권고하는 GDP 대비 -3%선을 기준으로 볼 때 건전한 편이지만,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만으로는 22.5조 원의 적자 상태이며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기금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일반정부 총수입, 총지출, 저축투자차액

(단위: 십억원, %)

연 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일반정부 총수입	562.1	8,634.3	47,066.9	184,654.0	404,581.2	493,043.1
GDP 대비 비중	20.1	21.9	23.8	29.1	32.0	33.2
일반정부 총지출	557.8	9,081.5	42,316.1	156,968.6	392,264.1	474,488.8
GDP 대비 비중	20.0	23.0	21.4	24.7	31.0	32.0
일반정부 저축투자차액	4.3	-447.2	4,750.8	27,685.4	12,317.1	18,554.3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014년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비중

(단위: %)

국	가	비	중
덴	마		57.2
프	랑		57.3
독	일		43.9
일본(2013년)			42.3
한	국		32.0
영	국		44.5
미국(2013년)			38.7

출처: OECD (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NAAG)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6. General Government, Total Expenditure of General Government, percentage of GDP

(2) 조세부담

조세부담률은 사회보장기여금을 제외한 조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1953년에는 5.6%에 불과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초까지도 중앙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채 안 되었고 원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1957년의 중앙정부 일반재정 세입 총액 중 조세는 27.6%였던 데 비해 원조(대충자금)는 52.9%이었다. 1965년까지도 중앙정부 일반재정 세입 중 조세 비중은 50%를 겨우 넘는 수준이었다. 1965년 세입 총액은 1,055억 원이었으며 이중 조세는 546억 원으로 51.8%였다. 그러나 조세 수입은 1966년부터 급격히 증가해 1970년에는 3,347억 원, 중앙정부 일반재정 세입 총액 대비 75%로 증가했다. 1960년대 말의 이러한 세수 증가에는 1966년 국세청 설립 등 세수 확보를 위한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 1966년까지 대체로 10% 수준이거나 10%에 미달하던 조세부담률도 1967년 11.7%, 1970년에는 14.2%로 증가했다. 한편 원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해, 1970년에는 대충자금이 중앙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 미만으로 떨어졌다.

조세 중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1980년대 중반까지 9대 1 정도였다. 1990년을 전후로 지방자치제 실시를 준비하면서 지나친 국세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국세를 지방으로 이양,⁵⁾ 1989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약 8대 2가 되었다.⁶⁾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조세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국민부담

5) 한국조세연구원(2012),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제1권: 조세체계, 소득과세, p. 34.

6) 2013년 조세 총액에서 국세, 지방세 비중은 79%와 21%였다.

률로 나타낸다. 1960년대에는 별도의 사회보험제도가 없어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일치했으나, 1972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 전반까지도 그 차이의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1988년에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후부터 격차가 커지기 시작했다.⁷⁾ 1989년에는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각각 16.0%와 16.3%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1990년에는 16.8%와 18.8%로 차이가 벌어졌으며 2013년에는 조세부담률이 17.9%, 국민부담률이 24.3%였다.

국민부담률은 1972년 12.4%에서 2012년 24.8%로 크게 증가했으나, OECD 회원국 평균인 33.7%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2012년 다른 나라의 국민부담률은 미국 24.4%, 영국 33.0, 스웨덴 42.3, 일본 29.5%, 독일 36.5%, 프랑스 44.0% 등이었다.

Ⅰ 중앙정부 세입 중 조세와 원조 액수 및 비중

(단위: 백만원, %)

연도	세입 총액	조세	세입 중 조세 비중	외국원조/대총자금	세입 중 외국원조/대총자금 비중
1953	6,683	2,096	31.4	796	11.9
1954	14,920	5,199	34.8	4,470	30.0
1955	32,378	11,054	34.1	15,054	46.5
1957	42,459	11,736	27.6	22,451	52.9
1958	47,710	14,659	30.7	24,580	51.5
1959	45,540	22,086	48.5	18,910	41.5
1960	48,456	24,971	51.5	16,763	34.6
1961	61,354	23,199	37.8	24,058	39.2
1962	93,214	28,242	30.3	28,726	30.8
1963	75,923	31,078	40.9	26,312	34.7
1964	79,387	37,421	47.1	28,020	35.3
1965	105,481	54,634	51.8	36,090	34.2
1966	153,777	87,646	57.0	38,415	25.0
1967	199,018	129,241	64.9	35,238	17.7
1968	275,717	194,288	70.5	30,655	11.1
1969	376,041	262,823	69.9	21,868	5.8
1970	445,856	334,723	75.0	17,696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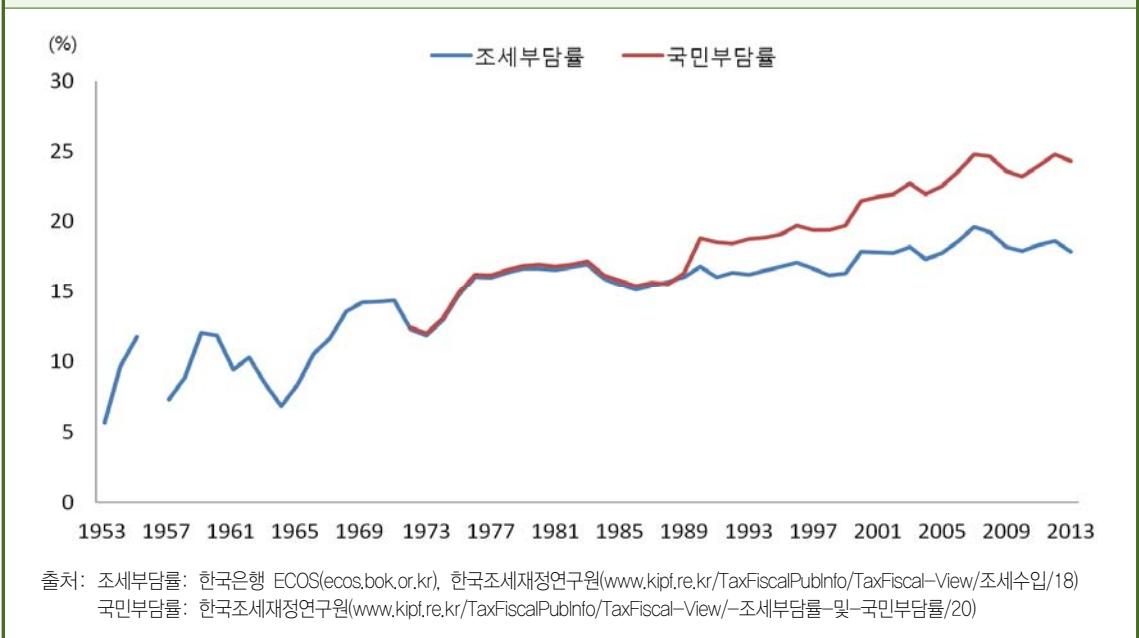
출처: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재정 40년사」 제4권 재정통계(1) pp. 63-67.

주: 1948~1950년은 일반회계, 1951~1970년은 일반재정부문.

1956년은 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가 변경돼 수치 부재.

7) 한국조세연구원(2012), 「한국 세제사」, 제2편 주제별 역사와 평가, 제1권: 조세 체계, 소득과세, p. 26.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1953-2013)



조세총액, 국세 및 지방세

(단위: 억원, %)

	1955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조세총액	134.4	296	3,980	65,754	332,148	1,135,353	2,268,782	2,556,853
국세합계	120.5	273	3,648	58,077	268,474	929,347	1,777,184	2,019,065
조세총액 중 국세비중	89.7	92.1	91.7	88.3	80.8	81.9	78.3	79.0
지방세합계	13.9	23	332	7,677	63,674	206,006	491,598	537,788
조세총액 중 지방세 비중	10.3	7.8	8.3	11.7	19.2	18.1	21.7	21.0

출처: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www.kipf.re.kr/TaxFiscalPubInfo/TaxFiscal-View/조세수입/18)

2012년 각국 국민부담률

(단위: %)

국	가	비	중
덴	마	크	47.2
프	랑	스	44.0
독		일	36.5
일		본	29.5
한		국	24.8
스	웨	덴	42.3
영		국	33.0
미		국	24.4
O E C D	평	균	33.7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www.oecd.org/ctp/tax-policy/revenue-statistics-19963726.htm.

(3) 재정지출

1950년대 초반에는 중앙정부 일반재정 지출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1953년에는 중앙정부 일반재정 세출 총액 61억 원 중 군사비 지출이 33억 원으로 약 54%에 해당했다. 1960년대 중반까지도 국방비는 중앙정부 일반재정 세출에서 약 30% 가량을 차지했으나 비중이 점차 줄어 1970년에는 23%로 낮아졌다.

1970년 이후에도 국방비 지출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 한국은행에서 통계를 제공하는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 지출 구성을 보면 1970년 20%였던 국방비 비중은 2013년에 8%로 줄었다. 1970년 이후 지출 증가가 두드러진 항목은 보건과 사회보호이다. 일반정부 지출 구성에서 보건의 1970년에 1%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2%로 증가했으며, 사회보호는 1970년 5%에서 2013년 18%로 늘었다. 교육과 경제는 1970년대 이후 현재까지 15-20% 사이의 비교적 높은 비중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정부 지출에서 사회보호비 비중이 크게 증가하긴 했지만 OECD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13년 일반정부 총지출 중 사회보호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 18.4%인데 비해 호주 27.7%, 프랑스 42.9%, 독일 42.6%, 일본 42.4%, 영국 37.2%, 미국 20.7% 등이다. 그러나 아직 도입 역사가 짧은 국민연금의 수급자가 늘고 있고 고령화 등으로 보건비 지출이 증가하면 사회보호비 지출이 향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국의 2013년 일반정부 총지출 중 국방비 비중은 7.8%로, 호주 3.9%, 프랑스 3.1%, 독일 2.4%, 일본 2.1%, 영국 5.0%보다 높았으며 미국 9.8%보다는 낮았다.

Ⅰ 일반정부 지출 구성

(단위: 십억원,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3							
일반공공행정			75.1	13	1,205.0	13	6,340.2	15	26,553.7	17	77,495.0	17		
국방	3.3	53.7	14.7	35	110.9	20	2,218.0	24	6,120.0	14	15,334.6	10	35,368.8	8
공공질서 및 안전			25.3	5	419.4	5	2,062.8	5	7,517.7	5	18,239.9	4		
경제업무			130.2	23	1,515.7	17	8,855.2	21	35,157.8	22	76,061.0	17		
환경보호			8.5	0	147.2	2	1,254.8	3	4,482.7	3	10,764.0	2		
주택 및 지역개발			39.8	7	688.8	8	1,651.7	4	7,160.0	5	13,533.8	3		
보건			7.6	1	332.8	4	2,972.6	7	13,055.0	8	55,159.4	12		
오락 문화 및 종교			5.8	1	94.4	1	706.8	2	3,413.9	2	9,821.5	2		
교육			124.9	22	1,795.7	20	7,854.0	19	25,584.2	16	73,840.2	16		
사회보호			29.7	5	664.6	7	4,497.9	11	18,709.2	12	83,707.7	18		
총지출	6.1	42.0	557.8	9,081.5	42,316.1	156,968.6	453,991.4							

출처: 1953, 1960년은 중앙정부 일반재정부문 세출 중 군사비/국방비 지출임.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재정4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재정 40년사」 제4권 재정통계 (1) pp. 63-67.

1970-2013년은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기금) 총지출 구성임.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013년 주요국 일반정부 지출 구성

(단위: %)

국가	일반공공 행정	국방	치안	경제업무	환경보호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호주	12.9	3.9	4.7	11.1	2.9	1.7	18.8	2.0	14.4	27.7
프랑스	11.9	3.1	2.9	8.7	1.8	2.4	14.2	2.6	9.6	42.9
독일	14.3	2.4	3.5	7.5	1.3	0.9	15.8	1.9	9.7	42.6
일본	10.6	2.1	3.1	10.3	2.8	1.8	17.5	0.9	8.5	42.4
한국	17.1	7.8	4.0	16.8	2.4	3.0	12.1	2.2	16.3	18.4
영국	12.5	5.0	4.8	6.8	1.8	1.5	16.7	1.7	12.0	37.2
미국	14.3	9.8	5.6	9.2	0.0	1.5	22.3	0.7	16.0	20.7

출처: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5. "Structure of general government expenditure by function, 2013". www.oecd-ilibrary.org/governance/government-at-a-glance_22214399.

주: 일반정부 총지출 중 각 부문별 지출 비중.

3) 대외거래

(1) 무역규모

오늘날 약 5,700억 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수출액은 1956년에 2,500만 달러가 채 안 되었다. 1964년에는 1억 달러 돌파 기념으로 12월 5일에 제1회 수출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기도 했다(이듬해부터 수출의 날은 11월 30일이다).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경제 개발이 이뤄지면서 수출액이 급증했다. 제2차 5개년계획(1967-1971년)에는 "수출 목표치 7억 달러"가 중점 목표에 포함되어 있었을 정도다. 계획을 수립한 1966년의 수출액은 2억 5,000만 달러였는데 5년만인 1971년에 7억 달러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해 1971년에는 10억 달러를 돌파했다. 1972년에는 "81년에 국민소득 1,000달러, 80년에 수출 100억 달러" 목표가 제시됐다. 1972년 수출액은 16억 달러였는데 8년 안에 100억 달러까지 늘리겠다는 야심찬 목표였다. 그리고 100억 달러 목표 역시 80년보다 3년이나 이른 1977년에 달성됐다. 이후 한국의 수출액은 1995년에 1,000억 달러, 2011년에 5,000억 달러를 각각 넘어섰으며, 2014년 수출액은 5,727억 달러였다. 전 세계 수출 총액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 0.3%에서 2014년 3.1%로 증가했는데, 이는 세계 6위에 해당한다.

수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자재가 필요하므로 수입이 함께 증가했다. 한국의 수입

액은 1956년 약 4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약 5,255억 달러로 늘었다. 2014년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한국의 무역액은 약 1조 980억 달러로, 세계 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9%이며 순위로는 세계 8위이다.

대외 거래의 증가와 함께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도 증가했다. 한국의 무역의존도(GNI기준)는 1956년 15.2%에서 81년까지 계속 상승해 77.5%가 된 뒤 93년에 49.3%까지 낮아졌으나 다시 증가하여 2011년 113.5%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014년 무역의존도는 99.5%였다. 다른 나라의 2014년 무역의존도(GDP기준)는 중국 41.5%, 독일 84.8%, 일본 35.1%(2013년), 싱가포르 350.9%, 영국 58.5%, 미국 30.0%(2013년) 등이다.⁸⁾

Ⅰ 무역규모

(단위: 천달러, %, 괄호 안은 순위)

	1956	1960	1970	1980	1990	2000	2014
수출액(1)	24,595	32,827	835,185	17,504,862	65,015,731	172,267,510	572,664,607
수입액(2)	386,063	343,527	1,983,973	22,291,663	69,843,678	160,481,018	525,514,506
무역액(1+2)	410,658	376,354	2,819,158	39,796,525	134,859,409	332,748,528	1,098,179,113
세계수출 중 한국 비중			0.3(27)	1.2(19)	1.9(11)	2.7(12)	3.1(6)
세계무역 중 한국 비중			0.5(23)	1.3(17)	2.0(12)	2.6(13)	2.9(8)
무역의존도	15.2	15.4	35.5	74.0	53.6	71.7	99.5

출처: 무역 규모 및 세계 순위: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무역의존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GNI 대비 수출액, 수입액,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의 합.

Ⅰ 각국 무역의존도

(단위: %)

국	가	2013년	2014년
호	주	41.0	42.3
중	국	43.9	41.5
독	일	85.3	84.8
일	본	35.1	-
한	국	102.8	95.9
싱	가	359.9	350.9
스	웨	82.9	85.3
영	국	62.2	58.5
미	국	30.0	-

출처: 세계은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Trade (% of GDP)", GDP 대비 수출액, 수입액의 합.

8)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무역의존도는 GNI 대비 수출액, 수입액, 국외수취요소소득, 국외지급요소소득의 총합의 비중이며,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수출액과 수입액의 비중이다.

(2) 무역구성

이렇다 할 공업이 발달하기 전인 1960년대 초에는 수출 상품 중 1차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1961년의 10대 수출 상품은 철광석, 중석, 생사, 무연탄, 오징어, 활선어, 흑연, 합판, 미곡, 돼지털이었다. 1964년에도 수출 상품 중 1차 상품이 45.3%, 경공업 제품이 45.3%였고 중화학 제품은 9.2%에 불과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차 상품 비중은 줄고 경공업 비중이 증가해 1970년의 수출 상품 구성은 1차 상품 17.5%, 경공업 제품 69.7%, 중화학 제품 12.8%가 되었다. 섬유 위주의 경공업이 발전해 주요 수출 품목이 되면서 1970년 수출 상품 1위는 섬유류, 3위는 가발이었다.

경공업 비중은 1971년 72%를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1973년 1월에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하면서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이 진행되고, 이와 함께 수출 상품 구성도 중화학 공업 위주로 변화하게 된다. 1980년의 수출상품 구성은 1차 상품 11.7%, 경공업제품 46.4%, 중화학제품 41.8%가 됐으며, 1982년에는 중화학제품 비중(49%)이 경공업제품 비중(43%)을 능가하게 됐다. 경공업은 2005년부터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지며, 반면 중화학제품과 IT 제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1차 상품, 경공업, 중화학, IT 제품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2%, 6.4%, 67.5%, 23.9%가 되었다. 반도체는 1980년에 10대 수출 상품에 진입한 후(10위) 1992년에는 수출 1위 품목이 되었다. 2000년대 이후로는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 선박이 번갈아 수출 1위 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1971년에는 한국의 수출에서 미국(50.6%)과 일본(24.9%)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반면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은 1992년까지만 해도 3.5%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해 2001년 12.1%로 일본(11%)을 앞질렀고, 2003년에는 18.1%로 미국(17.7%)도 앞질렀다. 2014년에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25.4%에 달해 미국(12.3%)과 일본(5.6%)을 합한 것보다 많아졌다.

주요 수입상대국은 1971년 일본이 39.8%로 1위, 미국이 28.3%로 2위였다. 교역 국가가 다변화되면서 일본과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로 줄었지만 2000년에도 일본(19.8%)과 미국(18.2%)이 1, 2위였다. 그러다 2007년 중국이 수입상대국 1위로 올라섰으며 2014년에는 중국 17.1%, 일본 10.2%, 미국 8.6%를 차지했다.

수출상품구조

(단위: 백만달러, %)

	1964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1차상품	54	146	2056	3,199	4,776	11,497	12,844
구성비	45.3	17.5	11.7	4.9	2.8	2.5	2.2
경공업제품	54	582	8128	25,026	27,934	29,397	36,631
구성비	45.3	69.7	46.4	38.5	16.2	6.3	6.4
중화학제품	11	107	7321	27,454	84,473	299,098	386,543
구성비	9.2	12.8	41.8	42.2	49.0	64.1	67.5
IT 제품				9,338	55,085	126,392	136,645
구성비				14.4	32.0	27.1	23.9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주요 수출상대국, 수입상대국 교역 비중

(단위: %)

	1971	1980	1990	2000	2010	2014
주요상대국 수출비중						
미 국	50.6	26.3	29.8	21.8	10.7	12.3
일 본	24.9	17.4	19.4	11.9	6.0	5.6
E U	8.2	16.7	16	14.4	11.5	9.0
중 국	0.0	0.1	0.9	10.7	25.1	25.4
주요상대국 수입비중						
미 국	28.3	22.0	24.3	18.2	9.5	8.6
일 본	39.8	26.3	26.6	19.8	15.1	10.2
E U	10.7	7.6	13.2	10.1	9.1	11.9
중 국	0.0	0.1	3.2	8.0	16.8	17.1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10대 수출품목

(단위: 항목)

	1961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1	철광석	섬유류	의류	의류	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2	중석	합판	철강판	반도체	컴퓨터	선박	석유제품
3	생사	가발	신발	신발	자동차	유무선전화기	자동차
4	무연탄	철광석	선박	영상기기	석유제품	석유제품	선박해양 구조물및부품
5	오징어	전자제품	음향기기	선박해양 구조물및부품	선박해양 구조물및부품	승용자동차	평판디스크 플레이팅세서
6	활선어	과자제품	인조장섬유직물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액정디바이스	무선통신기기
7	흑연	신발	고무제품	음향기기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8	합판	연초 및 동제품	목재류	철강판	철강판	플라스틱제품	합성수지
9	미곡	철강제품	영상기기	인조장섬유직물	의류	유무기화합물	철강판
10	돼지털	금속제품	반도체	자동차	영상기기	가전제품	전자응용기기

출처: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한국통계진흥원(2008), 「대한민국을 즐겨라: 통계로 본 한국 60년」, p.28.

(3) 대외거래 안정성

1950년대 한국의 경상수지는 1억 달러 미만의 적자 또는 흑자를 보였다. 상품수지는 지속적으로 연 0.5~3.7억 달러의 적자를 보인 반면 대외원조의 영향으로 상품외수지가 연 0.5~3.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1960년대에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상품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했으나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상품수지 적자규모가 1960년대 초의 2~3억 달러에서 1969년 약 10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경상수지도 1960년대 초 1억 달러 내외의 적자 또는 흑자이던 데서 1969년에는 5.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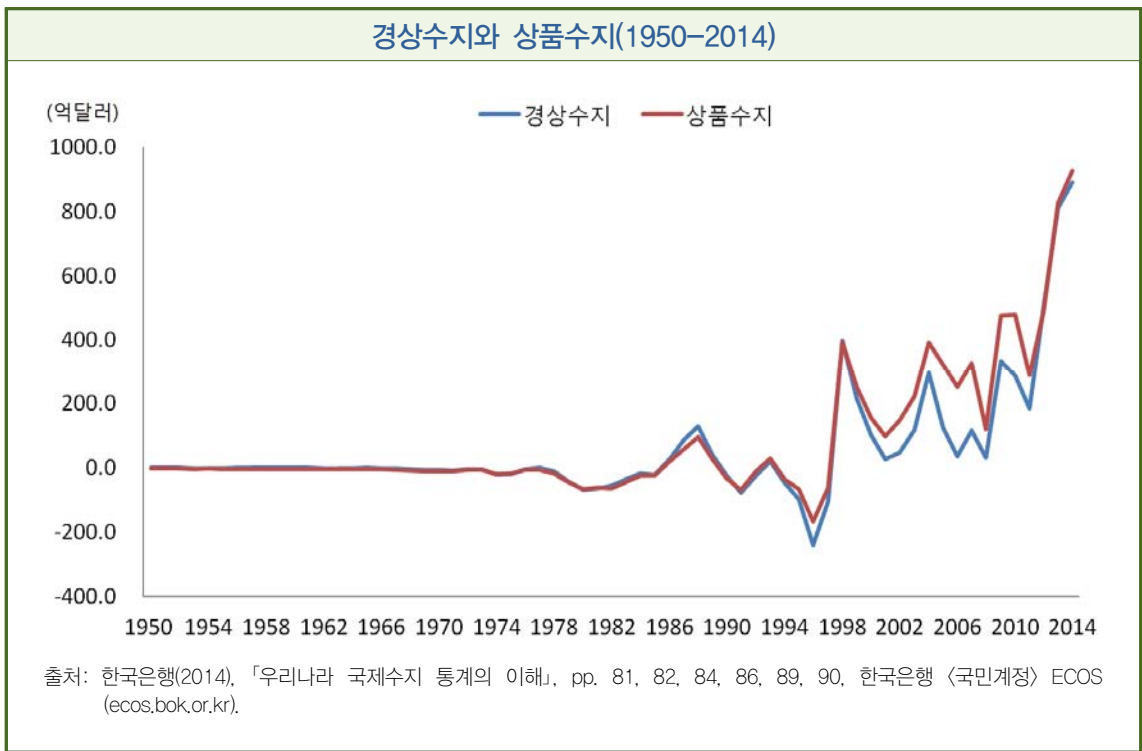
196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경상수지는 구조적으로 적자였다. 예외적으로 1980년대 후반 3저 현상(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내면서 경상수지도 흑자를 기록했다. 한국이 상품수지에서 흑자를 기록한 것은 1986년이 처음이며 상품수지는 3저 호황이 지속된 1989년까지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 이전에도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인 적은 있었으나 상품의 수출이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1989년까지 지속되던 상품수지 흑자는 1990년에 적자로 돌아섰고 경상수지도 마찬가지였다. 경상수지, 상품수지는 1997년까지 적자이다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에 흑자가 되었는데(경상수지 400억 달러 흑자, 상품수지 395억 달러 흑자), 이는 1980년대의 경우와 달리 수출이 수입보다 크게 늘어서가 아니라 국내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큰 폭으로 감소해 생긴 불황형 흑자였다.

1998년 이후 경상수지는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4년 경상수지는 892억 달러로 GDP 대비 6.33%였다. 2014년 다른 나라의 GDP대비 경상수지비율은 미국 -2.4%, 영국 -5.5%, 일본 0.5%, 호주 -2.8%, 중국 1.9%(2013년) 등이다. 경상수지 흑자, 적자를 그 자체로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대외순채무가 증가하게 되며 특히 한국처럼 개방성이 큰 경제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대외거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외채무 관련, 한국은 2000년에 채무보다 채권이 많은 채권국으로 전환되었다. 순대외채무는 1997년까지 계속 증가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637억 달러까지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해 2000년에는 순대외채권 249억 달러로 채권국이 됐다. 2014년에는 대외채무 4,254억 달러, 대외채권 6,789억 달러로, 순대외채권은 2,535억 달러였다.

2014년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636억 달러로 1960년 말 1억 5,700만 달러에 비해 약 2,300배 증가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204억 550만 달러에 비해도 18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1997년의 외환보유액은 단기외채 584억 달러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단기외채(1,153억 달러)의 3배가 넘는 외환을 보유하고 있다.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1997년 이전까지 대체로 10% 미만이었으나 1997년에는 3.7%로 최저점을 기록했다가 그 이후로 증가해 2014년에는 25.8%가 되었다.



Ⅰ 경상수지와 상품수지(1950-2014)

(단위: 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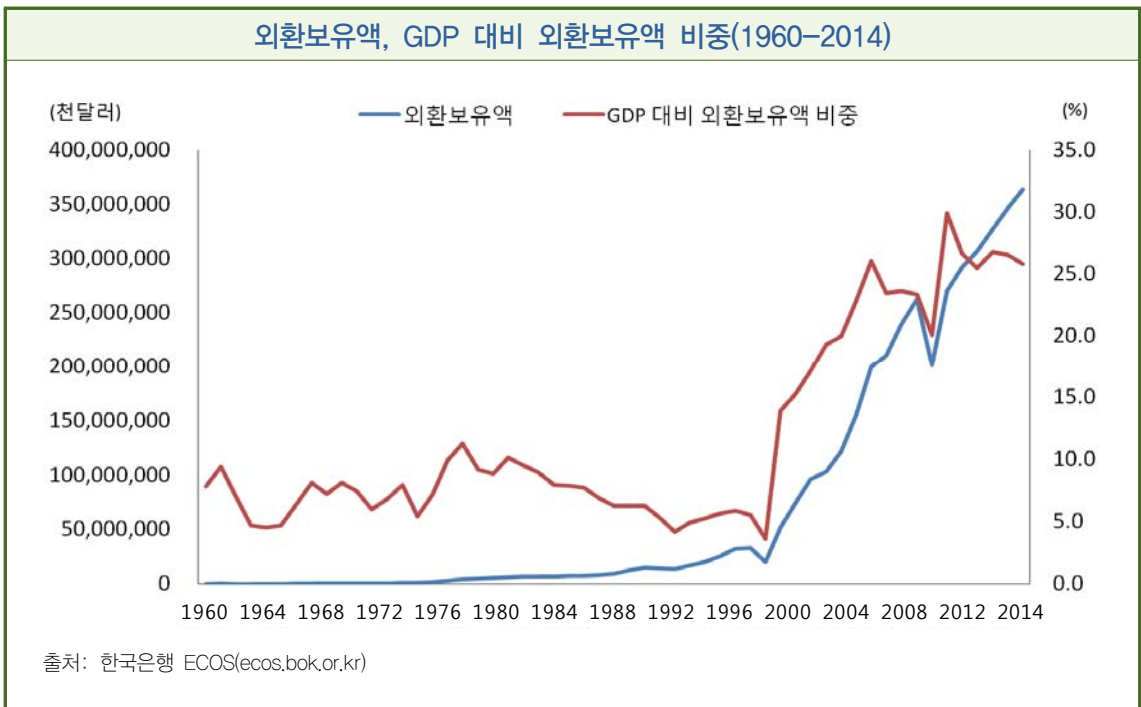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경상수지	0.2	0.1	-6.2	-68.5	-24.0	104.4	288.5	892.2
상품수지	-0.5	-2.7	-9.2	-65.6	-32.8	156.3	479.2	926.9

대외채무, 대외채권

(단위: 백만달러)

	1994	2000	2005	2010	2014
대외채무	80,766.4	135,208.3	161,956.1	355,911.0	425,449.2
단기	36,184.6	43,796.5	66,913.2	136,453.4	115,296.9
장기	44,581.8	91,411.8	95,042.9	219,457.6	310,152.4
대외채권	64,126.8	160,108.6	316,470.4	450,580.9	678,925.3
단기	53,204.0	140,167.4	262,218.4	373,344.0	518,766.4
장기	10,922.8	19,941.2	54,252.0	77,236.9	160,158.9
순대외채권	-16,639.6	24,900.2	154,514.3	94,669.9	253,476.1
단기	17,019.4	96,370.9	195,305.2	236,890.6	403,469.5
장기	-33,659.0	-71,470.6	-40,790.9	-142,220.6	-149,993.4

출처: 한국은행 ECOS (ecos.bok.or.kr).



외환보유액,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1960-2014)

(단위: 천달러, %)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외환보유액	157,026	609,717	6,571,437	14,822,377	96,198,117	291,570,661	363,592,748
GDP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	7.85	7.44	10.13	5.31	17.12	26.64	25.79

주요국 2014년 GDP대비 경상수지비율

(단위: %)

	한국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중국(2013년)
GDP 대비 경상수지비율	6.3	-2.4	-5.5	0.5	-2.8	1.9

출처: 세계은행. Current Account Balance (% of GDP). data.worldbank.org/indicator/BN.CAB.XOKA.GD.Z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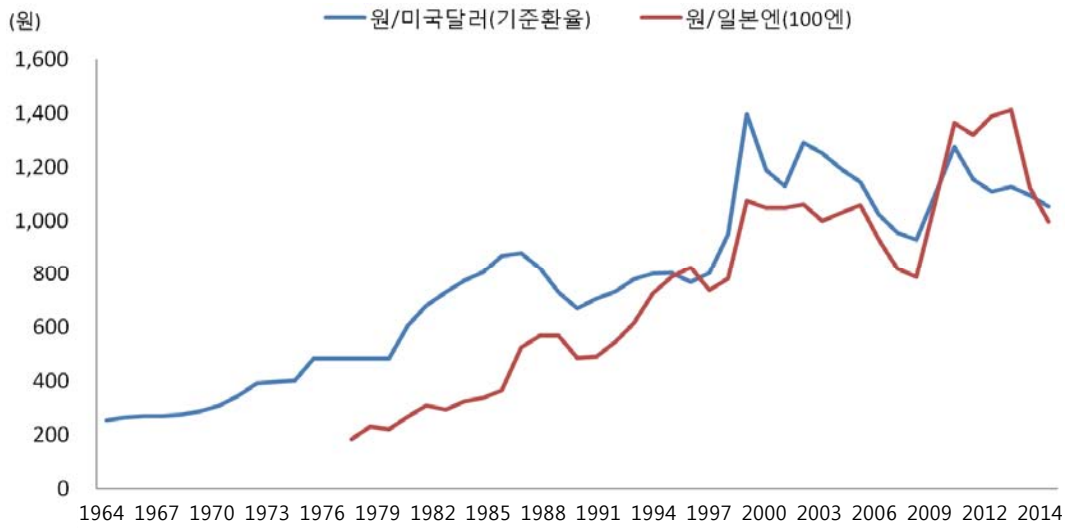
(4) 환율

2014년중(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1,053.22원으로 1965년 266.58원에 비해 약 4배 상승했다(미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74.7% 절하). 원 달러 환율은 1986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해 1986년 881.33원이 되었고 1996년까지 대체로 800원대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해 1997년 연말일 환율은 1,415.20원(연중은 951.11원)이었으며 1997년 12월 23일 장중 최고가가 1,995.00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후로는 대체로 1,000원 이상에서 원달러 환율이 형성되고 있다.

외환위기는 외환거래제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1990년 3월부터 1997년 12월까지의 시장 평균환율제도에 의해 외환이 거래되었고 하루 상하제한폭이 있었다. 하루 상하제한폭은 1990년 3월에 0.4%에서 1995년까지 2.25%로 확대됐다. 그러나 외환위기 당시 외환시장이 개장하자마자 하루 제한폭까지 환율이 상승해 외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는 일이 빈발하자 11월 19일 상하 2.25%이던 제한폭이 10%로 확대됐고 이것으로도 역부족이어서 12월 16일에 환율변동제한폭이 아예 폐지되면서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가 되었다.

2014년 원엔 환율은 2014년 100엔당 996.19원으로 1977년 연중 환율인 185.26원에 비해 약 5배 상승했다. 원엔 환율은 외환위기 때 급등하여 1996년 말일 726.51원이었던 환율이 1997년 말일에는 1,087.82원에 달했다. 이후 2004년까지 100엔당 1,000원 이상의 연평균 환율이 유지됐다. 연평균 기준으로 원엔 환율은 2012년에 1,413.14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2014년 원엔 환율은 연평균 996.19원이었다.

원달러/원엔 환율(1964-2014)



출처: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연평균. 원엔 환율은 100엔 기준

원달러/원엔 환율(1964-2014)

(원/달러, 원/백엔)

	1964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원달러환율	255.77	310.58	607.44	707.97	1,130.61	1,156.26	1,053.22
원엔환율			269.65	491.58	1,048.92	1,320.56	996.19

2. 산업과 금융

1) 산업

(1) 산업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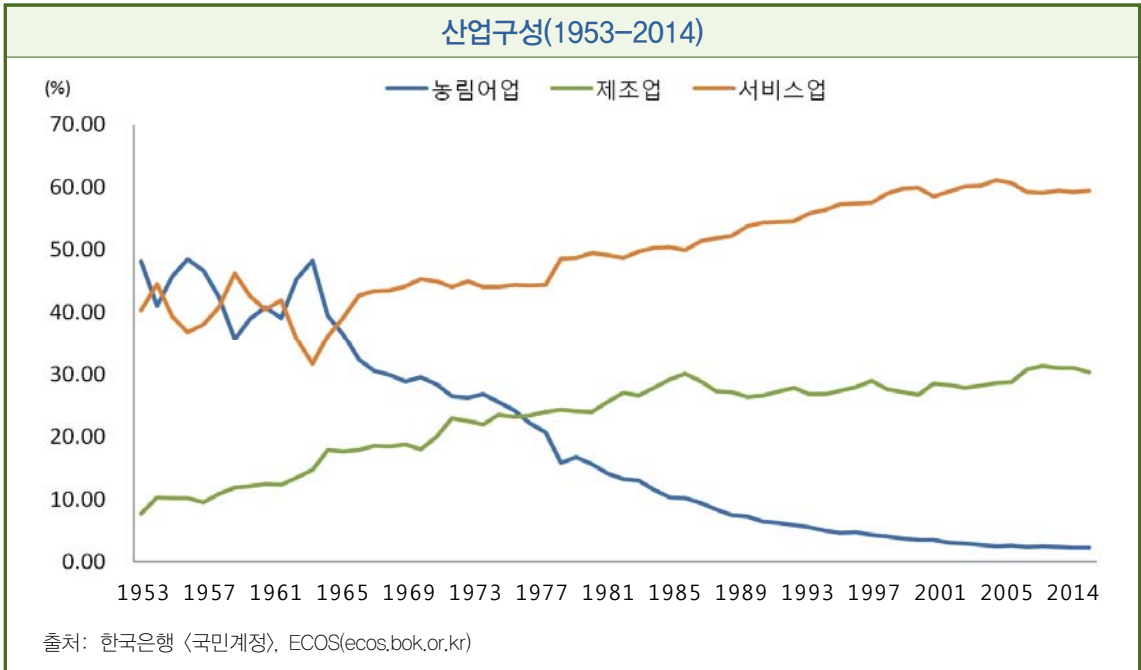
1953년에는 농림어업이 48.2%로 한국 산업 생산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해 제조업은 7.8%에 불과했으며 서비스업은 40.3%였다. 60년대 이후 경제개발과 함께 제조업이 성장하면서 농림어업 비중은 1969년에 30% 밑으로 떨어지고 1979년에는 20.7%로 낮아졌다. 이 시기 농림어업 비중이 감소하는 동안 제조업과 건설업이 큰 신장세를 보였다. 제조업은 경공업 발전에 이어 1970년대 이후 중화학 공업 정책을 펴면서 비중이 커졌다. 1973년에 정부는 “중화학 공업화 선언”을 하고 철강, 화학, 비철금속, 기계, 조선, 전자의 6개 산업을 중화학 공업의 주도산업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울산과 거제에 조선, 구미에 전자, 창원에 종합기계, 여수에 화학, 온산에 비철제련 등의 산업 기지가 건설됐다.⁹⁾ 제조업은 1960년에도 12.1%에 불과하다가 1979년에는 24.0%가 됐으며 건설업 비중은 1953년 2.2%에서 1979년 7.9%로 높아졌다.

1980년대 이후에도 농림어업 분야는 비중이 계속 줄어 1979년 20.7%이던 농림어업 비중은 2014년에 2.3%로 떨어졌다. 1980년대 이후 산업 비중의 증가는 서비스업에서 두드러졌다. 1953년 40.3%, 1979년까지도 44.4%로 비중에 큰 변화가 없던 서비스업은 8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해 2014년에는 59.4%를 차지했다. 제조업의 성장도 계속 이어져 1980년 24.0%에서 2014년에는 30.3%로 증가했다.

서비스업 분야의 세부 구성을 보면, 1953년에 서비스업 중 34.7%를 차지했던 도소매, 음식 숙박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20% 전후로 떨어졌으며 부동산임대업은 1953년 32.3%에서 2014년 13.4%로, 공공행정 및 국방은 20%에서 12.2%로 낮아졌다. 반면 사업서비스는 1953에서 2014년 사이 0.4%에서 12.4%로, 금융 보험업은 1.6%에서 9.4%로 크게 늘었다.

2012년 한국의 1, 2, 3차 산업 비중은 각각 2.5%, 38.1%, 59.5%로 주요 선진국과 비슷하다.

9) 매일경제신문 1973년 5월 25일 “잘사는 내일への 출발, 중화학 6개 주도산업 선정의 의의”.



산업구성(1953-2014)

(단위: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농업	48.19	38.98	28.89	15.91	8.42	4.39	2.47	2.34
광업	1.15	2.41	1.62	1.37	0.73	0.29	0.19	0.19
제조업	7.77	12.08	18.82	24.28	27.26	28.98	30.72	30.29
전기, 가스 및 수도업	0.37	0.62	1.36	2.17	2.15	2.82	2.24	2.81
건설업	2.19	3.28	5.05	7.61	9.49	6.00	5.12	4.94
서비스업	40.33	42.64	44.25	48.66	51.93	57.51	59.26	59.42

서비스업 산업구성(1953-2014)

(단위: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도소매 및 음식숙박	34.75	26.31	35.91	30.17	27.39	21.91	19.21	18.90
운수 및 보관	3.82	8.88	12.85	13.25	8.82	7.54	6.56	6.24
금융 및 보험	1.61	3.36	4.77	11.37	9.91	9.85	10.56	9.39
부동산 및 임대	32.28	17.88	9.10	8.01	12.24	16.33	13.42	13.42
정보통신	0.43	2.27	3.22	4.29	5.77	7.77	6.69	6.47
사업서비스	0.43	1.21	2.44	3.78	6.66	8.85	11.49	12.40
공공행정 및 국방	19.96	23.13	16.08	14.46	11.81	10.69	11.62	12.21
교육서비스	2.74	10.09	8.23	8.64	8.65	8.25	9.39	9.23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2.15	2.37	1.53	1.89	3.84	4.32	6.47	7.10
문화 및 기타서비스	1.88	4.50	5.88	4.15	4.91	4.49	4.59	4.63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2) 산업생산

한국의 쌀 생산량은 1945년 185만MT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1976년부터 1992년까지 대체로 500만MT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1988년 605만MT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2013년 생산량은 423만MT이었다. 쌀을 포함한 총 곡물 생산량을 국내 소비량으로 나눈 식량자급률은 1959년 100.4%, 1966년 100%였으나 이후 추세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에는 60% 밑으로 떨어졌고 2014년에는 50%가 채 되지 않았다.

자동차는 1955년에 최초로 7대가 생산됐다. 첫 자동차는 '시발(始發)' 자동차로, 거의 수공업 방식으로 제조됐다. 시발자동차는 1962년부터 2년간 인기를 끌었던 '새나라' 자동차에 밀려 시장에서 사라졌다. 1970년대 초까지 한국의 자동차는 외국 모델을 들여와 생산하는 방식이었으나 1974년에 최초의 한국 고유 모델 '포니'가 개발되면서 한국은 세계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자동차 고유 모델을 가진 나라가 됐다. 자동차 생산은 198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해 1988년 100만 대, 2002년 300만 대 생산을 돌파했고 2014년 생산량은 452만 대에 달했다. 이러한 생산 규모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5위에 해당한다.

철강 생산량은 조강 기준으로 1960년 5만MT에서 2010년 5,891만MT로 증가했다. 1973년 포항제철소가 준공되면서, 1972년에 60만MT이던 생산량이 1974년에는 237만MT으로 증가했고 1976년, 1978년, 1981년에 포항제철소 2기, 3기, 4기가, 1987년에는 광양 제철소가 준공되면서 1989년의 생산량은 2,000만MT을 넘어섰다. 2013년의 철강 생산량은 6,606만MT로, 중국, 일본, 미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6위이다.

선박 건조량은 1955년 2,000GT에 불과했고 1970년대 초에도 4만GT정도였다. 그러던데서 1974년 현대 울산 조선소, 1981년 대우 옥포 조선소가 준공되면서 1982년의 선박 건조량은 143만GT로 증가했다. 2013년의 선박 건조량은 2,122만 5000GT였으며, CGT 단위로는 1,003만 7,000CGT로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다.

반도체 생산액은 1997년 19.9조원에서 2014년 72조원으로 증가했고 세계 시장점유율은 동기간 6.8%에서 16.5%로 늘었다. 디스플레이 생산액은 1997년 4.2조원에서 2014년 43.5조원으로, 세계 시장점유율은 27.7%에서 44.2%로 증가했다.

산업 생산량

(단위 : 천MT, %, 대, 천GT, 조원)

	1945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쌀 생산량(천MT)	1,848.4	2,103.4	3,047	3,939	3,550	5,606	5,291	4,295	
식량자급률(%)			98.6	86.1	69.6	70.3	55.6	54.1	49.8
자동차 생산대수(대)			550	28,819	123,135	1,321,630	3,114,998	4,271,741	4,524,932
철강생산량(천MT)		0.4	50	504	8,558	23,124	43,107	58,914	71,542
선박 건조량(천GT)			4	39	655	3,573	11,499	26,397	
반도체 생산량(조원)							26	61.4	72
디스플레이 생산량(조원)							12.2	43	43.5

출처: 쌀생산량: 통계청 (농작물생산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p. 139.

식량자급률: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자동차생산량: 한국자동차산업협회, e나라지표(www.index.go.kr),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p. 16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철강생산량: 한국철강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선박건조량: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69.

반도체생산액: 한국반도체산업협회, e나라지표(www.index.go.kr).

디스플레이생산액: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e나라지표 (www.index.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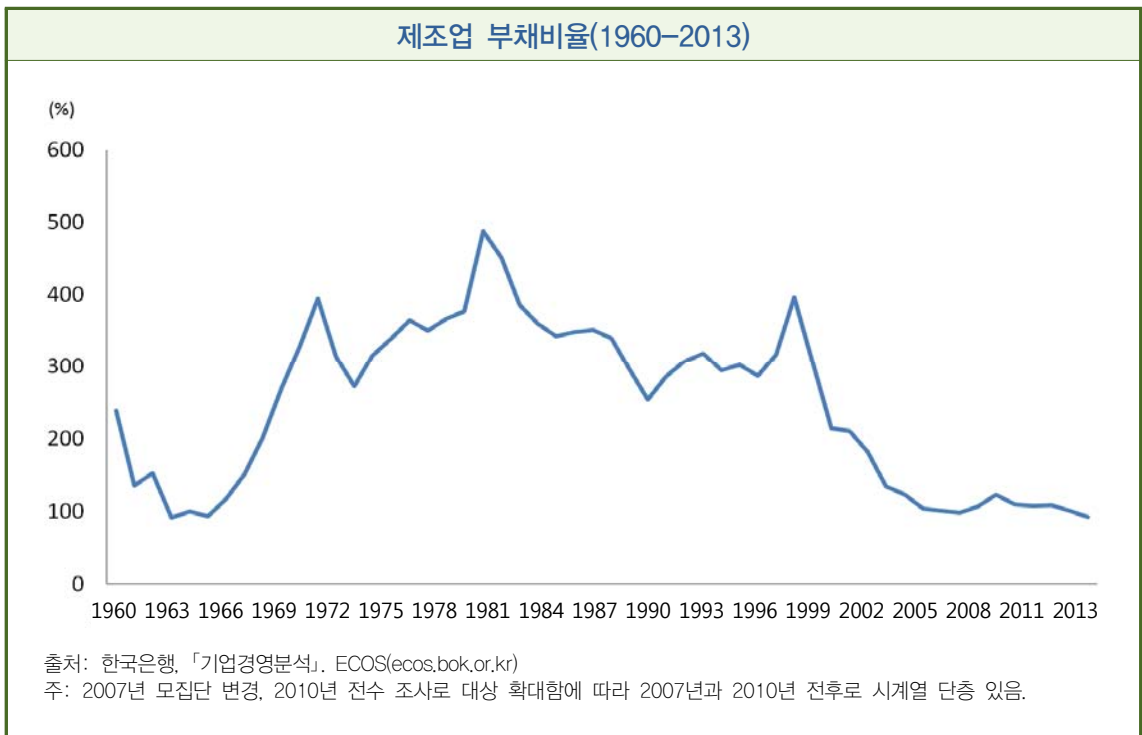
(3) 기업경영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는 동안 기업의 외형 성장도 급속히 이뤄졌다. 1970년대에는 제조업 매출액 증가율이 연 30~40%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로는 그보다 낮은 10% 전후 수준의 매출액 증가율을 보였다.

수익성 지표를 보면, 한국 제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960년대 10%대 이상, 1970년대 이후부터 외환위기 전인 1990년대 중후반까지 7% 전후의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외환위기 전까지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었으며 1980년대와 1990년대에 특히 낮았다.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격차를 보인 요인 중 하나는 높은 금융비용부담이었다. 제조업의 금융비용부담률은 1990년대까지 5%대 이상으로 높았고 외환위기이던 1998년에는 8.95%에 달했다. 금융비용부담률이 높았던 것은 고도 성장기에 정부의 신용 할당, 정책 산업에 대한 저금리 지원 등으로 기업이 차입금 위주로 자본을 조달한 데 기인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국 제조업의 부채비율도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200% 수준을 상회했으며, 1970년대에 300%를 넘어선 데 이어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말에는 396.3%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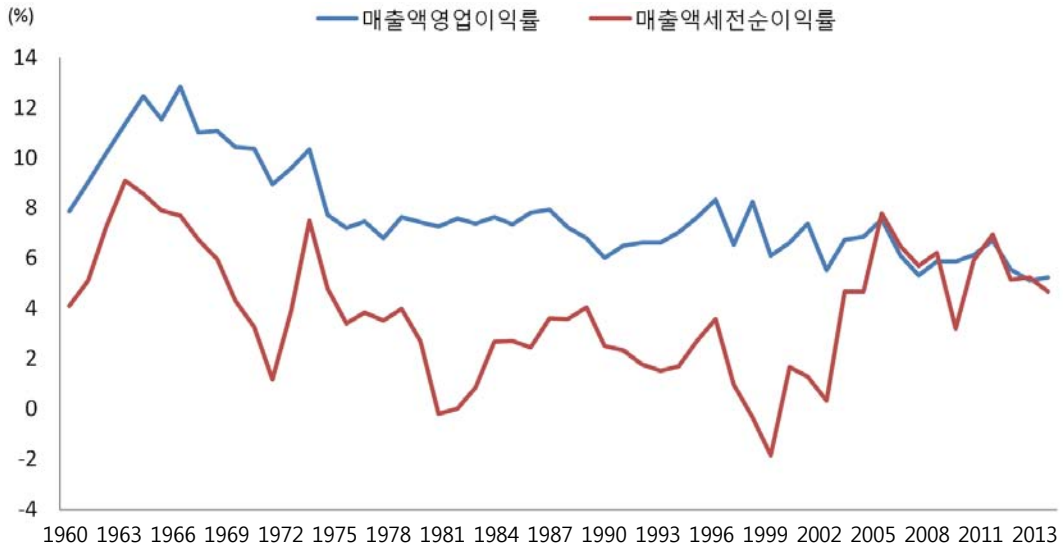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의 재무구조는 크게 개선됐다. 건전성 지표를 보면, 1997년 말 396.3%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이듬해인 1998년 말에 303.1%으로 감소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0년말 210.6%, 2013년 92.93%로 떨어졌다. 자기자본비율은 1997년 20.2%에 불과하다가 2013년 51.83%로 크게 높아졌다. 미국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3년 119.5%, 일본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2012년 127.5% 수준이다.¹⁰⁾

외환위기이던 1998년에 8.95%에 달했던 금융비용부담률도 차차 줄어 2003년 이후 1%대를 보이고 있다. 2013년 금융비용부담률은 1.02%였다. 또 2010년 이후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이 대체로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0년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6.72%, 매출액 세전순이익률은 6.96%였으며 2013년에는 각각 5.24%와 4.68%였다.



10)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2013년, pp. 550, 5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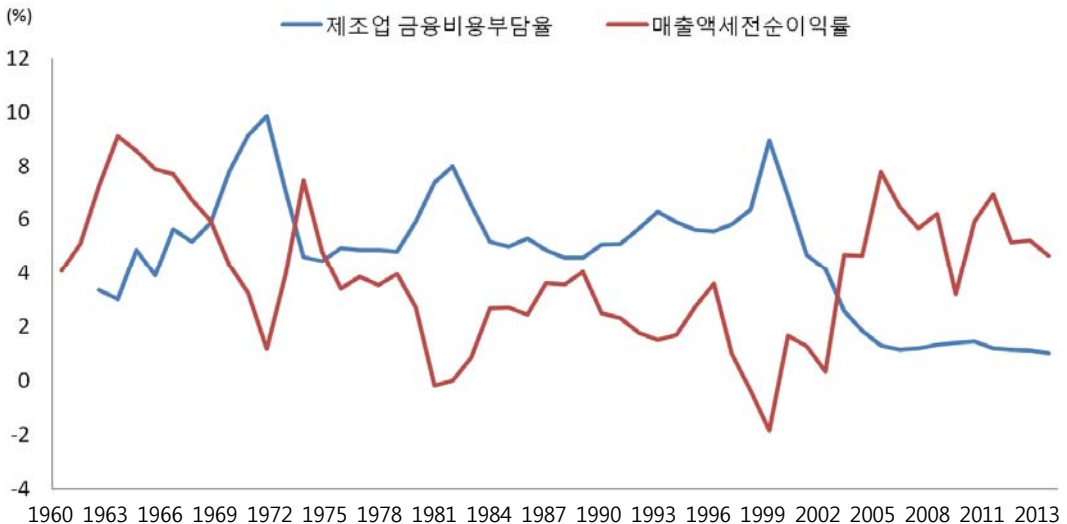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세전순이익률(1960-2013)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주: 2007년 모집단 변경, 2010년 전수 조사로 대상 확대함에 따라 2007년과 2010년 전후로 시계열 단층 있음.
2006년 이전은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아니라 매출액경상이익률임.

제조업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및 금융비용부담률(1960-2013)



출처: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ECOS(ecos.bok.or.kr)

주: 2007년 모집단 변경, 2010년 전수 조사로 대상 확대함에 따라 2007년과 2010년 전후로 시계열 단층 있음.
2006년 이전은 매출액세전순이익률이 아니라 매출액경상이익률임.

(4)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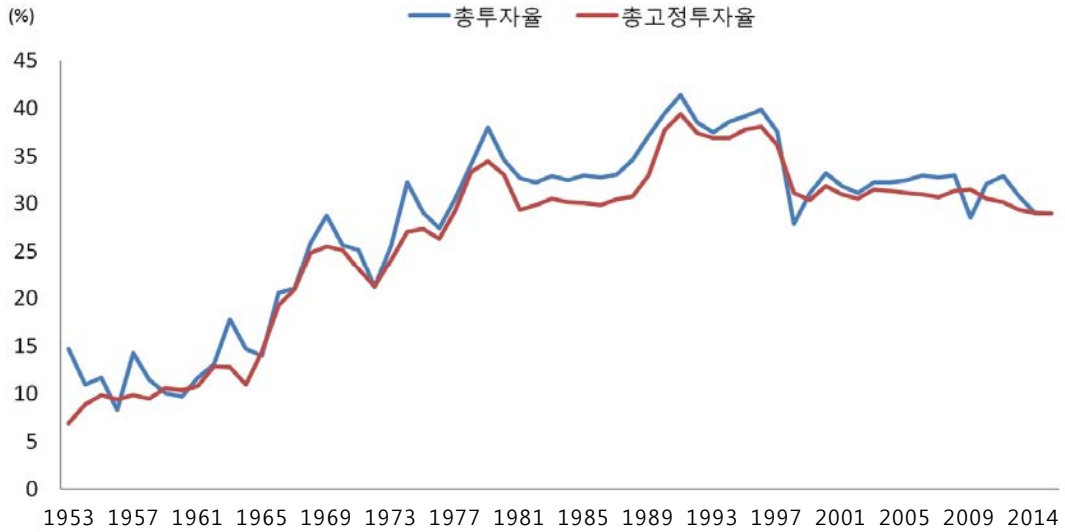
총고정자본형성은 일정 기간 동안 추가된 설비 투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투자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이다. 총고정자본형성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총고정투자율은 1963년 6.9%에서 2014년 29%로 늘었다. 1959년에 10%선을 겨우 넘겼던 한국의 총고정투자율은 1990년대 초반까지 증가해 1990년대 중반 38%대까지 올라갔다가 1996년을 기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투자율이 크게 하락했으며 1998년 이후 3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투자율은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2013년 GDP 대비 한국의 총자본형성은 29.1%로, 미국 19.4%, 일본 21.1%, 영국 17.1%, 독일 19.0%보다 높았다. 한편 중국은 한국보다 높은 47.7%를 보였다.

연구개발비 투자(정부, 민간 모두 포함)는 1963년에 12억 원에 불과했지만 1977년 1,083억 원, 1985년 1조 1,552억 원, 1996년 10조 8,781억 원, 2013년 59조 3,009억 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로도 연구개발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여, 1983년까지 1%가 채 안되던 데서 2012년부터는 4%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2012년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0%로 일본 3.4%, 미국 2.8%, 독일 2.9%, 영국 1.6%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인구 100만 명당 특허출원수인 특허출원율은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8년, 1999년,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8년과 2009년에 잠시 정체된 것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특허출원율은 1980년에 인구 100만 명당 33건에서 2000년 1549건으로 늘었으며, 2013년에는 3186건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도 13년 사이 두 배 가량 늘었다.

한편 연구개발투자비 1억 원당 특허출원수는 1970년대 초 15건 내외에서 1980년대 초에는 1건 내외, 1980년대 후반부터는 1건 미만으로 줄었다. 2005년 연구개발비 1억 원당 특허출원수는 0.67건이었으며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3년에는 0.35건을 보였다. 이는 투자 대비 특허 출원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총투자율, 총고정투자율(1953-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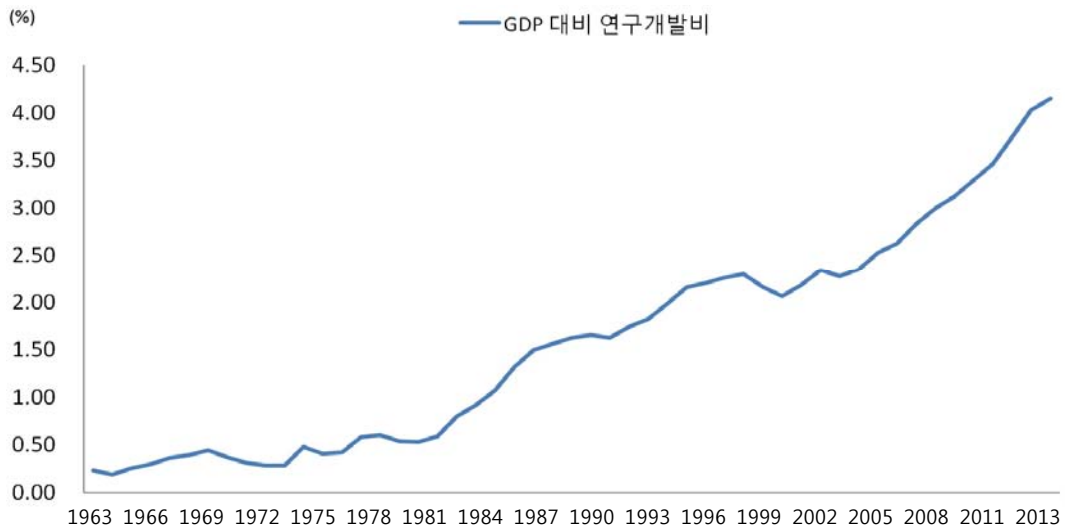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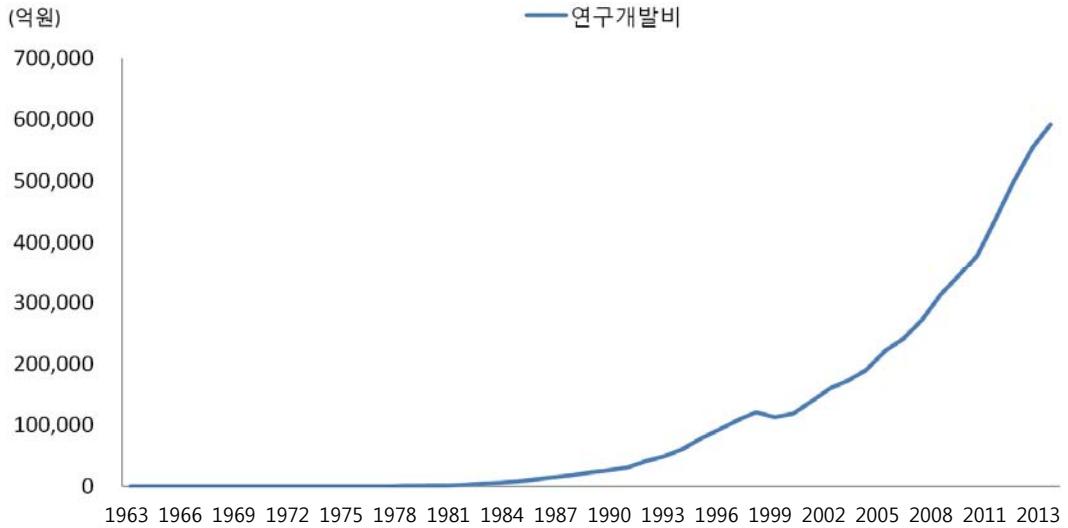
출처: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총투자율, 총고정투자율(1953-2014)

(단위: %)

	1953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국내총투자율	14.7	9.7	25.7	34.6	39.5	33.2	32.1	29.0
국내총고정투자율	6.9	10.4	25.2	33.1	37.7	31.9	30.6	29.0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196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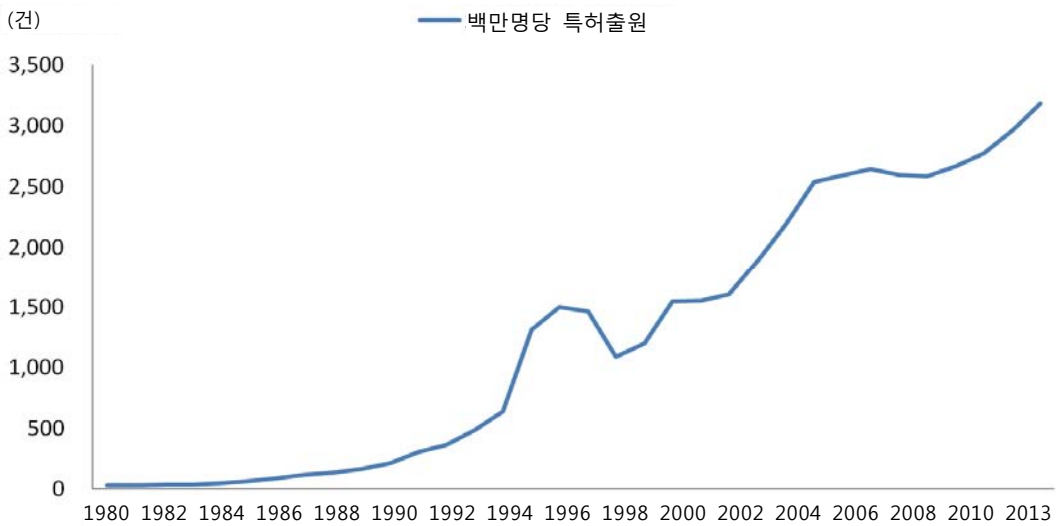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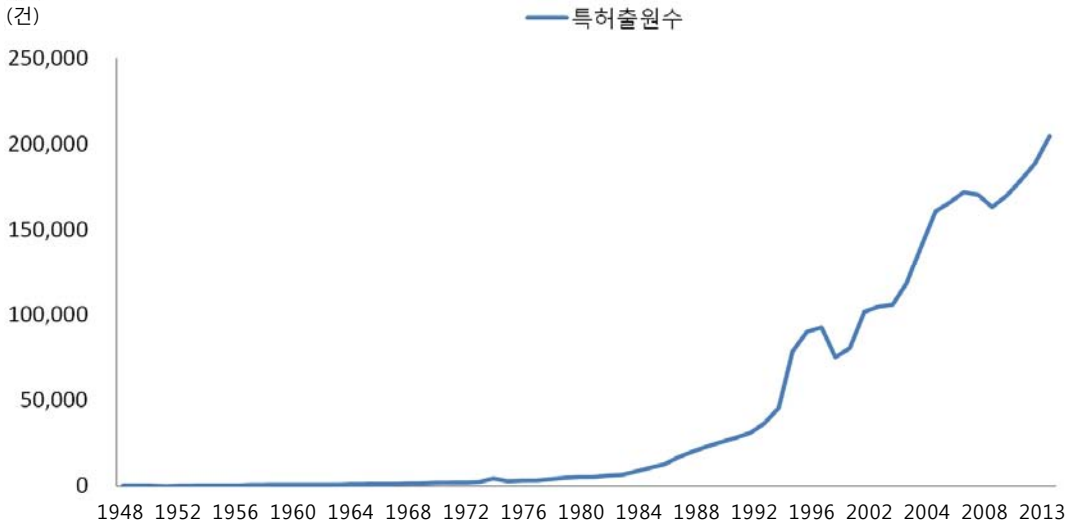
출처: 연구개발비: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통계(sts.ntis.go.kr).
 GDP: 한국은행 <국민계정>, Ecos(ecos.bok.or.kr)

Ⅰ 연구개발비, GDP 대비 연구개발비(1963-2013)

(단위: 억 원, %)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연구개발비	12	105	2,117	32,105	138,485	438,548	593,009
GDP 대비 연구개발비	0.23	0.38	0.54	1.62	2.18	3.47	4.15

특허출원수, 100만 명 당 특허출원율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통계연보>,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특허출원수, 100만 명 당 특허출원율

(단위: 건)

	1948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특허출원수	169	611	1,846	5,070	25,820	102,010	170,101	204,589
100만명 당 특허출원율				33	212	1,549	2,668	3,186

2012년 주요국 GDP 대비 연구개발비

(단위: %)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한국
GDP 대비 연구개발비	2.8	1.6	3.4	2.9	4.0

출처: OECD.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제공.

2013년 주요국 GDP 대비 총자본형성

(단위: %)

국	가	2013년
중	국	47.68
독	일	18.99
영	국	17.06
일	본	21.13
한	국	29.10
미	국	19.35

출처: 세계은행. (data.worldbank.org/indicator/NE.GDI.TOTL.ZS) "Gross Capital Formation (% of GDP)"

2) 금융

(1) 금융규모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금을 중개하는 금융시장의 규모도 확장됐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은행, 적금,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하는 신용자산을 모두 합한 금융자산의 규모는 1962년 0.4조 원, GDP의 1.1배이던 데서 2014년에는 1경 3,587조 원, GDP의 9.1배로 증가했다. 금융부채의 규모도 1962년 0.4조 원에서 2014년 1경 3,582조 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금융부채 중 가계부채(비영리단체 포함)는 1,295조 원이었다. 예금은행의 총예금은 1962년에서 2014년 사이 391억 원에서 1,080조 5,433억 원으로, 총대출은 같은 기간 432억 원에서 1,250조 1,033억 원으로 증가했다. 상장주식 시가총액("주식시장" 항목 참조)은 1963년 100억 원에 불과하던 데서 2014년에는 1,192조 원으로 증가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의 금융 거래는 은행 중심이었다. 1950년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1954년과 1956년에는 산업은행과 농업은행이 설립됐으며 1960년대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개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외환은

행 등의 특수 은행이 설립됐다.¹¹⁾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금융기관은 종류와 수가 크게 확장됐다. 1972년 8월 3일에 사채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8.3 긴급조치가 시행된 뒤, 사금융의 제도금융화를 위해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이 제정되면서 1970년대에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등장했다. 또한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직접 조달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1972년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고 1974년 증권투자신탁 전문회사인 한국투자신탁이 설립됐다.¹²⁾ 1980년대 초에는 시중은행이 민영화되고 금융 산업 진입 제한이 완화돼 1982-1983년 사이 시중은행 2개, 투자금융회사 12개, 상호신용금고 58개 등이 새로 생겼다.¹³⁾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부실 금융기관이 퇴출되면서 1997년 말 33개이던 은행은 2005년 말에 19개로, 30개이던 종합금융회사는 2개로 줄어드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행해졌다. 1997년 말 2,072개이던 전체 금융기관 수는 2010년 말 1,263개로 줄었다.¹⁴⁾

■ 금융자산규모(1962-2014)

(단위: 조원, 배, 십억원)

	1962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금융자산규모	0.4	7.2	113.7	770.4	3,592.5	10,328.5	13,587.1
GDP 대비 금융자산규모	1.1	2.6	2.9	3.9	5.7	8.2	9.1
예금은행 총예금(말잔)	39.1	789.7	12,421.9	84,054.1	404,660.9	873,890.6	1,080,543.3
예금은행 총대출금(말잔)	43.2	722.4	12,204.4	74,028.6	310,804.1	987,148.1	1,250,103.3

출처: 금융자산, 금융부채: 한국은행 <자금순환>, ECOS(ecos.bok.or.kr).

1962-1968년: 1953 SNA년, 1969-2001년: 1968 SNA, 2002-2010년: 1993 SNA, 2011-2014년: 2008 SNA 기준.

예금은행 총예금, 총대출금: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78

11)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p. 19.

12)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p. 20.

13)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p. 20, 21.

14) 한국은행, 「한국의 금융제도」, 2011, p. 23, 26.

(2) 금리

한국 금융기관의 예금 및 대출 금리는 1980년대 말까지 대부분 당국의 규제를 받았으나 1991년부터 4단계에 걸쳐 금리자유화가 이뤄지면서 금리의 가격 기능이 강화됐다.

예금은행의 최고 예금 금리는 금리현실화 조치가 시행된 1965-1967년의 26.4%였다. 예금은행의 최고 대출 금리는 1966-1967년의 26.0%였다. 1965년 9월 30일 단행된 금리현실화는 금융기관 예금 최고이자율을 연30%(월2.5%), 대출 최고이자율을 연 26%로 일거에 인상한 것으로, 이에 따라 예금 금리는 1964년 15%에서 1965년 26.4%로, 대출 금리는 1964년 16%에서 1965년 23%, 1966년에는 26%로 올랐다. 이러한 금리현실화 조치로 1965-1967년에는 예금 금리가 대출 금리보다 높은 역금리 체제가 형성되었는데, 시중 자금을 제도 금융권으로 흡수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이 역마진을 오래 지속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1972년 8.3 긴급조치 때 금리는 다시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예금 금리는 1971년 20.4%이던 데서 1972년 12%로 낮아졌고 대출 금리는 1971년 22%이던 데서 1972년 15.5%로 낮아졌다.

2014년 예금은행 예금 금리는 연 2.43%로 194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예금 금리는 1980년대 초 10% 밑으로 내려갔다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13.3%까지 오른 후 점차 낮아져 2014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대출 금리 역시 2014년에 연 4.26%로 1950년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장기 금융시장 금리는 일반적으로 만기 1년 이상인 채권의 유통수익률을 말한다. 회사채 AA-등급 3년물, 국고채 3년물, 5년물 등의 금리가 주요 지표로 쓰인다. 2014년 회사채(AA- 등급, 3년물) 수익률도 연2.983%로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75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5년물)도 2000년말 6.91%에서 2012년말 2.97%까지 하락했다. 다른 나라들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국고채 5년물 금리는 2012년 말 기준 1% 이하였다.

주요금리

(단위: %)

	1945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시중은행 예금금리	3.4	3.8	10	22.8	18.6	10	7.01	3.19	2.43
시중은행 대출금리	6.6	14.6	17.5	24	20	10.0~12.5	8.55	5.51	4.26
회사채AA-3년만기 금리					30.7	16.48	9.35	4.66	2.98

출처: 예금은행 예금금리, 대출금리: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79
 예금금리: 1949년 이전은 시중은행의 6개월 이상 정기예금금리(연말), 1950~1995년은 1년 이상 정기 예금금리(연말), 1996년 이후는 연중 은행 가중평균예금금리(저축성수신)
 대출금리: 1995년 이전은 시중은행의 1년 이내 일반 대출금리, 1996년 이후는 연중 은행가중평균대출금리(당좌대출 제외, 2001년 9월부터는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제외)
 회사채 AA-2년만기 금리: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79
 연중평균, 장외거래수익률(3년물)로서 1993년 6월까지의 거래채권의 거래량 가중평균수익률.

주요국 국고채 5년물 금리

(단위: %)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미국 재무부증권	4.98	4.35	4.69	3.44	1.55	2.68	2.01	0.83	0.72	1.74	1.65
일본 정부채	0.96	0.86	1.25	1.02	0.69	0.47	0.41	0.35	0.19	0.25	0.03
영국 정부채	5.17	4.17	5.06	4.41	2.43	2.80	2.20	1.05	0.86	1.86	1.16
독일 정부채	4.51	3.07	3.92	4.12	2.32	2.42	1.84	0.76	0.30	0.92	0.02

출처: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연말 기준.

(3) 주식시장

1956년 3월 3일 대한증권거래소가 설립돼 조흥은행 등 12개 기업이 최초로 상장됐다. 그러나 거래는 미미했고 상장기업 수는 1970년까지도 50개가 채 되지 않았다. 시가총액 역시 1970년까지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했다. 1970년대에 기업공개촉진법이 제정되고 기업 공개가 늘면서 상장기업 수는 1978년 356개로 늘었고 시가총액도 1978년 말 약 3조원으로 늘었다.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이 급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 3저 호황을 탄 활황기였다. 1985년 9월부터 1989년 3월까지 3년 6개월 간 증시 사상 가장 긴 상승세가 이어졌고 1989년 4월 1일에는 주가 지수가 최초로 1,000포인트를 돌파했다. 1985년 342개이던 상장기업수도 1990년 말에는 669개가 되었으며 일반인 투자 역시 활발해졌다. 하지만 1989년 4월 3일 장중 최고점 1,015.75를 찍은 코스피 지수는 1990년 9월 18일에 559.98(장중 최저)로 내려앉았으며, 1994년 11월 9일에 다시 1,145.66(장중 최고)까지 올랐던 주가지

수는 외환위기인 1997년 12월 13일에 338.94(장중 최저), 1998년 6월 16일에는 277.37(장중 최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2014년 상장회사수는 773개, 시가총액은 1,192조 2,529억 원, 거래대금은 976조 원이었으며, 2014년말 주가지수는 1,915.59였다. 1992년부터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 직접 주식투자가 허용되었으며 2014년 현재 외국인은 한국 증시 시가총액 중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1987년 4월 주식 장외시장이 개장됐으며 1996년 7월 1일 코스닥 시장으로 발전했다. 코스닥 지수는 외환위기, 벤처 거품, 세계 금융위기 등을 반영해 등락을 거듭했다. 1996년 말 1,204.70이었던 코스닥 지수는 1998년말 751.80으로 떨어졌다가 벤처 열풍이 불면서 2000년 3월 10일에는 최고치인 2,834.40(장중 최고점은 2925.50)을 기록했다. 그러나 벤처 거품이 사라지면서 2000년 말 525.80으로 떨어졌다. 2007년 말 700대로 올라갔던 코스닥 지수는 2008년 말 금융 위기로 330선으로 떨어졌다. 2014년 말 코스닥 지수는 543이었다.

1996년에 331개이던 코스닥 기업은 2014년 1,061개로 늘었으며, 2014년 코스닥 시가총액은 143조 880억 원, 거래대금은 482조 7,310억 원이었다.

코스피

(단위: 사, 천주, 백만원, 1980.1.4.=100)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상장회사 수	15	48	352	669	704	777	773
상장주식 수	32,000	159,000	3,875,642	4,796,327	19,638,668	33,706,255	36,142,637
시가총액	10,000	97,900	2,526,553	79,019,676	188,041,490	1,141,885,458	1,192,252,867
거래량		79,200	1,645,337	3,162,093	73,785,337	95,595,708	68,130,089
거래대금	26,000	42,900	1,134,019	53,454,517	627,132,939	1,410,561,813	975,977,127
주가지수(연말)			106.87	696.11	504.62	2,051.00	1,915.59

출처: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81, 통계청(1998)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경제사회상 변화> p.130.

코스닥

(단위: 사, 십억원, 1996.7.1.=1000)

	1996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상장회사 수	331	604	918	1,029	1,031	1,005	1,009	1,061
시가총액	7,606	29,016	70,898	97,972	105,994	109,122	119,293	143,088
거래대금	535	578,490	446,378	483,091	558,007	528,028	450,369	482,731
코스닥 지수(연말)	1,204.70	525.80	701.79	510.69	500.18	496.32	499.99	542.97

출처: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3. 고용과 노동

1) 고용

(1) 고용

1963년에서 2014년 사이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 1,455만 1,000명에서 2014년 4,251만 2,800명으로 약 2.9배, 경제활동인구는 같은 기간 823만 명에서 2,643만 3,100명으로 약 3.2배 증가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1963년 56.6%(남성 78.4%, 여성 37%)에서 2014년에는 62.2%(남성 73.7%, 여성 51.1%)로 증가했다.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37%에 불과하던 데서 1973년에 40%에 접어들었고 2014년에는 51.1%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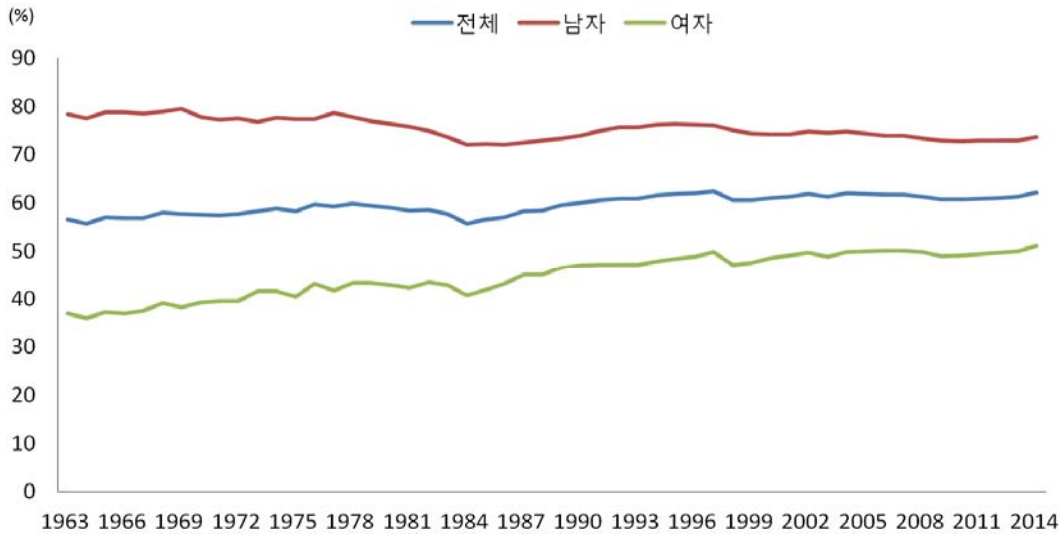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인 실업률은 1963년 8.1%에 달했으나 1969년 이후 4%대 전후에서 유지되었다. 그러나 2차 석유 파동이 있었던 1980년에는 5%대의 실업률을 보였고,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1998년에는 실업률이 7%, 1999년에는 6.3%였다. 2014년 실업률은 3.2%이다.

1970년대 초 남성 실업률은 5% 전후, 여성 실업률은 2.5% 전후로 남성 실업률이 여성의 두 배였다. 이 격차는 점차 줄어 2014년 남녀 실업률은 각각 3.2%, 3.0%이다. 과거에 여성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적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인 고용률은 1963년 52%에서 2014년 60.2%로 증가했다. 남성은 1963년 71.6%에서 2014년 71.4%로 큰 변동이 없었지만 여성은 1963년 34.3%에서 2014년 49.5%로 크게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15-19세가 1980년 26.6%에서 2014년 7.7%로 감소한 반면, 55-59세는 61.1%에서 70.8%로, 60세 이상은 28.1%에서 39.0%로 증가했다. 이는 평균 수명의 증가 등으로 노동 연령대가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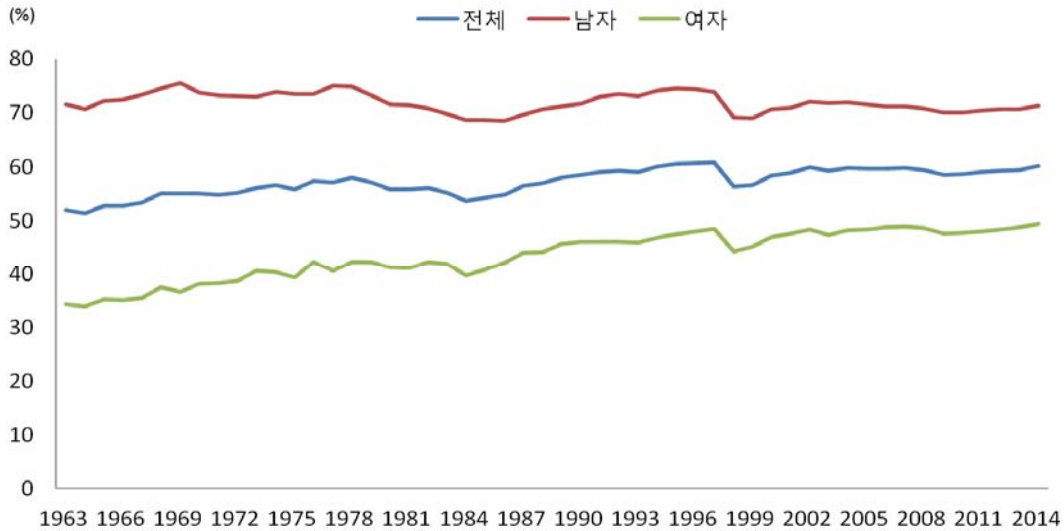
2013년 주요국 고용률은 15세에서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보았을 때 한국 64.4%, 그리스 49.3%, 스페인 54.8%, 프랑스 64.1%, 미국 67.4%, 일본 71.7%, 영국 70.8%, 독일 73.3% 등이었다.

경제활동참가율(1963-201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 1주일 기준.

고용률(1963-201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생산가능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기준. 경제활동인구는 구직활동 1주일 기준.

경제활동참가율 · 고용률(1963-2014)

(단위: %)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전체 경제활동참가율	56.6	57.6	59	60	61	60.8	62.2
남성 경제활동참가율	78.4	77.9	76.4	74	74.2	72.8	73.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37	39.3	42.8	47	48.6	49.2	51.1
전체 고용률	52	55.1	55.9	58.6	58.5	58.7	60.2
남성 고용률	71.6	73.8	71.7	71.8	70.7	70.1	71.4
여성 고용률	34.3	38.2	41.3	46.2	47	47.8	49.5

연령별 고용률

(단위: %)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15 - 19세	26.6	13.2	10.3	6.1	6.8	7.0	6.9	7.7
20 - 24세	56.6	58.9	52.0	44.3	43.5	44.5	43.2	44.8
25 - 29세	59.6	64.7	66.1	68.2	69.7	69.2	68.8	69.1
30 - 34세	67.3	72.6	69.7	70.6	71.0	72.2	72.9	74.1
35 - 39세	72.9	76.7	75.3	73.2	73.3	73.2	73.5	73.7
40 - 44세	74.6	77.3	76.7	78.0	78.4	77.7	77.5	78.0
45 - 49세	73.2	78.4	76.1	77.7	78.4	79.0	79.5	80.2
50 - 54세	69.1	74.5	70.2	74.2	74.7	75.4	76.3	77.2
55 - 59세	61.1	68.0	62.2	66.5	67.4	68.1	69.2	70.8
60세이상	28.1	35.5	37.7	36.0	36.5	37.5	38.4	39.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성별 실업률

(단위: %)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8.1	4.4	5.2	2.4	4.1	3.4	3.0	2.8	2.8	3.2
남성	8.6	5.3	6.2	2.9	4.7	3.7	3.3	3.0	3.0	3.2
여성	7.1	2.8	3.5	1.8	3.3	2.9	2.7	2.6	2.5	3.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주요국 고용률(2013)

(단위: %)

	한국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고용률	64.4	49.3	54.8	64.1	67.4	71.7	70.8	73.3

출처: OECD,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생산가능인구는 15-64세 기준임.

(2) 취업자 구성

1963년 이래로 취업자 중 남성의 비중은 줄고 여성의 비중은 늘었다. 1963년 취업자 756만 3,000명 중 남성이 493만 명으로 65.2%, 여성이 263만 3,000명으로 34.8%였던 것에 비해, 2014년 취업자 2,559만 9,400명 중 남성은 1,483만 8,700명으로 58%, 여성은 1,076만 700명으로 42%였다. 여성이 전체 취업자의 40%를 넘은 것은 1987년부터이다. 그러나 여전히 취업자 중 남성 대 여성의 비율은 약 6대 4로 남성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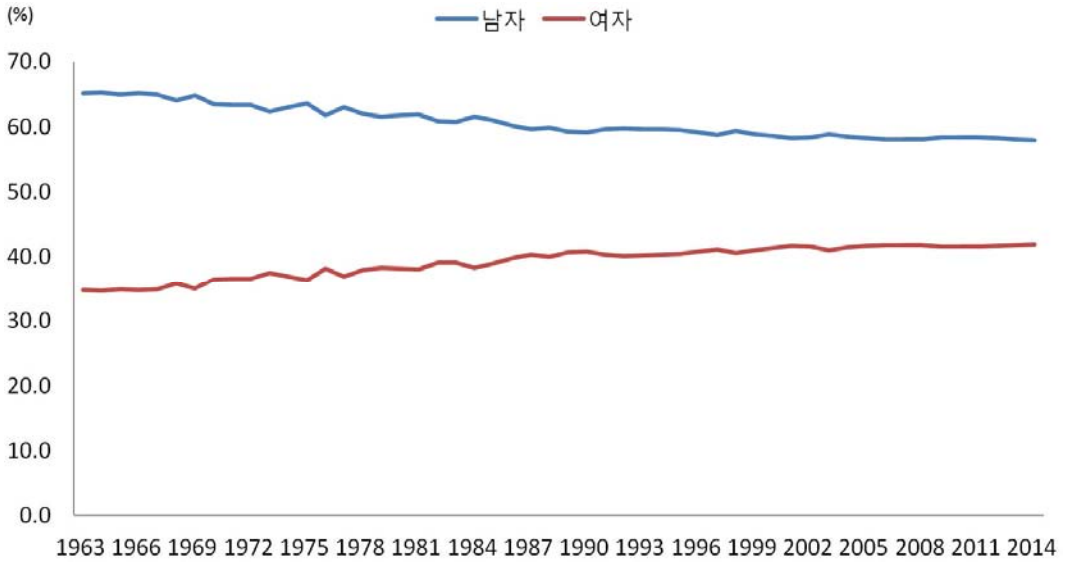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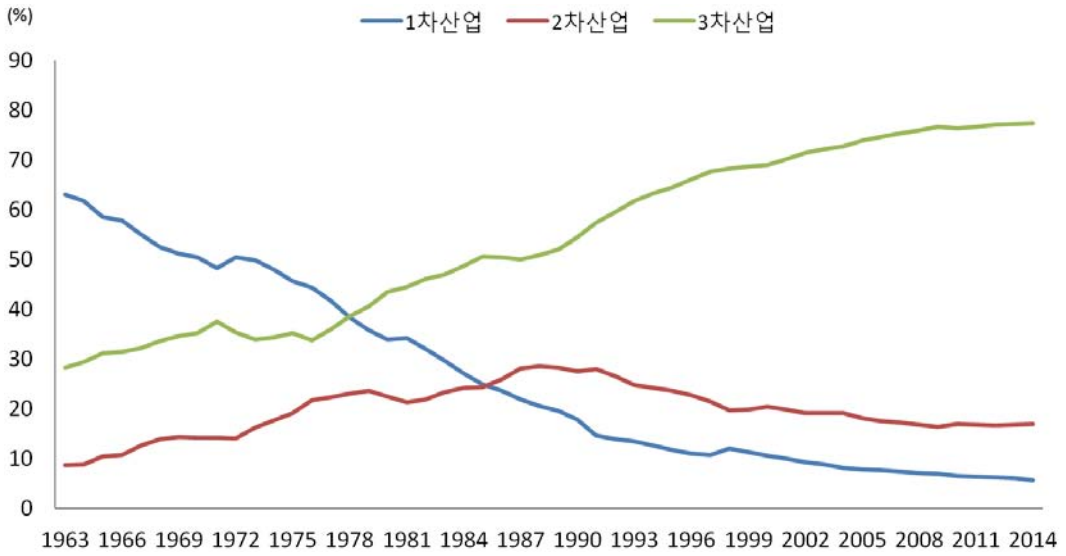
취업자의 산업 구성은 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 1963년에는 1차 산업에 취업한 사람이 63.0%, 2차 산업이 8.7%, 3차 산업이 28.3%였지만, 2004년에는 각각 8.1%, 19.1%, 72.8%, 2014년은 각각 5.7%, 17%, 77.4%로 바뀌었다. 1978년에는 1차 산업과 3차 산업 간에, 1985년에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 간에 취업자 수의 역전이 일어났다.

2014년에는 여성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이 82.3%이고 제조업은 12%인 것에 비해, 남성 취업자 중 서비스업 취업자 비중은 73.8%, 제조업은 20.5%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여성이 많이 취업해 있다. 반면 1963년에는 여성 취업자 중 1차 산업 취업자 비중이 68.7%이고 서비스업이 24.4%인 것에 비해, 남성 취업자 중 1차 산업 취업자 비중은 59.9%이고 서비스업 비중은 30.5%로,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에 남성이, 1차 산업에 여성이 많이 취업해 있었다.

취업자 중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1963년 68.5%에서 2014년 26.8%로 크게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비중의 감소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급격한 감소와 임금근로자의 증가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다. 하지만 2012년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8.2%로, 스페인 17.4%, 영국 14.6%, 일본 11.8%, 미국 6.8%, 독일 11.6%보다 높은 편이다.

1963년에는 여성 취업자 중 78.2%, 남성 취업자 중 63.3%가 비임금근로자로 여성 비임금근로자가 많았으나 2014년에는 여성의 24.6%, 남성의 28.4%가 비임금근로자로 남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여성보다 많아졌다. 과거에는 무급가족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어서 비임금근로자의 비율도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으나 2003년을 기점으로 이 비율은 남녀 간에 역전되었다.

취업자 산업구성, 취업자 남녀 비중(1964-2014)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Ⅰ 취업자 산업구성, 취업자 남녀 비중(1964-2014)

(단위: 천명, %)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전체 취업자 수	7,563	9,617	13,683	18,085	21,156	23,829	25,599
남성 취업자 수	4,930	6,104	8,462	10,709	12,387	13,915	14,839
여성 취업자 수	2,633	3,513	5,222	7,376	8,769	9,914	10,761
남성 취업자 비중	65.2	63.5	61.8	59.2	58.6	58.4	58.0
여성 취업자 비중	34.8	36.5	38.2	40.8	41.4	41.6	42.0
취업자 산업구성 (1차)	63	50.4	34	17.9	10.6	6.6	5.7
취업자 산업구성 (2차)	8.7	14.3	22.5	27.6	20.4	17	17
취업자 산업구성 (3차)	28.3	35.3	43.5	54.5	69	76.4	7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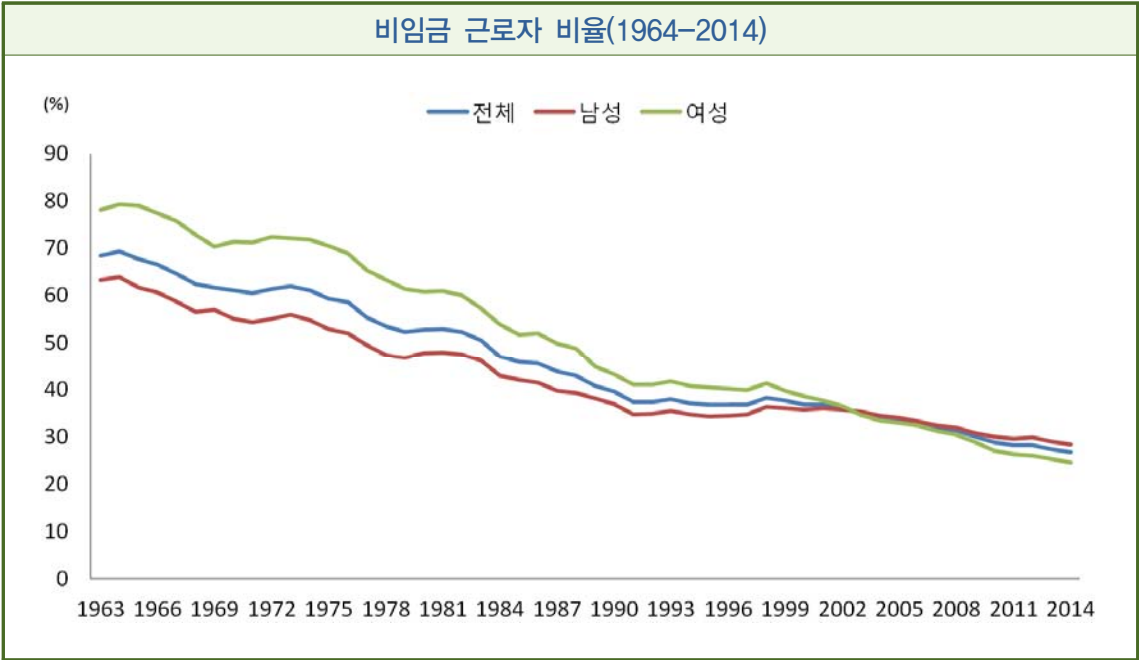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Ⅰ 성별 취업자 산업구성(1964-2014)

(단위: %)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남성							
1차산업	59.9	46.4	31.0	16.3	9.5	6.4	5.6
2차산업	9.6	15.5	22.6	27.2	22.4	20.2	20.5
3차산업	30.5	38.0	46.4	56.6	68.2	73.4	73.8
여성							
1차산업	68.7	57.3	39.0	20.3	12.2	6.9	5.7
2차산업	6.9	12.2	22.3	28.2	17.5	12.5	12.0
3차산업	24.4	30.6	38.7	51.5	70.3	80.6	82.3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 비임금 근로자 비율(1964-2014)

(단위: %)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전체	68.5	61.1	52.8	39.5	36.8	28.8	26.8
남성	63.3	55.1	47.8	36.9	35.7	30	28.4
여성	78.2	71.4	60.8	43.2	38.5	27.1	24.6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임.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을 포함.

2) 노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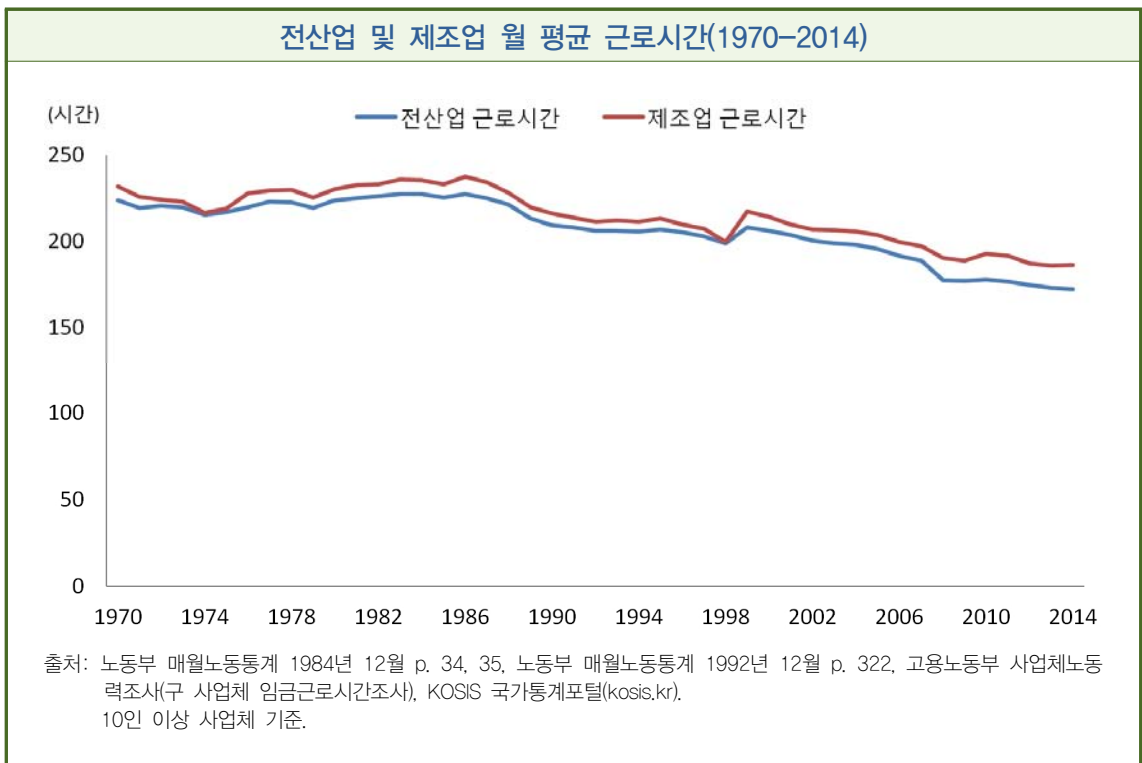
(1) 근로시간

1970년(농업, 수협업, 임업, 및 어업 부문을 제외한) 전산업에서의 월 평균 근로일수는 25.2일, 제조업은 25.5일이었다. 월 평균 근로일수는 큰 변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되다가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주40시간 근로제)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줄어들어 2008년 20.7일까지 떨어졌고 이후 20일 수준에서 머물고 있다. 2014년 현재 전산업 월 평균 근로일수는 20.4일이다.

월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1970년 전산업에서는 224.2시간, 제조업에서는 232시간이었다. 근로시간은 1980년대 초반 동안 증가하여 1986년 전산업 227.8시간, 제조업 237.7시간으로 정점을 찍었다. 월 평균 근로시간은 1987년 이후 노동자 운동을 거치면서 급속하게 감소하여 1993년 206.4시간과 212.2시간으로까지 각각 떨어졌다. 이후 주5일제 근무가 시작되면서 다시 감소하여 2014년 현재 전산업과 제조업 월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72.4시간과 186.7시간이다.

그러나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2013년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독일 임금근로자의 1,312.9시간, 프랑스 1,400.8시간, 영국 1,659시간, 그리스 1,729시간, 일본 1,746시간, 미국 1,795.5시간 등보다 길었다.

성별에 따른 취업자의 주간 노동시간의 경우 1980년 남성 55시간, 여성 52.2시간으로 격차는 2.8시간이었다. 반면 2014년은 남성 46.2시간, 여성 40.6시간으로 양성 간 격차가 5.6시간으로 커졌다. 이는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정규직보다 계약제, 시간제 일자리의 비중이 더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 산업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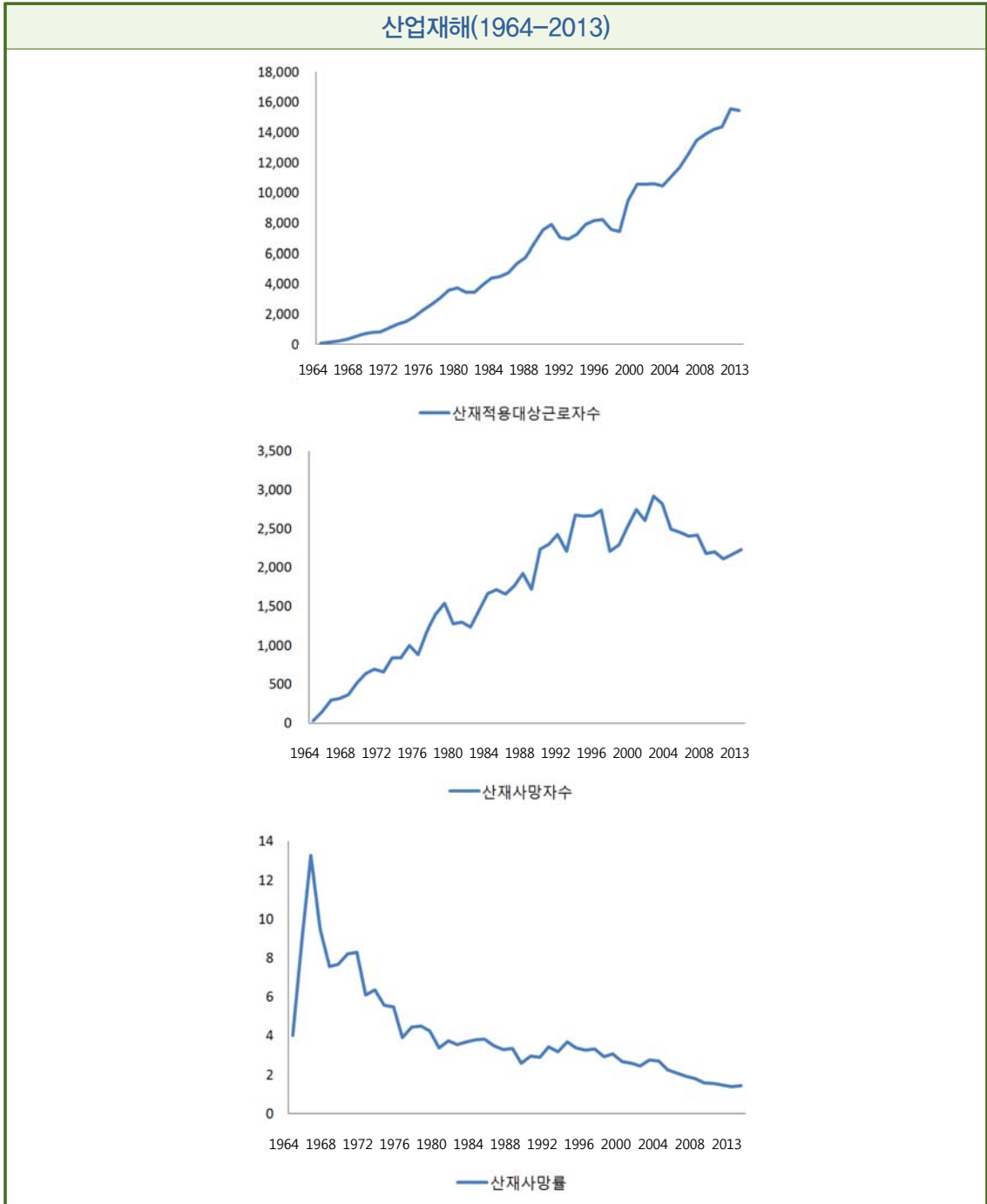
산재 적용 노동자 중 재해 노동자 비율인 산업재해율은 1965년에 5.91%에서 1986년부터는 2%대, 1990년부터는 1%대로 떨어졌고, 1995년부터는 1% 미만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1965년 9,470명이었던 산업재해자 수는 1975년 8만 570명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고 1977년부터 1992년까지 재해자수는 매년 10만 명을 상회했다. 2013년 재해율은 0.59%, 재해자 수는 9만 1,824명이다.

1만 명당 산재사망률은 1964년 4.03명, 1965년 8.99명, 1966년 13.26명 등 1975년까지 5명을 넘다가 차차 감소해 2000년 2.67명으로 2명대로 낮아졌으며 2013년에는 1.45명이 되었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높은 수치이며 1990년 이후 산재 사망자 수는 매년 2,000명이 넘는다.

산재보험법은 1963년 제정되어 1964년 7월부터 시행됐다.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에 사업주가 재해 보상을 할 것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사업주의 지불 능력이 부족하면 보상이 이뤄질 수 없었다.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재해가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보상의 실효성을 높였다. 시행 첫 해인 1964년에는 광업과 제조업의 노동자 500인 이상의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었으며¹⁵⁾, 당시 적용 대상 노동자는 약 8

15) 김상호, 배준호, 윤조덕, 박종희, 원종욱, 이정우 (2014), 『산재 보험의 진화와 미래』, 21세기 북스, pp. 64, 65, 68, 71

만 2,000명이었다. 이후 적용 대상은 차츰 확대되어 2013년 말 적용 대상 노동자는 1,545만 명으로 총 취업자 2,500만 명의 약 62%이다.



산업재해(1964-2013)

(단위: 천명, 명, 근로자 1만명 당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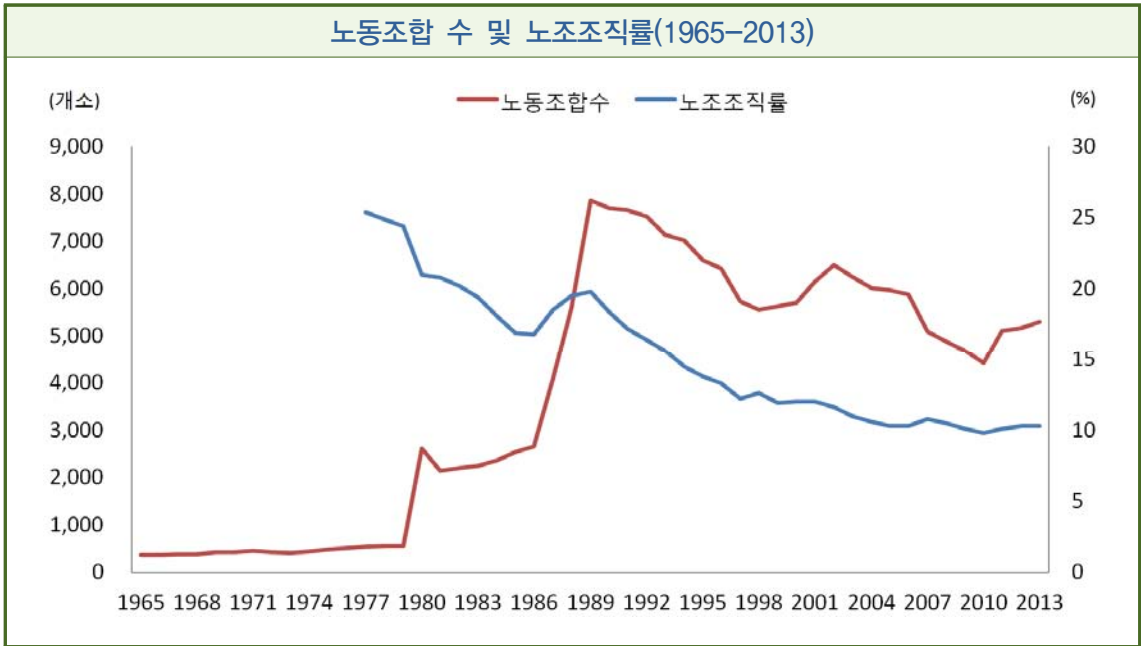
	1964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산재적용대상근로자(천명)	82	779	3,753	7,543	9,486	14,199	15,449
산재사망자(명)	33	639	1,273	2,236	2,528	2,200	2,233
산재사망률(근로자 1만명 당 명)	4.03	8.2	3.39	2.96	2.67	1.55	1.45
산업재해자(명)	1,489	37,752	113,375	132,893	68,976	98,645	91,824
산업재해율(%)	1.82	4.85	3.02	1.76	0.73	0.69	0.59

출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 국가주요지표(www.index.go.kr).

(3) 노동조합

1965년에 노동조합은 362개소에 조합원이 30만 1,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청계천 평화시장 재단사이던 전태일이 1970년 11월 13일 유명무실한 근로기준법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분신을 함으로써 노동운동에 전기가 마련됐다. 노동조합수는 1970년대에 느리게 증가해 1979년에도 553개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 급증하여 2,618개로 늘어났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에 이은 노동자 대투쟁으로 노조 결성이 늘고 노조 설립 제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노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조합수는 1986년 2,658개에서 1987년 4,086개, 1988년 5,598개, 1989년 7,861개로 증가하여 최대치를 기록했다. 노동조합수는 이후 감소해 2013년에는 5,305개이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은 1977년에는 25.4%, 1980년대에도 20%에 근접했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3%로 떨어졌다. 노조조직률은 근로자들이 고용주와의 협상에서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노사 간에 맺은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가 조합원을 넘어서도록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단체협약 적용률이 노조조직률보다 높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단체협약의 효력범위가 조직률 범위와 거의 일치한다. 2010년 한국의 단체협약적용률은 10%로, 미국 13%, 일본 16%, 캐나다 28.8%, 영국 31.2%, 호주 45%, 독일 61%, 핀란드 89.5%, 스웨덴 91%, 프랑스 92%에 비해 낮은 편이다.



▣ 노동조합 수 및 노조조직률(1965-2013)

(단위: %, 개소, 천명)

	1965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노조조직률	-	-	21	18.4	12	9.8	10.3
노동조합수	362	419	2,618	7,698	5,698	4,420	5,305
조합원	301	473	948	1,887	1,527	1,643	1,848
조직대상근로자	-	-	4,516	10,264	12,701	16,804	17,981

출처: 고용노동부 <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e나라지표(www.index.go.kr)

4. 소득과 소비

1) 소득

(1) 임금

1957년 2,030원에 불과했던 제조업 부문(10인 이상 사업장 상용 근로자 기준)의 월평균 명목 임금은 1969년 1만원을, 1979년 10만원을, 1994년에는 100만원을 넘어 2014년 현재 366만 273원까지 약 1,800배 증가했다. 제조업 부문을 포함한 전 산업에서의 월평균 명

목 임금도 1970년 1만 7,831원에서 2014년 340만 554원으로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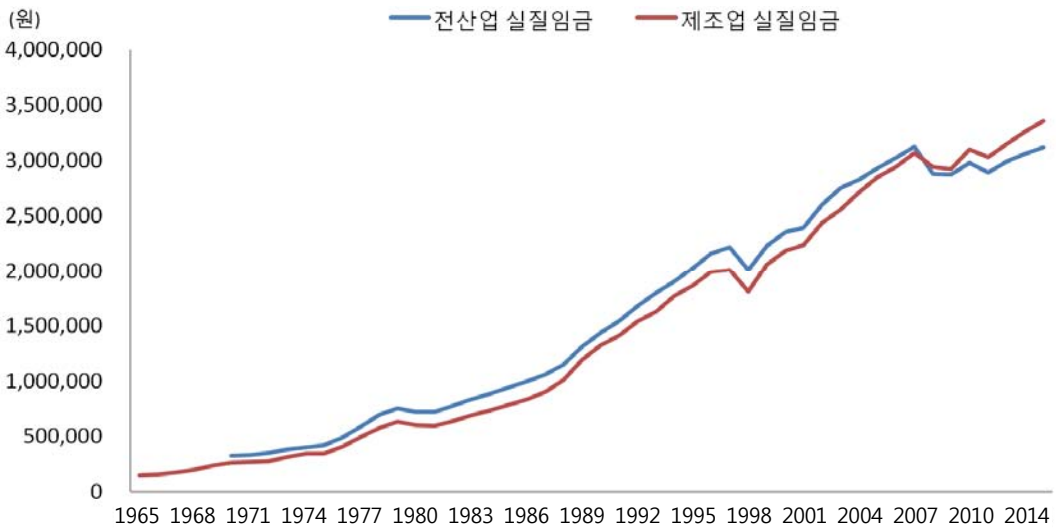
물가상승을 고려함으로써(2010년 소비자 물가 기준) 임금의 실질적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임금은 제조업의 경우 1970년 26만 5,670원에서 2014년 335만 6,817원에, 전체 산업의 경우 1970년 33만 1,247원에서 2014년 311만 8,630원에 이르렀다.

1980년대 후반 3저 호황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 등을 통해 점차 증가하던 실질임금은 1997년 외환위기로 잠시 급락하였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다시 상승세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로 세계 경제위기가 겹치며 상승세가 둔화되었다.

대출 대비 고졸 근로자의 임금은 1971년 57.45%였으나 점차 하락하여 1976년 44.44%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근소하게만 증가하던 대출 대비 고졸 근로자 임금은 1987년 대규모의 노동자 운동을 겪은 후 급속하게 증가하여 1997년 68.68%에 달했으나, 이후에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2014년 64.98%이다.

1971년 45%였던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의 임금은 1987년 50%를 돌파하고 1996년 60%를 돌파하였지만,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2014년 여전히 67.01%에 불과하다.

전산업 및 제조업 실질임금(196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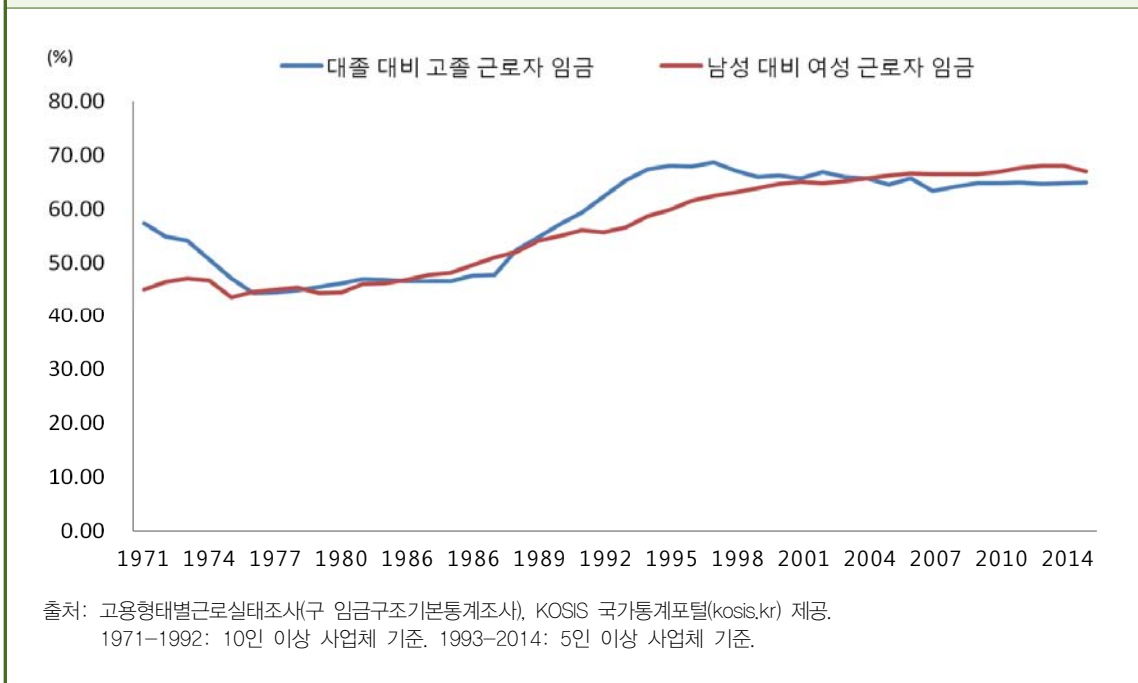
출처: 1969년 이전: 산업생산연보(경제기획원),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72.
 1970-1984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1984년 12월 p. 34, 35
 1985-1992년 노동부 매월노동통계 1992년 12월 p. 322
 1993년 이후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구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제공.
 10인 이상 사업체 기준. 2010년 기준 소비자 물가로 산정.

전산업 및 제조업 실질임금(1965-2014)

(단위: 원)

	1965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전산업	-	331,247	725,444	1,441,998	2,362,916	2,984,626	3,118,630
제조업	152,217	265,670	604,409	1,326,269	2,190,732	3,102,648	3,356,817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1971-2014)



학력별 성별 임금 격차(1971-2014)

(단위: %)

	1971	1980	1990	2000	2005	2010	2014
대졸 대비 고졸 근로자 임금	57.45	46.15	57.27	66.29	64.57	64.77	64.98
남성 대비 여성 근로자 임금	45.00	44.56	55.10	64.72	66.19	66.92	67.01

(2) 소득

국민계정상의 가계처분가능소득(PDI)은 가계와 다른 경제주체 간의 소득 이전을 반영한

것으로, 가계가 임의로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¹⁶⁾ 이를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개인의 삶의 질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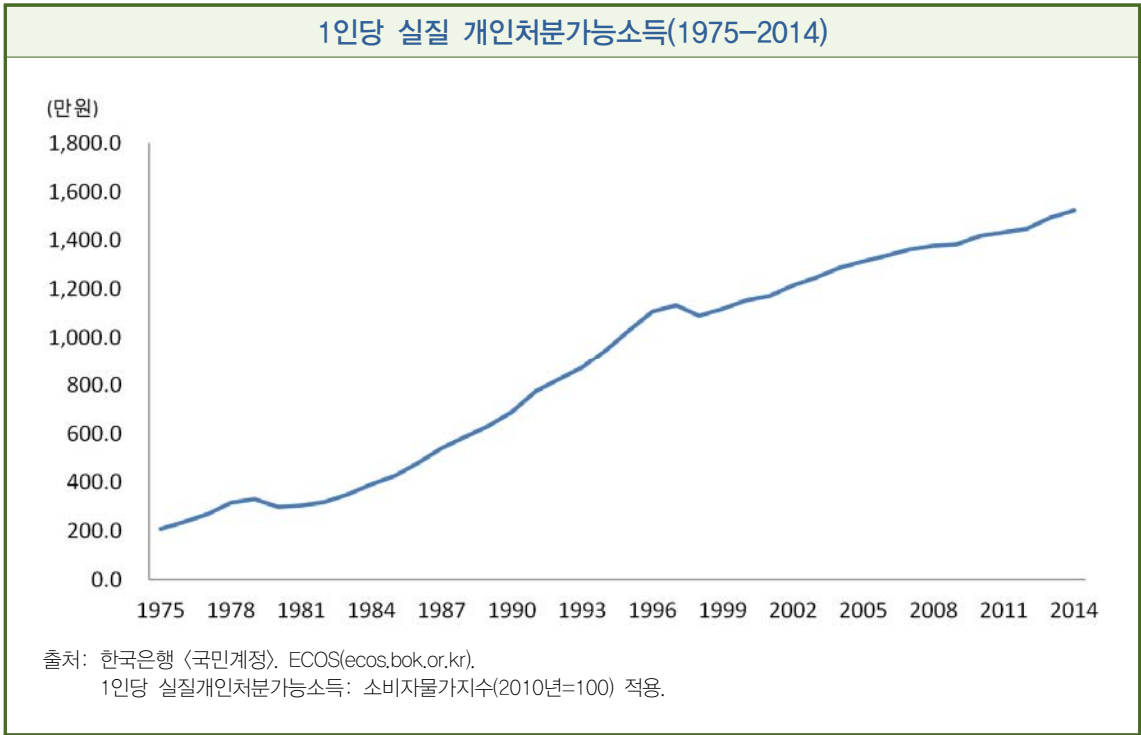
1975년 22만 9,000원이었던 1인당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은 1982년 101만원, 1994년 546만원, 2003년 1,011만원으로 증가하였고, 2014년 현재 1,663만원이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2010년 소비자 물가 기준)은 1975년 209만원에서 2014년 1,525만원으로 늘었다. 1975년부터 2014년까지 39년간 연평균 5.2%씩 증가한 것이다. 1975년부터 1996년까지는 연평균 8.3%씩 증가했으나 외환위기 등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둔화돼 1998년부터 2014년 사이에는 연평균 2.1%의 증가율을 보였다.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환산한 2013년 한국의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2만 1,402달러로 미국(4만 3,740달러)의 약 49%였다.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환산한 2013년 다른 나라의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은 호주 3만 4,843달러, 독일 3만 3,688달러, 일본 2만 8,005달러, 영국 2만 8,335달러 등이다.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63년 5,990원에서 2014년 473만원으로 증가했다. 2014년 도시 2인 이상 비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62만원으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73만원의 76.5%였다. 물가 상승을 감안한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소득은 (2010년 물가 기준) 1963년 29만원에 불과했으나 1983년 110만원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2014년 434만원으로 증가했다.

1990년 이후 소득불평등은 심화됐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2014년 0.308로 악화됐다. 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소득5분위배율도 1990년 3.93배에서 2014년 5.67배로 증가해 지난 24년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16) 한국은행(201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pp. 19, 20.



1인당 실질 개인처분가능소득(1975-2014)

(단위: 만원)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1인당 실질 개인처분 가능소득	208.8	298.7	426.8	689.7	1,028.1	1,154.1	1,313.5	1,418.8	1,524.8

구매력평가(PPP) 기준 각국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 (달러)

2013년	호주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달러	34,843	33,688	28,005	21,402	28,335	43,740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at a glance, (Gross household adjusted disposable income per capita, US dollars current prices and current PPP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NAAG>

(단위: 원)

	1963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도시2인이상 근로자 가구 월평균 가계소득(실질)	291,360	523,500	964,547	2,122,148	3,266,984	4,007,671	4,342,079

주: 1980년까지는 구분류, 1990년부터는 신분류.

소득불평등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지니계수	0,266	0,259	0,279	0,298	0,315	0,308
5분위배율(배)	3,93	3,85	4,40	5,17	6,02	5,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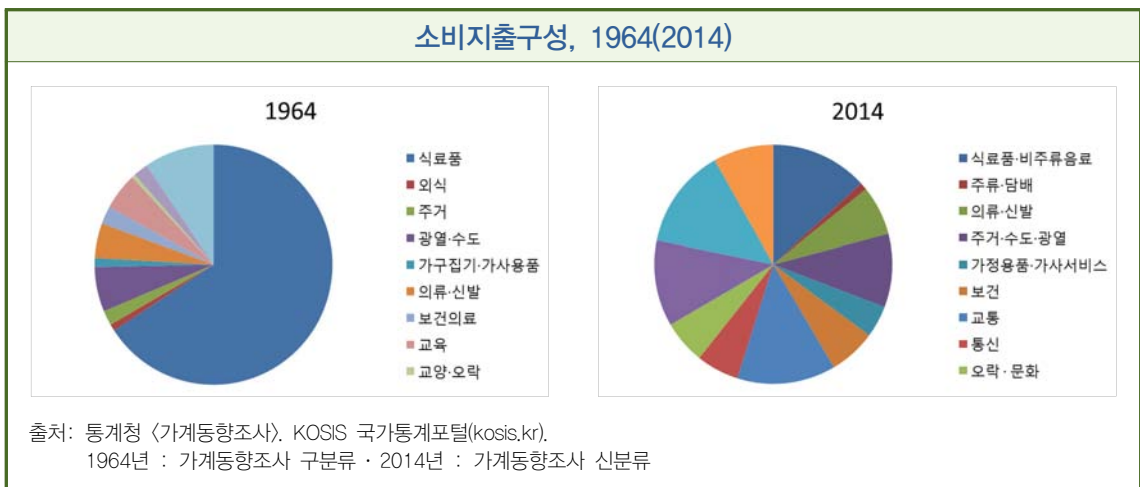
출처: 도시 2인 이상 가구. 세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KOSIS 국가통계포털(kosis.kr).

2) 소비

(1) 소비지출

도시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의 1963년 월평균 지출은 6,330원으로 소득 5,990원을 초과했다. 적자였던 가계수지는 1966년 흑자가 된 이래 지속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며 흑자 폭은 1978년 이후 20%선을 유지하고 있다.

1963년에는 소비지출 중 식료품이 61.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나 소비지출 중 식료품 비중은 점차 감소해 1968년 50% 이하로, 1993년 30% 이하로 떨어졌다. 외식비가 전체 소비지출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초반까지도 1%선이었던 것이 2014년에는 13%대로 증가했다.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4.8%에서 2008년 13%로 증가했다. 교육비 비중은 2009년 이후 다소 낮아지는 추세다. 2009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는 14.1%를 차지했으나, 2014년에는 11.6%이다. 자가용 승용차, 휴대전화, 인터넷 등의 보급으로 교통, 통신비 비중이 1963년 2.6%에서 2008년에는 17.4%, 2014년에는 19.2%로 늘었다.



Ⅰ 소비지출구성(1964, 2014)

(단위: %)

1964	식료품(외식 제외)	외식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가사용품	의류·신발
	65.7	0.9	2.0	6.0	1.2	4.7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2.4	5.0	0.5	2.0	9.5	
2014	식료품·비주류음료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	보건
	13.2	1.0	6.7	9.9	4.3	6.4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13.4	5.8	5.9	11.6	13.6	8.2

(2) 물가

2010년 물가를 100으로 놓았을 때 1945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0.00078에서 2014년 109.04로 약 13만 9,800배 상승했다. 1945년의 1만원의 가치가 2014년에는 약 14억 원에 달한다는 의미이다. 물가지수가 3.02였던 1965년에 비해서는 2014년까지 소비자 물가지수가 약 36배 상승하였다. 1965년에 1만원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품목을 2014년에 구입하려면 36만원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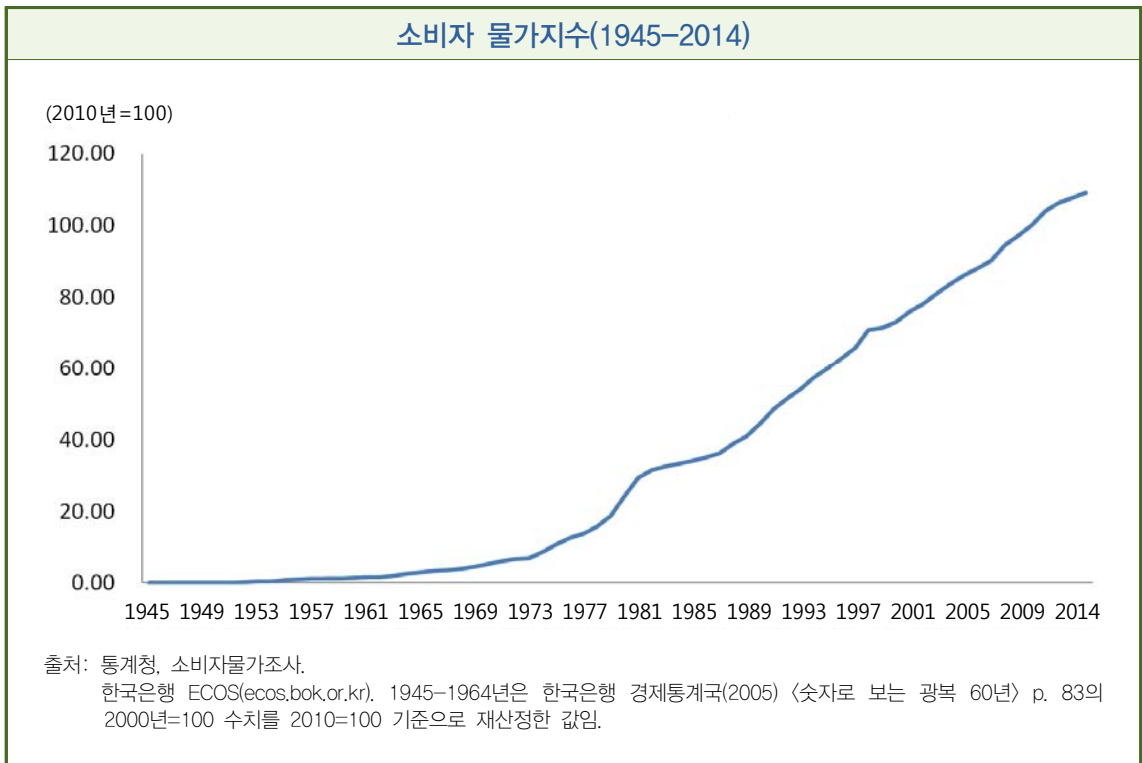
1945년부터 1952년까지 물가는 약 330배 급등하였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1946년 280.4%, 1947년 78.9%, 1948년 58.4%였고,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에는 390.5%에 달했다. 1953년에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바꾸면서 100대 1의 교환비율을 적용하는 화폐개혁이 시행되면서 물가가 많이 올라 1950년대 중반에도 물가는 안정되지 않았다. 1953년 물가상승률은 52.5%, 1954년 37.1%, 1955년 68.3%였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한 자리수로 떨어졌던 물가상승률은 1962년에 10환을 1원으로 교환하는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다시 급등하여 1963년 20.7%, 1964년 29.5%에 달했다.

1970년대 들어 10%선을 유지하던 물가상승률은 1차 석유 파동이던 1974년과 1975년에 각각 24.3%와 25.3%로, 2차 석유 파동이던 1980년과 1981년에는 각각 28.7%와 21.4%로 증가해 다시 20%대가 되었다. 1980년대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주요 정책 목표로 삼았다. 물가상승률을 연 10% 이내로 억제하는 것은 제5차 5개년계획(1982-1986년)의 최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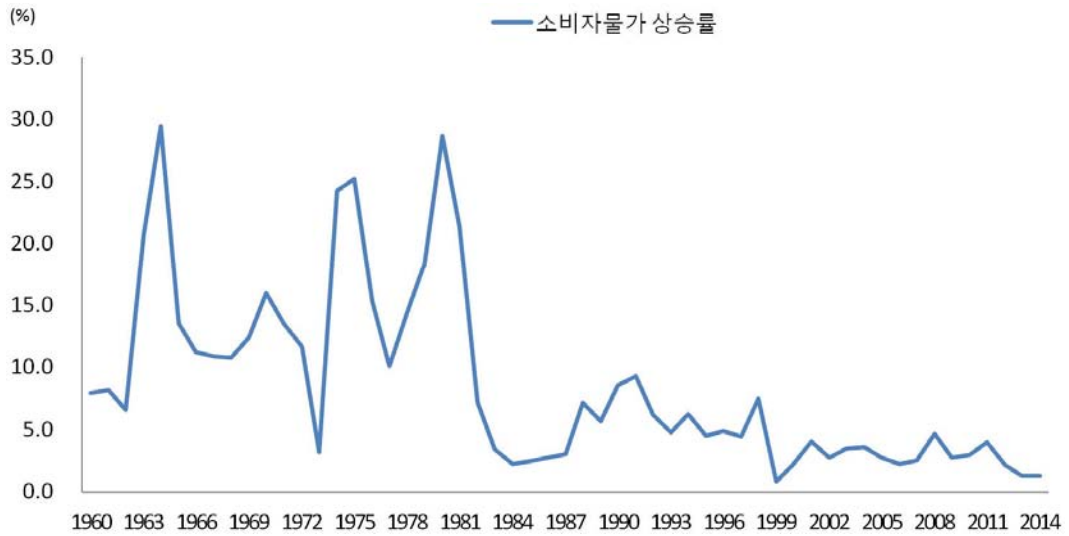
순위 목표였다. 물가는 1982년부터는 안정되어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해왔다. 2014년의 물가상승률은 1.3%이다.

지출 목적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도 통신 물가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대체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2014년에는 주류 및 담배, 통신, 교통이 전년 대비 물가가 하락하였다.

2013년 한국의 물가 수준을 기준으로 다른 나라의 물가를 보면, 한국보다 미국이 16%, 일본이 27%, 독일이 31%, 영국이 47%, 호주가 62% 물가가 높았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물가 수준은 낮은 편이다.



소비자 물가상승률(1960-2014)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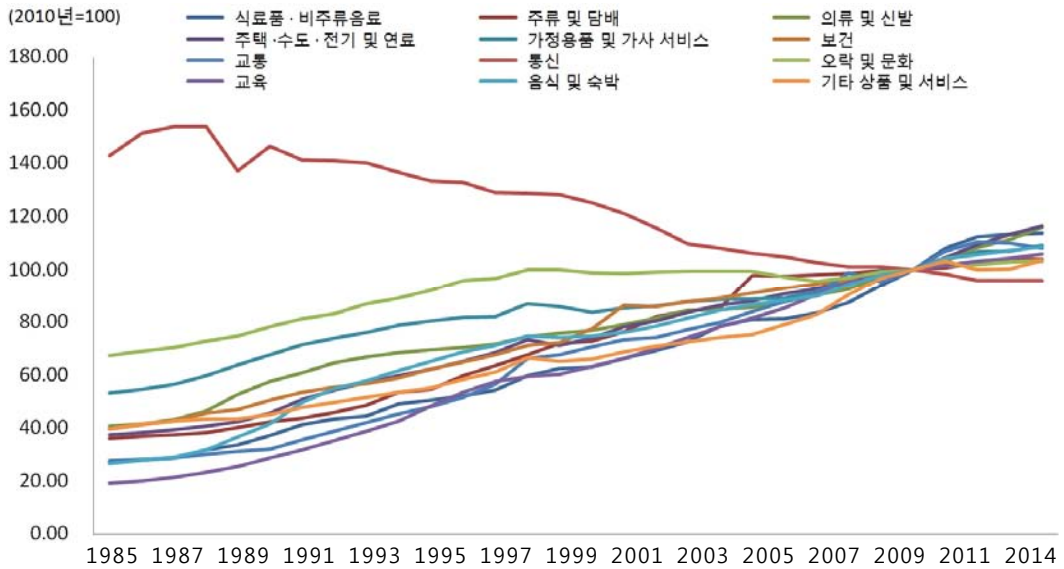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1945-1964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국(2005) <숫자로 보는 광복 60년> p. 83의 2000년=100 수치를 2010=100 기준으로 재산정한 값임.

■ 소비자 물가지수(1945-2014) · 소비자 물가상승률(1960-2014)

(단위: %)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소비자물가지수	0.03	1.48	5.38	24.27	44.54	73.10	100	109.04
소비자물가 상승률	167.5	8.0	16.0	28.7	8.6	2.3	3.0	1.3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1985-2014)



출처: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조사.
한국은행 ECOS(ecos.bok.or.kr).

품목별 소비자 물가지수(1985-2014)

(단위: 2010=10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식료품·비주류음료	27.25	37.01	50.58	62.89	80.78	100.00	113.72
주류 및 담배	35.97	42.21	54.66	72.61	97.76	100.00	103.92
의류 및 신발	40.59	57.64	69.53	76.79	85.52	100.00	115.90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37.32	45.61	62.09	73.74	88.05	100.00	116.4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53.27	67.64	80.24	83.61	88.90	100.00	109.25
보건	39.59	50.33	62.03	77.48	90.97	100.00	103.78
교통	27.64	31.87	48.01	70.61	83.82	100.00	108.10
통신	142.79	146.36	133.42	125.17	106.09	100.00	95.72
오락 및 문화	67.43	78.26	92.18	98.84	99.51	100.00	103.32
교육	19.27	28.75	48.14	63.32	81.43	100.00	105.92
음식 및 숙박	26.52	41.53	65.07	74.67	86.51	100.00	108.73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9.63	45.00	55.16	65.94	75.13	100.00	103.43

III. 사회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Ⅲ 사 회

1. 인구

1) 인구규모

(1) 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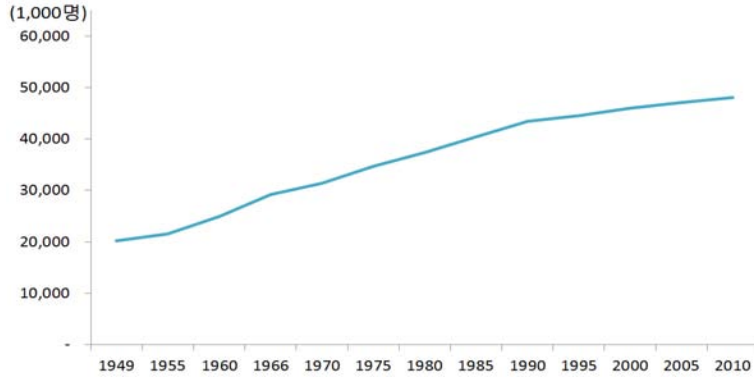
총인구의 규모는 국가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기초 자료로서 각종 경제 및 사회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조사인 인구총조사는 1925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후 대체로 5년 간격으로 2010년까지 18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인구총조사는 1944년까지는 남북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남북한이 분단된 이후인 1949년 인구총조사부터는 남한의 자료만이 가용하다. 1990년부터는 명칭이 인구주택총조사로 바뀌었다.

남한의 1949년 인구는 당시의 38선 이남을 기준으로 약 2,017만 명으로 추정되었으며, 지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한국의 총인구(내국인)는 약 4,799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UN의 인구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인구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26번째로 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3번째로 크다.

한국인구의 남녀 구성은 비교적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동안 남아선호 현상 때문에 남자가 여자보다 약간 많은 상태가 유지되어 왔으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남녀 인구가 각각 49.7%와 50.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령구성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전체 인구에 대한 유소년(0-14세) 인구의 비중이 1960년 40.7%에서 2010년 16.2%로 급격하게 낮아진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1960년 3.4%에서 2010년 11.3%로 높아졌다.

통계청의 장기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하여 2060년에 이르면 2013년 인구보다 626만 명이 줄어든 4,396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1949-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주: 1) 인구는 내국인 인구를 기준으로 함.
- 2) 전체 인구에는 '연령 미상'이 포함되어 있어 연령집단별 인구의 합계와 차이가 있음.
- 3) 1949년 자료의 경우 64세 인구까지만 자료가 제공되어, 만 65-69세 인구는 60-64세 인구임.
- 4) 1960년 자료의 경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연령집단별 인구에서는 외국인 인구가 포함된 수치를 이용하였음.
- 5) 1970년에는 해외주재공무원 및 그 가족(약 1,200인)을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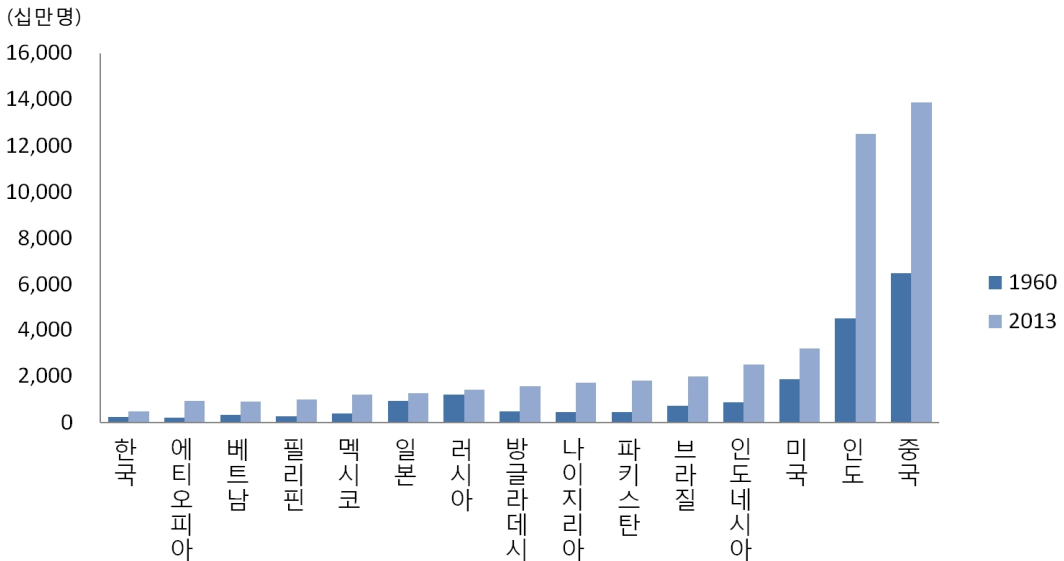
성 및 연령집단별 인구(1949-2010)

(단위: 천명)

	1949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전체	20,167	24,989	31,435	37,407	43,390	45,985	47,991
성							
남자	10,188	12,544	15,780	18,749	21,771	23,068	23,841
여자	9,979	12,445	15,656	18,658	21,619	22,917	24,150
연령집단별							
0 - 4세	-	3,550	4,316	3,795	3,280	3,130	2,219
5 - 9세	5,878	3,782	4,532	4,421	3,863	3,444	2,395
10 - 14세	2,515	2,822	4,393	4,440	3,992	3,064	3,173
15 - 19세	2,023	2,383	3,088	4,240	4,449	3,692	3,438
20 - 24세	1,718	2,279	2,523	4,054	4,396	3,848	3,055
25 - 29세	1,495	1,913	2,204	3,082	4,334	4,097	3,539
30 - 34세	1,266	1,556	2,193	2,519	4,208	4,093	3,695
35 - 39세	1,142	1,417	1,854	2,223	3,201	4,187	4,099
40 - 44세	947	1,187	1,462	2,132	2,539	3,996	4,131
45 - 49세	774	1,034	1,285	1,782	2,177	2,952	4,073
50 - 54세	682	885	1,025	1,326	2,010	2,350	3,798
55 - 59세	617	665	855	1,125	1,623	1,968	2,767
60 - 64세	1,076	567	665	822	1,157	1,789	2,182
65 - 69세	-	405	435	620	900	1,376	1,812
70 - 74세	-	297	315	425	595	918	1,566
75 - 79세	-	141	175	229	377	601	1,084
80 - 84세	-	68	84	118	195	304	596
85세이상	-	24	30	53	94	173	367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요국의 총인구(1960, 2013)



출처: UN, 「www.un.org/en/」 2014.1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주: 1) 각 국가의 총인구에는 외국인 인구가 포함되어 있음.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주요국의 총인구(1960, 2013)

(단위: 십만명)

국가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한국	251	284	314	347	375	405	430	447	460	470	485	493
에티오피아	222	250	284	326	352	408	480	570	660	762	871	941
베트남	329	382	438	492	549	617	689	760	809	849	890	917
필리핀	263	309	358	413	474	543	619	696	777	858	934	984
멕시코	387	453	530	617	704	779	861	954	1,039	1,107	1,179	1,223
일본	925	973	1,037	1,108	1,159	1,200	1,222	1,245	1,257	1,270	1,274	1,271
러시아	1,201	1,267	1,304	1,341	1,385	1,435	1,481	1,486	1,468	1,439	1,436	1,428
방글라데시	495	572	663	723	825	943	1,074	1,199	1,324	1,431	1,511	1,566
나이지리아	452	502	561	636	737	839	956	1,084	1,229	1,396	1,597	1,736
파키스탄	455	517	592	682	800	948	1,111	1,267	1,438	1,580	1,731	1,821
브라질	728	844	961	1,082	1,217	1,362	1,496	1,619	1,745	1,861	1,952	2,004
인도네시아	887	1,003	1,141	1,292	1,455	1,625	1,786	1,941	2,089	2,245	2,407	2,499
미국	1,864	1,997	2,099	2,194	2,302	2,419	2,545	2,680	2,846	2,982	3,122	3,201
인도	4,496	4,980	5,552	6,222	6,990	7,817	8,689	9,558	10,423	11,271	12,056	12,521
중국	6,507	7,115	8,144	9,136	9,840	10,623	11,654	12,375	12,804	13,182	13,598	13,856

2) 인구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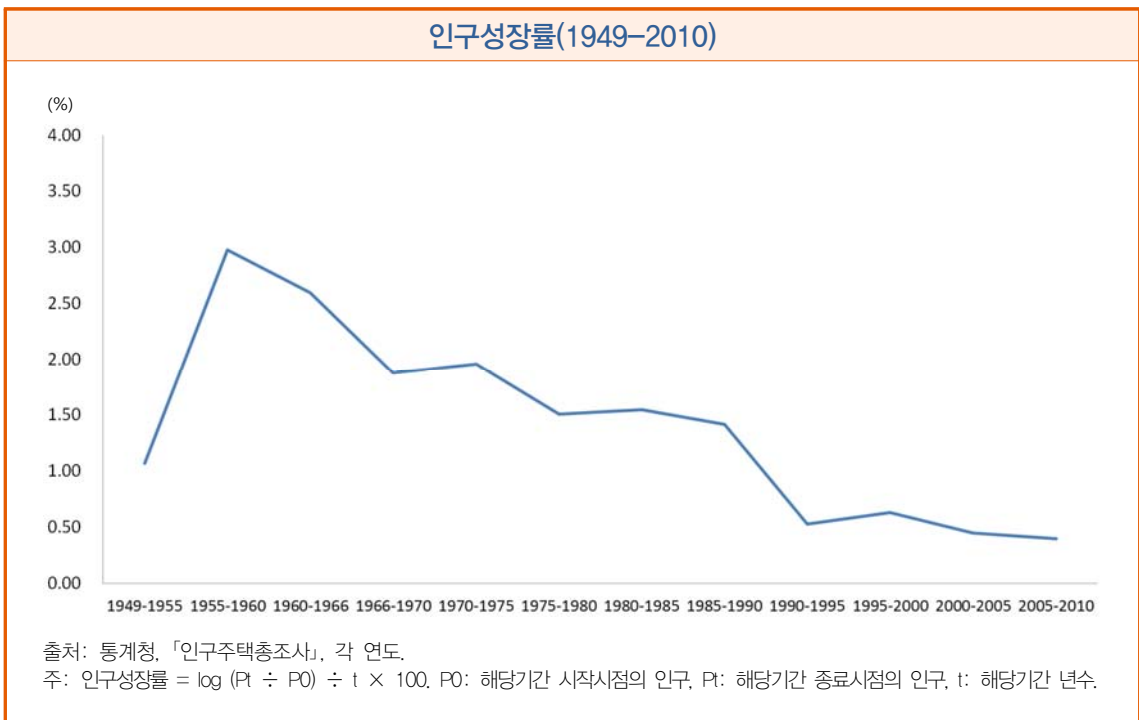
(1) 인구성장률

인구성장률은 인구의 변화를 파악하는 기본적 지표로 총인구수와 함께 국가의 장·단기 발전계획의 수립이나 각종 경제 및 사회 정책의 수립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인구성장률은 출생과 사망의 격차에 의한 자연증가와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를 반영한다. 인구이동에 의한 사회적 증가는 1949년에서 1955년 사이에 인구성장률에 영향을 미쳤고, 이후에는 대부분 출생과 사망의 격차에 의한 자연증가의 결과로 인구가 성장했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시기별로 보면, 1955-1960년 사이에 2.98%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인구총조사 결과), 다음으로 1960-1966년의 2.60%였다. 인구성장률이 1990년 이후 1%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는 주로 저출산 현상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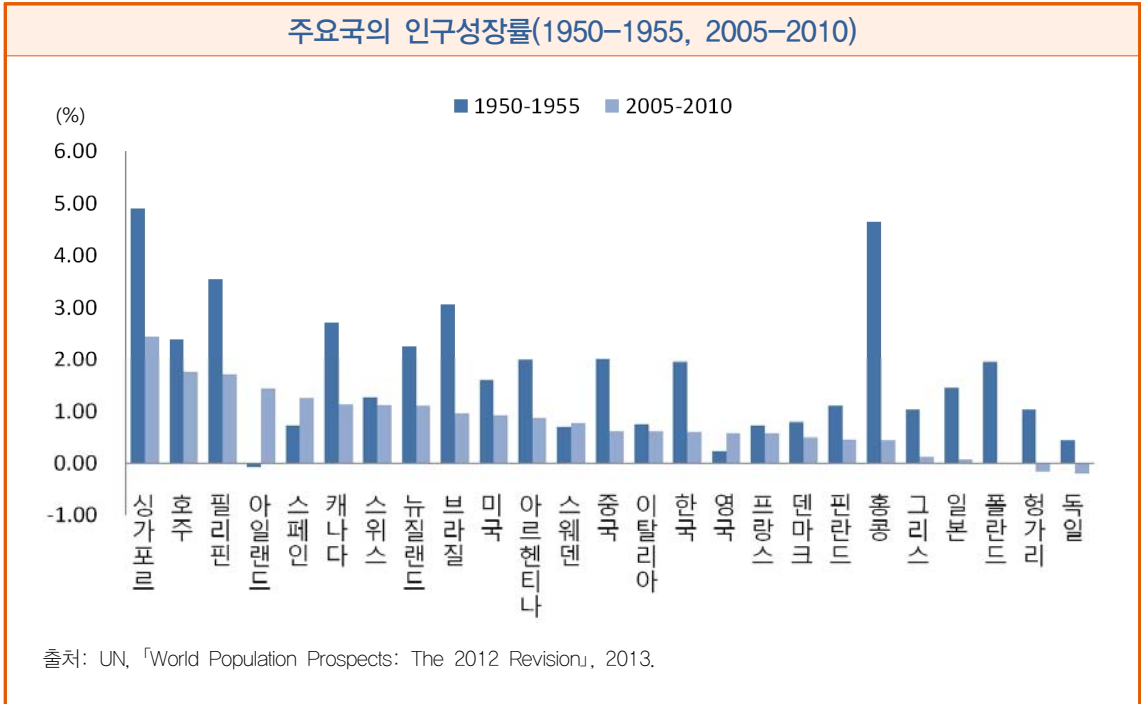
현재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유럽의 일부 국가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낸다.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인구성장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선진국 일부에서는 인구감소가 시작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등은 2005-2010년의 기간에 각각 2.44%, 1.76%, 1.70%의 상대적으로 높은 연평균 인구성장률을 보여준다.



인구성장률(1949-2010)

(단위: %)

	1949-1955	1955-1960	1960-1966	1966-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
인구성장률	1.07	2.98	2.60	1.88	1.96	1.51	1.55	1.42	0.53	0.63	0.45	0.40



주요국의 인구성장률(1950-1955, 2005-2010)

(단위: %)

국가	1950-1955	2005-2010	국가	1950-1955	2005-2010	국가	1950-1955	2005-2010
싱가포르	4.90	2.44	미국	1.60	0.92	핀란드	1.10	0.46
호주	2.39	1.76	아르헨티나	1.98	0.87	홍콩	4.65	0.44
필리핀	3.54	1.70	스웨덴	0.70	0.77	그리스	1.03	0.12
아일랜드	-0.08	1.44	중국	2.00	0.62	일본	1.45	0.06
스페인	0.72	1.25	이탈리아	0.75	0.62	폴란드	1.94	0.00
캐나다	2.71	1.13	한국	1.94	0.60	헝가리	1.03	-0.16
스위스	1.26	1.11	영국	0.22	0.58	독일	0.44	-0.20
뉴질랜드	2.26	1.10	프랑스	0.72	0.57			
브라질	3.06	0.95	덴마크	0.79	0.49			

(2) 합계출산율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1948년부터 1960년까지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증가를 보이지만 이후 하락세를 계속 유지해 왔다. 1960년대 초부터 급속한 저하를 지속하여 1983년 합계출산율 2.1의 대체수준보다 낮은 단계로 진입하였다. 그 후 출산력이 대체수준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대부분 인구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출산력 저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는 출산력의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출산수준은 2000년대 진입 이후 홍콩과 마카오 등을 제외하고는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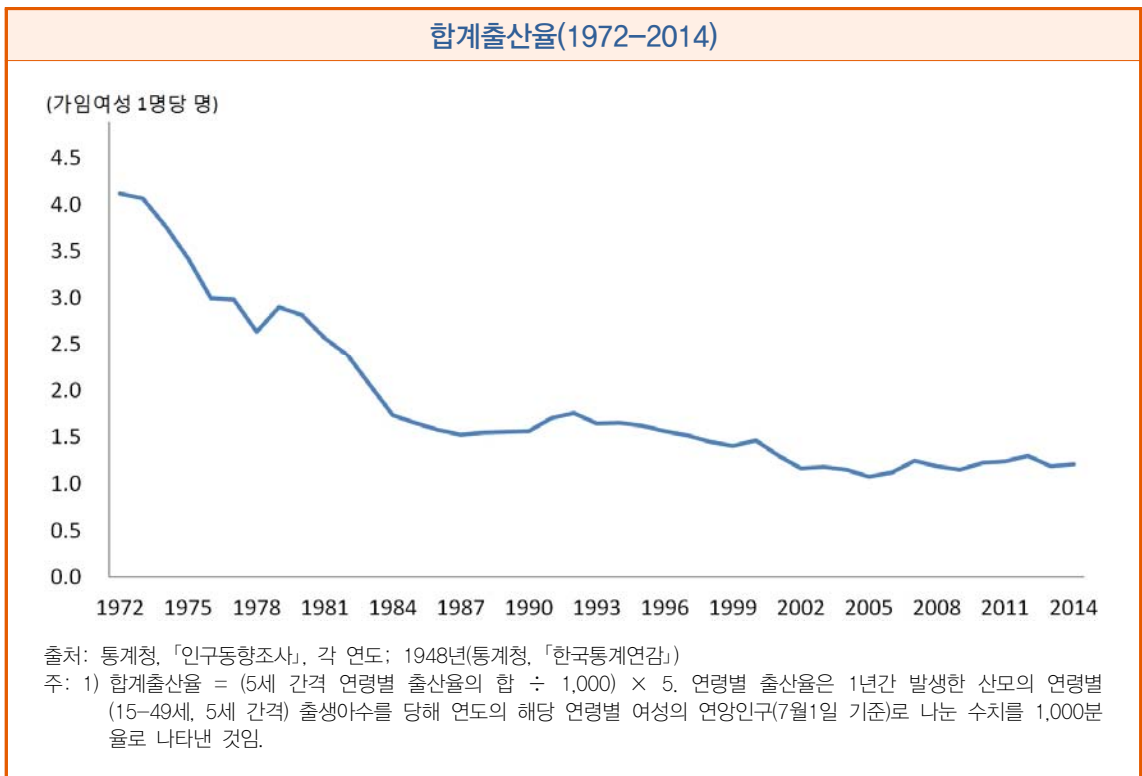
한국인구의 출산력변천은 1960-1985년의 제1단계와 1985년 이후 현재까지의 제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제1차 출산력변천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대변되는 사회경제적 발전, 그리고 이에 따른 가치관과 사회규범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 또한, 미국과 국제기구의 재정 및 기술지원을 받아 국가시책으로 강력하게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은 출산력변천을 크게 촉진시켰다. 초혼연령의 상승과 아울러 인공유산의 증가와 피임도구의 보급을 제1차 출산력변천의 3대 구성요소로 지적할 수 있다.

제2차 출산력변천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는 1990년대말 이후의 경기침체와 노동시장의 불안정, 가족 형성의 지연과 약화,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사업이 1990년대에 들어와 유명무실해졌고, 출산억제를 위한 대부분의 규제와 보상 제도가 사장되고 인구성장억제정책이 폐지된 상황에서, 초저출산으로의 제2차 변천에서는 가치관과 태도의 역할이 강조된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의 급격한 변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의 선택, 그리고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을 1980년대 중반 이후의 급격한 출산력 저하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출산력이 2005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2005년에 각각 43만 5천 명과 1.08로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출산력 저하의 폭과 속도는 인구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것이었다. 한국인구가 2000년대 진입 이후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게 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게 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높은 실업률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

의 해체가 확대되고 장년층의 출산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여자 초혼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전통적으로 주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30대 여자의 출산율은 상승추세를 보여준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는 가장 높은 출산율을 나타내는 연령층이 25-29세 집단에서 30-34세 집단으로 바뀌었다. 또한 35-39세 집단의 출산율 역시 2005년을 기점으로 20-24세 집단의 출산율보다 높아졌으며,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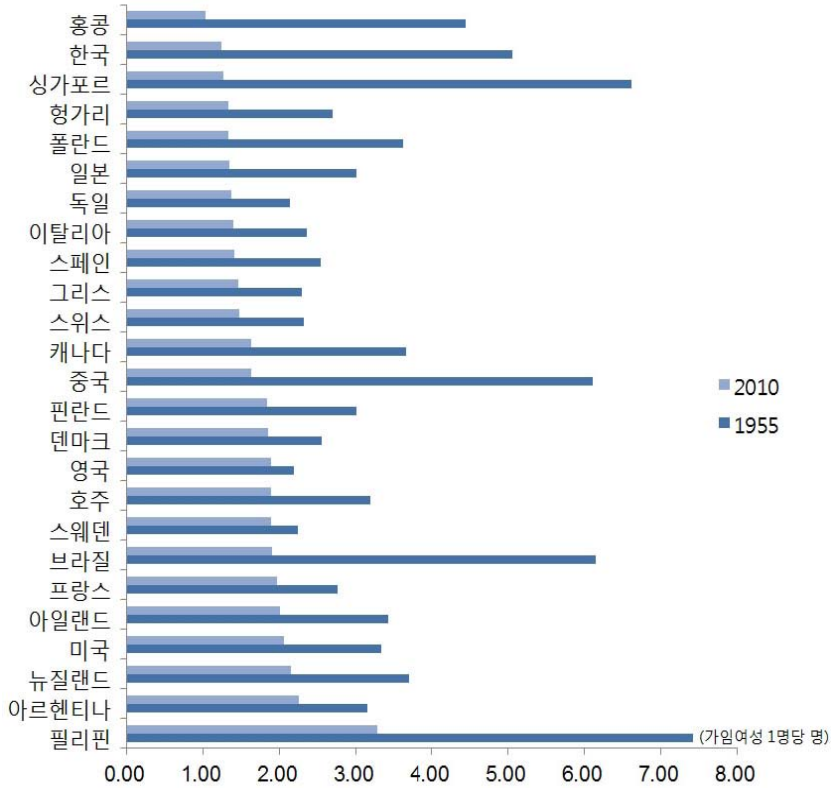


합계출산율(1972-2014)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1948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2.8	4.5	4.5	4.1	4.1	3.8	3.4	3.0	3.0	2.6	2.9	2.8	2.6	2.4	2.1	1.7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7	1.6	1.5	1.6	1.6	1.6	1.7	1.8	1.7	1.7	1.6	1.6	1.5	1.5	1.4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1.5	1.3	1.2	1.2	1.2	1.1	1.1	1.3	1.2	1.2	1.2	1.2	1.3	1.2	1.2	

주요국의 합계출산율(1955, 2010)



출처: United Nations 「www.un.org/en/」 2014. 09.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주: 1)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임.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주요국의 합계출산율(1955, 2010)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국가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필리핀	7.42	7.27	6.98	6.54	5.98	5.46	4.92	4.53	4.14	3.90	3.70	3.27
아르헨티나	3.15	3.13	3.09	3.05	3.15	3.44	3.15	3.05	2.90	2.63	2.35	2.25
뉴질랜드	3.69	4.07	4.02	3.35	2.84	2.18	1.97	2.03	2.07	1.95	1.95	2.14
미국	3.33	3.67	3.40	2.58	2.02	1.77	1.80	1.91	2.03	2.00	2.04	2.06
아일랜드	3.42	3.58	4.07	3.77	3.82	3.25	2.76	2.18	1.91	1.94	1.97	2.00
프랑스	2.75	2.69	2.83	2.64	2.30	1.86	1.87	1.81	1.71	1.76	1.88	1.97
브라질	6.15	6.15	6.15	5.38	4.72	4.31	3.80	3.10	2.60	2.45	2.25	1.90
스웨덴	2.24	2.25	2.31	2.17	1.91	1.66	1.64	1.91	2.01	1.56	1.67	1.89
호주	3.18	3.41	3.27	2.87	2.54	1.99	1.91	1.86	1.86	1.78	1.75	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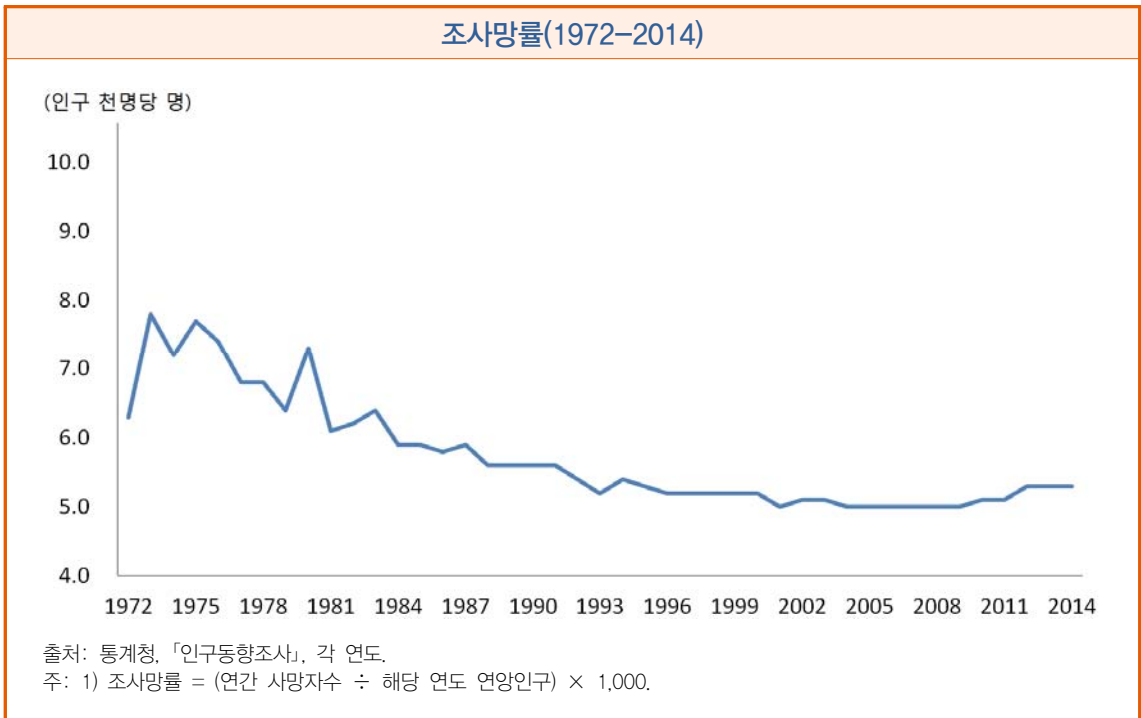
국가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영국	2.18	2.49	2.81	2.57	2.01	1.73	1.78	1.84	1.78	1.74	1.66	1.88
덴마크	2.55	2.55	2.58	2.27	1.96	1.68	1.43	1.54	1.75	1.76	1.76	1.85
핀란드	3.00	2.77	2.66	2.19	1.62	1.66	1.69	1.66	1.82	1.74	1.75	1.84
중국	6.11	5.48	6.11	5.94	4.77	3.01	2.69	2.87	2.05	1.56	1.55	1.63
캐나다	3.65	3.88	3.68	2.61	1.98	1.73	1.63	1.62	1.69	1.56	1.52	1.63
스위스	2.31	2.39	2.60	2.36	1.87	1.54	1.54	1.55	1.54	1.48	1.41	1.47
그리스	2.29	2.27	2.20	2.38	2.32	2.32	1.96	1.53	1.37	1.30	1.28	1.46
스페인	2.53	2.70	2.81	2.84	2.85	2.55	1.88	1.46	1.28	1.19	1.29	1.41
이탈리아	2.36	2.29	2.47	2.52	2.35	1.94	1.54	1.34	1.28	1.22	1.25	1.39
독일	2.13	2.29	2.47	2.36	1.71	1.51	1.46	1.43	1.30	1.35	1.35	1.36
일본	3.00	2.16	1.99	2.02	2.13	1.83	1.75	1.66	1.48	1.37	1.30	1.34
폴란드	3.62	3.29	2.65	2.27	2.25	2.26	2.33	2.15	1.89	1.48	1.27	1.33
헝가리	2.69	2.32	1.86	1.99	2.06	2.13	1.82	1.86	1.74	1.38	1.30	1.33
싱가포르	6.61	6.34	5.12	3.65	2.82	1.84	1.69	1.70	1.73	1.57	1.35	1.26
한국	5.05	6.33	5.63	4.71	4.28	2.92	2.23	1.60	1.70	1.51	1.22	1.23
홍콩	4.44	4.72	5.31	3.65	3.29	2.31	1.72	1.36	1.24	0.87	0.96	1.03

(3) 조사망률

조사망률은 조출생률과 함께 주어진 인구의 성장 및 변화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의 하나이다. 조사망률은 다른 지표들에 비해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상대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계산 또한 간편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조사망률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감소하다가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생활환경의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수명이 연장되면, 이는 조사망률의 저하로 이어지다가 인구구조 변화로 사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조사망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조사망률은 연령구조가 상이한 국가나 지역 간의 사망수준을 비교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지닌다.

지난 70년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한 한국의 사망률은 선진국의 평균 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조사망률은 1970년에는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가 8.0의 수준이었으나 2004-2009년의 기간 동안 1,000명당 5.0명의 최저수준을 유지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추세로 반전되었으며, 2014년 1,000명당 5.3명으로 집계되었다. 조사망률과 사망자수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는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며,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통계청의 2014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령집단에서 사망률이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한국인구의 조사망률은 세계인구와 개발도상국,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 역시 남녀 각각 선진국 평균값의 44%와 47%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의 영아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 스웨덴, 체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대수명을 비교해 보아도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남녀 모두 약 4년이 긴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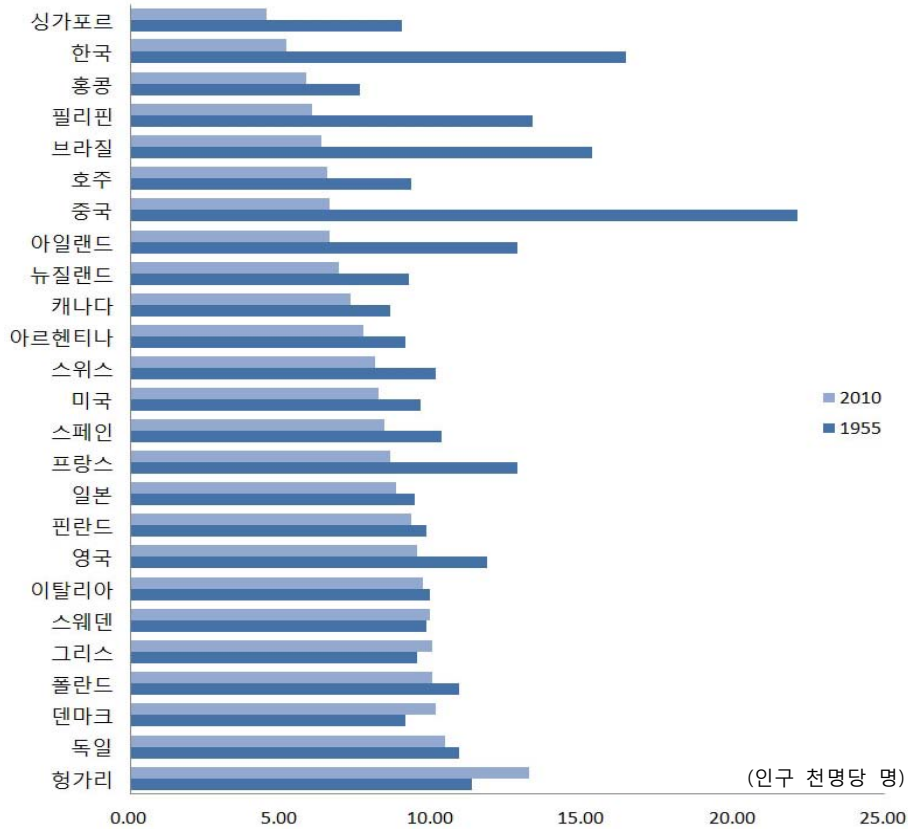


조사망률(1972-2014)

(단위: 인구 천명당 명)

1948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9.1	8.0	7.2	6.3	7.8	7.2	7.7	7.4	6.8	6.8	6.4	7.3	6.1	6.2	6.4	5.9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5.9	5.8	5.9	5.6	5.6	5.6	5.6	5.4	5.2	5.4	5.3	5.2	5.2	5.2	5.2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5.2	5.0	5.1	5.1	5.0	5.0	5.0	5.0	5.0	5.0	5.1	5.1	5.3	5.3	5.3	

주요국의 조사망률(1955-2013)



출처: UN, 「www.un.org/en/」 2014. 06.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 주: 1) 1950-1955, 1955-1960, 1960-1965, 1965-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1990, 1990-1995, 1995-2000, 2000-2005, 2005-2010년의 조사망률이며, 통계표와 그래프에는 해당 기간의 마지막 연도가 표기됨.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주요국의 조사망률(1955-2013)

(단위: 인구 천명당 명)

국가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헝가리	11.30	10.30	10.20	10.90	11.70	12.80	13.90	13.90	14.20	13.70	13.20	13.20
독일	10.90	11.40	11.80	12.20	12.30	12.30	12.10	11.70	11.30	10.70	10.30	10.40
덴마크	9.10	9.20	9.80	10.00	10.10	10.40	11.10	11.50	11.80	11.40	10.80	10.10
폴란드	10.90	8.60	7.60	7.80	8.40	9.20	9.60	10.10	10.40	10.00	9.60	10.00
그리스	9.50	9.70	9.50	9.70	10.30	10.20	10.00	9.50	9.10	9.30	9.40	10.00
스웨덴	9.80	9.70	10.10	10.30	10.40	11.00	11.10	11.20	11.00	10.70	10.40	9.90
이탈리아	9.90	9.70	9.90	10.00	9.90	9.90	9.90	9.60	9.80	9.90	9.70	9.70

국가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영국	11.80	11.60	11.80	11.70	11.90	12.00	11.80	11.60	11.20	10.90	10.20	9.50
핀란드	9.80	9.20	9.40	9.80	9.70	9.40	9.40	9.90	9.90	9.70	9.50	9.30
일본	9.40	7.90	7.40	6.90	6.60	6.20	6.30	6.40	7.00	7.50	7.90	8.80
프랑스	12.80	11.80	11.20	11.10	10.70	10.40	10.20	9.70	9.30	9.30	8.90	8.60
스페인	10.30	9.50	8.80	8.70	8.60	8.20	7.90	8.30	8.70	9.10	8.90	8.40
미국	9.60	9.40	9.50	9.50	9.40	8.80	8.70	8.80	8.70	8.60	8.50	8.20
스위스	10.10	9.90	9.70	9.40	9.20	9.10	9.40	9.20	9.20	8.90	8.50	8.10
아르헨티나	9.10	8.60	8.80	9.10	9.00	8.90	8.50	8.40	8.10	7.90	7.80	7.70
캐나다	8.60	8.10	7.70	7.40	7.30	7.10	7.00	7.10	7.10	7.30	7.20	7.30
뉴질랜드	9.20	8.90	8.70	8.40	8.30	8.10	8.10	8.30	7.60	7.50	7.10	6.90
아일랜드	12.80	12.20	11.80	11.40	10.90	10.20	9.40	9.20	8.80	8.60	7.50	6.60
중국	22.10	20.60	21.30	10.50	7.90	7.10	7.00	7.00	6.80	6.80	6.20	6.60
호주	9.30	8.80	8.60	8.70	8.30	7.70	7.30	7.30	7.00	6.90	6.70	6.50
브라질	15.30	13.90	12.50	11.00	9.90	9.00	8.30	7.40	6.80	6.50	6.40	6.30
필리핀	13.30	11.90	10.60	9.40	8.50	8.40	7.80	6.90	6.50	6.20	6.10	6.00
홍콩	7.60	6.50	5.40	4.90	4.50	4.70	4.80	5.30	5.40	5.30	5.50	5.80
한국	16.40	15.40	13.00	9.90	7.80	7.00	6.40	5.70	5.50	5.50	5.30	5.10
싱가포르	9.00	6.90	5.60	5.50	5.30	5.10	4.80	4.60	4.20	4.60	4.50	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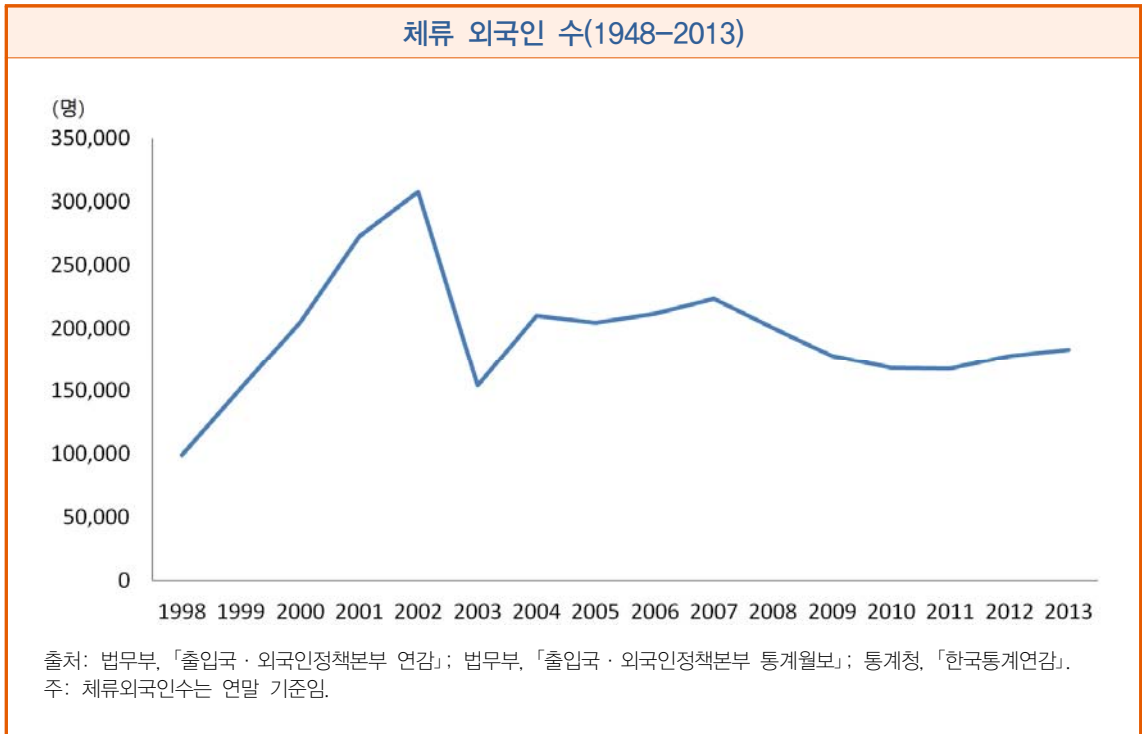
(4) 체류 외국인 수

한국은 1970년대까지 독일의 광부와 간호사, 중동의 건설인력, 그리고 베트남 파병 등 주로 해외로 인력을 내보내는 나라였지만, 1990년대 이후로 세계 각지로부터 인력의 유입 또한 늘어나고 있다.

장기 및 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과 불법체류자의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외국인 관련 각종 정책의 수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불법체류자들의 대부분은 생계를 위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이들로 인해 침해받을 수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보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에 대한 통계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각종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된다.

집계자료가 가용한 1997년 이후로 체류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체류외국인은 2013년 157.6만 명으로 2011년 대비 12.97%가 증가하였다. 한편, 불법체류자의 수는 2013년 18.3만 명으로 추산되며, 2002년 30.8만 명의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이주에 의한 인구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로 국적취득자의 수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이민자의 수는 2006년까지 3.9만 명에 불과하였지만 2014년에는 그 누적 규모가 14.6만 명으로 8년 사이에 약 3.7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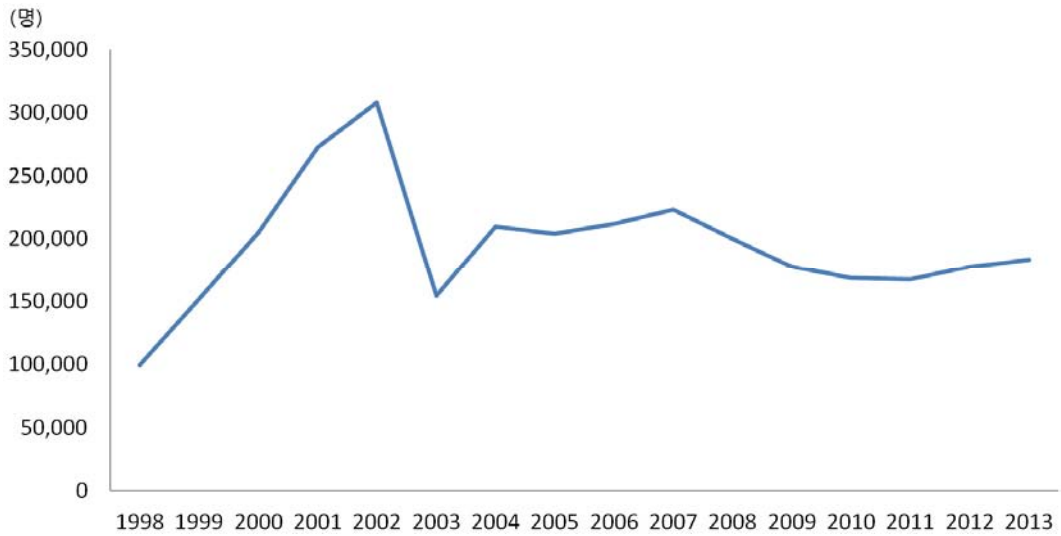


체류 외국인 수(1948-2013)

(단위: 천명)

1948	1949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7	1998	1999
20	22	24	35	33	30	28	30	29	21	55	387	308	381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491	567	629	679	751	747	910	1,066	1,159	1,168	1,261	1,395	1,445	1,576

불법체류자 수(1998-2013)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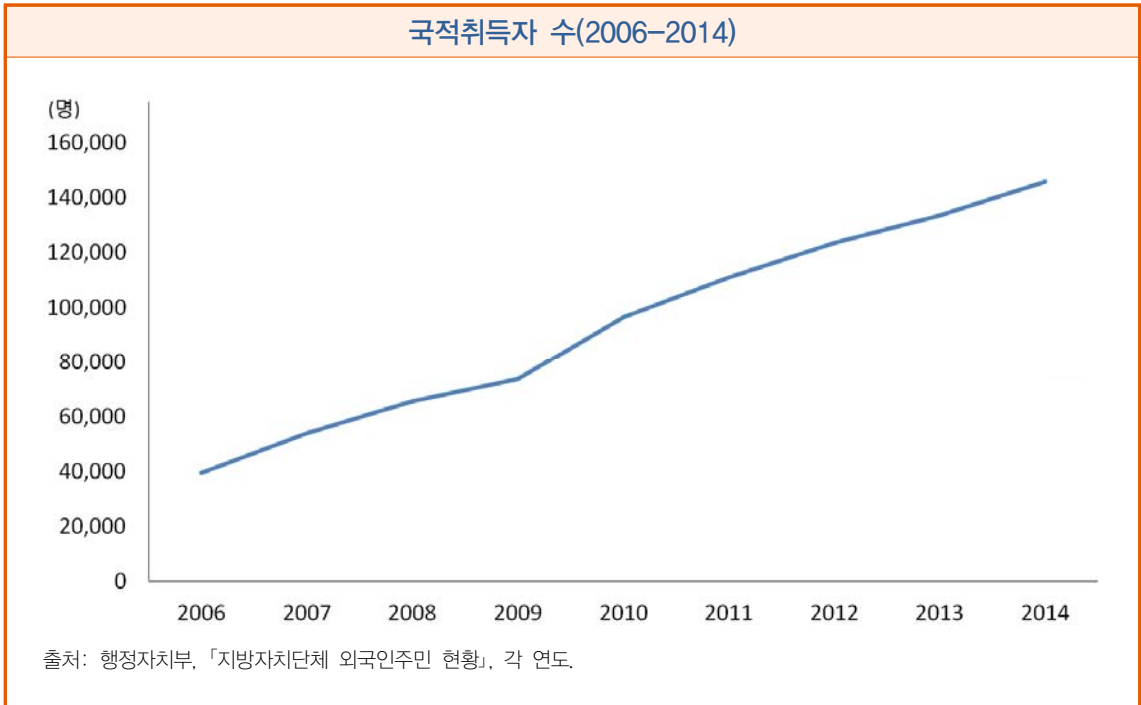
주: 1) 체류외국인 통계는 매년 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현황임.

2) 체류외국인은 장기체류 및 단기체류로 구분되며, 불법체류자는 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외국인 현황임.

불법체류자 수(1998-2013)

(단위: 명)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99,537	151,986	205,205	272,626	308,165	154,342	209,841	204,25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11,988	223,464	200,489	177,955	168,515	167,780	177,854	183,106



국적취득자 수(2006-2014)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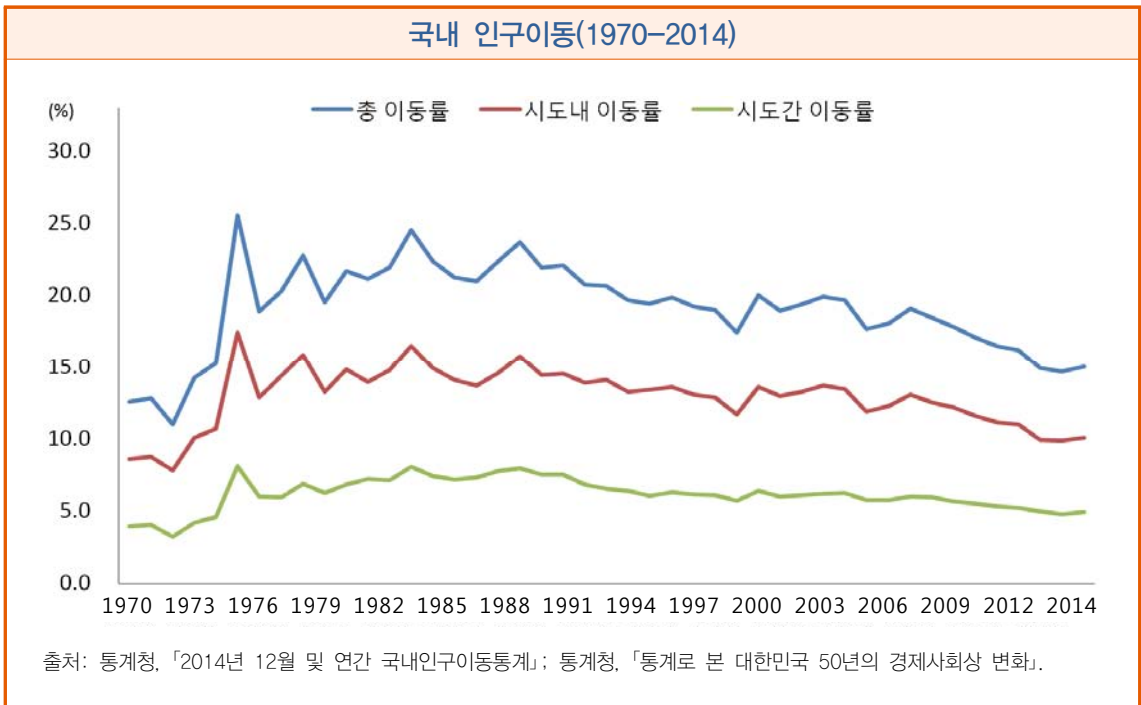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적취득자수	39,525	54,051	65,511	73,725	96,461	111,110	123,513	133,704	146,078

(5) 시군구이동률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인구이동률이 매우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다.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대규모 인구이동이 일어났다. 시군구 경계를 벗어난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1970년에는 405만 명(이동률 12.6%)이 이동하였다. 이후 인구이동은 더욱 활발해져서 1980년에는 826만 명(이동률 21.7%), 1990년에는 946만 명(이동률 22.1%)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 이후로 인구이동이 급속히 높아진 것은 도시화와 산업화에 따른 이촌향도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와 이동자수는 점차 줄어들어 2000년 19.0%, 2010년에는 16.5%, 그리고 2014년에는 15.0%로 나타났다

한국 인구이동의 주류는 수도권을 향한 인구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가장 심했던 1970년대에는 매년 약 37만 명이 수도권으로 순이동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매년 약 12만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수도권 내에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순이동이 지속적으로 (-)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인천과 경기도는 순이동이 계속 (+)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의 인구가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로 지속적으로 전출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2011년에 들어와 처음으로 수도권으로 전입하는 인구보다 수도권을 떠나 전출하는 인구가 더 많아지면서 수도권의 순이동이 (-)를 보였다. 2012년에 다시 수도권으로의 순이동이 (+)를 보였으나 2013년에 다시 (-)로 바뀌었다. 이처럼 2011년 이후 수도권으로의 유입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비수도권에서 이동할 잠재적 인구 자체가 감소하였고,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의 지역균형정책으로 인해 지방도시의 흡인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Ⅰ 국내 인구이동(1970-2014)

(단위: 천명; %)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총 이동	3,762	3,678	2,529	4,047	4,210	3,688	4,860	5,298	9,011	6,773	7,398	8,410	7,324	8,259	8,195	8,616
총 이동률	12.8	12.4	8.3	12.6	12.8	11.0	14.3	15.3	25.5	18.9	20.3	22.7	19.5	21.7	21.2	21.9
시도내 이동	2,831	2,762	1,675	2,780	2,878	2,619	3,436	3,709	6,143	4,620	5,234	5,867	4,975	5,653	5,401	5,806
시도내 이동률	9.6	9.0	5.5	8.6	8.8	7.8	10.1	10.7	17.4	12.9	14.4	15.9	13.3	14.8	13.9	14.8
시도간 이동	931	1,005	854	1,266	1,332	1,069	1,425	1,589	2,868	2,153	2,164	2,543	2,350	2,606	2,793	2,810
시도간 이동률	3.2	3.4	2.8	3.9	4.1	3.2	4.2	4.6	8.1	6.0	5.9	6.9	6.3	6.8	7.2	7.1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 이동	9,796	9,043	8,679	8,660	9,309	9,969	9,316	9,459	8,981	9,032	8,807	8,792	9,073	8,855	8,820	8,156
총 이동률	24.5	22.4	21.3	21.0	22.4	23.7	21.9	22.1	20.7	20.6	19.7	19.4	19.9	19.2	19.0	17.4
시도내 이동	6,585	6,034	5,754	5,639	6,065	6,617	6,127	6,228	6,023	6,172	5,943	6,052	6,208	6,019	5,981	5,478
시도내 이동률	16.5	14.9	14.1	13.7	14.6	15.7	14.4	14.5	13.9	14.1	13.3	13.4	13.6	13.1	12.9	11.7
시도간 이동	3,211	3,009	2,925	3,021	3,243	3,352	3,190	3,231	2,958	2,860	2,864	2,740	2,865	2,836	2,838	2,679
시도간 이동률	8.0	7.4	7.2	7.3	7.8	8.0	7.5	7.5	6.8	6.5	6.4	6.1	6.3	6.2	6.1	5.7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총 이동	9,435	9,009	9,290	9,584	9,517	8,568	8,795	9,342	9,070	8,808	8,487	8,227	8,127	7,507	7,412	7,629
총 이동률	20.0	19.0	19.4	19.9	19.7	17.7	18.1	19.1	18.5	17.8	17.1	16.5	16.2	14.9	14.7	15.0
시도내 이동	6,411	6,164	6,358	6,590	6,509	5,774	5,980	6,395	6,148	6,016	5,758	5,564	5,523	4,994	4,988	5,121
시도내 이동률	13.6	13.0	13.3	13.7	13.5	11.9	12.3	13.1	12.5	12.2	11.6	11.2	11.0	9.9	9.9	10.1
시도간 이동	3,025	2,846	2,932	2,995	3,008	2,794	2,815	2,947	2,922	2,792	2,729	2,662	2,605	2,513	2,423	2,508
시도간 이동률	6.4	6.0	6.1	6.2	6.2	5.8	5.8	6.0	5.9	5.7	5.5	5.3	5.2	5.0	4.8	4.9

3) 인구구조

(1) 중위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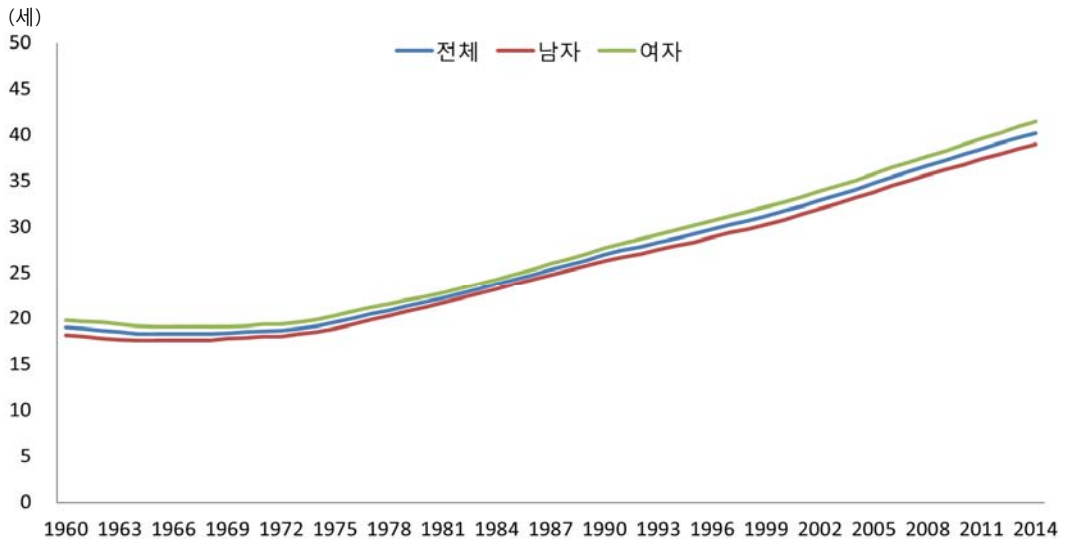
중위연령은 인구의 연령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표이다. 대부분의 인구는 비대칭의 연령분포를 지니기 때문에 중위연령(median age)이 평균연령(mean age)보다 널리 활용된다. 중위연령은 인구고령화의 수준을 파악하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중위연령이 30세 미만이면 ‘젊은 인구’로, 30세 이상이면 ‘나이든 인구’로 간주된다.

중위연령은 사회의 발전수준, 인구변천의 단계,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를 파악하는 간단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한국인구의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했을 만큼 매우 ‘젊은 인구’였다. 즉, 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전통적인 후진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중위연령은 그 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4년에는 40.2세로 높아졌다.

높은 중위연령은 사회경제적 발전수준이 높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낮은 사회에서 주로 발견된다. 국가별로 보면, 평균수명이 높은 선진국들의 중위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중위연령은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위연령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의 중위연령이 남자보다 일관되게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높기 때문이다.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 인구의 성과 연령 구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인구의 1960년 연령구조는 아랫부분이 넓은 전형적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냈으나, 출산수준의 저하로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는 방추형으로 변하는 추세를 1980년과 2000년의 연령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의 영향으로 2010년에 이르면 노인인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성별 중위연령(1960-2014)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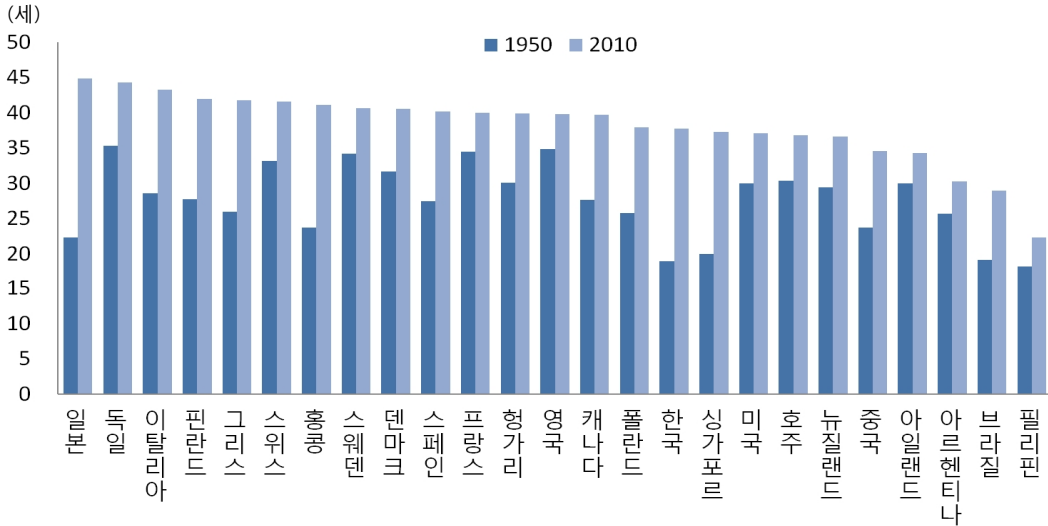
주: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임.

성별 중위연령(1960-2014)

(단위: 세)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	19.0	18.3	18.5	19.6	21.8	24.3	27.0	29.3	31.8	34.8	37.9	38.5	39.1	39.7	40.2
남자	18.2	17.6	17.9	18.9	21.2	23.8	26.3	28.4	30.8	33.8	36.8	37.4	37.9	38.5	39.0
여자	19.8	19.1	19.2	20.3	22.4	24.9	27.7	30.2	32.7	35.8	39.0	39.6	40.2	40.9	41.5

주요국의 중위연령(1950, 2010)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주: 중위연령은 총인구를 연령별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연령임.

주요국의 중위연령(1950, 2010)

(단위: 세)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일본	22.3	44.9	스페인	27.5	40.2	호주	30.4	36.8
독일	35.3	44.3	프랑스	34.5	40.0	뉴질랜드	29.4	36.6
이탈리아	28.6	43.3	헝가리	30.1	39.9	중국	23.7	34.6
핀란드	27.8	42.0	영국	34.9	39.8	아일랜드	30.0	34.3
그리스	26.0	41.8	캐나다	27.7	39.7	아르헨티나	25.7	30.3
스위스	33.2	41.6	폴란드	25.8	38.0	브라질	19.2	29.0
홍콩	23.7	41.1	한국	19.0	37.8	필리핀	18.2	22.3
스웨덴	34.2	40.7	싱가포르	20.0	37.3			
덴마크	31.7	40.6	미국	30.0	3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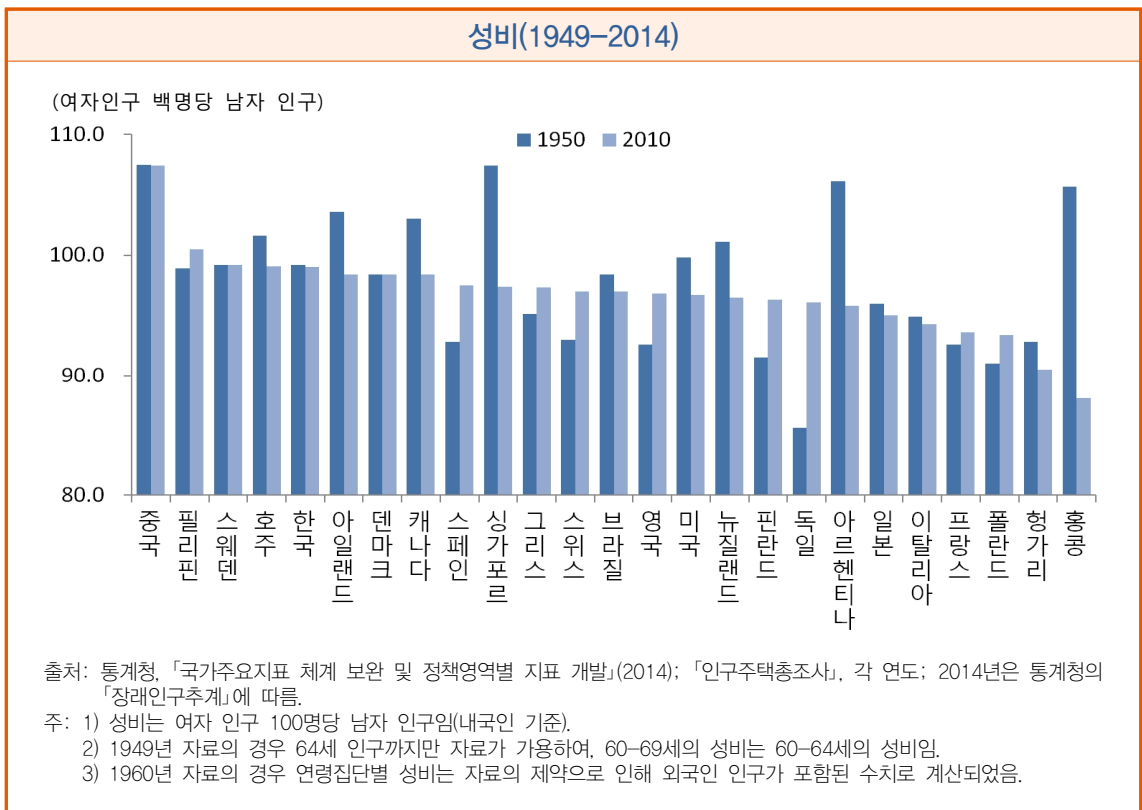
(2) 성비

성비는 인구의 성별구조 및 균형을 파악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여성 100명에 대한 남성의 수로 정의된다. 성비는 흔히 전체 인구에 대해 계산하지만, 특정 연령집단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많다. 일반적으로 모든 연령에서 남자의 사망률이 여자의 사망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구이동으로 인한 교란요인이 없다면 성비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 특히 노인인구 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성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

1960년 이후 한국 전체 인구의 성비는 100을 조금 상회하고 있으며 2014년 성비는 100.1로 나타났다. 연령집단별로는 2014년, 20-29세의 성비가 112.9로 가장 높았고, 60-69세 92.5, 70-79세 73.9, 그리고 80세 이상이 44.3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사망률의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인하여 여자 노인인구가 남자 노인인구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다.

특정 연령집단의 성비 중에서 많이 사용되는 지표로 출생 당시의 남아와 여아의 수를 비교하는 출생성비를 들 수 있다. 출생성비는 여아 100명당 남아가 몇 명 태어나는가로 측정한다. 출생성비는 각 나라마다 차이는 있으나 남아가 여아보다 약간 더 많이 태어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104-107의 범위를 정상수준으로 간주한다. 한국의 출생성비는 1980년대 중반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3년과 1994년에 115 수준에 이르렀다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근 105-107의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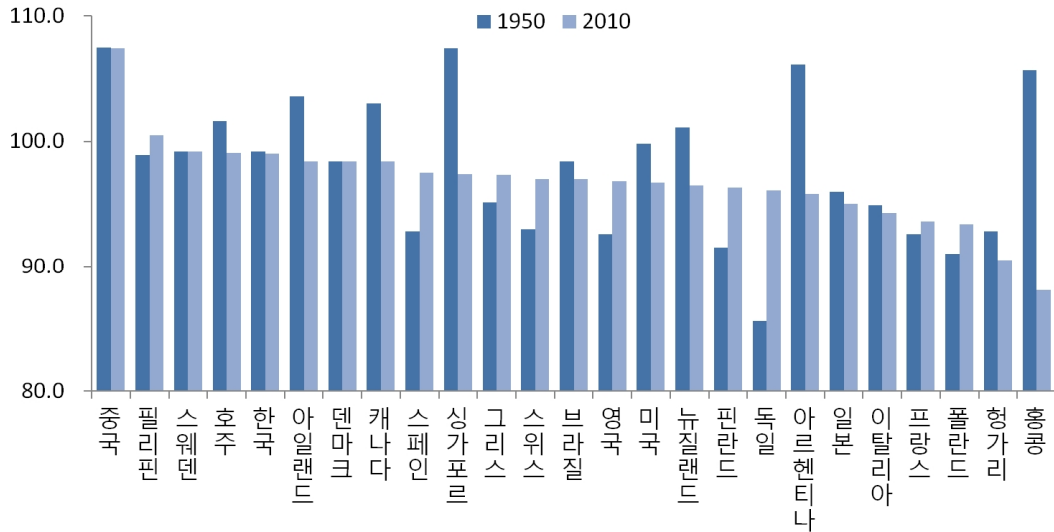
성비(1949-2014)

(단위: 여자인구 백명당 남자 인구)

	1949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2014
전체	102.1	100.8	100.8	100.5	100.7	100.7	98.7	100.1
10세 미만	103.7	106.4	107.2	107.0	109.1	112.0	107.1	106.6
10-19세	103.9	110.2	105.9	106.7	104.9	109.4	111.2	109.8
20-29세	102.1	99.6	102.7	102.3	104.2	105.9	108.3	112.9
30-39세	106.5	90.8	100.0	104.3	104.8	102.2	101.5	105.1
40-49세	105.1	101.1	92.5	99.2	105.0	103.0	100.7	103.0
50-59세	95.8	97.1	94.7	85.7	93.5	98.7	98.0	100.3
60-69세	82.3	80.0	78.5	78.4	73.4	82.5	89.8	92.5
70-79세	-	68.3	58.8	56.4	59.1	58.3	69.2	73.9
80세 이상	-	57.8	44.2	33.3	34.1	39.0	41.2	44.3

주요국의 성비(1950, 2010)

(여자인구 백명당 남자 인구)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주: 성비 = (남자 인구 ÷ 여자 인구) × 100.

Ⅰ 주요국의 성비(1950, 2010)

(단위: 여자인구 백명당 남자 인구)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중국	107.5	107.4	싱가포르	107.4	97.4	아르헨티나	106.1	95.8
필리핀	98.9	100.5	그리스	95.1	97.3	일본	96.0	95.0
스웨덴	99.2	99.2	스위스	93.0	97.0	이탈리아	94.9	94.3
호주	101.6	99.1	브라질	98.4	97.0	프랑스	92.6	93.6
한국	99.2	99.0	영국	92.6	96.8	폴란드	91.0	93.4
아일랜드	103.6	98.4	미국	99.8	96.7	헝가리	92.8	90.5
덴마크	98.4	98.4	뉴질랜드	101.1	96.5	홍콩	105.7	88.1
캐나다	103.0	98.4	핀란드	91.5	96.3			
스페인	92.8	97.5	독일	85.6	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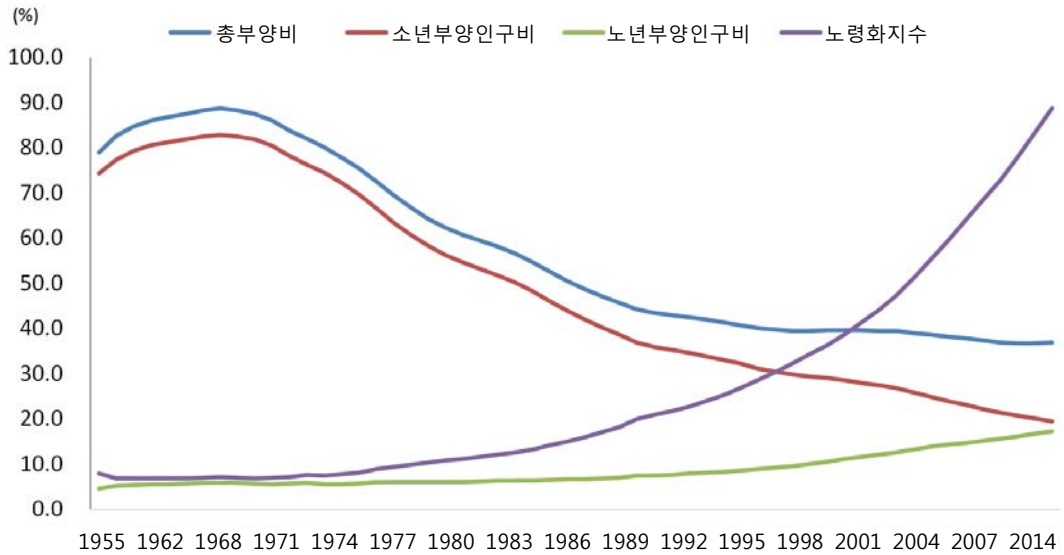
(3) 총부양비

생산 연령 인구에 대한 부양 인구의 구성비로 정의되는 총부양비는 인구의 연령구조를 반영하기 때문에 한 사회의 사회경제구조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전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총부양비가 높을수록 경제적 투자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경제발전이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노년부양인구비가 높은 사회에서는 노인복지문제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된다.

유소년부양비는 1960년 77.3%로 매우 높았지만 2014년에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5%로 집계되었다. 유소년부양비의 이 같은 저하는 주로 출산수준의 감소에 기인한다. 반면, 1960년 5.3%에 불과했던 노년부양인구비는 지속적인 사망률 저하로 인한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2014년에는 17.3%로 3배 이상 높아졌다. 노년부양인구비의 증가 추세에 비해 유소년부양비의 감소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총부양비 역시 감소 추세를 보여준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현재 상황이 가장 좋은 때이지만 이후 노년부양비를 중심으로 총부양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인구와 노년인구를 각각 분모와 분자로 하는 노령화지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10% 이하의 낮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진입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4년에는 88.7%에 도달하였다. 노령화지수의 빠른 증가 추세는 출산력의 빠른 저하로 유소년부양비가 떨어지고 사망률 저하로 노년부양인구비가 높아지는 추세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이다.

총부양비와 노령화지수(1955-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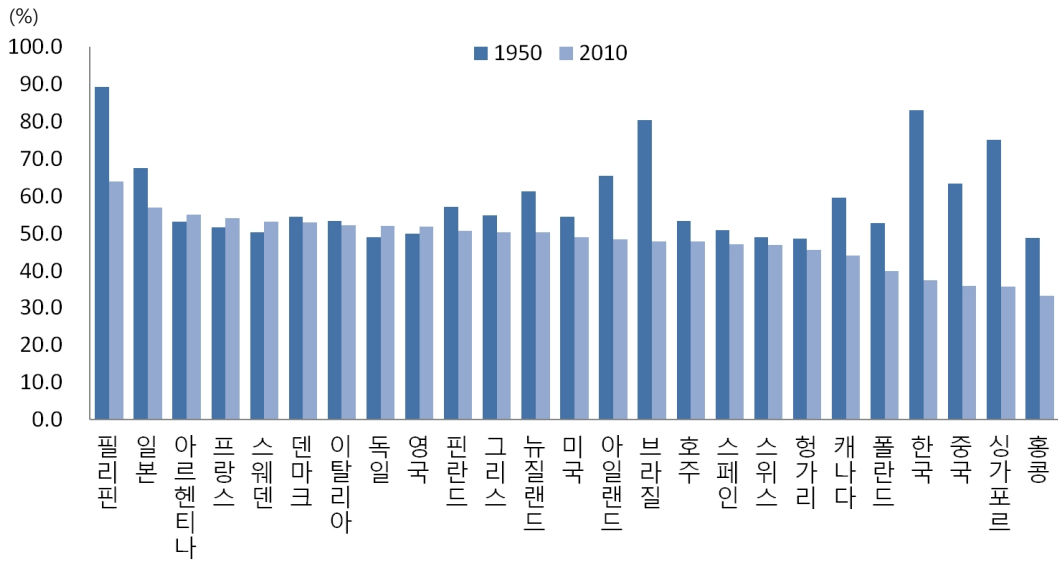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 연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55년.
 주: 1)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2)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2011.12월에 작성한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3) 총부양비 = $\{(15\text{세 미만 인구} + 65\text{세 이상 인구}) \div (15\text{--}64\text{세 인구}) \times 100$.
 4) 소년부양인구비 = $(15\text{세 미만 인구} \div 15\text{--}64\text{세 인구}) \times 100$.
 5) 노년부양인구비 = $(65\text{세 이상 인구} \div 15\text{--}64\text{세 인구}) \times 100$.
 6) 고령화지수 = $(65\text{세 이상 인구} \div 15\text{세 미만 인구}) \times 100$.

총부양비와 노령화지수(1955-2014)

(단위: %)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총부양비	79.0	82.6	88.8	83.8	72.5	60.7	52.5	44.3	41.4	39.5	39.4	37.3	36.9
소년부양인구비	74.3	77.3	82.8	78.2	66.6	54.6	46.0	36.9	33.0	29.4	26.8	22.2	19.5
노년부양인구비	4.6	5.3	5.9	5.7	6.0	6.1	6.5	7.4	8.3	10.1	12.6	15.2	17.3
고령화지수	8.0	6.9	7.2	7.2	8.9	11.2	14.2	20.0	25.2	34.3	47.3	68.4	88.7

주요국의 부양인구비(1950, 2010)



출처: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12 Revision」, 2013.
 주: 부양인구비 = ((15세 미만 인구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주요국의 부양인구비(1950, 2010)

(단위: %)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국가	1950	2010
필리핀	89.3	63.9	핀란드	57.2	50.7	헝가리	48.7	45.7
일본	67.6	56.9	그리스	54.9	50.4	캐나다	59.6	44.1
아르헨티나	53.2	55.0	뉴질랜드	61.4	50.4	폴란드	52.9	39.9
프랑스	51.7	54.2	미국	54.5	49.0	한국	83.0	37.6
스웨덴	50.4	53.2	아일랜드	65.5	48.5	중국	63.3	36.0
덴마크	54.6	53.0	브라질	80.3	47.9	싱가포르	75.0	35.8
이탈리아	53.3	52.3	호주	53.3	47.9	홍콩	48.9	33.4
독일	49.1	52.0	스페인	50.9	47.1			
영국	49.9	51.9	스위스	49.1	47.0			

2. 가구와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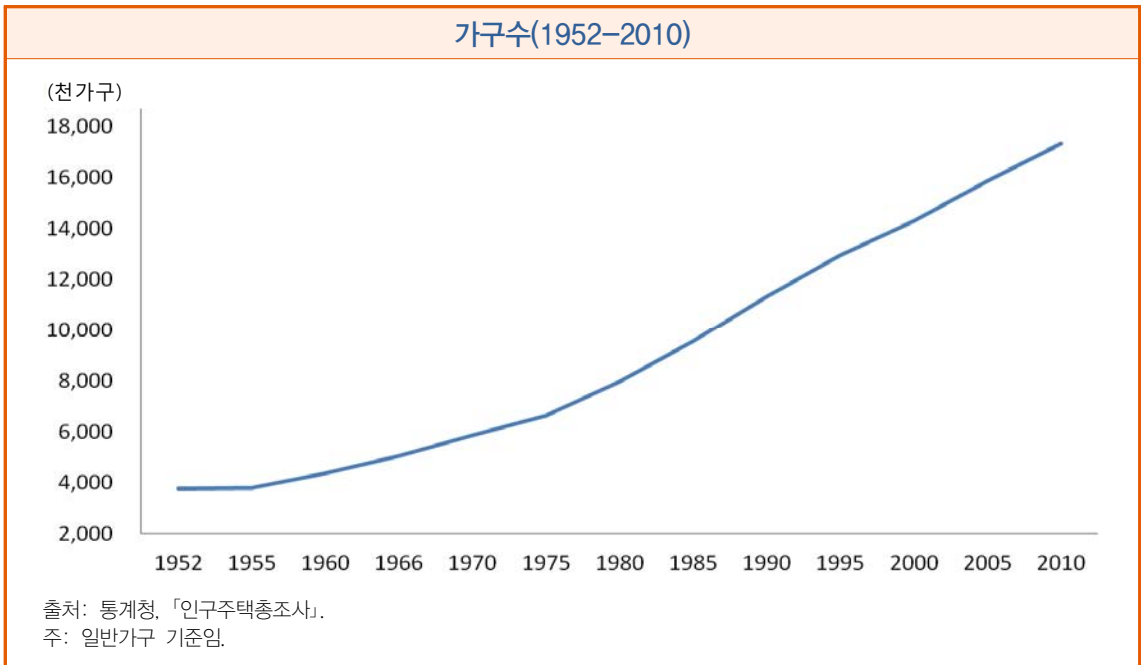
1) 가구구성

(1) 가구수

한국의 가구수는 총인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하지만 인구수가 가구수를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구의 규모 변화에 따라서 인구수가 늘어도 가구수가 늘지 않을 수 있고, 반대로 인구수는 늘지 않아도 가구수가 늘 수 있다. 가구수의 파악이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거주는 물론 경제활동과 생계가 상당부분 가구를 단위로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가구수는 1952년 379만 가구에서 2010년 1,734만 가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가구수가 1,000만을 넘어선 것은 1990년이였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인구증가가 높은 편이었던 1980년 이전까지에 비해 1980년 이후에 가구 수의 증가율이 더 높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가구의 규모 즉 가구원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왔기 때문이다.

가구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까지는 가장 빠른 인구증가를 보인 베이비 붐 세대가 결혼하여 독립 가구를 꾸리기 시작한 시기였다. 인구 증가가 현저히 둔화된 2000년대 이후에도 가구수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은 1인 가구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Ⅰ 가구수(1952-2010)

(단위: 천가구)

1952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3,786	3,807	4,378	5,057	5,863	6,648	7,969	9,571	11,355	12,958	14,312	15,887	17,339

(2) 평균 가구원수

가구원수의 변화는 한 사회의 출산율 및 가구구성의 변화가 반영되어 나타나는 지표이다. 자녀수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가구 유형의 선택은 가족가치관이나 규범과 함께 경제적 여건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조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평균 가구원수는 개인 및 개별 가구의 미시적 환경 뿐 아니라 개인과 가족을 둘러싼 거시적인 환경의 영향이 함께 작동하여 응축된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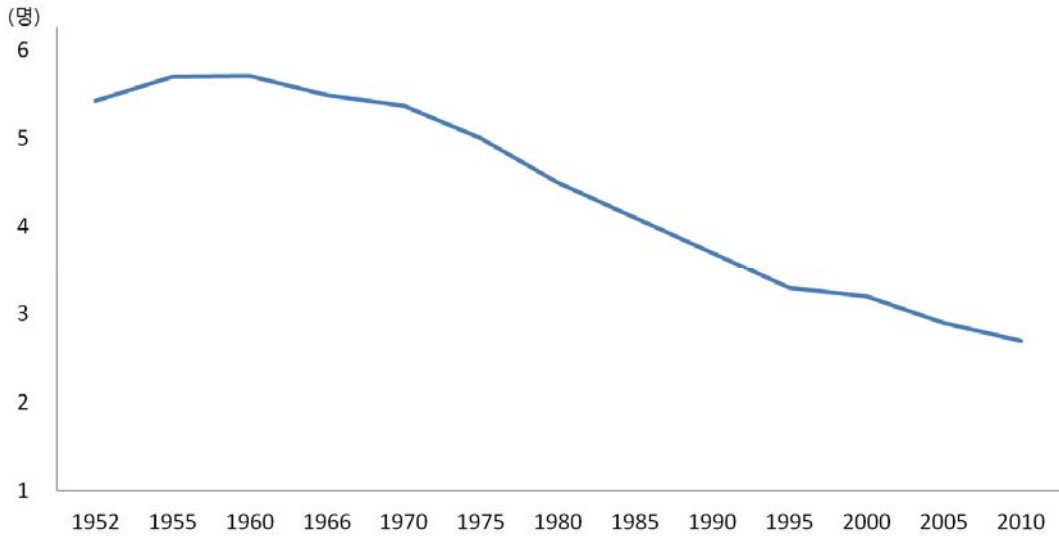
1952년 5.4명이었던 평균 가구원수는 1955년과 1960년에 5.7명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70년 5.4명, 1980년에 4.5명, 1990년 3.7명, 2000년 3.2명, 2010년 2.7명이 되었다. 평균 가구원수의 감소는 출산율 감소, 핵가족화 및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설명된다.

최근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에는 1인가구의 증가가 주목할 만한 역할을 하고 있다. 1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10년 23.9%로 증가하였고, 2025년에는 31.3%로 예측되어 향후 가구분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4인가구의 비율은 1990년 29.5%에서 2010년 22.5%로 감소하였다. 1인가구의 증가는 혼인율의 감소와 초혼연령의 지체에 따른 미혼 독신가구의 증가와 이혼이나 별거에 따른 단독가구의 증가, 그리고 고령화에 따른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에 기인한다.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시부(동부)에 비하여 읍면부에서, 즉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평균 가구원수 감소가 더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1인가구의 비율이 동부보다 읍면부에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이유는 인구고령화와 자녀세대의 이촌으로 노인독거 및 노인부부 가구가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구원수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높은 편에 속한다. 총 27개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터키, 멕시코, 슬로바키아에 이어 평균 가구원수가 네 번째로 높은 나라로 나타난다. 독일 2.14명, 스위스 2.25명, 영국 2.32명, 캐나다 2.47명, 일본 2.54명, 미국 2.57명 등 대부분의 OECD 주요국에서 평균 가구원수가 약 2명으로 나타나 한국의 평균 가구원수 감소 추세가 예외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가구원수(1952-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한국통계연감」.
 주: 평균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수.

평균 가구원수(1952-2010)

(단위: 명)

1952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5.4	5.7	5.7	5.5	5.4	5.0	4.5	4.1	3.7	3.3	3.2	2.9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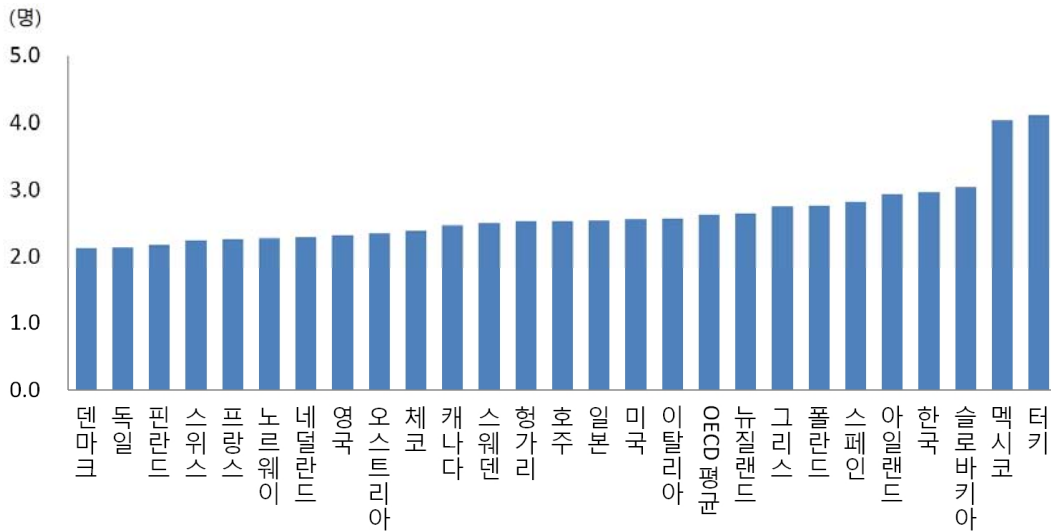
가구원수별 가구구성과 평균 가구원수(1980-2010)

(단위: 천 가구, %, 명)

	가구수	가구원수별 가구구성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	
전국								
1980	7,969	4.8	10.5	14.5	20.3	20.0	29.8	4.5
1985	9,571	6.9	12.3	16.5	25.3	19.5	19.5	4.1
1990	11,355	9.0	13.8	19.1	29.5	18.9	9.8	3.7
1995	12,958	12.7	16.9	20.3	31.7	12.9	5.5	3.3
2000	14,312	15.5	19.1	20.9	31.1	10.1	3.3	3.2
2005	15,887	20.0	22.2	20.9	27.0	7.7	2.3	2.9
2010	17,339	23.9	24.3	21.3	22.5	6.2	1.8	2.7

출처: 통계청, 「국가주요지표 체계 보완 및 정책영역별 지표 개발」;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 일반가구 기준임.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구원수(2011)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4.

주: 1) 평균 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원수 ÷ 총 일반가구수.

2) 기준년도는 대부분 2011년이고, 예외는 호주(2007), 캐나다(2006), 일본(2005)임.

OECD 주요국의 평균 가구원수(2011)

(단위: 명)

국 가	평균 가구원수	국 가	평균 가구원수	국 가	평균 가구원수
덴 마 크	2.13	체 코	2.39	뉴 질 랜드	2.65
독 일	2.14	캐 나 다	2.47	그 리 스	2.76
핀 란 드	2.18	스 웨 덴	2.50	폴 란 드	2.77
스 위 스	2.25	헝 가 리	2.53	스 페 인	2.82
프 랑 스	2.27	호 주	2.53	아 일 랜드	2.94
노 르 웨 이	2.28	일 본	2.54	한 국	2.97
네 덜 란 드	2.29	미 국	2.57	슬로바키아	3.04
영 국	2.32	이 탈 리 아	2.58	멕 시 코	4.03
오스트리아	2.35	OECD 평균	2.62	터 키	4.11

2) 가족형성

(1) 조혼인율

결혼은 가족형성의 근간이 되며, 결혼으로 형성된 가족은 사회구성원을 재생산하고 사회화하여 세대 간에 문화, 관습, 언어, 가치관을 계승하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따라서 결혼은 개인이나 가족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결혼이 지연되거나 기피되는 현상은 출생아수 감소와 그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부족, 인구고령화를 가져오면서 과도한 부양 부담의 문제 및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조혼인율의 변화 추세를 통해서 인구 규모와 구조의 변동요인 중 하나인 혼인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가족제도의 미래와 국가발전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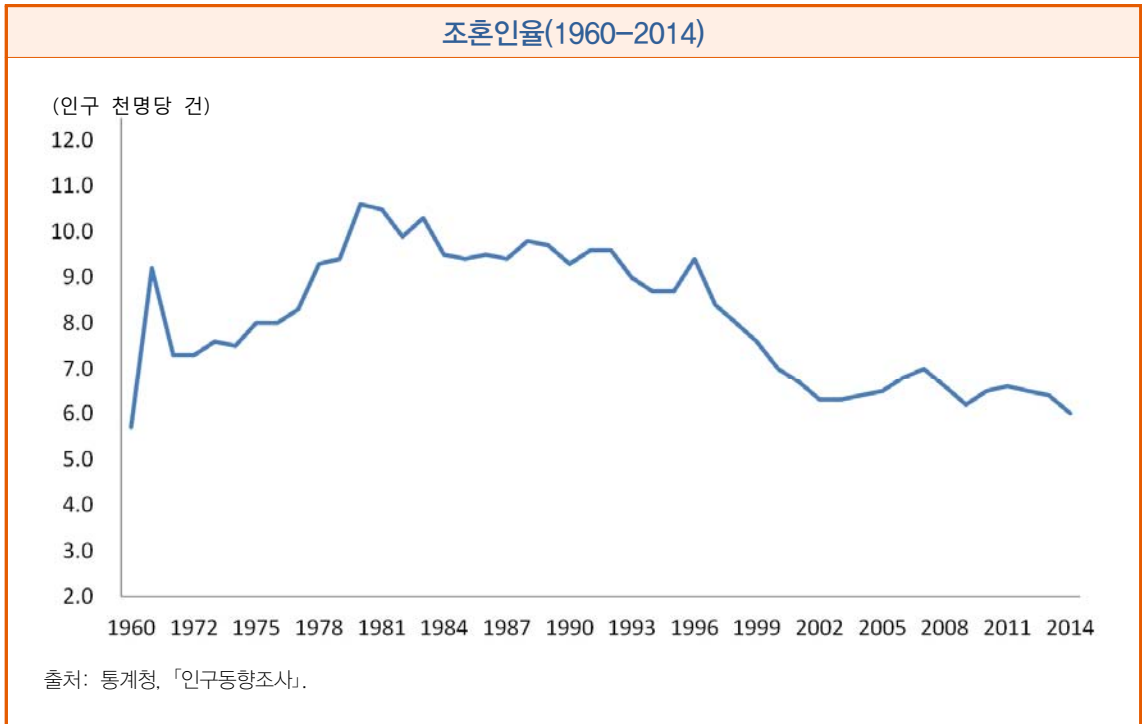
조혼인율은 1960년대에 급상승하였다가 1970년대에 다소 낮아졌다가, 다시 증가하지만 1980년 10.6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2014년 6.0으로 크게 줄었다. 이처럼 조혼인율의 감소 추세는 OECD 주요 국가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요한 이유는 OECD 국가들에서 동거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조혼인율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30여 년 사이 급격히 감소했다.

조혼인율의 감소와 함께 평균 초혼연령은 점차 상승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간의 평균 초혼연령의 변화 추이를 보면, 남녀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4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자 32.4세, 여자 29.8세로 전년 대비 남자가 0.2세, 여자가 0.2세 상승하였다. 초혼연령의 상승은 만혼과 비혼 비율의 상승에 기인한다. 즉 결혼을 늦추는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결혼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 강력하게 작동하였으나, 개인주의적 가치가 확산되고 가족주의가 약화되면서 결혼이 보편성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결혼을 당위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에 점차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혼인율과 결혼선호율 감소의 중요한 요인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과 육아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적,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에서 결혼은 여성에게 높은 기회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적 독립성을 확보한 여성들이 결혼에 대해 신중해지고 있다.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높은 청년실업률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젊은이들의 결혼 의사와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경쟁이 심한 현실에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교육기간 증가로 이어져 미혼을 증가시키고 결혼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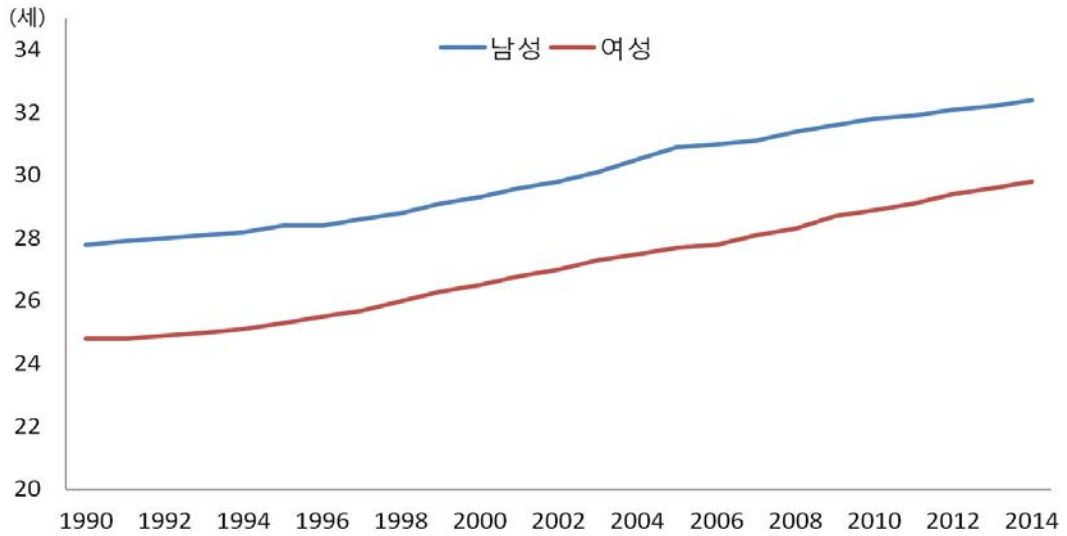


Ⅰ 조혼인율(1960-2014)

(단위: 인구 천명당 건)

196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5.7	9.2	7.3	7.3	7.6	7.5	8.0	8.0	8.3	9.3	9.4	10.6	10.5	9.9	10.3	9.5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9.4	9.5	9.4	9.8	9.7	9.3	9.6	9.6	9.0	8.7	8.7	9.4	8.4	8.0	7.6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7.0	6.7	6.3	6.3	6.4	6.5	6.8	7.0	6.6	6.2	6.5	6.6	6.5	6.4	6.0	

성별 평균 초혼연령(1990-2014)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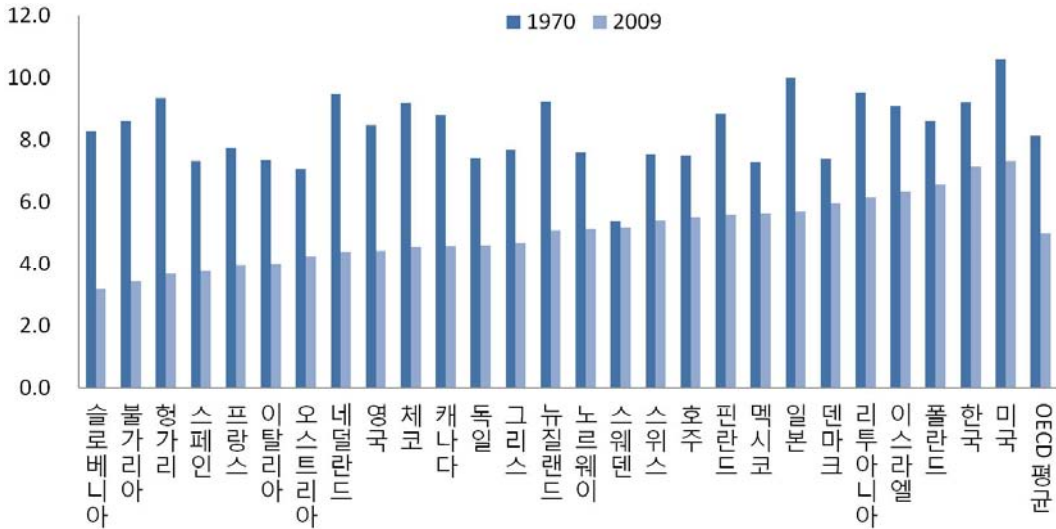
성별 평균 초혼연령(1990-2013)

(단위: 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남성	27.8	27.9	28.0	28.1	28.2	28.4	28.4	28.6	28.8
여성	24.8	24.8	24.9	25.0	25.1	25.3	25.5	25.7	26.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남성	29.1	29.3	29.6	29.8	30.1	30.5	30.9	31.0	
여성	26.3	26.5	26.8	27.0	27.3	27.5	27.7	27.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남성	31.1	31.4	31.6	31.8	31.9	32.1	32.2	32.4	
여성	28.1	28.3	28.7	28.9	29.1	29.4	29.6	29.8	

OECD 주요국의 조혼인율(1970, 2009)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



출처: OECD 「www.oecd.org/」 2014.06; 「OECD Family Database 2014」.

주: 1) 2009년 수치에서 미국, 한국, 일본,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은 2007년 자료이고, 이스라엘은 2006년 자료임.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조혼인율(1970, 2009)

(단위: 인구 천명당 혼인건수)

국 가	1970	2009	국 가	1970	2009
슬로베니아	8.3	3.2	노르웨이	7.6	5.1
불가리아	8.6	3.4	스웨덴	5.4	5.2
헝가리	9.4	3.7	스위스	7.6	5.4
스페인	7.3	3.8	호주	7.5	5.5
프랑스	7.8	4.0	핀란드	8.8	5.6
이탈리아	7.4	4.0	멕시코	7.3	5.6
오스트리아	7.1	4.2	일본	10.0	5.7
네덜란드	9.5	4.4	덴마크	7.4	6.0
영국	8.5	4.4	리투아니아	9.5	6.2
체코	9.2	4.6	이스라엘	9.1	6.3
캐나다	8.8	4.6	폴란드	8.6	6.6
독일	7.4	4.6	한국	9.2	7.1
그리스	7.7	4.7	미국	10.6	7.3
뉴질랜드	9.2	5.1	OECD 평균	8.1	5.0

(2) 조이혼율

조이혼율은 한 사회의 가족안정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조이혼율은 이혼건수를 이혼과 관련이 없는 영유아 인구가 포함된 전체 인구로 나누기 때문에 인구구조의 영향을 받는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혼율을 파악하는 데 가장 널리 사용된다. 가족은 사회구성원의 재생산과 더불어 교육 및 사회화, 개인의 정서적 안정 등 중요 기능을 담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단위이다. 가족의 기능이 과거에 비해 축소되고 상당 부분 사회로 이전되고는 있지만, 가족안정성은 여전히 사회안정성의 기반을 이룬다. 이혼율은 한 사회의 가족관계의 질을 보여주거나 가족의 건강성을 대변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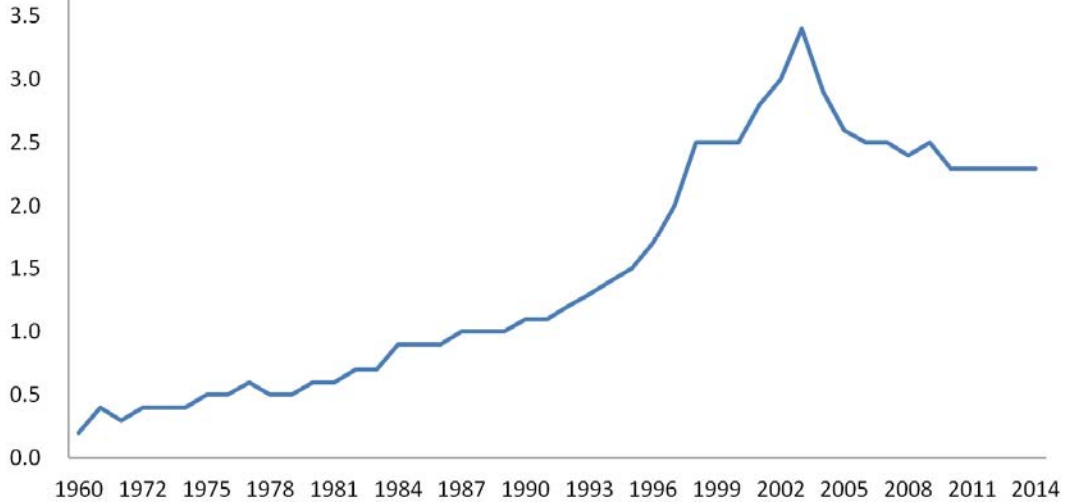
조이혼율은 1960년에는 0.2건으로 매우 낮았으며, 1970년에 0.4건, 1980년에 0.6건, 1990년에 1.1건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지만, 불과 10년 후인 2000년에는 2.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2003년에는 3.4건으로 최고점에 이르렀다. 이후 조이혼율은 조금씩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2014년 현재 2.3건으로 2000년대 들어서는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이혼율 저하는 그간의 이혼율 상승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함께 이혼숙려기간 의무화 및 이혼 전 상담 등 이혼숙려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또한 조이혼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노년층에서는 이혼이 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 가운데 한국의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1970년 하위 4번째 국가였으나 2008년에는 상위 10번째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사실혼이 많은 반면 한국은 혼인신고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의 조이혼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이혼율 증가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IMF 사태로 일컬어지는 경제적 위기, 호주제 폐지와 같은 법적인 변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개인의 행복과 선택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도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조이혼율(1960-2014)

(인구 천명당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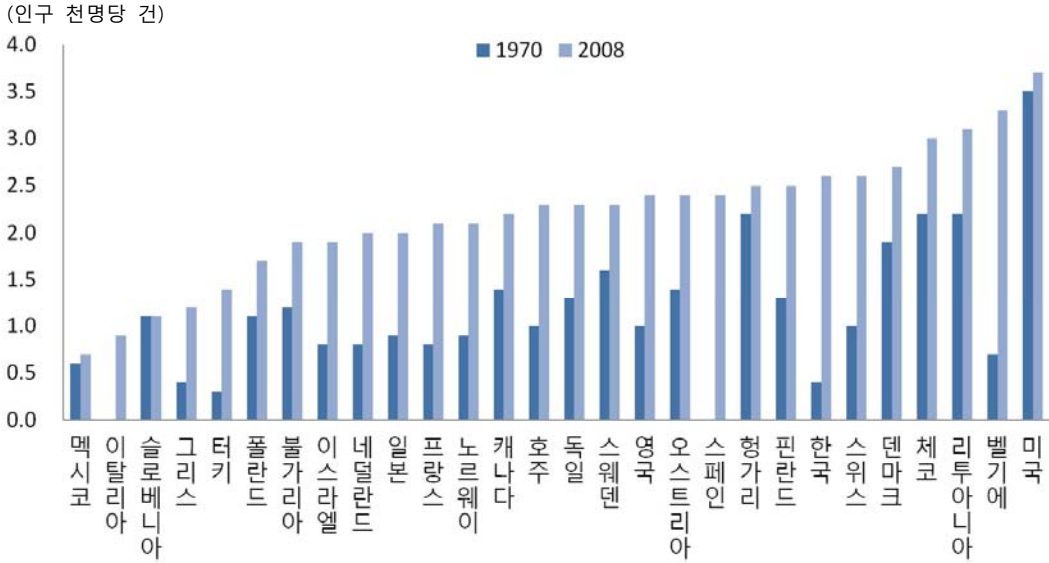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조이혼율(1960-2014)

(단위: 인구 천명당 건)

1960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0.2	0.4	0.3	0.4	0.4	0.4	0.5	0.5	0.6	0.5	0.5	0.6	0.6	0.7	0.7	0.9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0.9	0.9	1.0	1.0	1.0	1.1	1.1	1.2	1.3	1.4	1.5	1.7	2.0	2.5	2.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5	2.8	3.0	3.4	2.9	2.6	2.5	2.5	2.4	2.5	2.3	2.3	2.3	2.3	2.3	

OECD 주요국의 조이혼율(1970, 2008)



출처: OECD 「www.oecd.org」2014.06; 「OECD Family Database 2014」.

주: 1) 2008년 수치 중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그리스, 멕시코 등은 2007년 자료이고, 미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은 2006년 자료임.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조이혼율(1970, 2008)

(인구 천명당 건)

국 가	1970	2008	국 가	1970	2008
멕시코	0.6	0.7	독일	1.3	2.3
이탈리아	0.0	0.9	스웨덴	1.6	2.3
슬로베니아	1.1	1.1	영국	1.0	2.4
그리스	0.4	1.2	오스트리아	1.4	2.4
터키	0.3	1.4	스페인	0.0	2.4
폴란드	1.1	1.7	헝가리	2.2	2.5
불가리아	1.2	1.9	핀란드	1.3	2.5
이스라엘	0.8	1.9	한국	0.4	2.6
네덜란드	0.8	2.0	스위스	1.0	2.6
일본	0.9	2.0	덴마크	1.9	2.7
프랑스	0.8	2.1	체코	2.2	3.0
노르웨이	0.9	2.1	리투아니아	2.2	3.1
캐나다	1.4	2.2	벨기에	0.7	3.3
호주	1.0	2.3	미국	3.5	3.7

3)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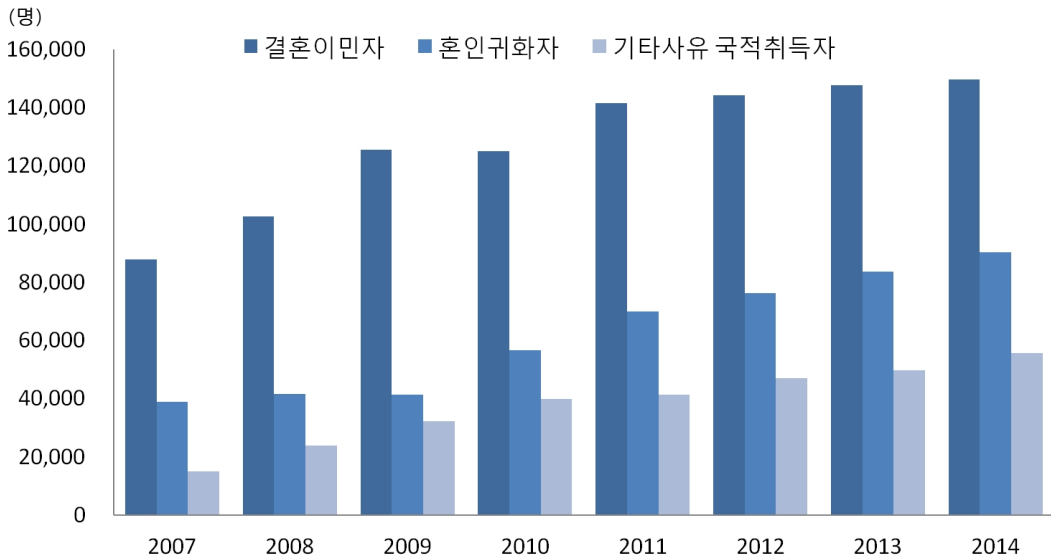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한국인이 국제결혼을 통해 외국인과 이룬 가족, 즉 결혼이민자 혹은 혼인귀화자가 있는 가족과 아울러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한 가족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2007년부터이다. 다문화가족은 가족구성원 간의 문화적 차이, 사회적 차별 등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했다.

20세기까지 한국 사회는 전통적 통념과 인식에서 단일민족 사회라는 생각이 강한 사회였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결혼과 국적취득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처음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에 다문화가족 이주민은 14만 2,015명이었지만, 2014년에는 두 배가 넘는 29만 5,842명의 다문화가족 이주민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유형을 살펴보면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2007년에서 2011년까지 8만 7,964명에서 14만 1,654명으로 빠르게 증가했지만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결혼 이후 한국인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는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5만 6,584명에서 9만 439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국제결혼의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2010년대 이후 신규 국제결혼의 증가가 줄어든 반면 이미 이루어진 결혼으로부터 귀화자는 늘고 있는 것이다. 혼인 이외의 사유로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의 경우는 가장 비중이 낮지만 이들 역시 2007년 1만 5,060명에서 2014년 5만 5,63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제결혼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증가세 역시 2010년 이후 둔화된 상태이다.

2010년 이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다문화가족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한국 사회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은 높아질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추이(2007-2014)



출처: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최초작성년도: 2007년).

주: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 개정, '11.10.5 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함.

다문화가족의 유형별 추이(2007~2014)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결혼이민자	87,964	102,713	125,673	125,087	141,654	144,214	147,591	149,764
혼인귀화자	38,991	41,672	41,417	56,584	69,804	76,473	83,929	90,439
기타사유 국적취득자	15,060	23,839	32,308	39,877	41,306	47,040	49,775	55,639
계	142,015	168,224	199,398	221,548	252,764	267,727	281,295	295,8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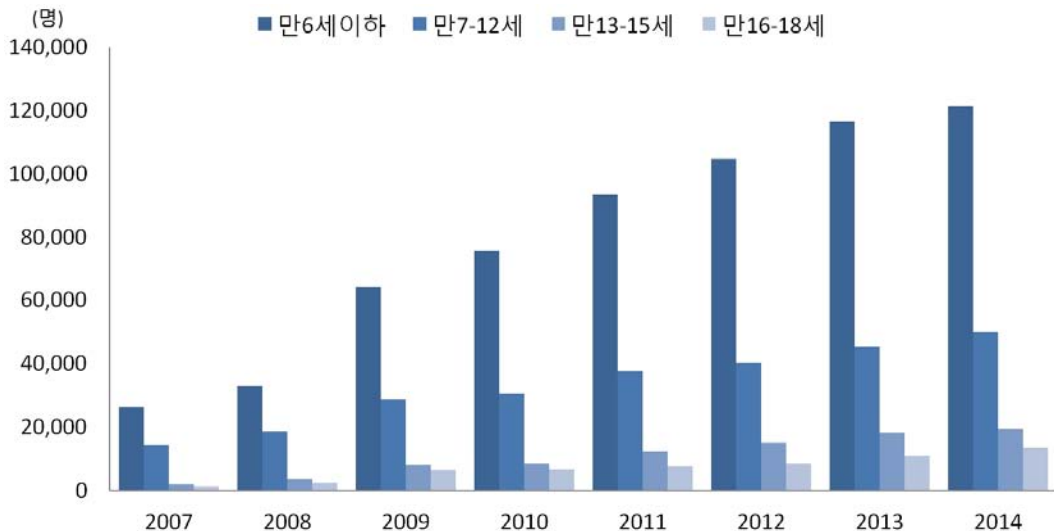
(2)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처럼 혼인과 동시에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00년대 들어 다문화가족의 수가 급증했다면 자녀들 역시 어린 자녀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의 경우 한국의 다른 일반 가족에 비해 출산율이 높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에서 자녀들의 비중은 매우 높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양적 증가에서 가구수의 증가 못지않게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자녀수의 증가 즉 가구규모의 증가이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7년 전체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14만 2,015명 중에서 18세 이하 자녀의 수는 4만 4,258명으로 1/3이 채 못 되었다. 하지만 2014년에는 전체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 29만 5,842명 중에서 자녀의 수가 20만 4,204명으로 전체의 2/3를 넘는다. 이처럼 다문화가족 구성원 수에서 자녀수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00년대 들어 급증한 다문화가족이 대부분 갓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고 게다가 한국의 일반 가족들에 비해 다문화가족의 출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2007년이나 2014년이나 모두 만 6세 이하 자녀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어린 자녀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주목할 점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할 연령의 자녀들이 급증했다는 점이다. 만 13세에서 18세 사이 연령의 자녀들은 2007년 3,421명에서 2014년 3만 2,96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증가는 향후 한국의 사회통합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2007-2014)



출처: 안전행정부, 외국인주민현황통계 (최초작성년도: 2007년)

주: 1)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11.4.4 개정, '11.10.5 시행)으로 인해 2012년부터는 혼인귀화자 외에 기타사유 국적취득자도 다문화가족에 포함함.

2) 2009년 자녀수의 큰 증가는 '09년도부터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정보를 활용하여 조사한 것이 원인임.

다문화가족 자녀 연령별 현황(2007~2014)

(단위: 명)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만6세이하	26,445	33,140	64,040	75,776	93,537	104,694	116,696	121,310
만7-12세	14,392	18,691	28,922	30,587	37,590	40,235	45,156	49,929
만13-15세	2,080	3,672	8,082	8,688	12,392	15,038	18,395	19,499
만16-18세	1,341	2,504	6,645	6,884	7,635	8,616	11,081	13,466
계	44,258	58,007	107,689	121,935	151,154	168,583	191,328	204,204

3. 건강

1) 건강상태

(1)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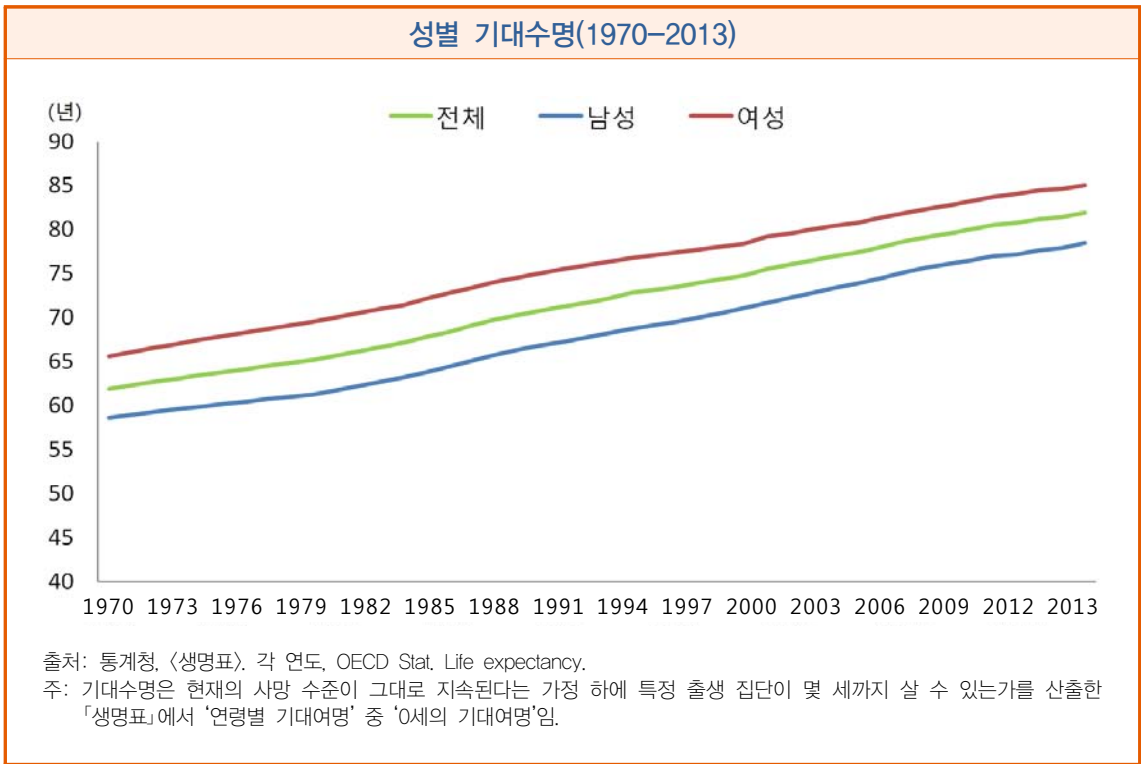
기대수명에 대한 통계는 통계청 <생명표>에서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된 성별 기대수명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로는 2014년 WHO에서 작성한 <World Health Statistics 2014> 중 주요국의 기대수명(1955년부터 2020년 추계자료까지의)에 관한 자료가 있다.

대한민국의 성별 기대수명은 1970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다. 1970년과 2013년을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의 수명은 평균적으로 20년 늘어나, 남성의 경우 19.8년, 여성의 경우 19.5년 더 오래 산다. 성별로 관찰하면 여자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긴 경향이 있다. 1970년에 남성의 평균수명이 58.7세, 여성의 평균수명이 65.6세로서 6.9세 차이가 났는데, 2013년에는 남성 수명이 78.5세, 여성 수명이 85.1세로 늘어났고, 그 차이는 여전히 6.6세이다. 이러한 남녀 간 수명 차이는 주요 국가들보다 큰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의 기대수명을 미국, 일본, 중국과 비교해보면, 1970년에는 61.9세로서 4개국 중 가장 기대수명이 짧았지만, 1986년에 69.1세로 중국을 추월했으며, 2002년에는 77.0세로 미국을 추월하였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의 상승 속도는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처럼 기대수명이 급속히 늘어난 배경에는 한국전쟁이후의 혼란과 가난의 시기를 거치면서 매우 높았던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진 점, 경제성장의 결과 현대적인 병원시설과 의료인력이 늘어난 점, 그리고 건강보험의 확대에 의해 국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이 낮아진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대수명은 평균적인 수명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의 질적 측면을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한다.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행동의 제약이 많은 이들이 증가하면, 기대수명이 길어진다고 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건강수명이 중요한데, 한국인의 건강수명(유병기간 제외)은 2012년 66.0세로서 2012년의 기대수명인 81.4세와는 약 15.4년의 차이가 난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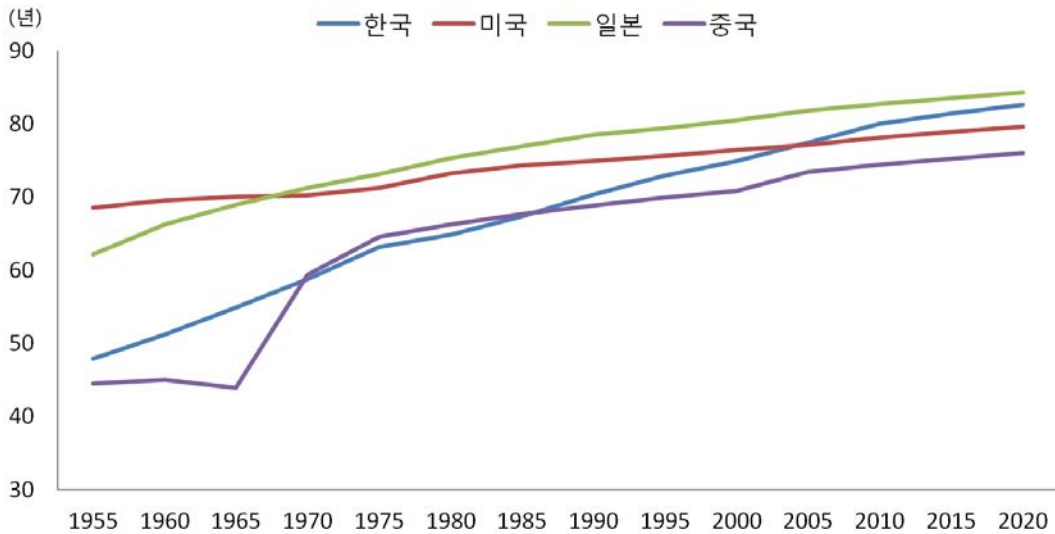
Ⅰ 성별 기대수명(1970-2013)

(단위: 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전체	61.9	63.8	65.7	68.4	71.3	73.5	76.0	78.6	80.8	81.2	81.4	81.9
남성	58.7	60.2	61.8	64.5	67.3	69.6	72.3	75.1	77.2	77.7	78.0	78.5
여성	65.6	67.9	70.0	72.8	75.5	77.4	79.6	81.9	84.1	84.5	84.6	85.1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ld health statistics 2015.*, 2015.

주요국의 기대수명(1955-2020)



출처: WHO, <World Health Statistics 2014>, 2014

주: 1)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전체 인구의 평균 질병 및 장애 기간을 제외한 수명임.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주요국의 기대수명(1955-2020)

(단위: 년)

국가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한국	47.9	51.2	54.9	58.8	63.2	64.9	67.4	70.4	72.9	74.9	77.4	80.0	81.4	82.6
미국	68.6	69.6	70.1	70.3	71.3	73.2	74.3	74.9	75.6	76.4	77.1	78.1	78.9	79.6
일본	62.2	66.3	69.0	71.3	73.1	75.3	76.9	78.5	79.4	80.5	81.8	82.7	83.5	84.3
중국	44.6	45.0	44.0	59.4	64.6	66.3	67.7	68.9	70.0	70.9	73.4	74.4	75.2	76.0

(2)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통계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의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조사된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연령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가 있다.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통계로는 2012년 OECD의 <Health at a Glance: Europe> 및 2014년 OECD의 <OECD Health Data 2014>을 근거로 한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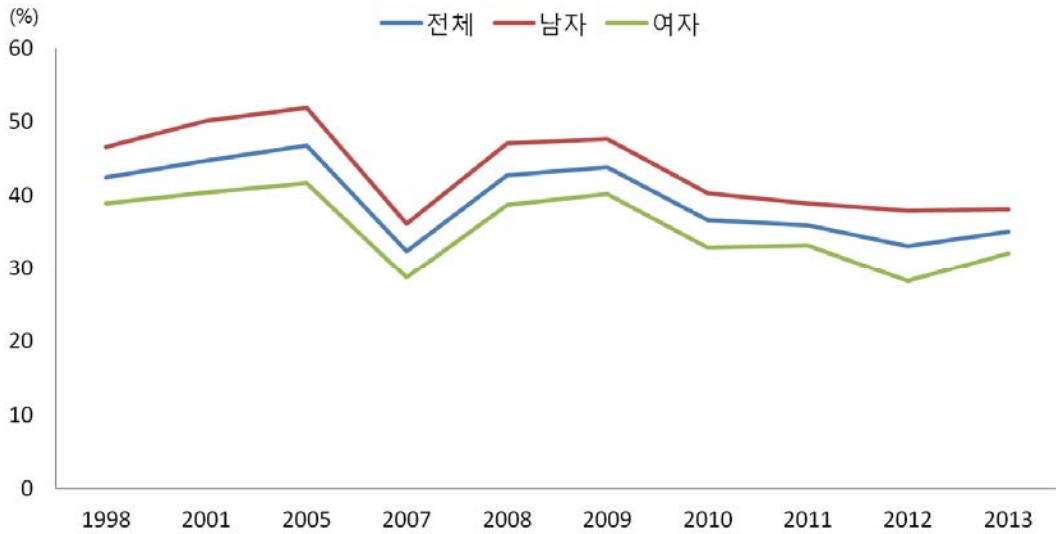
OECD 주요국의 건강인지율 자료가 있다.

먼저 주관적 건강상태는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건강상태에 대해 물었을 때 ‘ 좋음 ’ 혹은 ‘ 매우 좋음 ’으로 대답한 응답자 수를 전체 조사대상자수로 나누어 그 백분율을 측정한 것이다. 1998년부터 2013년 자료에서 나타난 바로, 주관적 건강상태가 최하로 나타난 해는 2007년 32.4%이며, 최대로 나타난 해는 2005년 46.8%이다.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시간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모든 기간에 걸쳐 남성의 주관적 건강상태가 여성의 주관적 건강상태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연령대별로는 20대, 30대 및 40대 등의 상대적으로 젊은 층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좋다고 인식하는 반면, 50대, 60대, 7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를 나쁘게 인지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성별 연령별로 주관적 건강상태를 다르게 인식한다는 것은 집단별 차이가 실제 건강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국제적인 자료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살펴보면, OECD 가입국가 중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터키, 포르투갈, 프랑스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들이 스스로 건강하다고 인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 포르투갈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모두 60% 이상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지난 20여 년간 32~47%에 머물고 있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인의 수명이 평균수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만큼 객관적인 건강상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실제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매우 불안해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1998-2013)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주: 1) 주관적 건강상태 = (만 19세 이상 건강상태 '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응답자 수 ÷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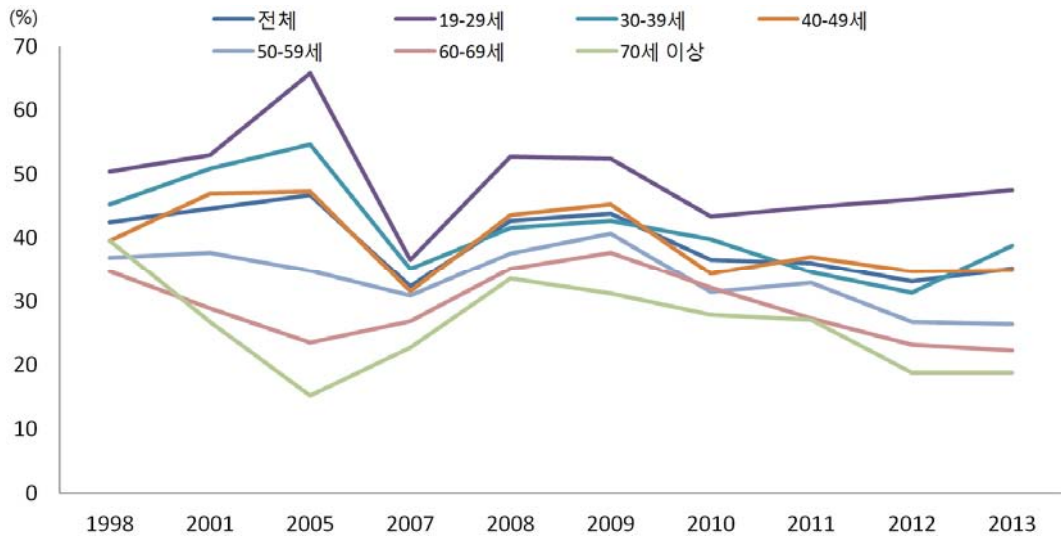
2) 전체 및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1998-2013)

(단위: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42.5	44.7	46.8	32.4	42.8	43.9	36.6	36.0	33.1	35.1
남자	46.6	50.2	52.0	36.2	47.1	47.7	40.3	38.9	37.9	38.1
여자	38.9	40.4	41.7	28.7	38.7	40.2	32.9	33.2	28.3	32.1

연령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1998-2013)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주: 1) 주관적 건강상태 = (만 19세 이상 건강상태 ' 좋음' 또는 '매우 좋음' 응답자 수 ÷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수)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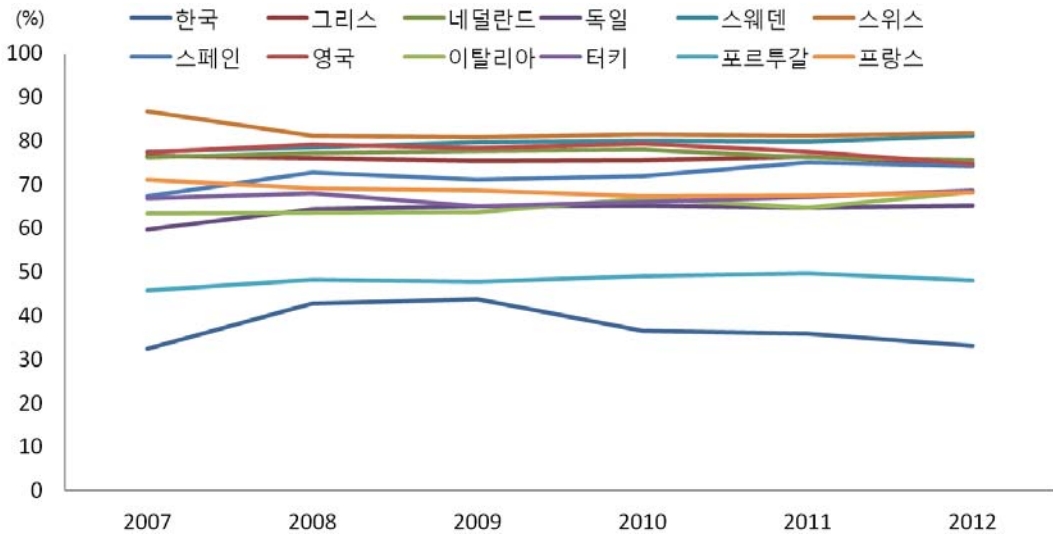
2) 전체 및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연령집단별 주관적 건강상태(1998-2013)

(단위: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42.5	44.7	46.8	32.4	42.8	43.9	36.6	36.0	33.1	35.1
19-29세	50.4	53.0	65.9	36.6	52.8	52.5	43.4	44.9	46.1	47.6
30-39세	45.3	50.9	54.7	35.2	41.6	42.8	39.8	34.6	31.4	38.8
40-49세	39.6	47.0	47.3	31.6	43.6	45.3	34.4	37.1	34.7	34.9
50-59세	36.9	37.7	34.8	30.9	37.6	40.7	31.5	32.9	26.8	26.4
60-69세	34.7	28.9	23.5	26.9	35.2	37.7	32.1	27.3	23.2	22.3
70세 이상	39.6	26.8	15.3	22.8	33.6	31.3	27.9	27.1	18.8	18.9

OECD 주요국의 주관적 건강상태(2007-2012)



출처: OECD, <Health at a Glance: Europe>, 2012. OECD, <OECD health data>, 2014.
 주: 건강인지율은 전체 인구 중 평소 본인의 건강이 '좋다'라고 평가한 사람의 비율임. 한국은 만 19세 이상, 그 외 유럽 국가는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함.

OECD 주요국의 주관적 건강상태(200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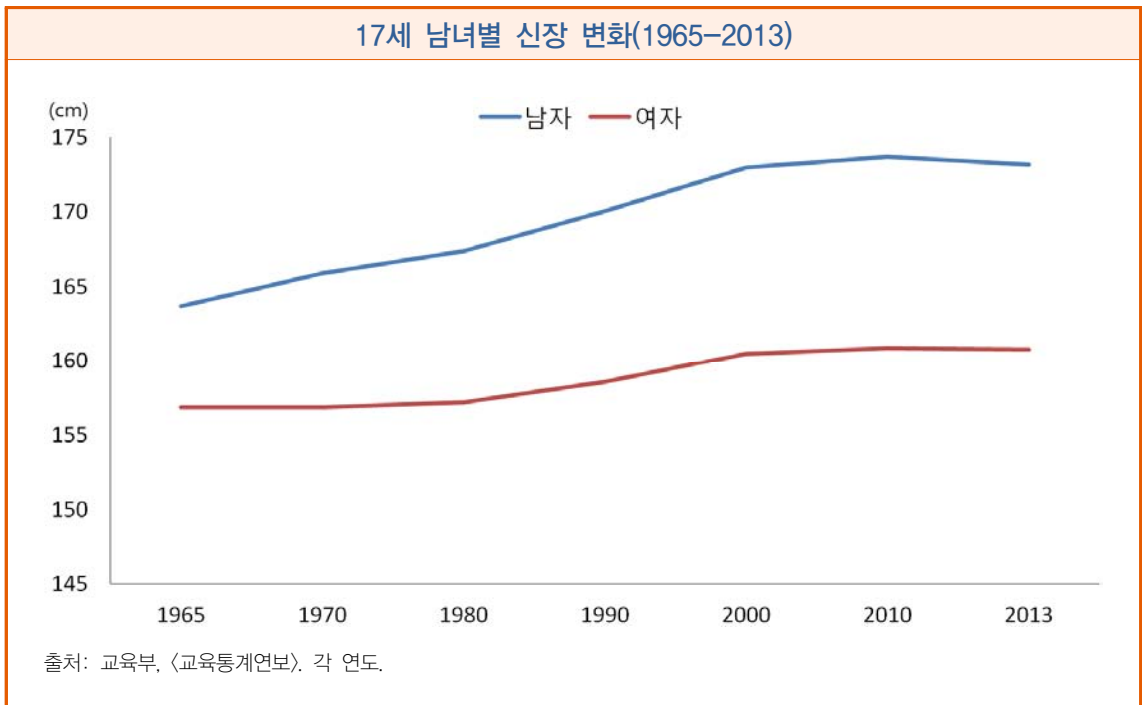
(단위: %)

국 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 국	32.4	42.8	43.9	36.6	36.0	33.1
그 리 스	76.5	76.0	75.4	75.5	76.4	74.8
네 델 란 드	76.3	77.3	77.7	78.0	76.3	75.6
독 일	59.8	64.4	65.1	65.2	64.8	65.3
스 웨 덴	77.6	78.5	79.7	80.0	79.9	81.1
스 위 스	86.7	81.2	80.8	81.5	81.2	81.9
스 페 인	67.4	72.8	71.1	71.9	75.1	74.3
영 국	77.4	79.2	78.3	79.4	77.5	74.7
이 탈 리 아	63.4	63.5	63.8	66.8	64.7	68.4
터 키	66.8	68.0	65.1	66.0	67.2	68.6
포 르 투 갈	45.8	48.3	47.7	49.1	49.7	48.1
프 랑 스	71.1	69.1	68.6	67.3	67.6	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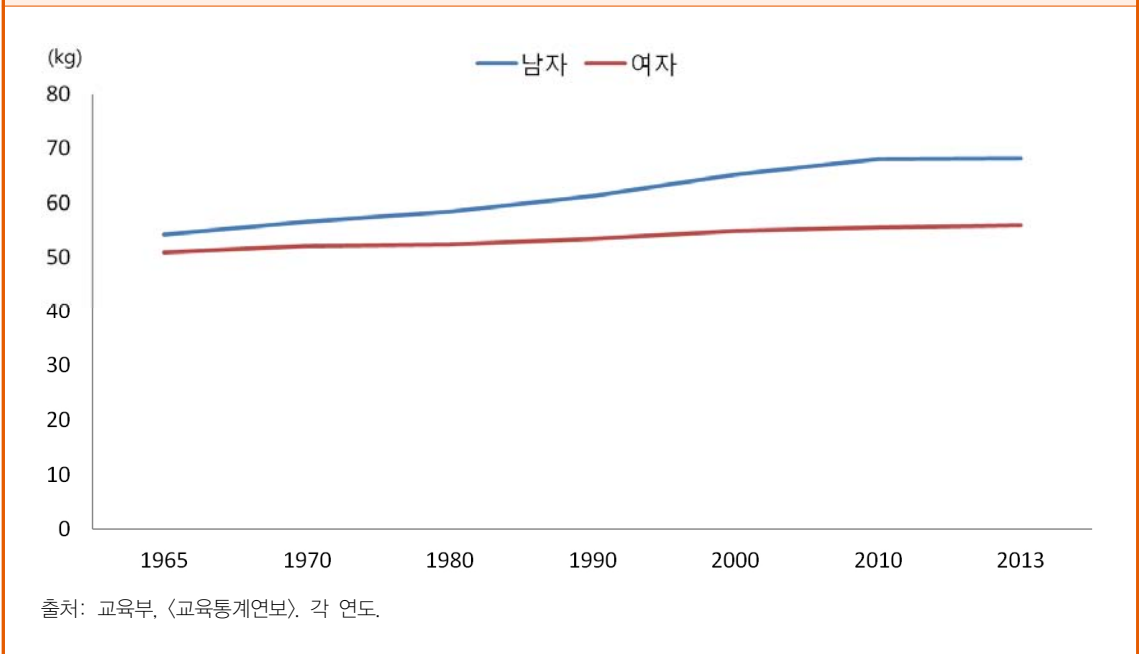
(3) 신장 · 체중 변화

한국인의 신장 및 체중의 변화는 교육부의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1965년부터 2013년까지 17세 남녀별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17세 남녀별 평균 신장은 1965년부터 2000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1965년과 비교해 2000년 남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10cm 커졌으며, 여학생의 경우 평균적으로 3.6cm 커졌다. 2000년 이후 남학생의 경우 173cm 대에서, 여학생의 경우 160cm 대에서 평균신장이 나타나고 있다. 17세 남녀별 평균 체중의 경우, 1965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한 증가세에 있다. 남학생의 경우 1965년 54.3kg에서 2013년 68.2kg으로 13.9kg 증가했으며, 여학생의 경우 1965년 51kg에서 2013년 56kg으로 5kg이 증가했다.

이처럼 17세 남녀의 신장과 체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경제성장의 결과로 영양섭취가 개선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한창 성장판이 열리는 나이에 적절하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신장과 체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0년대 이후에 그 성장이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주목을 요한다.



17세 남녀별 체중 변화(1965-2013)



17세 남녀별 신장 변화 · 17세 남녀별 체중 변화(1965-2013)

(단위: cm, kg)

		196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신장	남자	163.7	165.9	167.4	170.1	173.0	173.7	173.2
	여자	156.9	156.9	157.2	158.6	160.5	160.9	160.8
체중	남자	54.3	56.6	58.5	61.3	65.3	68.1	68.2
	여자	51.0	52.2	52.4	53.5	54.9	55.6	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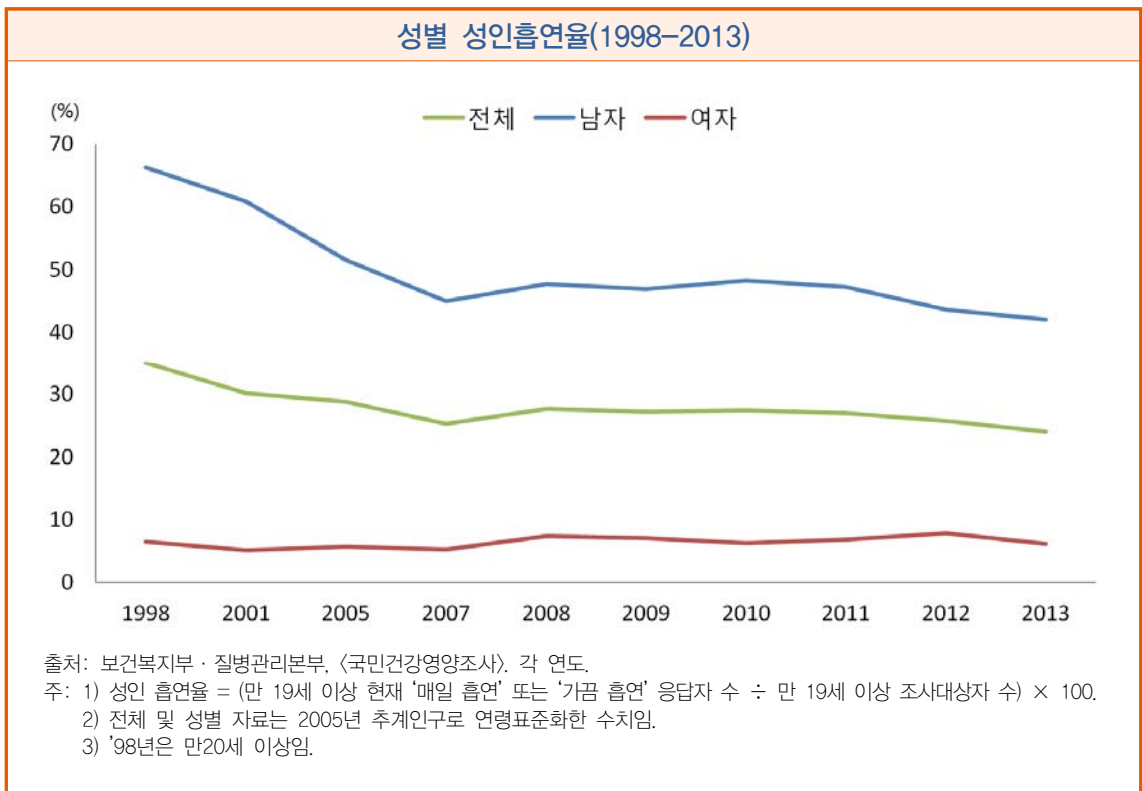
2) 건강행태

(1) 성인흡연율

성인흡연율에 관한 자료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성별, 연령집단별 성인흡연율로 찾아볼 수 있다. 국제적인 비교를 위해서는 2014년 <OECD Health Data 2014>에서 나타난 1990년부터 2012년까지 OECD 주요국의 흡연율 자료를 참고하였다.

한국인의 흡연율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특히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남성흡연율이 66.3%에서 45%까지 감소해, 총 21.3%의 감소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여성의 흡연율은 5~8% 사이이다. 연령집단별 성인흡연율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30대, 40대, 2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의 순으로 흡연율이 낮아진다. 젊은 층일수록 흡연율이 높게 나타난다.

한국은 1990년대에 43.6%의 흡연율을 보이는 터키를 제외하고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흡연율을 보였으나, 2008년 이후 OECD 평균에 근접한 정도로 흡연율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한국인의 흡연율이 낮아지는데 기여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여성 흡연율이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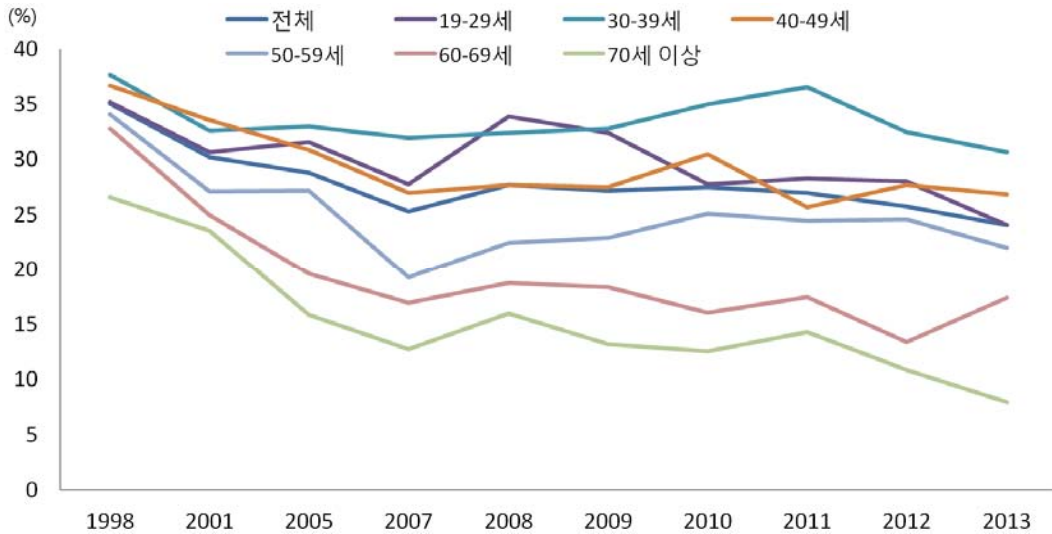


Ⅰ 성별 성인흡연율(1998-2013)

(단위: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35.1	30.2	28.8	25.3	27.7	27.2	27.5	27.0	25.8	24.1
남자	66.3	60.9	51.6	45.0	47.7	46.9	48.3	47.3	43.7	42.1
여자	6.5	5.2	5.7	5.3	7.4	7.1	6.3	6.8	7.9	6.2

연령집단별 흡연율(1998-2013)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주: 1) 성인 흡연율 = (만 19세 이상 현재 '매일 흡연' 또는 '가끔 흡연' 응답자 수 ÷ 만 19세 이상 조사대상자 수) × 100.

2) 전체 및 성별 자료는 2005년 추계인구로 연령표준화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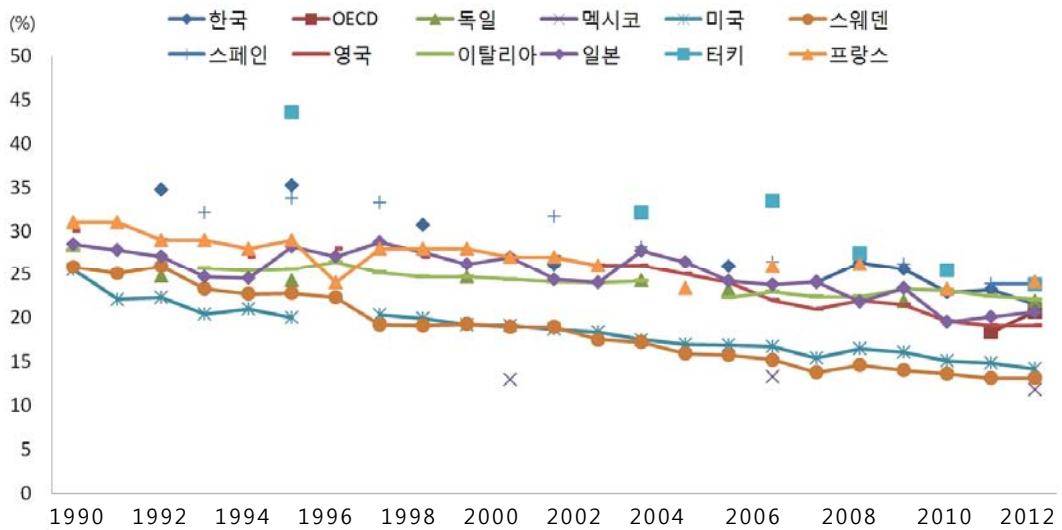
3) '98년은 만20세 이상임.

연령집단별 흡연율(1998-2013)

(단위: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35.1	30.2	28.8	25.3	27.7	27.2	27.5	27.0	25.8	24.1
19-29세	35.2	30.7	31.6	27.8	33.9	32.4	27.8	28.3	28.0	24.1
30-39세	37.7	32.6	33.0	32.0	32.4	32.8	35.0	36.6	32.5	30.7
40-49세	36.7	33.6	30.9	27.0	27.7	27.5	30.5	25.7	27.7	26.9
50-59세	34.1	27.1	27.2	19.3	22.5	22.9	25.1	24.5	24.6	22.0
60-69세	32.8	25.0	19.6	17.0	18.8	18.4	16.1	17.5	13.4	17.4
70세 이상	26.6	23.6	15.9	12.8	16.0	13.2	12.6	14.3	10.9	8.0

OECD 주요국의 흡연율(1990-2012)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주: 1) 흡연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흡연하는 사람의 비율임.

2) 독일은 2009년, 영국, 스페인은 2011년, OECD 평균은 2012년 수치임.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흡연율(1990-2012)

(단위: %)

국가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	-	34.7	-	-	35.2	-	-	30.7	-	-	26.1
OECD	-	-	-	-	-	-	-	-	-	-	-	-
미국	25.5	22.1	22.3	20.4	21.0	20.0	-	20.3	19.9	19.2	19.1	18.7
영국	30.0	-	29.0	-	27.0	-	-	-	27.0	-	27.0	27.0
독일	-	-	24.8	-	-	24.3	-	-	-	24.7	-	-
프랑스	31.0	31.0	29.0	29.0	28.0	29.0	24.0	28.0	28.0	28.0	27.0	27.0
스웨덴	25.8	25.1	25.9	23.3	22.7	22.8	22.3	19.2	19.1	19.3	18.9	18.9
스페인	-	-	-	32.1	-	33.7	-	33.2	-	-	-	31.7
이탈리아	27.8	-	-	25.7	25.4	25.6	26.4	25.2	24.7	24.7	24.4	24.1
터키	-	-	-	-	-	43.6	-	-	-	-	-	-
멕시코	-	-	-	-	-	-	27.1	-	-	-	12.9	-
일본	28.5	27.8	27.1	24.7	24.5	28.2	-	28.7	27.6	26.2	27.0	2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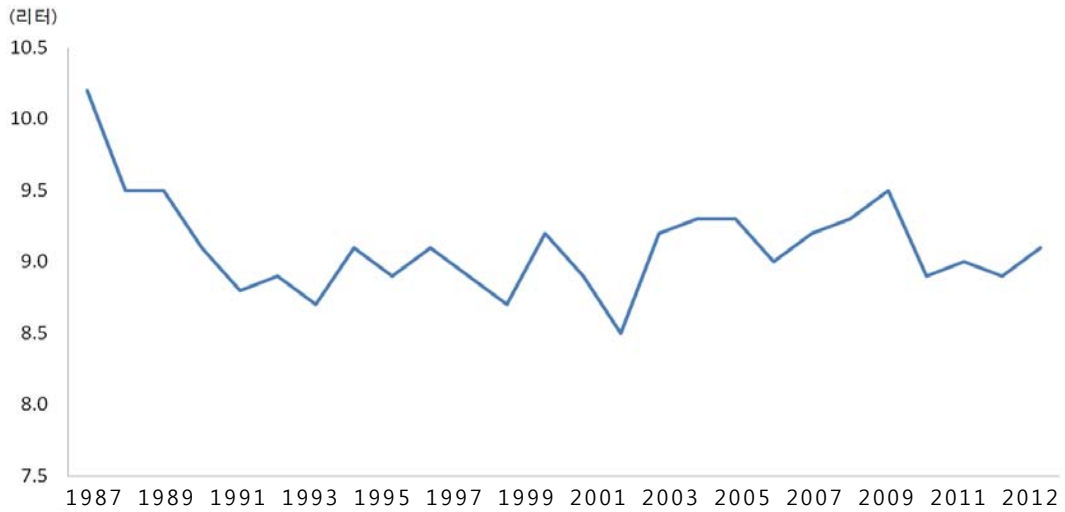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	-	-	25.9	-	24.0	26.3	25.6	22.9	23.2	21.6
OECD	-	-	-	-	-	-	-	-	-	18.4	20.7
미국	18.4	17.5	17.0	16.9	16.7	15.4	16.5	16.1	15.1	14.8	14.2
영국	26.0	26.0	25.0	24.0	22.0	21.0	22.0	21.5	19.6	19.1	19.1
독일	-	24.3	-	23.2	-	-	-	21.9	-	-	21.9
프랑스	26.0	-	23.4	-	25.9	-	26.2	-	23.3	-	24.1
스웨덴	17.5	17.2	15.9	15.7	15.2	13.8	14.6	14.0	13.6	13.1	13.1
스페인	-	28.1	-	-	26.4	-	-	26.2	-	23.9	23.9
이탈리아	24.0	24.2	-	22.3	23.0	22.4	22.4	23.3	23.1	22.5	22.1
터키	-	32.1	-	-	33.4	-	27.4	-	25.4	-	23.8
멕시코	-	-	-	-	13.3	-	-	-	-	-	11.8
일본	24.0	27.7	26.4	24.2	23.8	24.1	21.8	23.4	19.5	20.1	20.7

(2) 음주율(1인당 알코올소비량)

한국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은 눈에 띄는 추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1987년에 조사된 1인당 알코올소비량 조사결과가 10.2리터라는 최대치로 나타나고, 이후 8.5리터~9.5리터 수준에서 1인당 알코올소비량이 나타나고 있다. 즉, 최근 10여년의 추이를 살펴볼 때 한국인은 1년 동안 평균적으로 8.5~9.5리터의 알코올을 섭취하고 있다. 음주율은 생활습관과 관련하여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인 음주율은 약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도 음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성의 음주율은 81.9%, 여성의 음주율은 57.2%에 달한다. 그 중 1회 음주량이 소주 1병 분량이고 주 2회 이상 음주하는 경우를 '고위험 음주자'라고 하는데, 그 비율은 2012년에 남자의 21.8%, 여자의 6.0%에 달한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은 OECD 주요국의 중간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대상 국가 중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이다. 문제는 장기적 추세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알콜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인의 음주량은 큰 변화가 없다. 이는 한국이 여전히 '술 권하는 사회'의 특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인당 알코올소비량(1987-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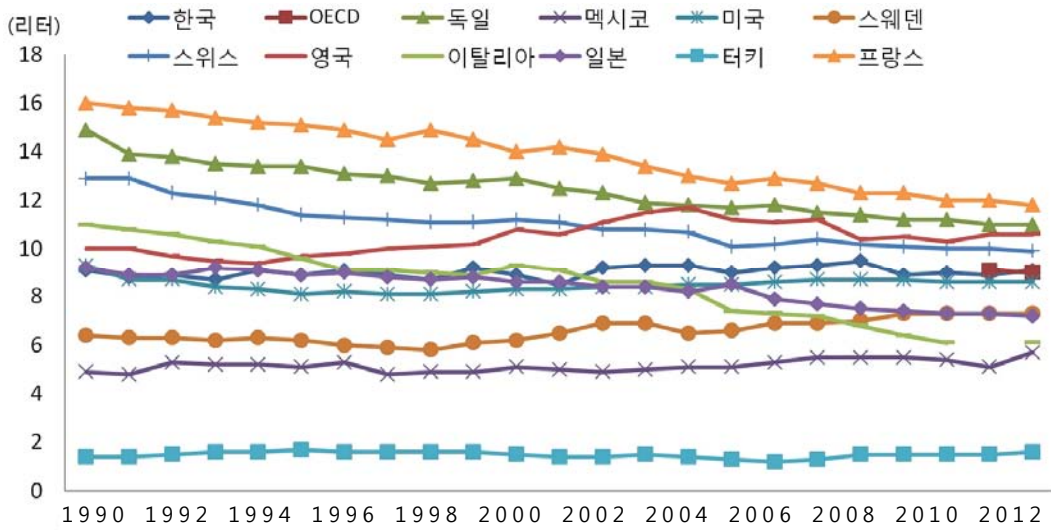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각 연도.
 주: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

1인당 알코올소비량(1987-2012)

(단위: 리터)

1987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10.2	9.1	8.9	8.9	9.0	9.2	9.3	9.5	8.9	9.0	8.9	9.1

OECD 주요국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1990-2012)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주: 1) 만 15세 이상 인구 기준임.

2) 이탈리아는 2010년, 영국과 미국은 2011년 자료임.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1인당 알코올소비량(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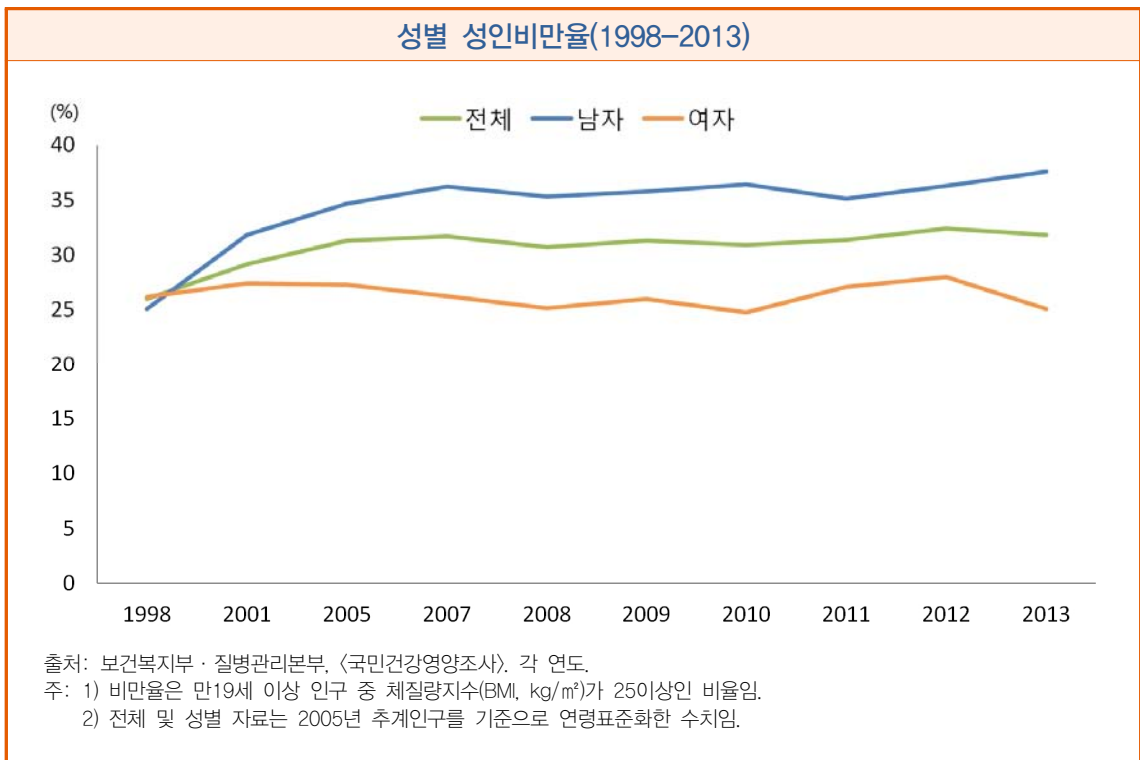
(단위: 리터)

국가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9.1	8.9	8.9	9.0	9.2	9.3	9.5	8.9	9.0	8.9	9.1
OECD	-	-	-	-	-	-	-	-	-	9.1	9.0
프랑스	16.0	15.1	14.0	12.7	12.9	12.7	12.3	12.3	12.0	12.0	11.8
독일	14.9	13.4	12.9	11.7	11.8	11.5	11.4	11.2	11.2	11.0	11.0
영국	10.0	9.7	10.8	11.2	11.1	11.2	10.4	10.5	10.3	10.6	10.6
스위스	12.9	11.4	11.2	10.1	10.2	10.4	10.2	10.1	10.0	10.0	9.9
미국	9.3	8.1	8.3	8.5	8.6	8.7	8.7	8.7	8.6	8.6	8.6
스웨덴	6.4	6.2	6.2	6.6	6.9	6.9	7.0	7.3	7.3	7.3	7.3
일본	9.2	8.9	8.6	8.5	7.9	7.7	7.5	7.4	7.3	7.3	7.2
이탈리아	11.0	9.6	9.3	7.4	7.3	7.2	6.8	6.4	6.1	-	6.1
멕시코	4.9	5.1	5.1	5.1	5.3	5.5	5.5	5.5	5.4	5.1	5.7
터키	1.4	1.7	1.5	1.3	1.2	1.3	1.5	1.5	1.5	1.5	1.6

(3) 비만율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성인비만율의 추이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1998년 26%의 성인이 비만에 해당했던 데 비해 2013년 31.8%의 성인이 비만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면, 비만 인구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남녀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여성의 비만율이 25~28% 선에서 유지되고 있는 반면, 남성 비만율이 1998년 25.1%에서 2013년 37.6%로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들 중심의 다이어트 열풍이 어느정도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 20대 비만율이 중장년층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20대의 경우에도 1998년과 2013년의 비만율을 비교하면 7.2%p나 증가한 것이어서, 지속적인 영양상태 개선이 과영양의 상황까지 이르렀고, 반면에 신체활동은 충분히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제비교를 통해서 보면 한국인의 비만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룩셈부르크, 미국, 영국, 일본, 체코, 캐나다, 호주의 성별 비만율과 한국의 성별 비만율을 비교하면, 한국의 비만율은 OECD 주요국들 중에서 일본의 비만율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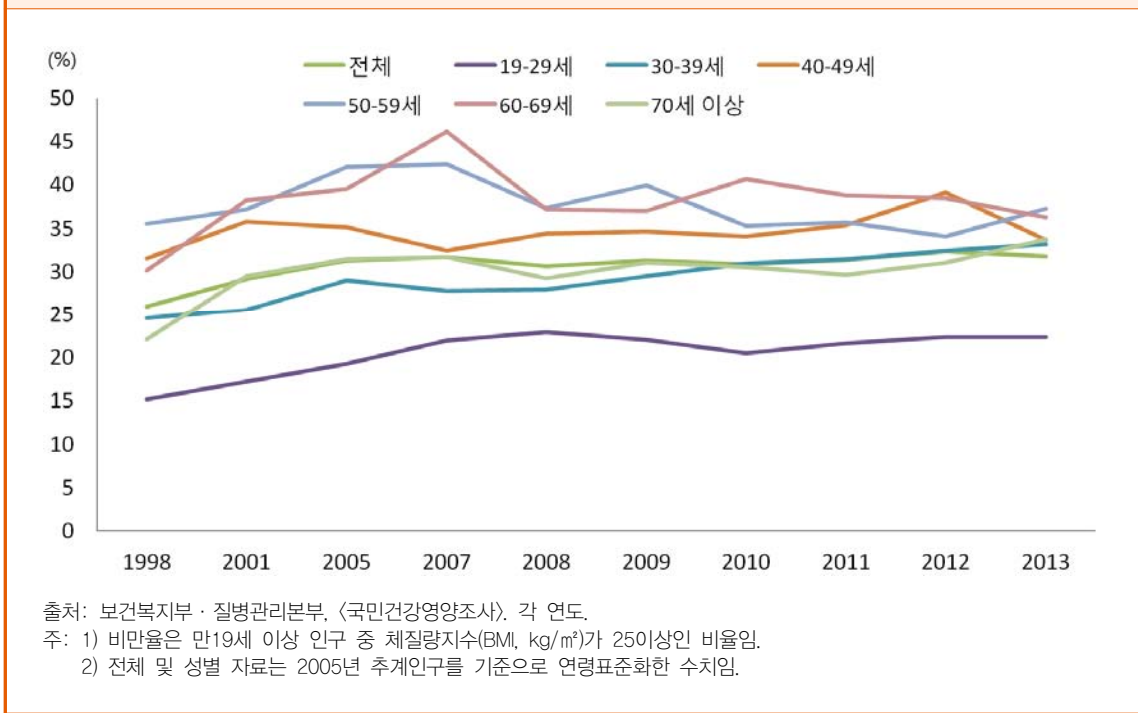


성별 성인비만율(1998-2013)

(단위: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6.0	29.2	31.3	31.7	30.7	31.3	30.9	31.4	32.4	31.8
남자	25.1	31.8	34.7	36.2	35.3	35.8	36.4	35.1	36.3	37.6
여자	26.2	27.4	27.3	26.3	25.2	26.0	24.8	27.1	28.0	25.1

연령집단별 성인비만율(1998-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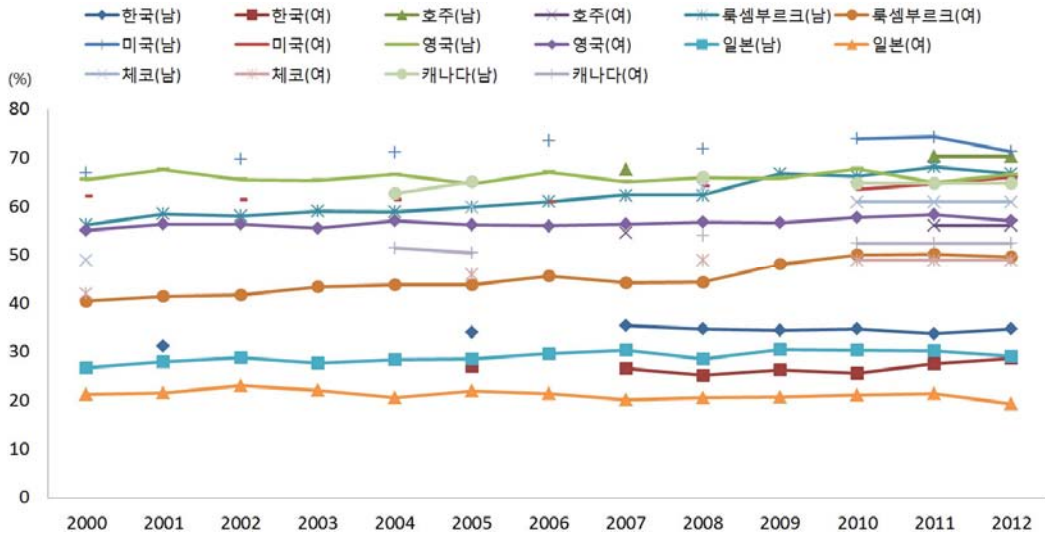


연령집단별 성인비만율(1998-2013)

(단위: %)

	1998	2001	2005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26.0	29.2	31.3	31.7	30.7	31.3	30.9	31.4	32.4	31.8
19-29세	15.2	17.3	19.3	22.0	23.0	22.1	20.5	21.7	22.4	22.4
30-39세	24.6	25.6	29.0	27.8	28.0	29.5	31.0	31.5	32.5	33.2
40-49세	31.6	35.8	35.2	32.5	34.4	34.7	34.1	35.4	39.2	33.7
50-59세	35.6	37.2	42.1	42.4	37.4	40.0	35.3	35.7	34.1	37.3
60-69세	30.2	38.3	39.6	46.2	37.2	37.0	40.7	38.8	38.5	36.3
70세 이상	22.2	29.5	31.5	31.7	29.3	31.1	30.6	29.7	31.1	33.8

OECD 주요국의 성별 비만율(2000-2012)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주: 1) 비만율은 만15세 이상 대상자 중 체질량지수(BMI, kg/m²)가 25이상이인 비율임. 체질량지수는 직접 계측방식으로 측정되었음.

2) 체코, 캐나다는 2010년, 호주는 2011년 자료임.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성별 비만율(2000-2012)

(단위: %)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남자	-	31.2	-	-	-	34.0	-	35.4	34.8	34.5	34.8	33.7	34.8
	여자	-	28.0	-	-	-	27.1	-	26.6	25.2	26.4	25.7	27.6	28.7
룩셈부르크	남자	56.3	58.6	58.1	59.1	59.0	59.9	61.1	62.4	62.4	66.8	66.2	68.2	66.8
	여자	40.5	41.4	41.7	43.4	43.9	43.9	45.7	44.3	44.4	48.2	50.2	50.3	49.7
미국	남자	67.0	-	69.8	-	71.1	-	73.6	-	71.9	-	74.0	74.3	71.3
	여자	62.0	-	61.4	-	61.3	-	61.0	-	64.1	-	63.6	64.7	66.1
영국	남자	65.5	67.6	65.5	65.4	66.6	64.7	67.1	65.1	65.9	65.8	67.8	65.0	66.6
	여자	55.2	56.4	56.5	55.6	57.1	56.3	56.1	56.4	56.9	56.7	57.8	58.4	57.2
일본	남자	26.8	28.0	28.9	27.8	28.4	28.6	29.7	30.4	28.6	30.5	30.4	30.3	29.1
	여자	21.3	21.6	23.1	22.2	20.6	22.0	21.4	20.2	20.6	20.8	21.1	21.5	19.4
체코	남자	49.0	-	-	-	-	60.0	-	-	64.0	-	61.0	61.0	61.0
	여자	42.0	-	-	-	-	46.0	-	-	49.0	-	49.0	49.0	49.0
캐나다	남자	-	-	-	-	62.7	65.1	-	-	66.1	-	64.8	64.8	64.8
	여자	-	-	-	-	51.6	50.5	-	-	54.1	-	52.5	52.5	52.5
호주	남자	-	-	-	-	-	-	-	67.7	-	-	-	70.3	70.3
	여자	-	-	-	-	-	-	-	54.7	-	-	-	56.2	56.2

3) 보건의료서비스

(1) 보건의료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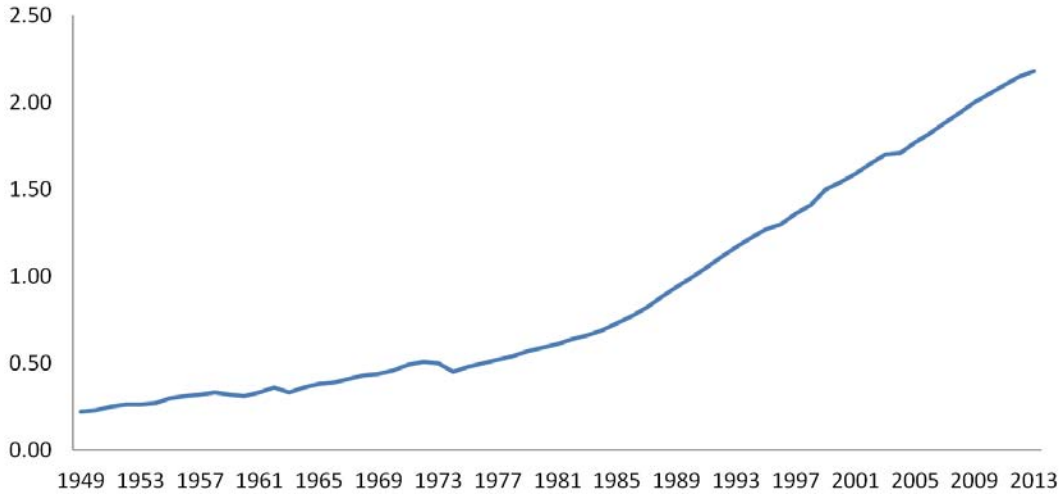
보건의료인은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인적 자원이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의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960년부터 꾸준히 늘어난 결과, 1960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0.31명에서 2013년 2.18명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1960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연평균 3.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의사수 증가는 의료복지의 개선을 의미한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인구 대비 의사 수가 급증하였지만, OECD 주요국(독일, 멕시코, 미국,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호주)의 2012년 평균 3.2명과 비교할 때 한국은 멕시코와 더불어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의사수가 적다는 것은 의사들의 노동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외국에 비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의료에서 기본적인 진료 이외에 환자와의 교감이나 상담, 교육 등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암시한다.

한편 한국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8년부터 2013년까지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연평균 4.63%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 기간 동안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2.7명에서 6.1명으로 2.3배 가량 증가하였다. 그 자체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대비 간호사 비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2012년 현재 한국은 OECD 평균의 5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구 천명당 의사수(1949-2013)

(인구 천명당 의사수)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별의료이용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현황>, 2014.

주: 1) 전체 통계는 면허의사수 기준이고, 시도별 통계는 의료기관종사 의사수(활동의사 수) 기준임
 2) 시도별 통계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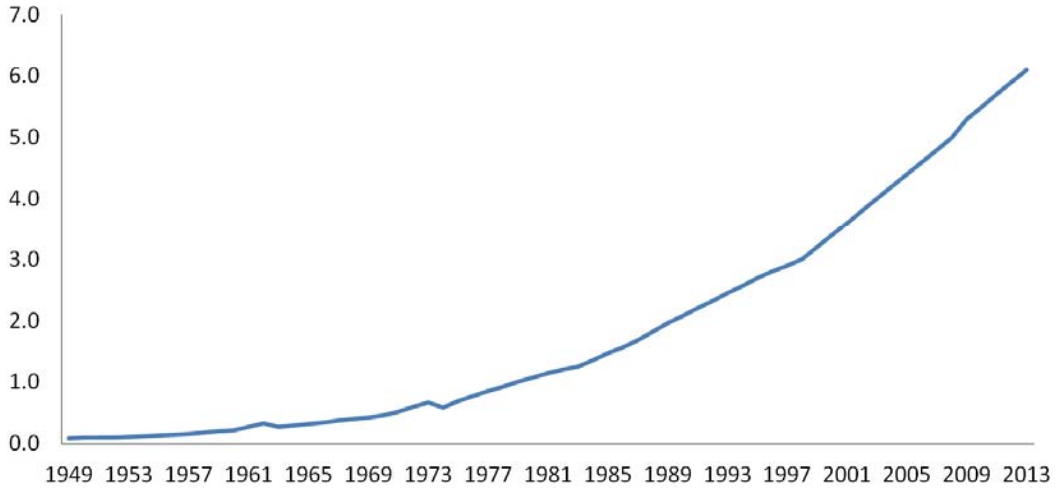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의사수(1949-2013)

(단위: 인구 천명당 의사수)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0.22	0.23	0.25	0.26	0.26	0.27	0.30	0.31	0.32	0.33	0.32	0.31	0.33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0.36	0.33	0.36	0.38	0.39	0.41	0.43	0.44	0.46	0.49	0.51	0.50	0.45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0.48	0.50	0.52	0.54	0.57	0.59	0.61	0.64	0.66	0.69	0.73	0.77	0.82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0.88	0.94	0.99	1.05	1.11	1.17	1.22	1.27	1.30	1.36	1.41	1.50	1.5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59	1.65	1.70	1.71	1.77	1.82	1.88	1.94	2.00	2.05	2.10	2.15	2.18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1949-2013)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주: 1) 간호사수는 면허간호사 기준임.

2) 2004년 이후는 사망자 및 취소자를 제외한 수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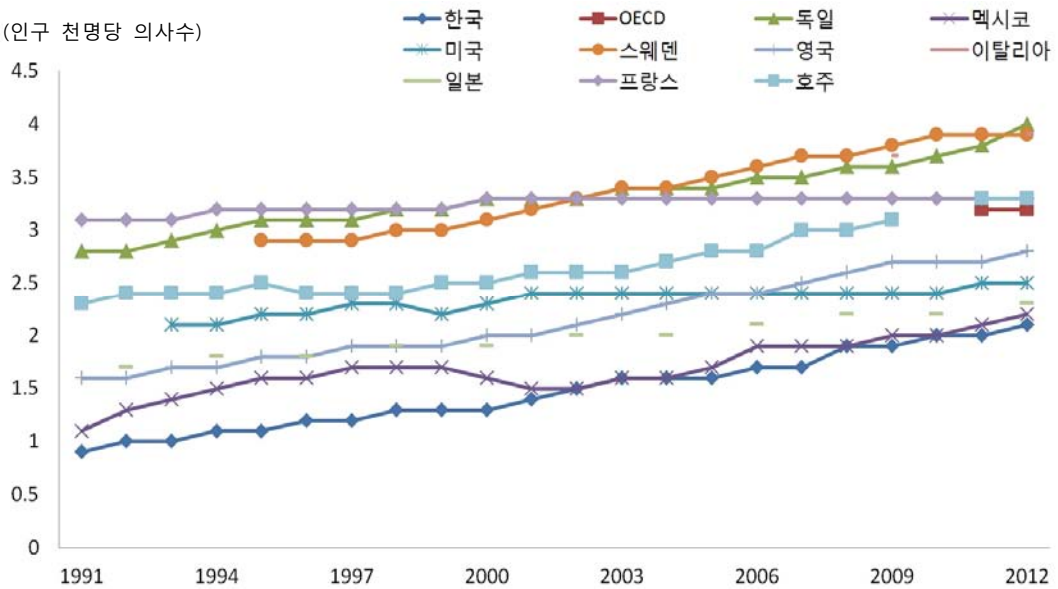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간호사 수(1949-2013)

(단위: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0.1	0.1	0.1	0.1	0.1	0.1	0.1	0.1	0.2	0.2	0.2	0.2	0.3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0.3	0.3	0.3	0.3	0.3	0.4	0.4	0.4	0.5	0.5	0.6	0.7	0.6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0.7	0.8	0.9	0.9	1.0	1.1	1.1	1.2	1.3	1.4	1.5	1.6	1.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8	2.0	2.1	2.2	2.3	2.5	2.6	2.7	2.8	2.9	3.0	3.2	3.4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6	3.8	4.0	4.2	4.4	4.6	4.8	5.0	5.3	5.5	5.7	5.9	6.1

OECD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1991-2012)

(인구 천명당 의사수)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주: 1) 의사수는 활동 중인 의사(practising doctor) 기준임.

2) 스웨덴과 미국은 2011년 자료이며, OECD 평균은 2012년 수치임.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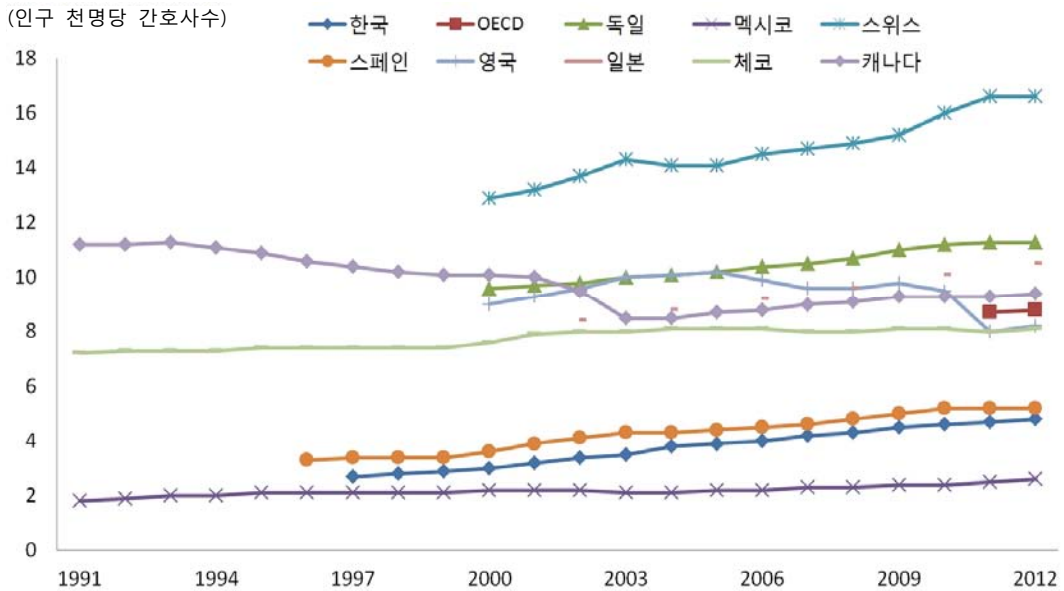
OECD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의사수(1991-2012)

(단위: 인구 천명당 의사수)

국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0.9	1.0	1.0	1.1	1.1	1.2	1.2	1.3	1.3	1.3	1.4
OECD	-	-	-	-	-	-	-	-	-	-	-
독일	2.8	2.8	2.9	3.0	3.1	3.1	3.1	3.2	3.2	3.3	3.3
스웨덴	-	-	-	-	2.9	2.9	2.9	3.0	3.0	3.1	3.2
이탈리아	-	-	-	-	-	-	-	-	-	-	-
프랑스	3.1	3.1	3.1	3.2	3.2	3.2	3.2	3.2	3.2	3.3	3.3
호주	2.3	2.4	2.4	2.4	2.5	2.4	2.4	2.4	2.5	2.5	2.6
영국	1.6	1.6	1.7	1.7	1.8	1.8	1.9	1.9	1.9	2.0	2.0
미국	-	-	2.1	2.1	2.2	2.2	2.3	2.3	2.2	2.3	2.4
일본	-	1.7	-	1.8	-	1.8	-	1.9	-	1.9	-
멕시코	1.1	1.3	1.4	1.5	1.6	1.6	1.7	1.7	1.7	1.6	1.5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1.5	1.6	1.6	1.6	1.7	1.7	1.9	1.9	2.0	2.0	2.1
OECD	-	-	-	-	-	-	-	-	-	3.2	3.2
독일	3.3	3.4	3.4	3.4	3.5	3.5	3.6	3.6	3.7	3.8	4.0
스웨덴	3.3	3.4	3.4	3.5	3.6	3.7	3.7	3.8	3.9	3.9	3.9
이탈리아	-	-	-	-	-	-	-	3.7	-	-	3.9
프랑스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3.3
호주	2.6	2.6	2.7	2.8	2.8	3.0	3.0	3.1	-	3.3	3.3
영국	2.1	2.2	2.3	2.4	2.4	2.5	2.6	2.7	2.7	2.7	2.8
미국	2.4	2.4	2.4	2.4	2.4	2.4	2.4	2.4	2.4	2.5	2.5
일본	2.0	-	2.0	-	2.1	-	2.2	-	2.2	-	2.3
멕시코	1.5	1.6	1.6	1.7	1.9	1.9	1.9	2.0	2.0	2.1	2.2

OECD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1998-2012)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주: 1) 간호사수는 활동 중인 간호사(practising nurse) 기준임.

2) 독일과 스위스는 2011년 자료이며, OECD 평균은 2012년 수치임.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1998-2013)

(단위: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

국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	-	-	-	-	-	2.7	2.8	2.9	3.0	3.2
OECD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12.9	13.2
독일	-	-	-	-	-	-	-	-	-	9.6	9.7
일본	-	-	-	-	-	-	-	-	-	-	-
캐나다	11.2	11.2	11.3	11.1	10.9	10.6	10.4	10.2	10.1	10.1	10.0
영국	-	-	-	-	-	-	-	-	-	9.0	9.3
체코	7.2	7.3	7.3	7.3	7.4	7.4	7.4	7.4	7.4	7.6	7.9
스페인	-	-	-	-	-	3.3	3.4	3.4	3.4	3.6	3.9
멕시코	1.8	1.9	2.0	2.0	2.1	2.1	2.1	2.1	2.1	2.2	2.2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3.4	3.5	3.8	3.9	4.0	4.2	4.3	4.5	4.6	4.7	4.8
OECD	-	-	-	-	-	-	-	-	-	8.7	8.8
스위스	13.7	14.3	14.1	14.1	14.5	14.7	14.9	15.2	16.0	16.6	16.6
독일	9.8	10.0	10.1	10.2	10.4	10.5	10.7	11.0	11.2	11.3	11.3
일본	8.4	-	8.8	-	9.2	-	9.6	-	10.1	-	10.5
캐나다	9.5	8.5	8.5	8.7	8.8	9.0	9.1	9.3	9.3	9.3	9.4
영국	9.6	10.0	10.1	10.2	9.9	9.6	9.6	9.8	9.5	8.0	8.2
체코	8.0	8.0	8.1	8.1	8.1	8.0	8.0	8.1	8.1	8.0	8.1
스페인	4.1	4.3	4.3	4.4	4.5	4.6	4.8	5.0	5.2	5.2	5.2
멕시코	2.2	2.1	2.1	2.2	2.2	2.3	2.3	2.4	2.4	2.5	2.6

(2) 국민의료비 비중

국민의료비 총액은 1980년 1.4조원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는 97.1조원에 달해 지난 32년간 70배 가까이 크게 증가하였다. 의료비 지출을 GDP와 대비하여 살펴보면 경제규모 대비 의료비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98년 이전까지는 4% 이내에서 유지되던 GDP 대비 국민의료비 지출 비율이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에는 7.6%에 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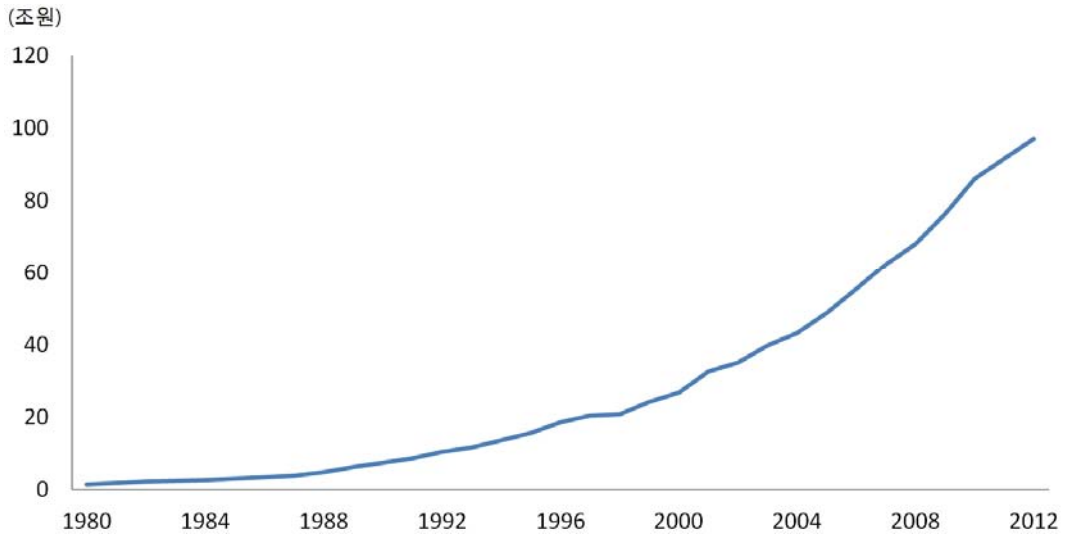
국민의료비의 빠른 증가는 소득증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인한다. 아울러 노령화에 따라 과거에는 볼 수 없던 노인형 질병과 성인병 등의 유병률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도 이유가 될 것이다. 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는

11.4%에 불과한 반면, 건강보험의 총 진료비 중에 65세 이상 노인에게 대한 진료비 비중은 33.3%에 달한다는 2011년 결과를 통해 짐작 가능하다.

한편 한국의 GDP대비 국민의료비는 OECD 주요국인 독일, 미국,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호주 등과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2012년을 기준으로 할 때,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미국이 16.9%로 가장 높았고, OECD 평균도 9.3%에 달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국민의료비 비중 7.6%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주목할 부분은 의료비 재원을 누가 부담하느냐이다. 복지국가로 진전이 많이 이루어진 나라들일수록 공공재원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을 최대화하고, 개인부담을 최소화하는 경향을 갖는다. 한국에서도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한 이후 공공부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1980년에 21.5%에 불과했던 공공부담은 점점 늘어나 2012년에는 54.5%에 달하게 되었다. 그러나 OECD국가들의 의료비 공공부담의 비중이 평균 72.3%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은 여전히 개인부담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공공의료 중 개인부담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체 의료비 부담의 비중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점에서,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의료비(1980-2012)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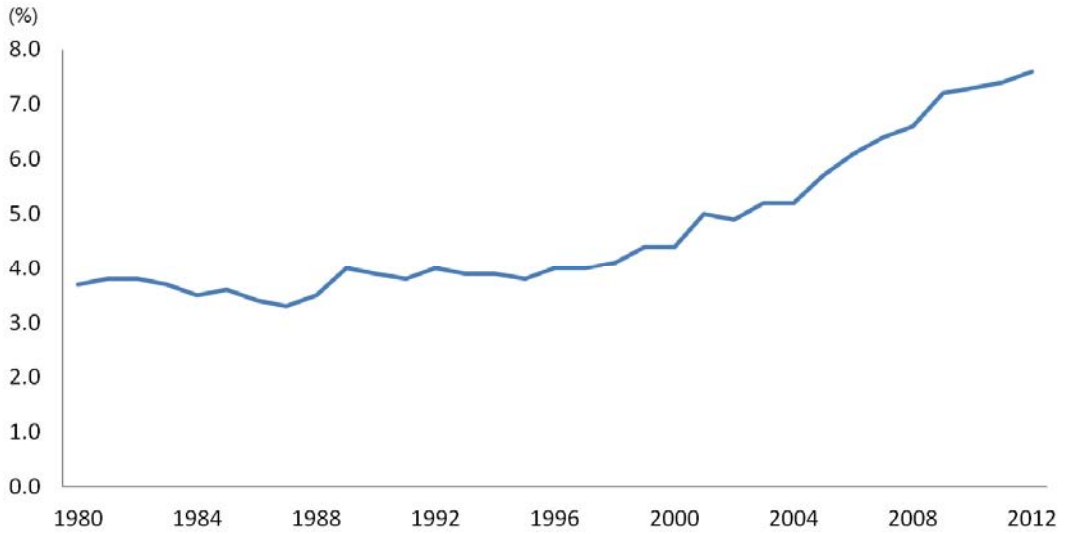
주: 2011년 추계부터 공급자 센서스 기반인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원으로 활용하였고, 시계열 유지를 위한 과거년도 수치 수정으로 과거년도 발표수치와 차이 있음.

국민의료비(1980-2012)

(단위: 조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4	1.9	2.2	2.5	2.7	3.1	3.4	3.9	4.9	6.3	7.5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8.7	10.5	11.6	13.6	15.7	18.6	20.5	20.8	24.2	26.8	32.7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35.1	39.9	43.4	48.9	55.5	62.5	68.1	76.6	86.1	91.7	97.1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1980-2012)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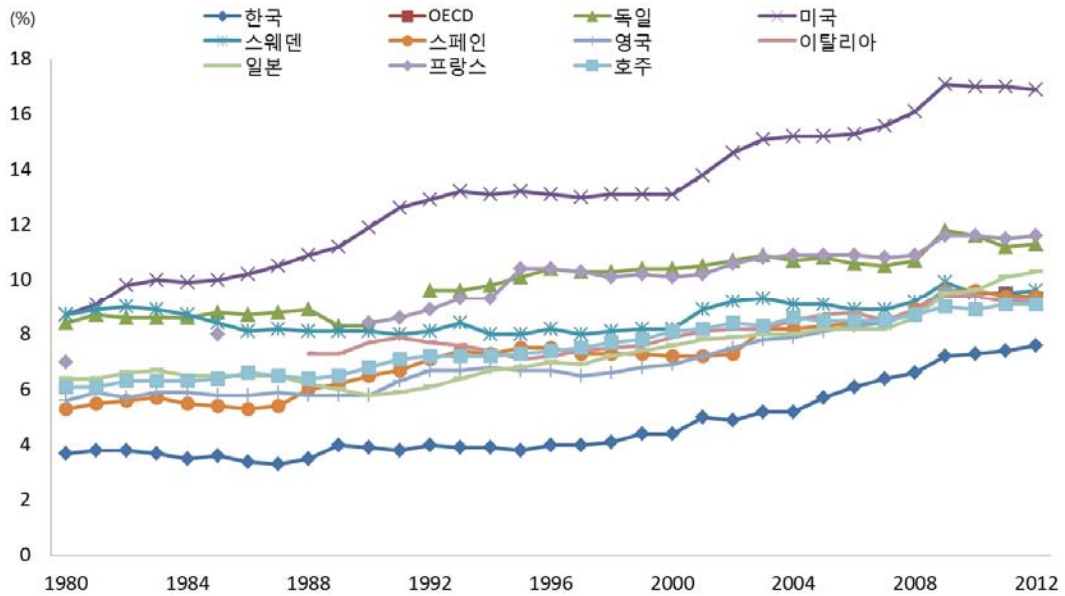
주: 2011년 추계부터 공급자 센서스 기반인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원으로 활용하였고, 시계열 유지를 위한 과거년도 수치 수정으로 과거년도 발표수치와 차이 있음.

■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1980-2012)

(단위: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3.7	3.8	3.8	3.7	3.5	3.6	3.4	3.3	3.5	4.0	3.9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3.8	4.0	3.9	3.9	3.8	4.0	4.0	4.1	4.4	4.4	5.0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4.9	5.2	5.2	5.7	6.1	6.4	6.6	7.2	7.3	7.4	7.6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1980-2012)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주: 호주와 스페인은 2011년 자료이며, OECD 평균은 2012년 수치임.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율(198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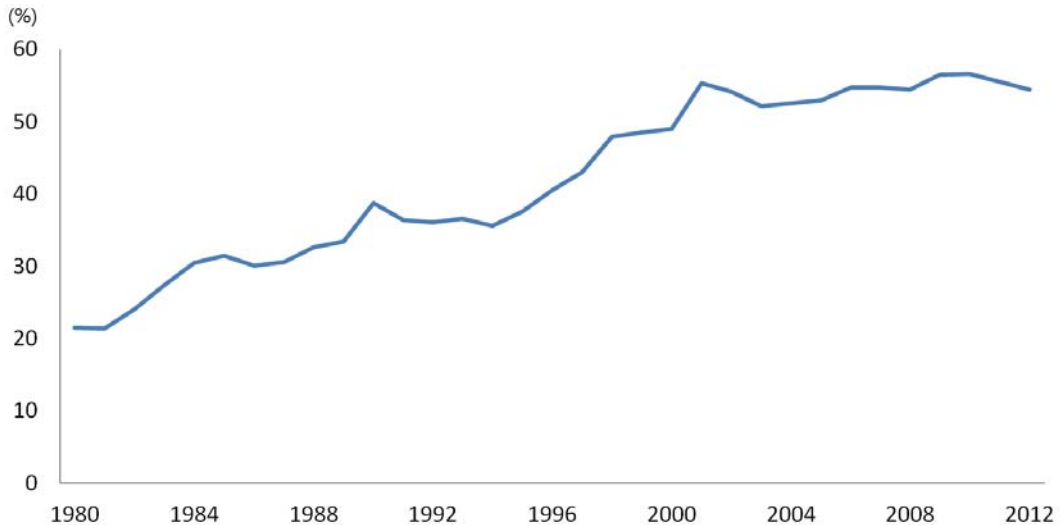
(단위: %)

국가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한국	3.7	3.8	3.8	3.7	3.5	3.6	3.4	3.3	3.5	4.0	3.9
OECD	-	-	-	-	-	-	-	-	-	-	-
독일	8.4	8.7	8.6	8.6	8.6	8.8	8.7	8.8	8.9	8.3	8.3
미국	8.7	9.1	9.8	10.0	9.9	10.0	10.2	10.5	10.9	11.2	11.9
스웨덴	8.7	8.9	9.0	8.9	8.7	8.4	8.1	8.2	8.1	8.1	8.1
스페인	5.3	5.5	5.6	5.7	5.5	5.4	5.3	5.4	6.0	6.2	6.5
영국	5.6	5.9	5.7	5.9	5.9	5.8	5.8	5.9	5.8	5.8	5.8
이탈리아	-	-	-	-	-	-	-	-	7.3	7.3	7.7
일본	6.4	6.4	6.6	6.7	6.5	6.5	6.5	6.5	6.2	6.0	5.8
프랑스	7.0	-	-	-	-	8.0	-	-	-	-	8.4
호주	6.1	6.1	6.3	6.3	6.3	6.4	6.6	6.5	6.4	6.5	6.8

국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3.8	4.0	3.9	3.9	3.8	4.0	4.0	4.1	4.4	4.4	5.0
OECD	-	-	-	-	-	-	-	-	-	-	-
독일	-	9.6	9.6	9.8	10.1	10.4	10.3	10.3	10.4	10.4	10.5
미국	12.6	12.9	13.2	13.1	13.2	13.1	13.0	13.1	13.1	13.1	13.8
스웨덴	8.0	8.1	8.4	8.0	8.0	8.2	8.0	8.1	8.2	8.2	8.9
스페인	6.7	7.1	7.4	7.3	7.5	7.5	7.3	7.3	7.3	7.2	7.2
영국	6.3	6.7	6.7	6.8	6.7	6.7	6.5	6.6	6.8	6.9	7.2
이탈리아	7.9	7.7	7.6	7.4	7.1	7.2	7.4	7.5	7.6	7.9	8.1
일본	5.9	6.1	6.4	6.7	6.8	7.0	6.9	7.2	7.4	7.6	7.8
프랑스	8.6	8.9	9.3	9.3	10.4	10.4	10.3	10.1	10.2	10.1	10.2
호주	7.1	7.2	7.2	7.2	7.3	7.4	7.5	7.7	7.8	8.1	8.2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4.9	5.2	5.2	5.7	6.1	6.4	6.6	7.2	7.3	7.4	7.6
OECD	-	-	-	-	-	-	-	-	-	9.5	9.3
독일	10.7	10.9	10.7	10.8	10.6	10.5	10.7	11.8	11.6	11.2	11.3
미국	14.6	15.1	15.2	15.2	15.3	15.6	16.1	17.1	17.0	17.0	16.9
스웨덴	9.2	9.3	9.1	9.1	8.9	8.9	9.2	9.9	9.5	9.5	9.6
스페인	7.3	8.2	8.2	8.3	8.4	8.5	8.9	9.6	9.6	9.4	9.4
영국	7.5	7.8	7.9	8.1	8.3	8.4	8.8	9.7	9.4	9.2	9.3
이탈리아	8.2	8.2	8.5	8.7	8.8	8.5	8.9	9.4	9.4	9.2	9.2
일본	7.9	8.0	8.0	8.2	8.2	8.2	8.6	9.5	9.6	10.1	10.3
프랑스	10.6	10.8	10.9	10.9	10.9	10.8	10.9	11.6	11.6	11.5	11.6
호주	8.4	8.3	8.6	8.5	8.5	8.5	8.7	9.0	8.9	9.1	9.1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1980-2012)



출처: 보건복지부, <2012년 국민의료비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2014.

주: 1) 국민의료비 중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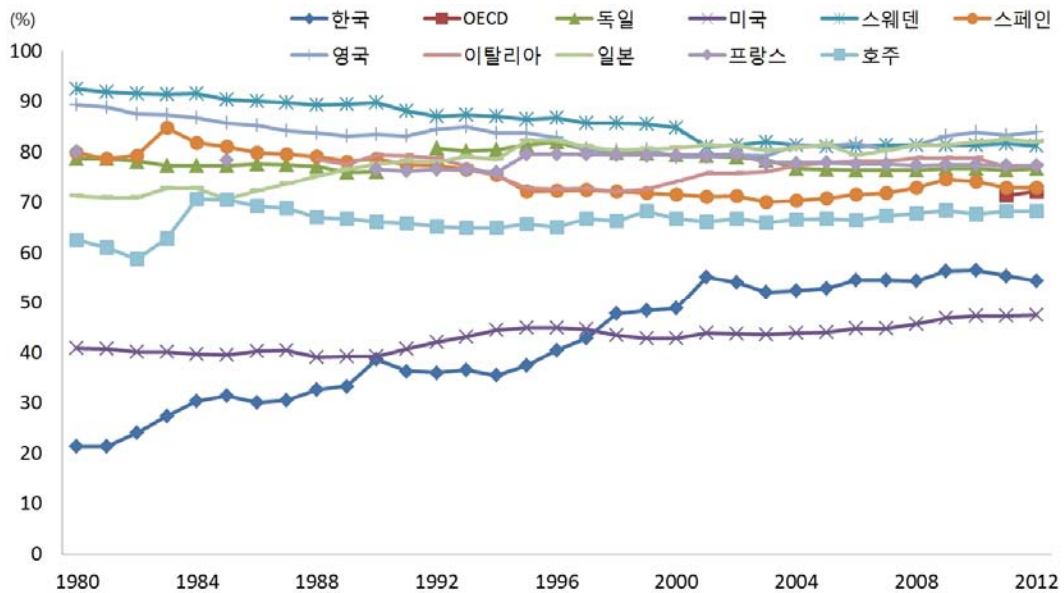
2) 2011년 추계부터 공급자 센서스 기반인 경제총조사 결과를 기본 자료원으로 활용하였고, 시계열 유지를 위한 과거년도 수치 수정으로 과거년도 발표수치와 차이 있음.

Ⅰ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1980-2012)

(단위: %)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21.5	21.4	24.1	27.4	30.5	31.5	30.1	30.6	32.7	33.4	38.8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36.4	36.1	36.6	35.6	37.6	40.5	43.0	47.9	48.5	49.0	55.3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54.2	52.2	52.6	53.0	54.7	54.7	54.5	56.5	56.6	55.5	54.5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1980-2012)



출처: OECD, <OECD Health Data 2014>. 2014.

주: 호주와 스페인은 2011년 자료이며, OECD 평균은 2012년 수치임.

OECD 주요국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의료비 비율(1980-2012)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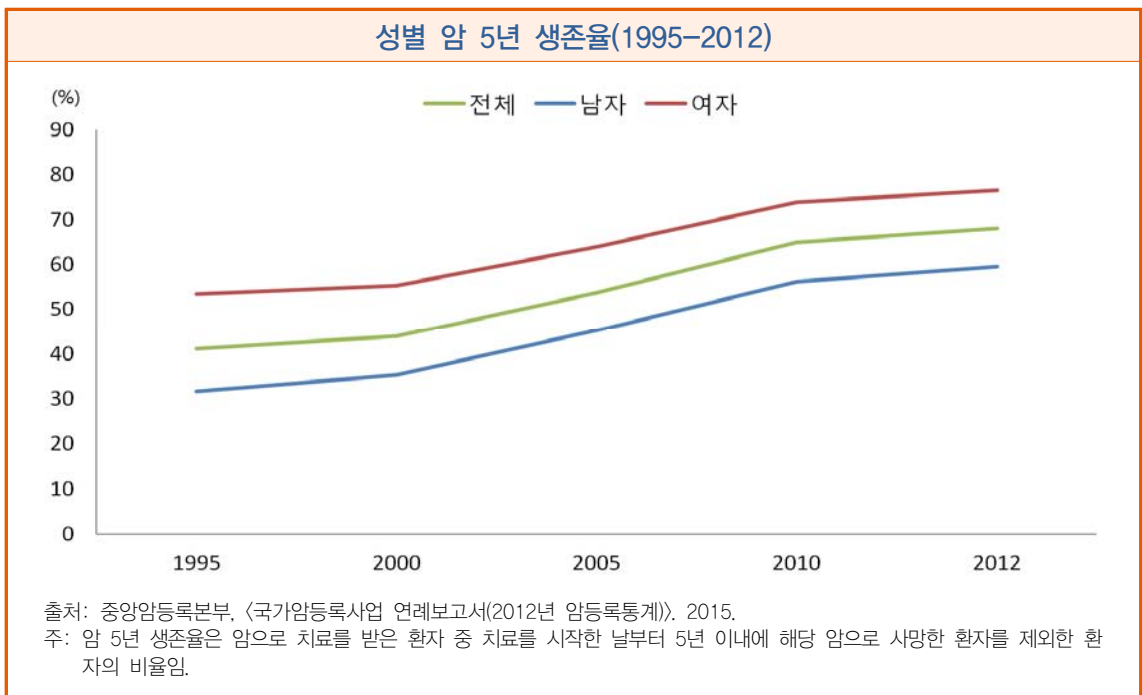
국가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한국	21.5	21.4	24.1	27.4	30.5	31.5	30.1	30.6	32.7	33.4	38.8
OECD	-	-	-	-	-	-	-	-	-	-	-
영국	89.4	88.9	87.6	87.4	86.9	85.8	85.3	84.3	83.8	83.2	83.6
일본	71.3	71.0	71.0	72.8	72.9	70.7	72.4	73.7	75.2	76.6	77.6
스웨덴	92.5	91.9	91.6	91.5	91.6	90.4	90.2	89.9	89.4	89.6	89.9
프랑스	80.1	-	-	-	-	78.5	-	-	-	-	76.6
이탈리아	-	-	-	-	-	-	-	-	78.5	77.6	79.5
독일	78.7	78.7	78.2	77.3	77.4	77.4	77.6	77.5	77.2	76.0	76.2
스페인	79.9	78.7	79.4	84.9	81.9	81.1	79.9	79.7	79.2	78.2	78.7
호주	62.6	61.2	58.9	62.9	70.7	70.6	69.4	68.9	67.2	66.8	66.2
미국	41.0	40.9	40.2	40.2	39.8	39.6	40.4	40.6	39.2	39.3	39.4
국가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한국	36.4	36.1	36.6	35.6	37.6	40.5	43.0	47.9	48.5	49.0	55.3
OECD	-	-	-	-	-	-	-	-	-	-	-
영국	83.3	84.6	85.1	83.9	83.9	82.9	80.4	80.4	80.6	79.1	79.1
일본	78.3	78.1	79.2	78.6	82.3	82.3	81.2	80.4	80.7	80.8	81.4
스웨덴	88.2	87.2	87.4	87.1	86.6	86.9	85.8	85.8	85.7	84.9	81.1
프랑스	76.3	76.6	76.5	76.0	79.7	79.6	79.6	79.5	79.4	79.4	79.4
이탈리아	79.3	78.9	77.2	75.4	72.8	72.7	72.9	72.3	72.7	74.2	75.9
독일	-	80.9	80.3	80.5	81.4	82.0	80.6	79.9	79.8	79.5	79.3
스페인	77.5	77.4	76.6	75.5	72.2	72.4	72.5	72.2	72.0	71.6	71.2
호주	65.9	65.4	65.0	65.0	65.8	65.2	66.9	66.4	68.4	66.8	66.3
미국	40.9	42.2	43.2	44.6	45.1	45.1	44.8	43.5	43.0	43.0	44.0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54.2	52.2	52.6	53.0	54.7	54.7	54.5	56.5	56.6	55.5	54.5
OECD	-	-	-	-	-	-	-	-	-	71.5	72.3
영국	79.4	79.3	81.4	81.3	81.7	80.5	81.4	83.2	84.0	83.4	84.0
일본	81.3	80.4	80.8	81.6	79.4	80.4	81.4	81.5	82.1	82.6	82.1
스웨덴	81.4	82.0	81.4	81.2	81.1	81.4	81.5	81.5	81.5	81.7	81.3
프랑스	79.7	77.9	77.9	78.0	77.6	77.7	77.3	77.5	77.5	77.3	77.4
이탈리아	75.9	76.2	77.4	77.9	78.2	78.3	78.9	78.9	78.9	77.1	77.3
독일	79.0	78.5	76.8	76.6	76.4	76.4	76.4	76.8	76.7	76.5	76.7
스페인	71.3	70.2	70.5	70.9	71.6	71.9	73.0	74.7	74.2	73.0	73.0
호주	66.9	66.1	66.7	66.9	66.6	67.5	67.9	68.5	67.8	68.4	68.4
미국	43.9	43.7	44.0	44.2	44.9	44.9	45.8	47.0	47.4	47.5	47.6

(3) 암 5년 생존율

암환자의 생존율은 의료의 질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지표인데, 주로 사용되는 대장암과 유방암 5년 생존율은 1995년부터 조사되었다. 한국의 암 5년 생존율은 1995년 41.2%에서 2012년 68.1%로 26.9%p 증가하였다. 전 기간에서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의료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뚜렷한 분야는 대장암 분야로서, 5년 생존율이 1995년에 54.8%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74.8%로 크게 상승했다. 유방암 5년 생존율도 1995년 78%에서 2012년 91.3%로 크게 높아졌다.

OECD 주요국들의 대장암 5년 생존율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은 2007년에는 OECD 평균 수준과 유사했으나, 2011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을 10%p 이상 추월하여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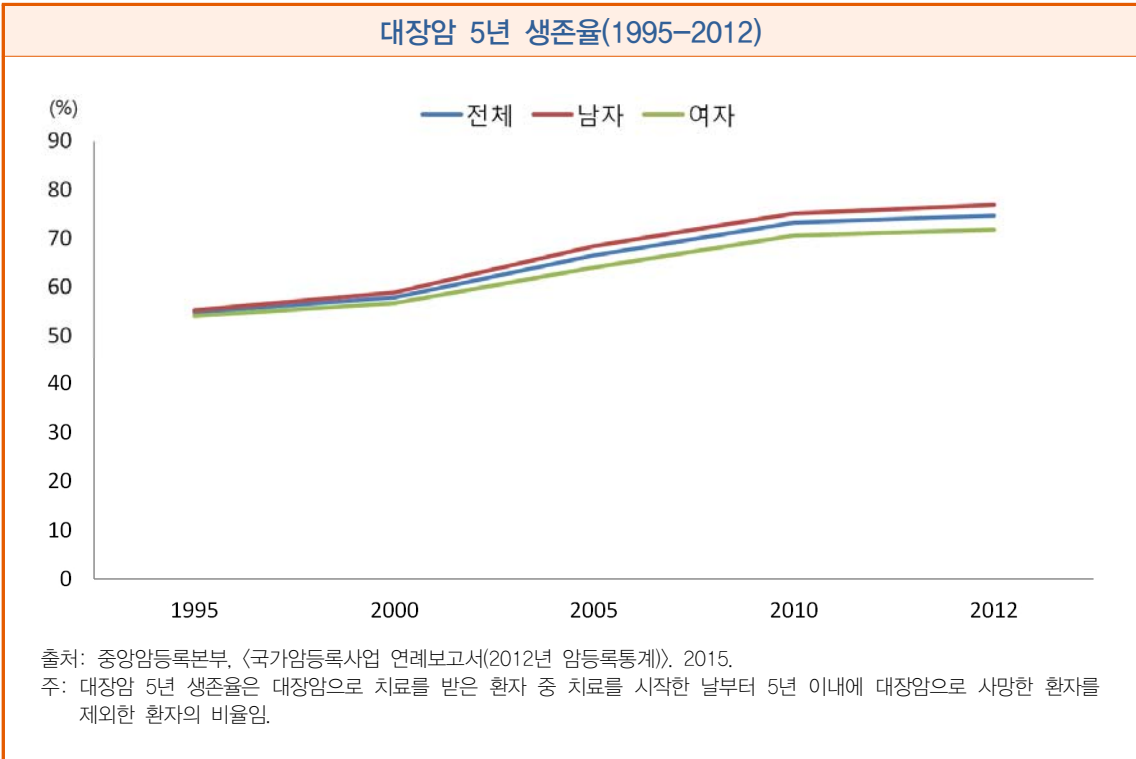
유방암 5년 생존율에 대한 국제 비교 자료는 한국 내에서 사용되는 유방암 5년 생존율과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OECD에 제출된 자료가 국가 간 비교를 위해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서 한국의 유방암 5년 생존율은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스웨덴, 영국, 캐나다 등 OECD 주요국들보다 월등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는 다른 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의 유방암 5년 생존율을 보였으나, 2011년 자료에서 한국(85.2%)은 OECD 평균(84.2%)을 넘어서고, 덴마크(82%)와 영국(80.7%)을 앞서게 되었다.



성별 암 5년 생존율(1995-2012)

(단위: %)

	1995	2000	2005	2010	2012
전체	41.2	44.0	53.8	65.0	68.1
남자	31.7	35.3	45.3	56.3	59.6
여자	53.4	55.3	64.0	74.0	7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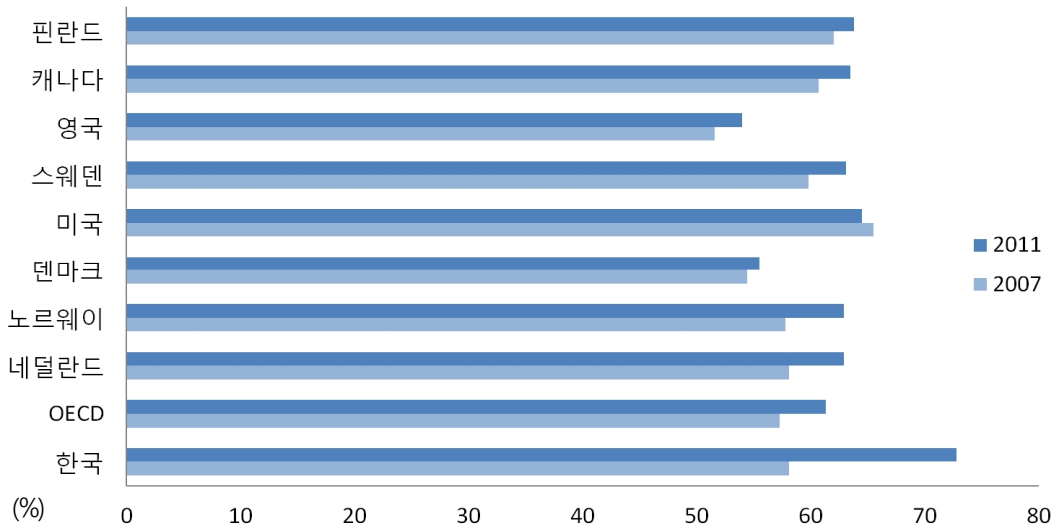


대장암 5년 생존율(1995-2012)

(단위: %)

	1995	2000	2005	2010	2012
전체	54.8	58.0	66.6	73.3	74.8
남자	55.3	59.0	68.5	75.2	76.9
여자	54.2	56.8	64.1	70.6	71.8

OECD 주요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2007, 2011)



출처: OECD, <OECD Health at a Glance 2013>, 2013.

주: 1) 대장암 5년 생존율은 대장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2) 캐나다, 미국은 2003-2008년, 덴마크는 2004-2009년, 핀란드는 2005-2010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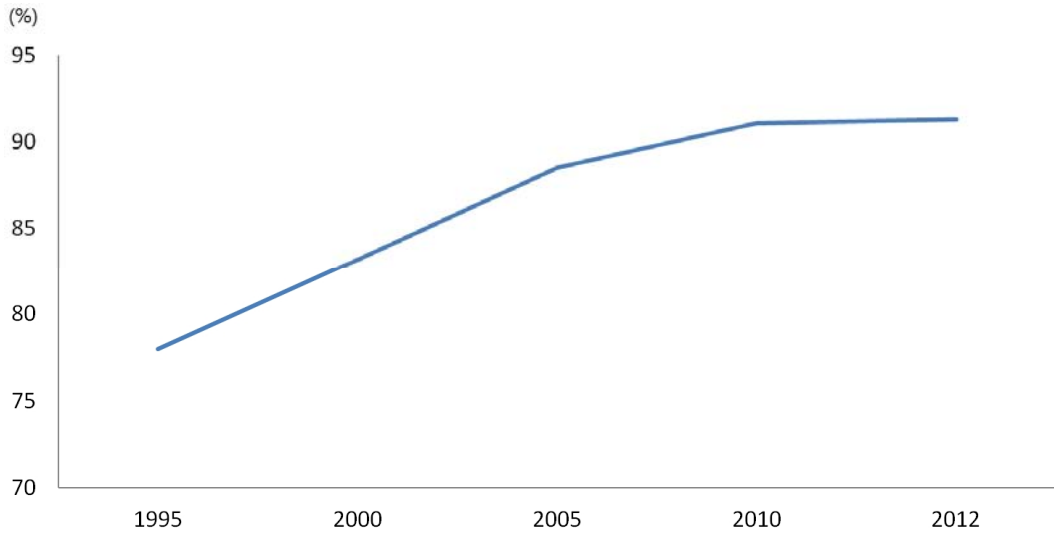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대장암 5년 생존율(2007, 2011)

(단위: %)

국	가	2007	2011
한	국	58.1	72.8
O	E	57.3	61.3
E	C	65.5	64.5
C	D	62.0	63.8
미	국	60.7	63.5
핀	란	59.8	63.1
란	드	62.9	62.9
캐	나	58.1	62.9
나	다	57.8	62.9
스	웨	54.4	55.5
웨	덴	51.6	54.0
네	덜		
덜	란		
노	르		
르	웨		
덴	마		
마	크		
영	국		

유방암 5년 생존율(1995-2012)



출처: 중앙암등록본부, <국가암등록사업 연례보고서(2012년 암등록통계)>,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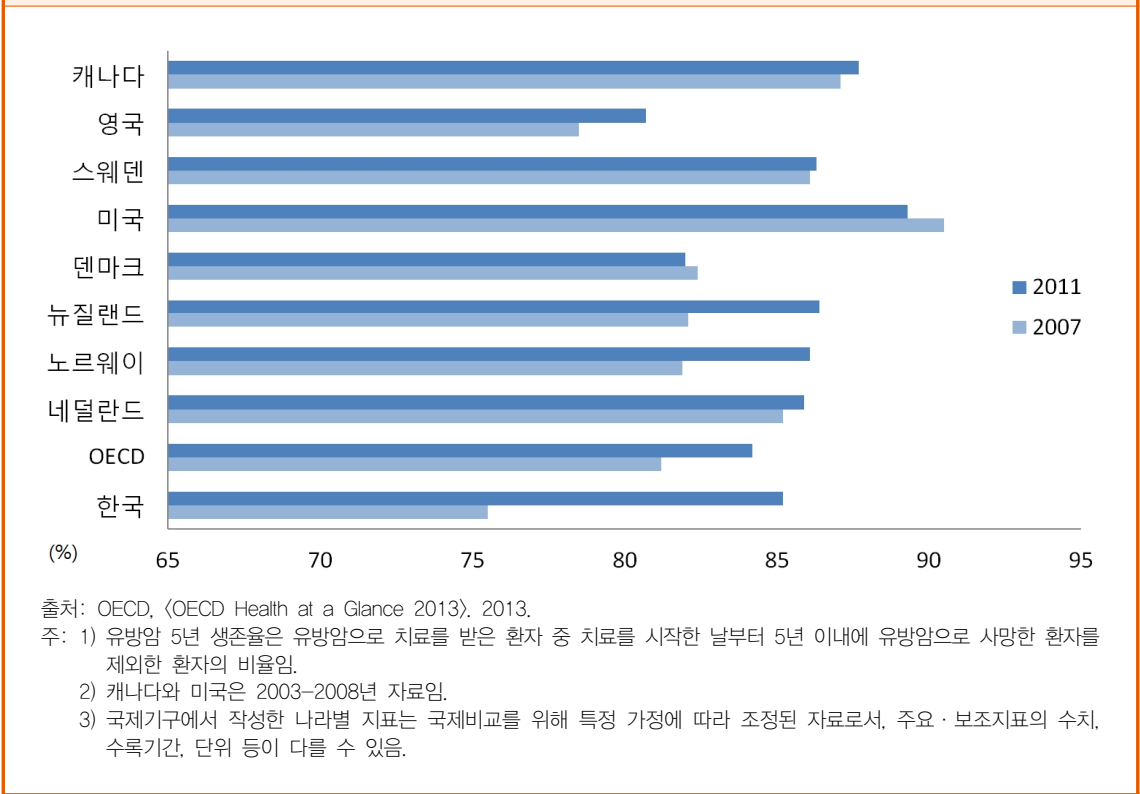
주: 유방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방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유방암 5년 생존율(1995-2012)

(단위: %)

1995	2000	2005	2010	2012
78.0	83.2	88.5	91.1	91.3

OECD 주요국의 유방암 5년 생존율(2007, 2011)



OECD 주요국의 유방암 5년 생존율(2007, 201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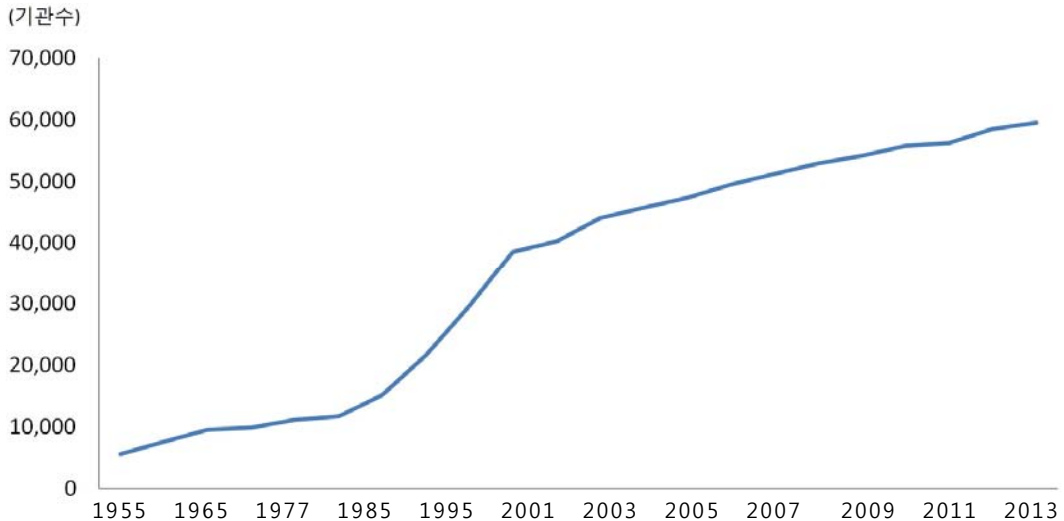
국 가	2007	2011
한 국	75.5	85.2
O E C D	81.2	84.2
미 국	90.5	89.3
캐 나 다	87.1	87.7
뉴 질 랜 드	82.1	86.4
스 웨 덴	86.1	86.3
노 르 웨 이	81.9	86.1
네 델 란 드	85.2	85.9
덴 마 크	82.4	82.0
영 국	78.5	80.7

(4) 의료기관수 변화추이

의료기관의 숫자는 의료시설의 하드웨어적 측면을 보여준다. 의료기관에는 병의원, 특수 의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의원, 부속의원, 조산원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의료기관수는 1955년 5,542개소에서 2012년 59,519개소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의료기관은 병상규모에 따라 100병상 이상일 경우 종합병원으로, 30병상이상 100병상 미만일 경우에는 병원으로 구분된다. 종합병원은 1955년에 42개에 불과했지만, 2012년에 323개로 7.7배 늘어났고, 병원은 같은 기간에 90개에서 1,327개로 14.7배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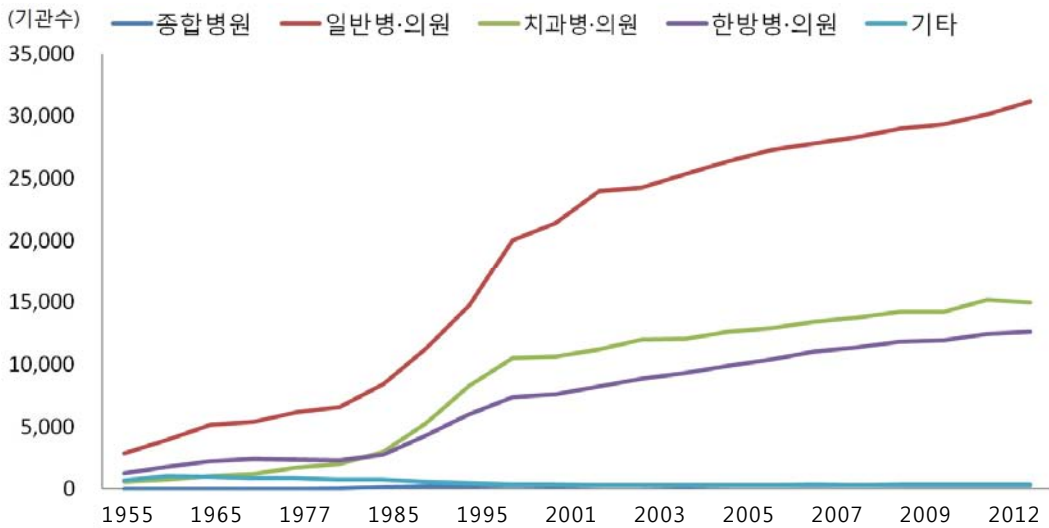
해방직후에는 없었지만, 그 이후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병원들로는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등이 있다. 이에 반해, 조산원은 한때 1,000개에 육박했으나, 이제는 거의 소멸되어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한센병원도 거의 사라졌다. 이는 지난 70년간 의료기관의 생태계가 매우 다양해지고 조직 규모도 전반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전문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의료기관 수 변화 추이(1953-2013)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병·의원 유형별 의료기관 변화 추이(1953-2012)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 연도.

주 : 1) 회사 또는 산업체의 종업원을 위한 부속의원임 (의료법 제35조).

2) 1965~1980년 기간동안 병, 의원에 대한 조사가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져, 1970년을 대신하여 1969년 자료를, 1975년을 대신하여 1977년 자료를 기입하였음.

Ⅰ 병·의원 유형별 의료기관 변화 추이(1953-2012)

(단위: 기관수)

구분	계	병·의 원				특수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 의원		부속 의원	조산원
		종합 병원	요양 병원	일반 병원	의원	결핵	한센	정신	치과 병원	치과의원	한방 병원	한의원		
1955	5,542	42	-	90	2,800	4	24	0	0	596	0	1,284	120	582
1960	7,620	22	-	128	3,863	5	36	0	0	757	0	1,779	67	963
1965	9,546	24	-	182	5,002	3	8	0	0	1,079	0	2,247	72	929
1969	9,925	12	-	217	5,163	8	3	0	0	1,219	0	2,434	117	752
1977	11,209	52	-	182	6,008	4	6	0	4	1,720	9	2,344	262	618
1980	11,781	82	-	240	6,344	4	1	-	3	2,025	11	2,317	266	488
1985	15,154	183	-	317	8,069	4	1	8	4	2,994	17	2,774	279	504
1990	21,701	228	-	328	10,935	5	1	26	6	5,286	33	4,261	256	336
1995	29,773	266	-	398	14,343	4	1	37	12	8,292	69	5,928	246	177
2000	38,665	285	-	581	19,472	3	1	79	56	10,471	136	7,276	185	120
2001	40,276	268	-	599	20,819	2	1	70	60	10,556	131	7,499	169	100
2002	44,029	284	-	691	23,299	2	1	75	80	11,120	135	8,097	169	76
2003	45,772	283	68	730	23,502	4	2	88	99	11,890	151	8,734	150	71

2004	47,378	282	92	763	24,491	3	2	95	107	11,968	154	9,196	158	67
2005	49,566	290	177	794	25,412	3	1	102	123	12,520	146	9,765	187	46
2006	51,286	295	363	850	26,078	3	1	107	134	12,808	142	10,294	172	39
2007	52,914	302	593	945	26,265	3	1	107	151	13,280	138	10,895	182	52
2008	54,165	313	690	1,064	26,581	3	1	118	184	13,618	139	11,248	175	31
2009	55,769	312	762	1,129	27,104	3	1	130	178	14,071	151	11,705	185	38
2010	56,244	312	849	1,154	27,334	3	1	143	188	14,074	159	11,804	186	37
2011	58,496	319	975	1,245	27,909	3	1	144	199	15,002	178	12,305	180	36
2012	59,519	323	1,087	1,327	28,762	3	1	156	202	14,800	199	12,440	184	35

4. 교육

1) 교육기회

(1) 각급 학교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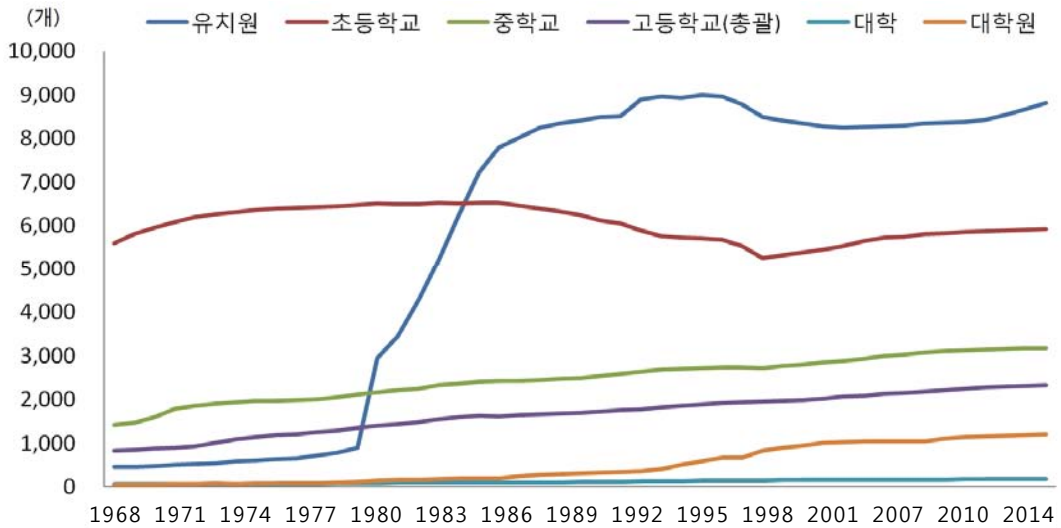
한국에서 교육은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국가적 투자이자 가구 단위에서도 후세를 위한 투자로 여겨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한국에서 각급 학교의 수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반영하여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인 것은 유치원 수로 1980년까지 완만하게 전국적으로 1,000개 이내로 증가세를 보이던 유치원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한 증가를 보여서 1980년대 중반 5,000개를 넘고, 1990년대에는 8,000개를 넘게 되었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 중산층의 확대와 자녀수의 감소에 따른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과 투자의 증가를 보여준다.

초등학교의 수는 1970년대까지 증가세를 지속하지만 1986년 6,535개를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증가했다. 1980년대 후반 이후의 감소는 1980년대 이후 초등학교 취학연령 아동의 감소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현재 유치원의 수(8,826)가 가장 많고, 다음이 초등학교(5,934), 중학교(3,186), 고등학교(2,326), 대학교(189) 및 대학원(1,209)의 순으로 학교의 수가 많다.

각급 학교별 수(1968-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각급 학교별 수(1952-2014)

(단위: 개)

	1952	1955	1960	1961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유치원	-	173	-	325	423	484	611	901	6,242	8,354	8,960	8,494	8,275	8,388	8,826
초등학교	3,938	4,220	4,640	5,264	5,125	5,961	6,367	6,487	6,519	6,335	5,772	5,267	5,646	5,854	5,934
중학교	607	949	1,053	1,073	1,208	1,608	1,967	2,121	2,371	2,474	2,683	2,731	2,935	3,130	3,186
고등학교 (총괄)	340	557	640	647	701	889	1,152	1,355	1,602	1,683	1,830	1,957	2,095	2,253	2,326
대학	42	45	52	56	70	71	72	85	100	107	131	161	173	179	189
대학원	-	-	-	-	37	64	82	121	201	298	421	829	1,051	1,138	1,209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1961년 초등학교 수는 분교를 포함하고 있음.

(2) 각급 학교별 학생수

각급 학교별 학생 수의 추이는 학교별 해당 연령의 인구와 더불어 진학의사와 정부의 정원 조정에 영향을 받는다. 전반적으로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대학의 경우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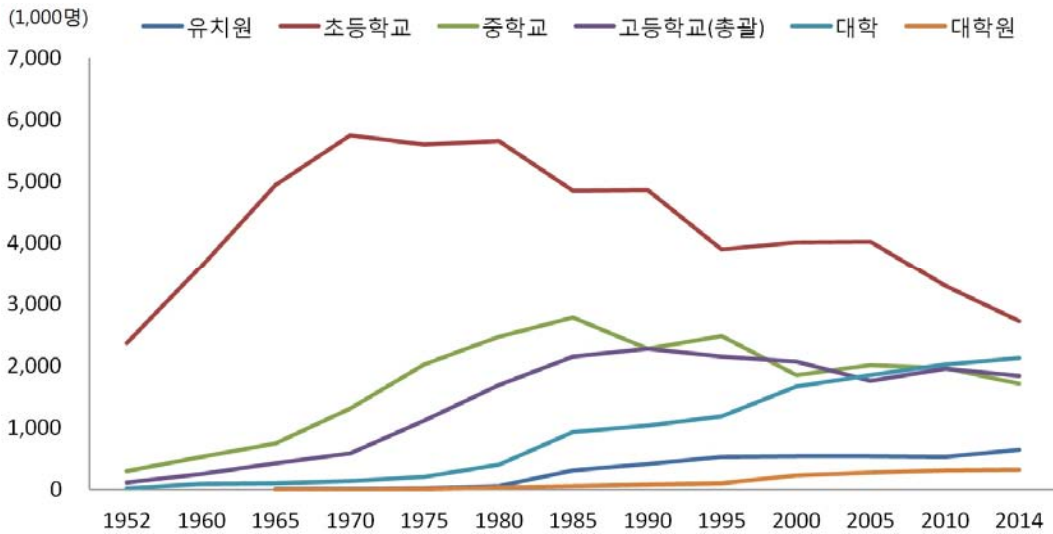
초등학생 수는 광복 당시부터 이미 의무교육이 시행되어 인구의 변화가 학생 수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었다. 초등학생 수는 1952년 237만이었던 학생 수가 1970년 575만 명을 정점으로 2.5배에 가깝게 증가했다. 이것은 베이비 붐 세대의 급격한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초등학생 수의 증가는 둔화되었고 1980년 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4년 현재에는 273만 명이다.

중학생 수의 경우 초등학생 수에 비해 일정한 시간적 지체를 두고 비슷한 양상을 보여서 1952년 30만이었던 학생 수가 1965년 75만, 1970년 132만, 1980년 247만으로 빠르게 증가한 뒤 1985년 278만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2014년 현재 172만 명이다.

고등학생 수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952년 12만 명에서 1965년 43만 명, 1975년 112만 명으로 늘었고, 1983년 200만 명을 넘었으며, 1989년 233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해 2014년 현재 184만 명의 고등학생이 있다.

대학생의 경우는 앞에서 본 것과 달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의 변화 즉 대학설립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1990년대 후반의 정책의 영향이다. 대학생 수는 1952년 3만 명으로 매우 적지만 1965년 10만을 넘어섰고, 1975년 20만, 1980년 40만, 1985년 93만, 2000년 167만, 2010년 203만, 그리고 2014년 213만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증가를 보인 시기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시기이다.

각급 학교별 학생수(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Ⅰ 각급 학교별 학생수(1952-2014)

(단위: 천명)

구분	1952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유치원	학생수	-	-	20	22	32	66	315	415	529	545	542	539	653
초등학교	학생수	2,370	3,621	4,941	5,749	5,599	5,658	4,857	4,869	3,905	4,020	4,023	3,299	2,729
중학교	학생수	303	529	751	1,319	2,027	2,472	2,782	2,276	2,482	1,861	2,011	1,975	1,718
고등학교(총괄)	학생수	123	264	427	590	1,123	1,697	2,153	2,284	2,158	2,071	1,763	1,962	1,839
대학	재적 학생수	32	93	106	146	209	403	932	1,040	1,188	1,665	1,860	2,029	2,130
대학원	재적 학생수	-	-	4	7	14	34	68	87	113	229	282	317	331

(3) 각급 학교별 졸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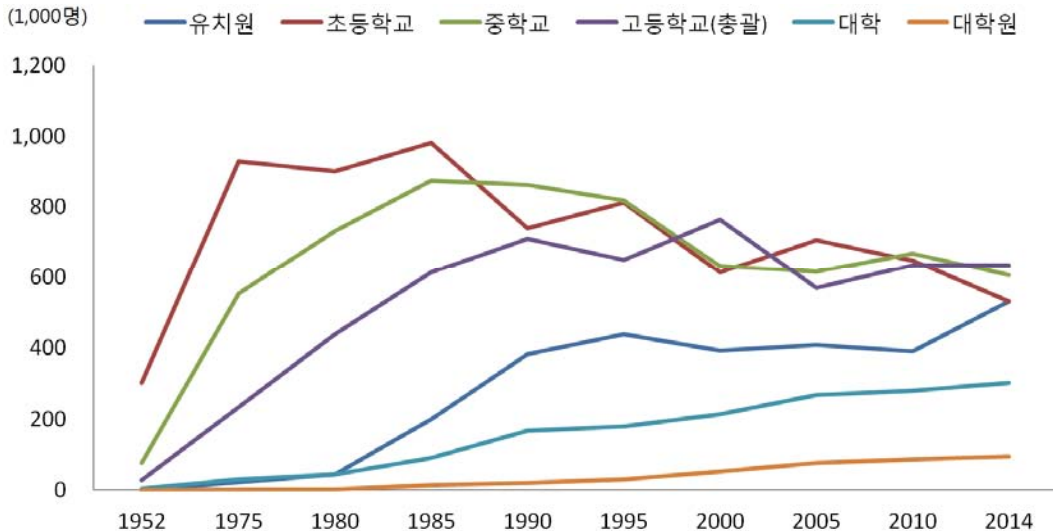
각급 학교별 졸업자 수의 변화는 각급 학교별 학생 수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베이비 붐 세대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한 졸업자 수가 2차 베이비 붐 세대까지 비슷한 수

를 유지하고 이후에는 감소하기 시작하는 양상이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졸업자 수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가 졸업하는 시기부터 2차 베이비 붐 세대가 졸업하는 1985년까지 80~90만 명에 가까운 졸업자들이 매년 배출되었으며, 중학교의 경우 1980년 73만에서 1985년 87만까지 늘어난 후 1995년 82만 명 이후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고등학교의 경우 그보다 시간 지체를 두고 1990년 71만 명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2000년에 77만 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대학교 졸업자의 수는 1980년에서 1990년 사이 4만 5,000명에서 16만 7,000명으로 급증한 뒤 2000년 21만 명, 2010년 30만 명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베이비 붐 세대 인구의 급증 이후 인구변화가 졸업자 수의 변화에 거의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것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베이비 붐 세대가 거처간 뒤에도 증가가 계속되는 것은 경제수준 향상과 교육투자 증가에 따른 진학률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각급 학교별 졸업자수(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Ⅰ 각급 학교별 졸업자수(1952-2014)

(단위: 천명)

	1952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유치원	-	24	46	200	384	440	392	409	390	532
초등학교	303	930	902	982	740	813	615	707	648	531
중학교	76	554	732	875	863	819	631	616	669	606
고등학교(총괄)	28	235	440	614	710	650	765	569	634	633
대학	4	30	45	91	167	181	214	269	280	302
대학원	-	3	4	16	21	32	53	77	88	96

(4) 각급 학교별 남녀 학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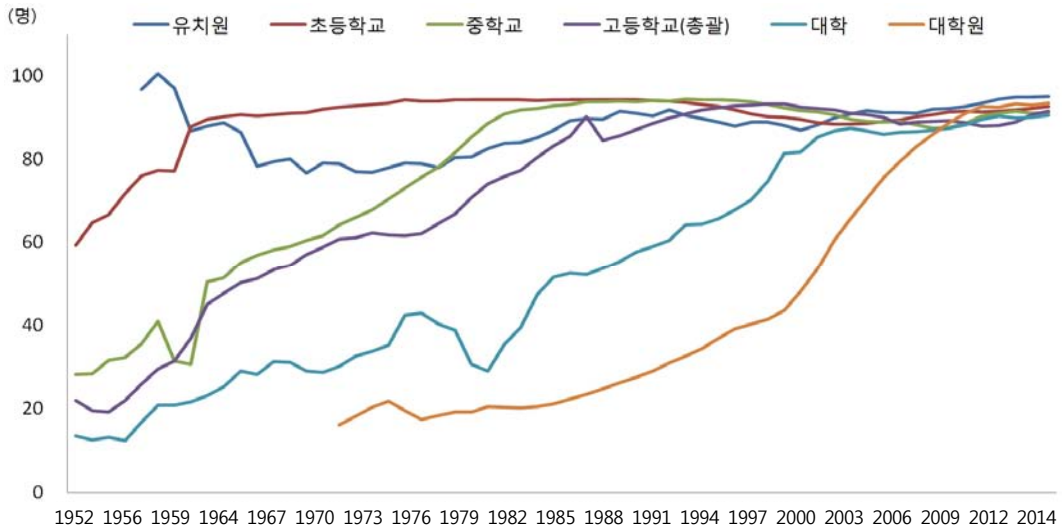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남존여비의 의식이 강한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에는 가족 단위에서 딸보다 아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했다. 특히 자녀 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한정된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결과 딸보다 아들에 더 많은 교육투자를 하는 경향이 더 강화되었다.

초등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학생의 남녀비율이 196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 대학교의 경우 판이하게 다르다. 1952년 당시 중학교의 여학생은 남학생의 28%, 고등학생의 경우 22%, 대학교의 경우 14%에 불과했다. 중학교 이상에서는 남성이 지배적이었고 학급이 올라갈수록 그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이러한 남녀 학생 비율의 격차는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1971년에는 중학교의 여학생 비율이 남학생의 64%로, 고등학교의 경우 61%로 높아졌으며, 1980년에는 각각 89%와 74%, 1990년에는 각각 94%와 89%로 증가했다. 대학교에서의 남녀 학생의 비율은 이보다 느리게 변화하여 1971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의 30%, 1980년에 29%, 1990년에 59%, 2000년에 85.4%, 그리고 2014년에 90.6%에 이르기까지 여학생의 비율이 증가해 왔다.

이처럼 남학생에 대한 여학생의 비율이 높아져온 배경에는 경제수준 향상에 대한 교육투자의 증가, 자녀수의 감소 및 의식변화에 따른 남녀 차별의 감소 등이 있다.

각급 학교별 남녀 학생 비율(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 주: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성비는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 수를 의미함.
 3) 대학생의 경우 총 재적인원이 아닌 재학생에 대한 남녀 학생 비율임.

각급 학교별 남녀 학생 비율(1952-2014)

(단위: 남학생 백명당 여학생 명)

	1952	1957	1966	1971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유치원	-	96.8	78.3	79.1	79.1	82.5	89.2	90.4	88.0	88.2	91.2	93.6	95.1
초등학교	59.4	76.0	90.4	92.5	94.3	94.3	94.3	94.2	91.8	88.8	89.5	91.4	92.7
중학교	28.2	35.5	56.9	64.2	73.1	88.6	93.2	94.1	94.2	91.4	89.0	90.4	91.2
고등학교 (총괄)	22.0	26.0	51.3	60.8	61.7	74.1	85.5	88.6	92.8	92.1	88.5	88.0	91.5
대학	13.5	16.7	28.3	30.2	42.4	29.0	52.6	59.1	67.9	85.4	86.5	89.6	90.6
대학원	-	-	-	16.1	19.7	20.6	22.3	29.0	39.1	53.6	79.4	92.8	93.5

2) 교육의 조건과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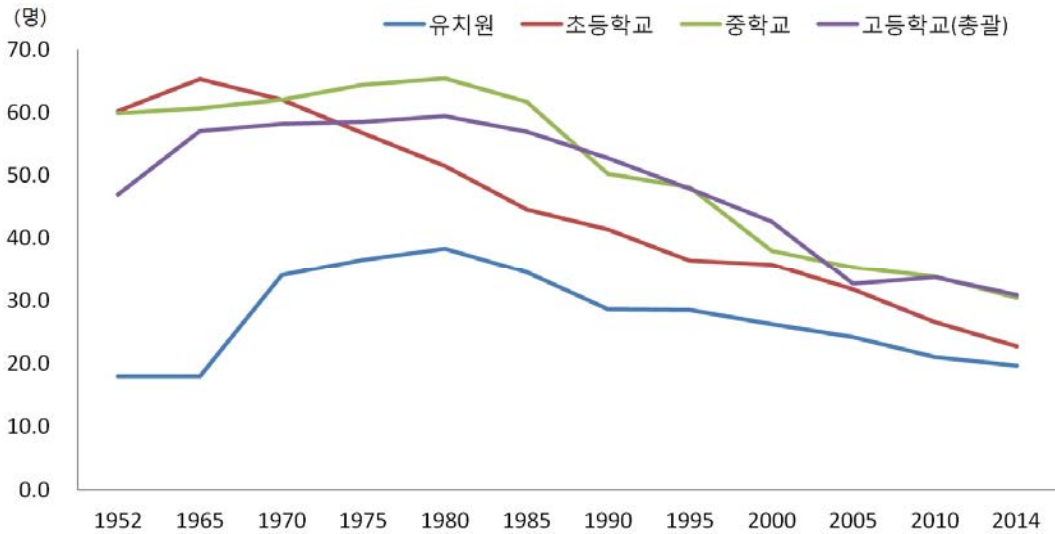
(1) 학급별 학생수

학급별 학생수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조건을 규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들 가운데 하나이다. 경제적으로 개발 과정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가 충분치 못했던 당시에는 많은 학령 인구들을 수용하느라 학급당 학생 수가 매우 높아서 ‘콩나물 교실’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경제수준의 향상 및 학령 인구의 감소와 함께 빠르게 개선되었다.

가장 빠른 개선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취학연령의 인구가 가장 빠르게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1952년 60명에서 1965년 65명까지 높아지지만 이후 1975년 57명, 1985년 45명, 1995년 36명, 2005년 32명, 2014년 23명에 오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줄었다. 현재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65년의 35%에 불과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도 감소가 시작된 시점과 감소의 속도가 늦기는 하지만 유사한 과정을 밟았다.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1980년 66명까지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를 지속해서 2014년 현재는 31명으로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낮아졌으며,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역시 1952년 47명에서 1980년 60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를 거듭해서 2014년에는 역시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31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학급별 학생수(1952-2014)



출처: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주: 1) 고등학교는 2011년부터 2가지 유형에서(일반계고, 전문계고(실업계고))에서 4가지 유형(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으로 분류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 2, 2010. 6. 29). 여기에서 고등학교는 해당 유형 모두를 포함함.

2) 대학과 대학원생은 도표에서 제외됨.

3) 도표에서 유치원의 경우 1952년 수치가 없어 1965년 수치를 입력한 것임.

학급별 학생수(195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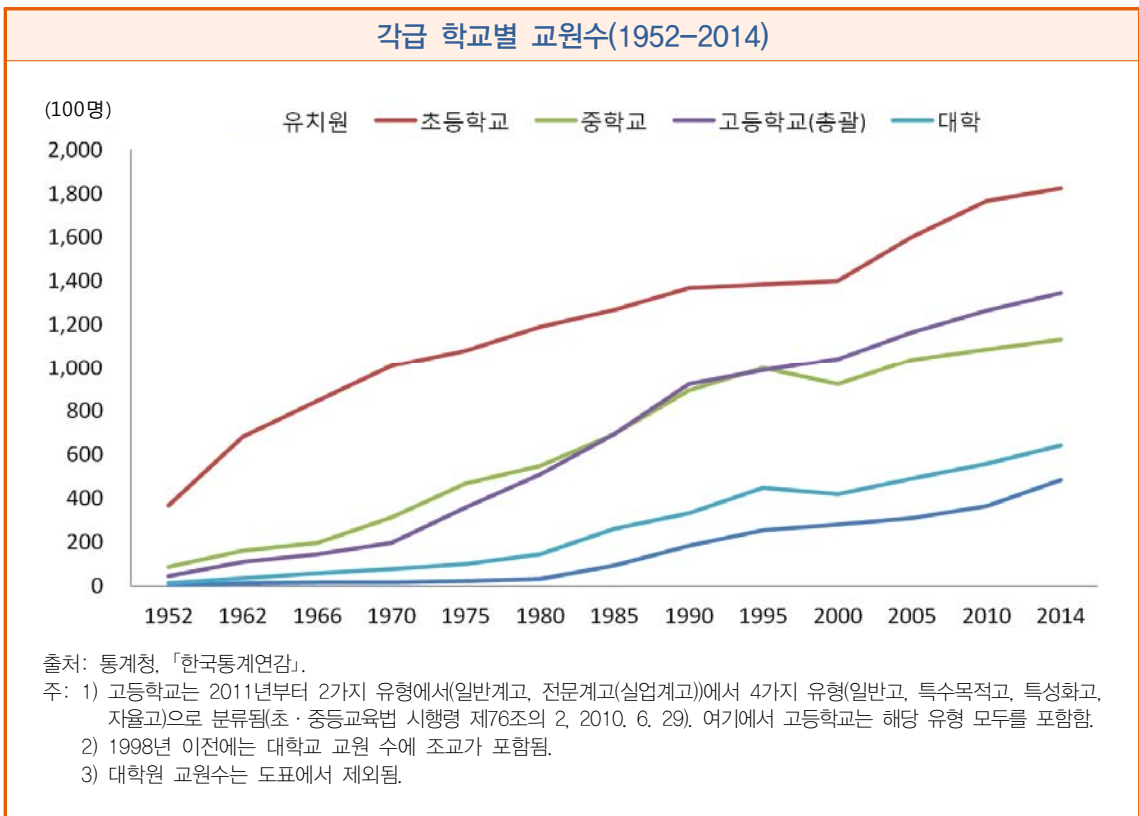
(단위: 명)

	1952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유치원	-	18.0	34.1	36.6	38.4	34.5	28.6	28.5	26.3	24.2	21.0	19.7
초등학교	60.2	65.4	62.1	56.7	51.5	44.7	41.4	36.4	35.8	31.8	26.6	22.8
중학교	60.0	60.7	62.1	64.5	65.5	61.7	50.2	48.2	38.0	35.3	33.8	30.5
고등학교 (총괄)	47.0	57.1	58.2	58.6	59.5	56.9	52.8	47.9	42.7	32.7	33.7	30.9
대학	116.9	119.2	130.7	146.5	156.5	298.1	259.5	240.9	177.6	182.5	186.7	193.3
대학원	-	7.0	8.2	7.2	19.3	23.2	29.0	26.7	31.3	31.2	31.3	31.5

(2) 각급 학교별 교원수

학교별 교원 수는 각급별 학교마다 거의 동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해 왔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수도 감소하고 학교 수도 감소했으나 교원의 수는 증가를 계속해 왔다.

1952년 3만 6,000명이던 초등학교 교원 수는 1970년 10만 명을 넘고, 2000년 14만 명을 넘어 2014년 현재 18만 명을 넘는다. 중학교 역시 1952년 9천명에서 1970년 3만 명을 넘고, 1980년 5만 명, 1990년 10만 명을 거쳐 2014년 현재 11만 명을 유지하고 있다. 고등학교는 1952년 5,000명에서 1970년 2만 명, 1980년 5만 명, 1990년 9만 명, 2000년 10만 명을 거쳐 2014년 현재 13만 명이다. 대학교 교수의 경우 1952년 1,000명이 겨우 넘었는데 1975년 1만 명, 대학 정원이 늘어나기 시작한 1985년 2만 6,000명, 1995년 4만 5,000명, 2005년 4만 9,000명을 거쳐 2014년 현재 6만 4,000명에 이른다.



Ⅰ 각급 학교별 교원수(1952-2014)

(단위: 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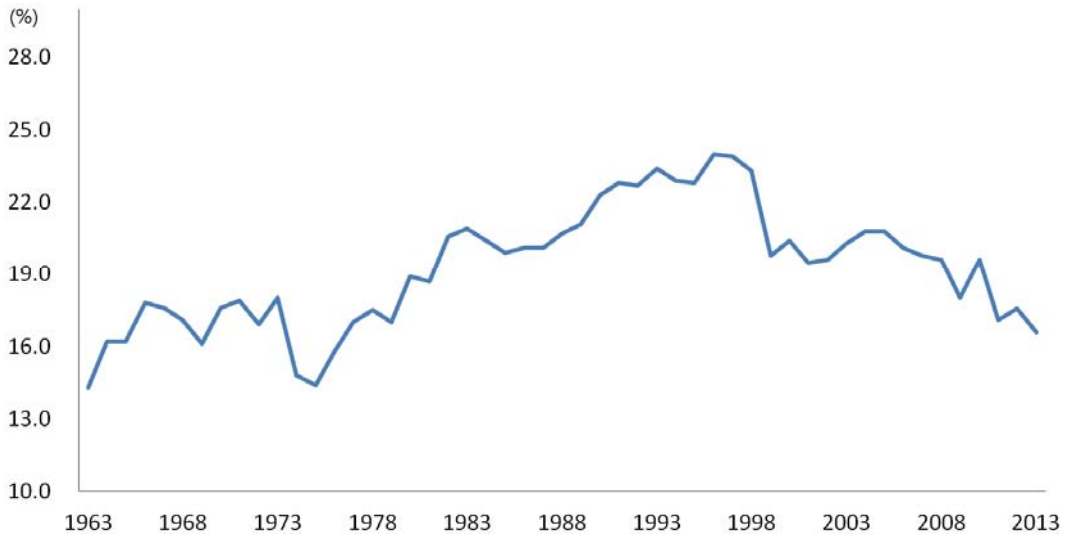
	1952	1962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유치원	-	11	16	17	22	33	93	185	256	280	310	365	485
초등학교	367	681	849	1,011	1,081	1,191	1,268	1,368	1,384	1,400	1,601	1,768	1,827
중학교	88	162	198	312	469	549	696	897	999	926	1,038	1,088	1,133
고등학교	46	111	146	199	358	509	695	927	991	1,044	1,164	1,264	1,345
(총괄)													
대학	12	34	58	78	101	145	260	333	451	419	492	560	644
대학원	-	4	3	2	2	2	4	-	-	-	17	57	77

(3) 교육비 예산

공교육비는 교육 영역에서 투입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 및 민간 수준의 책무성이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준다. 공교육은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동시에 미래의 주역을 길러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의 현대사를 보면 공교육의 확대를 통해 국민통합을 증진하고 산업사회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을 양성하여 민주화와 산업화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교육에 투입되는 사회적 자원의 정도는 사회의 질 및 지속가능성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부 예산 대비 교육예산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하락하기는 했지만 1990년대 중반까지 높아지는 경향을 계속 유지했다. 1963년 14.3%였던 교육예산의 정부예산 비율은 1990년대 22%를 넘는 수준까지 높아졌으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반에는 20%대를 그리고 2013년은 17%의 수준이다. 정부 예산에서 교육예산의 비율이 가장 빠르게 상승했던 시기는 1970년대로 1975년 14.4%에서 1983년 21%까지 높아졌다.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1963-2013)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연보」.

- 주: 1) (~2004) 정부예산 = 일반회계 +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 지방교육양여금관리특별회계
- 2) (2005~) 정부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3) 교육부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4) 2009~2012년 (구)교육과학기술부 예산.
- 5) 2013년 교육부 예산은 정부조직개편 이후 기준이며, 추가경정예산이 포함됨.

정부예산 대비 교육부예산 비율(1963-2013)

(단위: 천원; %)

	1963	1965	1970	1975	1980	1985
정부예산	76,322,551	94,652,348	446,273,301	1,586,931,050	5,804,061,441	12,532,361,835
교육부예산	10,916,095	15,331,155	78,478,212	227,925,711	1,099,159,170	2,492,308,215
비율	14.3	16.2	17.6	14.4	18.9	19.9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정부예산	22,689,432,968	54,845,022,310	93,937,057,000	134,370,378,000	211,992,599,000	303,847,514,000
교육부예산	5,062,431,258	12,495,810,267	19,172,027,920	27,982,002,000	41,627,519,000	50,424,128,000
비율	22.3	22.8	20.4	20.8	19.6	16.6

3) 교육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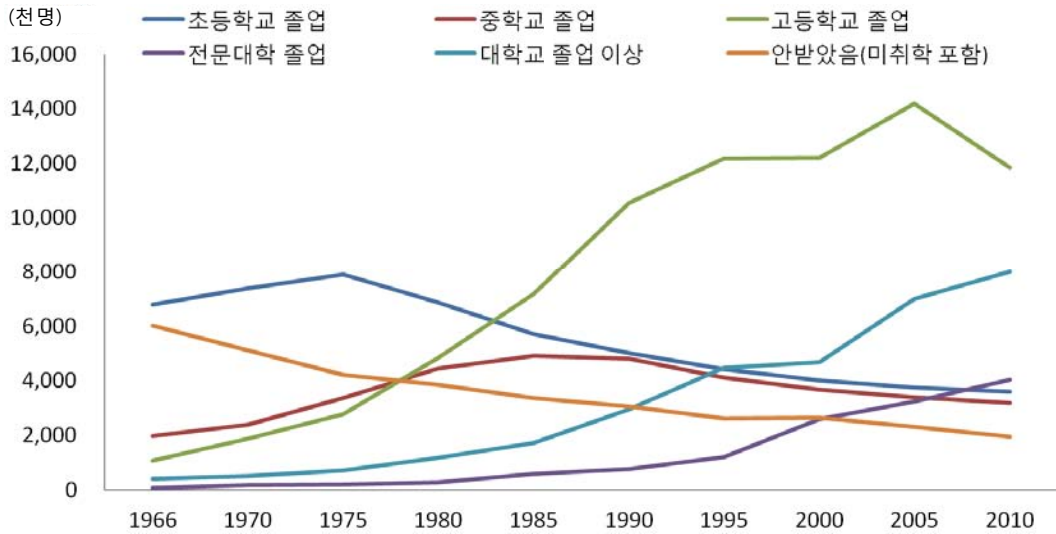
(1) 교육수준별 인구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교육수준별 인구 비율은 국가의 교육발전 결과 및 인적자원 확보 상황을 살펴보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교육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전반적인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나타내며, 사회의 지속가능성 및 개인적인 삶의 질과도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1980년까지 한국의 교육수준별 인구 구성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초등학교 졸업자이다. 또한 1985년까지 초등학교 졸업자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학이었다. 이것은 광복 이전의 낮은 교육투자가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광복 후의 교육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은 1985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중이 초등학교 졸업자 비중을 앞서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이후 현재까지도 전체 인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5년 고등학교 졸업자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대학교 졸업자가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2005년 이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수는 감소하는 반면 대학교 졸업자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머지않아 대학교 졸업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국인의 평균 교육년수는 2012년 현재 17.5년으로 OECD 평균인 17.6년에 가깝다. 이는 미국(17.2년), 일본(16.3년)보다는 높지만, 핀란드(19.7년), 호주(19.4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교육수준별 인구(1955-2010)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주: 1) 6세 이상 내국인을 대상으로 집계. 단, 외국인 제외함.

2) 1955년은 각학교급의 졸업자가 아닌 취학자 인구를, 미취업 인구는 국문불해독자를 의미함.

3) 1955, 1960년 전문대 졸업/대학교 졸업자 수는 전문대 진학 이상의 학력자를 의미함.

4) 1960년의 경우 수학년수 0='안 받았음', 1-5='초등학교 졸업', 6-8='중학교 졸업', 9-11='고등학교 졸업', 12년 이상='전문대 졸업 이상'으로 분류함.

교육수준별 인구(1955-2010)

(단위: 명)

구분	성별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초등학교 졸업	계	2,705,480	11,297	6,806,276	7,389,417	7,902,070	6,868,152	5,713,123	5,014,338	4,439,428	4,023,228	3,770,673	3,611,125
	남자	1,562,783	7,087	3,158,823	3,223,957	3,290,451	2,773,166	2,248,349	1,931,109	1,646,677	1,475,423	1,346,412	1,257,120
	여자	1,142,697	4,210	3,647,453	4,165,460	4,611,619	4,094,986	3,464,774	3,083,229	2,792,751	2,547,805	2,424,261	2,354,005
중학교 졸업	계	618,176	205,928	1,989,468	2,389,699	3,389,251	4,462,132	4,929,234	4,813,372	4,115,658	3,693,314	3,398,711	3,200,932
	남자	464,097	148,498	1,286,501	1,393,651	1,752,569	2,177,556	2,238,731	2,134,349	1,798,518	1,620,648	1,486,155	1,402,090
	여자	154,079	57,430	702,967	996,048	1,636,682	2,284,576	2,690,503	2,679,023	2,317,140	2,072,666	1,912,556	1,798,842
고등학교 졸업	계	293,546	79,881	1,086,941	1,892,683	2,776,425	4,836,704	7,198,759	10,572,358	12,195,528	12,210,058	14,195,267	11,844,645
	남자	238,484	64,724	743,067	1,287,597	1,704,294	2,879,417	4,003,784	5,633,162	6,236,709	6,057,392	7,043,370	5,775,867
	여자	55,062	15,157	343,874	605,086	1,072,131	1,957,287	3,194,975	4,939,196	5,958,819	6,152,666	7,151,897	6,068,778
전문대학 졸업	계	103,200	103,660	88,117	188,390	198,444	279,536	596,593	785,865	1,205,783	2,613,695	3,243,879	4,043,632
	남자	90,090	53,230	71,790	138,978	140,138	193,810	391,372	453,586	638,913	1,339,726	1,605,118	1,979,318
	여자	13,110	50,430	16,327	49,412	58,306	85,726	205,221	332,279	566,870	1,273,969	1,638,761	2,064,314
대학교 졸업 이상	계	90,090	53,230	404,256	514,631	722,557	1,186,416	1,729,298	2,965,081	4,483,168	4,692,255	7,003,323	8,019,181
	남자	13,110	50,430	339,459	417,822	556,219	879,117	1,233,370	2,027,188	2,895,983	2,924,078	4,106,508	4,570,899
	여자	76,980	3,800	64,797	96,809	166,338	307,299	495,928	937,893	1,587,185	1,768,177	2,896,815	3,448,282
안받았음 (미취학 포함)	계	3,190,893	103,660	6,032,978	5,125,126	4,215,269	3,870,852	3,370,374	3,066,267	2,627,896	2,649,352	2,325,209	1,971,837
	남자	857,917	53,230	2,173,518	1,795,916	1,437,896	1,271,403	1,010,795	885,137	714,135	727,796	628,812	503,964
	여자	2,332,976	50,430	3,859,460	3,329,210	2,777,373	2,599,449	2,359,579	2,181,130	1,913,761	1,921,556	1,696,397	1,467,873

5. 문화와 여가

1) 문화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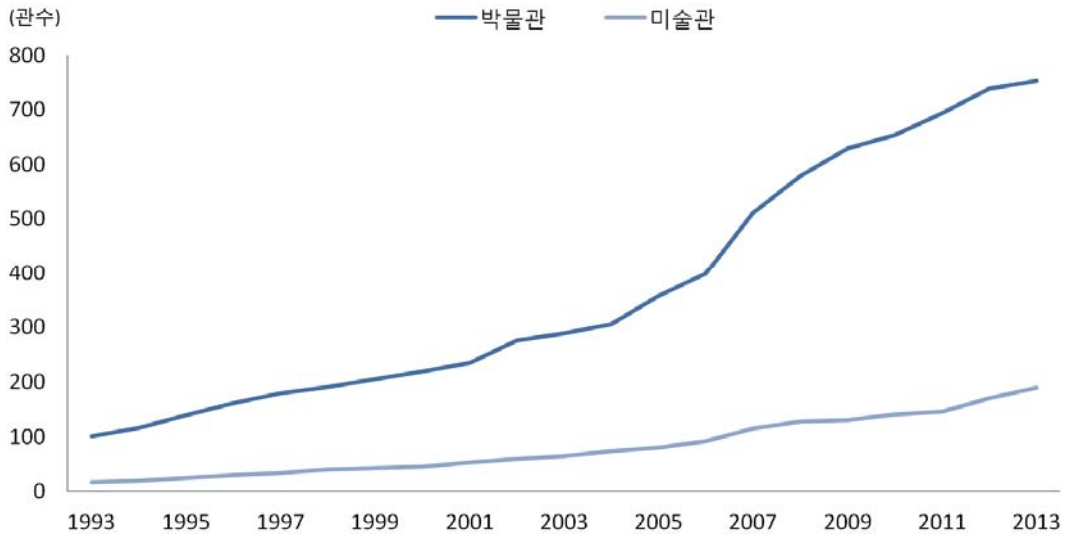
(1) 박물관/미술관 수

박물관과 미술관은 문화적 유산과 시각예술의 작품들을 전시하고 시민들의 문화교육과 감상의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의 문화적 자산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이 가지는 중요성은 매우 크다.

박물관과 미술관에 대한 체계적 자료는 1990년대 이후에만 가능하지만 전반적 추세를 보면 1991년 131개였던 박물관의 수는 2004년 300개를 넘어선 뒤에 급증해서 2013년 754개에 이른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박물관이 급증한 것은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의 수가 증가한 결과이다. 국립박물관의 경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 지방에 많은 박물관들이 증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미술관의 경우는 박물관에 비해 수는 적지만 마찬가지로 1990년대와 2000년대에 걸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다. 1993년 17개에 불과했던 미술관은 2013년에 190개로 증가했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사립미술관의 증가가 두드러져서 2000년 36개에 불과했던 것이 131개로 크게 늘었다.

박물관/미술관 수(1993-201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예술진흥원/문화발전연구소, 「문화예술통계자료집」; 문화관광부/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문화예술통계」.

주: 박물관 통계는 국립·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만 해당되며, 단 과학관 육성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과학관은 제외됨.

박물관/미술관 수(1993-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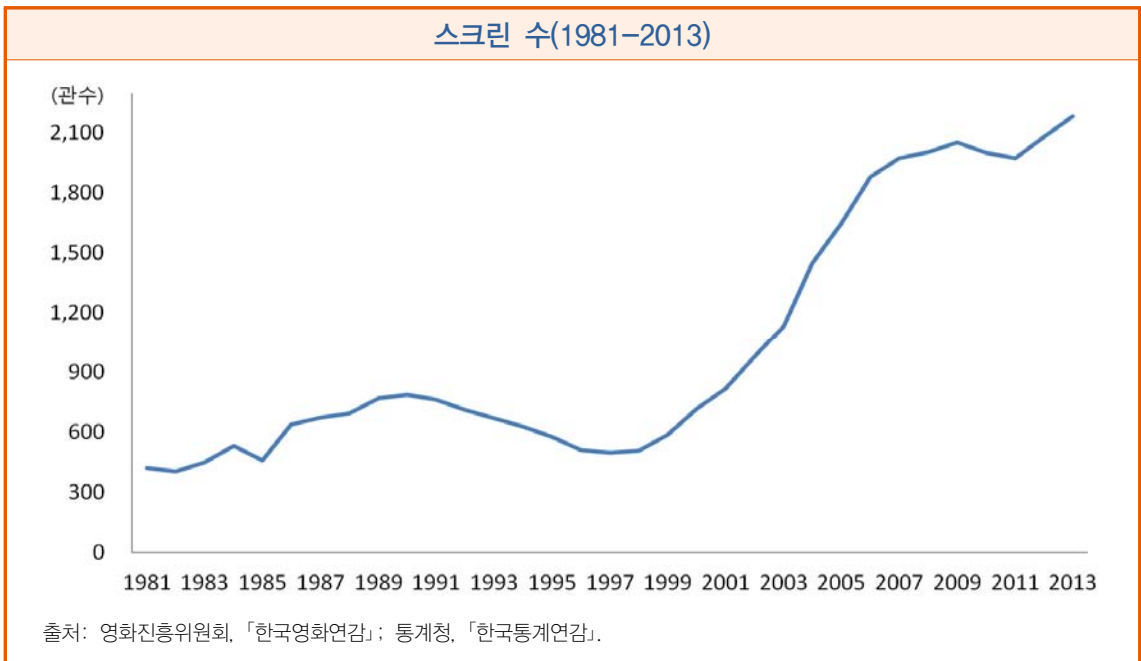
(단위: 관수)

	1991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31	101	117	140	162	180	192	206	220	235	276	289	306	358	399	511	579	630	655	694	740	754	
박																							
국립	17	10	14	17	20	23	23	24	25	25	30	32	31	31	30	27	27	29	30	30	32	37	
공립	15	9	11	19	22	25	26	28	30	32	49	56	63	108	134	225	255	282	289	312	326	328	
사립	33	28	30	33	46	52	62	73	84	96	113	116	126	155	163	180	215	234	251	262	287	299	
대학	66	54	62	71	74	80	81	81	81	82	84	85	86	64	72	79	82	85	85	90	95	90	
미																							
국립	-	17	20	25	30	34	40	43	46	53	60	65	74	80	92	115	128	131	141	146	171	190	
공립	-	2	2	3	4	6	8	8	8	8	8	10	14	17	18	24	27	25	27	28	39	47	
사립	-	14	17	21	25	27	31	34	36	43	50	53	58	60	70	87	97	100	108	110	124	131	
대학	-	0	0	0	0	0	0	0	1	1	1	1	1	2	3	3	3	5	5	7	7	11	

(2) 영화관 및 극장 수

영화관의 스크린과 극장 수는 현대의 대표적인 대중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한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IP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영화관과 극장 수는 문화예술 감상의 기회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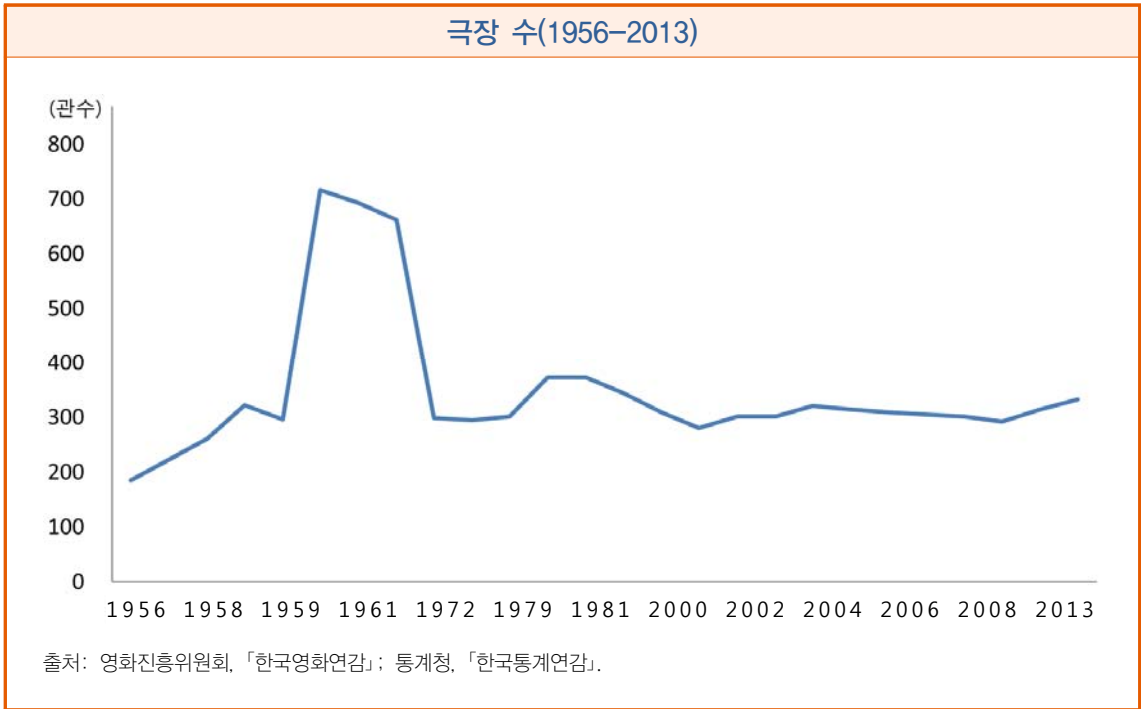
한국의 스크린 수는 1981년 423개에서 1990년 789개까지 증가했다가 1998년 507개로 감소하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03년 1,000개, 2008년 2,000개를 넘고, 2013년에는 2,184개에 이른다. 극장의 수는 1956년 186개였으며, 1971년 717개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였지만 이후 1970년대 후반에 갑작스런 감소에 의해 1980년 295개까지 줄었다가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대 극장 수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스크린 수가 급증한 것은 멀티플렉스 형태의 대형 극장들이 주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스크린 수(1981-2013)

(단위: 관수)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423	404	450	534	461	640	673	696	772	789	762	712	669	629	577	511	4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07	588	720	818	977	1,132	1,451	1,648	1,880	1,975	2,004	2,055	2,003	1,974	2,081	2,184	



극장 수(1956-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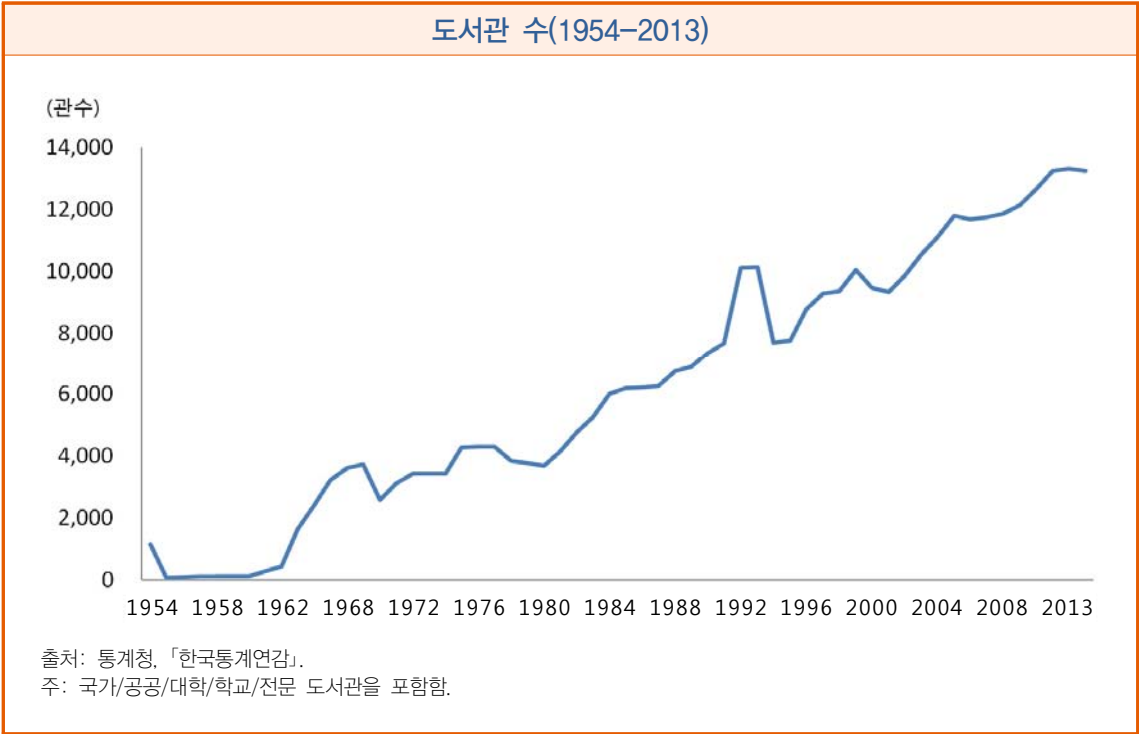
(단위: 관수)

1956	1958	1959	1960	1961	1971	1972	1973	1979	1980	1981	~	1999	2000
186	223	261	322	296	717	694	662	299	295	301	~	373	373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344	309	280	302	301	321	314	309	305	301	292	314	333	

(3) 도서관 수

도서관은 시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서적들을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박물관, 미술관과 함께 도서관은 문화적 자산을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도서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1954년 1,171개였던 것이 1983년에 5,000개를 넘어섰고, 1992년에는 10,000개를 넘어서서 2013년 현재 13,248개의 도서관이 있다. 1990년대 이후 도서관의 증가에는 지방에서의 도서관 신설이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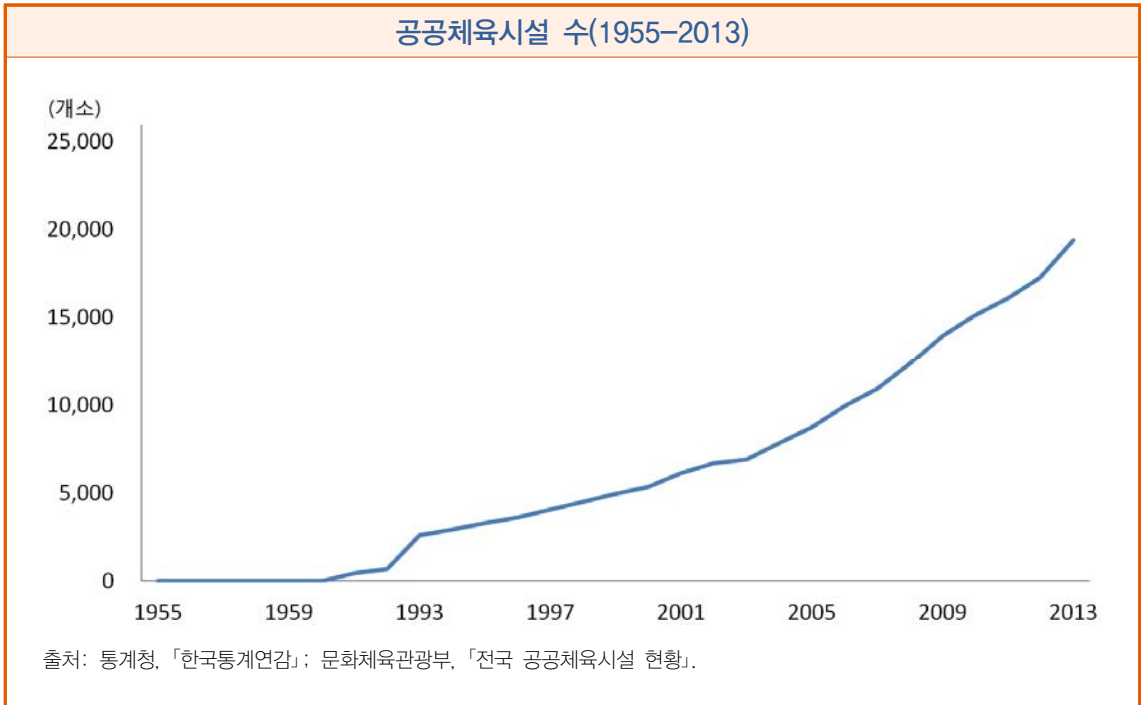
도서관 수(1954-2013)

(단위: 관수)

1954	1964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1,171	1,651	2,427	2,583	4,296	3,697	6,207	7,364	7,758	9,468	11,793	12,653	13,248

(4) 체육시설 수

공공 체육시설은 시민들의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시설이다. 한국에서 공공체육 시설은 1980년대 이전에는 매우 적은 수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 이후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증가속도에서도 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55년에 17개에 불과했던 공공체육시설은 1960년까지 32개로 늘어나는데 그쳤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이미 500개를 넘어섰고 특히 지방자치가 실시된 1990년대에는 1993년 2,621개에서 2000년 5,373개로 두 배 이상 빠른 증가를 보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국민들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서 체육시설은 2007년 10,000개를 넘어서서 2013년 현재 19,398개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수(1955-2013)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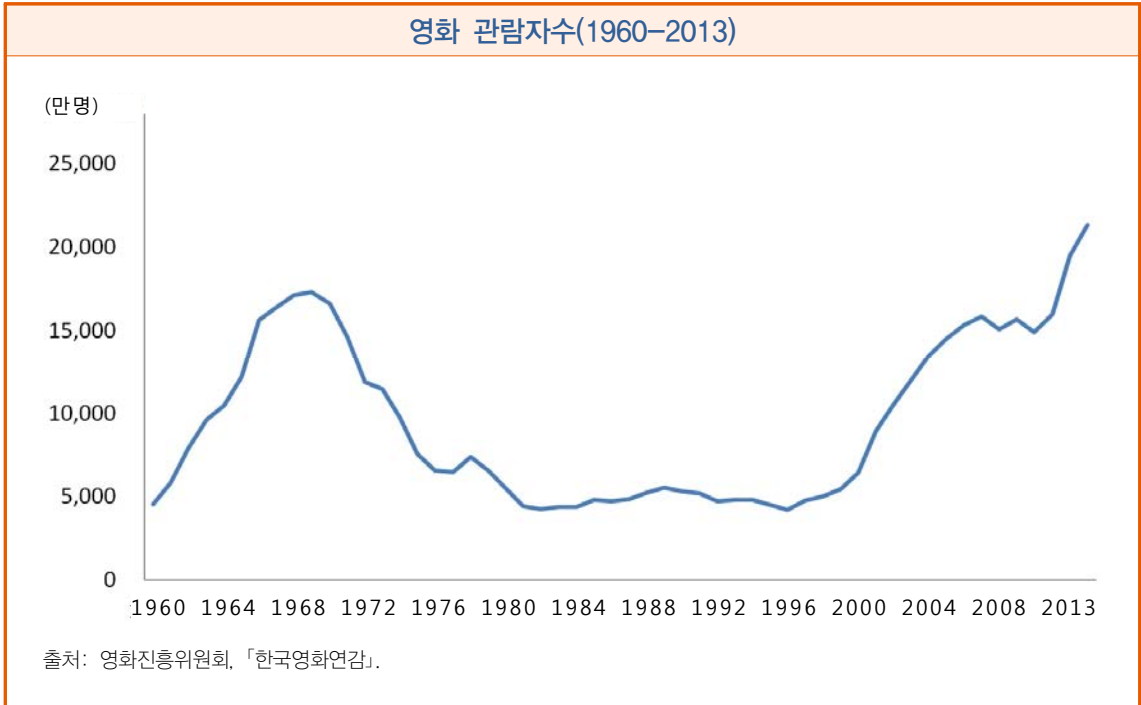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84	1988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17	27	34	29	25	32	451	689	2,621	2,944	3,307	3,630	4,086	4,530	4,97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373	6,150	6,723	6,901	7,863	8,753	9,949	10,946	12,342	13,968	15,137	16,127	17,313	19,398	

2) 문화여가활동

(1) 영화 관람자수

영화 관람자 수는 1960년대에 급증해서 1960년에 연간 4,600만 명에서 1969년 연간 1억 7,304만명까지 급증했으나 이후 감소하기 시작해서 1980년과 1990년대에는 5,000만 명 내외에 머물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영화 관람자 수는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5년에 1억 4,552만 명, 2013년에 2억 1,355만 명에 이르게 되었다. 1970년대 이전에

영화 관람자 수가 증가한 것은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이후 텔레비전 보급과 함께 영화 관람객 수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관람자 수가 다시 늘어난 것은 영화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급증을 보여준다.



영화 관람자수(1960-2013)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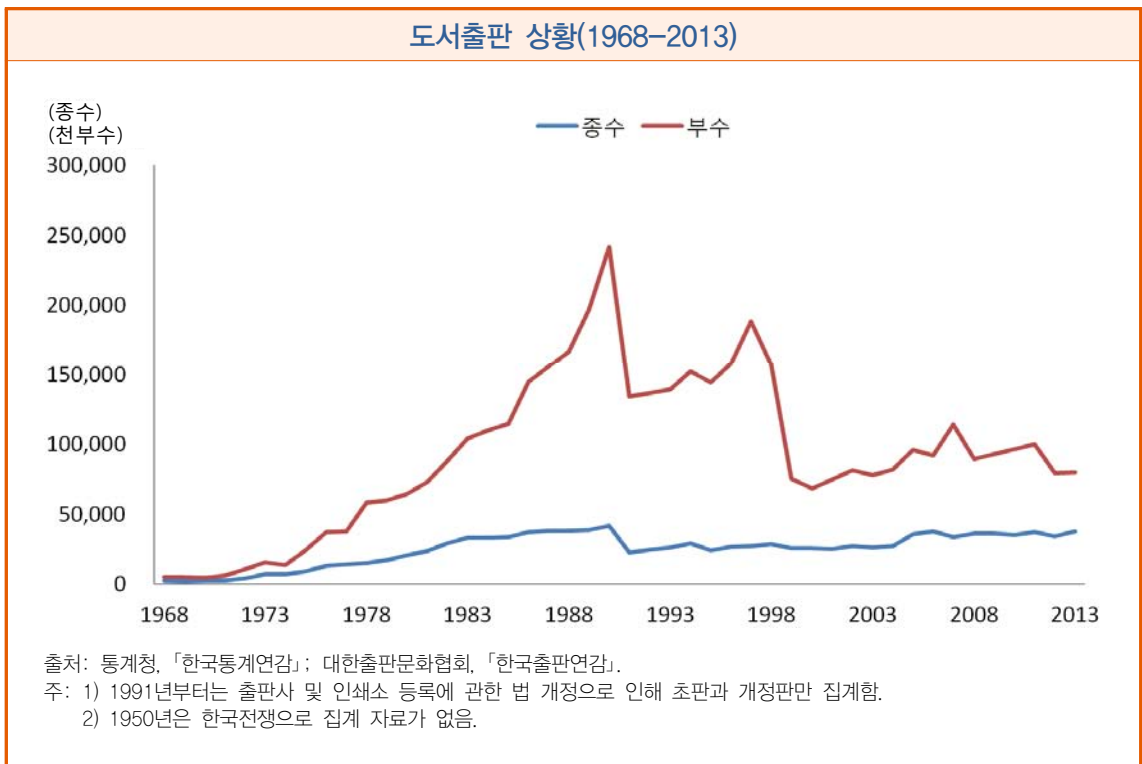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3
4,560	12,170	16,635	7,560	5,502	4,810	5,346	4,513	6,462	14,552	14,918	21,355

(2) 도서출판 상황

도서 출판과 독서는 한 사회의 문화적 생산의 척도로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도서 출판은 문자 텍스트와 경쟁하는 시각 미디어의 약진, 그리고 문자 텍스트에서도 인쇄 매체에 대한 디지털 매체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도서출판은 1948년도에 552종에 불과하던 것이 1968년에는 2,528종으로 늘었다. 하지

만 1968년에 출판 부수는 총 5,303부에 불과했다. 이후 도서출판은 1990년 4만여 종에 24만 여부에 이르기까지 빠르게 증가했다. 하지만 1990년 이후 도서출판은 감소를 겪게 되어 1990년대 전반에 2만여 종에 15만여 부의 수준을 유지했다. 1998년 이후 도서 출판은 또 한번 위축되었는데 1999년에 출판 종수는 큰 변화가 없지만 부수는 1998년의 1억 6,000만 부의 절반에 가까운 7,600만부로 급감하였다. 이후 출판부수는 2000년대 후반에 1억 부 가까이로 증가하기도 하지만 큰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지는 못한다.



Ⅰ 도서출판 상황(1946-2013)

(단위: 종수, 천부수)

	1946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종수	552	1,391	1,110	1,558	1,308	1,434	1,006	1,281	1,606	1,618	2,290	2,966	3,042
부수	-	-	-	-	-	-	-	-	-	-	-	-	-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종수	2,750	3,188	3,014	2,216	2,528	2,312	2,591	2,917	4,469	7,123	7,018	9,225	13,334
부수	-	-	-	-	5,303	5,414	4,907	6,430	10,858	15,762	13,651	24,418	37,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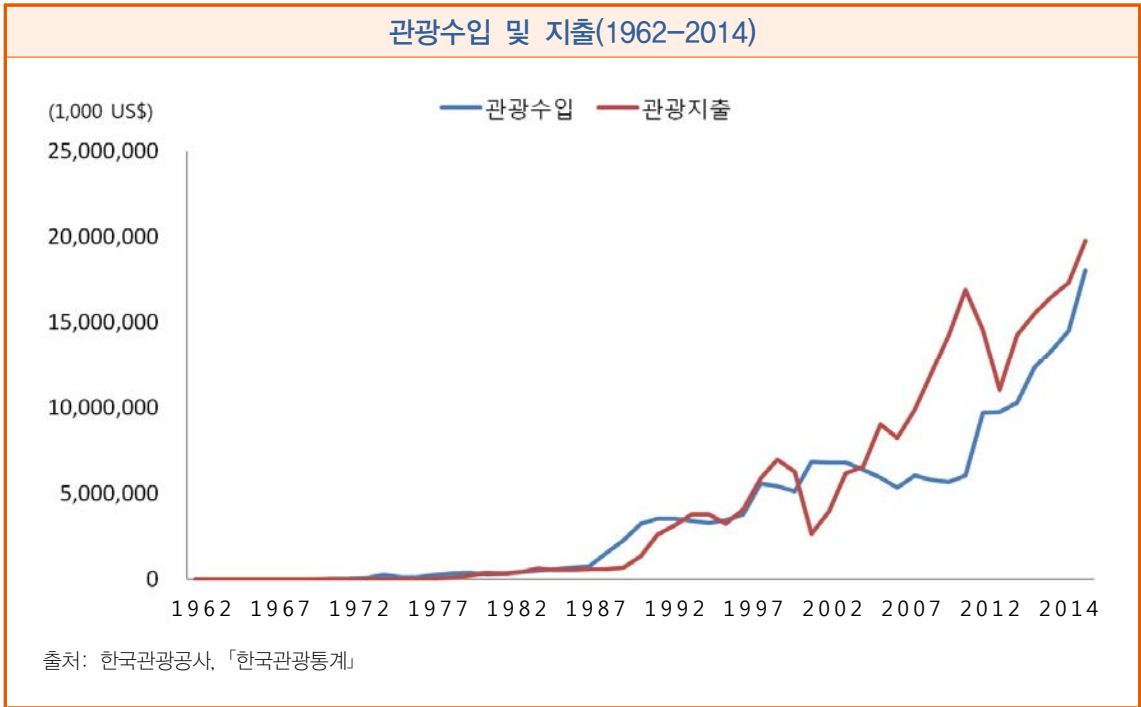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총수	14,375	15,149	17,151	20,985	23,983	29,190	33,321	33,156	33,743	37,411	38,301	38,454	38,837
부수	37,812	58,537	60,064	64,611	73,128	88,327	104,411	110,499	114,971	145,100	155,801	167,258	197,225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총수	41,712	22,770	24,783	26,304	29,564	24,407	26,664	27,313	28,838	25,910	25,632	25,162	
부수	241,839	134,616	136,752	139,222	152,326	144,184	158,137	188,708	157,510	75,841	68,408	75,02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수	27,126	26,290	27,527	35,992	38,035	33,804	36,558	36,456	35,515	37,603	34,342	37,838	
부수	81,555	78,091	82,097	96,390	92,408	114,407	89,605	92,951	96,833	100,387	79,388	79,968	

(3) 내외국인 여행경비

한국 사회에서 해외관광이 크게 늘어난 것은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88 올림픽의 개최 및 이후의 개방정책, 여행자유화, 그리고 경제수준의 향상은 모두 해외관광을 더욱 장려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올림픽은 관광수입이 증가하는 큰 계기가 되어 85년 8억 달러였던 관광수입이 86년에 15억 달러로 두 배가 되었고, 88년에 다시 33억 달러로 두 배가 넘게 늘었다. 관광수입은 2008년부터 다시 빠르게 늘기 시작해서 2014년 관광수입은 180억 달러에 이른다.

해외여행 지출의 증가는 처음에는 정부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었다. 1983년 시작된 여행자유화 정책이 1989년에 완전 전면화되자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여행이 급증하였다. 1988년 처음 10억 달러를 넘은 다음 1995년 50억 달러를 넘었다. 외환위기로 인해 잠시 위축되었던 해외여행은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서 2005년 100억 달러를 넘고, 2014년 현재는 200억 달러에 근접하고 있다.



■ 관광수입 및 지출(1962-2014)

(단위: 1,000 US\$; US\$)

	1962	1965	1970	1975	1980	1985
관광수입	4,632	20,798	46,772	140,629	369,265	784,312
1인당 평균 소비액(관광수입)	305	622	270	222	378	550
관광지출	2,166	1,662	12,424	30,709	349,557	605,973
1인당 평균 소비액(관광지출)	211	84	916	237	1,032	1,252
	1990	1995	2000	2005	2010	2014
관광수입	3,558,666	5,586,536	6,811,300	5,793,000	10,290,500	18,062,100
1인당 평균 소비액(관광수입)	1,203	1,488	1,280	962	1,170	1,272
관광지출	3,165,623	5,902,693	6,174,000	12,025,000	14,277,700	19,763,100
1인당 평균 소비액(관광지출)	2,028	1,546	1,121	1,193	1,143	1,229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주: 1) 1인당 평균 소비액(관광수입)=관광수입/방한외래관광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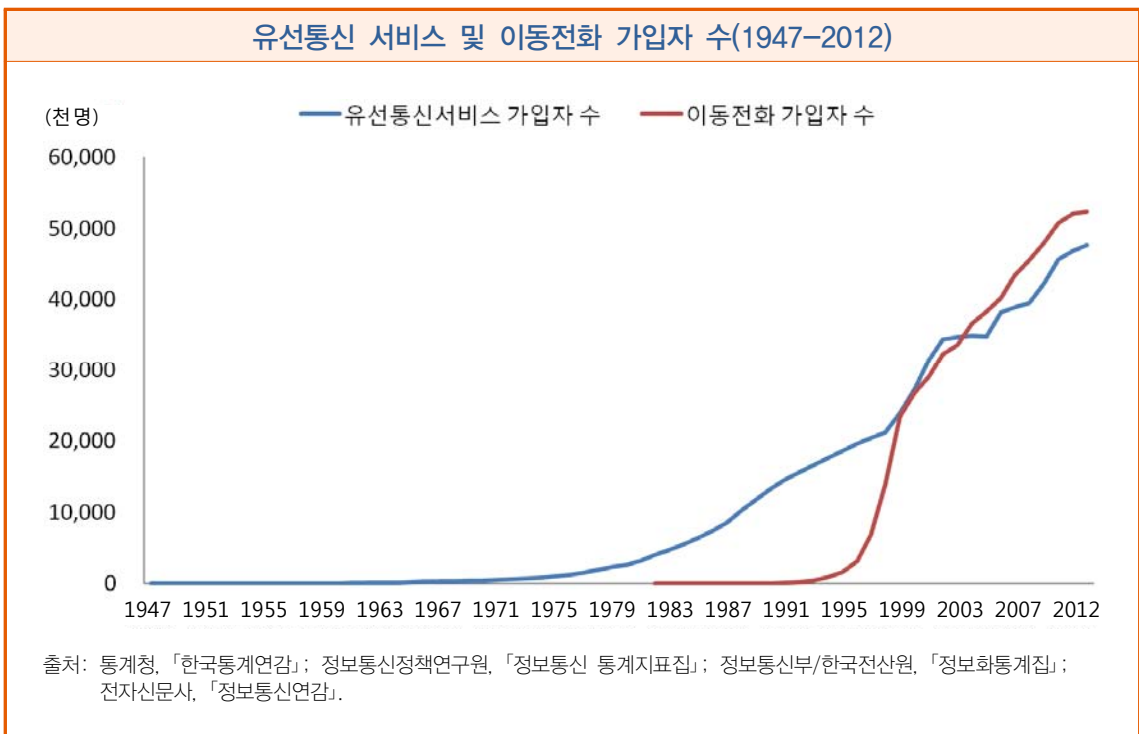
2) 1인당 평균 소비액(관광지출)=관광지출/국민해외관광객

3) 미디어

(1) 유선통신 서비스 및 이동전화 가입자 수

전화 가입자 수는 근대의 대표적 개인 간 통신수단인 전화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나타낸다. 유선전화만이 상용화되었던 1997년 이전 전화 가입자는 1947년에 3만 7,000명이었고, 전쟁 후 1955년에는 2만 9,000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1975년 100만 명을 넘어서서 1988년 1,000만 명을 넘었고, 1997년 2,000만 명, 2001년 3,000만 명, 2009년 4,000만 명을 넘어서 2012년 현재 4,764만 명의 유선전화 가입자가 있다.

이동전화 서비스는 1982년 300명의 가입자가 있었으며, 1999년 2,000만 명, 2002년 3,000만 명, 2006년 4,000만 명을 넘어 2012년 현재 5,235만 명의 가입자가 있다.



Ⅰ 유선통신 서비스 및 이동전화 가입자 수(1947-2012)

(단위: 천명)

	1947	1950	1955	1960	1965	1970	1975	1980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37	8	29	87	221	481	1,075	2,705
이동전화 가입자 수	-	-	-	-	-	-	-	-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유선통신서비스 가입자 수	6,517	13,276	18,600	27,242	34,844	45,633	46,825	47,641
이동전화 가입자 수	5	80	1641	26,816	38,342	50,767	52,104	52,348

6. 주거

1) 주택공급

(1) 주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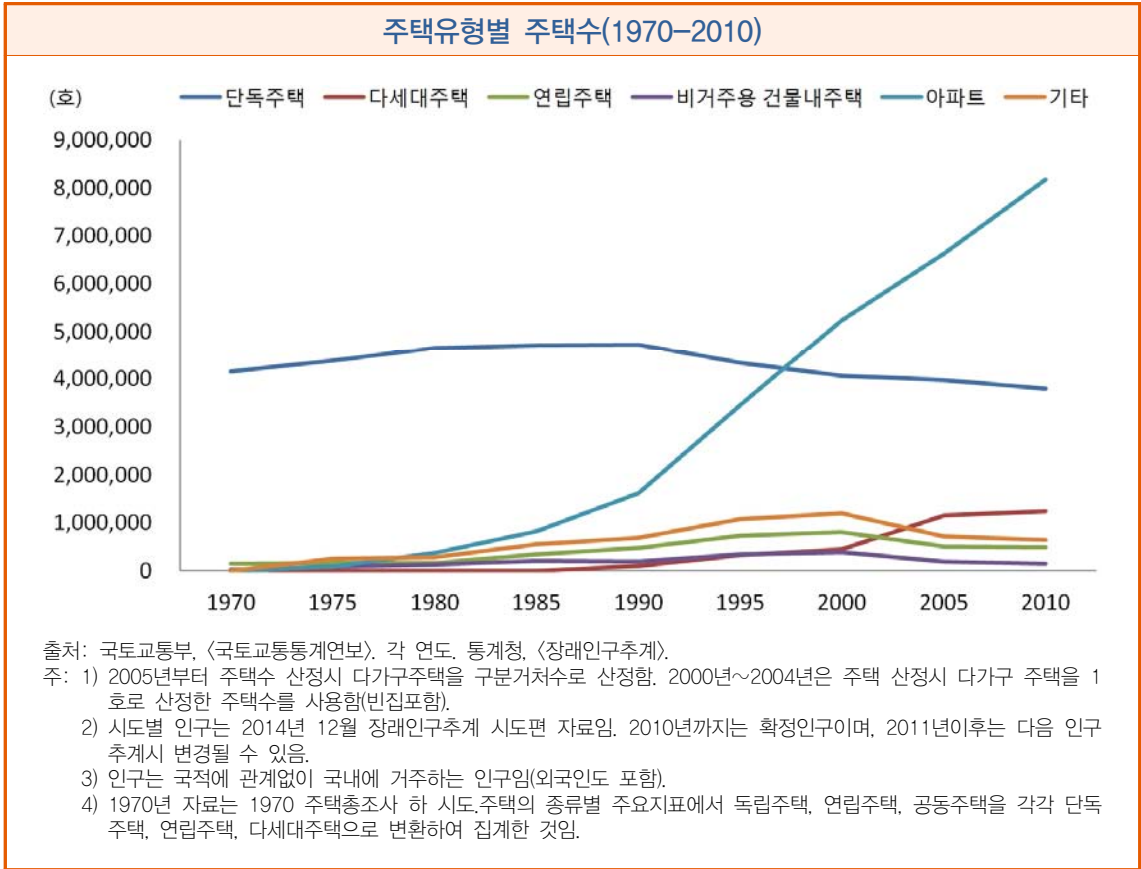
주택수란 전문용어로는 주택재고인데,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1) 영구건물, 2)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3) 독립된 출입구, 4)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의 네가지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을 포함한다.

한국의 주택수는 2013년 현재 1,896만호인데, 이는 1980년의 531만호에 비하면 33년 만에 3.56배 늘어난 것이다. 단독주택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1995년까지는 단독주택 수가 430만~480만호로 가장 인기 있는 주택유형이었지만, 2000년부터는 아파트가 520만호를 넘어서며, 가장 인기 있는 주택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1990년 이후 단독주택의 수는 470만호(1990년)에서 430만호(1995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약 380만호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아파트의 경우 1975년 약 9만호에서 2010년 약 820만호로 9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밖에 1990년부터 조사된 다세대주택 역시 2010년까지 10배 정도의 증가를 보였다.

인구 천명당 주택수로 표시하면 그 숫자는 1995년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2005년에는 전년과 비교하여 주택수가 16.7%의 급증을 보였다. 수도권 주택수가 이 시기에 21%, 지방의 주택수가 13.1% 증가하여, 수도권 주택수가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²⁾

2) 2005년의 주택 수가 전년도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한 이유는 실제로 2005년에 주택공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의 한 유형으로 과거에는 1호로

일본(2008년 451호), 영국(2011년 434호), 미국(2010년 410호)과 비교하여 한국의 인구 천명당 주택수는 364호에 머무르고 있다. 그만큼 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수가 한국이 가장 많다는 의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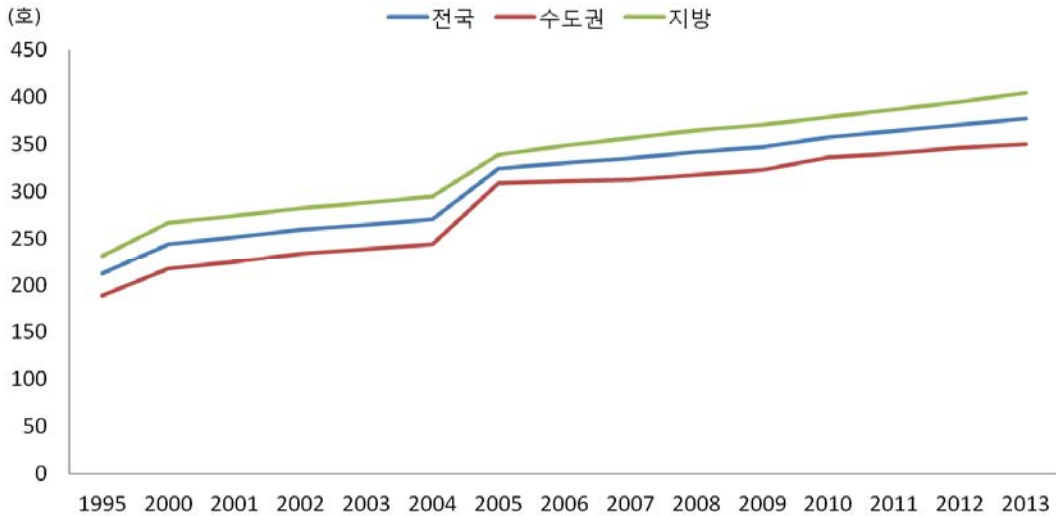
주택유형별 주택수(1970-2010)

(단위: 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아파트	기타
1970	4,154,911	146,234	33,198	25,468	-	-
1975	4,381,772	164,718	-	98,431	89,248	263,149
1980	4,652,127	161,795	-	131,248	373,710	293,043
1985	4,719,464	349,985	-	213,155	821,606	563,140
1990	4,726,933	487,506	115,349	202,481	1,628,117	689,987
1995	4,337,105	734,172	336,356	342,788	3,454,508	1,076,960
2000	4,069,463	812,872	453,117	392,571	5,231,319	1,205,443
2005	3,984,954	520,312	1,164,251	198,353	6,626,957	718,665
2010	3,797,112	503,630	1,246,486	151,280	8,185,063	654,910

산정하다가 2005년부터는 거주가구 수(구분거처)로 산정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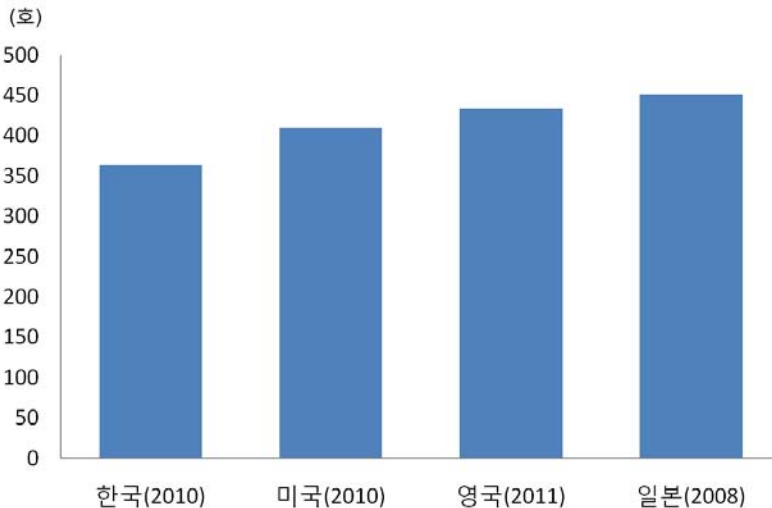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주택수(1995-2013)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 주: 1) 주택재고는 한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1) 영구건물, 2) 한 개 이상의 방과 부엌, 3) 독립된 출입구, 4)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의 네가지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영업용(비주거용) 건물 내 주택을 포함함.
2) 빈집수는 제외함.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주택수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American Housing Survey」 2010.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English Housing Survey: Household Report」 2011.

일본총무성통계국, 「주택토지통계조사」, 2008.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주택수

(단위: 호)

한국(2010)	미국(2010)	영국(2011)	일본(2008)
364	410	434	451

(2) 주택건설

주택건설³⁾은 <국토교통통계연보>를 통해 1990년~2014년 사이에 건설된 총 주택수와 인구 천명당 주택건설로 살펴보았다. 주택건설은 1980년대까지는 연간 25만호 내외에 머물러 있었으나, 1988년에 31만호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한 후, 1990년경부터 연도별 부침이 있기는 하나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7년과 1998년 사이,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부동산경기도 침체되면서 주택건설수가 크게 떨어졌지만, 비교적 활발하게 주택건설이 이루어져 왔다.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의 영향으로 주택건설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1990년에는 전국적으로 75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었으나, 그 이후 점차 줄어들어서 2010년대에 들어서는 매년 50만호 내외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이처럼 1980년대 후반 이후 주택공급이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그 이전까지의 만성적인 주택부족과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불만을 해소하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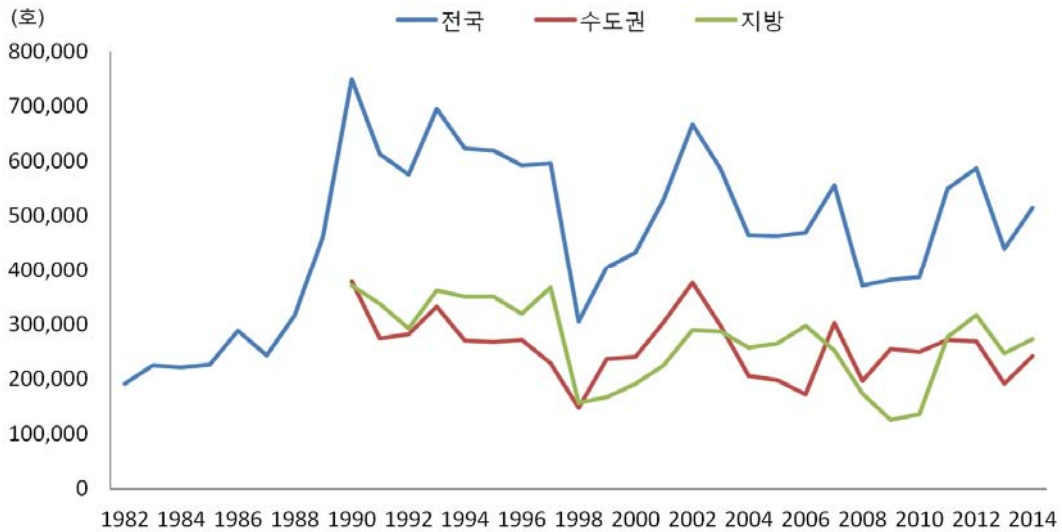
인구 천명당 건설 주택수로 살펴보아도 양상은 비슷하다. 1990년대 초반에는 천명당 약 13호에서 17호 내외의 주택이 건설된 반면, 2000년대 이후에는 10호 내외의 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여기에서 통계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주택공급의 원천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반면, 2000년대 들어서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이는 주택매매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고, 분양가 자율화나 미분양 아파트 지원대책 등으로 인해 주택투자의 수익성이 좋아진 결과 건설업체들이 주택공급에 적극 참여한 결과이다.

한국의 주택건설은 외국에 비교해 보면 매우 활발한 양상임을 알 수 있다. 일본(6.5호), 미국(2.2호), 영국(1.9호)과 비교할 때 인구 천명당 건설된 주택 수는 한국이 7.9호로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주택건설이 매우 활발한 것은 그동안 주택 수요에 비해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단위 인구 당 주택의 수요가 증가한 점, 그리고 외국에 비해 주택의 내구연한이 짧아서 재건축하거나 신규건축해야 하는 수요가 많은 점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 여기서 주택건설은 실제 완공되어 사용된 상태가 아니라 인허가 실적을 말한다.

전국, 수도권 및 지방 건설 주택수(1982-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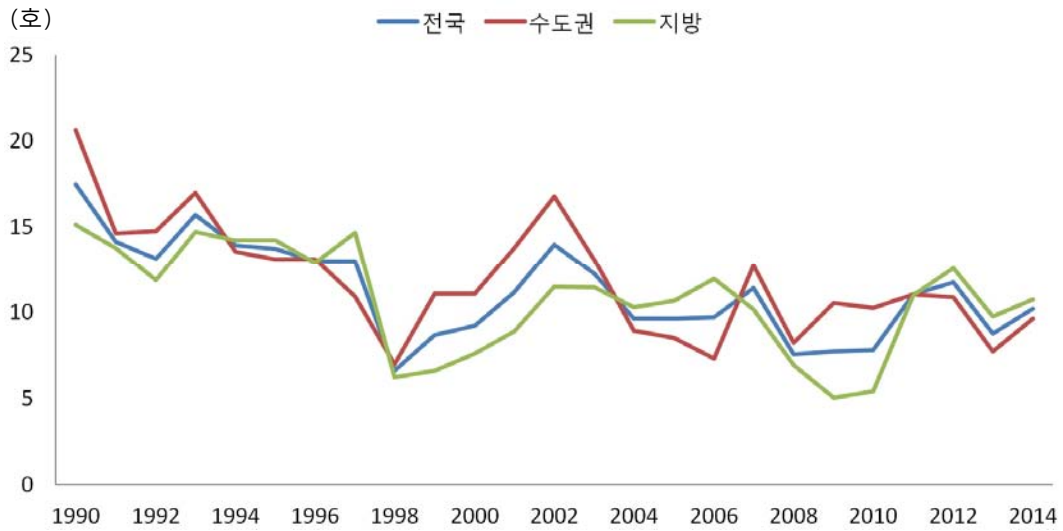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각 연도.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전국, 수도권 및 지방 건설 주택수(1982-2014)

(단위: 호)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전국	191,420	225,990	222,047	227,362	288,252	244,301	316,900	462,15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국	750,378	613,083	575,492	695,319	622,854	619,057	592,132	596,435	
수도권	378,797	274,685	282,983	332,421	271,406	268,111	271,927	229,370	
지방	371,581	338,398	292,509	362,898	351,448	350,946	320,205	367,065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306,031	404,715	433,488	529,854	666,541	585,382	463,800	463,641	
수도권	148,669	237,454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지방	157,362	167,261	192,503	225,458	290,293	288,093	258,081	265,74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469,503	555,792	371,285	381,787	386,542	549,594	586,884	440,116	515,251
수도권	172,058	302,551	197,580	255,158	250,218	272,156	269,290	192,610	241,889
지방	297,445	253,241	173,705	126,629	136,324	277,438	317,594	247,506	273,362

전국, 수도권 및 지방 인구 천명당 건설 주택수(1990-2014)



출처: 국토교통통계누리, 「주택건설실적통계」, 각 연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2014.

주: 1) 2014년 12월 장래인구추계 시도편 자료임. 2010년까지는 확정인구이며, 2011년이후는 다음 인구추계시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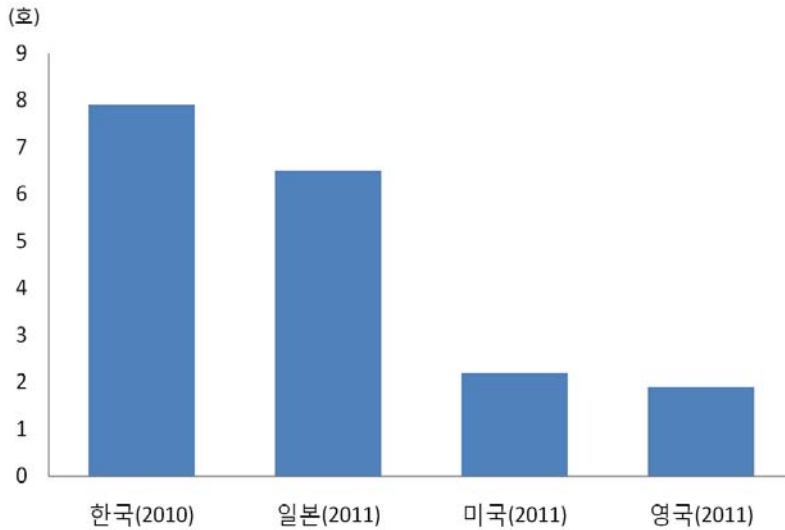
2) 인구는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인구임(외국인도 포함).

전국, 수도권 및 지방 인구 천명당 건설 주택수(1990-2014)

(단위: 호)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전국	17.50	14.16	13.15	15.73	13.95	13.73	13.01	12.98	
수도권	20.65	14.66	14.78	16.99	13.58	13.13	13.13	10.93	
지방	15.15	13.78	11.89	14.73	14.25	14.22	12.90	14.70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6.61	8.68	9.22	11.19	14.00	12.23	9.65	9.63	
수도권	7.01	11.08	11.08	13.78	16.78	13.07	8.94	8.53	
지방	6.27	6.64	7.62	8.92	11.52	11.47	10.31	10.66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9.71	11.44	7.59	7.76	7.82	11.04	11.74	8.76	10.22
수도권	7.33	12.76	8.23	10.56	10.28	11.07	10.89	7.74	9.66
지방	11.95	10.18	6.96	5.06	5.44	11.01	12.57	9.77	10.76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건설 주택수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통계연보」, 2012.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US Housing Market Conditions」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Housing Statistics」
 일본 총무성통계국, 「주택토지통계조사」
 주: 주택건설은 착공호수 기준.

주요국의 인구 1000명당 건설 주택수

(단위: 호)

영국(2011)	미국(2011)	일본(2011)	한국(2010)
1.9	2.2	6.5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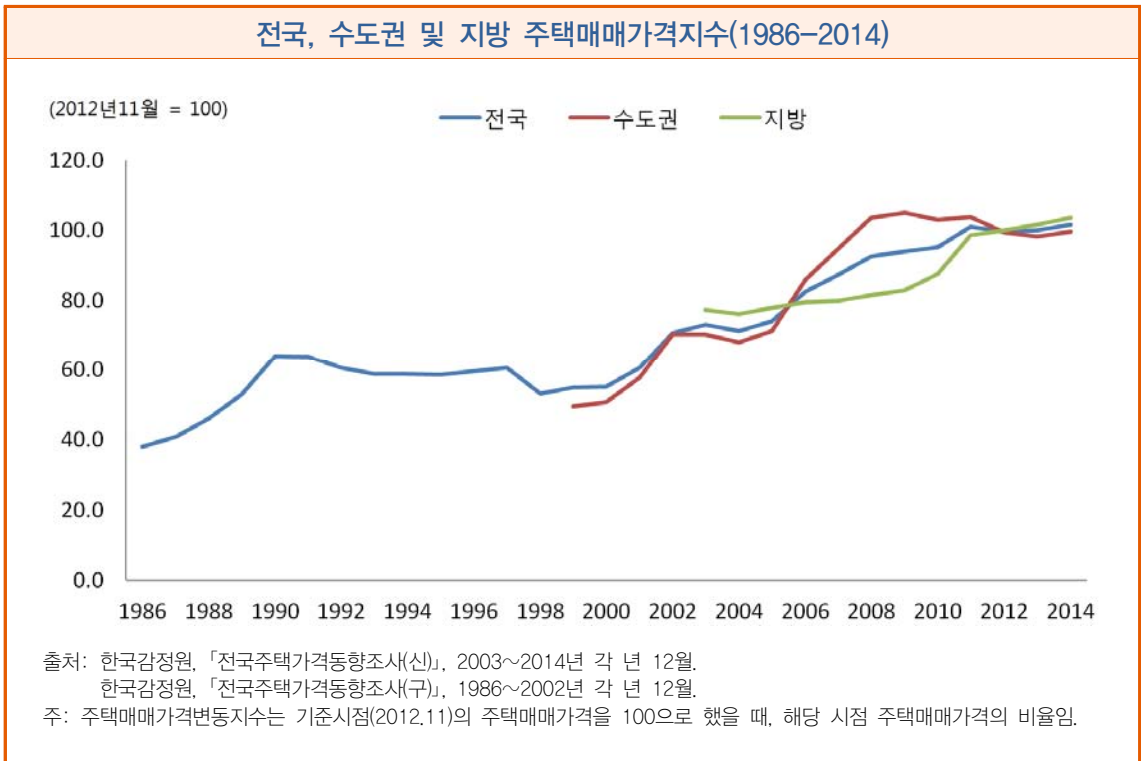
2) 주택시장

(1) 주택매매가격변동

주택 가격은 주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한국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2년 11월을 100으로 할 때, 1986년 38.1에서 2014년 101.8로 2.7배 증가하였다. 주택 가격은 1980년대의 심각한 주택난을 겪으면서 1990년에 정점을 찍은 후, 활발한 주택건설의 영향으로 조금씩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다. 이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저금리 기조가 정착하면서, 낮은

이자수익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다. 은행권도 기업대출 대신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을 늘리면서, 주택가격상승에 일조하였다.

한편 주택유형별로 주택 가격의 변화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의 가격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연립주택이나 아파트의 가격상승은 훨씬 가파르다. 특히 아파트의 매매가격은 최근에 들어올수록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단독주택의 경우 1990년~1997년에는 2012년 11월 단독주택 가격의 90~100%선에서 사고 팔렸으나, 1998년~2002년에는 2012년 11월 단독주택 가격의 80~90% 선에서 매매되어, 단독주택의 시장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해왔음을 알 수 있다. OECD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010년 이후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에서 주택매매가격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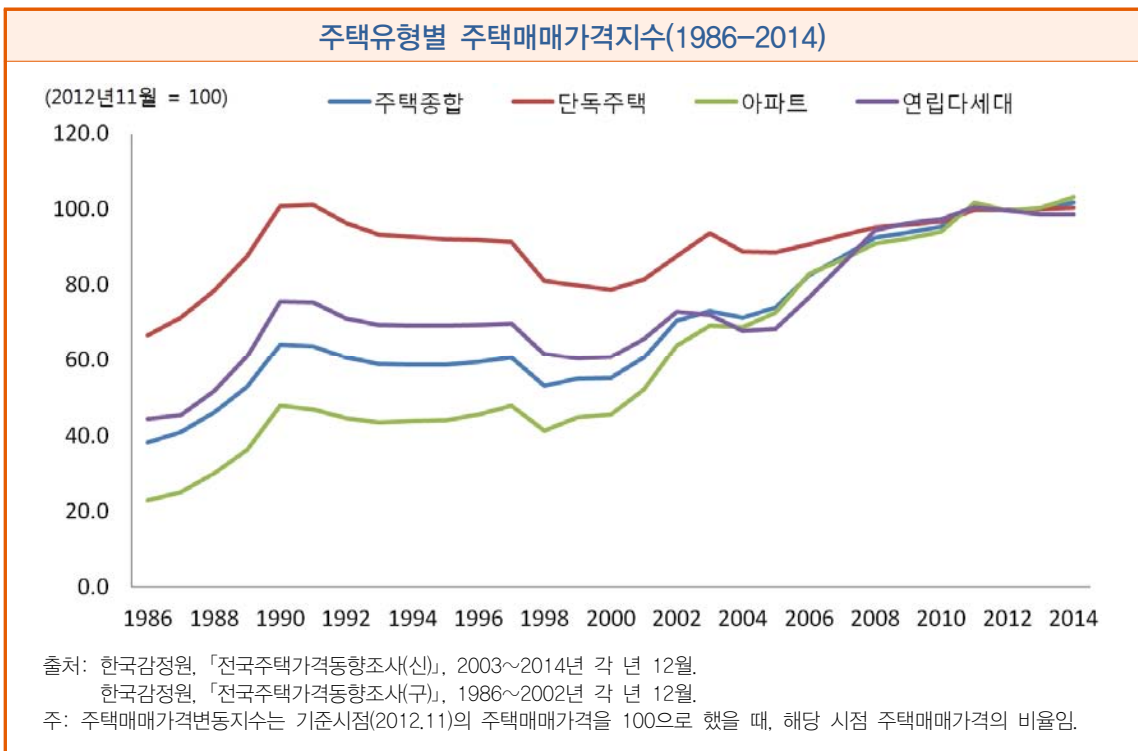


전국, 수도권 및 지방 주택매매가격지수(1986-2014)

(단위: 2012년11월=100)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전국	38.1	40.9	46.2	53.1	64.2	63.8	60.7	58.9	58.8	58.7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59.6	60.8	53.3	55.1	55.3	60.8	70.7	73.2	71.4	74.1
수도권	-	-	-	49.6	50.8	57.8	70.4	70.3	68.1	71.4
지방	-	-	-	-	-	-	-	77.4	76.1	78.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82.7	87.5	92.6	94.0	95.4	101.2	99.8	100.1	101.8	
수도권	86.0	95.0	103.8	105.1	103.2	104.0	99.5	98.4	99.8	
지방	79.6	80.1	81.6	83.1	87.6	98.7	100.1	101.7	10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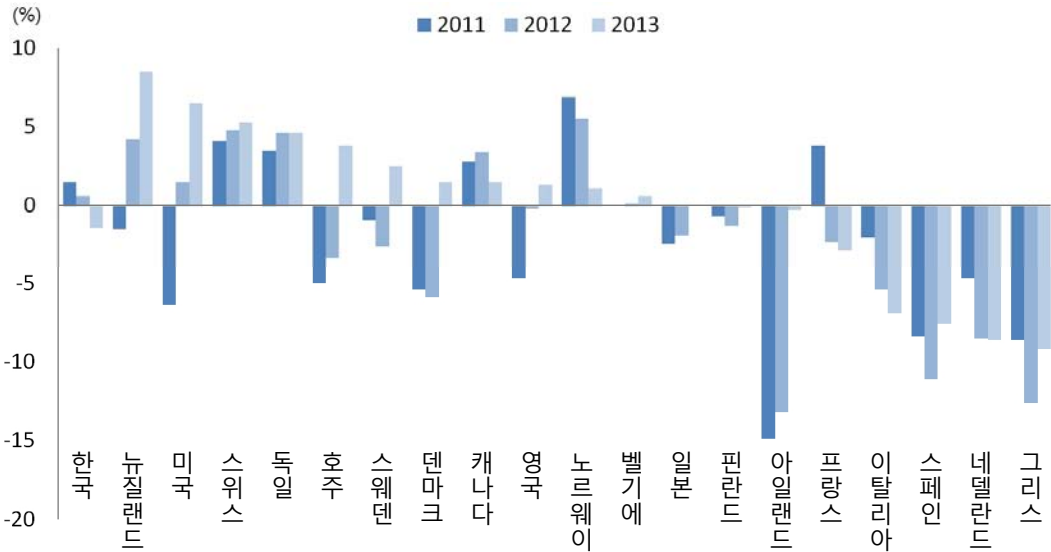


주택유형별 주택매매가격지수(1986-2014)

(단위: 2012년11월=100)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주택종합	38.1	64.2	58.7	55.3	74.1	95.4	101.2	99.8	100.1	101.8
단독주택	66.8	101.0	92.2	78.8	88.7	96.8	99.9	100.0	100.2	100.5
연립다세대	44.3	75.7	69.2	61.0	68.5	97.4	100.8	99.8	98.7	98.8
아파트	23.0	48.0	44.1	45.5	72.8	94.2	101.9	99.7	100.5	103.2

주요국의 주택매매가격변동(2011-2013)



출처: OECD, 「www.oecd.org」 2014.08 「OECD Economic Outlook」 2014.

주: 1) 주택가격변동률은 전년대비 주택가격의 변동률임.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주요국의 주택매매가격변동(2006-2013)

(단위: %)

국 가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4.5	6.9	-0.5	-2.3	-0.1	1.5	0.6	-1.4
뉴질랜드	7.3	9.3	-7.6	-4.0	0.7	-1.5	4.2	8.5
미국	3.2	-2.3	-10.6	-5.6	-4.6	-6.4	1.5	6.5
스위스	1.0	0.4	-0.5	5.8	4.0	4.1	4.8	5.3
독일	-1.0	-0.4	-1.0	0.5	0.7	3.5	4.6	4.6
호주	4.0	7.9	1.2	0.8	9.7	-5.0	-3.3	3.8
스웨덴	10.8	8.9	0.2	-0.5	6.3	-0.9	-2.6	2.5
덴마크	19.3	3.3	-7.0	-13.4	0.1	-5.4	-5.9	1.5
캐나다	10.2	9.8	3.8	-3.0	7.5	2.8	3.4	1.5
영국	3.6	8.1	-4.0	-9.6	3.1	-4.7	-0.2	1.3
노르웨이	11.6	11.2	-4.3	-0.6	5.9	6.9	5.5	1.1
벨기에	8.6	6.2	1.6	0.4	3.4	0.0	0.1	0.6
일본	-2.7	-0.3	-1.8	-1.4	-2.1	-2.4	-1.9	0.0
핀란드	4.9	3.2	-2.8	-1.7	6.7	-0.7	-1.3	-0.1
아일랜드	11.8	5.3	-7.4	-12.5	-11.3	-14.9	-13.2	-0.3
프랑스	9.8	4.4	-1.9	-6.6	3.9	3.8	-2.3	-2.8
이탈리아	3.8	2.9	-1.4	-3.6	-2.5	-2.0	-5.4	-6.9
스페인	6.2	2.2	-3.2	-6.6	-5.5	-8.4	-11.1	-7.6
네덜란드	2.4	2.3	1.9	-2.9	-3.7	-4.7	-8.5	-8.6
그리스	9.1	3.0	-2.6	-4.9	-8.1	-8.6	-12.6	-9.2

(2) 주택전세가격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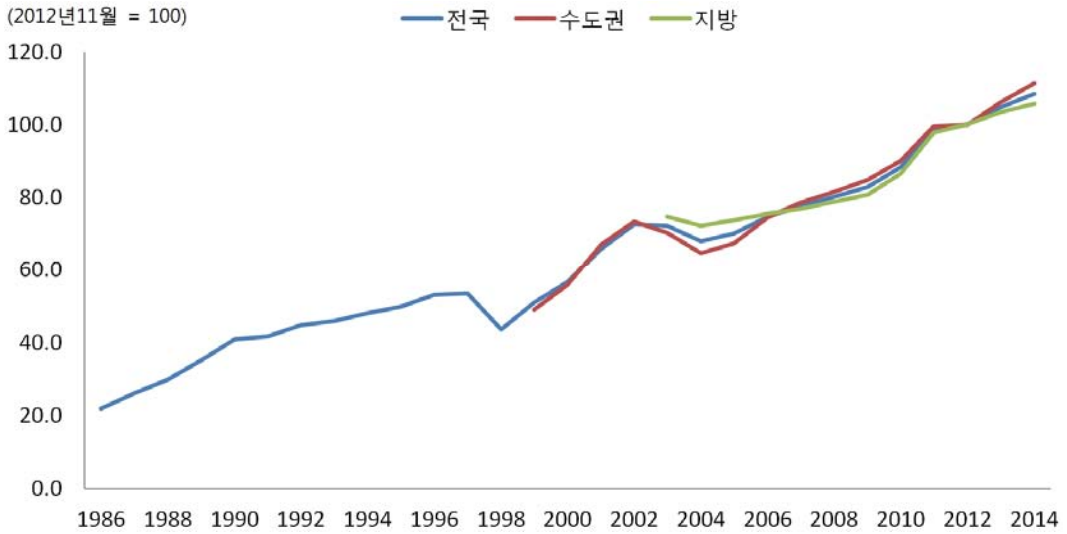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함께 주택 전세가격지수는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인 중 하나이다. 그 추세는 1986년부터 관찰한 바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직후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을 빼고는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특히 최근으로 올수록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완만해진 반면, 주택전세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12년 11월을 100으로 할 때, 1986년 22.1에서 2014년 108.5로 4.9배 증가하였다. 1986년~2001년 동안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02년~2005년 동안 주택전세가격은 감소되었다가 회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2010년 이후에는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 시점 이후 2014년까지 주택매매가격에 비해 주택전세가격은 훨씬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다.

이러한 주택매매가와 주택 전세가 간의 디커플링은 주택에 대한 인식변화와 연관되어 있다. 소유보다는 임차를 선호하는 비중이 증가한 점, 높은 구입비나 세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기 보다는 새로 건축한 새 집에서 세 들어 사는 편이 유리하다는 인식 등이 확산된 점, 그리고 최근 은행권의 금리가 낮아지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자 상대적으로 전세를 구하기 어려워진 시장요인의 변화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주택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전세가격에서 단독주택의 전세가격지수가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아파트의 전세가격지수는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이는 아파트생활의 편리함과 시장규모가 크다 보니 환금성이 높은 점 때문으로 보인다.

전국, 수도권 및 지방 주택전세가격지수(1986-2014)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신)」, 2003~2014년 각 년 12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구)」, 1986~2002년 각 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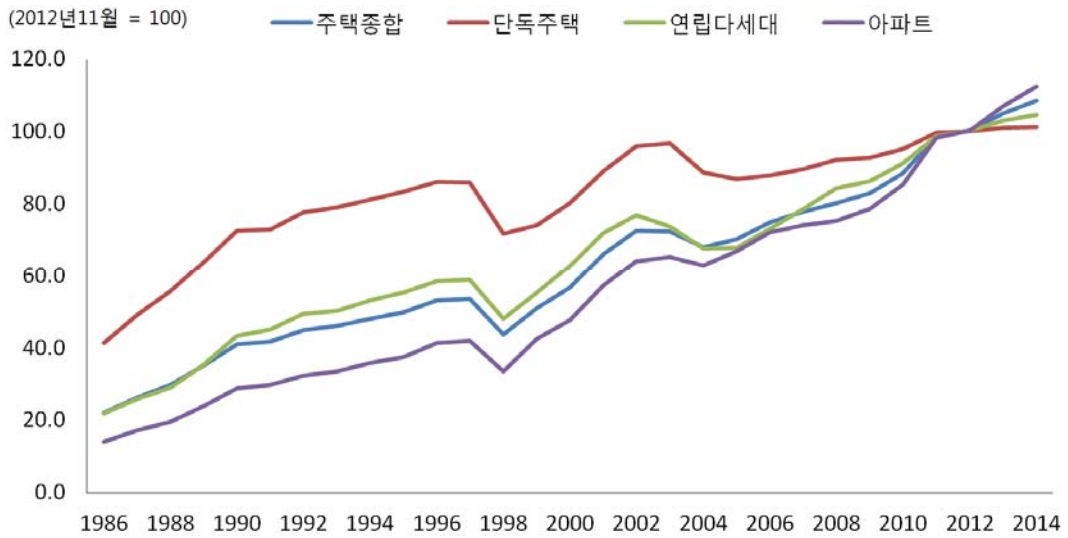
주: 주택전세가격변동지수는 기준시점(2012.11)의 주택전세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전세가격의 비율임.

전국, 수도권 및 지방 주택전세가격지수(1986-2014)

(단위: 2012년11월=100)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전국	22.1	41.0	49.9	56.7	70.2	88.4	98.8	100.2	104.9	108.5
수도권	-	-	-	55.9	67.5	90.1	99.7	100.1	106.3	111.4
지방	-	-	-	-	73.8	86.7	97.9	100.3	103.6	105.9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1986-2014)



출처: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신)」, 2003~2014년 각 년 12월.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구)」, 1986~2002년 각 년 12월.
 주: 주택전세가격변동지수는 기준시점(2012.11)의 주택전세가격을 100으로 했을 때, 해당 시점 주택전세가격의 비율임.

주택유형별 주택전세가격지수(1986-2014)

(단위: 2012년11월=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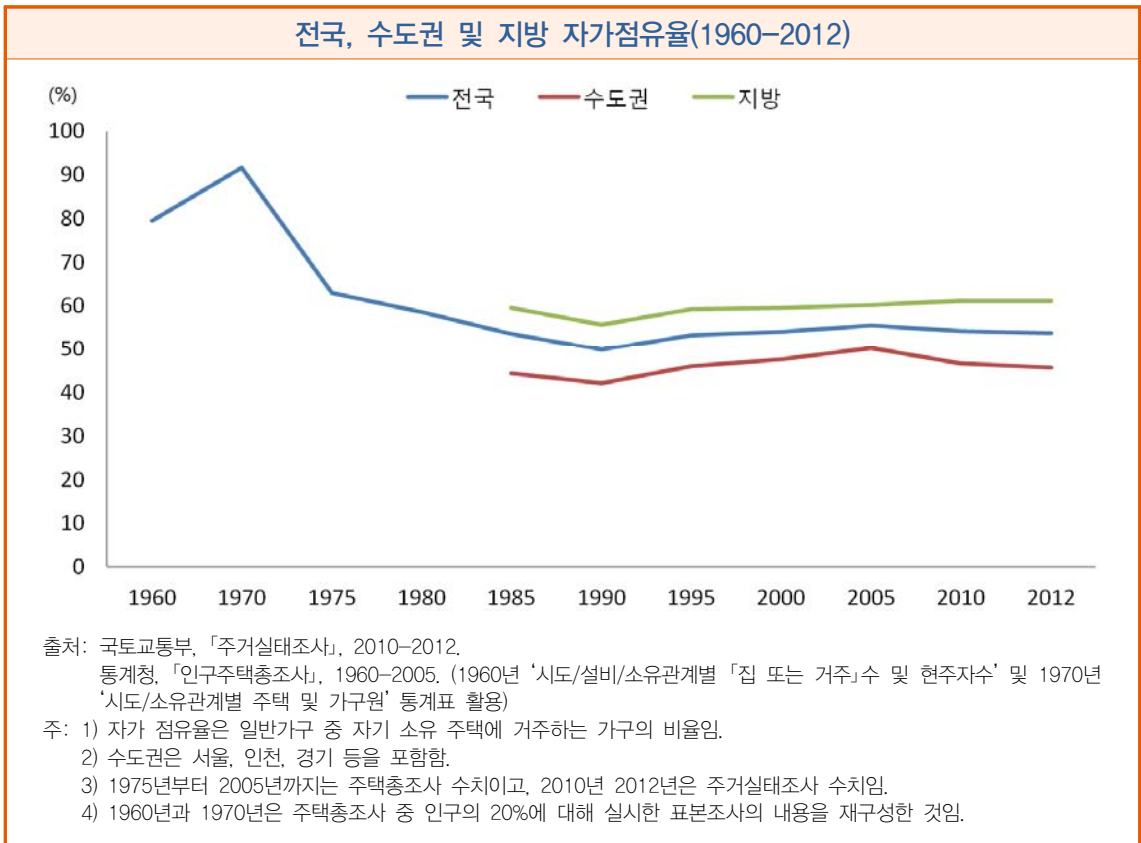
	198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주택종합	22.1	41.0	49.9	56.7	70.2	88.4	98.8	100.2	104.9	108.5
단독주택	41.4	72.6	83.3	80.3	87.0	95.1	99.6	100.1	101.1	101.3
연립다세대	21.9	43.2	55.3	62.8	67.8	91.2	98.8	100.2	103.1	104.6
아파트	14.0	28.8	37.5	47.6	66.8	85.3	98.4	100.3	107.0	112.5

3) 주거상황

(1) 자가점유율

한국의 주택 자가점유율은 1970년대에 최고점을 찍은 후 점차 하락했고, 1975년부터 2012년까지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지방의 자가점유율이 수도권에 비해 10%가량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수도권의 주택매매가격이나 전세가격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자가점유율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유난히 낮다. 미국(66.2%), 영국(65.1%), 일본(61.1%)에 비해, 한국의 2012년 자가점유율은 53.8%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한국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서 주택구입이 어려운 점과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 개념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는 점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곳에 살지 않고 세를 사는 이들의 숫자가 매우 많은데, 이는 한국의 지역 간 인구이동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과 소유하는 주택이 자녀교육이나 출퇴근 여건 등과 맞지 않는 점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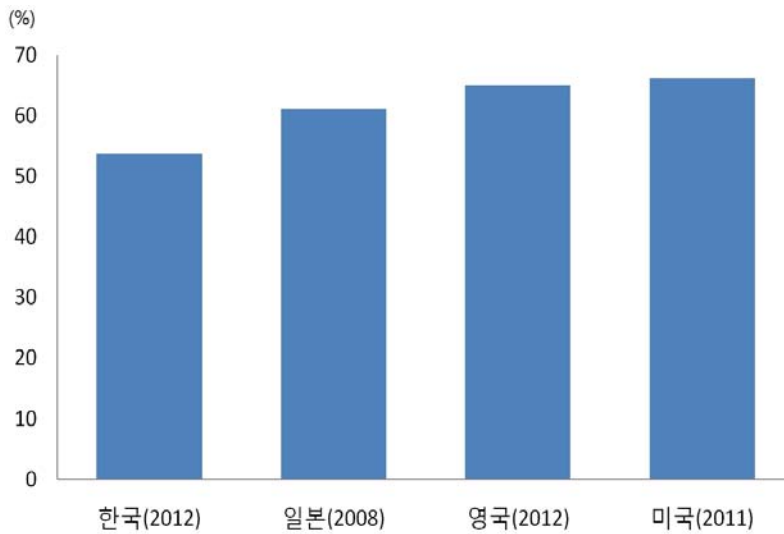


■ 전국, 수도권 및 지방 자가점유율(1960-2012)

(단위: %)

	196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2
전국	79.5	91.7	63.1	58.6	53.6	49.9	53.3	54.2	55.6	54.3	53.8
수도권	-	-	-	-	44.4	42.2	46.0	47.6	50.2	46.6	45.7
지방	-	-	-	-	59.7	55.8	59.3	59.6	60.3	61.2	61.2

주요국의 자가점유율



출처: 국토교통부, 「주거실태조사」 2012.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portal.hud.gov/」 2014. 08 「US Housing Market Conditions」

GOV.UK 「www.gov.uk/」 2014. 08 「English housing survey 2012」, 「Housing Statistics, 2012」

일본총무성통계국 「www.stat.go.jp/」 2014.08 「일본통계연감」

주: 자가 점유율은 일반가구 중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임.

주요국의 자가점유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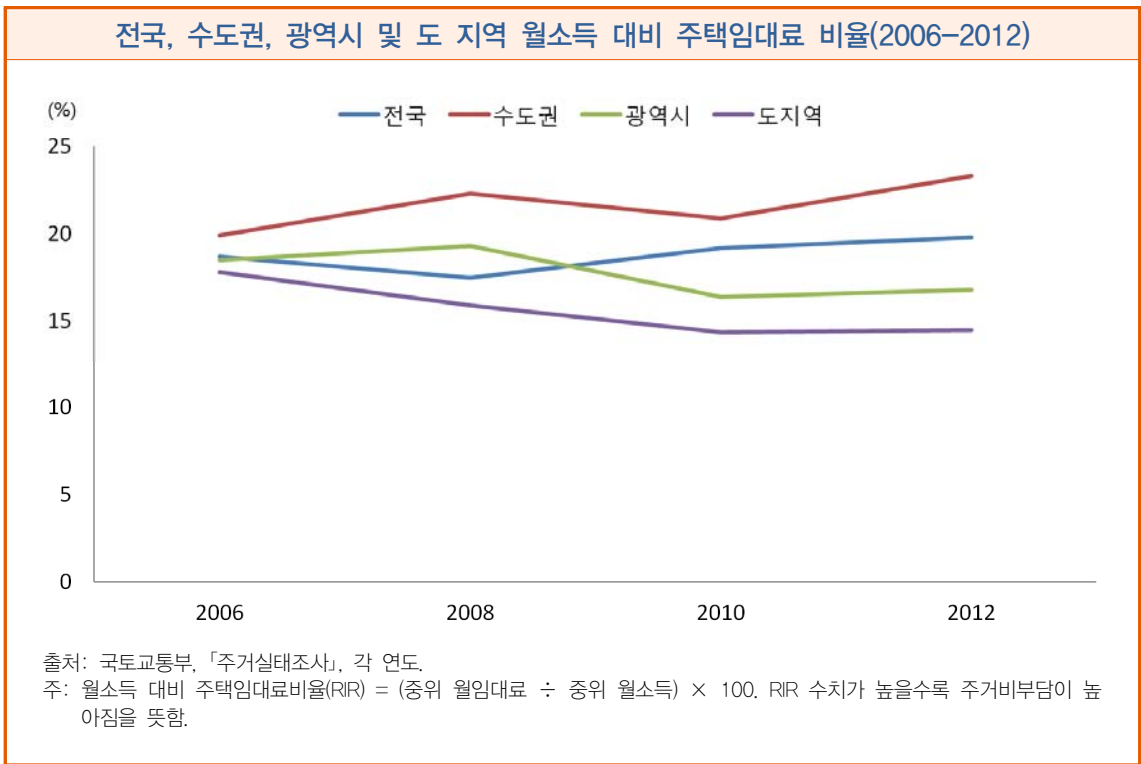
한국(2012)	일본(2008)	영국(2012)	미국(2011)
53.8	61.1	65.1	66.2

(2) 주택임대료비율

주택임대료비율(RIR, Rent to Income Ratio)은 월소득대비 주택임대료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중위월임대료/중위월소득 × 100)로서, 주거비가 사람들의 주거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보여준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가 비교적 최근부터 수행되었기 때문에 2006년부터 주택임대료비율 산정이 가능하다. 주택임대료비율은 2006년에 18.7%에서 2012년에 19.8%로 높아졌다. 지역 간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주택임대료비율이 2006년에 19.9%에서 2012년에 23.3%로 약간 높아졌으나, 도 지역에서는 같

은 기간에 해당 수치가 17.8%에서 14.5%로 낮아졌다. 즉 수도권에서의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임대료 비율은 수도권에 집중되는 주거난을 잘 드러낸다. 주택은 전형적인 지위재 (positional good)로서, 특정 지역에 몰린 수요를 무한정 공급 확대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수요로 인해 임차가구의 주거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1인가구의 증가나 독신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그 추세가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전국, 수도권, 광역시 및 도 지역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2006-2012)

(단위: %)

	2006	2008	2010	2012
전국	18.7	17.5	19.2	19.8
수도권	19.9	22.3	20.9	23.3
광역시	18.5	19.3	16.4	16.8
도지역	17.8	15.9	14.4	14.5

7. 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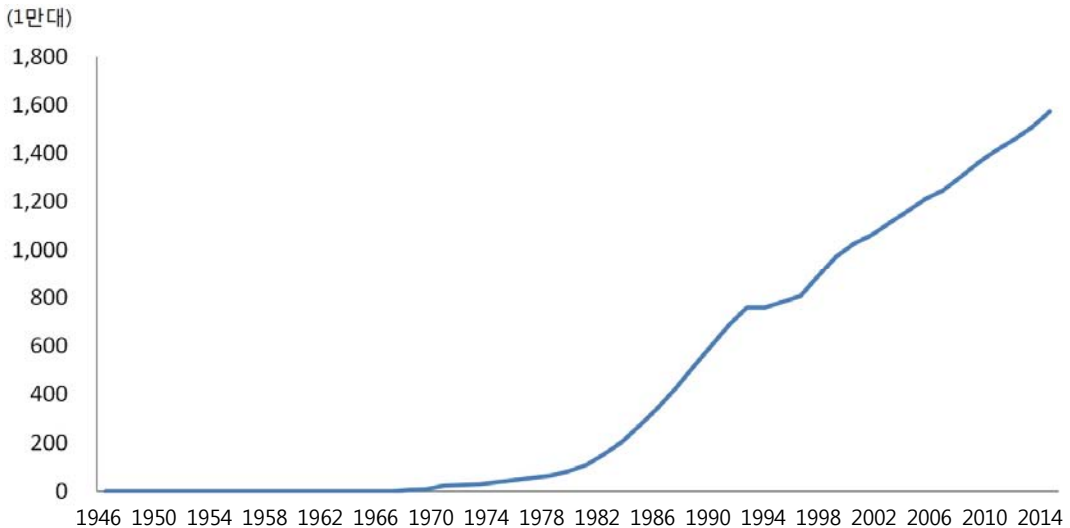
1) 교통공급

(1) 승용차 등록 대수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으로 소득수준이 높아졌고, 성공적인 중화학공업화 이후 자동차의 국내 생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도로망의 확충과 포장 등으로 인프라가 확장된 결과 자동차의 보급이 크게 늘어났다. 해방 직후인 1946년 승용차 등록대수는 1,000대 가량에 불과했고, 1975년에도 8만대에 그쳤으나, 국내 자동차 생산이 본격화한 1980년대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에 총 승용차 등록대수는 207만대, 인구 천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48.3대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총 1,575만대, 인구 천명당 312.4대로 증가하였다.

EU 주요국과 비교해 봐도, 한국은 가장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보급된 나라이다. 인구 천명당 등록된 자동차의 숫자에서는 비교 대상인 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증가율로 따지면 가장 높다.

총 승용차 등록대수(1946-2014)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1966년~2014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1946년~196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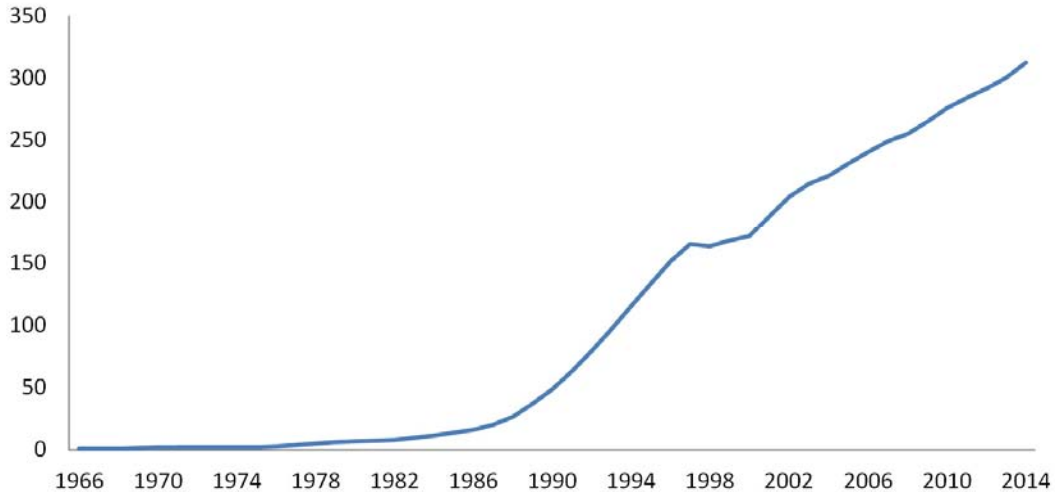
총 승용차 등록대수(1946-2014)

(단위: 만대)

1946	1950	1955	1960	1966	1970	1975	1980	1985
0.1	0.4	0.7	1.3	2	6	8	25	56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7	601	808	1112	1363	1414	1458	1508	1575

인구 1000명당 승용차 등록대수(1966-2014)

(인구 천명당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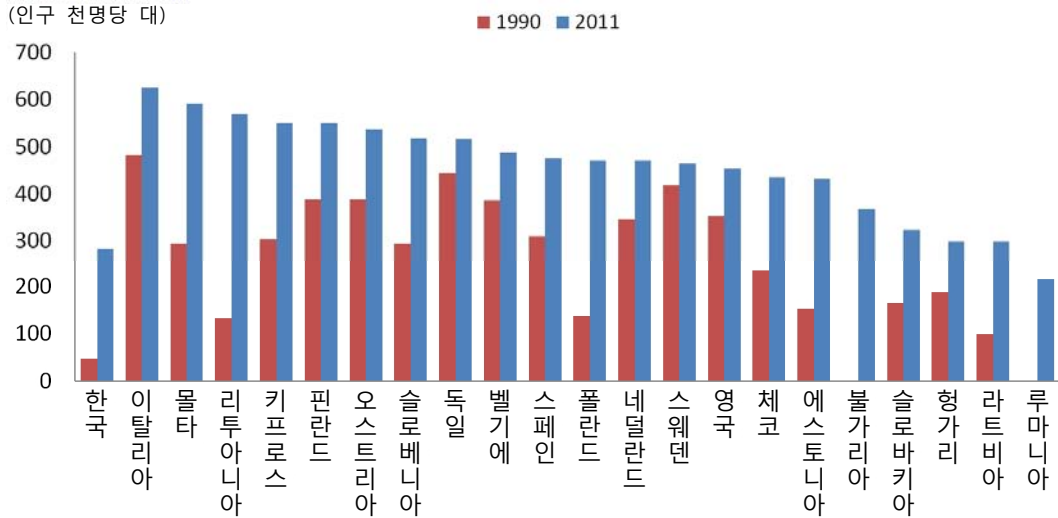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연도.
 주: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대수를 집계한 값임.

인구 1000명당 승용차 등록대수(1966-2014)

(단위: 인구 천명당 대)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0.7	1.9	2.3	6.6	13.7	48.3	133.3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171.9	231.0	275.9	284.1	291.6	300.3	312.4

EU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1990-2011)



출처: EU 「epp.eurostat.ec.europa.eu」 2014. 05,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주: 1)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대수를 집계한 값임.
 2) 키프로스는 2010년도 자료임.

EU 주요국의 인구 천명당 승용차 등록대수(1990-2011)

(단위: 인구 천명당 대)

국 가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한 국	48	133	172	231	276	284
이 탈 리 아	483	530	572	590	606	625
몰 타	295	467	483	525	580	592
리투아니아	133	199	336	428	554	570
키프로스	304	335	384	463	551	551
핀 란 드	388	371	412	462	535	551
오스트리아	388	451	511	504	528	537
슬로베니아	294	357	435	479	518	519
독 일	445	494	521	550	511	517
벨 기 에	387	421	456	468	480	487
스 페 인	309	360	431	463	480	476
네 덜 란 드	347	366	409	434	464	470
폴 란 드	138	195	261	323	447	470
스 웨 덴	419	411	450	459	460	464
영 국	352	378	425	461	458	454
체 코	234	295	335	386	429	436
에스토니아	154	269	339	367	412	433
불 가 리 아	-	-	-	329	353	368
슬로바키아	165	189	237	242	310	324
라트비아	99	134	235	323	306	299
헝 가 리	188	218	232	287	299	299
루 마 니 아	-	97	124	156	202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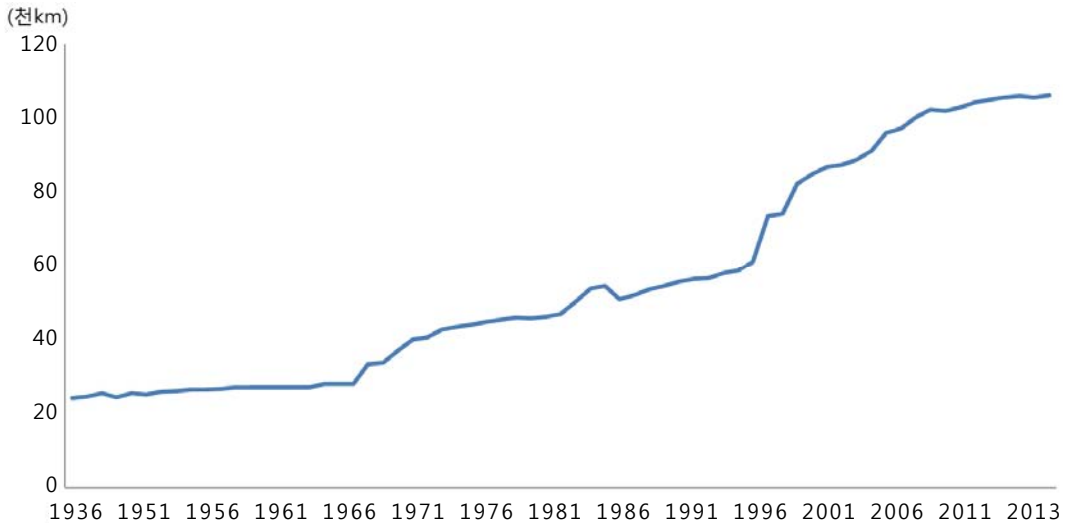
(2) 도로 연장

자동차의 보급이 급격하게 확산된 이유는 도로망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광복 직전인 1944년의 총 도로연장은 2만 5,000 킬로미터였고, 1960년대 초반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 4만 킬로미터로 증가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서 1990년에는 5만6,000 킬로미터를, 그리고 2005년에는 10만 킬로미터를 상회하게 되었다.

이를 인구 1,000 명당 도로연장으로 계산하면 1980년 1.23km에서 2013년 2.12km로 늘어나, 이 기간 동안 1.7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80년~1993년 기간에는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이 1.2~1.4km 사이에서 유지되지만, 서서히 증가하여 2002년 이후 2km 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를 국토면적당으로 따져 보면 1km²당 1980년 0.48km에서 2013년 1.06km로 2.2배 증가한 것이다. 그만큼 전국토가 촘촘한 도로망으로 연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해방 이후 거의 포장되지 않았던 도로들이 2013년에는 82.5%가 포장되어, 대부분의 도로들이 원활하고 빠른 교통이동이 가능한 쾌적한 인프라로 변모했다.

총 도로연장(1936-2013)



출처: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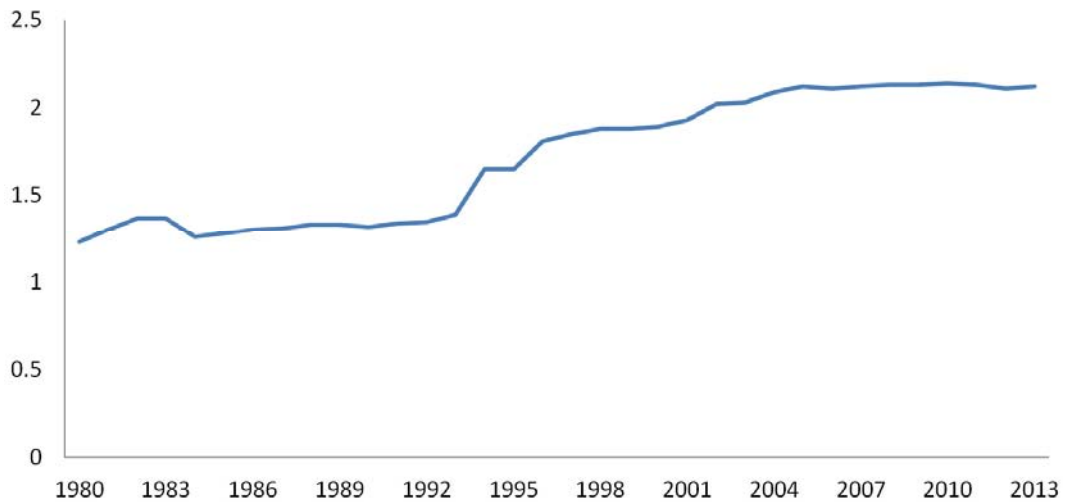
총 도로연장(1936-2013)

(단위: km)

1936	1940	1944	1950	1955	1960	
24,283,880	24,711,440	25,549,581	25,683,432	26,508,094	27,169,161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28,144,669	40,244,287	44,885,385	46,950,909	52,264,133	56,714,687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74,237,403	88,775,021	102,293,149	105,565,078	105,930,868	105,702,963	106,231,701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1980-2013)

(인구 천명당 km)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도로현황조사」, 각 연도; 「지적통계연보」, 각 연도.

주: 인구당 도로연장은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을, 국토면적당 도로연장은 국토면적 1km²당 도로연장을 의미함.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1980-2013)

(단: 인구 천명당 km)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23	1.28	1.32	1.65	1.89	2.12	2.14	2.13	2.11	2.12

(3) 철도 연장

우리나라 철도의 주된 노선인 경부선은 1905년, 호남선은 1914년에 개통되었다. 그래서 해방직전인 1945년 해방 당시 철도 총 길이는 6,362킬로미터에 달했다.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인해 남한에 남겨진 철도의 총연장은 2,642킬로미터가 된다. 그나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심각하게 파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60년대까지 철도는 국가의 주요 교통수단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1970년대 이후 자동차가 확산되면서 상대적 중요성은 줄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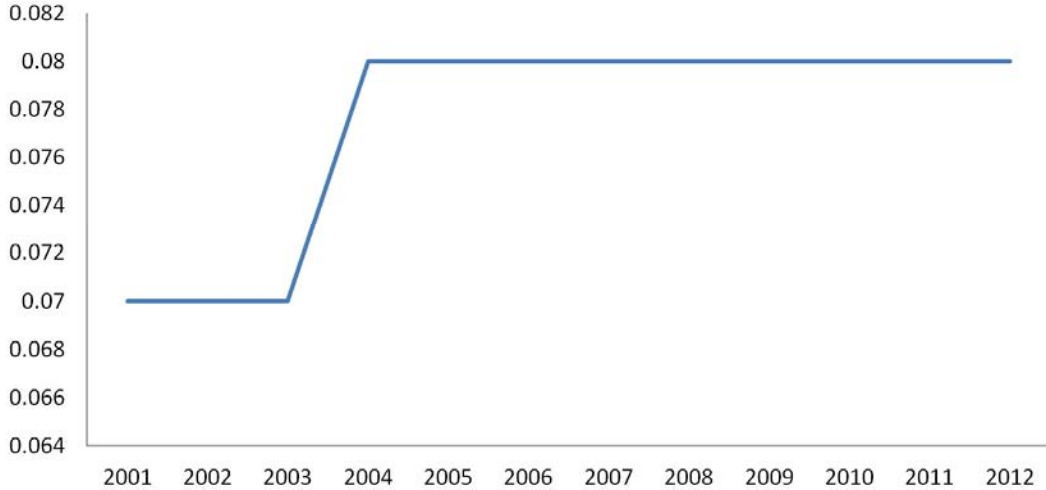
전체 철도 연장은 1984년에 3,116킬로미터였는데, 2003년까지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2004년 KTX 개통 이후 수도권과 광역시를 중심으로 도시철도나 공항철도, 경전철 등이 대폭 건설되면서 철도 연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2014년에는 총 3,590 킬로미터에 이르게 된다. 또한 철도의 복선화가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되어, 복선 노선이 1991년 812km에 불과했다가 2014년에는 2,009km에 달하게 되어 철도교통의 효율을 높이게 되었다.⁴⁾

인구 천명당 철도 길이는 2001년 0.07km에서 2012년 0.08km로 소폭 늘어났다. 도로연장의 비약적인 증가에 비해 전통적인 철도의 중요성은 줄어들었지만,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의 활용방식이 다양해지고 전철화와 지하화로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교통의 수요를 획기적으로 흡수하게 되었다. 특히 KTX 개통이후, 연간 운행 누적거리는 1,397만킬로미터(2004년)에서 3,304킬로미터(2013년)로 늘어났으며, 이는 전국의 일일생활권화를 촉진하고 있다.

4) 한국철도, 2014철도통계연보, 2015.

인구 천명당 철도연장(2001-2012)

(인구 천명당 km)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국토교통부, 「국가교통통계 2013」2014; 「지적통계연보」, 각 연도.

주: 1) 인구당 철도연장은 인구 천명당 철도연장을, 국토면적당 철도연장은 국토면적 1㎢당 철도연장을 의미함.
2) 철도연장은 도시, 공항철도, 경전철연장 포함.

인구 천명당 철도연장(2001-2012)

(단위: 인구 천명당 km)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0.07	0.07	0.07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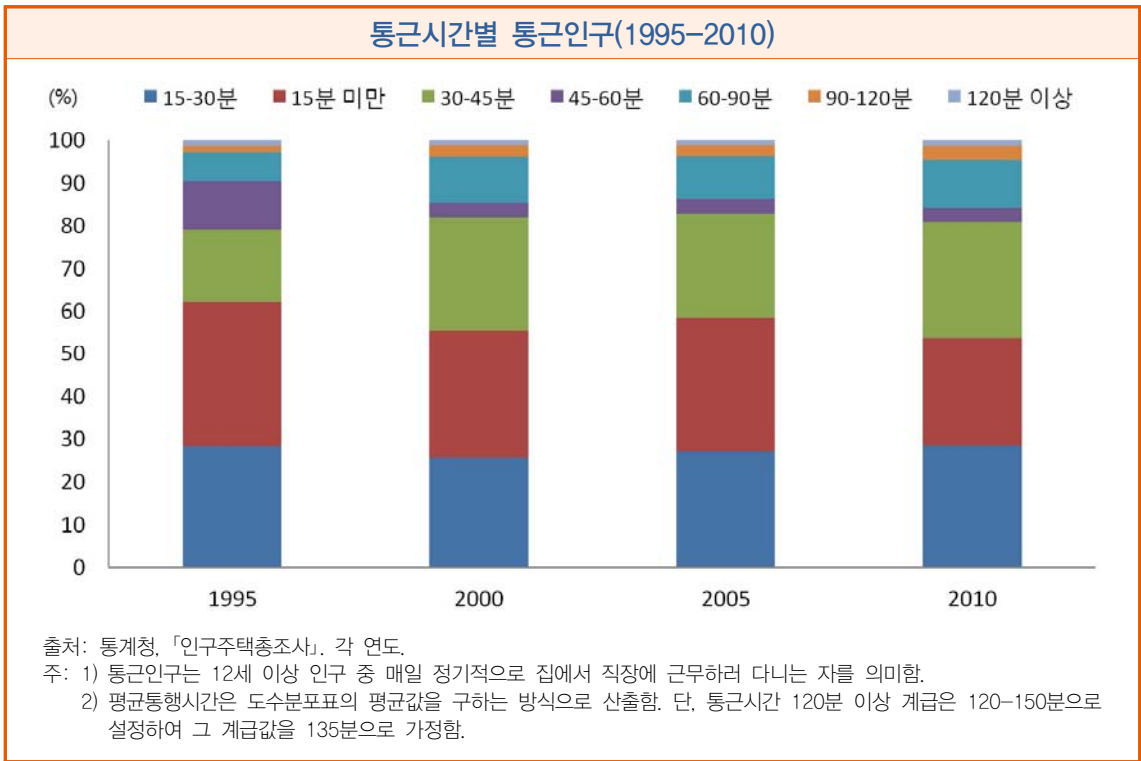
2) 교통 이용

(1) 통근시간

도로망이 대폭 확충되고 자동차 보급도 급격히 늘어났지만, 국민들의 통근과 통학시간은 오히려 늘어났다. 1995년 한국인의 평균 통근시간은 29.6분에서 2010년 33.1분으로 다소 증가하였고, 통학시간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28.3분에서 31.5분으로 비슷하게 증가했다. 1시간 이상 장시간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1995년 통근자의 9.5%에서 2010년 15.6%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통학자 중에서도 8.3%에서 13.8%로 증가했다. 이는 도로교통이 점점 혼잡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승용차 보급률이 높아지다 보니 교통체증이 심해지고,

버스나 택시,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은 낮은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인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통근에 쓴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뉴질랜드, 핀란드, 슬로베니아, 폴란드, 프랑스 등은 평균 20분에 못 미치는 시간을 통근에 쓰는 반면, 독일,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호주, 노르웨이, 리투아니아, 영국, 캐나다, 스페인,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등은 20-24분, 미국, 라트비아, 멕시코 등은 25-30분을, 일본은 38분을 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평균 40분을 통근에 쓰고 있다.



통근시간별 통근인구(1995-2010)

(단위: 명)

	1995	2000	2005	2010
15-30분	4,627	4,417	4,881	6,169
15분 미만	5,488	5,154	5,621	5,472
30-45분	2,758	4,548	4,369	5,829
45-60분	1,818	585	602	727
60-90분	1,090	1,838	1,815	2,411
90-120분	265	452	455	680
120분 이상	196	201	190	2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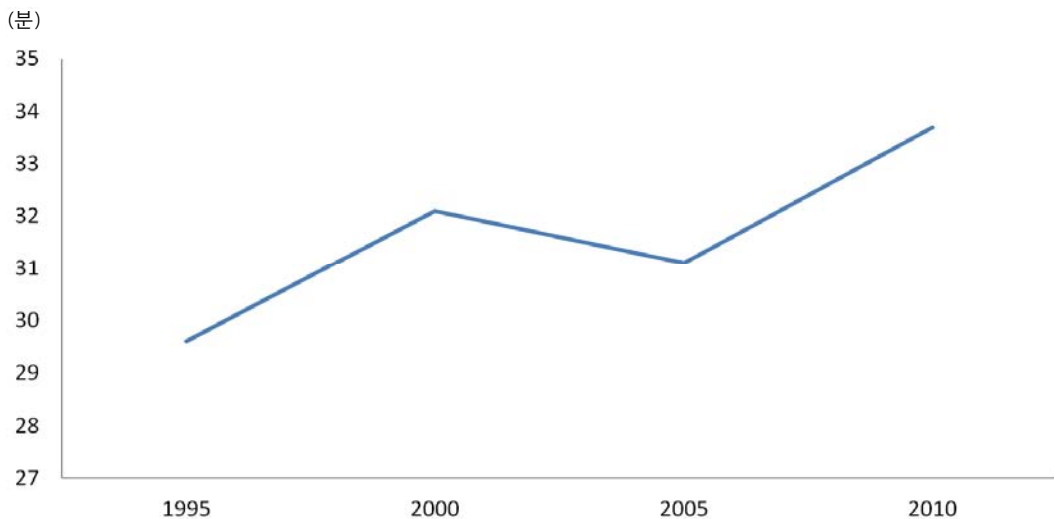
통근시간별 통근인구(1990)

(단위: 명)

	1990	비율
계	17,031,168	100.00%
10분 미만	58,264	0.34%
10 - 20분	2,921,344	17.15%
20 - 30분	3,643,997	21.40%
30 - 40분	4,354,014	25.56%
40 - 50분	1,692,906	9.94%
50 - 60분	917,764	5.39%
60 - 90분	2,502,058	14.69%
90 - 120분	641,163	3.76%
120 - 180분	265,251	1.56%
180분 이상	34,407	0.2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1990년.

평균 통근시간(1995-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 1) 통근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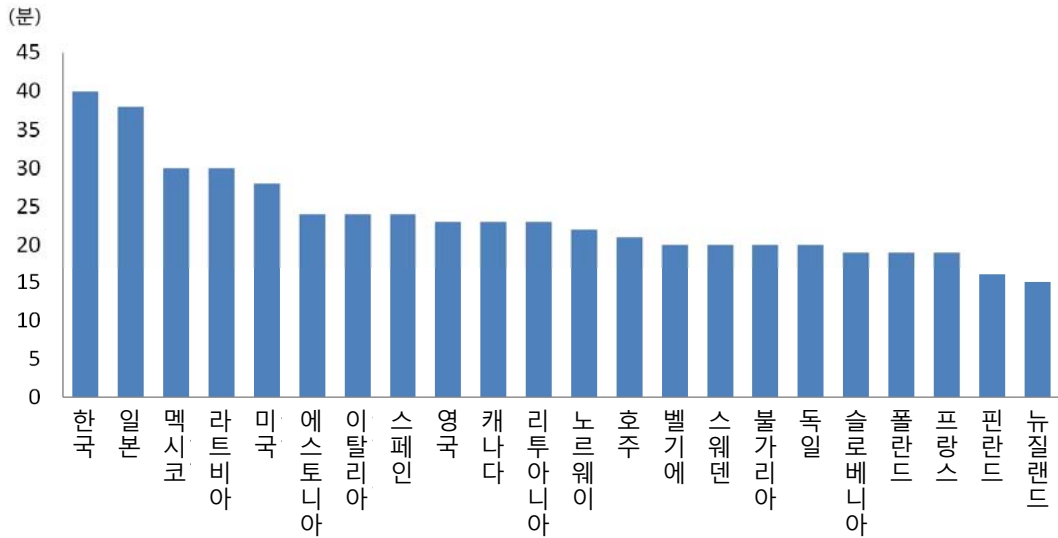
2) 평균통행시간은 도수분포표의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산출함. 단, 통근시간 120분 이상 계급은 120-150분으로 설정하여 그 계급값을 135분으로 가정함.

평균 통근시간(1995-2010)

(단위: 분)

1995	2000	2005	2010
29.6	32.1	31.1	33.7

OECD 주요국의 평균 통근시간(2012)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2012.

주: 1) 평균 통근시간은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2) 프랑스는 1999년 자료, 에스토니아, 핀란드, 헝가리는 2000년 자료,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웨덴, 영국은 2001년 자료, 독일, 멕시코는 2002년 자료,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은 2003년 자료, 한국, 폴란드는 2004년 자료, 캐나다는 2005년 자료, 호주,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 터키, 미국은 2006년 자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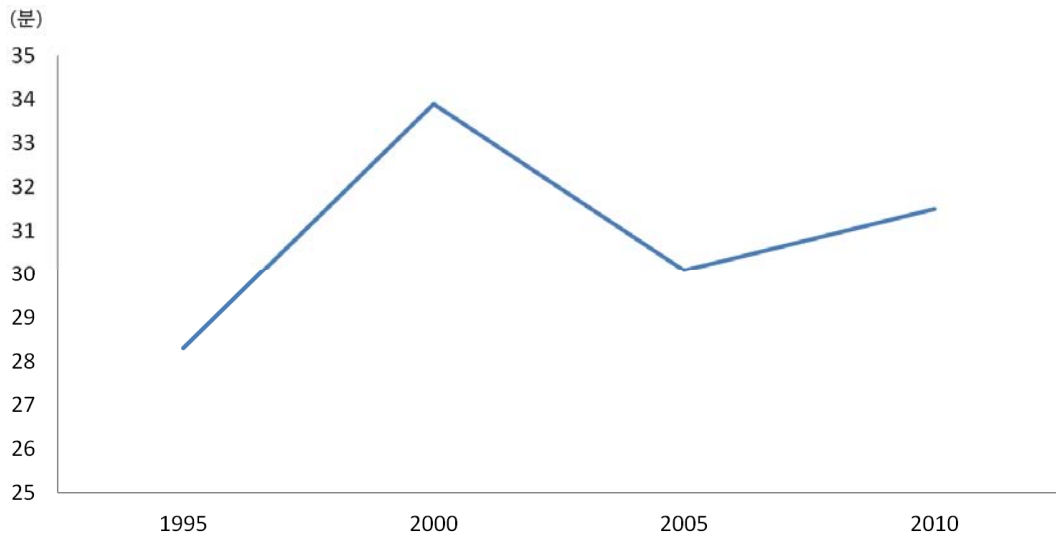
3)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평균 통근시간(2012)

(단위: 분)

한	국	40	노	르	웨	이	22
일	본	38	호	주			21
라	트	비아	독	일			20
멕	시	코	벨	기	에		20
미	국	28	불	가	리아		20
스	페	인	스	웨	덴		20
에	스	토	슬	로	베	니아	19
이	탈	리아	폴	란	드		19
리	투	아	프	랑	스		19
영	국	23	핀	란	드		16
캐	나	다	뉴	질	랜드		15

평균 통학시간(1995-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 1) 평균 통학시간은 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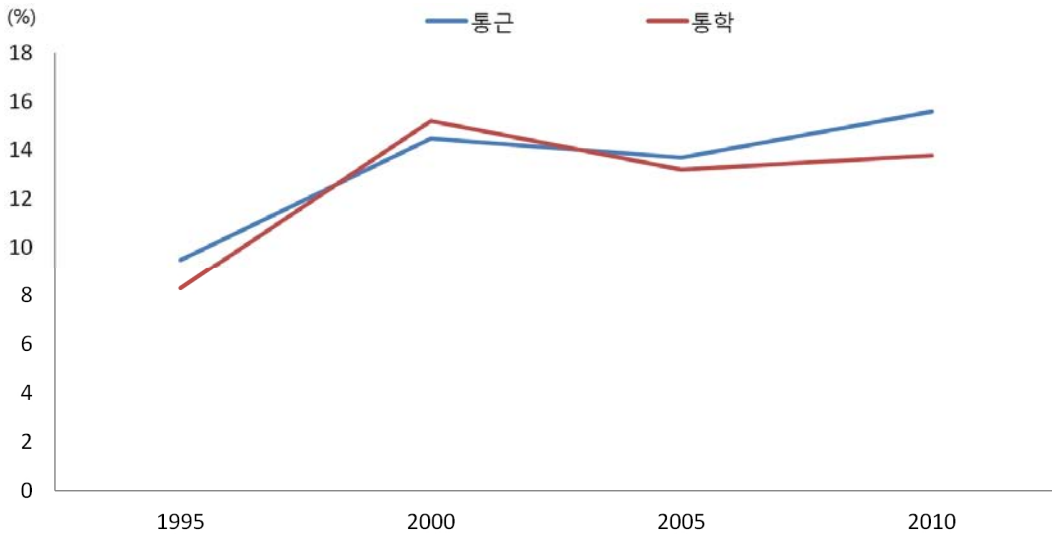
2) 통학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마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 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포함함.

평균 통학시간(1995-2010)

(단위: 분)

1995	2000	2005	2010
28.3	33.9	30.1	31.5

1시간 이상 통근통학 인구 비율(1995-2010)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 연도.

주: 1) 통근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에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2) 통학인구는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 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포함함.

1시간 이상 통근통학 인구 비율(1995-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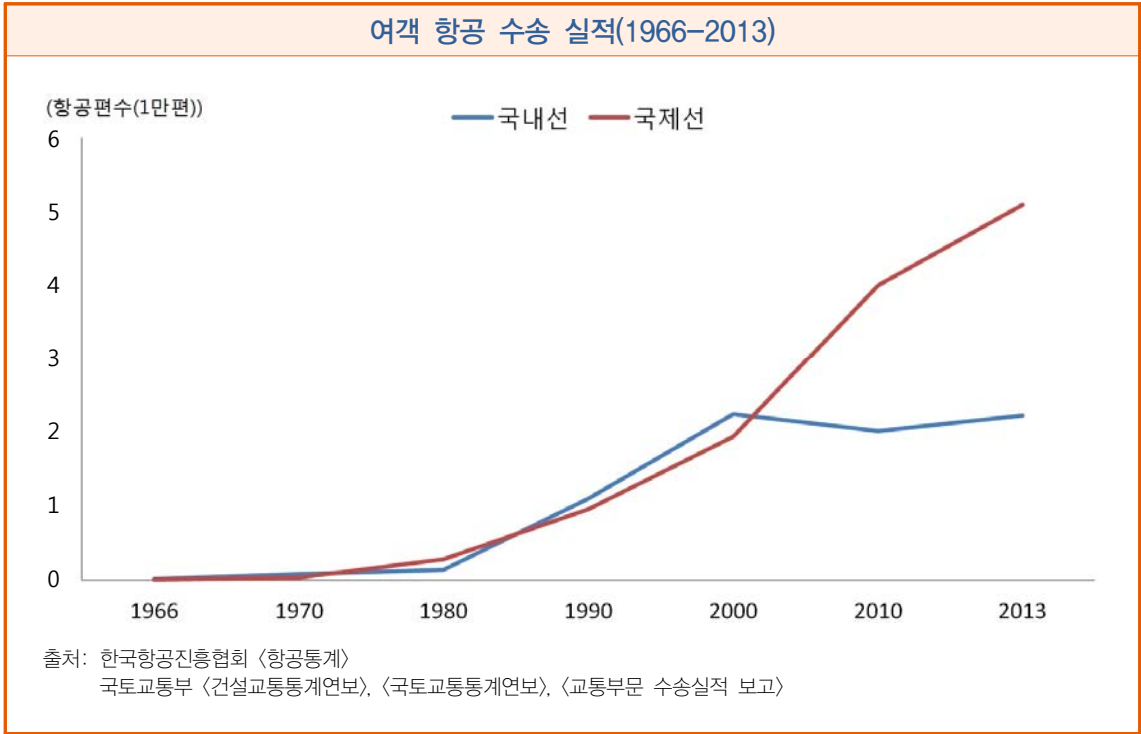
	1995	2000	2005	2010
통근	9.5	14.5	13.7	15.6
통학	8.3	15.2	13.2	13.8

(2) 항공수송실적

광복 70년의 변화에서, 여객항공수송은 가장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사례일 것이다. 1966년에 국내선은 연간 192편, 국제선은 131편이 운항되는데 그쳤으나, 2013년에 국내선은 22,353편 국제선은 50,987편이 운항되었다. 각각 116배, 389배 증가한 것이니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만하다. 이러한 증가는 1980년대부터 본격화되었다.

화물 항공 수송 실적도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국제선에서의 증가는 눈부신데, 1966년 7편에서 2013년에는 3,246편으로 463배나 폭증하였다. 시간을 다투는 수출입품목

들, 특히 주요 부품이나 고가의 전자제품 수요가 급증한 현실과 관련이 있다. 반면, 국내선을 이용한 항공수송은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는 고속철도 개통과 고속도로의 확장 등 육상 수송이 활발해진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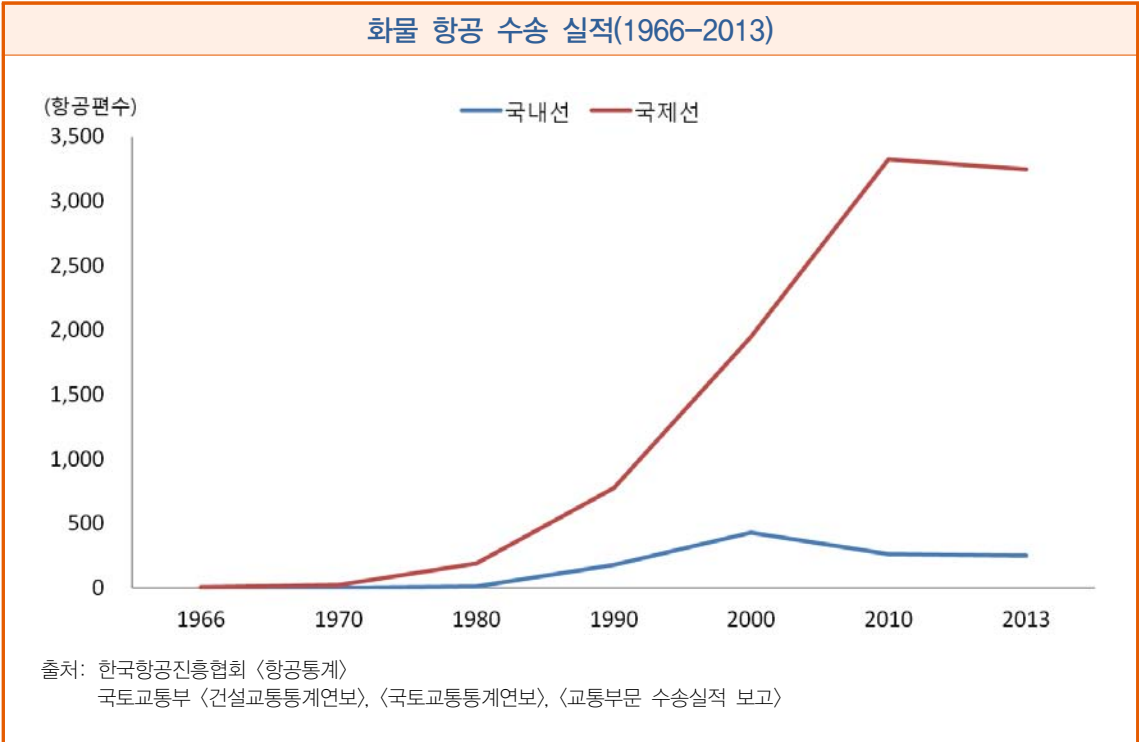


여객 항공 수송 실적(1966-2013)

(단위: 편)

	1966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국내선	192	917	1,481	11,064	22,515	20,216	22,353
국제선	131	398	2,922	9,626	19,452	40,061	50,987

화물 항공 수송 실적(1966-2013)



화물 항공 수송 실적(1966-2013)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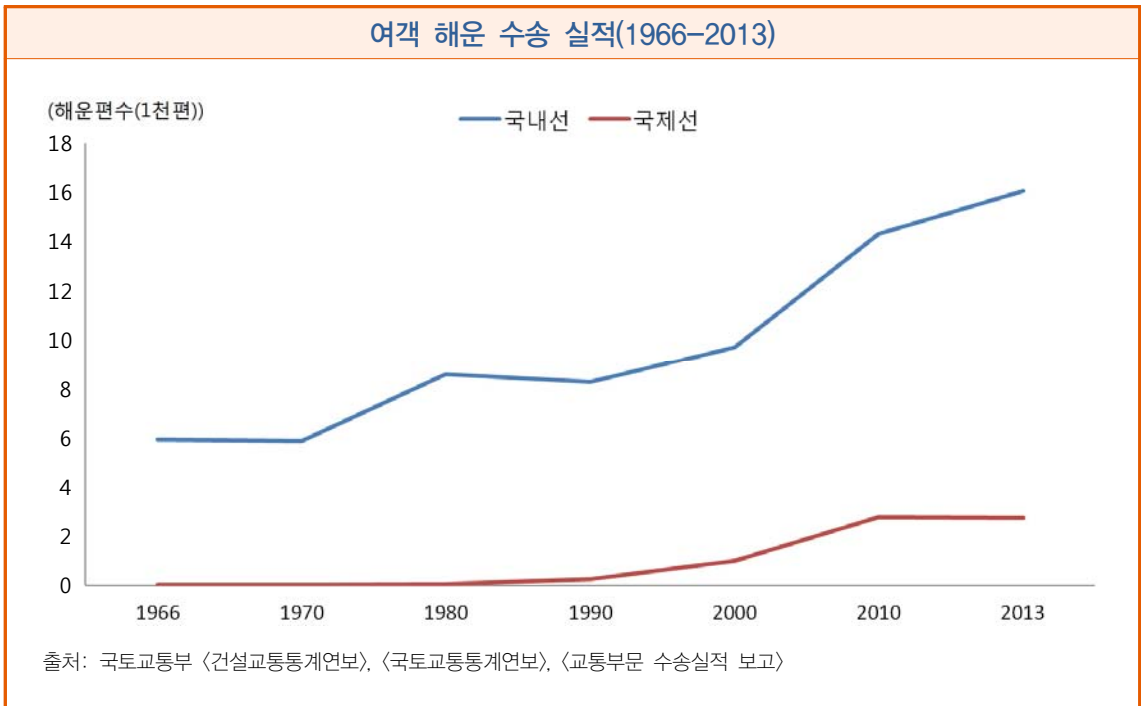
	1966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국내선	1	5	13	183	434	262	253
국제선	7	26	191	777	1,949	3,326	3,246

(3) 해운수송실적

해운수송의 주력은 국내선이다. 2013년 현재 국내수송편은 총 16,062편인데 이중 국제선은 2,737편에 그쳐 전체의 85%가 국내수송편이다. 이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에서 수천 개의 도서를 연결하는 연안 해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선은 1966년 5,909편에서 시작해 2013년에는 12만 3,147편으로 20.8배 증가하였다. 국제선 해운 운송은 같은 기간동안 12편에서 2,737편으로 228배 폭증하였다. 이는 수출입물량의 대부분이 해운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제 해운수송이 급증한 1980년대는 한국의

조선산업이 급성장한 시기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선박 건조능력을 바탕으로 수출입 물량이 폭증하게 되자 해운운송 역시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운송 실적을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화물 해운수송 실적의 경우, 1966년 국내선 2,295편, 국제선 8,435편에서 2013년 국내선 12만 3,147편, 국제선 112만 3,205편으로, 1966년 국내선 대비 국제선은 3.7배 많았으나, 2013년에는 국제선이 국내선에 비해 9.1배 더 많은 것으로 역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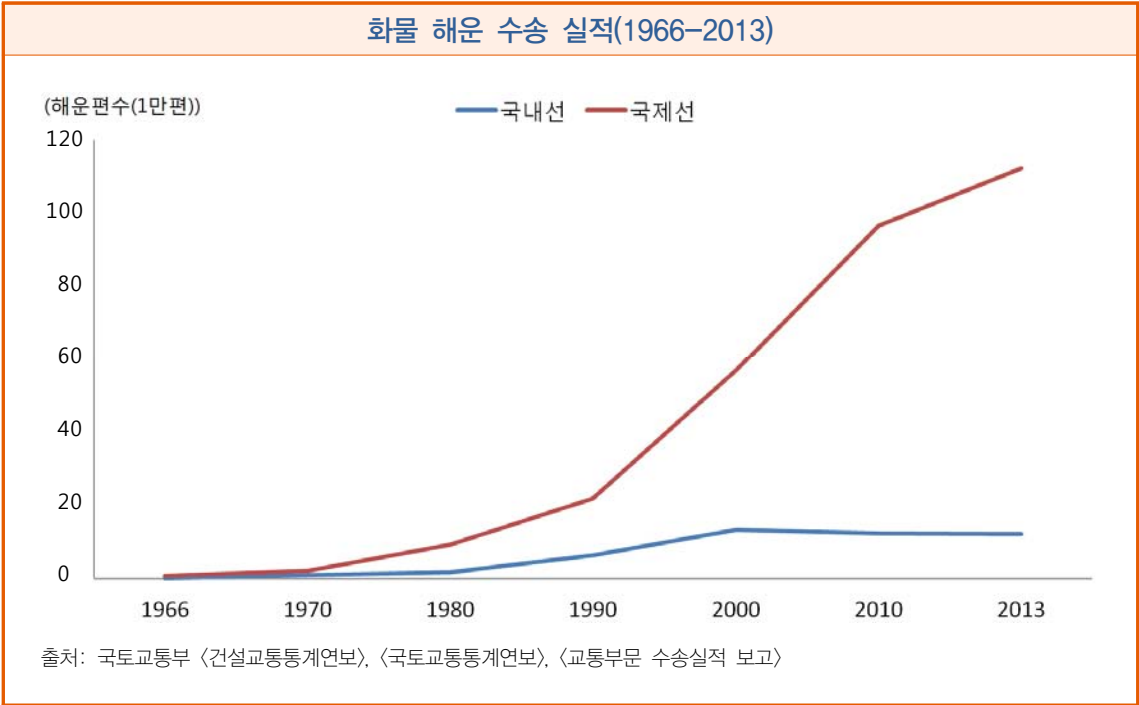


여객 해운 수송 실적(1966-2013)

(단위: 편)

	1966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국내선	5,909	5,869	8,580	8,260	9,702	14,308	16,062
국제선	12	24	41	236	999	2,760	2,737

화물 해운 수송 실적(1966-2013)



화물 해운 수송 실적(1966-2013)

(단위: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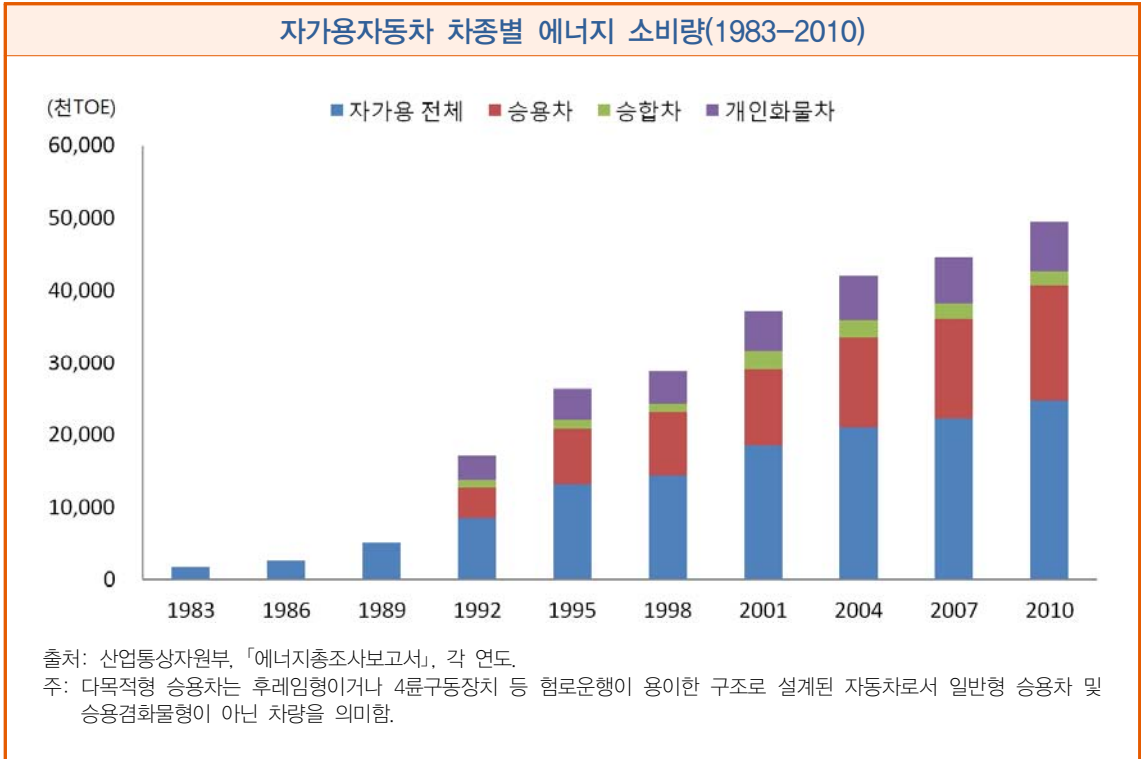
	1966	1970	1980	1990	2000	2010	2013
국내선	2,295	10,888	19,230	63,915	134,467	124,225	123,147
국제선	8,435	22,284	94,035	219,781	569,599	966,193	1,123,205

3) 교통 에너지

(1) 자동차에너지소비량

자동차 보급률의 급속한 증대는 차량용 에너지소비의 증가를 가져왔다. 모든 차가 쓰는 에너지량을 석유로 환산했을 때, 자가용은 1983년 기준 175만 7,000톤의 석유를 필요로 했다(이하 1,757,000TOE로 표기). 그런데 2010년의 경우 2,476만 4,000TOE로 27년 사이에 대략 14.1배가 증가하였다. 자동차 보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승용차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동차 에너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승용차는 2010년 현재 전체 에너지소비의 2/3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개인화물차와 승합차 순이다. 승용차의 경우 1992년 419만 3,000TOE에서 2010년 1,602만 9,000 TOE로 증가했는데, 이 중 일반형 승용차의 에너지소비량은 1992년 398만 6,000TOE에서 2010년 1,083만 1,000TOE로, 다목적형 승용차는 1992년 20만 7,000TOE에서 2010년 519만 8,000TOE로 증가했다.



■ 자가용자동차 차종별 에너지 소비량(1983-2010)

(단위: 천TOE)

	1983	1986	1989	1992	1995	1998	2001	2004	2007	2010
자가용 전체	1,757	2,710	5,140	8,562	13,218	14,410	18,604	21,051	22,322	24,764
승용차	-	-	-	4,193	7,610	8,724	10,514	12,537	13,837	16,029
승합차	-	-	-	1,093	1,274	1,212	2,686	2,385	2,169	1,935
개인 화물차	-	-	-	3,276	4,342	4,474	5,404	6,130	6,316	6,800

Ⅰ 전체 에너지 소비량

(단위: TOE)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1,205,000	12,855,000	14,644,000	16,529,000	18,669,000	21,218,000	23,288,000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3,509,000	19,270,000	21,175,000	23,554,000	24,841,000	26,484,000	27,419,000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7,684,000	28,144,000	28,588,000	29,195,000	28,532,000	29,030,000	29,820,000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1.

주: 2007년 이후 개정된 열량환산계수 적용.

(2)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교통부문의 에너지 소비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전통적인 에너지인 석유와 도시가스 같은 화석연료가 에너지 소비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04년에 화석에너지는 교통부문 에너지소비의 99.3%였으며, 2013년에는 98.5%로 매우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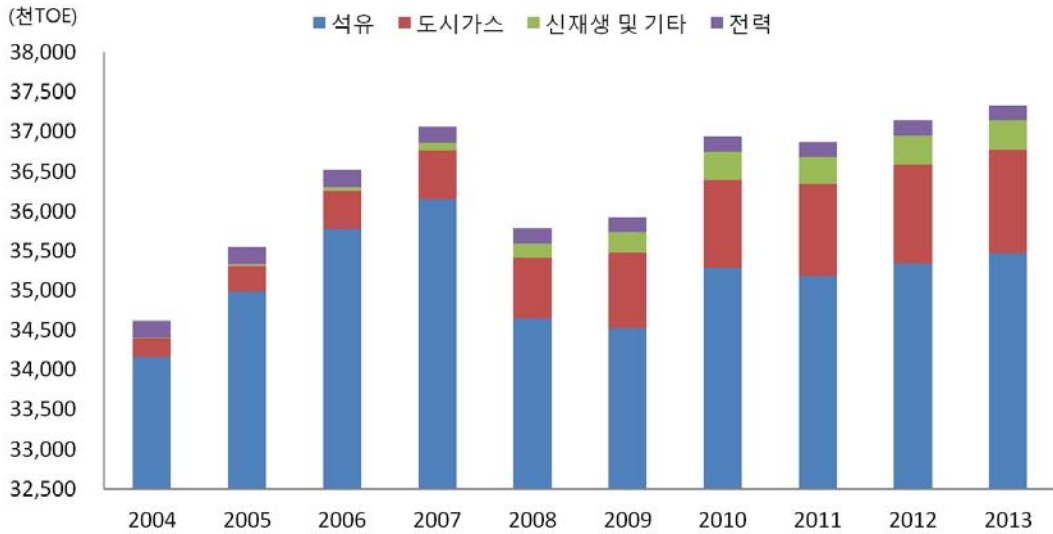
신재생 및 기타 에너지는 2004년 5,000TOE에서 2013년 369,000TOE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지만, 전체 교통부문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미미하다. 2004년에 0.01%였으나, 2013년에는 0.99%로 증가한 정도다. 2010년까지는 꾸준히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증가했으나, 2009년 0.97%에서 2013년 0.99%로 성장세가 멈추었다.

한국의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을 EU 주요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EU 28개국의 신재생에너지소비율은 2004년 평균 1.0%에서 2012년 5.1%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1%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친환경 자동차란 전기, 하이브리드, 알코올, 태양열, 천연가스 등을 원료로 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전체 등록자동차중 친환경 자동차의 비중은 2008년 0.04%에서 시작하여 2013년 0.7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이 거의 완벽한 에너지 수입의존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 소비율의 증가는 자원의 해외 의존을 줄이면서도 환경보존에 일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부문 사용연료별 에너지 소비량(2004-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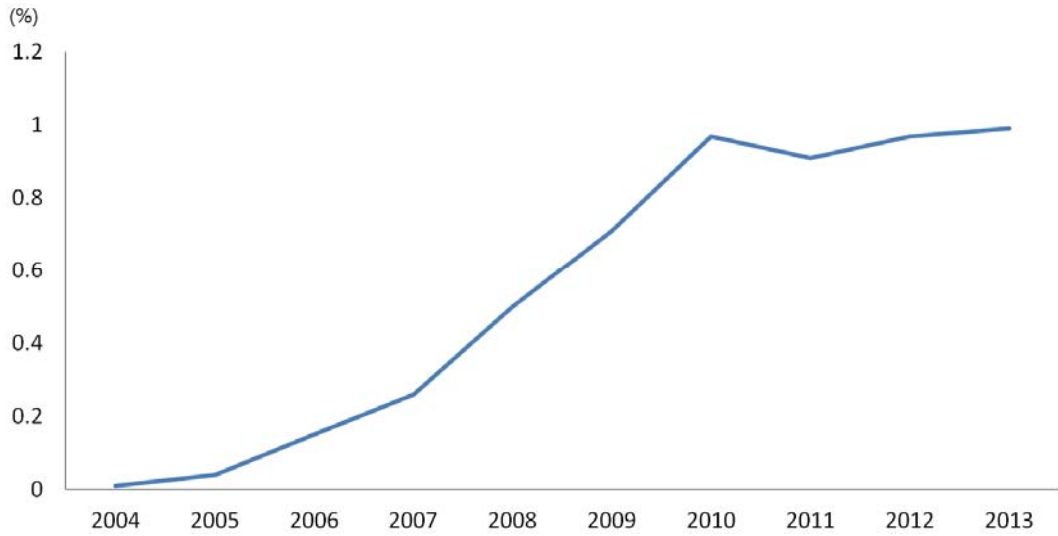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교통부문 사용연료별 에너지 소비량(2004-2013)

(단위: 천TOE)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전체	34,615	35,559	36,527	37,068	35,793	35,930	36,938	36,875	37,143	37,330
석유	34,160	34,982	35,780	36,149	34,642	34,529	35,282	35,172	35,341	35,476
도시 가스	237	339	475	615	777	960	1,112	1,174	1,248	1,299
신재생 및 기타	5	13	53	96	178	254	357	336	360	369
전력	213	224	218	209	196	187	188	193	194	186

신재생에너지소비율(2004-2013)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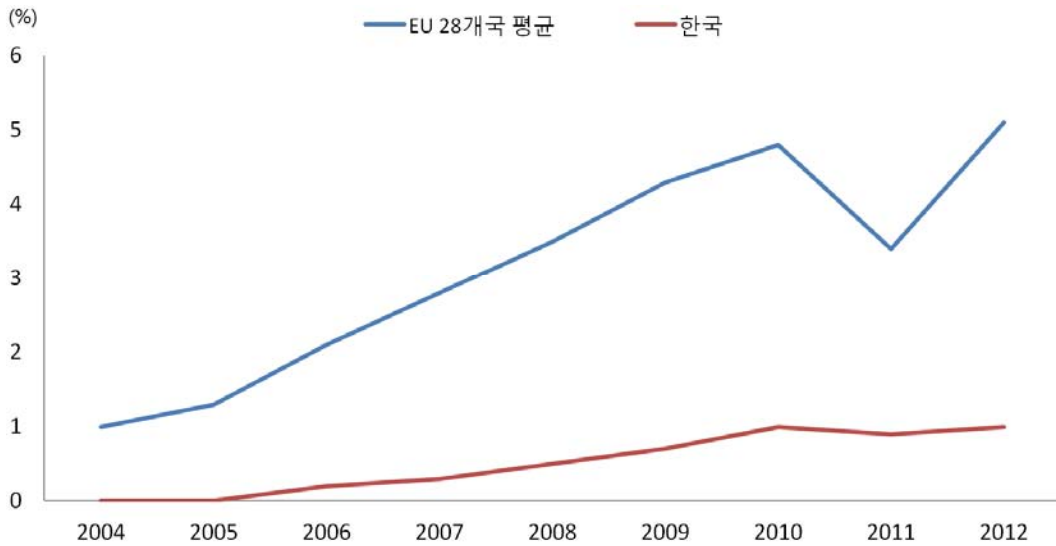
주: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량 ÷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량) × 100.

신재생에너지소비율(2004-2013)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1	0.04	0.15	0.26	0.5	0.71	0.97	0.91	0.97	0.99

EU 주요국의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2004-2012)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2013.

EU 「epp.eurostat.ec.europa.eu」 2014.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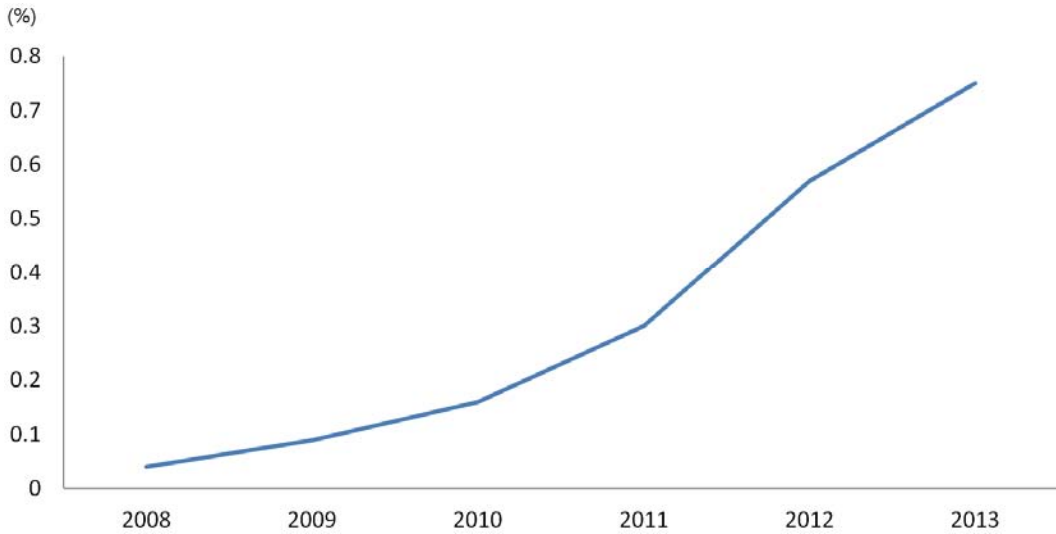
주: 1) 신재생 에너지 소비율은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EU 주요국의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2004-2012)

(단위: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한국	0.0	0.0	0.2	0.3	0.5	0.7	1.0	0.9	1.0
EU28국 평균	1.0	1.3	2.1	2.8	3.5	4.3	4.8	3.4	5.1

친환경자동차 보급률(2008-2013)



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 연도.

주: 1)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은 전체 승용차 중 친환경 에너지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의 비율임.

2) 친환경 에너지는 전기, 하이브리드, 알코올, 태양열, CNG, LNG를 포함함. 클린디젤 역시 친환경 에너지에 속하지만 따로 구분되지 않고 경유로 집계되어 제외함.

친환경자동차 보급률(2008-2013)

(단위: %)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0.04	0.09	0.16	0.3	0.57	0.75

8. 안전

1) 범죄

(1) 범죄율

범죄율은 1981년부터 1991년(558건)까지는 감소했다가 그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7년 이후 범죄율의 증가폭이 커졌고, 특히 2002년과 2003년을 전후해서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범죄율의 폭증은 실제 범죄발생 증가 이외에도, 특별법

죄에 속했던 “특정범죄”, “특정경제범죄”, “성폭력범죄”, “폭력행위” 위반을 모두 형법범죄로 집계하면서 발생한 통계적 착시인 부분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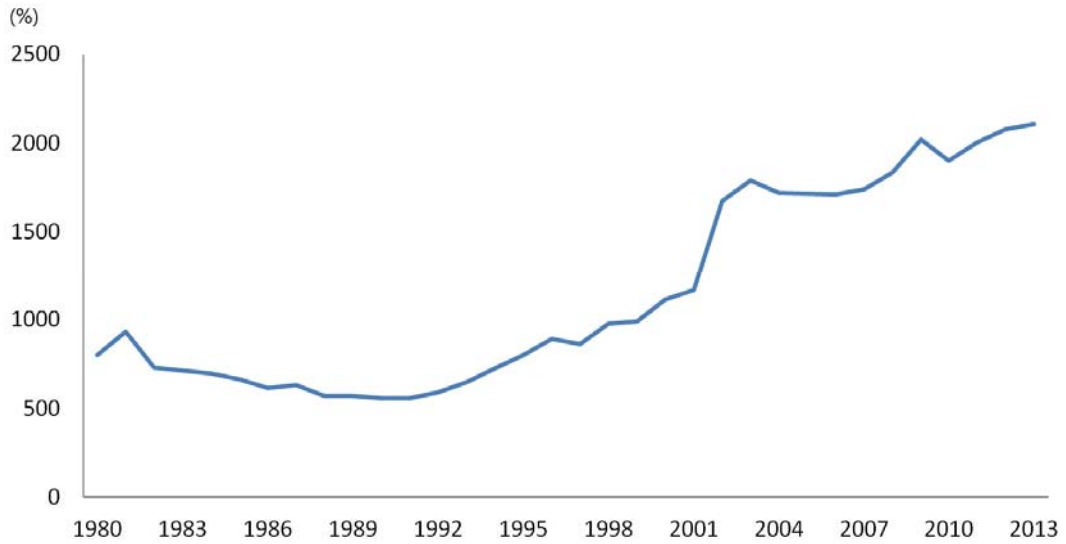
경찰과 검찰의 엄격한 법집행이 경미한 사건도 범죄로 인지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와 범죄율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2년 이후에는 기준이 통일되어 일관된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통상 강력범죄라고 불리는 살인, 강도, 절도, 사기, 폭행, 강간 등의 형법 범죄 발생률은 2000년대 이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요 형법범죄를 인구 10만 명당 범죄건수로 살펴보면, 1980년에 800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2,106건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 통계가 가능한 2000년 이후의 추이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절도는 251건(2000년)에서 579건(2013년)으로 2.3배 늘었고, 폭행은 같은 기간 동안 35.8건에서 251건으로 7배 증가하였다. 강간과 성폭력은 21.7건에서 53.6건으로 2.47배 증가했다. 반면에 강도는 11.4건에서 4건으로 줄었고, 살인은 2건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가마다 범죄의 규정과 집계방식이 달라 국가 간 범죄발생을 비교하기 어렵지만 살인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고 있어서 살인율을 통해 한국의 범죄발생 수준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살인율은 아프리카, 남미, 러시아 미국 등에서 매우 높은 반면, 한국의 살인율은 인구 십만명당 2.5건으로서 상당히 낮다. 이는 아시아에서 일본(0.7), 중국(1.0)보다는 훨씬 높지만, 인도(3.6)보다는 낮고 대만과 유사한 수치다. 그러나 한국의 살인범죄에는 살인미수와 살인음모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제외할 경우 살인율은 더 낮아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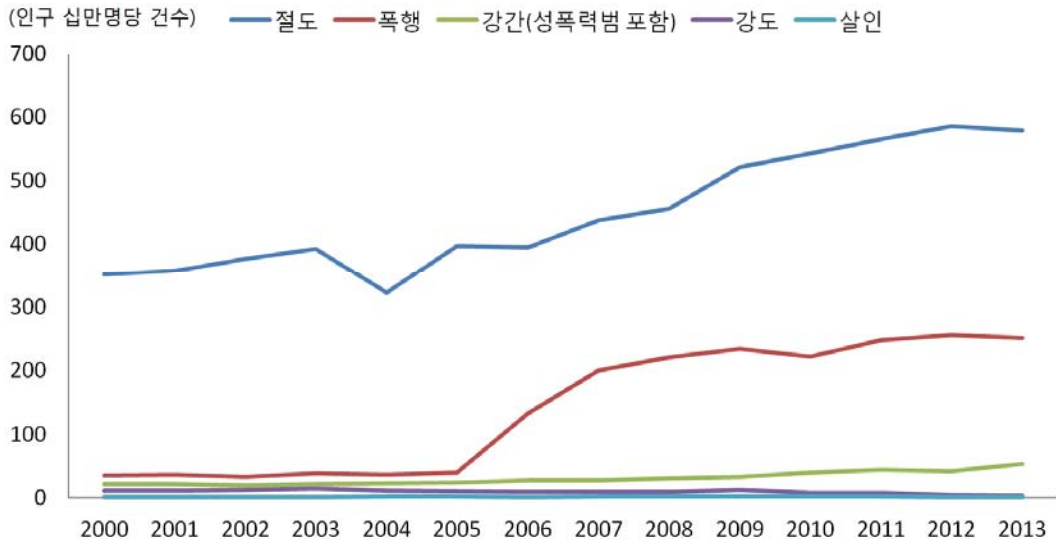
범죄자에 대한 통계를 통해서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범죄는 주로 남자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난 30년간 전체 범죄자 중에서 여성범죄자가 차지한 비율은 1981년에 14.1%로 가장 낮았고, 1996년에 23.1%로 가장 높았다가 그 이후로 다시 감소하여 2012년에는 17.4%를 기록했다.

인구 십만명당 범죄율(1980-2013)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요 형법 범죄율(2000-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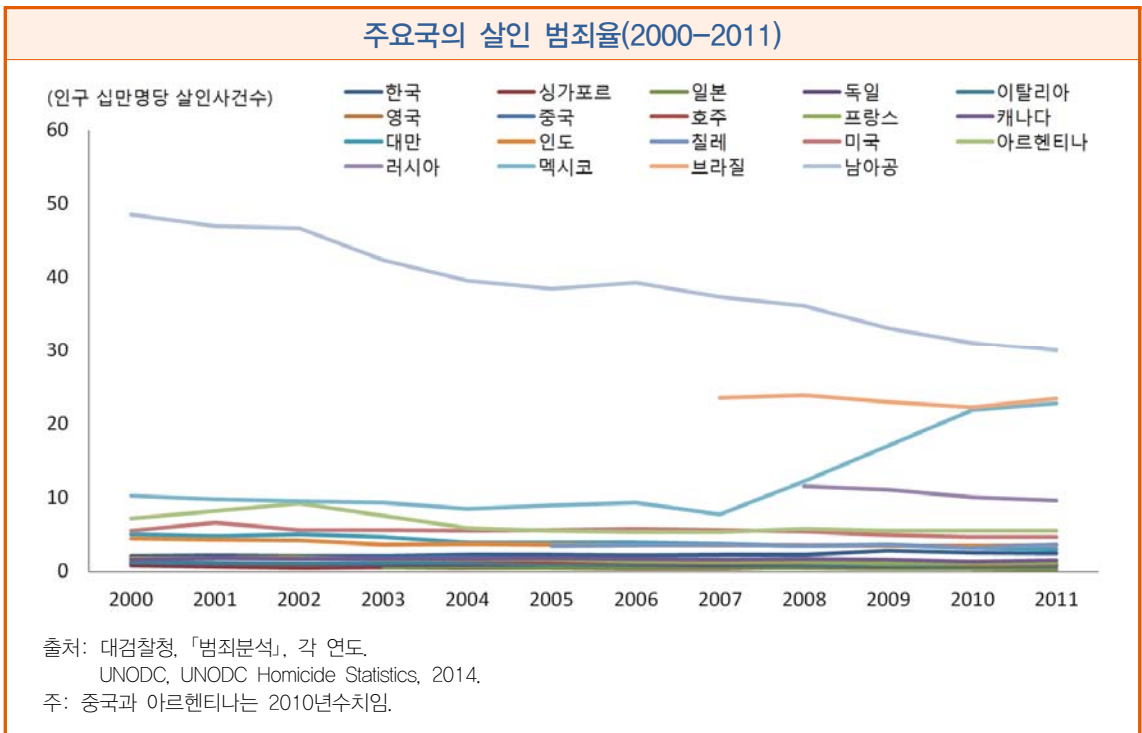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요 형법 범죄율(2000-2013)

(단위: 인구 십만명당 건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범죄율	800	666	560	801	1,114	1,716	1,901	2,003	2,077	2,106
살인	-	-	-	-	2.1	2.3	2.6	2.5	2.1	1.9
강간(성폭력범 포함)	-	-	-	-	21.7	24.4	40.4	44.3	42.7	53.6
강도	-	-	-	-	11.4	10.9	8.9	8.1	5.3	4.0
절도	-	-	-	-	351.6	397	542.4	565.6	586.1	579.1
폭행	-	-	-	-	35.8	40.4	221.8	247.7	256.2	251.9

주요국의 살인 범죄율(200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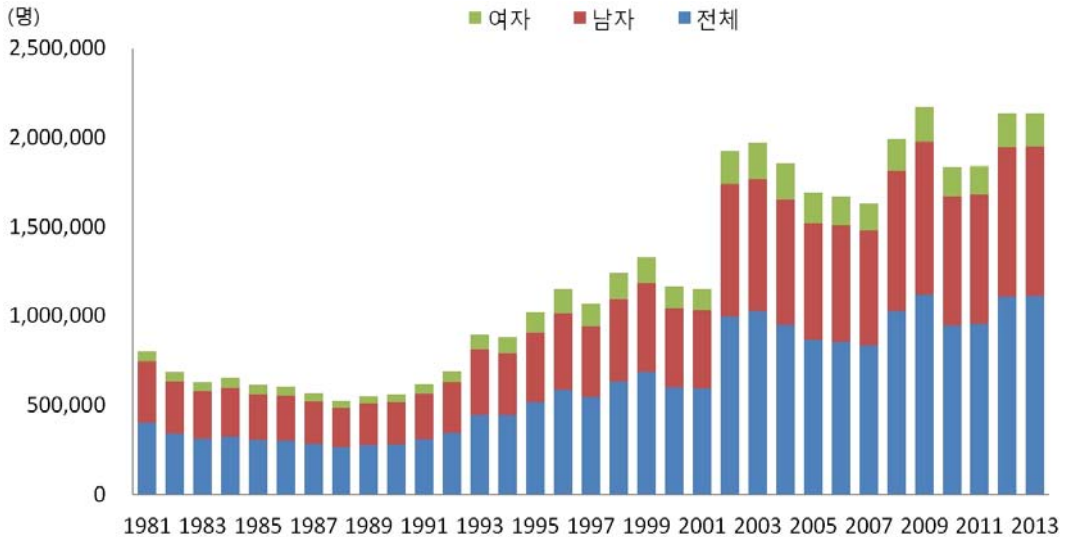
주요국의 살인 범죄율(2000-2011)

(단위: 인구 십만명당 살인건수)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한국	2.1	2.2	2.1	2.1	2.3	2.3	2.2	2.3	2.3	2.8	2.6	2.5
싱가포르	0.9	0.7	0.5	0.6	0.5	0.5	0.4	0.4	0.6	0.4	0.4	0.3
일본	-	-	-	0.6	0.6	0.5	0.5	0.5	0.5	0.4	0.4	0.3
독일	1.2	1.1	1.1	1.0	1.0	1.0	1.0	0.9	0.9	0.8	0.8	0.8
이탈리아	1.3	1.2	1.1	1.2	1.2	1.0	1.1	1.1	1.0	1.0	0.9	0.9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중국	-	-	2.0	1.9	1.9	1.6	1.4	1.2	1.1	1.1	1.0	1.0
호주	1.9	1.8	1.9	1.7	1.5	1.3	1.3	1.2	1.2	1.2	1.0	1.1
프랑스	1.8	1.8	1.9	1.6	1.6	1.6	1.4	1.3	1.3	1.1	1.1	1.2
영국	1.7	1.8	2.0	1.7	1.6	1.5	1.4	1.4	1.2	1.2	1.2	1.0
캐나다	1.6	1.8	1.7	1.7	1.7	1.8	1.7	1.6	1.7	1.6	1.4	1.5
대만	5.1	4.8	5.1	4.7	4.0	4.0	4.0	3.8	3.5	3.6	3.2	3.0
칠레	-	-	-	3.2	-	3.5	3.6	3.7	3.5	3.7	3.2	3.7
인도	4.5	4.3	4.2	3.7	3.8	3.7	3.6	3.6	3.6	3.5	3.5	3.6
미국	5.5	6.6	5.6	5.6	5.5	5.6	5.8	5.6	5.4	5.0	4.7	4.7
아르헨티나	7.2	8.2	9.2	7.6	5.9	5.5	5.3	5.3	5.8	5.5	5.5	5.5
러시아	-	-	-	-	-	-	-	-	11.6	11.1	10.1	9.6
멕시코	10.3	9.8	9.5	9.3	8.5	9.0	9.3	7.8	12.2	17.0	21.8	22.8
브라질	-	-	-	-	-	-	-	23.5	23.9	23.0	22.2	23.4
남아프리카 공화국	48.5	47.0	46.7	42.3	39.5	38.4	39.3	37.3	36.1	33.1	31.0	30.0

성별 범죄자수(1981-2013)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연도.

주: 1) 범죄자수는 형법을 위반한 범죄자수를 의미함.

2) 2002년도부터 특별법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형법범으로 집계함.

Ⅰ 성별 범죄자수(1981-2013)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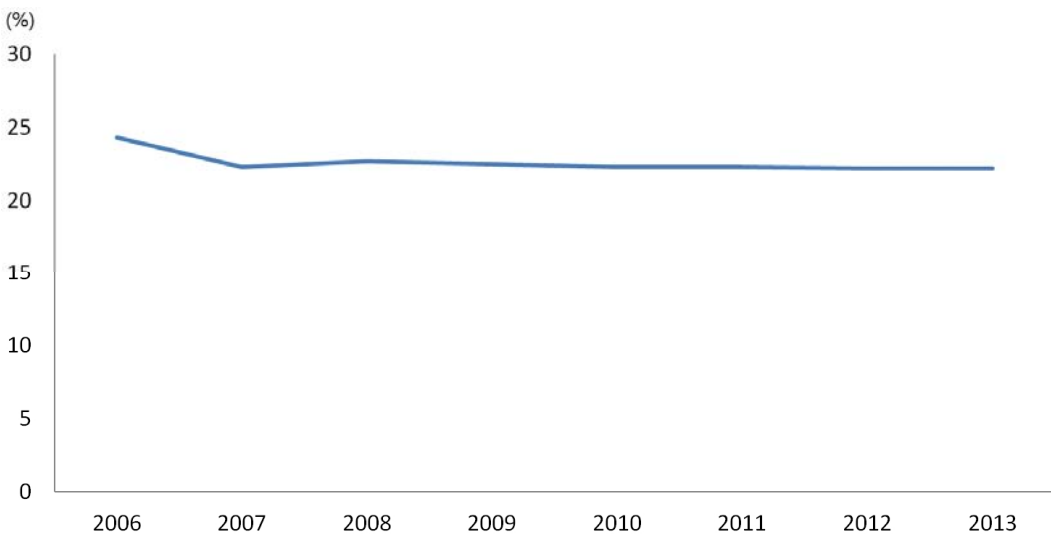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전체	400,539	306,614	281,552	517,925	599,992	865,325	944,853	954,629	1,104,482	1,109,226
남자	344,119	255,908	237,057	389,026	443,226	657,658	728,985	725,402	843,596	841,071
여자	56,420	50,706	44,495	114,015	122,459	171,820	162,762	162,849	191,739	186,056

(2) 재범률

재범률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던 수형자들이 출소한 후 다시 범죄를 저질러 체포, 유죄선고 혹은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비율을 말한다. 출소 후 3년 이내 재복역률로 정의할 경우에 그 비중은 24%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를 마치거나 가석방, 사면 등으로 출소한 사람들 중에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의 숫자는 10명 중 2명 꼴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비율은 2006년 이후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재범률이 중요한 이유는 교정시설에서의 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재범률이 높다는 것은 교정시설이 범죄자를 교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초범을 확신범으로, 우연적 범죄자를 직업적 범죄자로 만들어내는 의도치 않은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범률(2006-2013)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각 연도.

주: 재범률(3년 이내 재복역률) = (4년 전 출소 수형자 중 3년 이내 재복역자수 ÷ 4년 전 출소자 총인구) × 100.

Ⅰ 재범률(2006-2013)

(단위: %, 명)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재범률(%)	24.3	22.3	22.7	22.5	22.3	22.3	22.2	22.2
출소자 수(명)	30,869	31,317	29,875	27,489	24,626	24,151	25,802	25,725
출소자 중 3년 이내 재범역자 수(명)	7,498	7,241	6,772	6,169	5,553	5,396	5,737	5,699

출처: 법무부, 「법무연감」, 각 연도

주: 1) 재범률(3년 이내 재범률) = (4년전 출소 수형자 중 3년 이내 재범역자수 ÷ 4년전 출소자 총인구) × 100.

2) 출소자 수는 4년 전 출소자수로 2002-2009년 자료임.

2) 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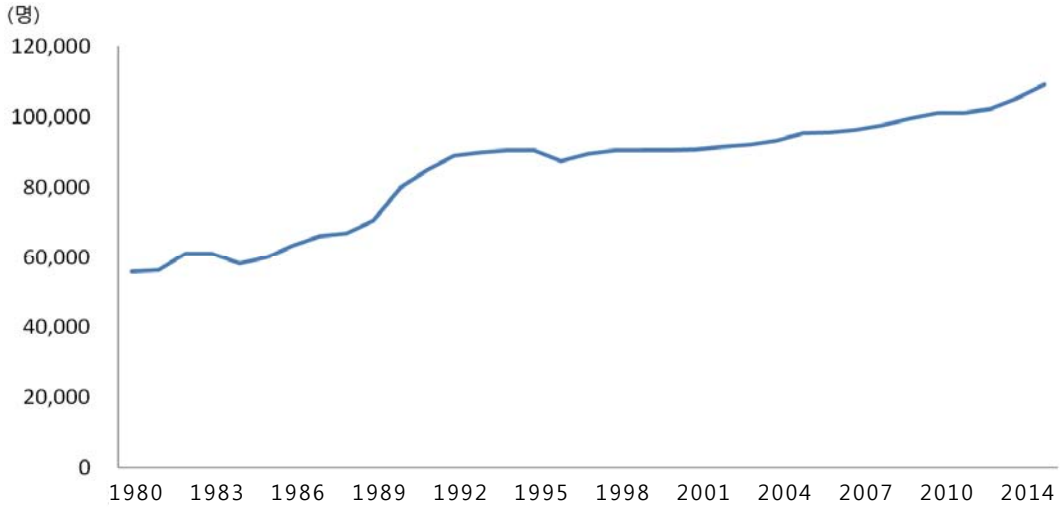
(1) 경찰관수

경찰은 사회안전과 치안을 담당하는 기본인력이다. 범죄나 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경찰은 군대와 더불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공적 기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전의경이나 해양경찰관을 제외한 경찰관 수는 1980년 5만 6,003명에서 2014년 10만 9,364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로 살펴보면, 1980년 147명에서 2014년 217명으로 1.47배 증가하였다. 인구대비 경찰관수의 증가는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공공성의 증대를 의미한다.

국제비교를 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209명)은 인구 10만 명당 경찰관 수에 있어서 일본(205명), 캐나다(200명), 뉴질랜드(197명), 인도(131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멕시코(355명), 독일(295명), 영국(252명), 미국(211명)보다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경찰관수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적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거나, 범죄에 취약한 우범지역인 경우에는 경찰인력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민간경비인력의 고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총 경찰관 수(1980-2014)



출처: 경찰청, 「경찰통계연감」,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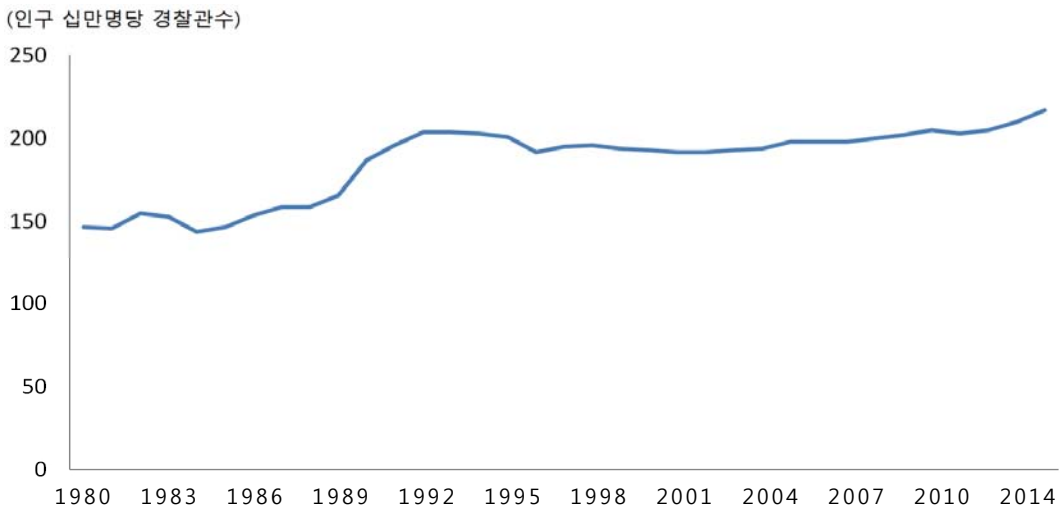
주: 경찰관수에는 별정·일반·기능·계약직 공무원, 전·의경수 및 해양경찰관수가 제외됨.

총 경찰관 수(1980-2014)

(단위: 명)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56,003	59,907	80,021	90,657	90,670	95,336	101,108	101,239	102,386	105,357	109,364

인구 십만명당 경찰관 수(198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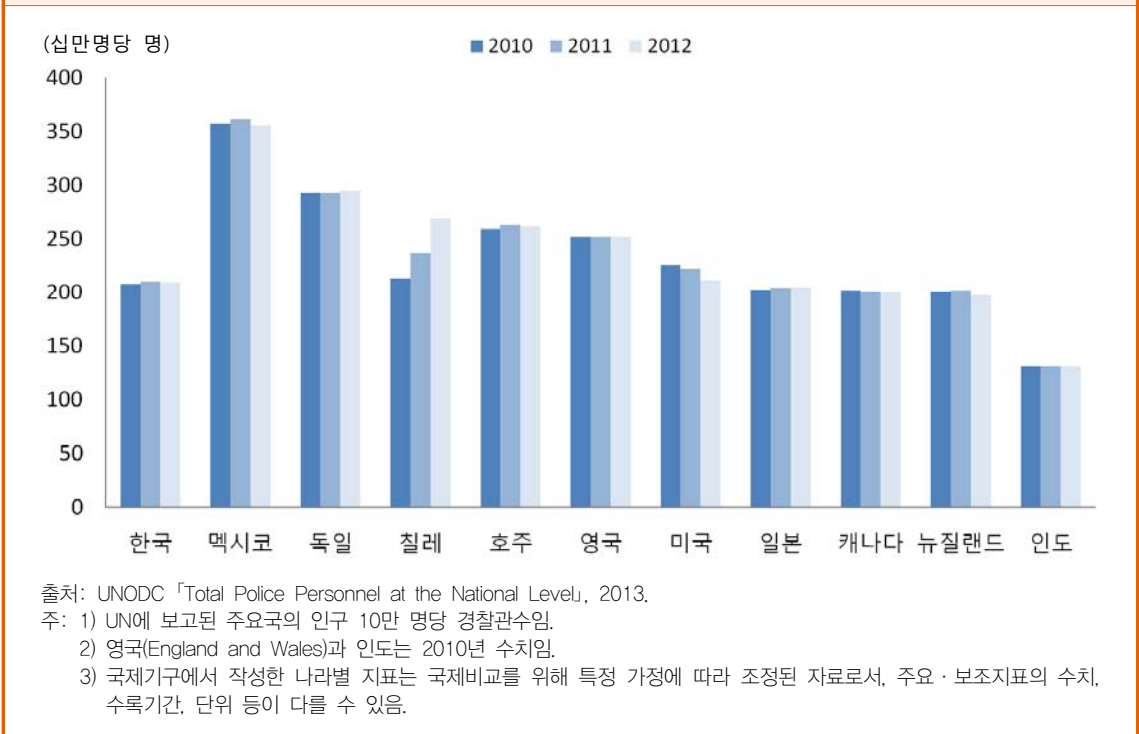


인구 십만명당 경찰관 수(1980-2014)

(단위: 인구 십만명당 경찰관 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147	147	187	201	193	198	205	203	205	210	217

주요국의 인구 십만명당 경찰관 수(2010-2012)



주요국의 인구 십만명당 경찰관 수(2010-2012)

(단위: 십만명당 명)

국	가	2010	2011	2012
한	국	208	210	209
멕	시	357	361	355
독	일	293	293	295
칠	레	213	237	269
호	주	259	263	262
영	국	252	252	252
미	국	226	222	211
일	본	203	204	205
캐	나	202	201	200
뉴	질	201	202	197
인	도	131	131	131

3) 재해

(1) 자연재해피해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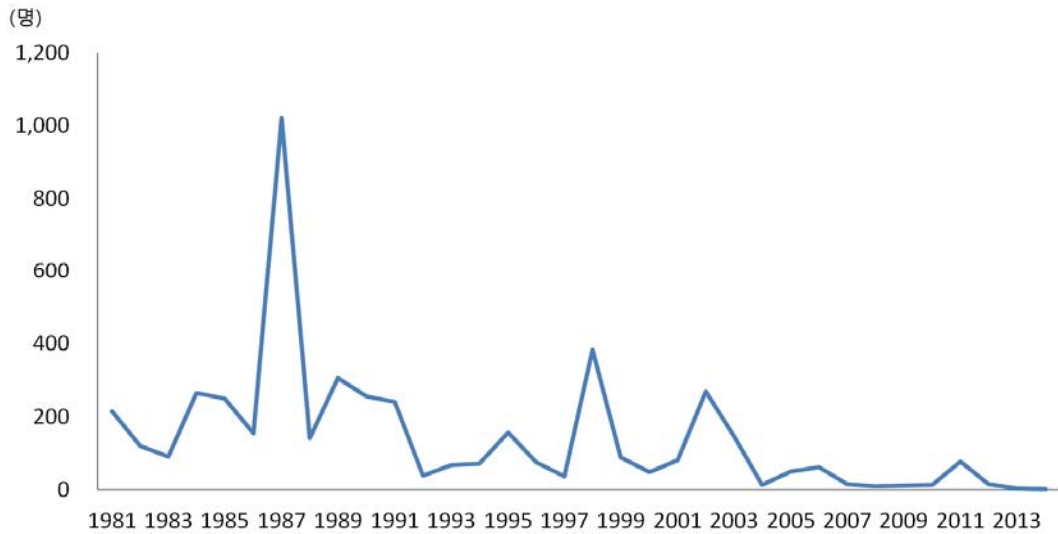
자연재해는 자연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재난을 의미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태풍과 호우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대설, 황사, 가뭄 등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계절에 따른 온도차이가 점차 커지기 때문에 폭염과 폭설 등이 빈번해지며,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오염된 황사나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가 커지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강력한 태풍이나 호우가 집중하는 시기에는 큰 피해가 나는 반면, 그렇지 않으면 경미한 피해를 입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피해가 집중한 시기를 보면, 1987년 태풍 셀마의 상륙으로 사망실종자가 1,022명, 이재민이 27만 2,277명 발생했으며, 1998년 태풍 예니와 홍수로 인해 사망실종 385명, 이재민 3만 308명이 발생했다. 2002년에는 태풍 루사로 사망실종 270명, 이재민 7만 1,204명이, 2003년에는 태풍 매미로 인해 사망실종 148명, 이재민 6만 3,133명이 발생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도 피해액의 변화 추이가 들쭉날쭉하다. 2013년 가격수준으로 환산된 자연재해 피해액은 1991년~2013년 약 20년 동안 피해액의 규모가 1조원을 넘는 해가 12회 있었다(1987년 약 2.2조원, 1989년 약 1.1조원, 1990년 약 1.3조원, 1998년 약 2.1조원, 1999년 약 1.7조원, 2001년 약 1.7조원, 2002년 약 8.2조원, 2003년 약 5.8조원, 2004년 약 1.5조원, 2005년 약 1.3조원, 2006년 약 2.3조원, 2012년 약 1.1조원).

자연재해의 주된 요인을 호우, 대설, 태풍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10회 이상의 호우가 집중한 해는 1991년(10회) 2012년(11회), 2013년(18회)이다. 대설은 2003년 이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거나 1회 정도였으나, 2004년 이후 1~6회 발생하며, 평균 약 4회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3회 정도의 태풍피해가 발생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1981-2013)



출처: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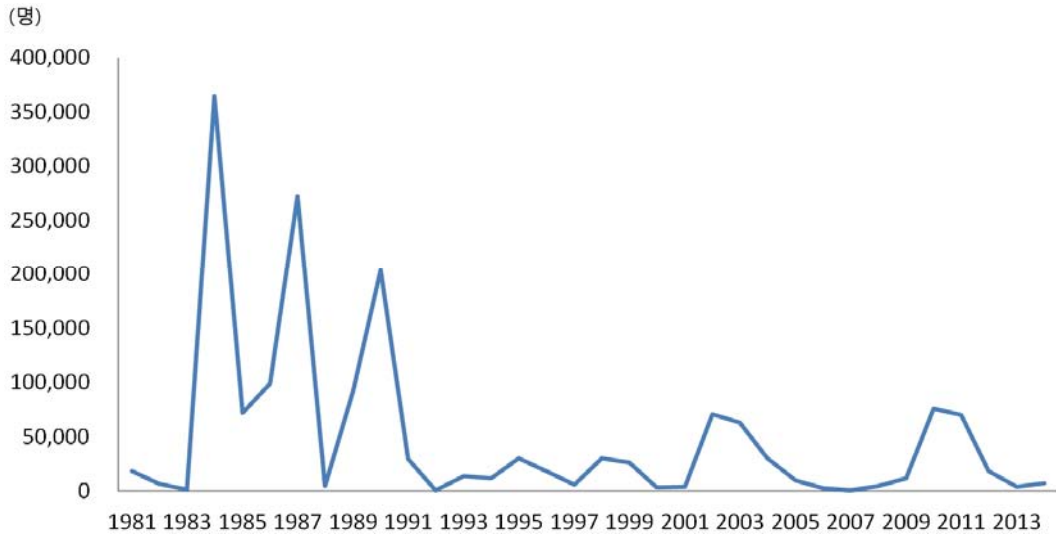
- 주: 1)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과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자수와 피해액임.
 2) 자연재해피해액은 2013년 환산가격으로 나타낸 액수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자 수(1981-2013)

(단위: 명)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216	121	91	265	250	156	1,022	143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307	257	240	40	69	72	158	77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38	384	89	49	82	270	148	1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52	63	17	11	13	14	78	16	4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수(1981-2013)



출처: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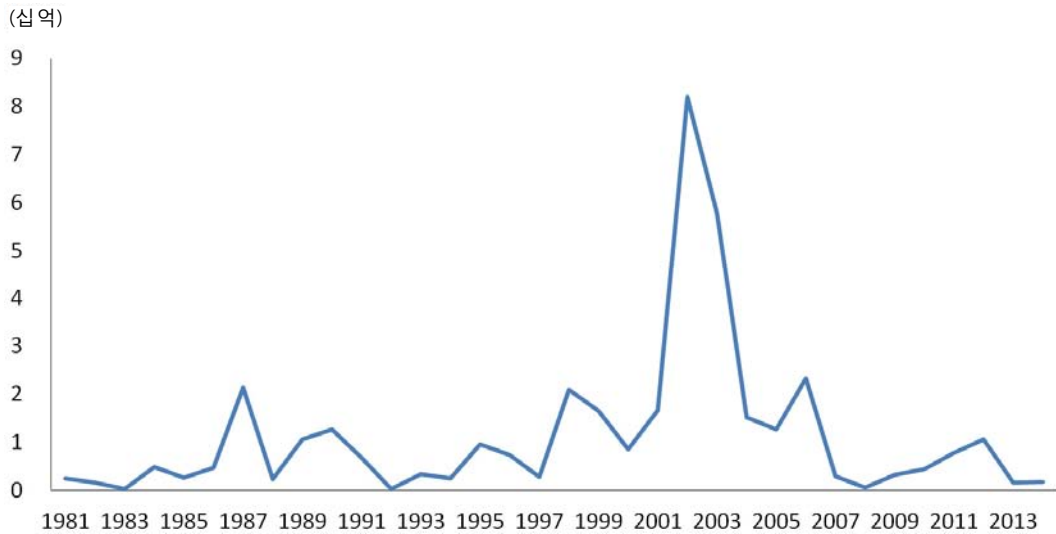
주: 1)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과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 자수와 피해액임.
2) 자연재해피해액은 2013년 환산가격으로 나타낸 액수임.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 수(1981-2013)

(단위: 명)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8,306	6,609	1,355	364,236	72,257	99,114	272,277	5,053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92,593	203,314	29,573	965	13,779	11,852	30,408	18,68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6,296	30,308	26,656	3,665	4,165	71,204	63,133	30,446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9,914	2,883	675	4,627	11,931	76,110	70,099	18,356	4,233

자연재해 피해액(1981-2013)



출처: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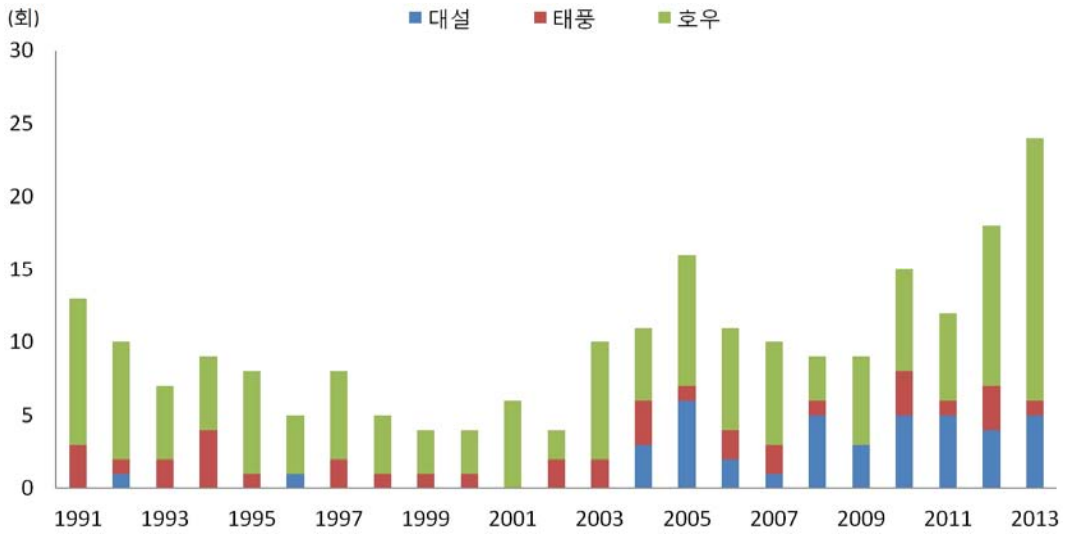
주: 1)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가뭄, 지진(지진해일 포함)과 이에 준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 자수와 피해액임.
 2) 자연재해피해액은 2013년 환산가격으로 나타난 액수임.

■ 자연재해 피해액(1981-2013)

(단위: 십억)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261,231	167,002	39,584	498,953	275,142	480,412	2,154,325	241,782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075,151	1,287,132	693,036	42,185	340,476	257,930	965,810	751,723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86,238	2,114,882	1,664,175	862,859	1,687,177	8,237,608	5,811,513	1,529,258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277,619	2,343,238	299,381	69,774	327,966	451,236	786,907	1,071,774	172,137

자연재해 피해횟수(1991-2013)



출처: 국민안전처 「재해연보」, 2013.

자연재해 피해횟수(199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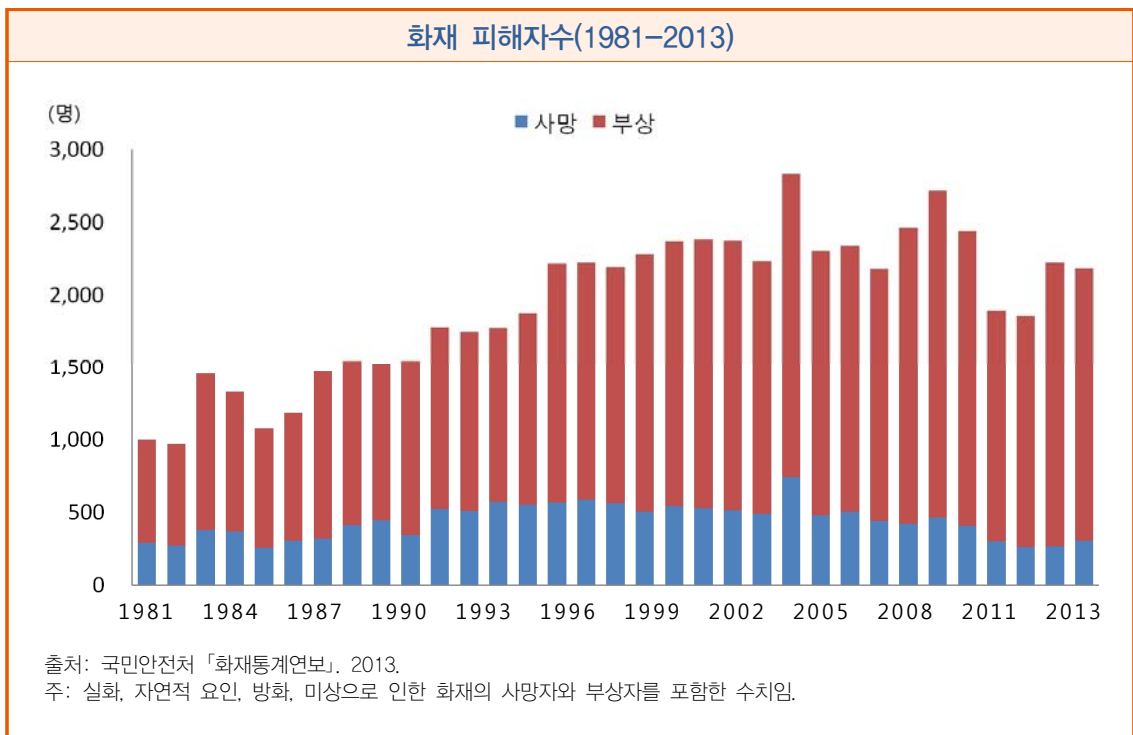
(단위: 회)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13	10	7	9	8	5	8	5
태풍	3	1	2	4	1	0	2	1
호우	10	8	5	5	7	4	6	4
대설	0	1	0	0	0	1	0	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4	4	6	4	10	11	16	11
태풍	1	1	0	2	2	3	1	2
호우	3	3	6	2	8	5	9	7
대설	0	0	0	0	0	3	6	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10	9	9	15	12	18	24	
태풍	2	1	0	3	1	3	1	
호우	7	3	6	7	6	11	18	
대설	1	5	3	5	5	4	5	

(2) 화재피해자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인구밀집공간이 증가한 결과, 실화나 누전, 혹은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나 투자는 이를 따라가지 못해 화재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1981년의 291명에서 1991년의 525명까지 꾸준히 증가한 다음 2001년까지 500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여 2013년에는 300명대의 사망자를 나타낸다. 화재로 인한 부상자수는 1981년의 708명에서 2013년 1,877명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화재발생건수는 1981년 5,851건에서 2013년 4만 932건으로 약 7배 증가하였다. 2001년~2006년까지 화재 발생 건수는 다소 줄어든 모습을 보이나, 2006년~2007년 사이 3만 1,778건에서 4만 7,882건으로 급증하였다. 화재사건 당 사상자수는 1985년의 0.13명(1,080/8,137)에서 2010년의 0.05명(1,891/41,853)으로 61.5% 가량 감소하였다. 화재 피해액은 같은 기간 건당 189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4배 많아졌다. 전체 화재 피해액의 경우 1981년 약 132억 원에서 2013년 약 4,344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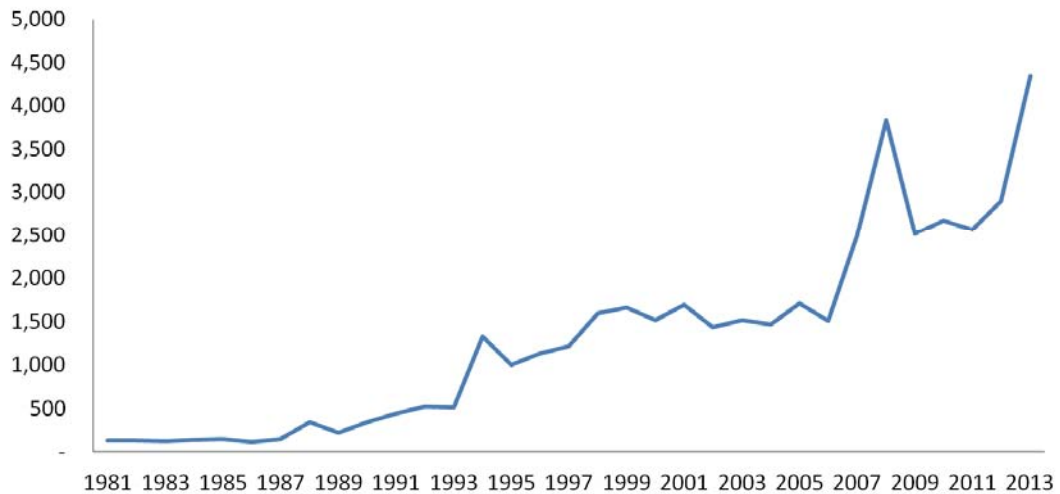
화재 피해자수(1981-2013)

(단위: 명)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합계	999	1080	1548	2219	2384	2342	1892	1862	2223	2184
사망	291	260	348	571	531	505	304	263	267	307
부상	708	820	1200	1648	1853	1837	1588	1599	1956	1877

화재 피해액(1981-2013)

(억원)



출처: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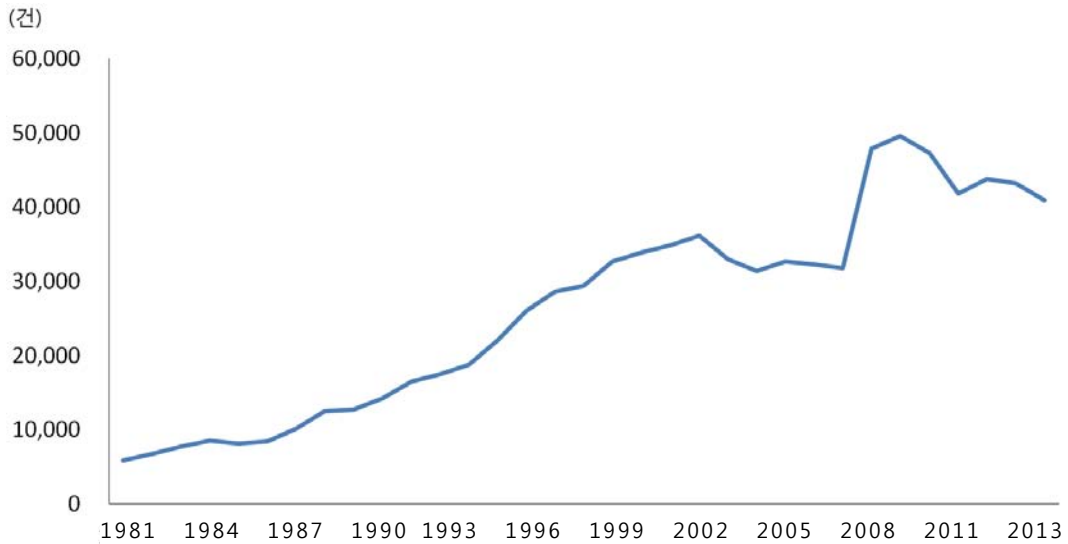
주: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으로 인한 화재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수치임.

화재 피해액(1981-2013)

(단위: 억원)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3,247	15,409	34,133	100,745	151,972	171,374	266,776	256,548	289,526	434,423

화재 발생건수(1981-2013)



출처: 국민안전처 「화재통계연보」, 2013.

주: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으로 인한 화재의 사망자와 부상자를 포함한 수치임.

화재 발생건수(1981-2013)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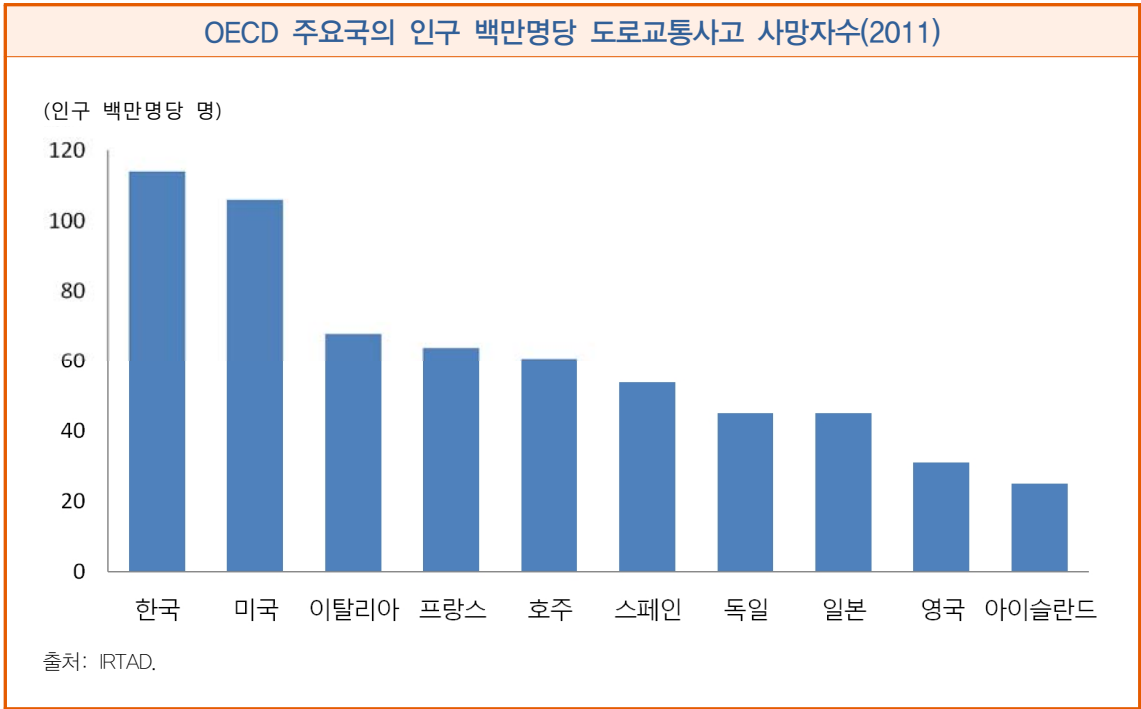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5,851	8,137	14,249	26,071	34,844	32,340	41,863	43,875	43,249	40,932

4)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자동차의 보급이 널리 확대되어 통행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측면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도 크게 증가해왔다.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로 측정한 교통사고의 위험은 1990년에 288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바 있다. 한국의 높은 교통사고율은 급속히 확산된 자동차 보급과 도로망의 확충 등의 물리적 기반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은 안전의식과 질서의식이 수반되지 못한 결과로 야기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 법규의 정비, 국민들의 안전의식의 제고 등에 힘써온 결과 1990년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00만 명당 101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한국의 도로교통 사망자수는 여전히 높다. 이는 비교대상 OECD 국가들 가운데 최고수준이다.



OECD 주요국의 인구 백만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2011)

(단위: 인구 백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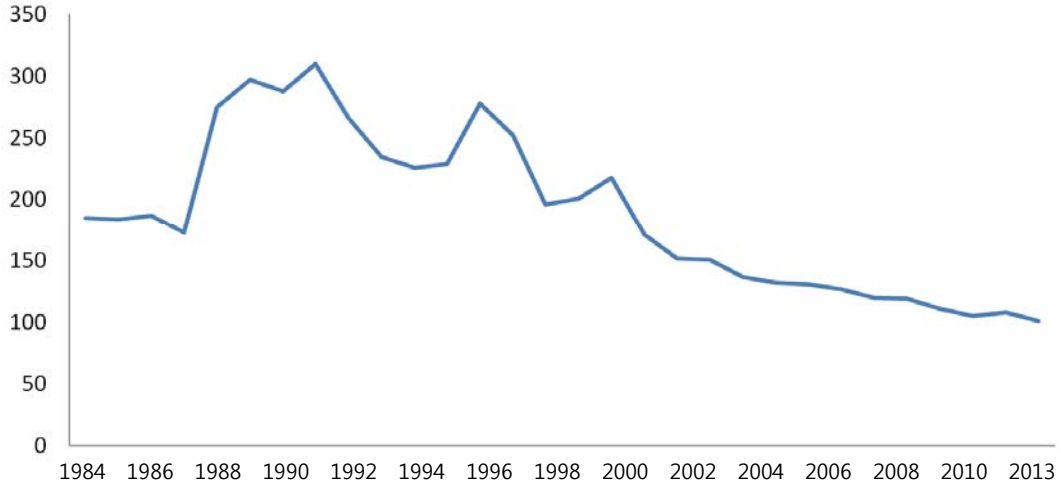
	아이슬란드	영국	독일	일본	스페인	호주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한국
인구 백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	25	31	45	45	54	61	64	68	106	114

한국의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984년 3,325건에서 2013년 4,288건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기간별로 살펴보면 1984년~1991년 인구 100만 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1998년~2000년을 제외하면 감소하고 있다.

2008년~2011년 주요 유럽 국가와 태평양 지역 국가 32개국의 인구 100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을 비교하면, 한국은 3~5번째로 도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인구 백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1984-2013)

(인구 백만명당 명)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201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주: 1) 인구 10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도로교통사고사망자수 ÷ 총인구) × 1,000,000.

2) 도로교통사고사망자는 도로의 차량 교통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고발생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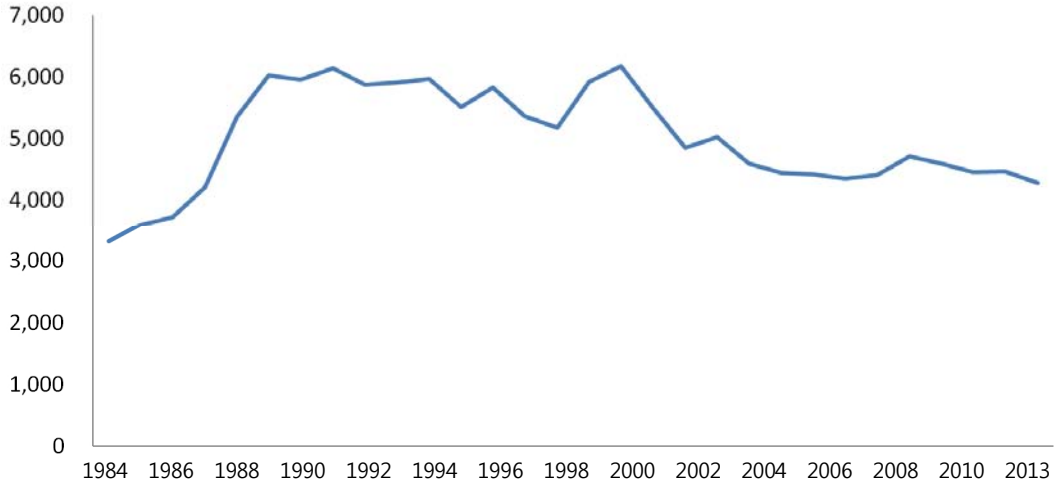
인구 백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1984-2013)

(단위: 인구 백만명당 명)

1984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85	184	288	229	218	132	111	105	108	101

인구 백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1984-2013)

(인구 백만명당 명)



출처: 도로교통공단 TAAS 「2013 교통사고통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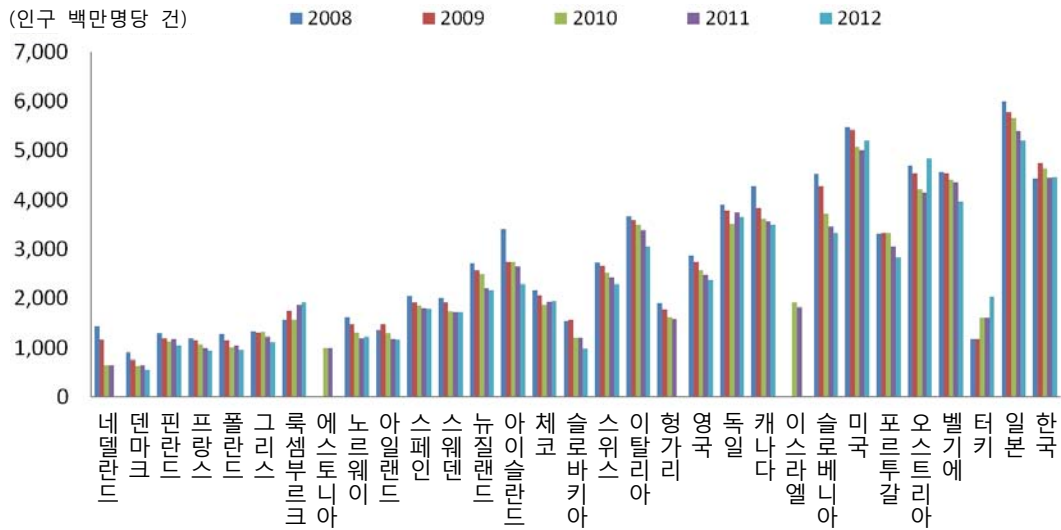
- 주: 1) 교통사고란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운행중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임.
- 2) 1984년부터의 통계는 인적 피해 사고만을 포함함.

인구 백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1984-2013)

(단위: 인구 백만명당 명)

1984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3,325	3,598	5,955	5,519	6,179	4,449	4,592	4,454	4,473	4,288

OECD 주요국의 인구 백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2008-2012)



출처: IRTAD(International Road Traffic Accident Database), OECD factbook 2014.

주: 1) 한국자료는 경찰청 교통사고 보고서 통계임.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OECD 주요국의 인구 백만명당 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2008-2012)

(단위: 인구 백만명당 건)

국 가	2008	2009	2010	2011	2012
한 국	4,440	4,759	4,756	4,559	4,581
이 스 라 엘	0	0	1,979	1,867	33
네 델 란 드	1,445	1,175	686	690	34
호 주			61	56	57
헝 가 리	1,909	1,781	1,703	1,652	61
에스토니아	0	0	1,062	1,127	65
덴 마 크	911	757	678	680	589
프 랑 스	1,204	1,158	1,135	1,061	1,009
폴 란 드	1,287	1,158	1,119	1,161	1,055
슬로바키아	1,545	1,571	1,275	1,270	1,058
핀 란 드	1,298	1,204	1,186	1,239	1,105
그 리 스	1,345	1,313	1,441	1,323	1,207
아 일 랜 드	1,375	1,487	1,341	1,222	1,207
노 르 웨 이	1,631	1,481	1,353	1,233	1,255
스 웨 덴	2,010	1,929	1,768	1,766	1,759

국 가	2008	2009	2010	2011	2012
스 페 인	2,057	1,926	1,913	1,859	1,842
룩셈부르크	1,564	1,759	1,631	1,926	1,983
체 코	2,166	2,074	1,949	2,009	2,022
터 키	1,181	1,181	1,666	1,669	2,093
뉴 질 랜드	2,728	2,578	2,578	2,273	2,235
아이슬란드	3,406	2,752	2,780	2,686	2,326
스 위 스	2,731	2,662	2,560	2,473	2,337
영 국	2,879	2,748	2,612	2,515	2,404
포 르 투 갈	3,317	3,336	3,418	3,153	2,908
이 탈 리 아	3,673	3,587	3,572	3,454	3,127
슬로베니아	4,524	4,285	3,779	3,537	3,400
캐 나 다	4,279	3,851	3,677	3,612	3,571
독 일	3,900	3,790	3,569	3,792	3,701
벨 기 에	4,577	4,541	4,485	4,434	4,044
오스트리아	4,702	4,539	4,287	4,226	4,909
일 본	6,000	5,777	5,712	5,458	5,257
미 국	5,474	5,421	5,189	5,115	5,313

5) 대형인적재난

(1) 대형인적재난 추이

대형인적재난을 10명 이상의 인명피해(사망, 실종)가 발생한 사고라고 정의하면, 지난 50년간 모두 117건의 대형인적 재난(화재, 육상교통 재난, 해상교통 재난, 항공기 재난, 붕괴 및 폭발)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인적재난이란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수나 잘못이 기술적 결함과 결합하여 나타난 재난을 의미한다.

인명피해 규모로 볼 때 그동안 가장 심각한 피해는 508명이 사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1995년)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에 집중해서 발생한 서해 페리호 침몰사고(1993년), 부산 구포 열차 탈선사고(1993년), 목포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사고(1993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1994년),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1995), 인천 호프집 화재(1999) 등은 1970년대부터 이루어진 압축적인 고속성장과정에서 구조화되고 부실한 근대성이 만든 어두운 그늘이다.

지속된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과는 달리 안전을 중시하는 규제와 문화는 상당히 지체되었고, 이러한 불균형이 1990년대의 집중재난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3년의 대구지하철 방화사고나 2014년의 세월호 침몰 등과 같은 재난이 반복되고 있다.

중요한 인적재난을 1964년~1969년, 1970년~1979년, 1980년~1989년, 1990년~1999년, 2000년~2009년, 2010년~2013년의 시기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0년대 들어 그 숫자가 감소하는 경향이 감지된다. 그러나 중요한 인적재난의 유형은 시기별로 변화해 왔는데, 1960년대와 1970년대는 대형 화재사건이나 육상, 해상 교통사고, 그리고 폭발사고가 주로 발생하였으며, 1990년대는 대형화재와 붕괴폭발사고가 많았고, 2000년대에는 다시 육상교통과 화재사건에서 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실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없지만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사건들이 빈발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광우병 파동(2008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둘러싼 불안심리의 확산 (2011년), 세월호 침몰 (2014), 메르스 파동 (2015) 등은 과거형 위험과 미래형 위험이 뒤엉킨 불안한 한국사회의 현황을 보여준다.

사 고 유 형	연 도	사 건 명	인명피해(명)
버 스 사 고	1971	청평담 버스 추락	80
붕 괴 사 고	1995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508
선 박 사 고	1951	부산 여객선 제5편리호 침몰	80
	1953	다대포 여객선 창경호 침몰	250
	1956	삼천포 여객선 대신호 화재	55
	1963	영암 가지도 여객선 연호 침몰	138
	1967	부산-여수 여객선 한일호 침몰	89
	1970	제주-부산 연락선 남영호 침몰	323
	1976	동해 어부 조난	322
	1993	서해 페리호 침몰	294
열 차 사 고	1951	전남 쌍봉 열차 탈선	118
	1951	순천-여수 열차 탈선	120
	1952	경인선 기관 파열	68
	1981	경북 경산 열차 추돌	54
	1993	부산 구포 열차 탈선	78

사 고 유 형	연 도	사 건 명	인명피해(명)
폭 발 사 고	1977	이리역 화약 수송열차 폭발	59
	1995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 폭발	101
항 공 사 고	1982	제주 군용기 추락	53
	1983	KAL 007 피격(소련)	269
	1987	KAL 858 미얀마 상공에서 폭발	151
	1989	KAL 803 트리폴리공항에서 추락	80
	1993	목포 운거산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66
	1997	KAL 801 괌에서 추락	229
	2002	김해공항 중국항공기 추락	129
화 재 사 고	1954	부산진 대화재	134
	1960	부산 국제고무공장 화재	62
	1962	인천항만 화재	74
	1971	서울 대연각 호텔 화재	163
	1972	서울 종로구 시민회관 화재	53
	1974	서울 대왕코너 2차 화재	88
	1999	인천 호프집 화재	56
	2003	대구 지하철 방화	192

출처: 손해보험협회, 「한국 손해보험산업과 함께 한 손해보험협회60년사」, 2006.
 주: 50명 이상 인명피해(사망, 실종)가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함.

기간	자연재난	인적재난					
		전체	화재	육상교통	해상교통	항공기	붕괴·폭발
1964-1969	18	16	2	10	2	1	1
1970-1979	49	39	7	20	5	0	7
1980-1989	57	21	6	5	2	4	4
1990-1999	21	24	10	3	3	2	6
2000-2009	12	14	7	4	1	1	1
2010-2013	2	3	1	0	2	0	0
계	159	117	33	42	15	8	19

출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 FOCUS」, 2014. 7.
 주: 10명 이상 인명피해(사망, 실종)가 발생한 사고를 대상으로 함.

9. 사회통합

1) 정치 및 사회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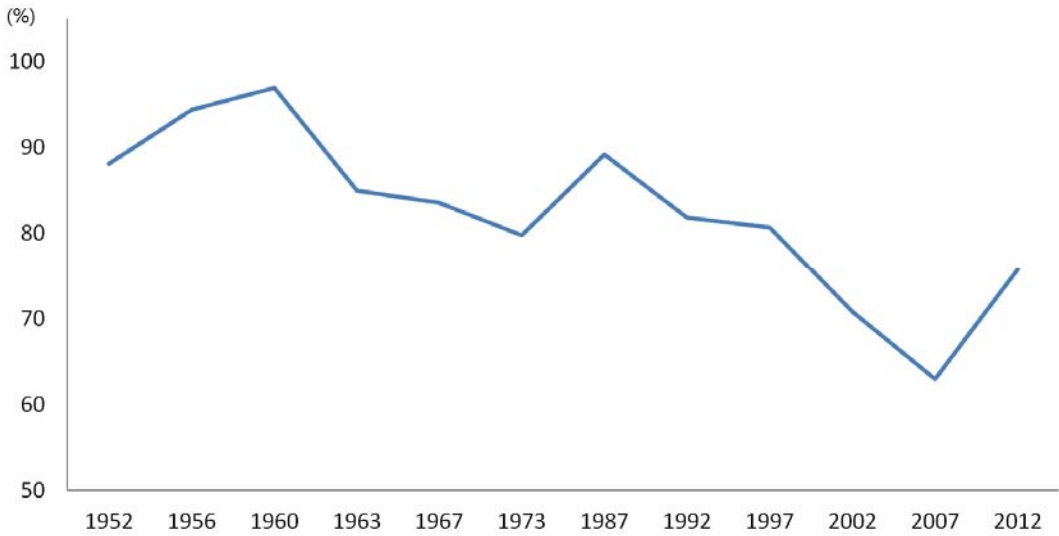
(1) 선거 투표율

정치참여는 국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 선거투표율은 국민의 정치참여 정도를 측정해 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은 자유로운 투표를 통한 민의의 정치적 반영이다. 정치과정이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요구를 선거를 통해 표현해야 하는데,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이 얼마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투표율이다. 따라서 선거투표율은 정치참여의 정도와 함께 민주주의의 질을 보여주는 양적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해방 이후 1990년대까지는 높은 투표율을 보여 왔다. 그러나 대통령선거 투표율은 2000년대 들어,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투표율은 1990년대부터 낮아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 국회의원선거(46.1%에서 54.2%)와 대통령선거(63.0%에서 75.8%) 모두 투표율이 높아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0년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율로만 보았을 때, 한국의 투표율은 일본과 프랑스와 비슷하고 호주, 스웨덴, 독일보다는 낮다. 투표율 하락은 많은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호주는 1970년대에 비해 2% 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데 그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 투표율 하락폭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와 같이 큰 편이다. 투표율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지만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연령별로는 20대 후반까지 투표율이 낮아지다가 30대 이후 연령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높아진다.

대통령선거 투표율(1952-2012)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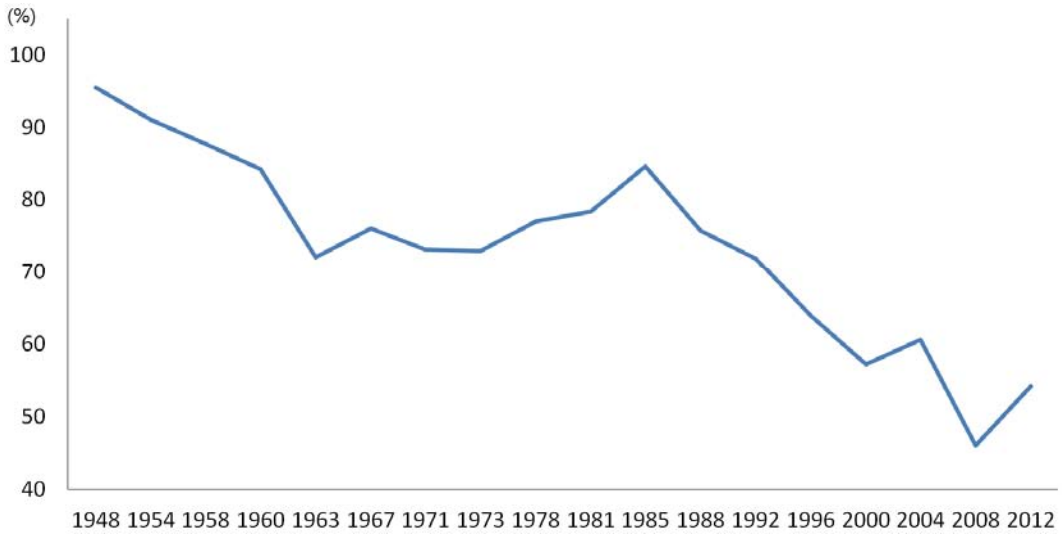
주: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 대통령선거 투표율(1952-2012)

(단위: %)

	1952	1956	1960	1963	1967	1973	1987	1992	1997	2002	2007	2012
투표율	88.1	94.4	97.0	85.0	83.6	79.8	89.2	81.9	80.7	70.8	63.0	75.8

국회의원선거 투표율(1948-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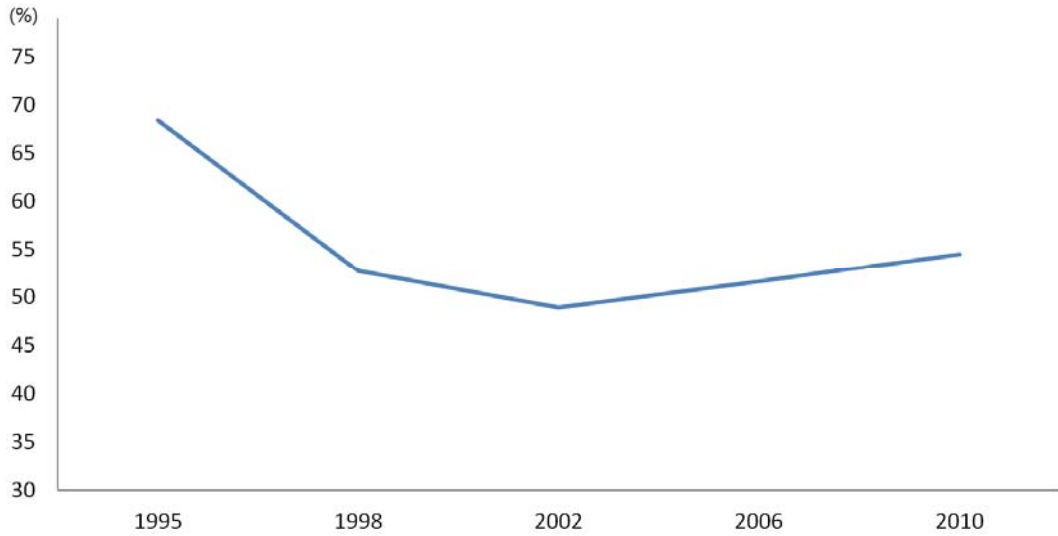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선거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주: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국회의원선거 투표율(1948-2012)

(단위: %)

1948	1954	1958	1960	1963	1967	1971	1973	1978
95.5	91.1	87.8	84.3	72.1	76.1	73.2	73	77.1
1981	198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78.4	84.6	75.8	71.9	63.9	57.2	60.6	46.1	54.2

지방의회의원선거 투표율(1995-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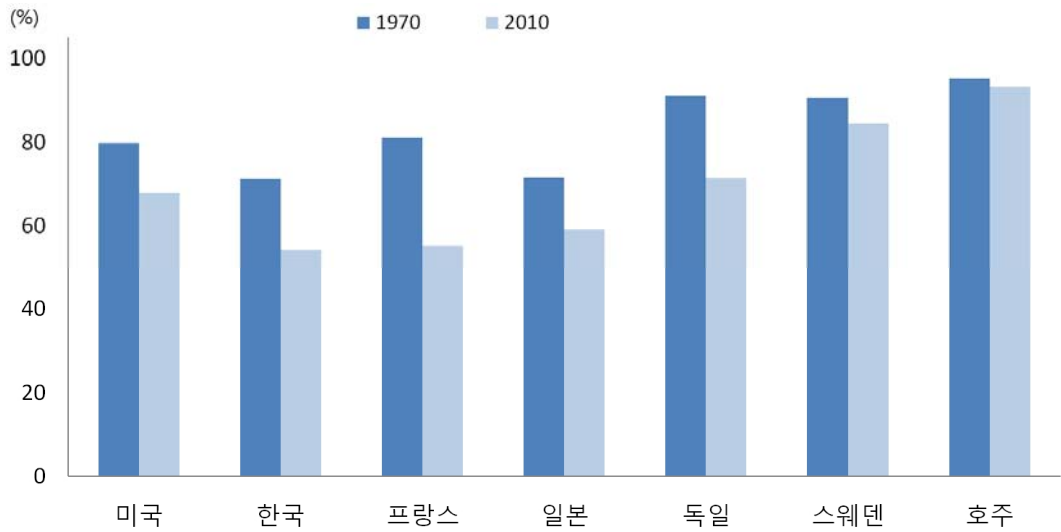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원선거투표율분석」, 각 연도.
 주: 투표율 = (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지방의회의원선거 투표율(1995-2010)

(단위: %)

1995	1998	2002	2006	2010
68.4	52.7	48.9	51.6	54.5

OECD 주요국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1970, 2010)



출처: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tances, 각 연도.

주: 1) 투표율=(투표자수 ÷ 선거인수) × 100.

2) 상원과 하원이 있는 경우, 하원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였음.

3) 1970년대 투표율의 경우 미국, 일본, 독일, 호주는 1972년, 한국, 프랑스, 스웨덴은 1973년 수치이며, 2010년대의 경우 스웨덴은 2010년,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은 2012년, 독일과 호주는 2013년 수치를 기준으로 함.

OECD 주요국의 국회의원선거 투표율(1970, 201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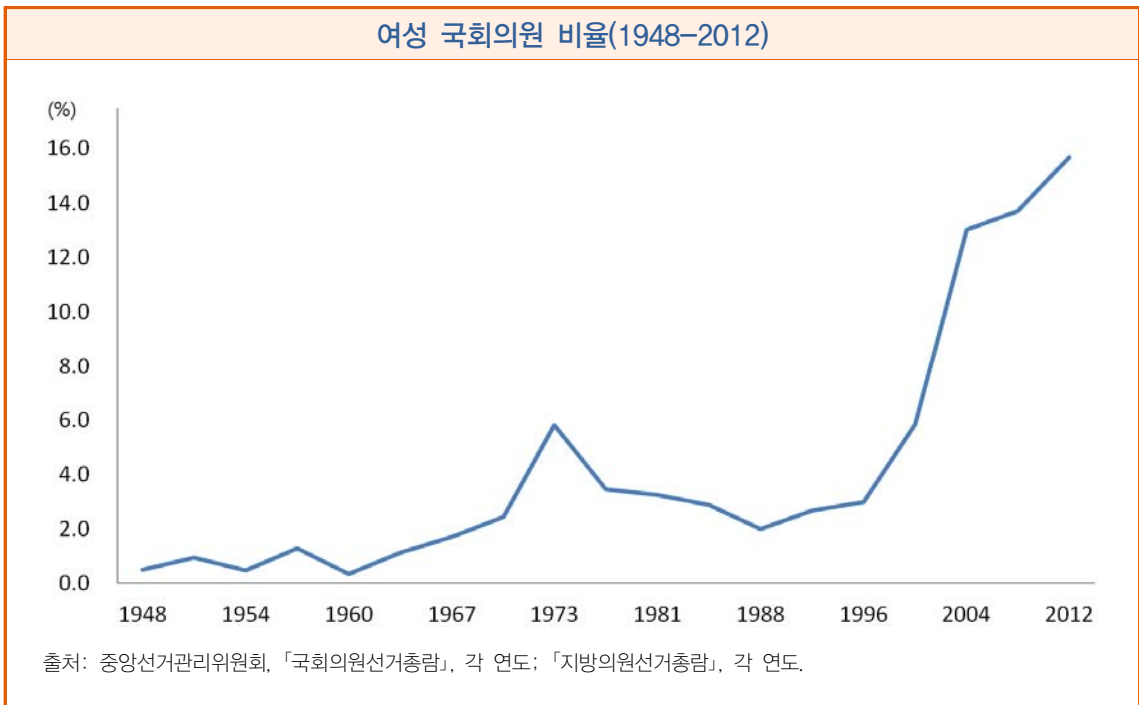
국	가	1970	2010
미	국	79.85	67.95
한	국	71.36	54.26
프	랑	81.31	55.4
일	스	71.75	59.32
독	본	91.11	71.55
스	일	90.84	84.63
웨	덴	95.38	93.23
호	주		

(2) 여성 국회의원 비율

정치 및 사회 참여 영역에서는 참여의 정도와 함께 참여의 기회가 얼마나 공평하게 주어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오랫동안 정치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여성들의 입장과 요구가 얼마나 잘 반영되는지는 국회에서 여성의원들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이다. 한국의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990년대까지 5%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 높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15%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는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과 함께 여성의 입장을 정책결정이나 법률제정을 통해 대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의미하며, 젠더 측면에서의 사회통합이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여성국회의원비율은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낮지 않지만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등과 비교해서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 스웨덴의 경우, 여성의원의 비율이 45%에 달해 입법기관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에 가까이 다가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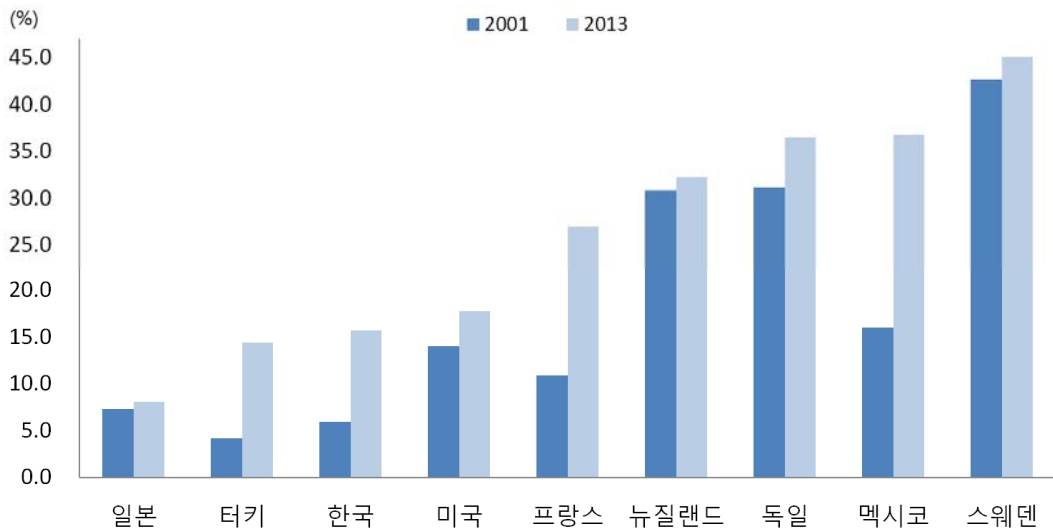
Ⅰ 여성 국회의원 비율(1948-2012)

(단위: %)

	1948	1950	1954	1958	1960	1963	1967	1971	1973	1976
구분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10대
의원 정수	200	210	203	233	291	175	175	204	292	231
남성의원 수	199	208	202	230	290	173	172	199	275	223
여성위원 수	1	2	1	3	1	2	3	5	17	8
여성국회의원 비율	0.5	1.0	0.5	1.3	0.3	1.1	1.7	2.5	5.8	3.5

	1981	1985	1988	1992	1996	2000	2004	2008	2012
구분	11대	12대	13대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의원 정수	276	276	299	299	299	273	299	299	300
남성의원 수	267	268	293	291	290	257	260	258	253
여성위원 수	9	8	6	8	9	16	39	41	47
여성국회의원 비율	3.3	2.9	2.0	2.7	3.0	5.9	13.0	13.7	15.7

OECD 주요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01, 2013)



출처: 국제의원연맹(IPU) 「www.ipu.org」, 2014. 9.

주: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 국회의원 정원 중 여성위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OECD 주요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01, 2013)

(단위: %)

국가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일본	7.3	7.3	7.1	7.1	9.0	9.4	9.4	9.4	11.3	11.3	10.8	7.9	8.1
터키	4.2	-	4.4	4.4	4.4	4.4	9.1	9.1	9.1	9.1	14.2	14.2	14.4
한국	5.9	5.9	5.9	13.0	13.4	13.4	14.4	13.7	14.7	14.7	14.7	15.7	15.7
미국	14.0	13.8	14.3	14.9	15.2	16.3	16.8	17.0	16.8	16.8	16.8	18.0	17.8
프랑스	10.9	12.1	12.2	12.2	12.2	12.2	18.2	18.2	18.9	18.9	18.9	26.9	26.9
뉴질랜드	30.8	29.2	28.3	28.3	32.2	32.2	33.1	33.6	33.6	33.6	32.2	32.2	32.2
독일	31.1	32.2	32.2	32.8	31.8	31.6	31.6	32.2	32.8	32.8	32.9	32.9	36.5
멕시코	16.0	16.0	22.6	22.6	24.2	22.6	23.2	23.2	27.6	26.2	26.2	36.8	36.8
스웨덴	42.7	45.0	45.3	45.3	45.3	47.3	47.0	47.0	46.4	45.0	44.7	44.7	45.0

2) 삶의 기회와 만족

(1) 자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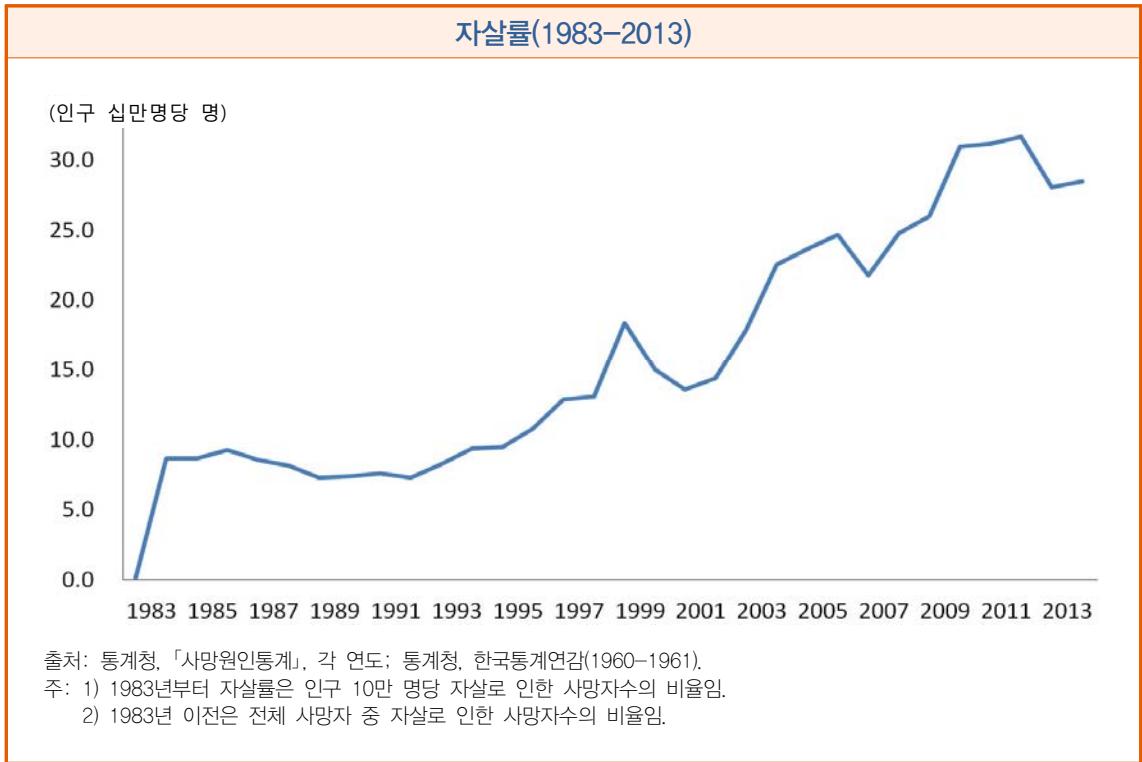
자살률은 사회의 구조적 특성과 사회통합의 정도를 보여준다. 사회학자 뒤르켐(Emile Durkheim)은 자살이 사회적으로 통합이 약해지는 경우에 혹은 그런 집단에서 더욱 빈번하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무질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자살률은 높아진다. 따라서 자살률은 한 사회의 통합 정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자살률은 1960년대까지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1980년대에도 10만 명당 10인 이하로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1990년대 상승하기 시작한 자살률은 2000년대 들어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2012년 현재 28명에 이르며, 이는 2000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자살률은 남성이 여성보다 두 배가량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높다.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다.

자살률이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8년에 갑자기 높아지고(10만명당 18.4건), 글로벌 경제위기의 시기인 2008~2011년 사이에 최고 수준(10만명당 31.7건)을 보인 것은 한국에서 자살률이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자살자의 비율은 70세 이상 인구에서 가장 높아 2012년 현재 인구 10만 명당 253명에 달하고 있다. 20대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연령층의 경우, 자살률은 다른 연령대보다 낮지만 사망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자살이 가장 큰 사망원인

이 되고 있다. 자살은 삶에 대한 만족이 극도로 떨어졌을 때 취하는 극단적인 행동이다. 모든 연령층에서 자살률이 높다는 것은 그 만큼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이 떨어지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살률(1983-2013)

(단위: 인구 십만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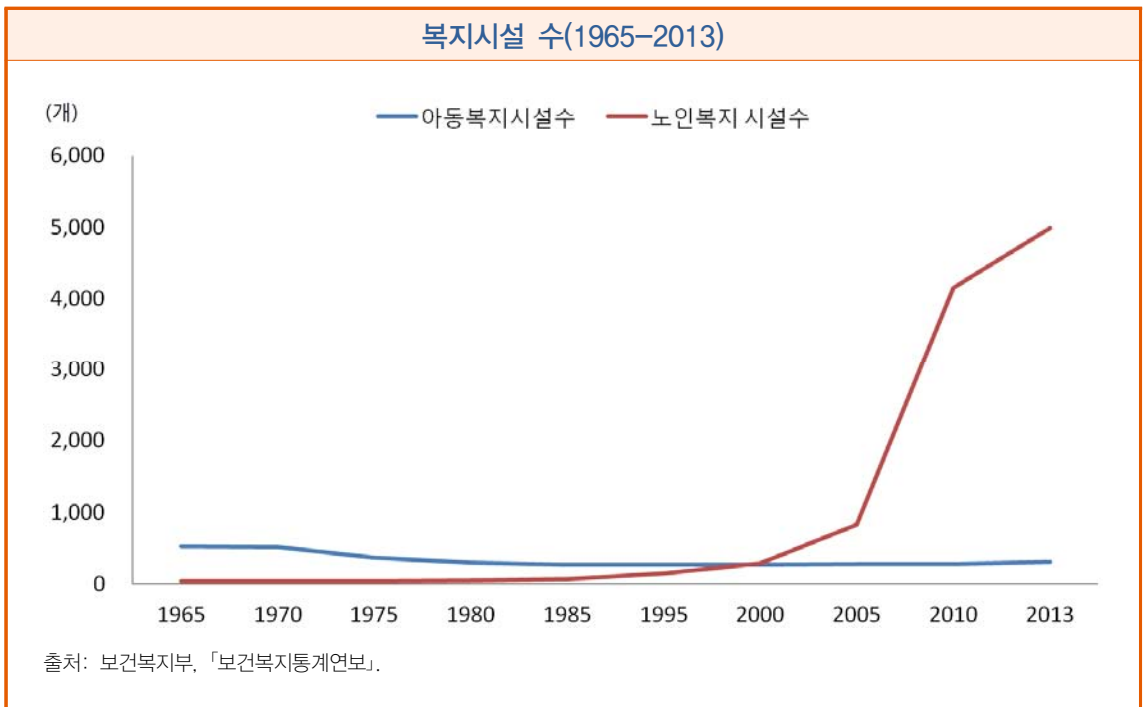
1960	1961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0.3	0.2	8.7	8.7	9.3	8.6	8.2	7.3	7.4	7.6	7.3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8.3	9.4	9.5	10.8	12.9	13.1	18.4	15	13.6	14.4	17.9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2.6	23.7	24.7	21.8	24.8	26	31	31.2	31.7	28.1	28.5

3) 사회보장

(1) 복지시설 수

복지시설 수는 아동복지 시설과 노인복지 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복지 시설은 1965년 532개에서 점차로 줄어 1980년 303개, 2010년 280개였으며, 2013년 현재 308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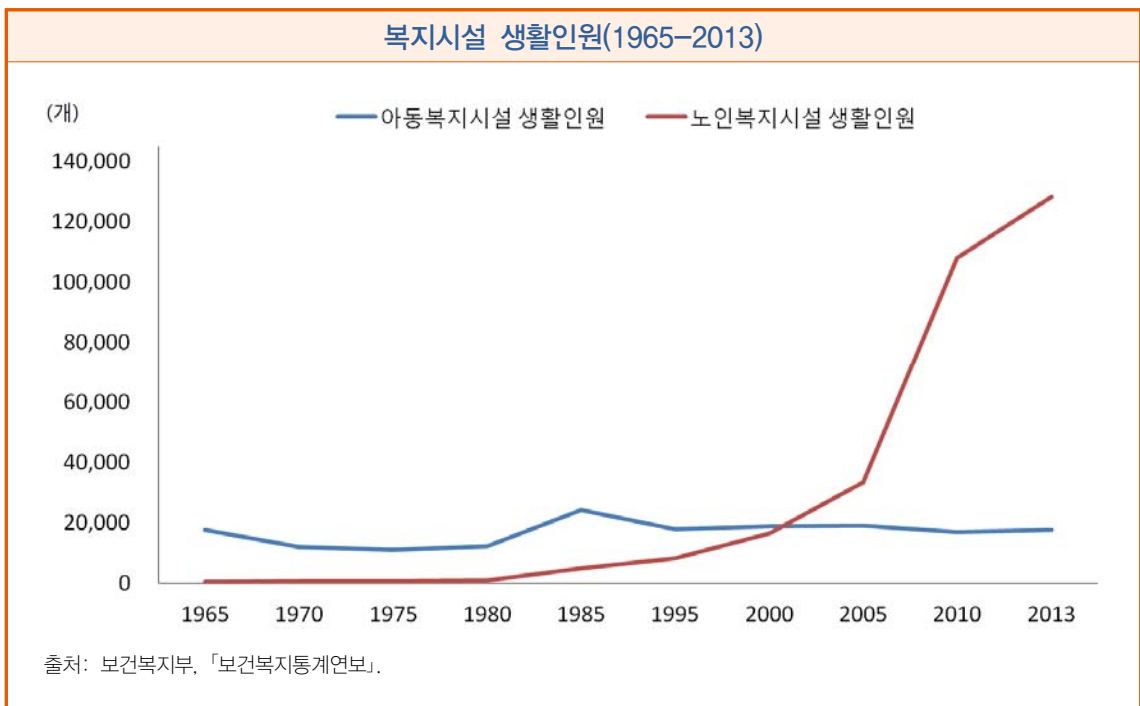
노인복지 시설이 빠르게 증가한 계기는 노인복지제도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이며, 노인복지 시설은 고령화와 함께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입법되었고, 2006년부터 시범실시를 거쳐 2008년 본격적으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로 인해 전국적으로 노인복지 시설의 수는 2006년 1,000개를 넘고, 2008년 2,000개를 넘어서서 2013년 현재 4,955개의 노인 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2) 복지시설 수용인원

아동복지시설의 생활인원은 1965년 1만 7,659명에서 1975년 1만 1,228명까지 줄었다가 다시 늘어 1985년 2만 4,284명까지 늘었지만 다시 줄기 시작해서 2013년에는 1만 7,720명의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이 있다. 이러한 감소는 아동 인구의 감소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인원의 증가를 가져왔다. 1985년 약 5,000명이었던 복지시설 노인의 수는 1997년 1만 명을 넘었고, 2004년 2만 명을 넘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실시되기 직전인 2007년에는 5만 명을 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실시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수는 급격히 증가해서 2010년 10만 명을 넘었으며, 2013년 현재 12만 8,000여명의 노인들이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복지시설 수 및 생활인원

(단위: 개, 명)

	1952	1956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5	2000	2005	2010	2013
보건소	17	17	80	189	192	198	214	225	238	242	248	253	253
보건지소	-	-	-	-	1,354	1,340	1,321	1,303	1,327	1,269	1,280	1,294	1,323
보건진료소	484	505	0	0	-	-	-	1,640	2,039	1,906	1,905	1,912	1,900
아동복지시설수	-	-	-	532	519	374	303	269	269	274	282	280	308
아동복지시설 생활인원	-	-	-	17,659	12,206	11,228	12,275	24,284	18,074	18,808	19,151	17,119	17,720
노인복지 시설수	-	37	39	42	44	45	48	67	146	288	825	4,150	4,995
노인복지시설 생활인원	-	439	566	657	784	891	1,069	5,059	8,369	16,625	33,457	108,129	128,141
정신질환자요양	-	-	-	-	-	-	-	47	75	55	56	59	59
정신질환환자요양 생활인원	-	-	-	-	-	-	-	10,719	18,182	12,585	12,478	11,613	11,048
노숙인복지 시설수	-	-	-	-	-	-	-	35	42	43	38	37	123
노숙인 시설 생활인원	-	-	-	-	-	-	-	14,796	13,319	11,494	9,055	8,958	10,615
결핵 및 한센인복지 시설수	-	-	-	-	-	-	-	0	6	5	5	5	6
결핵 및 한센인복지 시설 생활인원	-	-	-	-	-	-	-	0	1,047	958	654	458	410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IV. 환경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IV

환경

1. 생활환경과 오염

1) 기후와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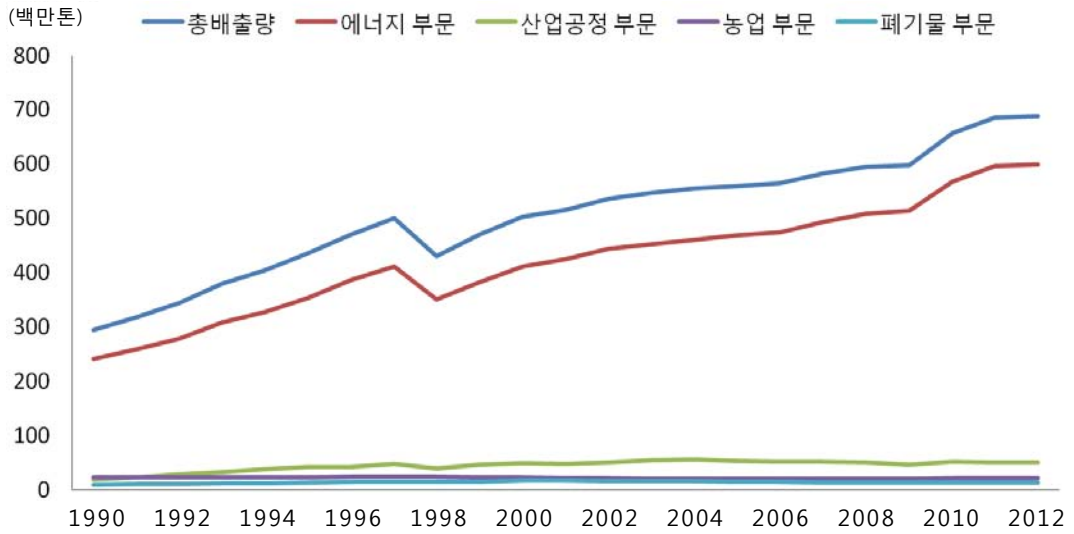
(1)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지구에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이다. 온실효과로 인한 기후변화 또는 지구온난화현상은 현재 가장 중요한 국제 환경문제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빙하 감소, 사막화, 해수면 상승, 기상이변 등과 같은 자연재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잦은 기상이변, 해수면 상승, 생태계 변화 등을 야기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온실가스배출이며, 이것은 인간의 생산 및 소비 활동(특히 에너지사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도부터 측정되기 시작하였으며, 에너지 부문, 산업공정 부문, 농업 부문, 폐기물 부문으로 구분된다. 한국에서 1990-2012년 동안 전체 온실가스배출량 증가를 주도한 것은 에너지 부문이며, 이 기간 동안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배출량은 148.6%나 증가하였다.

국제적으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의 6개 물질을 대표적 온실가스로 정하고 있는데,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호주, 미국, 한국, 독일, 일본 순으로 높다.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1990-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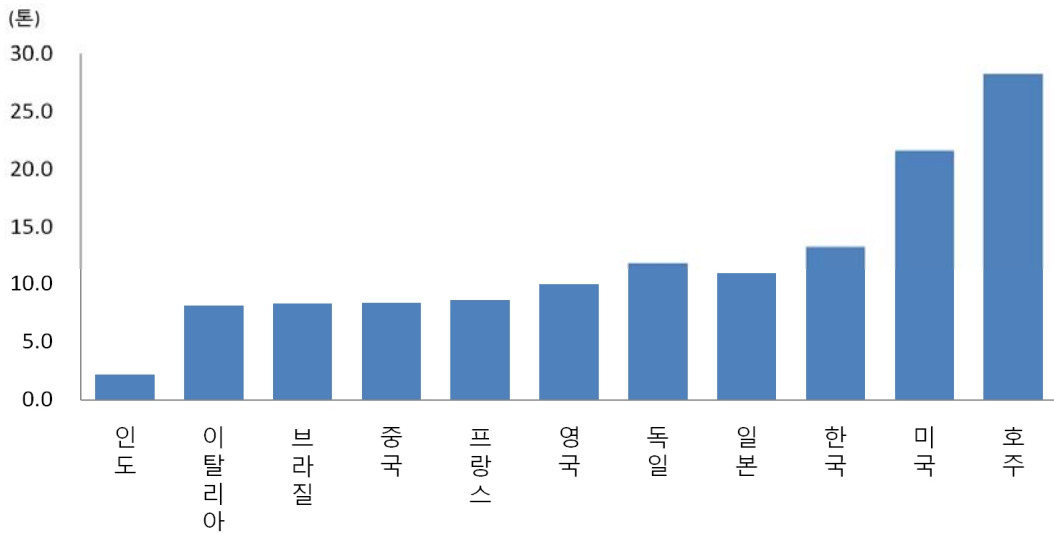
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4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5.
 주: 산림 등에 의한 탄소흡수량은 제외함.

온실가스 배출원별 배출량(1990-2012)

(단위: 백만톤)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배출량	295.5	436.6	503.1	559.9	565.3	582.8	595.7	597.8	657.1	685.7	688.3
에너지	241.5	354.7	411.9	468.8	475.3	494.3	508.6	514.9	568.6	597.6	600.3
산업공정	20.4	42.6	49.6	53.9	52.6	52.3	51.1	46.6	52.4	51.7	51.3
농업	23.8	24.5	23.7	21.5	21.4	21.5	21.5	21.8	22.0	21.9	22.0
폐기물	9.9	14.8	17.8	15.7	16.0	14.7	14.5	14.5	14.1	14.6	14.8

주요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0)



출처: 1) EDGAR 「edgar.jrc.ec.europa.eu」, 2014. 8.

2)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013 국가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2014.

주: 1) 온실가스배출총량을 총인구로 나눈 값임.

2) 국제기구에서 작성한 나라별 지표는 국제비교를 위해 특정 가정에 따라 조정된 자료로서, 주요·보조지표의 수치, 수록기간, 단위 등이 다를 수 있음.

주요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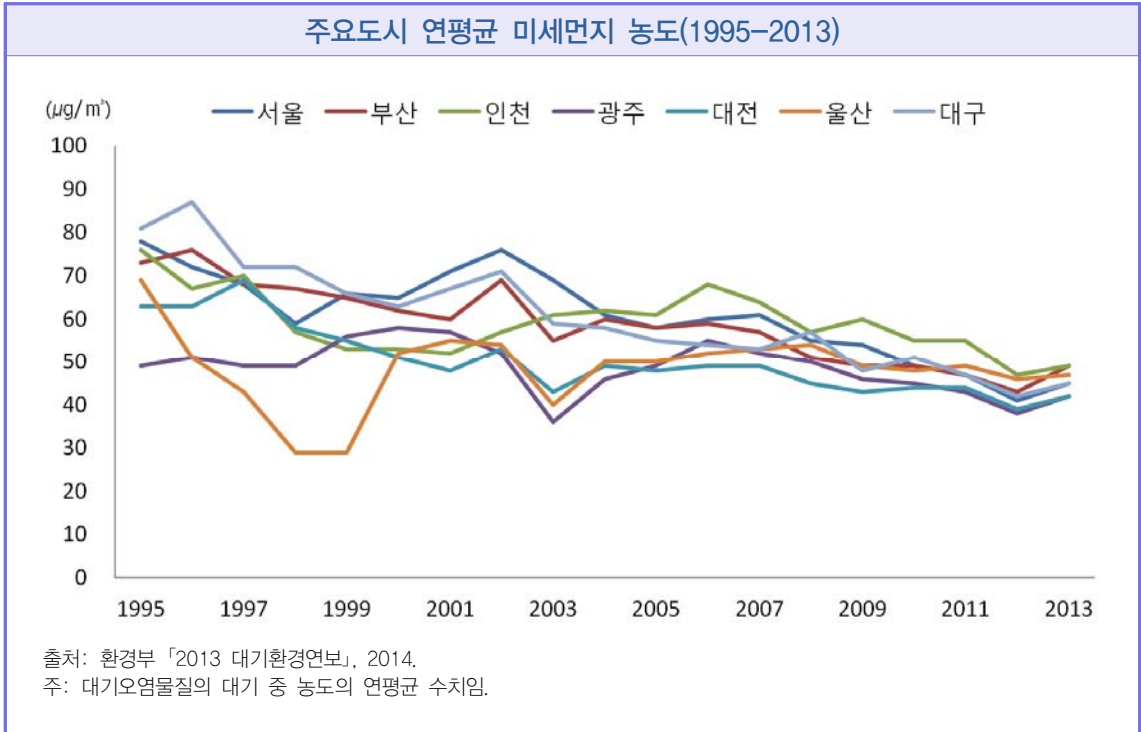
(단위: 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미국	호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2.20	8.10	8.31	8.34	8.57	9.99	11.90	10.90	13.50	21.63	28.24

(2) 대기오염도

미세먼지(PM10)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직경 10 μ m 이하의 먼지 입자를 말하며, 이는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이다. 미세먼지(PM10)의 연평균 농도는 미세먼지의 건강에 대한 영향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 중 하나이다. 한국에서는 1995년부터 측정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PM10)는 이 시기부터 2000년대 중반 이후 까지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연평균 환경기준(50 μ g/m³)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정책에 힘입어 2013년에는 대부분의 도시들이 연평균 환경기준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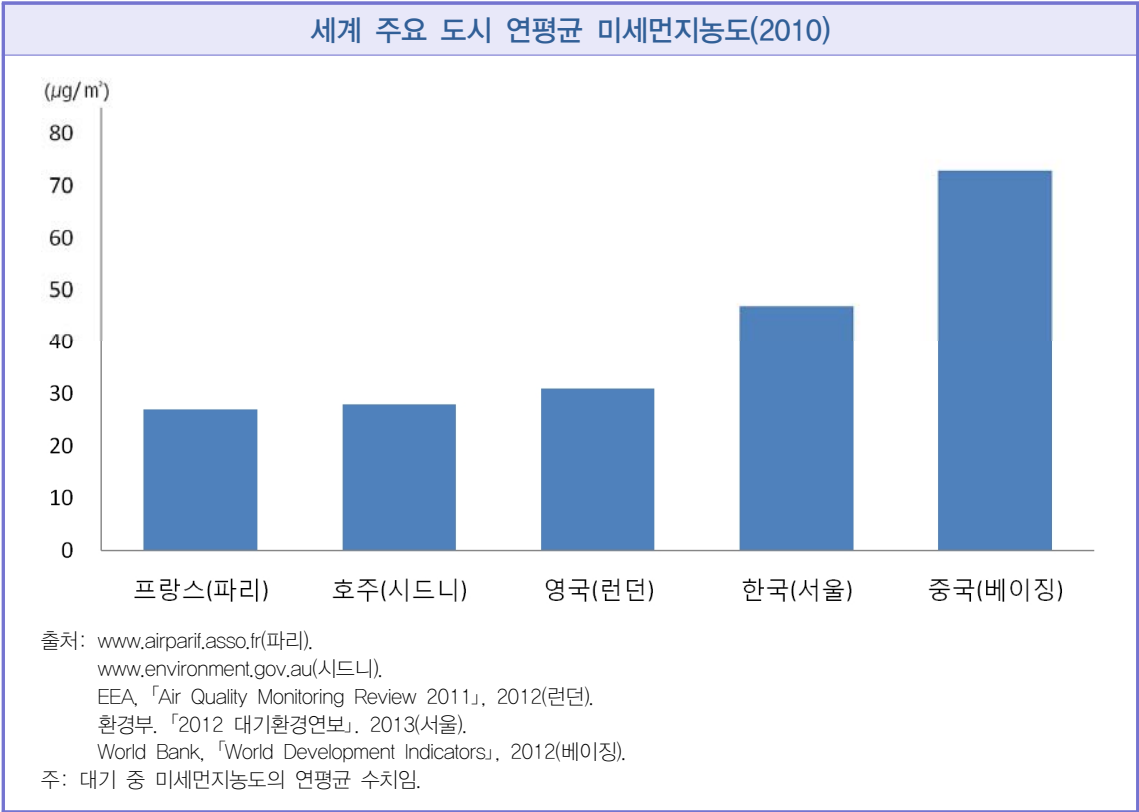
세계 주요 도시들의 대기오염 수준을 비교해 보면, 서울의 미세먼지농도는 베이징 같은 개발도상국 대도시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선진국의 주요 도시들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2010년 기준으로 서울의 미세먼지농도($47\mu\text{g}/\text{m}^3$)는 프랑스 파리($27\mu\text{g}/\text{m}^3$)나 영국 런던($31\mu\text{g}/\text{m}^3$)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서울의 초미세먼지도 다른 해외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주요도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1995-2013)

(단위: $\mu\text{g}/\text{m}^3$)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서울	78	65	58	60	61	55	54	49	47	41	45
부산	73	62	58	59	57	51	49	49	47	43	49
인천	76	53	61	68	64	57	60	55	55	47	49
광주	49	58	49	55	52	50	46	45	43	38	42
대전	63	51	48	49	49	45	43	44	44	39	42
울산	69	52	50	52	53	54	49	48	49	46	47
대구	81	63	55	54	53	57	48	51	47	42	45



세계 주요 도시 연평균 미세먼지농도(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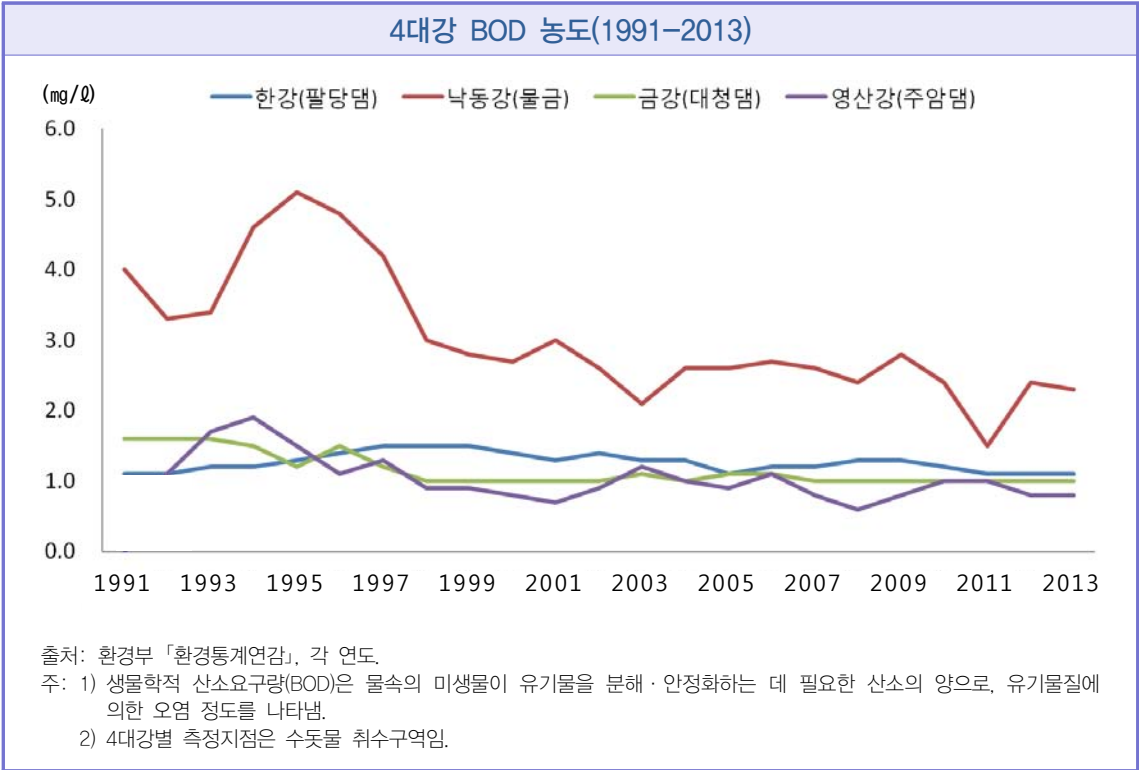
(단위: µg/m³)

	프랑스(파리)	호주(시드니)	영국(런던)	한국(서울)	중국(베이징)
연평균 미세먼지농도	27	28	31	47	73

2) 물 환경

(1) 수질오염도

BOD는 물속의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고 안정화하는 데 필요한 산소의 양으로 유기물 질에 의한 오염 정도를 나타낸다. 통상 BOD 3mg/ℓ 이하를 ‘좋은 물’로 본다. 4대강의 주요 상수원 취수구역(팔당, 물금, 대청, 주암)의 수질은 대부분 BOD 2mg/ℓ 이하의 ‘좋은’ 수준이 유지된다. 낙동강 물금 구역은 2011년 이후 수질이 오히려 악화되었지만, 이는 1990년대 초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것이다.



4대강 BOD 농도(1991-2013)

(단위: mg/L)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강	1.1	1.3	1.4	1.1	1.2	1.2	1.3	1.3	1.2	1.1	1.1	1.1
낙동강	4.0	5.1	2.7	2.6	2.7	2.6	2.4	2.8	2.4	1.5	2.4	2.3
금강	1.6	1.2	1.0	1.1	1.1	1.0	1.0	1.0	1.0	1.0	1.0	1.0
영산강	-	1.5	0.8	0.9	1.1	0.8	0.6	0.8	1.0	1.0	0.8	0.8

(2) 상하수도 보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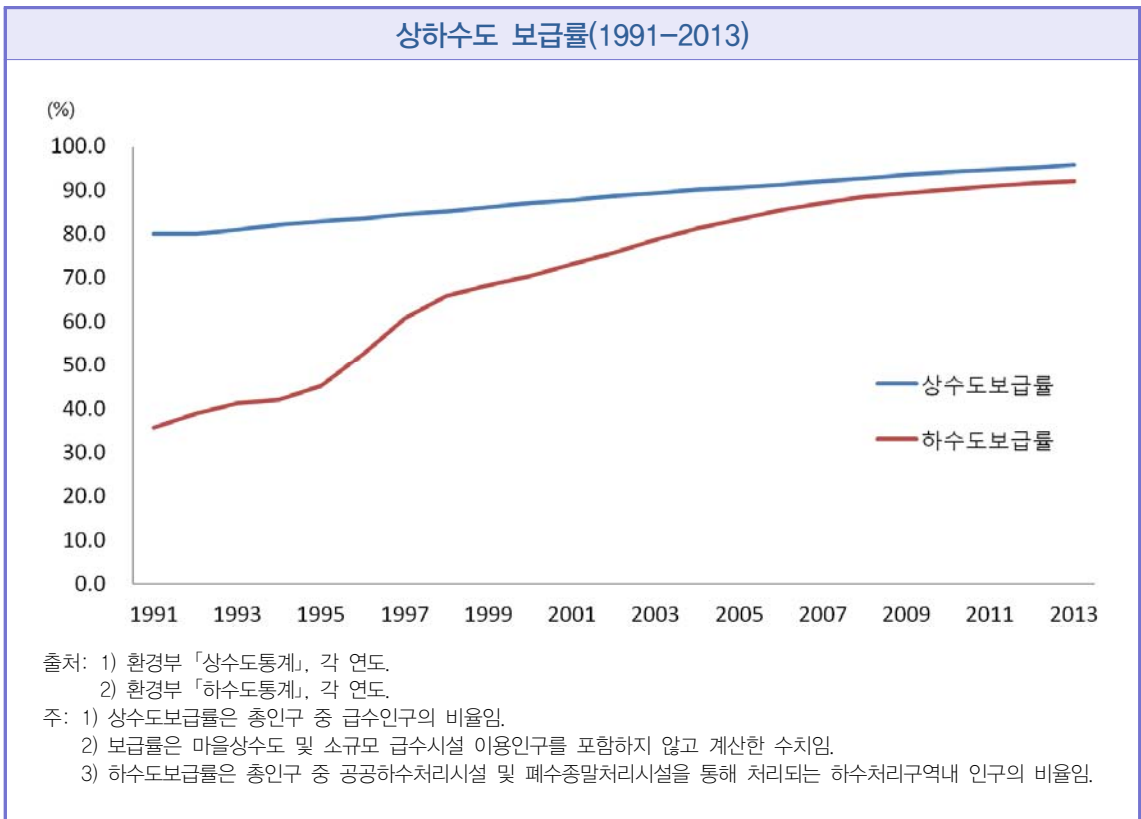
상수도는 보건위생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산업과 소방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한국의 상수도보급률은 1991년 80%에서 2012년 95% 정도까지 높아졌다.

한편, 하수도보급률은 수질오염 부하를 줄이려는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동시에 한 국가나 특정 지역의 공중위생 수준을 대표하는 기본적인 지표 중의 하나이다. 1990년대 초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하수도보급률은 1991년 35.7%

에서 2013년 92.1%로 상승하여,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서울의 경우 2007년에 이미 하수도보급률이 100%에 이르렀다. 그러나 하수도보급률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큰 편으로, 2012년 기준 도시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은 94.6%인 반면, 농어촌지역은 62.1%에 지나지 않는다.

선진국들은 이미 2000년대 초에 100% 가까운 수준의 상수도보급률을 달성하였으며, 한국도 2013년 현재 선진국 수준의 상수도보급률에 이르렀다. 한국의 하수도보급률도 1990년대 초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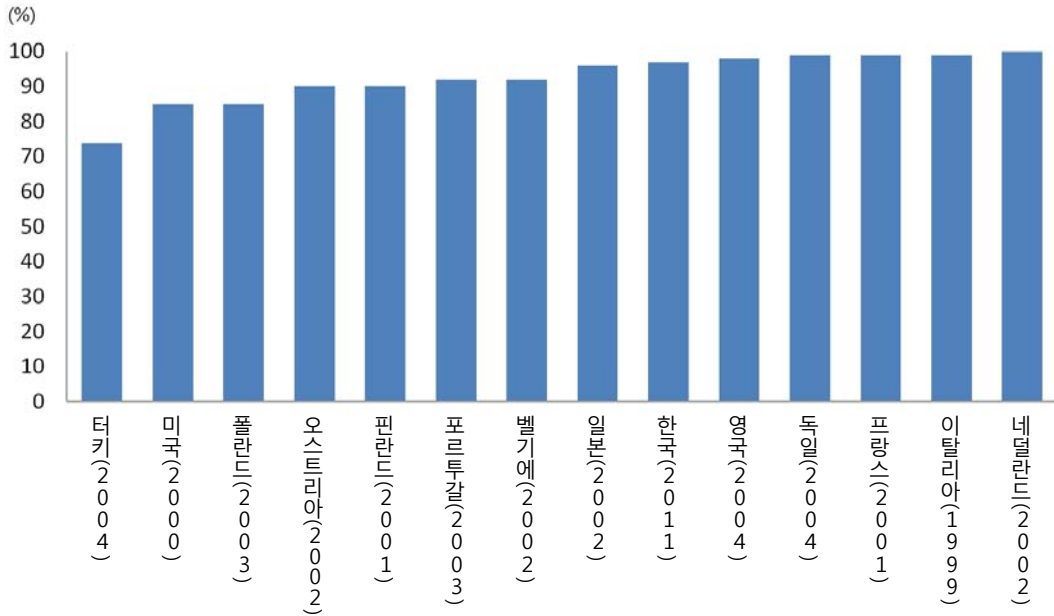


상하수도 보급률(1991-2013)

(단위: %)

	1991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수도 보급률	80.1	82.9	87.1	90.7	91.3	92.1	92.7	93.5	94.1	94.6	95.1	95.7
하수도 보급률	35.7	45.2	70.5	83.5	85.5	87.1	88.6	89.4	90.1	90.9	91.6	92.1

OECD 주요국의 상수도 보급률



출처: 1) OECD 「stat.oecd.org」.

2)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1.

주: 1) 상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급수인구의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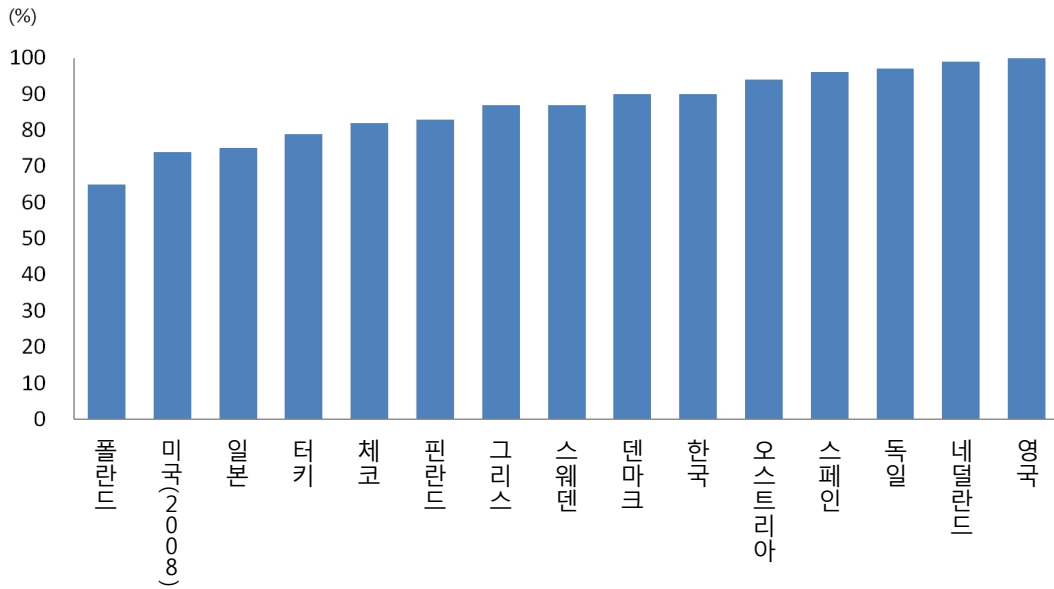
2) 국제비교를 위해 한국 수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혜택인구 포함한 값을 사용함.

OECD 주요국의 상수도 보급률

(단위: %)

	터키	미국	폴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벨기에
보급률	74	85	85	90	90	92	92
	일본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보급률	96	97	98	99	99	99	100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2010)



출처: 1) OECD 「stats.oecd.org」, 2014.7.

2) 환경부 「하수도통계」, 2011.

주: 1) 하수도보급률은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내 인구의 비율임.

2) 미국은 2008년 수치임.

OECD 주요국의 하수도 보급률(2010)

(단위: %)

	폴란드	미국	일본	터키	체코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
보급률	65	74	75	79	82	83	87	87
	덴마크	한국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영국	
보급률	90	90	94	96	97	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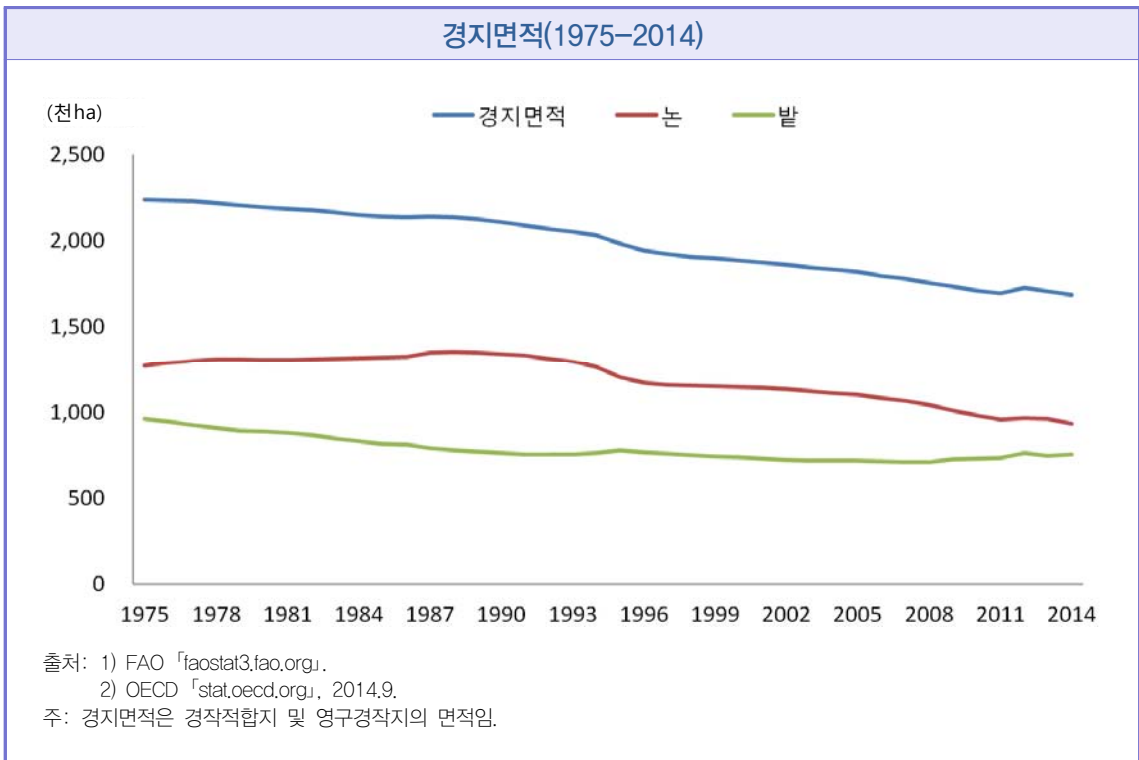
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1) 토지산림

(1) 경지면적

한국의 경지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2002년 188.9만 ha에서 2014년 169.1만 ha로 이 기간 동안 총 19.8만 ha가 감소하였다. 2014년 한 해 동안 순감소 면적은 19.0만 ha이다. 논·밭의 경지면적은 2002년 113.8만 ha에서 2014년 93.4만 ha로 줄어들었고, 밭의 경지면적은 같은 기간 72.4만 ha에서 75.7만 ha로 다소 늘어났다.

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1인당 경지면적을 비교해 보면, 호주(2.090ha), 미국(0.502ha), 프랑스(0.304ha) 등의 순으로 크고, 한국(0.035ha)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작다. 그러나 1인당 경지면적은 인구밀도와 국토의 특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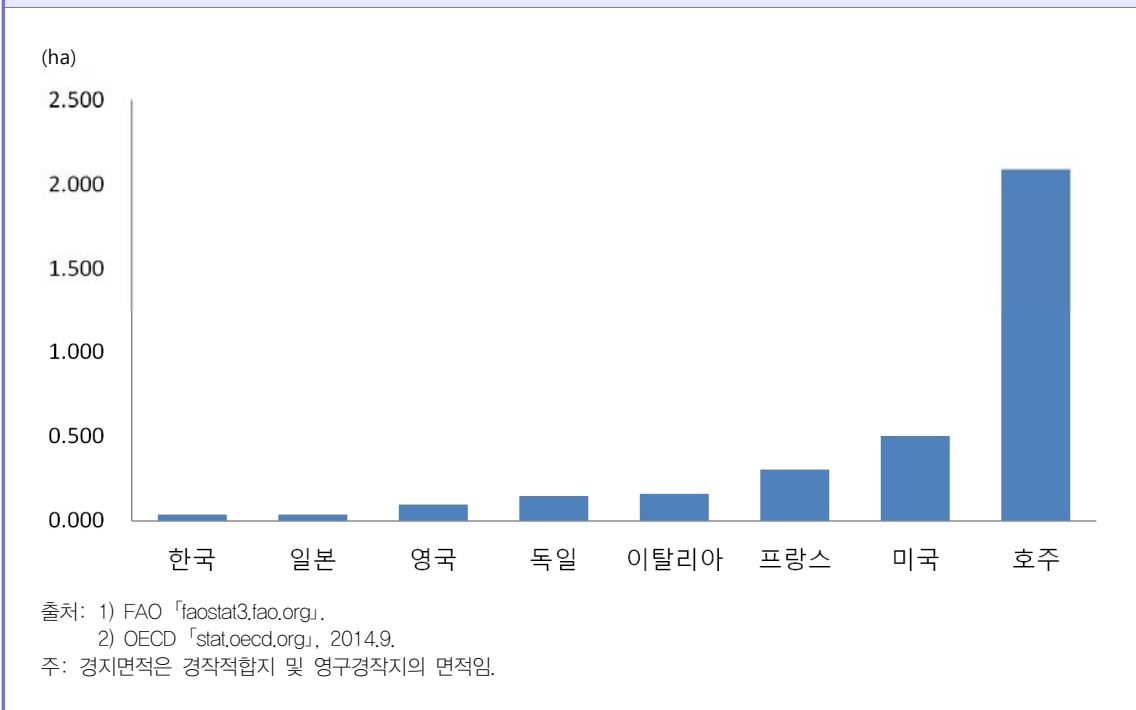


경지면적(1975-2014)

(단위: 천ha)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총면적	2,240	2,196	2,144	2,109	1,985	1,889	1,824	1,715	1,698	1,730	1,711	1,691
논	1,277	1,307	1,325	1,345	1,206	1,149	1,105	984	960	966	964	934
밭	963	889	819	764	779	740	719	731	738	764	748	757

OECD 주요국의 1인당 경지면적(2012)



OECD 주요국의 1인당 경지면적(2012)

(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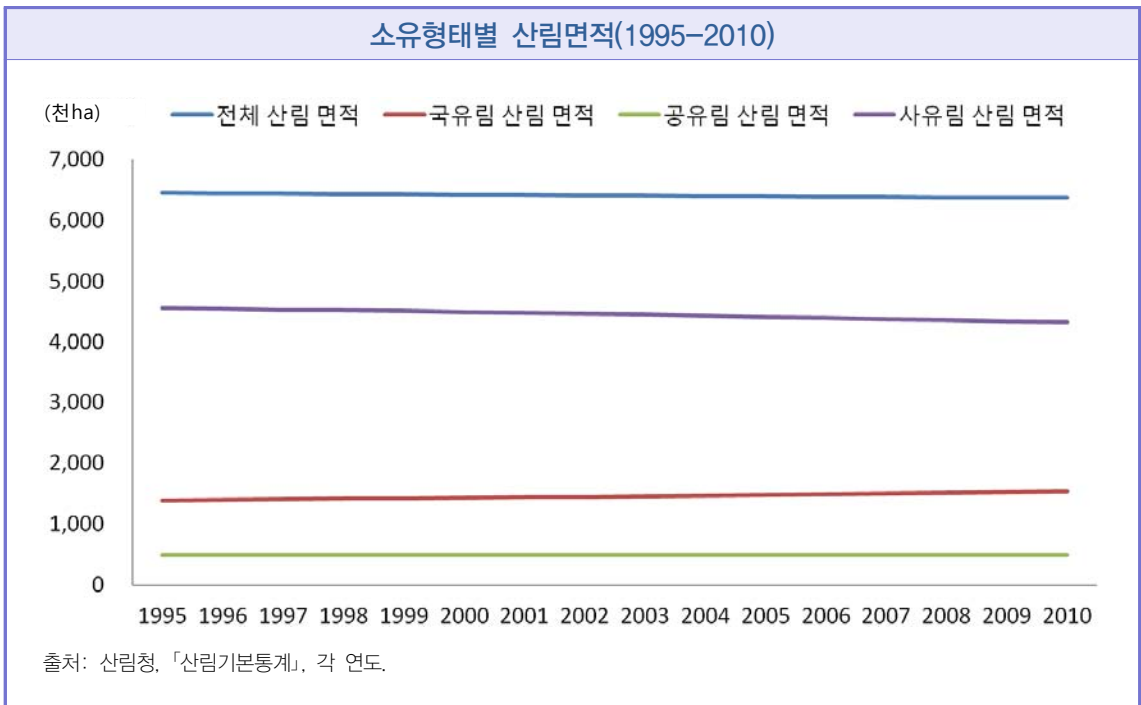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호주
1인당 경지면적	0,035	0,036	0,098	0,147	0,161	0,304	0,502	2,090

(2) 산림면적

한국의 산림면적은 2003년 640.6만 ha에서 2010년 636.9만 ha로 계속해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감소 이유는 주로 도로, 대지, 공장용 도로 개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임목축적은 2003-2010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산림면적을 소유형태별로 비교해 보면, 사유림의 비중이 여전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현재 사유림의 면적은 433.8만 ha로 전체 산림면적의 68.1%에 이른다. 과거에는 산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산지가 파괴되면서 최근에는 보호 가치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산지의 타용도전환은 생태자원의 건강성을 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산지의 타용도전환면적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는 정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별로 1인당 산림면적으로 비교해 보면, 호주(6.52h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미국(0.97ha), 프랑스(0.25ha), 일본(0.19ha), 이탈리아(0.15ha), 독일(0.13ha) 등의 순이다. 한국의 1인당 산림면적은 이들보다 적은 0.12ha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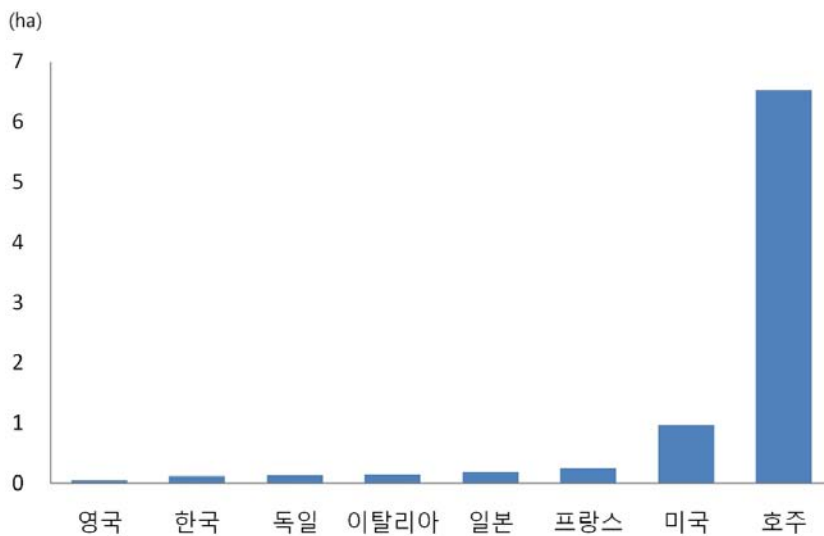


■ 소유형태별 산림면적(1995-2010)

(단위: 천ha)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면적	6,452	6,422	6,394	6,389	6,382	6,375	6,370	6,369
국유림	1,393	1,433	1,484	1,497	1,509	1,518	1,530	1,543
공유림	492	493	489	489	489	488	488	488
사유림	4,567	4,496	4,420	4,403	4,384	4,369	4,352	4,338

OECD 주요국의 1인당 산림면적(2011)



출처: UN, FAOSTAT.

■ OECD 주요국의 1인당 산림면적(2011)

(단위: ha)

	영국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
1인당 산림면적	0.05	0.12	0.13	0.15	0.19	0.25	0.97	6.52

2) 해양수산

(1) 총허용 어획량 소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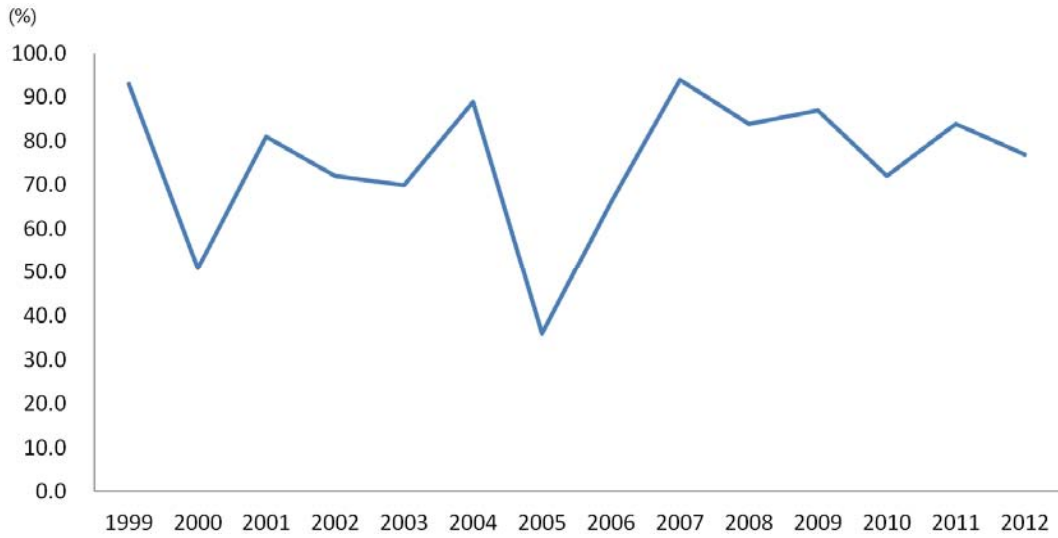
총허용어획량 지정 어종은 1999년 4개 종을 시작으로 2012년 현재 11개 종으로 확대되었다. 자원이 감소하여 관리가 필요한 종, 자원 관리가 용이한 종, 상업적으로 가치가 있는 종, 사회경제적으로 대중적인 종 등에 대한 사항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지정 어종을 선정한다.

총허용어획량은 해마다 산란조건, 연령별 체장/체중, 성장률, 자연사망률 등에 따른 개체수를 예측하여 결정한다. 총허용어획량이 구체적인 근거를 갖지 않은 채 증가할 경우 어족자원의 지속적인 유지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생태계 순환 속도를 거스르지 않는 어족자원 관리의 차원에서 적절한 총허용어획량의 산정이 필요하다.

총허용어획량소진율과 총허용어획량을 함께 비교해 어족자원이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어족자원의 총량(fish stock)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총허용어획량을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어족자원의 총량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총허용어획량은 2007년 38.2만톤에서 2012년 43.8만톤으로 증가, 실제어획량 증가하지 않았다(어획량 2007년 3,275 천M/T에서 2012년 3,183 천M/T로). 총허용어획량소진율은 2007년 대게(131%)와 오징어(105%), 2008년 고등어(103%), 2009년 제주소라(104%)와 오징어(102%) 등에서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했다. 그러나 종별로는 실제 어획량이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하는 해도 있었으나 평균적으로 총허용어획량을 넘는 해는 없다. 2009년을 기점으로 평균을 웃돌던 고등어와 꽃게의 소진율이 평균 소진율 이하로 떨어졌다. 오징어는 반대로 2009년까지 평균 소진율보다 낮았으나, 이후 평균 소진율보다 높다. 꽃게의 소진율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총허용어획량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이다.

총허용어획량 소진율(1999-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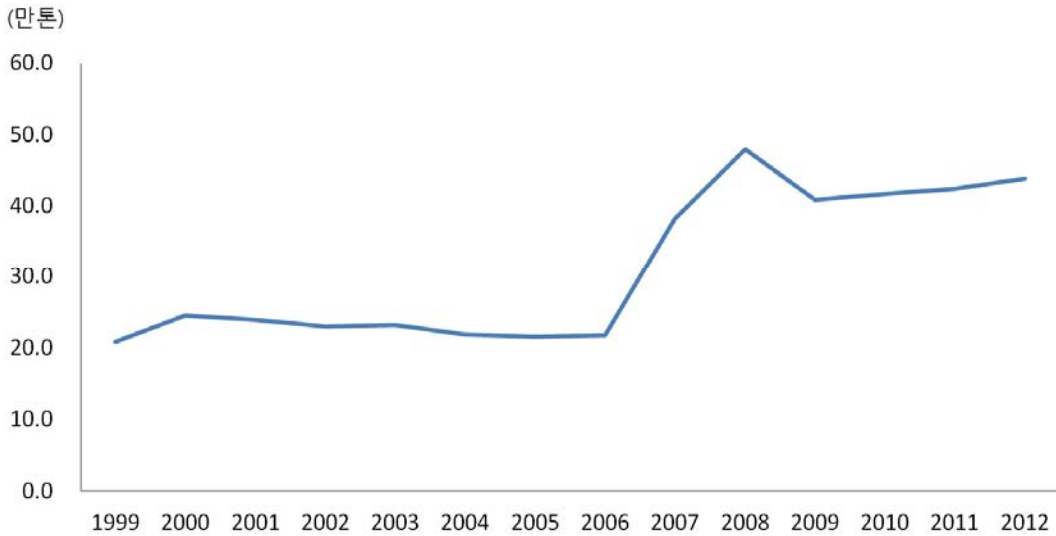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TAC 소진현황」, 각 연도.
 주: 총허용어획량 소진율은 총허용어획량 대비 실제 어획량의 비율임.

총허용어획량 소진율(1999-2012)

(단위: %)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허용 어획량 소진율	93	36	66	94	84	87	72	84	77

총허용어획량(1999-2012)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TAC 소진현황」, 각 연도.

주: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이란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생물학적, 사회경제학적으로 허용된 어획 총량임.

총허용어획량(1999-2012)

(단위: 만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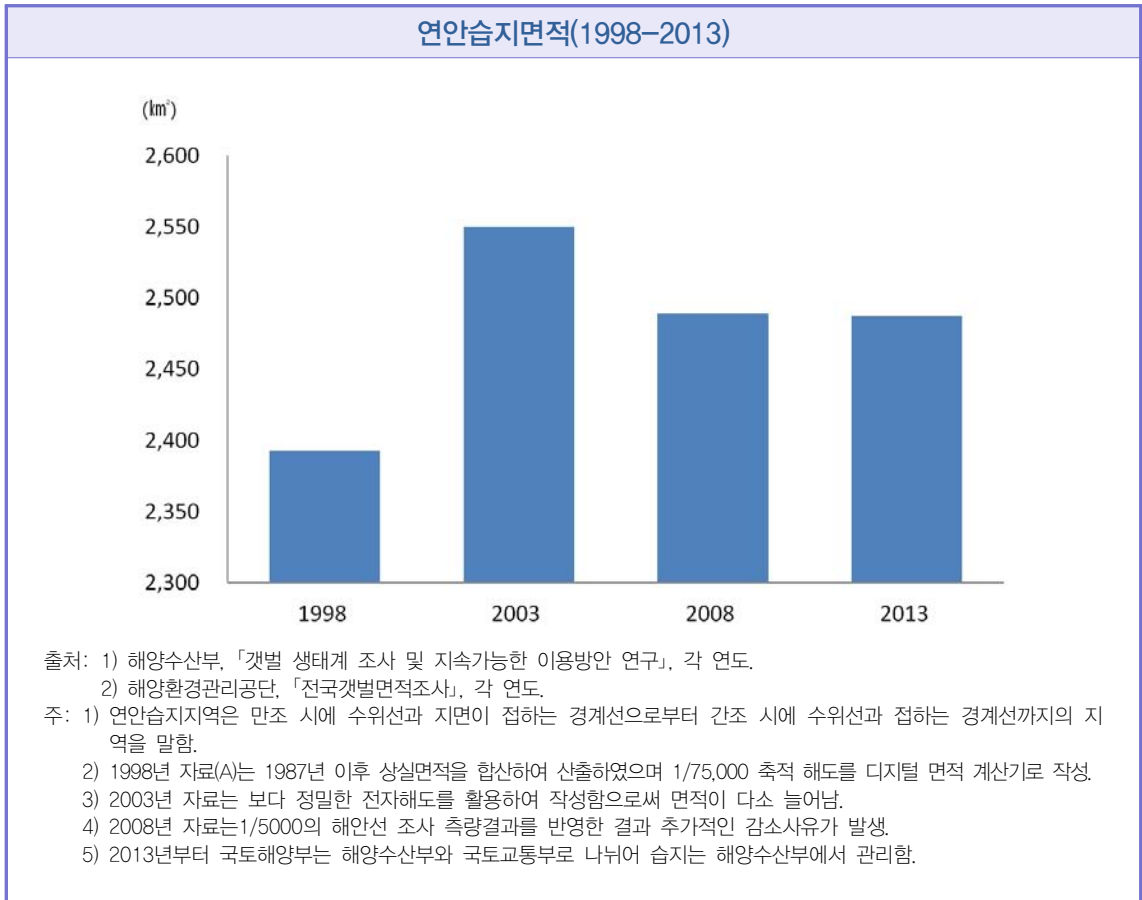
	1999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총허용 어획량	21	22	22	38	48	41	42	42	44

(2) 연안습지면적

갯벌면적은 2013년 현재 2,487.2km²로 국토면적(99,828km²)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03년의 2,550.2km²보다 63km² 감소한 것이다. 이는 주로 인천 송도국제도시, 평택항, 여수 울촌산업단지 건설 등에 따른 대규모 갯벌 매립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항만용지, 주거용지, 산업용지 등을 위한 갯벌 매립이 다수 계획되어 있어 갯벌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한국은 내륙습지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합한 습지면적의 국가 간 비교를 위해서는 랍사르의 지정 습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 랍사르 지

정 습지는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포함하며 람사르 기준을 충족해야 습지로 지정될 수 있다. 한국의 람사르 지정 습지면적은 177km²(2013년)이다. 호주는 람사르협약 최초 가입국이자 세계 최초 람사르 지정 습지를 가진 국가로 81,192km²에 달하는 총 65개의 습지를 가지고 있다. 습지면적과 같은 생태환경 지표는 각 국가의 생태적 특수성으로 인해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국가 간 비교 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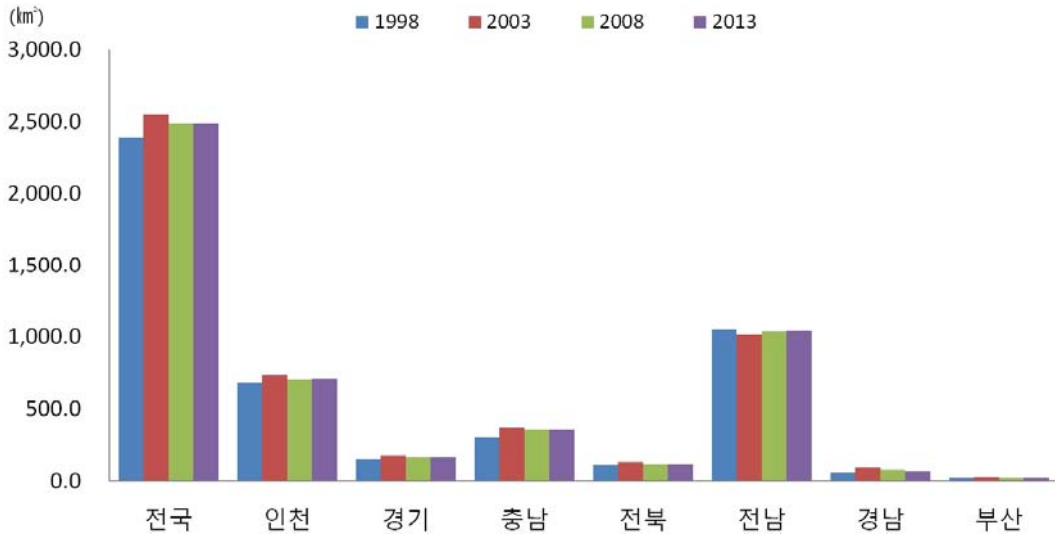


연안습지면적(1998-2013)

(단위: km²)

	1998	2003	2008	2013
연안습지면적	2,393	2,550	2,489	2,487

시도별 연안습지면적(1998-2013)



출처: 1) 해양수산부, 「갯벌 생태계 조사 및 지속가능한 이용방안 연구」, 각 연도.

2) 해양환경관리공단, 「전국갯벌면적조사」, 각 연도.

주: 1) 연안습지지역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함.

2) 1998년 자료(A)는 1987년 이후 상실면적을 합산하여 산출하였으며 1/75,000 축적 해도를 디지털 면적 계산기로 작성.

3) 2003년 자료는 보다 정밀한 전자해도를 활용하여 작성함으로써 면적이 다소 늘어남.

4) 2008년 자료는 1/5000의 해안선 조사 측정결과를 반영한 결과 추가적인 감소사유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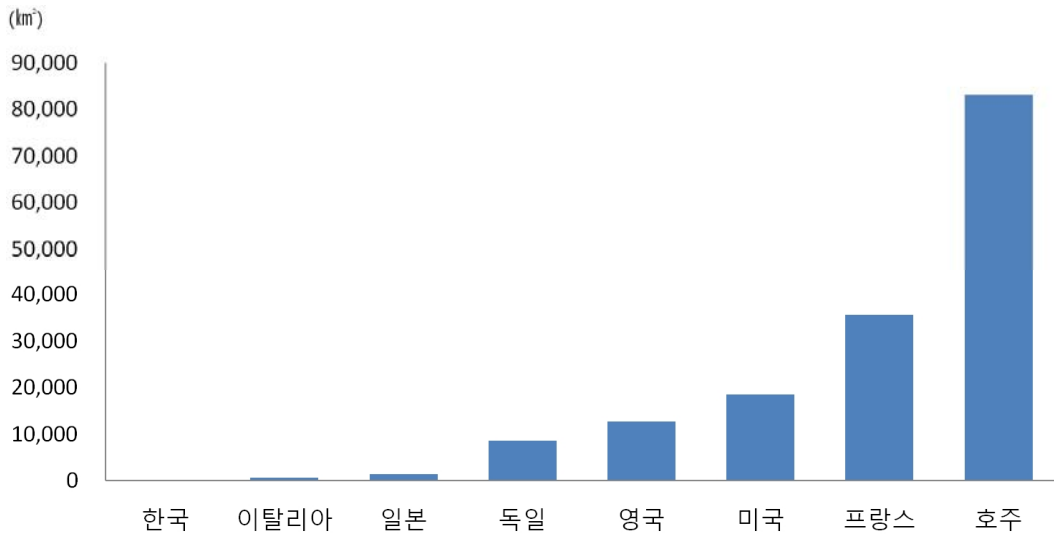
5) 2013년부터 국토해양부는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로 나뉘어 습지는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함.

시도별 연안습지면적(1998-2013)

(단위: km²)

	1998	2003	2008	2013
전국	2,393.0	2,550.2	2,489.4	2,487.2
인천	685.0	737.1	703.9	709.6
경기	153.5	177.8	168.8	165.9
충남	304.2	367.3	358.8	357.0
전북	113.6	132.0	117.7	118.2
전남	1,054.1	1,017.4	1,036.9	1,044.4
경남	59.0	91.4	79.1	68.8
부산	23.6	27.2	24.2	23.3

OECD 주요국의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면적(2014)



출처: The Ramsar Convention on Wetlands, 「The List of Wetland of International Importance」, 2014.

주: 1)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란 특이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제1범주)을 가졌거나 희귀동식물 종의 서식지(제2범주)이거나 또는 특히 물새서식지(제3범주)로서의 중요성을 가진 습지가 선정대상이 됨. 총 가입국은 168개국이며, 가입국면적 총합은 2,086,066km²임.

2) 호주는 2013년 수치임.

OECD 주요국의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면적(2014)

(단위: km²)

	한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	호주
람사르협약 지정 습지면적	183	602	1,369	8,682	12,768	18,592	35,578	83,2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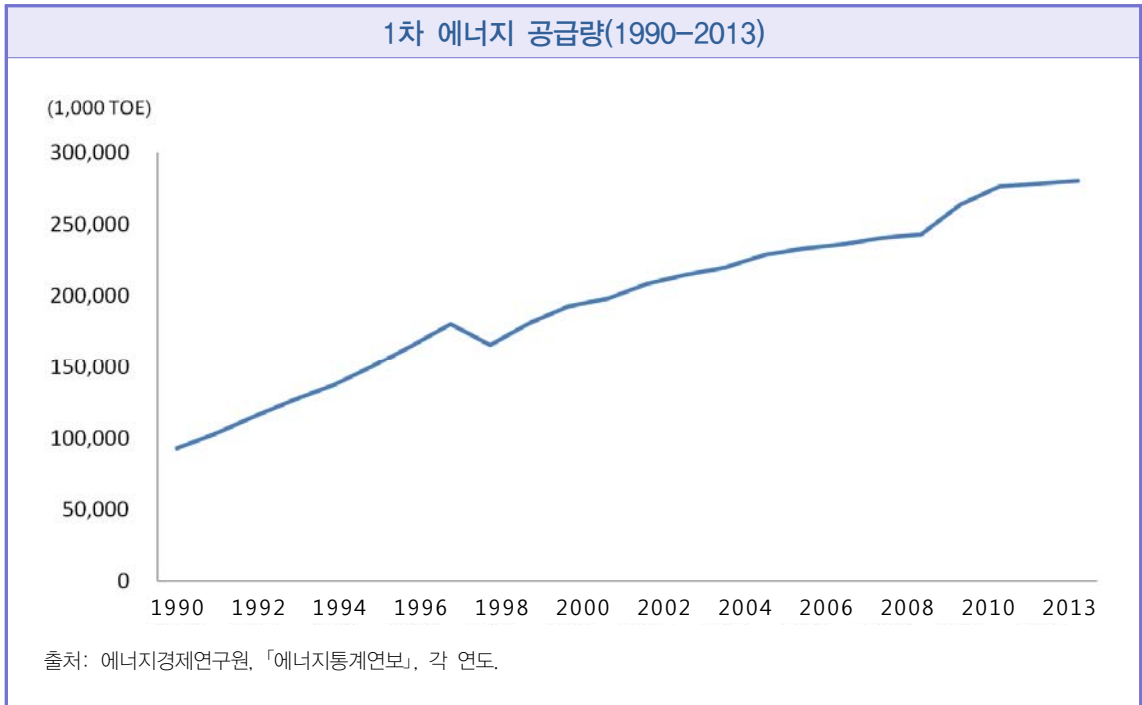
3) 에너지

(1) 1차 에너지 공급량

1차 에너지란 오랜 세월동안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에너지를 말한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태양열,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은 경제규모가 커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7년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사용량이 줄어들었으나 1998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면서 다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2013년 현재 1차 에너지 공급량은 약 2억 8,029만 TOE로 1990년의 약 9,319만 TOE에 비해 약 3배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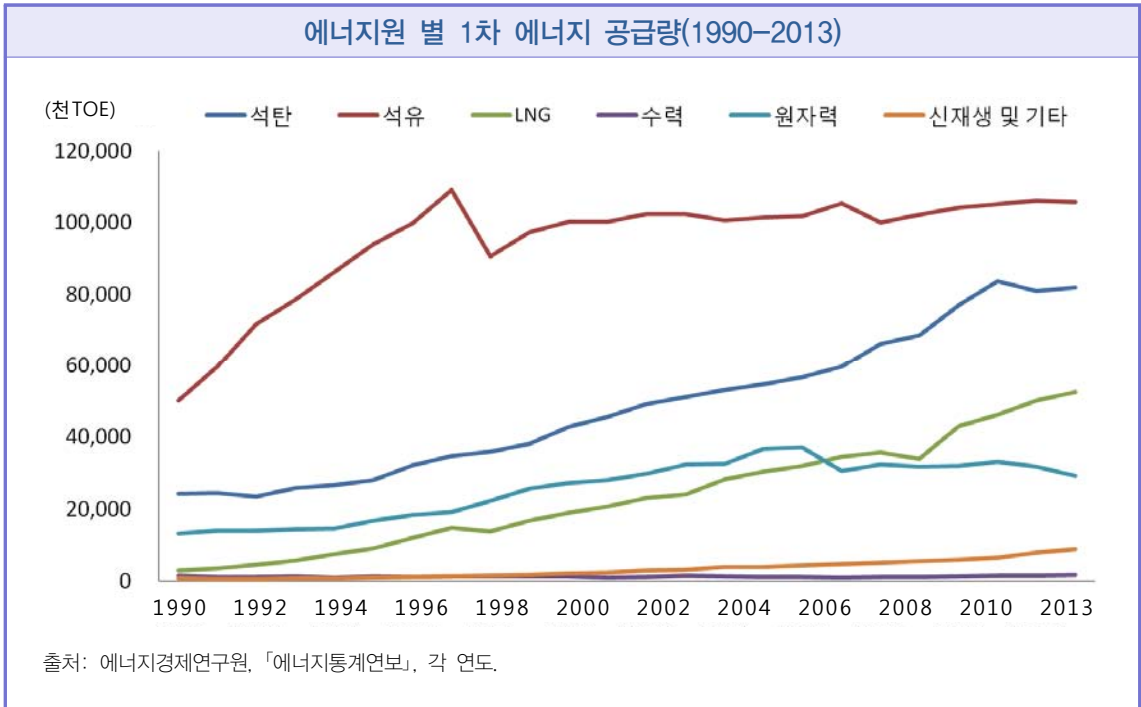
OECD 주요 국가들의 1인당 1차 에너지공급량을 살펴보면, 미국(7.02TOE)이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 호주(5.40TOE)가 많다. 한국의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량은 5.23TOE로 미국과 호주보다는 적지만 이들 국가를 제외한 다른 선진국들보다는 많다.



1차 에너지 공급량(1990-2013)

(단위: 1,000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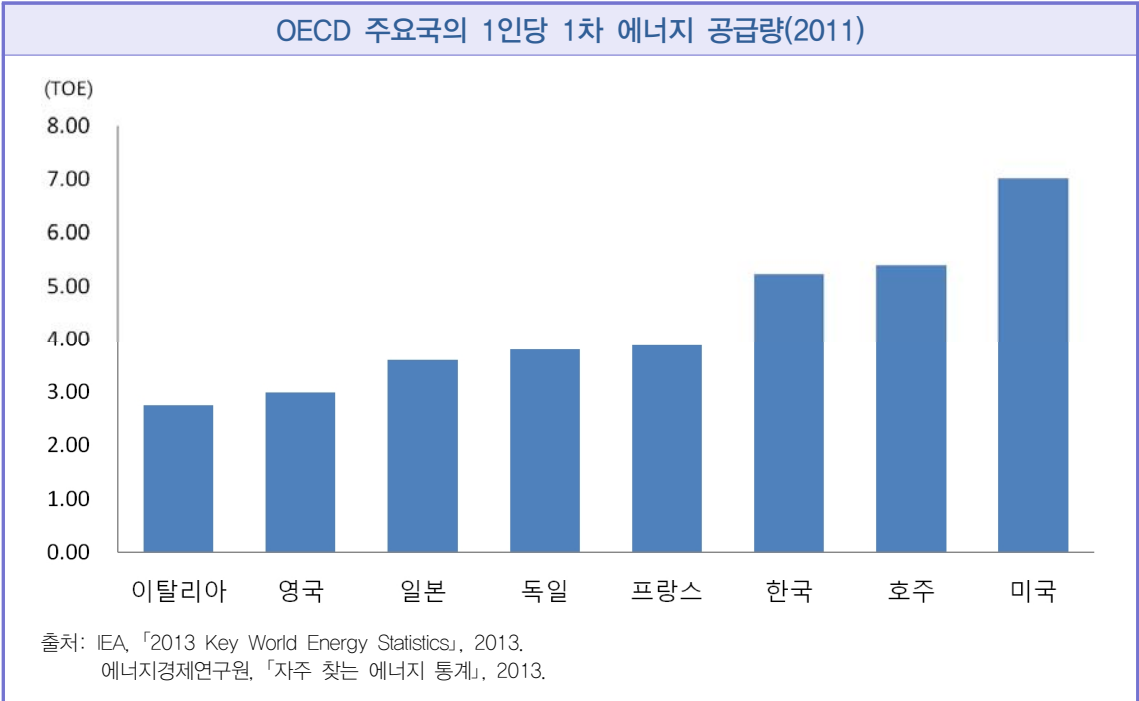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1차 에너지 공급량	93,192	150,437	192,887	228,622	263,805	276,636	278,698	280,290



에너지원 별 1차 에너지 공급량(1990-2013)

(단위: 천TOE)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석탄	24,385	28,091	42,911	54,788	77,092	83,640	80,978	81,915
석유	50,175	93,955	100,279	101,526	104,301	105,146	106,165	105,811
LNG	3,023	9,213	18,924	30,355	43,008	46,284	50,185	52,523
수력	1,590	1,369	1,402	1,297	1,391	1,684	1,615	1,771
원자력	13,222	16,757	27,241	36,695	31,948	33,265	31,719	29,283
신재생 및 기타	797	1,051	2,130	3,961	6,064	6,618	8,036	8,987



OECD 주요국의 1인당 1차 에너지 공급량(2011)

(단위: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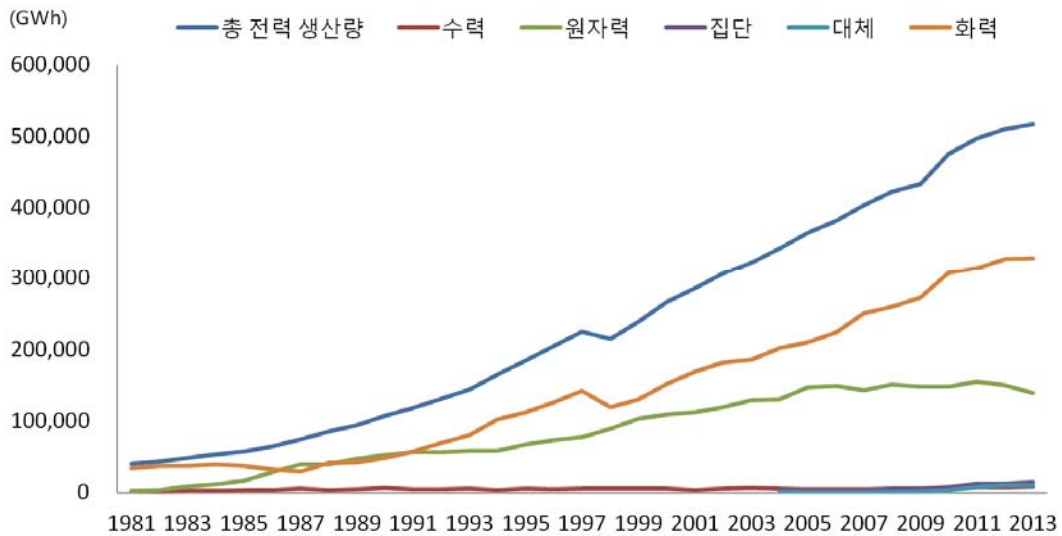
	이탈리아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한국	호주	미국
1인당 1차에너지공급량	2.76	3.00	3.61	3.81	3.88	5.23	5.40	7.02

(2) 전력생산량

한국의 전력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1997년 경제위기로 일시적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2년 현재 한국의 전력생산량은 50만 9,574GWh로 1990년의 10만 7,670GWh에 비해 4.73배 증가하였다.

OECD 주요 국가들의 1인당 전력생산량과 비교해 보면, 2011년 전력생산량은 미국이 1만 3,227kWh로 가장 많고 호주가 1만 514kWh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의 전력생산량은 1만 162kWh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보다 인구 대비 전력생산량이 많은 편이다. 이는 한국의 낮은 전력요금과 전력집약적인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참고로, 한국의 전기요금은 OECD 국가들의 평균 전력요금보다 월등히 낮고 비교대상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에너지원 별 전력생산량(1981-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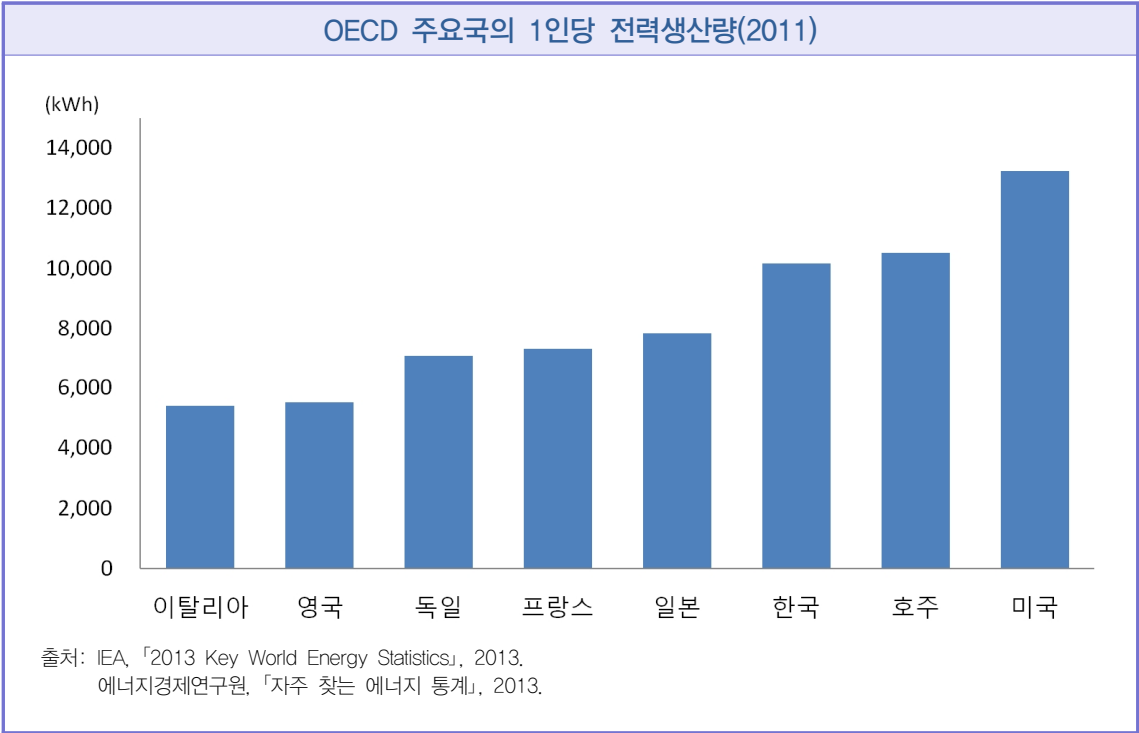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연도.

에너지원 별 전력생산량(1981-2013)

(단위: GWh)

	1981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총 전력 생산량	40,207	58,007	107,670	184,661	266,400	364,638	474,660	496,893	509,574	517,148
수력	2,709	3,659	6,361	5,478	5,610	5,189	6,472	7,831	7,652	8,543
원자력	2,897	16,745	52,887	67,029	108,964	146,779	148,596	154,723	150,327	138,784
집단	-	-	-	-	-	2,759	8,080	12,429	13,061	14,633
대체	-	-	-	-	-	404	3,984	7,592	10,563	10,068
화력	34,601	37,603	48,421	112,154	151,826	209,509	307,528	314,318	327,971	328,169



OECD 주요국의 1인당 전력생산량(2011)

(단위: kWh)

	이탈리아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호주	미국
1인당 전력생산량	5,393	5,518	7,083	7,318	7,847	10,162	10,514	13,227



부록
용어해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부록

용어해설

1. 경제부문

1.1. 경제규모, 재정, 대외거래

•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한 국가 내의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 생산량에 당해연도 가격을 곱해 산출하면 명목GDP,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 산출하면 실질GDP가 됨.

•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ies) 환율

각국의 상대물가수준을 감안, 각국 통화의 구매력을 비교해 결정하는 환율. 통상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각국의 화폐가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평가함.

• 경제성장률

실질GDP의 증가율.

•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한 국가의 국민이 일정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 총합. GDP에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국외수취요소소득)을 더하고 외국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국외지급요소소득)을 뺀 금액임. GDP가 생산의 크기를 나타내는 반면 GNI는 소득의 크기를 나타냄.

• 조세부담률

GDP에서 조세가 차지하는 비중. 국민 전체의 조세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임.

• 국민부담률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조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 무역의존도

GNI 대비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액과 수입액, 그리고 국외수취요소소득과 국외지급요소소득의 총합이 차지하는 비율.

• 경상수지 비율

GDP 중 경상수지액이 차지하는 비율. 경상수지액은 한 국가 내의 모든 경제주체들이 1년 동안 다른 국가의 경제 주체들과 행한 모든 경상 거래 중 다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로 지급된 액수에서 해당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지출된 액수를 뺀 값임. 경상수지에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수지가 포함됨.

1.2. 산업과 금융

• 매출액 영업이익률

영업 활동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영업 손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세전 순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산출. 영업활동뿐 아니라 재무활동 등 영업 이외 부문의 성과까지 나타냄.

• 금융비용부담률

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부채비율

부채(타인자본)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

• 자기자본비율

총자본(자기자본+타인자본) 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율.

• **총고정투자율**

일정 기간 동안 추가된 설비 투자를 나타내는 총고정자본형성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

• **주가지수**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개별 종목의 가격 변동을 종합해 주식 가격의 전반적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시가총액가중식 주가지수를 사용하며, 산식은 (비교시점 시가총액) / (기준시점 시가총액) × 100임.

1.3. 고용과 노동

• **경제활동인구**

생산가능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에 취업한 상태이거나 취업을 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

• **경제활동참가율**

생산가능인구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중.

• **고용률**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자의 비중. 취업자는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일시 휴직자가 포함됨.

•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중.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본 자료집에서는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삼았음)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함.

• **비임금근로자 비율**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비임금근로자에는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됨.

• **노조조직률**

전체 임금근로자 중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

• **단체협약적용률**

노조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단체 협약의 결과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

• **가계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

국가 내 전체 가계가 소비나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 1인당 GNI는 가계뿐 아니라 기업과 정부에 분배된 소득도 포함된 반면, 1인당 PGDI(본 자료집에서는 1인당 개인처분가능소득으로 표기했음)는 가계에 분배된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소득 수준에 더 가까움.

• **지니계수**

한 국가의 가구 간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음.

• **소득5분위배율**

소득 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소득 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

2. 사회부문

2.1. 인구

• **고령화지수**

소년인구(0-14세)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를 의미함.

• **노년부양인구비**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노인인구(65세 이상)의 백분비를 의미함.

• **도시화**

전체 인구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부양인구비**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비생산연령층(0-14세, 65세 이상 인구의 합) 인구의 비율임.

• **성비**

남자수와 여자수의 비를 의미하며, 보통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수를 의미함.

• **소년부양인구비**

생산가능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소년인구(0-14세)의 백분비를 의미함.

• **영아사망률**

1세 미만에 사망한 영아수를 그해 1년 동안 태어난 총 출생아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임.

• **조사망률**

1년간의 사망자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임.

• **조출생률**

1년간의 출생아수를 당해연도의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지표임.

• **중위연령**

전체인구를 연령에 따라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연령을 의미함.

• **출생성비**

여자 출생아수와 남자 출생아수의 비를 의미하며, 여자 출생아수 100명에 대한 남자 출생아수를 의미함.

•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현재의 출산수준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15세에 해당하는 한 여자가 가임기간이 끝나는 49세까지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2.2. 가구와 가족

• **평균가구원수**

가구형태를 가구원수 기준으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 이상 가구로 구분하고 평균가구원수는 총가구원수를 총일반가구수로 나누어 계산함.

• **핵가족화**

부부와 미혼의 자녀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가족으로 되는 현상을 말함.

• **인구고령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사회현상을 말함.

• **조혼인율**

1년간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냄.

• **조이혼율**

1년간 발생한 총 이혼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에 의한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냄.

• **국제결혼**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남성 혹은 여성이 국적이 다른 사람과 하는 결혼을 말함.

• **이혼숙려제도**

결혼한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했을 때 일정한 숙려기간이 지난 뒤 이혼이 허가되는 제도임. 이혼 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고려할 기회를 줌으로써 경솔한 이혼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도입됨.

• **일-가족(양립)갈등**

직장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 사이에 균형을 이루는 데 발생하는 어려움을 의미함.

2.3. 건강

• **기대수명**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을 말함.

• **건강수명**

인구 중 평균적으로 질병 혹은 장애를 겪은 기간을 평균수명에서 제한 수명을 말함. 특별한 신체 및 정신적 건강의 이상 없이 생활 가능한 기간을 의미함.

• **건강인지율**

평소에 본인의 건강이 ' 좋음 ' 혹은 ' 매우 좋음 '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임. 주관적건강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함.

• **성인흡연율**

만19세 이상 인구 중 평생 담배를 5갑(100개비) 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비율임.

• **1인당 알코올소비량**

15세 이상 인구 대상, 1인 평균 연간 순수알코올 섭취량을 리터로 측정한 지표를 의미함. 1인당 알코올 소비량 = 출고량 × 도수(%) × 1000 / 인구수.

• **비만율**

만19세 이상 인구 중 체질량지수(BMI, kg/m²) 기준으로 25 이상인 비율임. 체질량지수(BMI) = 체중(kg) / [신장(m)]²

• **인구1,000명당 의사수**

인구 천명당 의사수는 해당년도 인구 천명당 면허를 받은 의사의 수를 말함.

• **인구1,000명당 간호사수**

인구 천명당 간호사수는 해당년도 인구 천명당 면허를 받은 간호사의 수를 말함.

• **국민의료비**

한 나라 국민이 한 해 동안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하는 화폐적 지출의 총합임.

• **공공의료비**

중앙 및 지방정부, 공보험 등 공공영역에 의해 지출된 보건의료비를 말함.

• **암5년 생존율**

암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암으로 사망한 환자를 제외한 환자의 비율임.

2.4. 교육

• **OECD**

사회경제적 발전과 무역촉진을 위하여 창설된 국제기구임. 국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도 함.

• **공교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설립·운영·관리되는 학교교육을 말함.

• **초등교육**

가장 기초적인 지식·기능·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말함. 주로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짐.

• **중등교육**

초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사이에서 고등교육을 예비하는 교육을 말함. 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짐.

• **고등교육**

학교교육의 최종단계로서, 가장 높은 단계의 교육을 말함. 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짐.

• **교원**

교육기관에서 원아(園兒)나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을 말함. 교사 이외에도 교장·교감·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원장·원감(園監) 등이 포함됨.

• **남녀 학생 비율**

남학생 100명당 여학생수를 의미함.

2.5. 문화와 여가

• **박물관수**

박물관 통계를 국립·공립 박물관 및 등록 사립·대학 박물관만 해당되며, 단 과학관 육성법 제1조(목적)의 규정에 의거 건립된 과학관은 제외됨.

• **여가시간**

조사대상자의 각 요일(평일, 토요일, 일요일)별 여가 활용시간을 전체로 환산하여 산출한 평균 시간을

말함. 여가활용은 교제활동, 일반인의 학습, 미디어 이용(대중매체), 종교활동,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밖의 레저,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기타 등의 활동을 포괄함.

• **1인당 평균 관광수입**

1인당 평균 관광수입은 한 해의 관광수입을 방한한 관광객의 수로 나누어 나타냄. 1인당 평균 소비액(관광수입) = 관광수입 / 방한외래관광객

• **1인당 평균 관광지출**

1인당 평균 관광지출은 한 해의 관광지출을 해외로 관광 간 한국인의 수로 나누어 나타냄. 1인당 평균 지출액(관광지출) = 관광지출 / 국민해외관광객

2.6. 주거

• **주택**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①연구 또는 준연구 건물, ②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춘, ③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거처**

현재 거주하는 주택 또는 주거지를 뜻함.

• **인구 천명당 주택수**

빈집을 포함한 전국 인구수 대비 주택호수를 말함.

• **인구 천명당 주택건설수**

주택건설수는 정부로부터 주택 건설을 인허가 받은 실적을 의미하며, 인구1,000명당 주택건설수는 이를 인구 대비로 나타낸 것임.

• **주택매매가격지수**

주택매매가격은 전국의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의 실제거래에 기초한 주택매매가격으로, 본 자료의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012년 11월의 주택 매매가격을 100으로 환산한 지수를 말함.

• **주택전세가격지수**

주택전세가격은 전국의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연립주택의 실제거래에 기초한 주택전세가격으로, 본 자료의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12년 11월의 주택 전세가격을 100으로 환산한 지수를 말함.

• **자가점유율**

일반가구 중 자기소유의 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가구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자기 집을 소유 하면서 남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는 자가점유율에서 제외됨.

• **월소득대비임대료(RIR)**

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RIR: Rent-to-Income Ratio)는 월평균 소득에 대비한 임대료의 비율을 말함. 이 비율은 무주택자가 주거를 위해 소득에서 부담하는 비율로서, 주택임대료비율을 나타냄.

2.7. 교통

• **자동차등록대수**

통계시점에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의 대수임.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구분하는데, 본 지표는 승용차 대수만을 집계함.

• **도로연장**

전국 도로의 총 길이를 의미함.

• **인구당 도로연장**

인구 천명당 도로연장을 의미함.

•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국토면적 1km²당 도로연장을 의미함.

• **철도연장**

전국 철도의 총 길이를 의미함.

• **인구당 철도연장**

인구 천명당 철도연장을 의미함.

- **국토면적당 철도연장**
국토면적 1km²당 철도연장을 의미함.
- **평균통근시간**
통근인구가 매일 집에서 직장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 **통근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매일 정기적으로 집에서 직장예 근무하러 다니는 자를 의미함.
- **평균통학시간**
통학인구가 매일 집에서 학교까지 통행하는데 걸리는 평균 통행시간을 의미함.
- **통학인구**
12세 이상 인구 중 정규학교(원) 뿐만 아니라 입시준비학원, 이·미용학원, 양재학원, 각종 기술학원 및 직업 훈련원 등에 다니는 자를 포함함.
- **항공수송실적**
여객 혹은 화물을 수송한 항공편수를 말함.
- **해운수송실적**
여객 혹은 화물을 수송한 해운편수를 말함.
- **자가용 자동차에너지소비량**
통계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자가용 자동차가 소비한 에너지 소비량임.
- **자가용 자동차**
승용차 일반형, 승용차 다목적형, 승합차, 개인화물차를 포함함.
- **다목적형 승용차**
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승용차 및 승용겸 화물형이 아닌 차량을 의미함.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율**
교통부문 전체 에너지 소비량에서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이 차지하는 비율임.

- **교통부문 신재생에너지소비량**
교통부문에서 소비되는 신재생 에너지의 양을 의미함.
- **신재생에너지**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수력 등 종래 사용되어 온 에너지 이외에 장차 기술개발에 의하여 공급 될 태양에너지, 바이오매스, 동력, 소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 수소에너지, 석탄전환연료 등을 말함.
- **친환경자동차보급률**
전체 승용차 중 친환경 에너지를 원료로 하는 승용차의 비율임.

2.8. 안전

- **범죄율**
여기서 범죄는 현행 「형법」을 위반한 형법범죄로 한정함. 따라서 범죄율은 인구 10만 명당 형법범죄 발생건수임. $\text{범죄율} = (\text{형법범죄} \div \text{총인구}) \times 100,000$.
- **주요 형법범죄율**
주요 형법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절도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를 의미함.
- **형법범죄**
형법범죄에서 형법은 「형법」이라는 명칭을 붙인 법전(法典)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범죄란 형법전(刑法典)상 제시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범죄로서 성립되어 진 것을 말함.
- **3년이내 재복역률**
재복역률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로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되었다가 형기종료·가석방·사면 등의 사유로 출소한 자 중에서 출소 후 3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다시 교정 시설에 수용(첫 번째 입소에 한함)되는 비율로, 재범이 일어나는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임. $\text{출소후 3년 이내 재복역률} = (\text{3년 이내 재복역자수} \div \text{해당년도 출소인구}) \times 100$

- **인구 10만명당 경찰관수**

인구 10만 명당으로 나타낸 경찰관수임. 경찰관수에 전투경찰과 의무경찰, 해양경찰은 포함되지 않음.

- **자연재해**

태풍, 가뭄, 홍수, 지진, 화산 폭발, 해일 등의 자연 현상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재해를 말함.

- **자연재해피해액**

건물, 선박, 농경지, 농작물, 공공시설, 기타의 자연재해 총 피해액을 나타냄.

- **화재피해액**

실화, 자연적 요인, 방화, 미상으로 인한 화재피해액임.

-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에서 차량의 교통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따르는 사고를 의미함.

- **교통사고사망**

교통사고 발생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함.

- **대형인적재난**

10명 이상의 인명피해(사망, 실종)가 발생한 사고를 말함.

2.9. 사회통합

- **투표율**

전체 선거인수 중 실제 투표를 한 사람의 비율임.

- **여성 국회의원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전체 국회의원 정원 중 여성 의원이 차지하는 비율임.

- **자살률**

인구 10만명 중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수임.

3. 환경부문

3.1. 생활환경과 오염

- **과불화탄소(PFCs)**

탄소와 불화의 화합물임. 전자제품과 도금산업 등에서 세정용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는 주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사용됨.

- **대기오염도**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 생태계 변화 유발물질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설치된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통해 상시 측정된 자료를 말함. 아황산가스(SO₂), 이산화질소(NO₂), 미세먼지(PM₁₀), 오존(O₃)의 연평균 오염도로 표시됨. 이 중 아황산가스(SO₂)는 자극성 냄새를 갖는 무색의 기체로 화석연료 중에 들어있는 황성분이 탈 때 생성되어 대기 중에 배출되는 것으로 대표적인 대기오염 물질임.

- **미세먼지(PM10)**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지름 10 μ m 이하이며,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각종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떨어뜨림. 연소작용에 의해 발생되므로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 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등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음. 대도시의 미세먼지는 70% 이상이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 먼지보다 더욱 엄격하게 규제함.

- **상수도보급률**

상수도를 공급받아야 할 대상가구 중 실제 급수를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임. 상수도보급률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나 지방자치단체 내 주거환경 및 주택구조 등의 요인에 의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상수도 시설이 생활편익시설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생활환경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임.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mg/L 또는 ppm)**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호기성 분해될 때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말함. BOD 수치가 높을수록 수질이 오염되었음을 의미함.
- **유기물**
 주로 생체 내에서 합성되는 물질 전분, 지방, 단백질 등 탄소를 가진 화합물로서 생명체의 구성성분이며 에너지원임. 토양 중에서는 서서히 분해되어 작물에 흡수되며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개선에 중요한 비료가 됨.
- **미생물**
 육안의 가시한계를 넘어선 0.1mm 이하의 크기인 미세한 생물임. 주로 단일세포 또는 군사로 몸을 이루며, 생물로서 최소 생활단위를 영위함. 식품, 의약품 등 생산공업이나 생물자원, 수질환경 및 토양의 지력보존 등에 이용됨.
- **수소불화탄소(HFCs)**
 불연성 무독성 가스임. 냉장고 및 에어컨 냉매로 사용됨.
- **육불화황(SF₆)**
 전기제품, 변압기 등의 절연체로 사용되는 가스임.
- **온실가스**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가스임. 제3차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97)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6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을 감축 대상으로 명문화됨.
- **온실효과**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가스가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여 지구를 보온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을 말하며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함. 만약 온실효과가 없다면 지구의 평균기온은 -18℃까지 내려가 생명체가 살 수 없으며, 온실효과가 지구 평균

기온을 15℃ 정도로 유지하여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 해 줌. 그러나 산업화 이후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온실가스가 공기 중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됨.

-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함.
- **하수도보급률**
 총인구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통해 처리되는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인구의 비율임. 하수처리에 대한 지표로 사용됨.
- **하수처리시설**
 스크린, 침사지, 침전지, 포기조, 살수여상, 염소처리 등의 하수처리를 행하는 시설임.

3.2 생태환경과 자연자원

- **1차에너지**
 오랜 세월동안 자연의 역학적인 절차의 반복으로 형성된 천연상태의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급되는 에너지임.
- **갯벌**
 밀물 시에는 바닷물로 덮여 있으나 썰물 시에는 육지로 드러나는 모래와 펄로 이루어진 평평한 지형을 말하며, 줄여서 갯가(바닷가)의 넓고 평평한 들판이라고도 함. 우리나라의 경우 '습지보전법'에 의한 연안 습지 대부분이 갯벌이므로 이 둘을 혼용하여 사용함.
- **내륙습지**
 강의 가장자리나 냇가 등 담수가 흐르는 곳에 위치하고 지형적인 원인에 의해 우기에 침수되어 형성되거나 강 유역의 범람하는 토양이 침적되어 만들어진 지역을 말하며 늪, 호소(湖沼)·하구(河口) 등이 있음.

•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

1975년에 발효된 람사르협약은 국경을 초월해 이동하는 물새를 국제자원으로 규정하여 가입국의 습지를 보전하는 정책 이행을 의무화 하는 등 습지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국제 조약임. 우리나라는 1997년 가입됨.

• 산림

입목지와 무림목지를 말함. 입목지는 교목의 울폐도가 30% 이상인 임분 또는 ha당 일정 본수 이상의 치수가 고르게 생육하고 임분을 뜻함. 무림목지는 입목지 이외의 모든 임지를 말함. 황폐지, 개간지, 도로, 하천, 소택지, 고정방화선, 저목장, 암석지, 묘지, 방목지 등 입목육성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임지인 제지를 포함하고 있음.

• 습지

담수 · 기수 또는 염수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를 말함.

• 어족자원량

어류의 종에 따라 서식하는 공간적 범위가 구분이 되는 지형적 경계가 있어, 같은 종이지만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아개체군(subpopulation)의 자원량을 말함.

• 연안습지

만조 시에 수위선과 지면이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시에 수위선과 접하는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갯벌 · 바위해안 · 모래해안 등이 있음.

• 총허용어획량

하나의 단위자원(종)에 대한 어획량을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어업 쿼터시스템을 말함.

• 취수량

광역 · 지방상수도에서 수돗물을 생산 · 공급하기 위하여 하천, 호소 등의 수원에서 취수시설을 이용하여 취수한 수량임. 마을상수도와 공업용수도를 위한 취수량은 제외함.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집필진

연구책임자 **김 석 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이 재 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한 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공동연구원 **김 승 진** 시카고대학교 사회학 박사
연구보조원 **민 경 선**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보조원 **김 채 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보조원 **한 상 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통계로 본 광복 70년 한국사회의 변화 I - 해설편 -

인 쇄 2015년 8월 5일
발 행 2015년 8월 10일

발행인 **유 경 준**

발행처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청사 3동)
Tel. 042-481-2417, 2420

기 획 **성기도, 황병호, 김종철(정보서비스팀)**

인쇄처 도서출판 이화
Tel. 042-255-9707~8

ISBN 978-89-5801-340-2 93310

〈비매품〉



통계청

STATISTICS KOREA

9 3 3 1 0

9 788958 013402

ISBN 978-89-5801-340-2